

2015 청소년백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5년은 「청소년백서」 발행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에서는 1965년 이래, 해마다 청소년 복지, 활동, 안전, 교육 등 분야별 청소년정책의 주요성과와 현황을 담아 백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백서」는 지난 50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학계·시설·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추진과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 등에서 추구해온 방향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청소년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청소년정책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CYS-Net과 쉼터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청소년활동안전센터 등 인프라를 마련하고,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였으며, 수련시설 안전점검과 종합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5 청소년백서」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 등 새로 제도화되거나 개선·보완된 사항들을 담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청소년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학기제와 인성교육 등 정책변화에 맞춰 청소년들의 활동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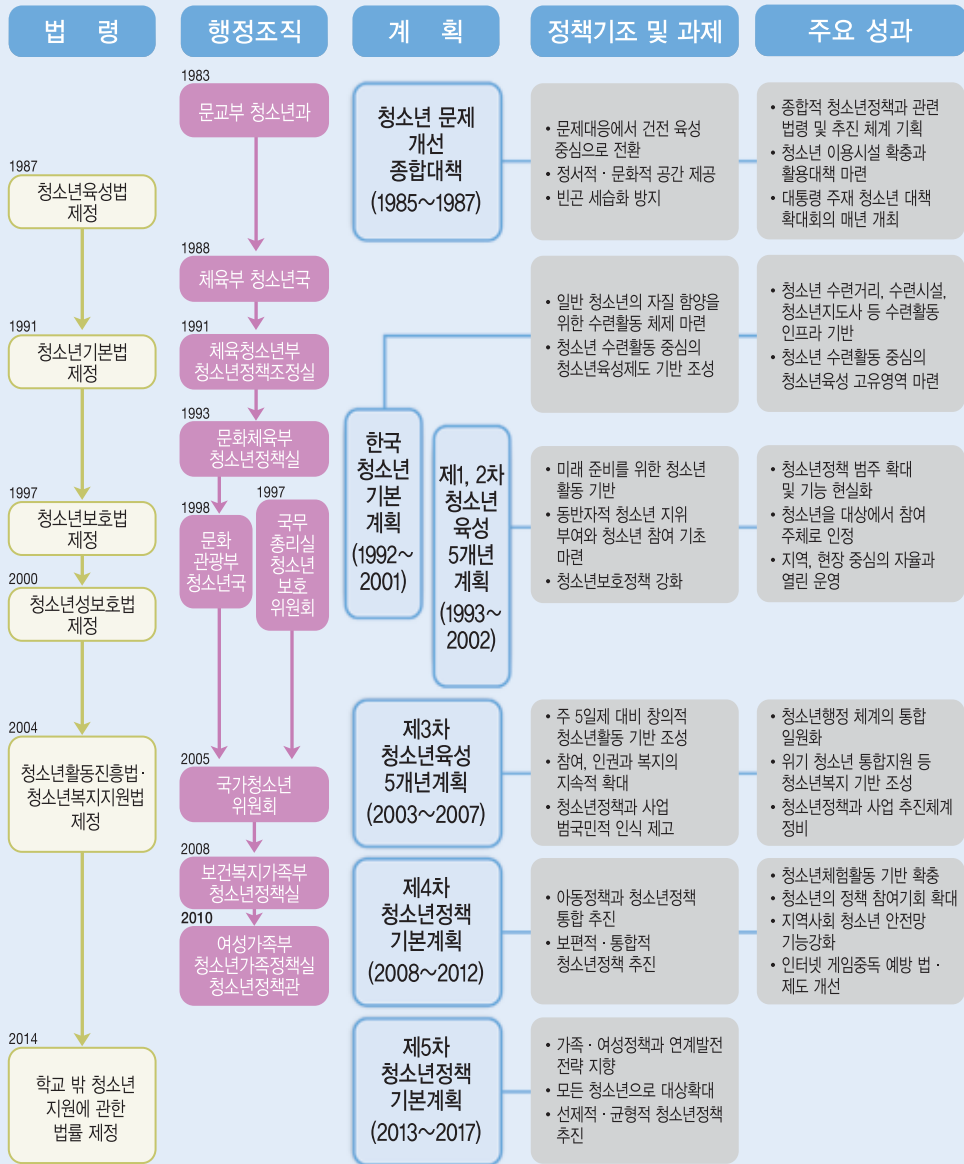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백서 발간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 여성가족부와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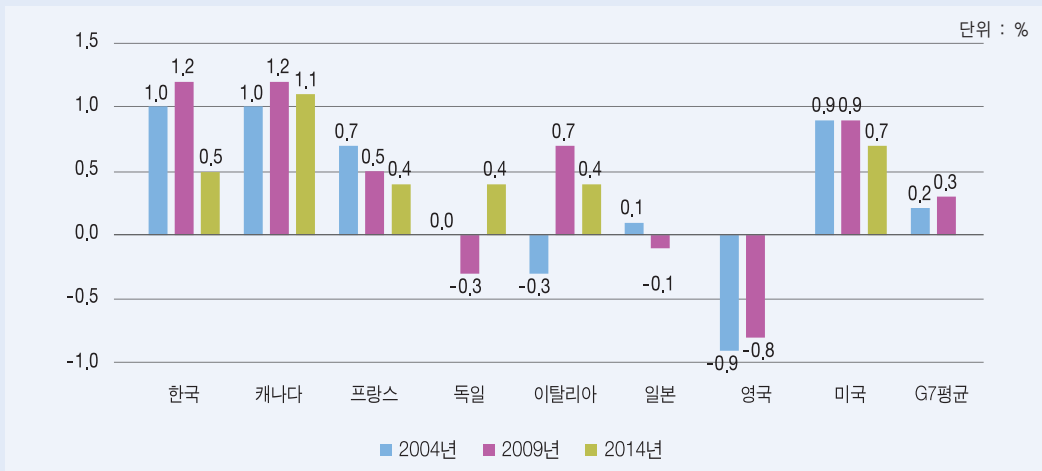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 1. 국제 비교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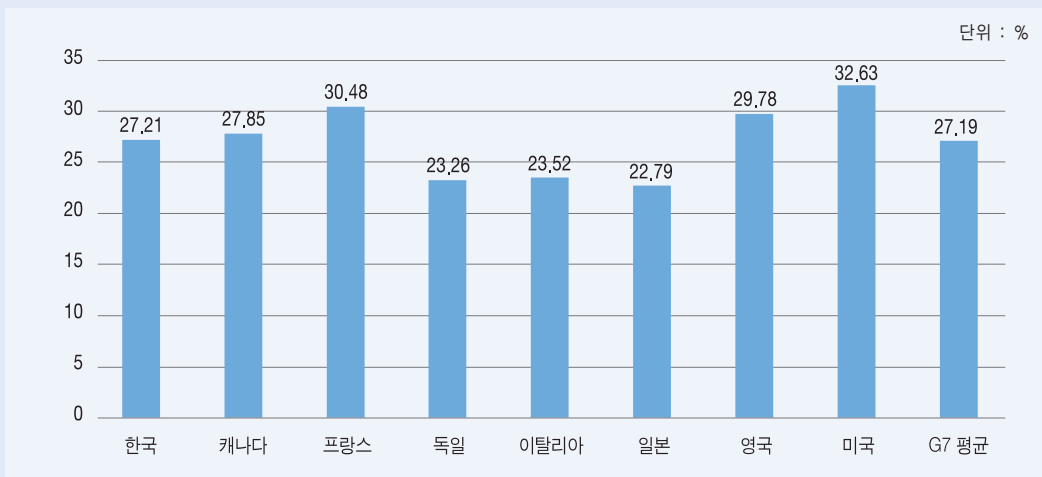
[인구 성장률]



주 : 1. 인구성장률 = (당해년도 연앙인구 / 전년도 연앙인구 - 1) × 100.

2. 일본과 영국은 2014년 데이터 누락되어 G7 2014년 평균값에서 제외.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에서 2015. 12. 11. 인출
자료 : OECD(2015).

[전체 인구 대비 아동·청소년(0 ~ 24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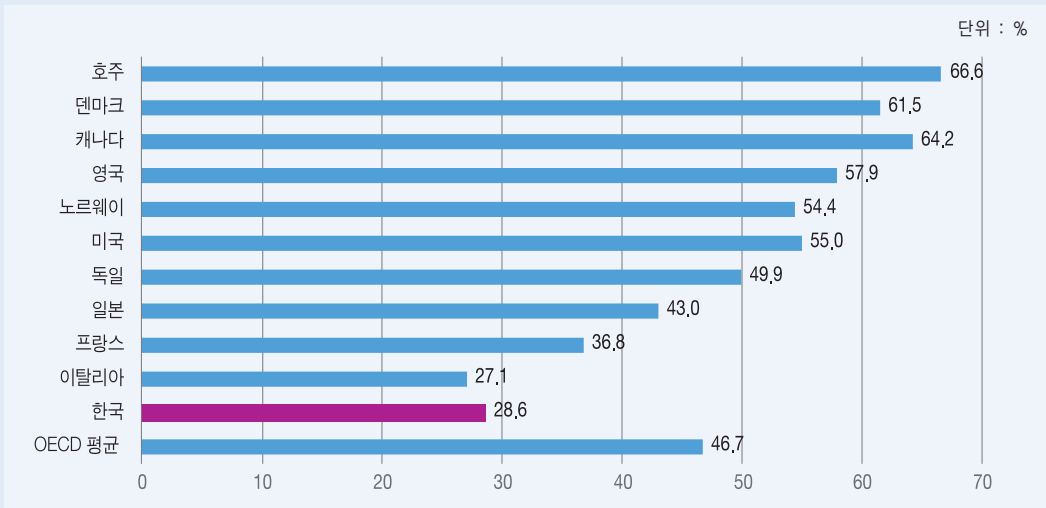


자료 : CIA World Factbook(2015), 2015년 6월 기준(<https://www.cia.gov>에서 2015. 12. 1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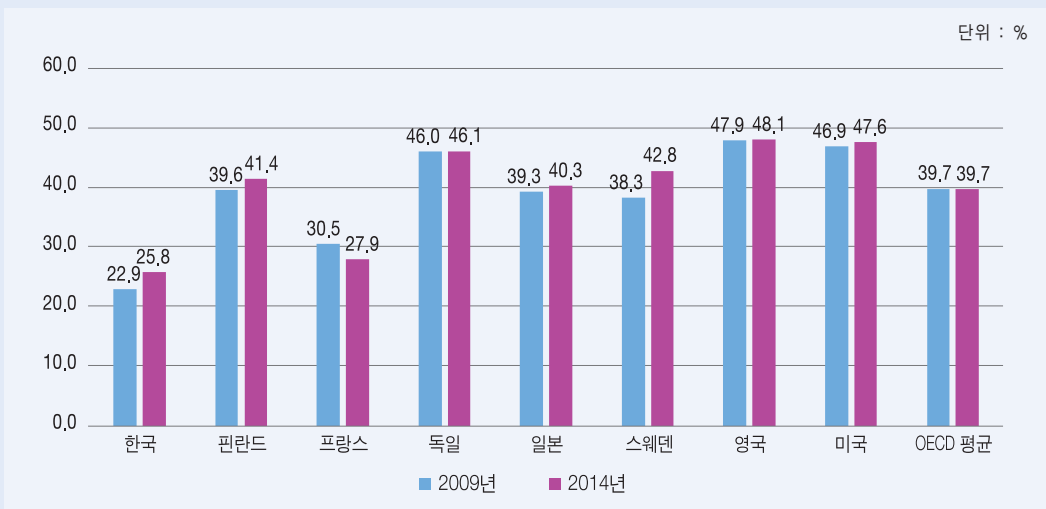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2014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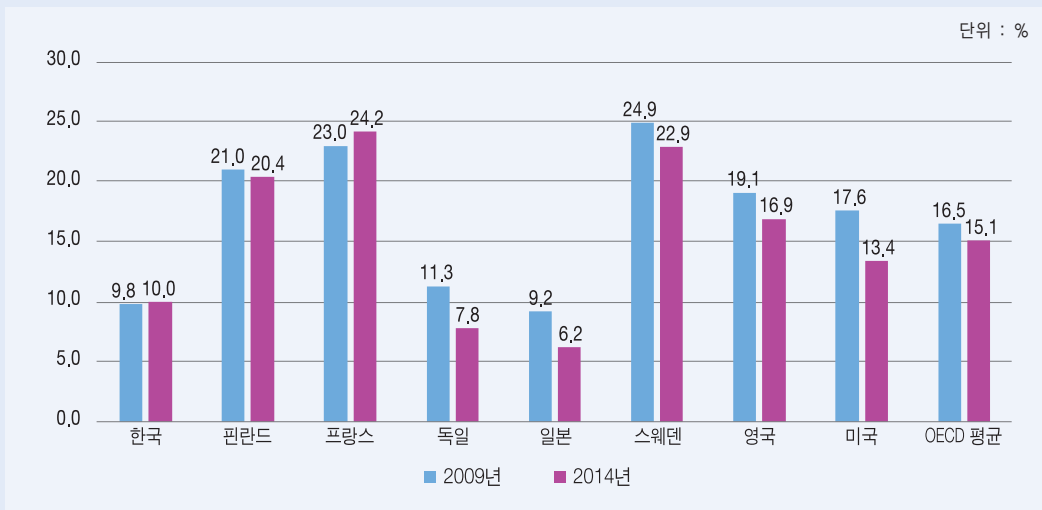
자료 : OECD(2015). Labour Force Statistics.

[청소년(15 ~ 24세) 고용률(2009/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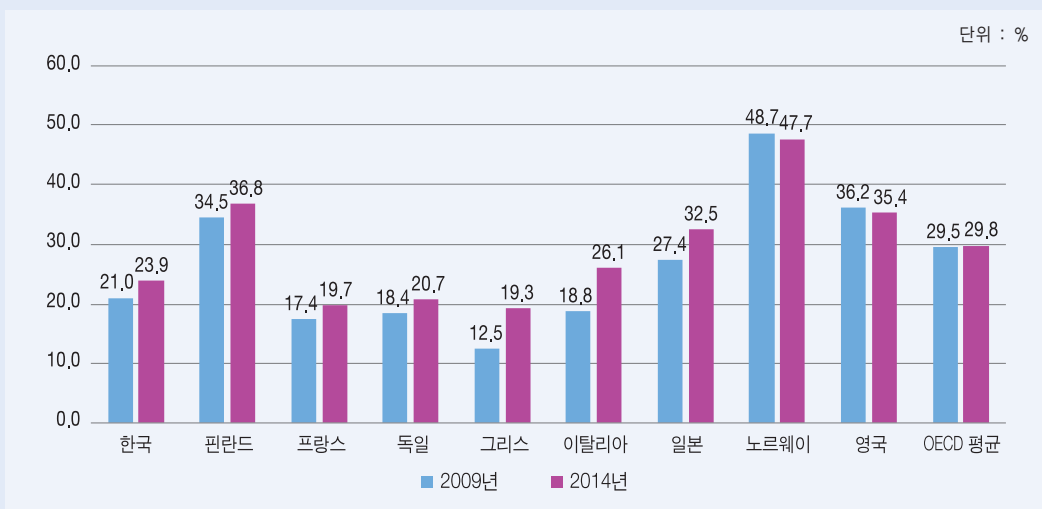
자료 : OECD(2015). Labour Force Statistics.

[청소년(15 ~ 24세) 실업률(2009/2014)]



자료 : OECD(2015), Labour Force Statistics.

[고용된 청소년(15 ~ 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09/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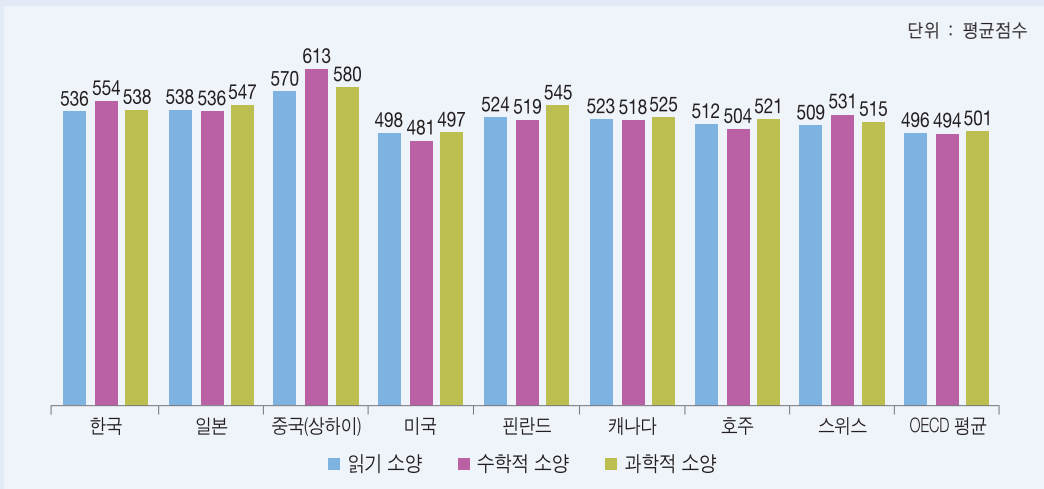


자료 : OECD(2015), Labour Forc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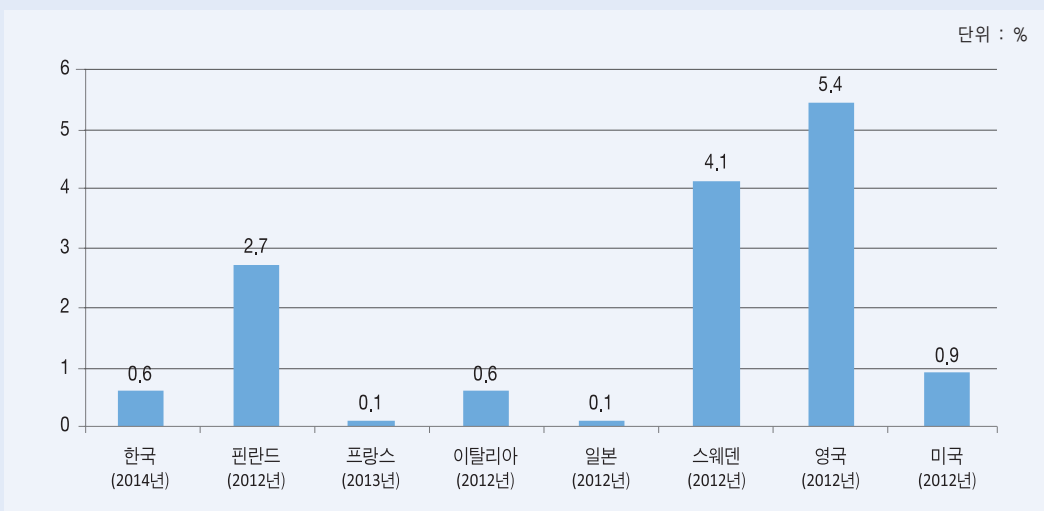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PISA 결과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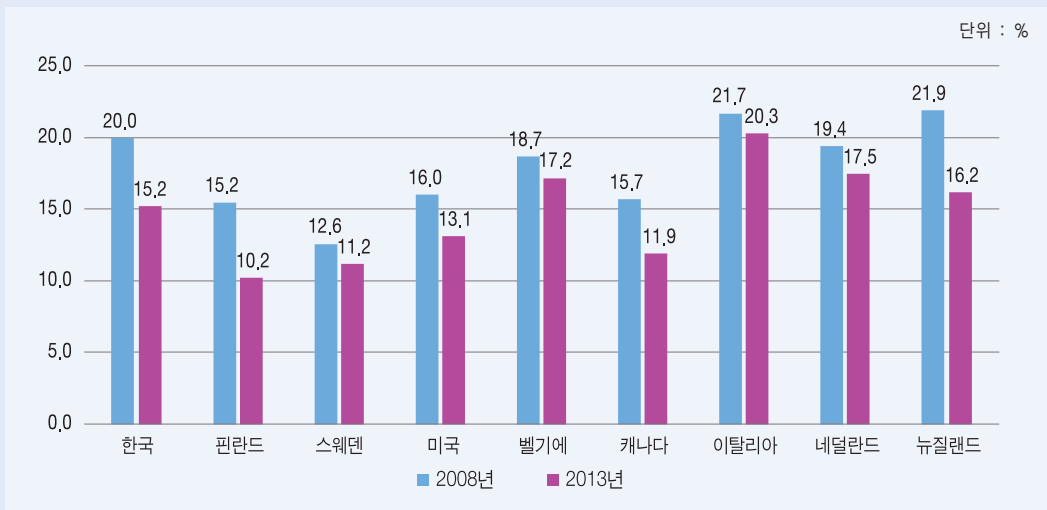
주 : 1. PISA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 3년 주기로 조사.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중등교육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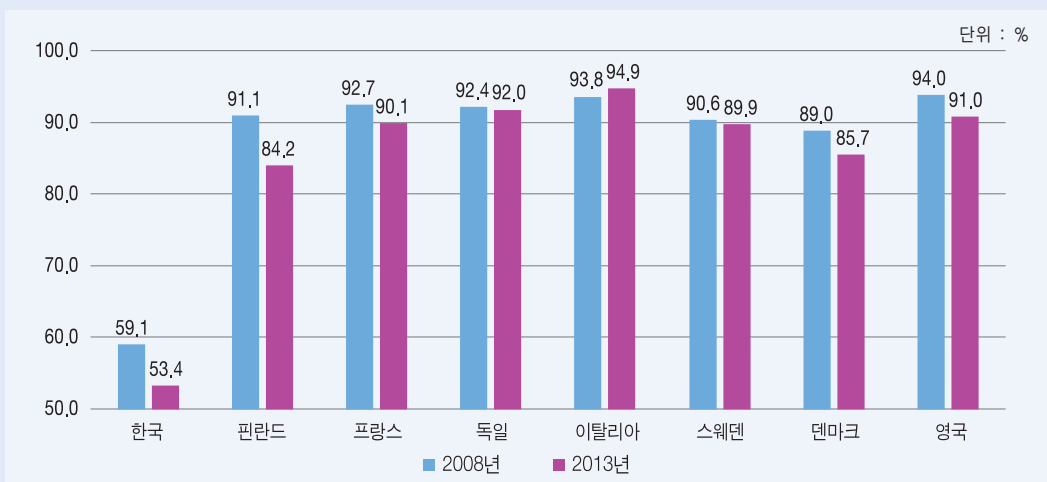
자료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15). Out-of-School Children.

【청소년(13 ~ 15세) 흡연율(2008/2013)】



자료 : OECD(2015), 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청소년(15 ~ 24세) 주관적 건강상태(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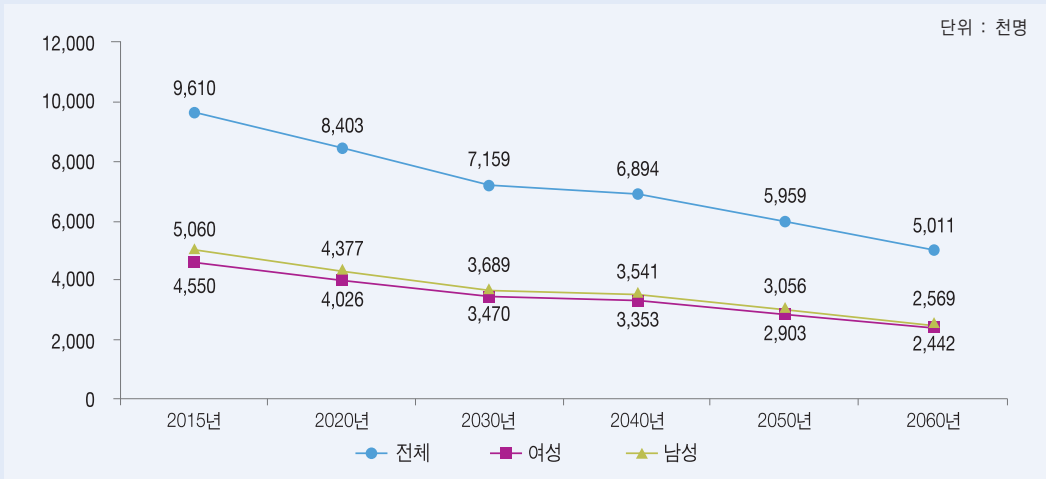
주 :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 OECD(2015), Health Status.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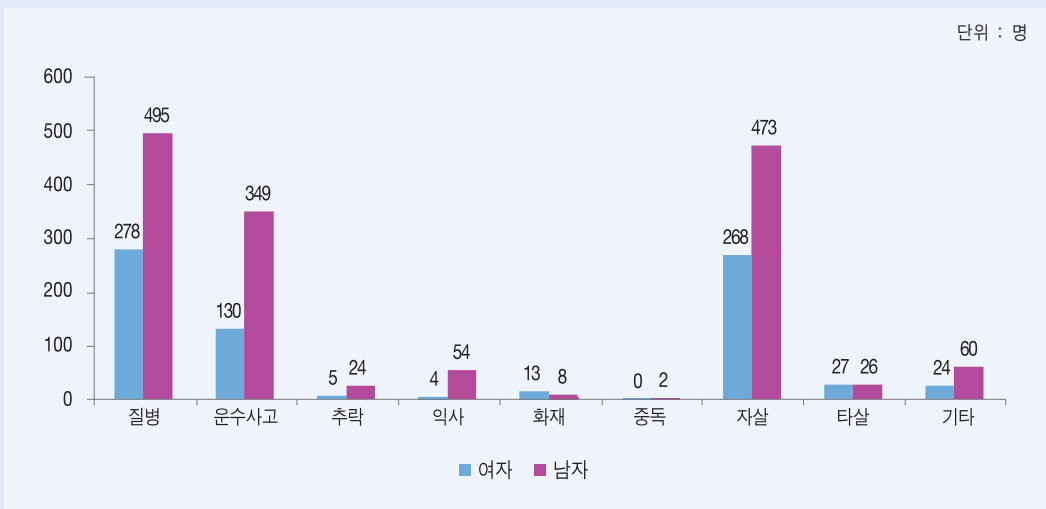
▶▶ 2. 국내 지표

[청소년(9~24세)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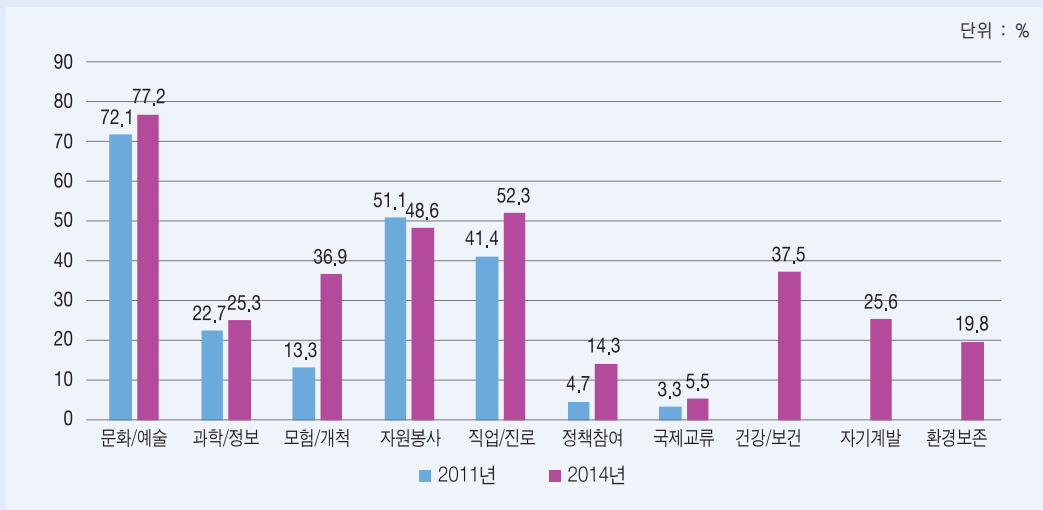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청소년(10~24세) 사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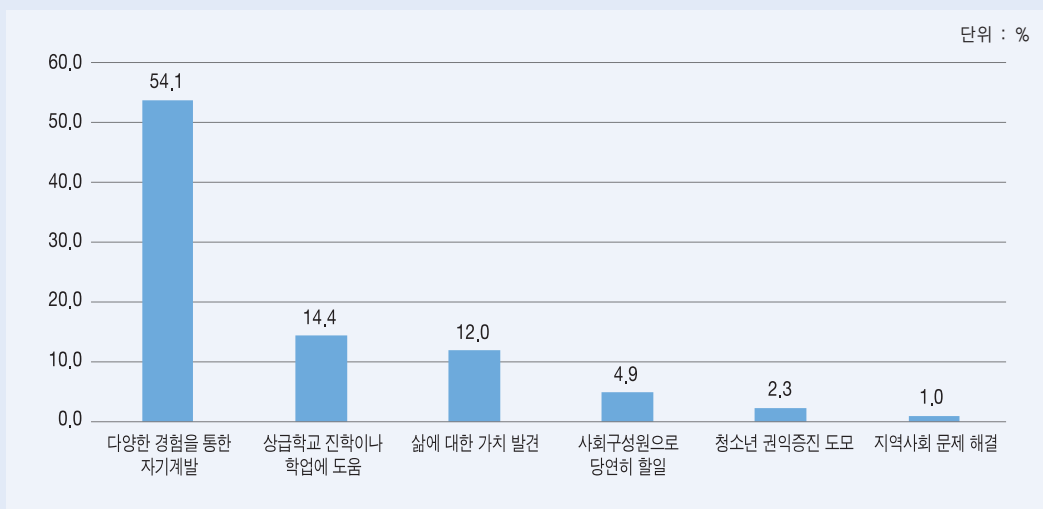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5), 2014년 사망원인통계.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 활동 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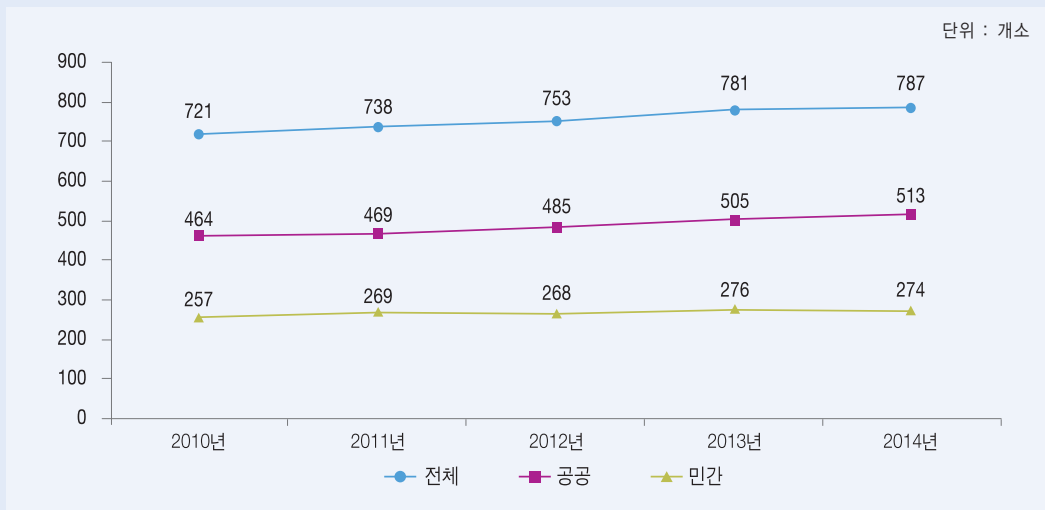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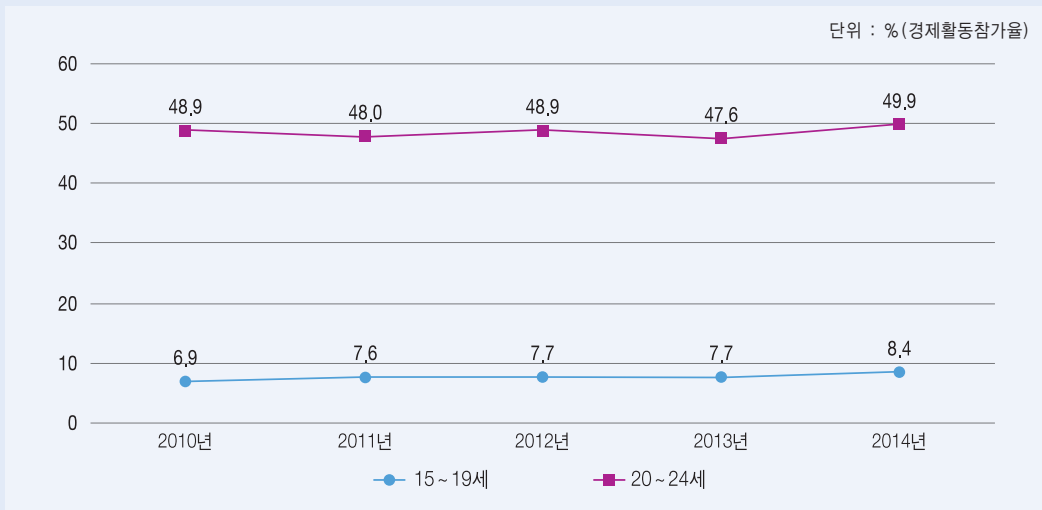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조사결과(2014. 12. 31. 기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 포함)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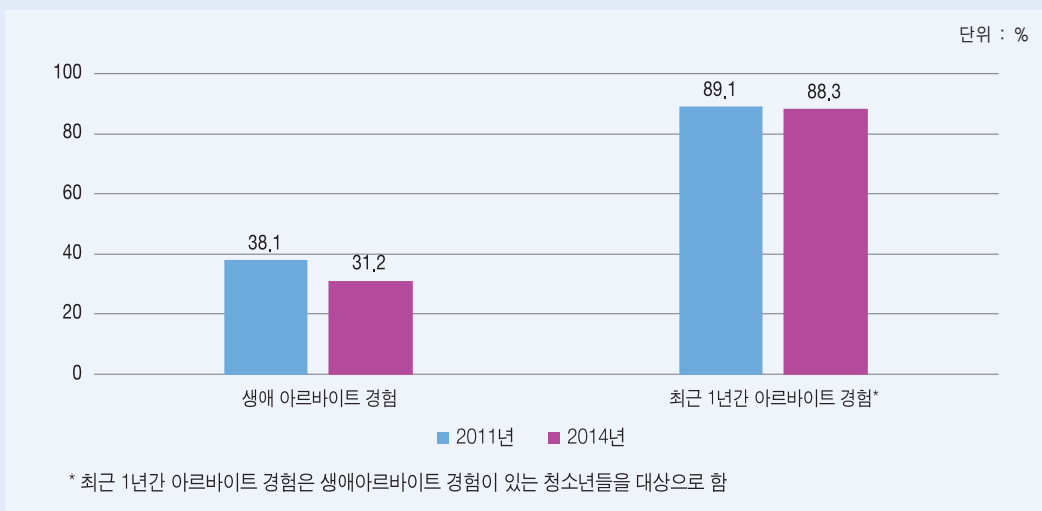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15 ~ 24세) 경제활동】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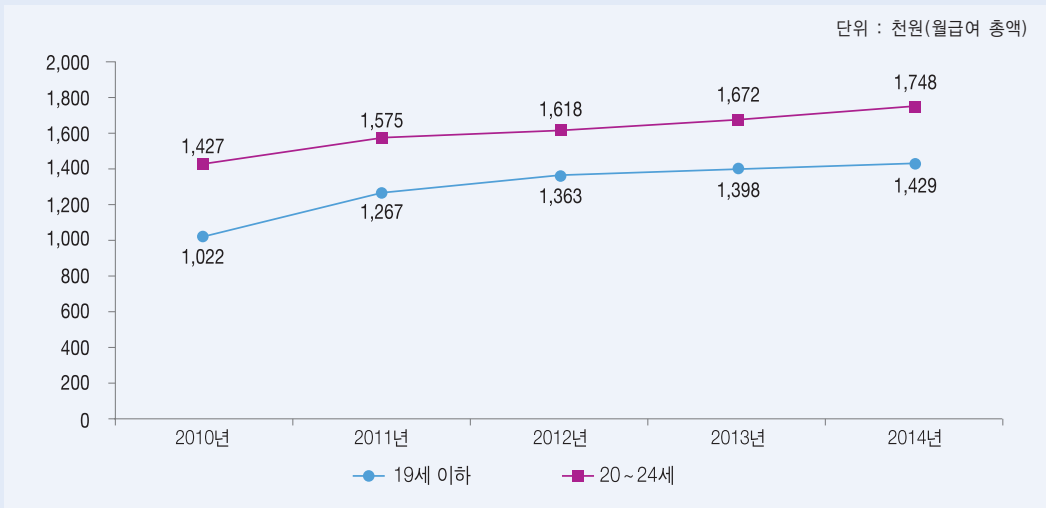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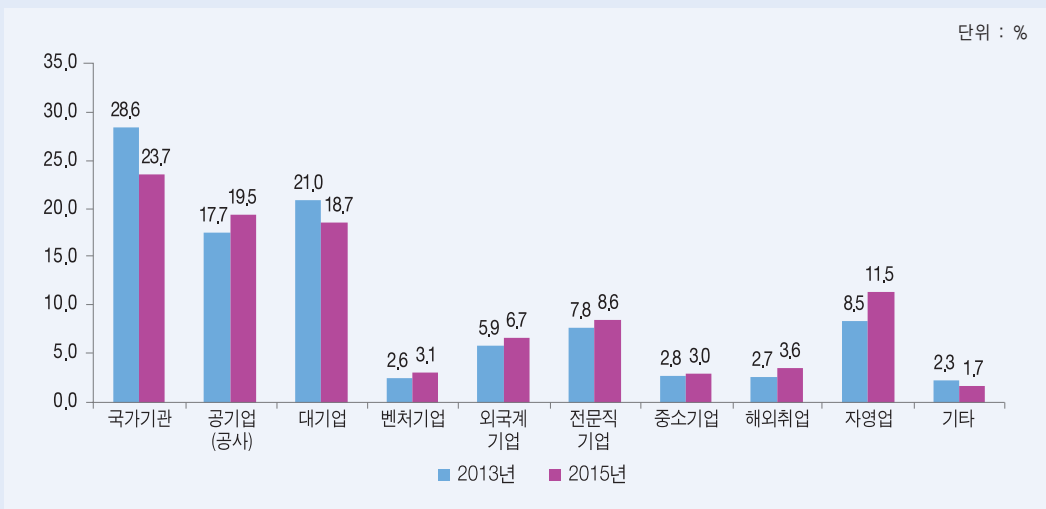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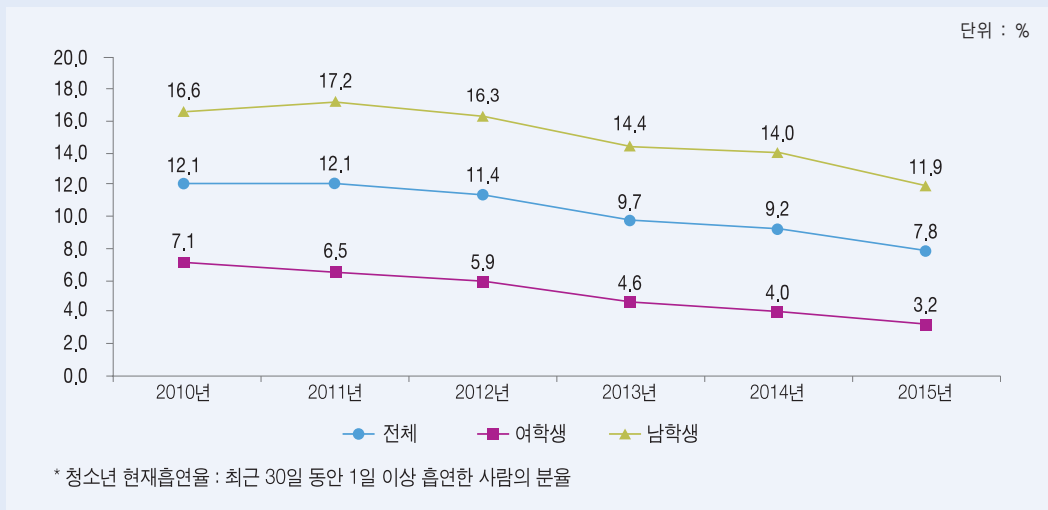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청소년(13~29세)이 선호하는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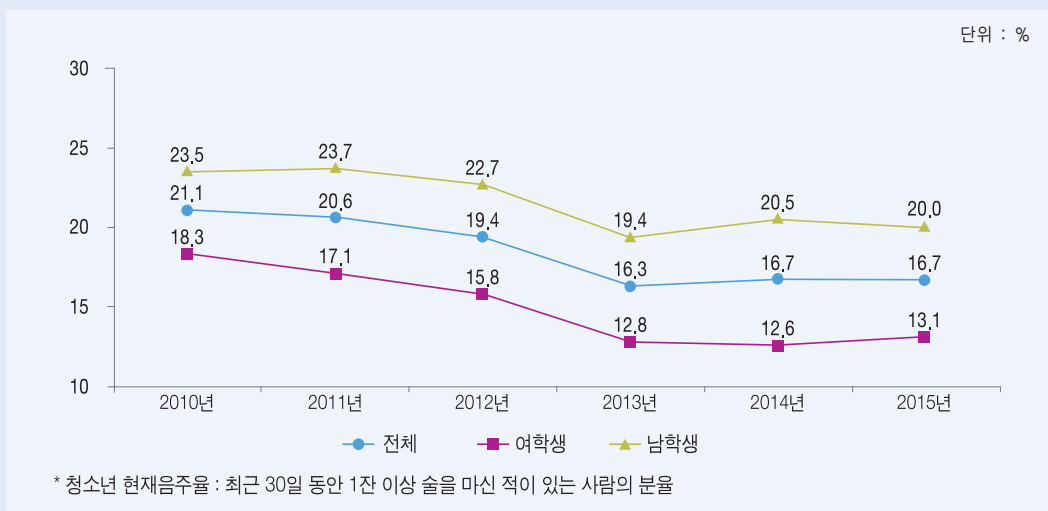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청소년(중·고생) 현재 흡연율 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중·고생) 현재 음주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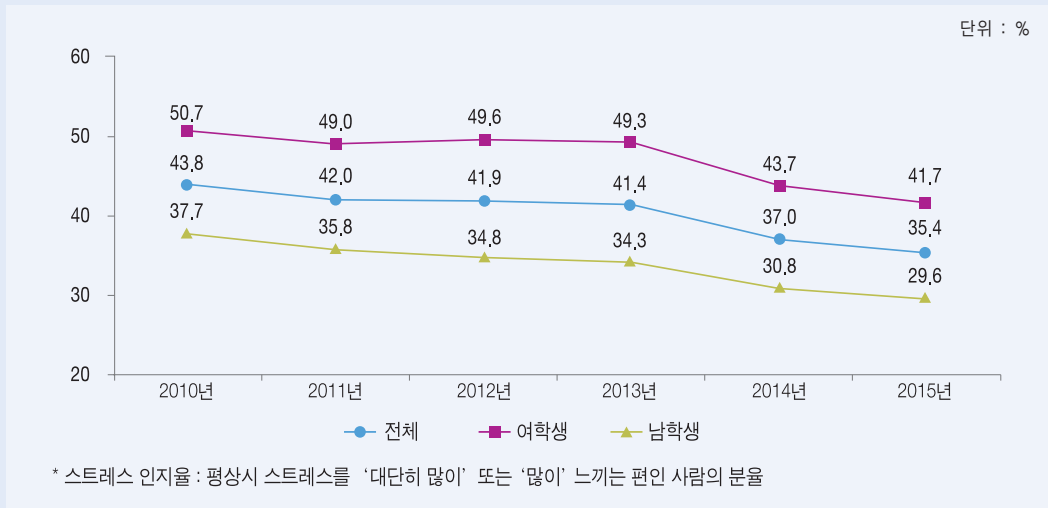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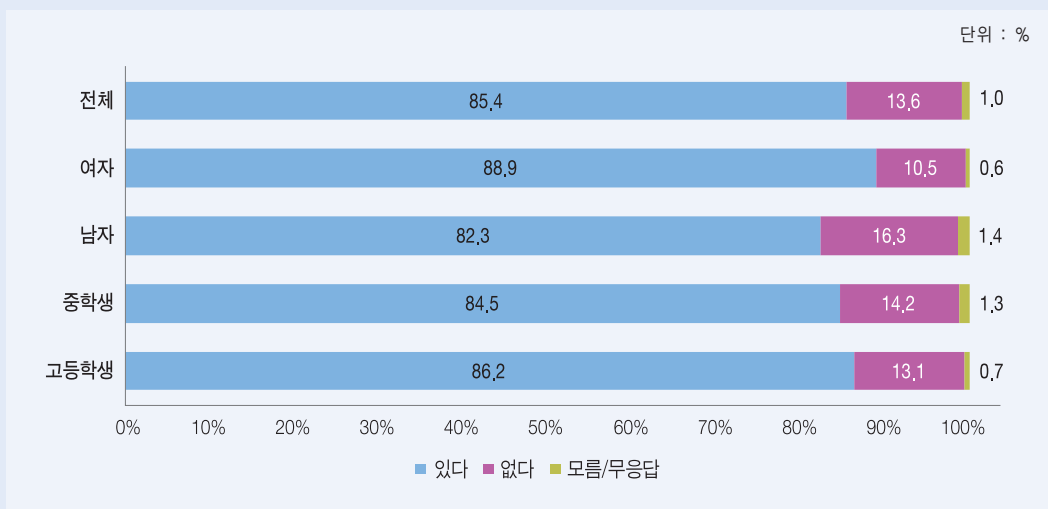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청소년(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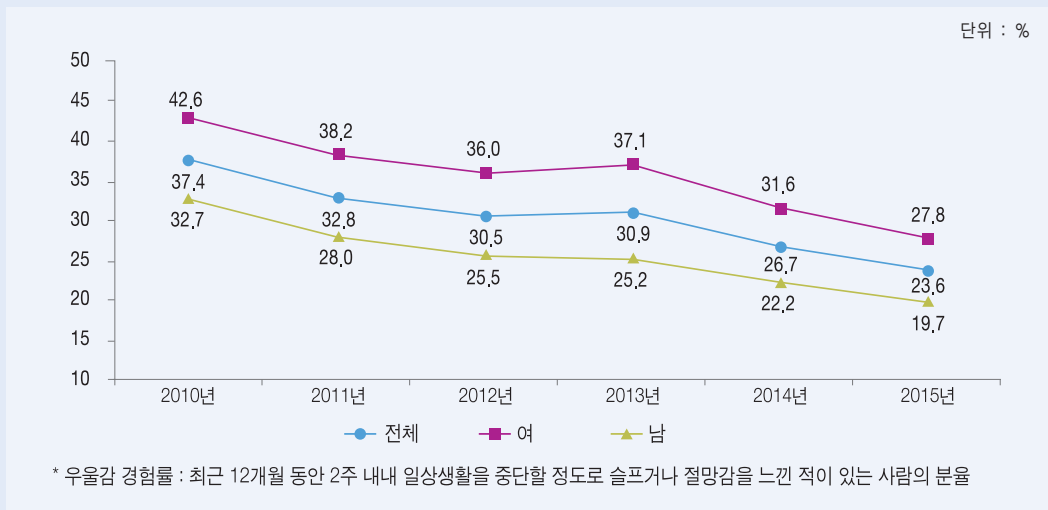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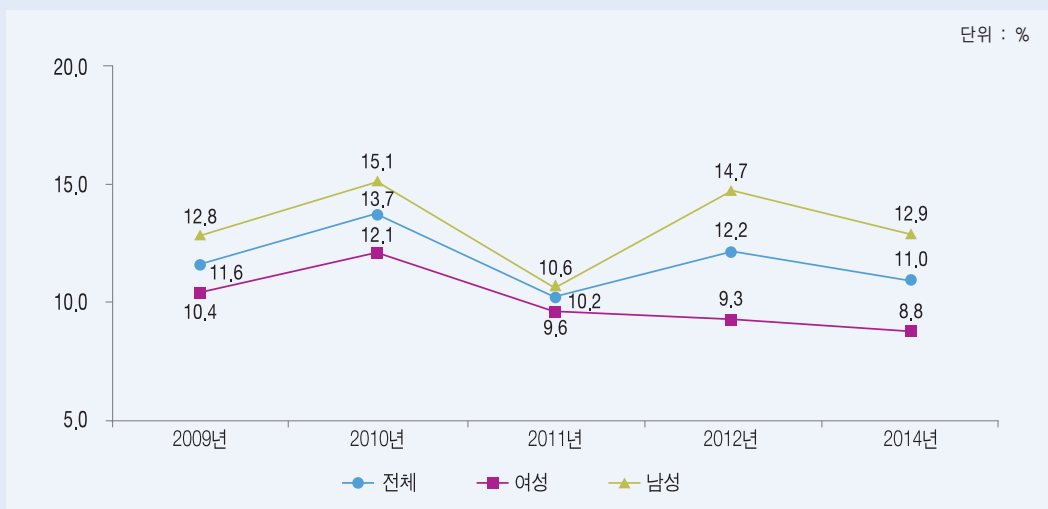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4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 가출 생애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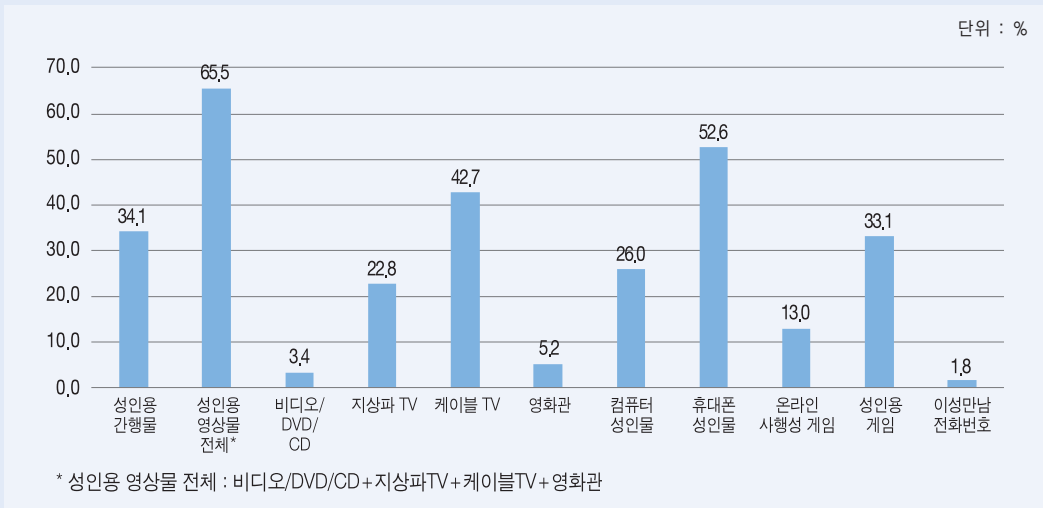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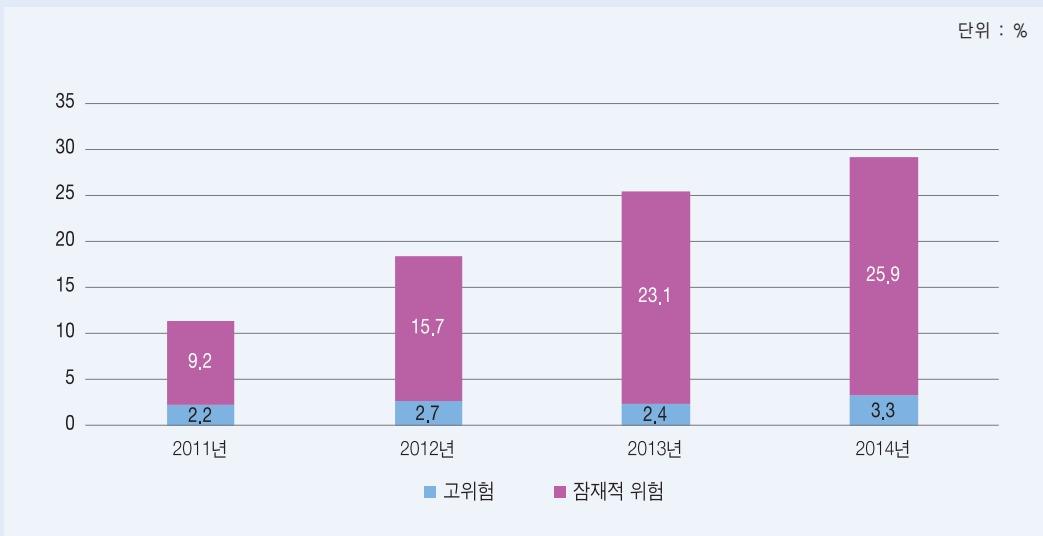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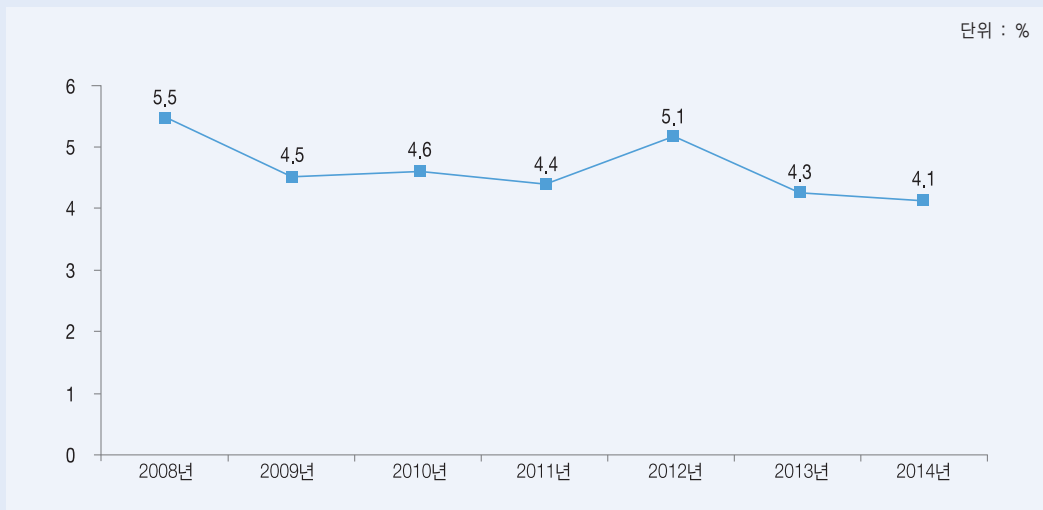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청소년(만 10세~19세)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각 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전체범죄대비 소년범죄의 비율 추이】



자료 : 대검찰청(각 년도), 범죄분석.

【청소년 성매매 검거 인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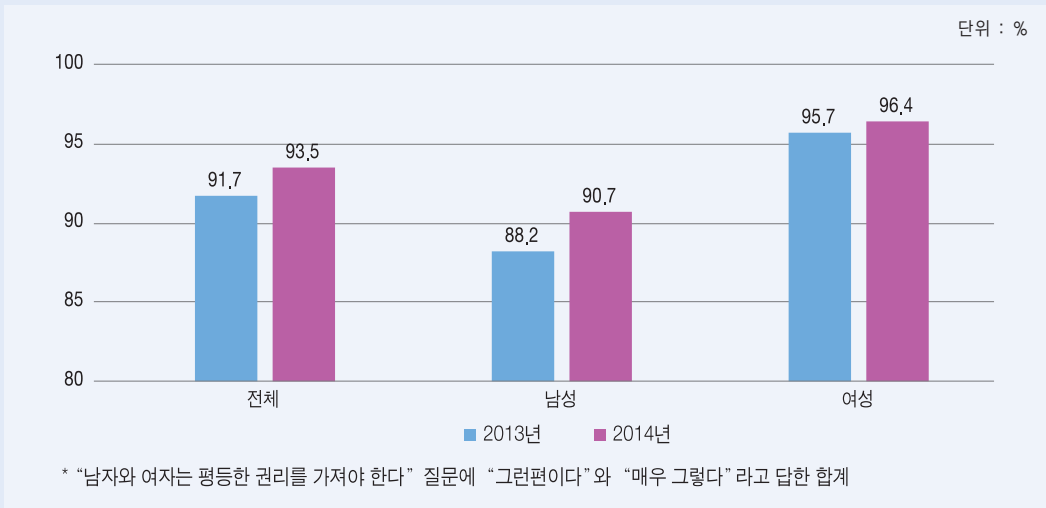


자료 : 경찰청(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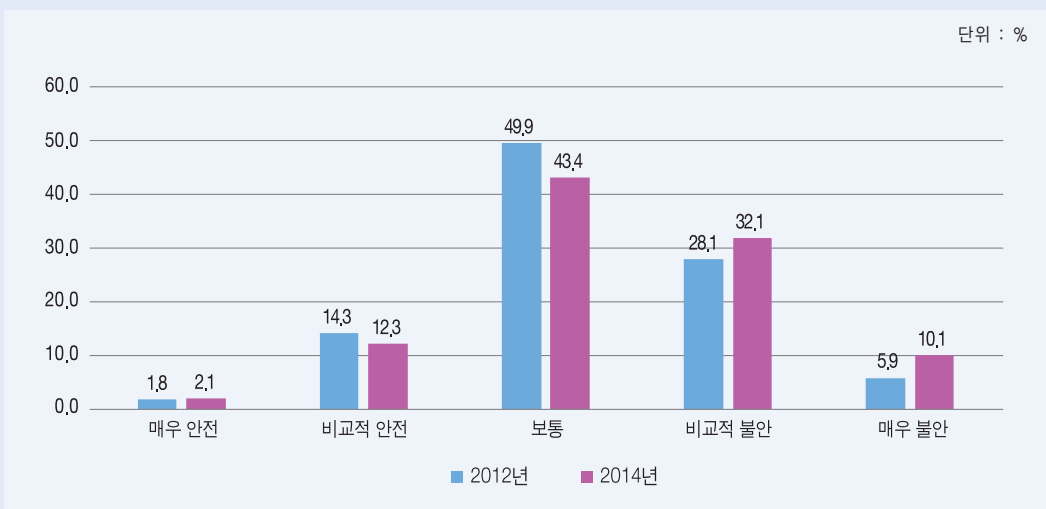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양성평등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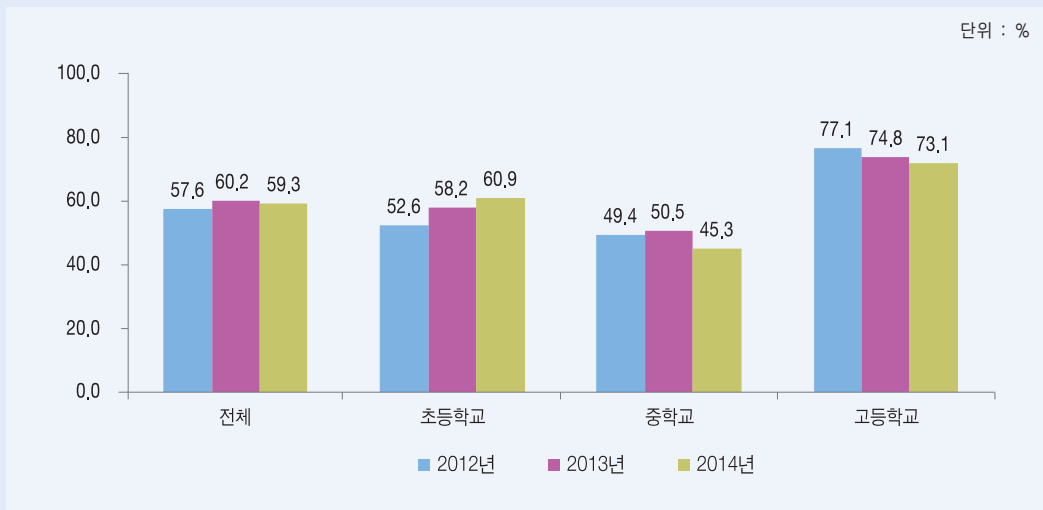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년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13~1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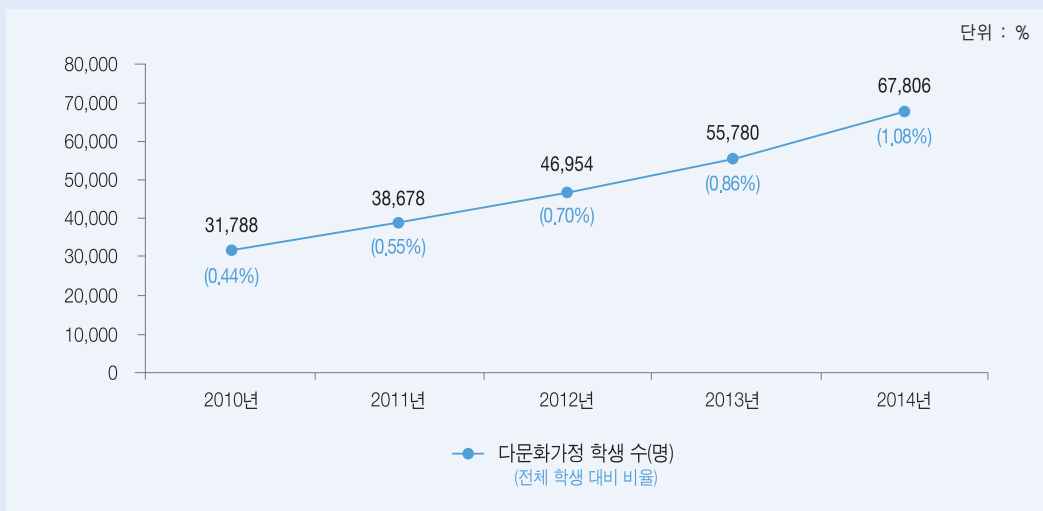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방과후학교 참여율】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교육비조사보고서.

【다문화가정 학생 수, 비율】



자료 : 교육부(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



제1부 총론

제1장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002
제2장 청소년정책 추진 현황	005
1.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	005
2. 청소년 활동사업	006
3. 청소년 복지사업	008
4. 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010
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의 흐름	012
1.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012
2. 유럽지역의 청소년정책	026
3. 미주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청소년정책	042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가족

제1장 청소년 인구 현황과 전망	054
1. 청소년 인구 현황	054
2. 청소년 인구 전망	056
3. 청소년 인구동태	058
제2장 가족구성 및 변동	064
1. 가족구성 현황	064
2. 가구 수 현황	065
3. 가구의 세대구성	067
제3장 가족관계	069
1. 자녀가치관	069
2. 부모와 청소년 자녀관계	074

제3부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082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082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083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083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086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094
1. 청소년의 달 행사	094
2. 청소년지도자대회	099
3. 청소년푸른성장대상(大賞)	101

제4부 청소년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106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106
2. 청소년문화활동	107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110
4.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116
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Korea)	120
6.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122
제2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125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도입 배경	125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 현황	125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129
1. 청소년 국제교류	129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134
3. 청소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행사 지원	136

제5부 **청소년 복지**

제1장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140
1. 아동빈곤율 현황	140
2. 한부모가구 현황	142
3. 다문화가족 및 아동 현황	144
4. 요보호아동 현황	146
제2장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149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꿈드림」	149
2. 가출 청소년 지원	153
3. 청소년 특별지원	157
4.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158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60
6. 지역아동센터 운영	163
7. 드림스타트 사업(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167
8.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173
9.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175
10. 아동 급식 지원	182

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184
1. 상담서비스	184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192
3. 청소년전화 1388	194
4.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197
5. 또래상담활동	198
제4장 청소년의 건강	204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04
2. 청소년의 영양	210
3.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212
4. 청소년의 정신건강	217

제6부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222
1.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222
2. 학교폭력대책	227
3.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237
4.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242
5.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245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251
1.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251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256
제3장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266
1.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266

제4장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272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대응	272
2.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실시 및 효과	277
3.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279
제5장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281
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선도보호(재유입방지교육)	281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285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288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290
5.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시	294

제7부

청소년의 교육

제1장 학교교육 현황	300
1. 학령인구	300
2. 학생 인구 및 학교 수	301
3. 조기유학 현황	305
4. 대안교육 학교	306
5. 진학률	307
6. 학업중단을	309
7. 교육재정	310
제2장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314
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314
2.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319

제3장 교육복지정책	321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321
2. 방과후학교	326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333
4.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341
5. 탈북학생 교육 지원	347

제8부

청소년과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358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358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361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362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365
5. 임금 및 노동시간	368
6. 청소년 아르바이트	371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373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373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374
3.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376
4. 대학 졸업자 취업 상황	376
제3장 청소년의 직업·진로정책	379
1. 청소년고용촉진대책	379
2.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386
3. 청소년 창업지원 대책	390

제9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제1장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396
1.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동향	396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400
3.	학생범죄의 동향	402
제2장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404
1.	청소년 비행의 예방	404
2.	비행 청소년의 사법 처리	417
3.	비행 청소년의 교정교육	427

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제1장	청소년 시설	446
1.	청소년활동시설	446
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452
제2장	청소년지도자	455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455
2.	청소년지도사	456
3.	청소년상담사	461
제3장	청소년 단체	467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467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469
제4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471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471
2.	청소년관련 업무 추진기관	478

3. 청소년관련 시·도 행정조직	482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483
5. 정부 산하기관	484
제5장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486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86
2. 청소년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관련 연구기관	490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491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495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495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	496

〈표 1-3-1〉 교육정책위원회의 주요사업	015
〈표 1-3-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차세대팀 주요사업	023
〈표 1-3-3〉 유럽연합 Youth Strategy(2010~2018)의 8개 분야	028
〈표 2-1-1〉 2015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055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057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058
〈표 2-1-4〉 연도별 인구동태율 추이	059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060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061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062
〈표 2-1-8〉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구성비	063
〈표 2-2-1〉 연도별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064
〈표 2-2-2〉 가구유형별 가구 수 현황	066
〈표 2-2-3〉 가구의 가구원 수 현황	067
〈표 2-2-4〉 세대구성유형별 가구 수 현황	068
〈표 2-3-1〉 자녀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070
〈표 2-3-2〉 자녀를 기르는 의미	071
〈표 2-3-3〉 이상적인 자녀양육방식	072
〈표 2-3-4〉 자녀양육책임의 범위(2009년, 2012년)	072
〈표 2-3-5〉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074
〈표 2-3-6〉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075
〈표 2-3-7〉 부모님과 대화시간(1일 평균)	077
〈표 2-3-8〉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	077
〈표 2-3-9〉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	078
〈표 3-2-1〉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087
〈표 3-2-2〉 2015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087
〈표 3-2-3〉 2015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089
〈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주제 및 정책과제 제안 현황	090
〈표 3-2-5〉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예시)	092
〈표 3-2-6〉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093
〈표 3-3-1〉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 현황	094
〈표 3-3-2〉 청소년의 달 기념식 주요 행사내용	094

〈표 3-3-3〉 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096
〈표 3-3-4〉 역대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현황	097
〈표 3-3-5〉 성년의 날 행사 현황	098
〈표 3-3-6〉 유공자 시상 현황	099
〈표 3-3-7〉 역대 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100
〈표 3-3-8〉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역대 수상자 현황	102
〈표 4-1-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107
〈표 4-1-2〉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	108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현황	109
〈표 4-1-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유형 구분	114
〈표 4-1-5〉 연도별 인증제 운영 현황	114
〈표 4-1-6〉 인증수련활동 기관별 현황	115
〈표 4-1-7〉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117
〈표 4-1-8〉 지역별 신고 수리 현황	118
〈표 4-1-9〉 시설 유형별 신고 현황	119
〈표 4-1-10〉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120
〈표 4-1-11〉 포상제 운영 현황	121
〈표 4-1-1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123
〈표 4-1-13〉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내용	124
〈표 4-2-1〉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126
〈표 4-2-2〉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 프로그램 수(누적)	126
〈표 4-2-3〉 2014년도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 참여 봉사자 수	127
〈표 4-2-4〉 대한민국 청소년자원봉사단(KYVP) 추진경과	128
〈표 4-3-1〉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4개국)	129
〈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 및 교류 현황	130
〈표 4-3-3〉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현황	132
〈표 4-3-4〉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현황	133
〈표 4-3-5〉 2015년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134
〈표 4-3-6〉 2015년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135
〈표 4-3-7〉 2015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136
〈표 5-1-1〉 이동빈곤율	141
〈표 5-1-2〉 가구형태별 한부모가구 현황	143

〈표 5-1-3〉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144
〈표 5-1-4〉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145
〈표 5-1-5〉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최근 5년)	145
〈표 5-1-6〉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	146
〈표 5-1-7〉 요보호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147
〈표 5-1-8〉 요보호아동 보호 현황	148
〈표 5-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혁	150
〈표 5-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현황	152
〈표 5-2-3〉 청소년쉼터의 발전단계	153
〈표 5-2-4〉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154
〈표 5-2-5〉 쉼터의 종류 및 기능	155
〈표 5-2-6〉 연도별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	155
〈표 5-2-7〉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	157
〈표 5-2-8〉 특별지원 종류 및 지원 내용	157
〈표 5-2-9〉 2014년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수	158
〈표 5-2-10〉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158
〈표 5-2-11〉 북한이탈청소년 재학 현황	159
〈표 5-2-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161
〈표 5-2-13〉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162
〈표 5-2-14〉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163
〈표 5-2-15〉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단가	166
〈표 5-2-16〉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167
〈표 5-2-17〉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및 사례관리 아동 수	169
〈표 5-2-18〉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172
〈표 5-2-19〉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174
〈표 5-2-20〉 아동복지시설 현황	176
〈표 5-2-21〉 가정위탁 보호 현황	177
〈표 5-2-2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179
〈표 5-2-23〉 국내·외 입양 현황	181
〈표 5-2-24〉 국내 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181
〈표 5-2-25〉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183
〈표 5-3-1〉 2014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186

〈표 5-3-2〉 2014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187
〈표 5-3-3〉 2014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별·대상별 상담실적	189
〈표 5-3-4〉 2014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191
〈표 5-3-5〉 2014년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193
〈표 5-3-6〉 2014년 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194
〈표 5-3-7〉 2014년 청소년전화 1388 주요 실적	195
〈표 5-3-8〉 청소년전화 1388 호소문제 유형별 이용건수	195
〈표 5-3-9〉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	197
〈표 5-3-10〉 솔리언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내용	199
〈표 5-3-11〉 솔리언 또래상담 심화훈련 프로그램 내용	200
〈표 5-3-12〉 2014년 또래상담 사업 실적	202
〈표 5-3-13〉 2014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성 분석	203
〈표 5-4-1〉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205
〈표 5-4-2〉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206
〈표 5-4-3〉 성별·연령별 50m달리기의 추이	207
〈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208
〈표 5-4-5〉 성별·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208
〈표 5-4-6〉 성별·연령별 윗몸일으키기의 추이(2011-윗몸말아올리기)	209
〈표 5-4-7〉 성별·연령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추이	209
〈표 5-4-8〉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210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	211
〈표 5-4-10〉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211
〈표 5-4-11〉 끼니별 결식률	212
〈표 5-4-12〉 흡연 관련 지표	214
〈표 5-4-13〉 음주 관련 지표	216
〈표 6-1-1〉 분야별 점검등급 구분	223
〈표 6-1-2〉 안전점검 주요 내용	223
〈표 6-1-3〉 안전점검 평가기준	224
〈표 6-1-4〉 2015년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225
〈표 6-1-5〉 7.23 현장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229
〈표 6-1-6〉 '현장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 계획	231
〈표 6-1-7〉 4대 중점 추진과제 및 12개 세부 추진과제	236

〈표 6-1-8〉 아동학대 발생 현황	238
〈표 6-1-9〉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39
〈표 6-1-10〉 실종 일반아동·장애아동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	243
〈표 6-1-11〉 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246
〈표 6-1-12〉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국제 비교(아동 10만 명당)	247
〈표 6-1-13〉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 정책	249
〈표 6-2-1〉 청소년 현재 흡연율,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 연령	252
〈표 6-2-2〉 청소년 음주 경험률 및 처음 음주 연령	252
〈표 6-2-3〉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254
〈표 6-2-4〉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255
〈표 6-2-5〉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	256
〈표 6-2-6〉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257
〈표 6-2-7〉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258
〈표 6-2-8〉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259
〈표 6-2-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261
〈표 6-2-1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	262
〈표 6-2-11〉 청소년 유해환경 유형별 단속실적(연도별)	263
〈표 6-2-1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264
〈표 6-3-1〉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267
〈표 6-3-2〉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 고시 현황	269
〈표 6-3-3〉 청소년 유해음반 결정 고시 현황	270
〈표 6-5-1〉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282
〈표 6-5-2〉 교육프로그램 구성	283
〈표 6-5-3〉 교육 실시 현황	284
〈표 6-5-4〉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292
〈표 6-5-5〉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	292
〈표 6-5-6〉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295
〈표 6-5-7〉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296
〈표 7-1-1〉 학령인구	301
〈표 7-1-2〉 학교급별 학생 수	302
〈표 7-1-3〉 학교급별 학교 수	303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 수	304

〈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출국 현황	305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306
〈표 7-1-7〉 학교급별 진학률	308
〈표 7-1-8〉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309
〈표 7-1-9〉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 부처 예산	310
〈표 7-1-10〉 GDP 대비 교육재정	311
〈표 7-1-11〉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312
〈표 7-1-12〉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313
〈표 7-2-1〉 중학교 3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315
〈표 7-2-2〉 고등학교 2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316
〈표 7-2-3〉 중학교 3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317
〈표 7-2-4〉 고등학교 2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318
〈표 7-2-5〉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320
〈표 7-3-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322
〈표 7-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329
〈표 7-3-3〉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329
〈표 7-3-4〉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330
〈표 7-3-5〉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330
〈표 7-3-6〉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 현황	331
〈표 7-3-7〉 방과후학교 내용별 강좌 현황	331
〈표 7-3-8〉 방과후학교 강사 구성 현황	332
〈표 7-3-9〉 방과후학교 만족도	332
〈표 7-3-10〉 2004~2013년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	334
〈표 7-3-11〉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 개요	336
〈표 7-3-12〉 거점별 우수중학교 권역별 선정 학교 수(2015)	337
〈표 7-3-13〉 농산어촌 ICT 지원 사업 개요	338
〈표 7-3-14〉 농산어촌 ICT 구축 현황	340
〈표 7-3-15〉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2007~2014년)	341
〈표 7-3-16〉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2012~2014년)	342
〈표 7-3-17〉 예비학교 운영(2015년)	344
〈표 7-3-18〉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347
〈표 7-3-19〉 연령대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348

〈표 7-3-20〉 탈북청소년 수학 현황	348
〈표 7-3-21〉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349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358
〈표 8-1-2〉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60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현황 추이	361
〈표 8-1-4〉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363
〈표 8-1-5〉 청소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365
〈표 8-1-6〉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367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369
〈표 8-1-8〉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369
〈표 8-1-9〉 연령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370
〈표 8-1-10〉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371
〈표 8-1-11〉 가장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372
〈표 8-2-1〉 2015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373
〈표 8-2-2〉 2015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374
〈표 8-2-3〉 2015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376
〈표 8-2-4〉 2014년 대학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377
〈표 8-2-5〉 2014년 전문대 신규졸업자의 계열별 취업 상황과 취업률	377
〈표 8-2-6〉 2014년 일반대 신규졸업자의 계열별 취업 상황과 취업률	378
〈표 8-3-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	382
〈표 8-3-2〉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수검실적	382
〈표 8-3-3〉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의 직업심리검사 개요	382
〈표 9-1-1〉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인원의 구성 비율	396
〈표 9-1-2〉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397
〈표 9-1-3〉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398
〈표 9-1-4〉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399
〈표 9-1-5〉 소년범죄의 성별 현황	399
〈표 9-1-6〉 청소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	400
〈표 9-1-7〉 청소년 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	401
〈표 9-1-8〉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402
〈표 9-1-9〉 학생범죄의 연령별 현황	403
〈표 9-2-1〉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405

〈표 9-2-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405
〈표 9-2-3〉 학교전담경찰관 주요 활동성과	406
〈표 9-2-4〉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	407
〈표 9-2-5〉 사랑의 교실 운영 현황	407
〈표 9-2-6〉 명예경찰소년단 현황	408
〈표 9-2-7〉 명예경찰소년단 활동 현황	408
〈표 9-2-8〉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실적	409
〈표 9-2-9〉 학교담당검사제 활동실적	410
〈표 9-2-1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411
〈표 9-2-1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	411
〈표 9-2-1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	411
〈표 9-2-1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413
〈표 9-2-14〉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임무	414
〈표 9-2-15〉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운영 현황(2014년도)	414
〈표 9-2-16〉 대안교육 실시 현황	415
〈표 9-2-17〉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416
〈표 9-2-18〉 보호자 특별교육 실적	417
〈표 9-2-19〉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연도별 운영 현황	418
〈표 9-2-20〉 소년범죄 처리 현황	419
〈표 9-2-21〉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	420
〈표 9-2-22〉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 현황	421
〈표 9-2-23〉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	422
〈표 9-2-24〉 소년보호사건 접수 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424
〈표 9-2-25〉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425
〈표 9-2-26〉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 현황	426
〈표 9-2-27〉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429
〈표 9-2-28〉 보호소년 수용 현황	429
〈표 9-2-29〉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430
〈표 9-2-30〉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430
〈표 9-2-31〉 소년원 학생 진학 현황	430
〈표 9-2-32〉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431
〈표 9-2-33〉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	433

〈표 9-2-34〉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434
〈표 9-2-35〉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435
〈표 9-2-36〉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436
〈표 9-2-37〉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437
〈표 9-2-38〉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437
〈표 9-2-39〉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439
〈표 9-2-40〉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접수 추이	439
〈표 9-2-41〉 청소년 대상자 보호관찰성적에 따른 조치 현황	441
〈표 9-2-42〉 청소년 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442
〈표 9-2-43〉 청소년 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442
〈표 9-2-44〉 청소년 대상자 판결(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실적	443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447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448
〈표 10-2-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456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457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459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460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462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463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464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465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466
〈표 10-4-1〉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473
〈표 10-4-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 현황	475
〈표 10-4-3〉 청소년정책의 변천	476
〈표 10-4-4〉 청소년정책 영역별 소관부처 현황	478
〈표 10-4-5〉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현황	482
〈표 10-4-6〉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483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체 회원 현황	493
〈표 10-6-1〉 연도별 청소년 예산	495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498

[그림 1-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	004
[그림 2-3-1]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견해	073
[그림 2-3-2] 주중 아버지와 대화시간(1일 평균)	076
[그림 2-3-3] 주중 어머니와의 대화시간(1일 평균)	076
[그림 3-2-1] 청소년특별회의 추진 절차	089
[그림 3-2-2] 청소년증 발급 절차	092
[그림 4-1-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112
[그림 4-1-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113
[그림 4-1-3] 신고 수리 절차	118
[그림 4-2-1] 연도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 포함) 인원	127
[그림 5-1-1] 아동빈곤율 국제 비교(2012년, 중위소득 50%)	142
[그림 5-1-2] 한부모가구 수	143
[그림 5-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152
[그림 5-2-2]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164
[그림 5-2-3]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164
[그림 5-2-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165
[그림 5-2-5]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168
[그림 5-2-6] 드림스타트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발달 차이	170
[그림 5-2-7] 드림스타트 서비스 기간에 따른 아동발달 및 양육자의 변화	171
[그림 5-2-8]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173
[그림 5-3-1] 2014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 성별 비율	188
[그림 5-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서비스별 이용자	188
[그림 5-3-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192
[그림 5-3-4] 2014년 청소년전화 1388 월별 이용실적	196
[그림 5-3-5] 2014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학교폭력예방 효과성)	203
[그림 5-4-1] 학년별 평생 흡연 경험률	213
[그림 5-4-2] 학년별 현재 흡연율	214
[그림 5-4-3] 학년별 평생 음주 경험률	215
[그림 5-4-4] 학년별 현재 음주율	216
[그림 5-4-5]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217
[그림 5-4-6]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218

[그림 6-1-1]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234
[그림 6-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15년 시행계획 중점 과제	235
[그림 6-1-3]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14세 이하)	245
[그림 6-1-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14세 이하)	246
[그림 6-3-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절차도	268
[그림 6-3-2]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청구 절차	271
[그림 6-4-1] 여성가족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273
[그림 6-5-1]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 시설 배치도	291
[그림 7-1-1] 학령인구	300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 수	304
[그림 7-1-3] 학교급별 진학률	307
[그림 7-1-4]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2014)	312
[그림 7-3-1]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	341
[그림 8-1-1] 2013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359
[그림 8-1-2] 2014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360
[그림 8-1-3] 총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	362
[그림 8-1-4]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364
[그림 8-1-5]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364
[그림 8-1-6]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366
[그림 8-1-7] 2014년 성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368
[그림 8-2-1]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학자와 취업자 비율 추이	375
[그림 9-1-1]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 구성비	396
[그림 9-1-2] 범죄유형별 소년범죄 현황(2014년)	398
[그림 10-1-1]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446
[그림 10-2-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455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458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464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472

〈부록 1〉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500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504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509
〈부록 4〉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526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531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539
〈부록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540
〈부록 8〉 청소년정책 용어집	552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현실문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15대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은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 청소년 활동 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정책 참여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 청소년 우대사업은 청소년증 발급 사업 등이 있다. 청소년 활동사업은 대표적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사업,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사업 등이 있다. 청소년 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특별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운영, 청소년쉼터 운영이 있으며,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으로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과 청소년 미디어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이 있다.

OECD, UN, World Bank, UNESCO 등 국제기구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OECD는 내부 전문위원회인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와 교육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과 고용 부문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UN은 2015년 9월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빈곤종식과 건강한 삶,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경제개발과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면서 청소년의 교육, 보건, 영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에는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바일폰 정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NESCO는 교육,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참여,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1부 총론

제1장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제2장 청소년정책 추진 현황

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의 흐름

청소년정책의 개발과 평가를 체계화하기 위한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5~1987년)」이 수립된 이후, 1993년부터 5년마다 법정부적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어 청소년 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대, 청소년 정책참여의 기회 확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치료지원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가족구조 및 형태의 다변화, 청년 노동시장의 위축 및 고용 불안정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정책을 마련하고자 제5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관련 학계, 시설, 단체, 청소년,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 5대 영역(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15대 중점과제와 75개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영역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영역으로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며,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성·배려·나눔 함양을 위해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영역으로서, 정책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청소년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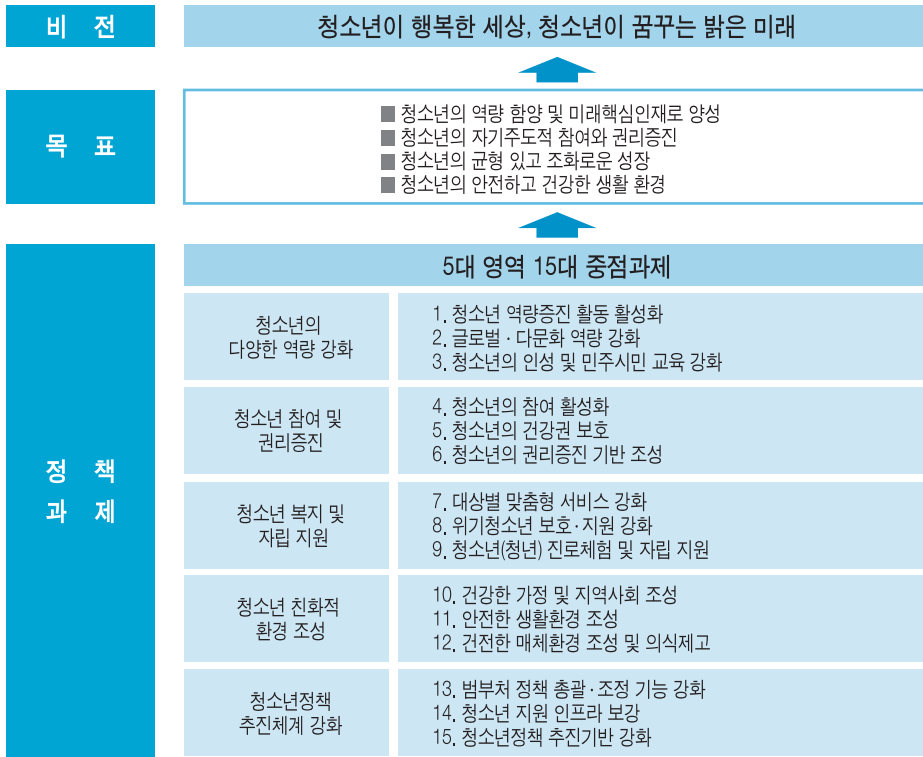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강화를 위한 지원 및 UN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여 청소년 권리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영역으로서, 소득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확대·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학교폭력, 가출, 인터넷 중독, 학업중단 등 위기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추진하는 한편,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하여 창업, 취업지원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영역으로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폭력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 등 생활환경 전반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조성하며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유해매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매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영역으로서, 각 부처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청소년전담과 설치 등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며,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1-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제 2 장

청소년정책 추진 현황

1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

2015년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은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 청소년 활동 사업, 청소년복지 사업, 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은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며 청소년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참여 증진 사업으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우대사업은 청소년증 발급 사업이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대표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회의체이며 2015년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는 17개 시·도에서 총 256명을 선발하여 진행하였다. 지난 10년간 청소년 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과제는 총 388건으로 이 중 344건의 정책과제가 수용(88.6%)되어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설치된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구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는 지난해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된 ‘중앙 단위 청소년활동 안전기구 설치’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189개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약 4,000여 명의 청소년참여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여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추진·정산 등의 사업진행을 모두 청소년이 주도 하여 진행하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70여 개 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개발·개선(25개 팀), 사회구성원 관계개선(25개 팀), 청소년 친화적 환경 만들기(15개 팀), 청소년 권익개선(5개 팀)으로 주제를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증 사업은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하고 교통수단·문화시설 등

에서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부터 도입된 청소년증 발급은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청소년 활동사업

2015년 청소년 활동사업의 대표적인 정책들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사업,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사업 등이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 4학년부터 중등 2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2005년 46개소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244개소, 9,76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습형태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체험활동과정’,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 독서, 전문강사진의 교과학습 등을 지원하는 ‘학습지원 활동과정’, 청소년 중심의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자기개발활동과정’,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의 생활을 지원하는 ‘생활지원과정’, 청소년캠프(방학), 보호자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은 청소년이 생활권 주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개최하여 즐길 수 있는 상시적 문화체험으로 17개 시·도 126개소(대표어울림마당 16개, 시·군·구 어울림마당 110개)의 지정된 공간에서 상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형성·운영되는 청소년 모듬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있다. 10명 이상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1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동아리가 지원대상이 되며 연중 12회 이상 활동하게 된다.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업은 청소년활동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중심 청소년 활동 역량 개발과 청소년들의 활동 기반 및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2015년에는 수련관 10개소, 문화의집 21개소, 특화시설 2개소, 기능보강 75개소를 확충 지원하였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운영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개편하여 오픈하였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는 공공기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체험 활동, 자원봉사, 국제교류, 신고·인증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사이트로써 청소년 복지·보호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다양한 수요계층이 청소년활동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수준 및 기능 향상, 쌍방향 정보 제공과 참여형 콘텐츠 구성, 시청각 정보 활용, 반응형 웹 구축 등 이용자 편리성과 정보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개편하였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는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교사)가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을 첫 화면에서 바로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를 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993년 이래로 38,021명이 배출되었고, 2015년에는 3,986명이 배출(2015. 8. 31. 기준)되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 주 5일제 수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평일 낮 시간대 학교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담당 역할을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청소년수련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당 각 1명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실시 중이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다문화 시대에 많은 청소년들이 국제교류활동 참가를 통해 해외 청소년과 소통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에는 총 930여 명이 선발되어 국가 간 청소년 교류(5~11월, 25개국), 한·중 청소년 교류(6월, 9월, 133명), 한·중 인문유대강화(9월),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6~10월, 10개국), 국제회의·행사 참가단(8월, 10월, 4개국, 14명)으로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5년 8월에는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청소년 초청 연수’를 개최, 아시아 22개국 185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인증제 운영사업은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인증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을 가진 위원을 참여하게 하여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공개 의무화 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이 2014년 7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안전한 수련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종합안전 점검에서 제외되는 운영기관 1년 미만 신규 시설에 대한 시설안전 점검을 청소년활동안전센터, 한국시설관리공단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올해는 청소년, 학부모가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출범하였다. “청소년활동안전센터”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 대응 및 법적 의무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대상과 인증 의무화, 종합 점검, 평가 등 청소년 활동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담당하고, 청소년과 시설 운영자 및 지도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 교육을 지원, 수련활동 현장 점검,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청소년 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특별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운영, 청소년 쉼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직영(별도의 법인 설립 포함) 또는 청소년 단체 등을 통한 위탁 운영의 방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한다. 주요업무로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와 법률·의료 지원 및 일시보호 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등이 있다. 2015년 서울 25개의 센터를 포함하여 전국 210개의 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다(2015. 10. 12. 기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정과 사회로 복귀·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절차는 위기청소년의 발굴을 위한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사이버 상담(www.cyber1388.kr) 및 문자·카카오톡 상담(#1388), 필수연계기관(경찰서, 교육청, 청소년 비행센터 등), 1388 청소년지원단’을 통한 “위기청소년 발굴”, “긴급구조·일시보호 및 심리 검사” 등을 통한 “개입(Intake)”, “전문상담사나 청소년 동반자를 통한 정서적 지지, 학비·생활비 특별 지원 등 경제적 지원, 의료, 법률 지원, 쉼터 또는 양육시설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순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동반자가 우울증, 가출, 폭력피해, 인터넷중독 등 보다 심화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이 동반자와 연결되면 CYS-Net의 전체적인 정보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돕는 서비스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청소년 본인, 보호자, 관계자 등이 시·군·구에 신청하거나 CYS-Net 운용기관에서 발굴하여 신청하면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 건강검진 및 치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등의 교육비용, 취업을 위한 훈련비,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 상황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등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운영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 5. 29.)에 맞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일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해 온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2015년 전국적으로 확장하여 총 200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에서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초기상담 및 욕구과약에서부터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2015.5.22.)을 발표하여, 정부-지역-민간 협업을 통해 학교 밖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대학입시설명회’를 2015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총 9회 개최하였다. 학업중단으로 정규 교육의 제도권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대학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목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개별적성에 적합한 학과 선택요령과 실질적인 진학 방법을 제시하는 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생활 보호시설로 의식주 제공 등 대체가정의 역할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가출 청소년 특화시설로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 활동 등을 수행한다. 전국에 116개 지역에 쉼터를 운영 중(2015. 10. 12. 기준)이다.

청소년 보호사업으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관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코디네이터)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관리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사·학부모, 시민단체(청소년단체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등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고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 시정 건의, 워크숍 개최, 캠페인 전개, 유해환경 교육 및 홍보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정화 활동, 아동 안전 및 보호, CYS-Net, 청소년쉼터 등과 연계한 청소년 보호 활동 등이 있다. 유해환경감시단 평가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감시단 지역 간 결속력 강화와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지역협의회)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코디네이터) 지원은 신·변종 업소 등장 및 확산, 학교폭력, 가출 청소년의 비행·탈선과 성매매 유입 등 청소년보호활동의 필요성 증대되고, 감시단 활동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 수행과 함께 유관기관협력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단체의 연계 협력 등이다.

청소년을 유해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2회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전은 동영상, 애니메이션, 웹툰 등 3개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입상작은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으로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사업과 청소년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이 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 강화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 단계별 상담·치료 연계 등 맞춤형 종합적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조기 발굴, 위험 수준별 맞춤형 상담·치유 연계 서비스 운영, 상담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 교재 개발, 스마트폰 조절사용을 위한 또래상담교사 및 또래상담자 양성 및 부모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이 주요 업무이다.

2015년에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사이버 문화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이 캠페인은

청소년이 인터넷, 스마트폰의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이버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업계의 자율적 노력으로 기획되었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한 기숙 치유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전국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보호자와 자녀의 갈등 해소 및 중독치유,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습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제 3 장

세계 청소년정책의 흐름

1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회원 각국의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 연구 협력 기구이다. OECD의 목적 및 정책방향은 규약 제1조에 따라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의 촉진 ▲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 ▲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기여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2014년 현재 3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4년 예산은 3억5천7백만 유로이다. 조직으로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를 비롯해 상주대표이사회, 정책대화 기구인 부문별 26개 전문위원회와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료이사회는 전원합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며, 산하 위원회들로부터의 건의에 기초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한다.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업무와 관련된 회원국의 정부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각료이사회에 승인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맡은 분야의 사업을 담당하며, 이사회에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사무국은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와 사업 추진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사무총장 1인과 4인의 사무차장, 그리고 분야별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위원회 중 청소년정책 및 교육정책과 관련된 조직으로는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 ELSAC)와 교육정책위원회(Education Policy Committee: EPC)가 있다.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는 전통적으로 고용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연구, 노동시장정책 및 외국인 고용 등 이주정책 분야, 직업훈련 및 여성고용 확대, 연금 및 사회보험제도, 생활보호제도, 장애인 보장제도 등 복지 및 사회통합 분야 등을 다루고 있다. 해마다 OECD Employment Outlook, Society at a Glance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OECD 건강통계 지표를 기초로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있고, 고용 및 노동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에는 2012년 5월 MCM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가 기존 OECD 여성고용정책 선언(1980년)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양성평등 및 교육, 창업 등에도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권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 남·여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합한 보육·교육 커리큘럼을 검토하며, 성차별 또는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관행을 폐지한다.
-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교육, 예술, 인문학 등 분야에서 남·여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부여한다.
- 청년, 부모, 교사, 사업주 등이 학업성취, 고용, 창업 등에 있어서 성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 과학, 기술, 수학 등을 전공한 여성이 이 분야에서 전문적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상담, 성인 교육, 인턴, 재정지원 등을 강화한다.

둘째, '고용' 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 부모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가정 친화적 정책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제고한다.
- 부모가 일에 대한 유사한 재정적 유인책을 갖도록 조세와 급여시스템을 설계하며 양질의 보육 및 가족의 장기 요양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일하는 부모에게 고용이 보장된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아빠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도록 양도할 수 없는 배타적 휴직제를 시행한다.
- 남·여 근로자에게 임시적 시간제 활용을 독려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며, 가사의 남녀 공동분담을 활성화한다.
- 편부모의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정책을 방지하며, 가사고용인 등 비공식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사회보장을 강화한다.
- 남·여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임금·채용·훈련 및 승진 등 모든 형태의 남녀차별을 폐지하는 입법 및 시행을 강화하며, 동등 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 임금 원칙을 실행한다.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입법 및 모든 적합한 수단을 시행한다.

셋째, '의사결정 지위' 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 민간기업의 이사회, 고위관리직의 경우 자발적 목표제, 공개 등의 수단을 통해 여성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양성 다양성을 촉진시킨다.
- 공공부문의 고위관리직의 양성형평성 실현을 위해 공개제도, 목표제,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채용 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며 여성의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정치, 정부, 의회, 지방정부, 사법부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을 증진시킨다.

넷째, '창업' 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 여성창업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며, 훈련 프로그램·상담·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법·재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등을 지원한다.

● 남·여 창업자에게 동등한 금융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며, 여성 창업자에 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섯째, '기타' 영역으로는,

● 취약여성계층, 이주여성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며, 관련정책·예산의 설계·평가 등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관점을 유지(체계적 양성효과 측정, 적합한 자료 생산 등)한다.

● 교육·고용·창업 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 등을 입안하거나 시행할 때, 공공·민간 기관, 노조, 사업주 단체,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협력한다.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양성평등 자료, 지표 등을 수집, 생산, 개발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OECD에 적시에 제공한다.

교육정책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당면하는 교육정책 과제들을 공동연구하며, 각 회원국의 교육 정책을 평가하고 혁신방안을 권고하여 교육체제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치되었다. 구체적인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 회원국별 교육정책 검토(national review)와 고등교육정책, 성인학습 정책 등 주제별 검토(thematic review)를 통하여 평생학습, 고등교육, 사회통합 등 지식기반경제의 교육정책 현안 과제 연구 및 정책권고 도출

● 교육연구혁신센터(CERI)를 통한 미래의 학교 교육, 대학의 미래, 학습의 질 등 교육에 관한 장기적인 과제 연구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교육체제지표사업(INES), 성인능력측정사업(PIAAC), 고등교육 성과평가(AHELO),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 등을 통해 정책 수립·분석의 기초가 되는 각종 국제통계지표 개발

교육정책위원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1-3-1〉 교육정책위원회의 주요사업

교육체제지표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 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의 성과, 자원, 기회, 환경 등 각국의 교육체제를 국제 비교하는 데이터 수집과 지표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ES Working Party, INES Advisory Group, Network for Data Development on labour market and social outcomes of education, Network for the Collection and the Adjudication of system-level 운영 - 매년 9월 「Education at a Glance」 발간
국제학생성취도 측정사업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여 회원국의 의무교육체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여려는 사업 PISA 2000, 2003, 2006, 2009, 2012 등 3년 주기로 측정
국제성인역량 측정사업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65세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 간 성인능력의 분포 및 수준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2008~2013년까지 진행 2011년 현장조사, 2013년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인역량의 직접 측정(literacy, numeracy, component skill, ICT환경 하의 문제 해결 능력), 직무에서의 역량활용 간접측정, 성인역량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상관분석 등 실시
고등교육성과 측정사업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 AHELO)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역량, 경제학, 공학 분야의 역량을 측정하는 사업 한국은 미국,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쿠웨이트 등과 함께 일반역량 분야에 참가
Skills Strategy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교육국 주관, 노동국과 지역개발국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OECD가 기술관련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수평적 사업 2013년 「Skills Outlook」 발간
GPS Project: Leveraging Knowledge for Better Education 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가 보유한 다양한 정보 및 데이터를 이용, 개별국가의 교육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가지 영역으로 구축되어 있는 바, 제1영역은 OECD가 분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체계화하여 활용하는 작업이며, 제2영역은 교육발전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인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이고, 제3영역은 교육개혁정책의 집행과정 및 성과 관리에 대한 연구임(한국은 제1영역에 파일럿 국가로 참여)
Skills Beyond School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교육(고등학교) 이후의 직업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1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사업
교육 측정평가 검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평가, 교원평가, 학교평가, 시스템평가 등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시스템에 대한 검토사업
교육연구혁신센터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CER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지향적이고 연구 중심적인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진행하는 센터로 사무국 내에 교육국이 생기기 이전부터 교육분야 이슈를 다루어 옴

<p>고등교육기관 관리 프로그램 (Programme on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IMH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차원의 고등교육 정책보다는 고등교육의 지역발전 기여 등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운영·발전방안 논의
<p>교육시설 프로그램 (Center for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 CE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이 실행되는 공간인 교육시설 정책의 효과성 평가, 학교 안전, 시설지표 개발 등 - 교육시설의 수준 측정에 대한 국제 파일럿 스터디 진행
<p>교수학습에 관한 국제조사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교원(교장 및 교사)의 신념, 태도, 수업방식, 칭찬과 피드백, 학교리더십 등 중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조사
<p>영유아 교육보육 네트워크 (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Network: ECE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육의 수준 제고를 위한 교사, 교육과정, 재정지원, 각 국별 시스템 등 제반 분야에 대한 검토사업 진행과 결과분석

출처 : OECD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http://oecd.mofa.go.kr>).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OECD 사무국으로는 교육국(Directorate of Education, EDU)이 있고, 여기에는 교육훈련정책과(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Division), 지표분석과(Indicators and Analysis Division), 교육관리 및 기반과(Education Management and Infrastructure Division), 교육연구혁신센터(Centre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등 3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OECD가 발간하는 교육정책 보고서 중 회원국 교육체제의 다각적인 측면을 수평 비교하는 연례 교육 보고서로 「Education at a Glance」가 있다. 이는 매년 9월 발간되는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의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료로 OECD가 교육부문과 관련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4년 9월에 발간된 「Education at a Glance」에서는 교육기관의 성과와 학습의 영향, 교육에 투자되는 재정과 인적자원, 교육에 대한 접근과 교육 참여와 과정, 학습환경과 학교조직 등을 주된 주제로 다룬 바 있다.

또한, 회원국들의 고용현황과 청년실업 등에 관한 전망을 담은 보고서인 「OECD Employment Outlook」을 매년 발표한다. 2012년 2월에는 유럽연합국가의 동향을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검토한 바 있다. 그 결과, 유럽연합과 미국 등의 경험을 참고하여, 직업훈련 통계 및 인력수급전망 내실화, 관련 통계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기술 불일치를 해소하고,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5년에 발간한 「OECD Employment Outlook」에서는 최근 노동시장의 동향과 OECD 회원국의 고용에 대한 단기 전망을

보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쟁점이 된 바 있는 최저임금에 초점을 맞춘 최근 노동시장의 동향과 임금불평등,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소득의 불안정과 노동시장의 위기, 그리고 장기적인 불평등에 따라 야기되어진 직장, 삶의 질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다.

한편, OECD는 2015년 1월부터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교육정책을 한눈에 비교 분석하여 볼 수 있는 「Education Policy Outlook」을 발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별 국가의 교육정책 프로파일을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현재 독일,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등의 국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곧 발간될 예정이다. 2013년 6월에 개최한 준비 워크숍에 따르면, 성공적인 교육개혁에는 ▲ 성과에 대한 관심 ▲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 ▲ 각 부문의 자율성과 정부지원 간의 조화 ▲ 기관의 역량 제고 노력 ▲ 평등과 교육의 질 제고와 조화 ▲ 정책 집행 및 리더십에 대한 초점 등의 공통점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나. 유엔(UN)

유엔(United Nations: UN)은 1985년을 세계청소년의 해로 결의하면서 각 회원국이 청소년 정책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UN은 청소년의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청소년을 ‘어른이 될 세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만이 아닌, 지금 현재 살아 있고 일을 하며 가정과 공동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현대대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할 것을 권고하였다.

UN의 청소년관련 정책 방향 및 이념은 1995년 세계청소년의 해 10주년을 기념하여 채택한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와 1998년 8월 세계 150개국 청소년리더, 청소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열린 제3회 UN 세계 청소년 포럼에서 채택된 「Braga Youth Action Plan」, 1998년 8월 158개국 청소년업무 담당 장관,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리스본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업무 담당 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와 2000년 9월 밀레니엄 서밋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14년 10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청소년정책을 위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for Youth Policies)에서 채택한 「청소년정책에 대한 바쿠 선언(Baku Commitment to Youth Policies)」, 그리고 2015년 9월 25일 세계 123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UN 본부에서 개최된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등이 있다.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에서는 청소년 정책 분야를 교육, 고용, 기아 및 빈곤, 건강, 환경, 마약, 청소년비행, 여가활동, 여성 및 청소년,

사회생활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청소년들의 참여 등 10개 분야로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 「Braga Youth Action Plan」과 「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에서 제시된 분야들도 포함된다. 「Braga Youth Action Plan」에서는 ▲ 청소년정책(청소년정책 분야 간 통합, 국가 내 청소년 업무관련 NGO 간 협력, 빈곤추방 및 청소년 개발), ▲ 청소년 참여(모든 청소년들의 참여, 청소년 조직과 UN 기구, 21세기를 대비한 교육, 사회개발을 위한 청소년 고용, 건강과 청소년 개발), ▲ 청소년인권(인권증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청소년 권리 현장과 청소년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 등을 제시하였다. 「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에서는 국가 청소년정책, 청소년 참여, 청소년 개발, 청소년과 평화, 청소년 교육, 청소년 고용, 청소년 건강, 마약과 약물남용 등을 포함하였다.

새천년개발목표는 세계 빈곤퇴치 및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2000년 9월에 참여한 191개 회원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칭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 산모건강의 증진, ▲ 환경 지속성 보장, ▲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이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청소년정책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권리증진에 정책이 기반해야 하며,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정책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증거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함께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2015년 9월 25일에 채택되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지난 2000년에 채택되어 이행해 온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시한이 2015년으로 종료되면서, 이를 대신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새로운 발전목표이다. SDGs는 ▲ 빈곤 퇴치, ▲ 기아 해소와 식량 안보, ▲ 보건 증진, ▲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 성 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 물과 위생, ▲ 에너지, ▲ 경제성장과 일자리, ▲ 인프라와 산업화, ▲ 불평등 해소, ▲ 도시, ▲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 기후변화와 대응, ▲ 해양자원, ▲ 육상 생태계, ▲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등 17개의 목표(goals)를 설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며,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한다.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증진시킨다.
5. 성 평등을 달성하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6. 모든 사람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7.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확립한다.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완전한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진흥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양식을 확립한다.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며,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확대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17.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UN의 사업 중, 청소년사업으로는 청소년 세계행동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세계청소년보고서 2013(World Youth Report 2013), UN CSD(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및 Cyber Schoolbus 홈페이지 운영, 그리고 다양한 UN 산하 전문 기구 및 보조기구, UN 사무국 산하기구 등에서 진행하는 청소년관련 사업 등이 있다. 청소년 세계행동프로그램에서는 15개의 청소년 우선순위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는 활동을 위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세계행동프로그램 채택 이후 대두된 관심사들은 세계화, 정보통신 기술(ICT), HIV/AIDS, 청소년과 분쟁(갈등) 예방, 세대 간 관계가 있다. 「세계청소년보고서 2013」에서는 이주 청소년과 개발(Youth Migration and Development)을 다루었다. 즉, 국제 이주 청소년의 삶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분석하였다. UNCS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는 과정에 전 세계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몰두하는지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형 플랫폼(Interactive Platform)이다. 2012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Conference of Youth for Rio+20이 개최되었다. Cyber Schoolbus 홈페이지 운영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교수 및 학습 프로젝트 홈페이지로 평화교육, 빈곤, 인권, 기아, 노동에서의 권리, 인종차별 등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 UN 관련 자료, 퀴즈와 게임, 커뮤니티, 행사 안내,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은 산하에 다양한 전문기구 및 보조기구를 두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각 기구별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UN 아동기금(UNICEF), UN 문명간연대(UNAOC), UN 식량농업기구(FAO), UN 사무국 공보실(DPI), UN 사무국 경제사회국(UN DESA), UN 개발 계획(UNDP), UN 봉사단(UNV), UN 인구기금(UNFPA), UN교육 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노동기구(ILO), UN 난민고등판무관실 UN 난민사무국(UNHCRUN Refugee Agency) 등이 있다. 2013년 현재 UN 각 기구별 청소년관련 사업들은 UN 사무총장 청소년 특사 사무국(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s Envoy on Youth)에서 협력 지원을 받고 있다.

다.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World Bank)은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근거해 1946년 6월에 창설된 UN 산하 금융기관으로 전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 및 개발자금을 지원해 줄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이 그 출발이었다. 일반적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을 합쳐 세계은행그룹이라고 하는데 이중 IBRD와 IDA를 합쳐 흔히 세계은행이라 부른다.

오늘날 세계은행은 개발도상 가맹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과 개발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술 지원, 개도국으로의 재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조정역할, 경제개발 담당자에 대한 연수 실시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세계은행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강화 및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건강, 에이즈, 사회적 보호라는 4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성장세대에 대한 조기 개입이 없거나 미흡하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실업과 낮은 학력 및 기술, 위험 행동과 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아동과 청소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국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은행이 추진하는 청소년사업에는 경제개발과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 보건, 영양 등 아동과 청소년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투자기회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영아 및 유아기 : 영아 및 아동사망을 줄이기 위한 아동보호에 집중적인 투자 필요
- 학령기 아동 : 기초학습능력향상 및 학교기반시설 개선에의 투자 집중

- 초기 청소년기 : 직업체험기회 및 통합적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한 투자 필요
- 후기 청소년기 : 중도탈락청소년들을 위한 치료교육에 투자, 청소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청소년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와 이를 위한 국가청소년정책 전개의 필요성 강조

세계은행에서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 단체를 위한 기금, 대화형 플랫폼(Interactive Platform) 구축, 청소년 대 청소년 커뮤니티(Youth-To-youth Community) 형성, 국제 에세이 대회(International Essay Competition), 청소년 자문 그룹>Youth Advisory Groups), 세계화와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 등이 있다. 특히 세계은행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사업 블로그인 「Youthink!」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개발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청소년과 밀접한 사업이슈들로는 장애, 교육, 갈등(해결), 고용, 성, 보건(HIV/AIDS 포함) 등이 있다.

이외에 최근 세계은행이 펼친 주요 청소년관련 프로젝트에는 ▲ ICT를 활용한 혁신적인 청소년 프로젝트, ▲ 동남부 유럽 청소년 사회개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 아프리카 여성 및 여성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역량개발 프로젝트, ▲ 루마니아 중등교육 프로젝트, ▲ 학교에서의 모바일 폰 사용에 관한 각국 정책 동향 보고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ICT를 활용한 혁신적인 청소년 프로젝트는 세계은행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청소년의 정보통신기술(ICT) 능력 함양을 위해 유스 솔루션>Youth Solution)이란 프로그램을 남아시아 4개국(방글라데시,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에서 실시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남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의 정보통신기술 능력을 함양시켜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 청소년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동남부 유럽 청소년 사회개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몰도바 등 동남부 유럽 청소년의 성인기 전환을 돕기 위해 세계은행과 이탈리아 개발협력청(Italian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이 함께 고안한 것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실행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로 지역 청소년의 학교-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며, 소수민족·장애인·기타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합 등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니셔티브의 초기 운영을 담당했던 세계은행의 글로리아 라 카바(Gloria La Cava)는 “청소년은 폭력의 희생자이자 가해자이기도 하며, 미래 지역발전을 위한 위대한 자산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1990년대 전쟁을 경험하고 현재 높은 실업률에 직면한 이 지역 청소년들이 일자리와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이었다고 설명하였다.

2014년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여성 및 여성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역량개발 프로젝트는 사막화가

진행되는 아프리카 사헬(Sahel) 지역 국가들의 여성 역량 강화 및 인구할당 프로젝트(Sahel Women's Empowerment and Demographic Dividend Project)를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 및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생식 건강에 초점) 및 역량개발을 위해 아동 및 모성 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상 국가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코트디부아르, 말리, 니제르, 차드, 모리타니이며,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ern African States)도 세계은행의 기금을 지원받는다.

루마니아 중등교육 프로젝트(Romania Secondary Education Project, ROSE)는 2015년부터 시작된 루마니아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퇴율을 감소시키고 대학 진학률을 상승시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ROSE는 위기 학교 및 위기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춰 루마니아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세계은행이 지원하고 루마니아 교육부와 과학연구위원회(Scientific Research)가 실행하는 프로젝트이다.

학교에서의 모바일 폰 사용에 관한 각국 정책 동향 보고 역시 2015년부터 시작한 세계은행의 청소년관련 프로젝트이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모바일폰 정책을 크게 ▲ 교내 모바일폰 사용 규제 도입, ▲ 교내 모바일폰 사용 규제 해제, ▲ 어린이의 모바일폰 사용 자체에 대한 규제 등으로 나누어 관련 국가들의 동향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모바일폰 사용 이슈와 관련해 교육계의 찬반론을 요약해 제시하였다.

라. 유네스코(UNESCO)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곧 UN 교육과학문화기구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UN 전문기구이다. 2011년 12월 기준 195개 정회원국과 8개 준회원국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14일 가입하였다.

유네스코가 청소년 문제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2년 제1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다. 당시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식민지였던 여러 나라들이 새로 독립국으로 탄생하였고, 과학기술과 교통, 미디어의 발달은 전례 없는 정보와 개인의 교류를 가져왔다. 1962년 제12차 유네스코총회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과거의 전통과 단절되면서 새로운 사회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과 청소년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제청소년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964년 프랑스 그레노블에서 열린 국제청소년회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최초의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각국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사회발전의 필수요소임을 확인하고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동년 10월에 열린 유네스코총회는 이 권고문을 받아들여 청소년의 학교 외 교육(Out of School Education)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국들이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회원국 실정에 맞는 청소년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청소년은 여성, 아프리카 등과 함께 유네스코 주요 활동분야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유네스코는 청소년이 문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명시하고자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을 위해(Acting with and for Youth)’ 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청소년사업을 전개 하였다.

한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헌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역시 유네스코의 정책 방향에 부응해 1960년대부터 한국의 청소년 및 학생 문제에 천착해 왔다. 1960년대 청소년문제연구협의회 및 유네스코 학생활동 지도교수 협의회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1967년 유네스코학생협회 출범, 1977년 유네스코 청년원(경기도 이천)을 설립하면서 청소년사업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주요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청소년관련 주요 사업은 교육,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청년 등의 분야에서 각각 아동,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삼는 사업의 주무팀은 차세대 팀으로 이 팀의 주요 사업은 ▲ 청년과 사회참여, ▲ 청년과 국제교류,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등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1-3-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차세대팀 주요사업

<p>유네스코 청년활동 협력 및 참여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학생회 협력 및 활동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전국 대학 내 유네스코 학생회(KUSA) 회원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학생회(KUSA) 자체 활동지원 - 유네스코 학생회(KUSA) 회원 대상 워크숍·간담회 개최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개최 청년행사 참가 우선배려 및 자료 배포 ○ 국내외 청년단체 국제활동협력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청년단체 정보교류,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청년관련 주요 국제회의 및 행사 참가자 파견
<p>유네스코 대학생 동아리활동 공모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동아리활동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주제 : 교육, 평화, 인권, 환경, 문화 다양성, 문화유산보호 • 공모대상 : 전국 대학(원) 학생처 및 국제대학원 • 선발 : 20팀 선발

<p>유네스코 대학생 동아리활동 공모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동아리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워크숍(1박 2일) 실시 - 선발 동아리 활동비 지원 ○ 우수활동 포상 및 활동보고서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 형태의 활동보고서 발간
<p>유네스코 청년국제자원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계 국제워크캠프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워크숍 - 활동보고회 - 유네스코 관련 주제인식 확산 ○ 하계 국제워크캠프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워크숍 - 파견 이후 활동보고회 - 에세이집 발간 ○ 국제워크캠프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자원활동단체협의회(ALLIANCE) 실무회의 - 아시아자원활동개발네트워크(NVDA) 회의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도 1,500여 개 국제워크캠프 정보공유 및 참가자 자리 확보 - 국내 워크캠프 개최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국제워크캠프 현장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기관 : 국제워크캠프 관련 NGO 및 관련대학 • 내용 : 해외 워크캠프 파견협의 및 관련단체 프로그램 모니터링
<p>유네스코 청년워크캠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주 국제워크캠프 ○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부산 국제워크캠프 ○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무안 국제워크캠프 ○ 유네스코 역사와 화해 DMZ 국제워크캠프 ○ 이상의 국제워크 캠프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의 장 마련 - 지역사회 이슈별 프로젝트 수행, 문화교류 및 노작활동 진행 - 한국 참가팀 사전훈련 워크숍 및 사후활동 보고회
<p>유네스코 청년 역사대화 국제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주제 관련 전문가 강연, 참가자 조별 활동, 사전 오리엔테이션 ○ 제2회 유네스코 청년 역사대화 국제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동아시아 역사화해와 청년의 참여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강연, 참가자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현장학습 등 - 아시아지역 청소년 역사화해 활동 지원

유네스코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릿지 지역활동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아프리카 6개국(남아공, 르완다, 레소토,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 협력기관 : 6개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및 10개 지역 NGO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선발·교육하여 제1기 활동지역의 사업 인수인계 - EFA 지원사업의 직접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개발 사업 지속 ○ 코디네이터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연중 • 장소 : 아프리카 5개국(남아공, 레소토,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 협력기관 : 유네스코 국가위원회(5개국) 및 5개 국내협력 NGO(10곳)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 2년 이상 경험자를 선발·교육하여 사업현장(해당 국가단위)에서 상주하며 국가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파견활동가의 업무를 지원 ○ EFA 현장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연중 • 장소 : 제2기 파견지역 • 내용 : 각국별 현지 NGO와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해, 생활기술교육 등을 가르치는 지역학습센터(Community Learning Centre) 구축과 운영 ○ 아프리카의 날 기념행사('Bridging Hope in African Villages' 브릿지 사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대국민 아프리카 이미지 제고 및 '유네스코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사업' 홍보
-----------------------------	---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esco.or.kr>).

이외에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세계 청소년 정보망, 모의 유네스코 총회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청소년 정보망은 청소년 분야의 정보화와 청소년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하여 1991년부터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계 청소년 정보네트워크 형성' 사업의 일환이다. 여기에서는 세계를 8개 지역으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청소년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 지역을 하나로 묶는 세계 청소년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95년부터 아태지역 센터로 지정되어 아태지역의 청소년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는 지속가능발전 논의와 실천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참여 강화, 국제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 및 역량 결집, 전 지구적 문제와 개인적 삶의 연계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증진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

2 유럽지역의 청소년정책

가. 유럽연합(EU)

유럽 내 국가 연합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의 정치·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유럽연합의 정부 형태는 국가연합이며, 유럽의회(EP), 각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회원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EU), 각종 정책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 4개 기관이 유럽 연합의 핵심기구를 형성한다. 이 외에도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유럽 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 유럽옴부즈맨, 유럽투자은행 등의 기관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각료이사회는 외교, 일반, 경제·재무, 내무·사법, 고용·사회 정책·보건·소비, 경쟁, 교통·에너지, 농업·수산, 환경, 교육·청소년·문화이사회 등 10개의 각료이사회로 구성된다.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회원국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한다. 따라서 유럽 연합의 청소년관련 정책은 청소년을 비롯해 교육과 문화 등 유관 분야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유럽연합 회원 각국의 교육 및 문화, 청소년관련 정책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소속 23개 전문국 중 하나인 교육 시청각 문화집행국(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EACEA)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서 교육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을 선정하고 지원하면, EACEA는 ▲ 교육 ▲ 문화 ▲ 청소년 ▲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등의 4가지 영역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3년 EACEA는 4가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7개 지역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였다.

- 평생교육(Life Long Education)
- 에라스무스 문두스(Erasmus Mundus)
- 템푸스(Tempus)
- 문화
- 청소년 행동(Youth in Action)
- 시민과 미디어를 위한 유럽(Europe for Citizens and Media)
-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협력 협약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참여, 교육, 고용·직업훈련·사회통합, 복지·개인의 자율성·문화, 유럽의 가치관·이동의 자유·국제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유럽 연합 각 회원국마다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 언어, 빈곤층 등의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도 다양한 유럽 내 문화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청소년정책으로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포럼이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2007~2013)과 유럽연합 청소년전략(Youth Strategy: 2010~2018)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행동 프로그램은 유럽 연합에서 유럽 내 청소년을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유럽 시민권, 젊은 유럽인들 간의 연대감 및 관용의식을 장려하고 유럽연합의 미래 형성에 대한 청소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삼는다. 또한,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젊은 층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간의 이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제출되는 수천 개의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이 중 선정된 프로그램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은 ▲유럽의 청소년(Youth for Europe) ▲유럽봉사활동서비스(European Voluntary System: EVS) ▲세계의 청소년(Youth in the World) ▲청소년지원시스템(Youth Support System) ▲청소년 분야에서 유럽협력을 위한 지원(Support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Youth) 등 5개의 행동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연합 청소년전략(2010~2018)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많은 기회 및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참여하도록 장려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유럽 내 청년실업률이 점증하고 있어 청년세대의 고용 및 취업·창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시민성 함양은 유럽공동체의 유지와 관련된 전통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유럽 연합 청소년전략(2010~2018)에 도달하기 위한 8개 분야의 계획 및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3〉 유럽연합 Youth Strategy(2010~2018)의 8개 분야

교육 및 훈련	양질의 교육 및 훈련에 청소년의 동등한 접근 강화, 청소년활동 및 기타 비공식적인 학습의 기회 개발, 정규교육 및 비공식적인 학습 사이에 보다 나은 연계 제공, 교육과 훈련 및 노동 시장 사이의 이해 개선, 초기 학교 중도탈락의 감소
취업과 창업	고용전략에 청소년들의 관심사 통합, 노동시장에 대한 필요로 기술준비에 투자, 직업상담 및 상담서비스 개발, 일할 청소년들에게 가능성을 홍보하고 해외훈련을 제공, 양질의 traineeship 홍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조화를 위해 파트너들 간의 책임공유 홍보, 청년들의 창업 지원
건강과 웰빙	청소년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위원회 결의안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피트니스 및 스포츠 장려, 청소년 근로자와 청소년지도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교육기회 증진. 건강과 청소년정책 결정자들 간의 협력 및 보건정책에의 청소년참여 장려,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해 지역 수준의 모든 이해당사자 동원,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청소년 정보네트워크 동원, 청소년단체와 학교에서 또래 간 건강교육 장려
참 여	위원회의 구조화된 대화에 더하여, 유럽연합 국가 및 위원회는 청소년들과 청소년단체에 의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참여 권장을 추구, 대화방법,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치 및 금융 지원, 정보 및 통신 기술, 어린 연령부터 참여하는 학교의 '참여학습' 프로그램 제공, 공공 기관과 청소년들 간의 토론 장려 등
자원봉사활동	유럽연합 전역에서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의 이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주최자 간 협력을 강화(2008년 개칭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이동에 관한 이사회 권고'),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사회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다른 유럽연합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더 많은 참여기회를 확보하여 유럽 자원봉사 서비스를 보완하려고 노력
사회적 수용	유럽연합의 유럽 2020 전략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유럽공약 중 경제성장 및 개발을 위한 전략이 사회적 응집력과 사회적 수용에 대한 강력한 차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인식
청소년과 세계	기후변화, UN MDGs, 인권 등과 같은 글로벌 문제들에 대한 정책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와 기여를 증진시키는데 목적
창의력과 문화	유럽연합 회원국과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창조적인 능력개발과 문화 경험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문화, 뉴미디어 및 문화 간 역량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 추진. 청소년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혁신을 위한 능력 지원

2014년 이후의 유럽연합 청소년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방, 교육, 고용의 영역 등에서) 지역사회에서 니트(NEET)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활동과 사회통합 계획을 세우고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협력기반 접근방식을 구축하여 청년실업을 권고사항에 맞게 지원 대책을 세우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럽이 청소년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될 사항은 청소년역량 강화 분야이다.
-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유럽연합 회원국과 관련 위원회는 청소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비정규직·비정규 학습과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방안 강구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정책 내에서 상호 분야별 협력강화와 유럽연합 내·외의 분야에서 권리와 자율성, 참여, 적극적인 시민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 청소년 기업이 정신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장려하며, 그에 관련된 협력을 추구한다.
- 에라스무스 +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기술과 역량, 자신의 자율성을 기르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 회원국은 청소년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 업무 규정, 유급직원 및 자원 봉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지원방법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방법과 평가 및 평가도구를 개발한다.

한편, 유럽연합은 유럽 청소년 협력의 향후 진로(The Way forward in EU Youth Cooperation; 2016~2018)를 통해 포괄적인 공동체에서의 동등한 교육과 일자리, 참여기회(Equal Education, Job and Participatory Opportunities in Inclusive Communities)를 주창한 바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이주배경이 있는 청년들과 니트족과 같은 위험한 청년들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고 이들의 사회활동 및 시민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모든 청년들 및 특히 그중에서도 소외의 위험을 가진 청년들의 참여를 강화한다.
- 모든 청년들을 위한 노동시장의 통합 및 장기 실업자와 직업교육을 통한 장기 실업자들의 변화에 초점을 함께 맞추어야 한다.
- 청소년단체들과 조직들은 청년들의 참여, 봉사,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행동해야 한다.

유럽 청소년 협력의 향후 진로를 통해 유럽연합 청소년 정책은 따로 분리되어져 진행될 수 없으며, 청소년 정책은 필수적으로 고용, 교육, 훈련, 건강, 문화, 디지털미디어,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권, 스포츠와 같은 정책들과 협력 되고 상호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난민, 니트족, 장기 실업자 등 어려움에 처한 많은 청년들이 유럽사회의 완벽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전망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향후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유럽사회가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영국

엄밀히 말해 영국은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는 존재하지 않지만, 영국 청소년의 교육 및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를 꼽을 수 있다. 지방행정조직은 각 지방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조직으로는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Agency)이다.

교육부는 2010년 5월 12일 교육과 아동·청소년 서비스를 업무로 삼는 정부부처로 조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 영국에서 교육 및 아동·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명은 교육기술부였는데, 2007년 6월 교육기술부가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로 이름을 변경하고 기존의 교육기술부에서 다루던 고등(대학)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새로운 부서인 혁신·대학·기술부로 이양함으로써 아동·학교·가족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다.

과거 아동·학교·가족부는 교육기술부보다 더욱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을 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부처의 개편과 더불어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아동·학교·가족부가 새로 개편되기 전만 해도 영국에서는 청소년정책을 교육기술부의 평생교육 관련 부서에서 담당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전담부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동·학교·가족부의 출범으로 인하여 청소년에 관한 모든 정책이 '청소년국'으로 이양되어 청소년정책의 전문성과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당시 아동·학교·가족부는 10대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책인 Aiming High for Young People을 전개하였다. 이 정책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임파워먼트, 청소년활동에의 접근성 강화, 청소년 역량 강화가 목적이었다. 이 시기에는 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특별 기금(Youth Opportunity Fund, Youth Capital Fund, Youth Sector Development Fund)을 마련하여 청소년사업들을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후 아동·학교·가족부에서 교육부로 관련 업무가 다시 이관되었다. 아동·학교·가족부에서 청소년국이 신설되어 청소년정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것에 비해, 교육부에서는 과거 아동가족국과 학교국은 그대로 존치하였지만, 청소년국을 폐지하여 상대적으로 청소년정책이 위축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성인교육, 기술, 평생학습국이 신설되어 평생교육이나 기술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다.

현재 영국의 교육부가 지향하는 비전은 “아동과 청소년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정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평등한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다. 이러한 비전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학교에 더 많은 자율권 주기, 둘째, 부모에게 선택권 주기, 셋째, 극빈 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넷째, 전체적인 교육 체계를 향상시키기 등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영국의 청소년활동을 조직·지원하고 정부와 민간단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다. 비록 민간단체이지만 정부 정책과 사업을 전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단체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영국의 청소년 대상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영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다양한 청소년관련 민간단체와 지방정부가 함께 주도해 왔지만, 1970년대 초기 지방정부의 행정 개혁과 경제침체로 인해 지방 수준보다는 중앙정부가 더 큰 책임을 맡아왔음을 꼽을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과거 14세에서 18세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하지만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대상자인 청소년 연령이 최근에는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대표적인 청소년정책 중 하나인 커넥션즈(Connexions)에서는 13~19세의 청소년(장애나 학습문제가 있는 경우는 24세까지)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2012년 2월 출판된 「Positive for Youth: A new approach to cross-government policy for young people aged 13 to 19」를 보면 청소년정책 대상연령이 커넥션즈와 마찬가지로 13~19세의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정책에서 16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영국의 의무교육이 16세에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6세 이전에는 교육이나 기술, 보호의 측면에서 청소년정책이 이루어 지는 반면, 16세 이후에는 이보다는 자립, 고용, 직업,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청소년정책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 교육부가 추구하는 비전과 더불어 영국 정부는 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기회 평등을 위한 학비 보조금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청소년들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적인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9월 16~19세 취약청소년 대상 학비 보조금 지원정책인 '16~19세 버서리 펀드(16 to 19 Bursary Fund)'를 도입한 바 있다. 최근 영국 교육부는 이 학비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즉, 2013년 5월 17일 영국 교육부는 ▲ 학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생규모와 특성, ▲ 정책 영향력 평가, ▲ 각 교육기관의 학비 보조금 지원결정방식 검토 등을 목적으로 학비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정부지원금은 취약계층 청소년 학비 보조금(Defined Vulnerable Group Bursaries: DVG), 재량적 학비 보조금(Discretionary Bursary)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전달되었다.

평가결과, 2011~2012학년도에 DVG 학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청소년의 수는 총 2만 7,400명, 재량적 학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청소년의 수는 25만 1,800명으로 추산되었다. DVG 및 재량적 학비 보조금의 신청자와 수급자들은 서로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제시하고 있어 학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더 큰 특정그룹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은 학생들이

재량적 학비 보조금의 수혜자로 적합한지 판정하기 위해 소득과 관련된 기준(무료학교 급식대상자 여부, 생계지원 여부, 가계소득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학생 개인의 재정 상황, 교통비, 필요장비 구입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량적 학비 보조금은 대부분이 교통비 또는 교육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교육기관 중 1/4 이상이 학비 보조금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했으며, 전체 지원금 중 현물의 비중은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 중 2/3는 학비 보조금 정책이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지원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영국의 대표적인 청소년관련 입법으로는 교육법(Education Act 2011), 교육감사법(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6), 아동법(Children Act 2004), 아동·학교·가족법(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Act 2010),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 교육기술법(Education and Skill Act 2008), 도제·기술·아동·학습법(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 등이 있다. 이 중 2011년 1월 발의되어 2011년 11월 15일 개정된 교육법(2011)은 영국 정부가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모든 아동이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법은 2개월 후인 2012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교육법이 2011년에 개정된 것은 「교수의 중요성: 학교백서(The Importance of Teaching: Schools White Paper)」로 인한 것이다. 2011년 개정안의 핵심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훈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와 대학에 대한 자유를 보다 확충하며, 교육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하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법(2011)은 총 10장 8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장의 훈육과 7장의 16세 이후 교육과 훈련에 관한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1988년 교육개혁 이전, 1988년 교육개혁과 국가교육과정, 1988년 교육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1988년 교육개혁 이전의 청소년정책은 다소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1988년 이전까지의 청소년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은 양성 평등교육, 여자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직업에 관한 교육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진보주의 교육관은 영국 청소년교육의 흐름을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것으로 전환하였다.

1988년 영국의 교육개혁과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시기에는 지방정부보다 중앙 정부에 교육과 관련된 힘을 강화시켰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모든 청소년정책은 새롭게 도입된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력 강화와 학업 성취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교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이 학교운영정책에 관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한편, 1988년 교육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지는 청소년 복지에 관한 정책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종합적 복지서비스 성격을 가진 커넥션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커넥션즈'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대신하는 정책으로 2006년 당시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 Skills)가 제시한 아동과 학습자를 위한 5개년 전략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새롭게 개편된 아동·학교·가족국(DfCSF)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이다.

최근 영국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Youth in Action은 국가 수준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유럽연합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었다. 당초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유럽사회의 통합과 유럽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Youth in Action의 세부적인 사업의 목표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고용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책임감 있는 유럽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해외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

다음으로는 후기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스 컨트랙트(Job Centre Plus Help for Recruiters: Youth Contract)가 있다. 영국은 높은 청년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18세부터 24세의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4월에 닉 클레그(Nick Clegg) 부총리의 주도로 유스 컨트랙트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사업주 대상) 견습직 채용 지원금 제공 ▲(청소년 대상) 잡센터 플러스를 통한 일자리 경험 제공 ▲(교육·고용·훈련 기관 대상) 니트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 지원 ▲(사업주 대상) 유스 컨트랙트 임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였다. 이 중 유스 컨트랙트 임금 인센티브는 18~24세 구직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1인당 최대 2,275파운드의 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을 말하는데, 이 제도는 2012년 4월에 시작되어 2013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4,690명의 청년 고용효과(당초 프로그램의 전체 목표는 16만 명의 고용창출)를 달성하였으나 인센티브 제도의 제정 이슈, 효과성과 투명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총 3년간 시행될 예정이었던 계획과는 달리 2014년 8월 이후 중단되었다.

한편 유럽 각국에서 테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영국 청소년들 중 일부가 영국을 떠나 이라크, 시리아 등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국제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청소년의 급진화 및 테러 가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영국 정부는 2015년 청소년의 테러단체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예방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청소년들의 테러단체 가입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예컨대 학교 및 어린이 보육서비스 기관들은 이와 관련한 '예방적이고 의무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위험 평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직원 훈련 ▲IT 정책 ▲급진주의에 대한 아동의 회복탄력성 개발 등에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서비스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영국의 교육부는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기타 관계자들을 위하여 청소년 급진화 이슈에 관해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2015년 7월 30일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인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령 확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인 웹사이트 접속차단 조치(Curbing Access to Pornographic Web-Sites for Under 18s)이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적용 중인 성인물 차단 규정을 온라인에도 적용하여 학부모들에게 18세 미만 청소년 자녀가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영국 정부는 관련 산업계에 자발적으로 청소년의 성인 콘텐츠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 후 해당 조치의 효과가 없을 경우 청소년의 성인 웹사이트 접근을 막는 법률을 도입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2015년 가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다. 독일

독일 연방정부 청소년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청소년지원(Jugendhilfe)’이다. 이 개념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참여를 권고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지원의 내용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내외에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화,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여러 대책들·노력들과 그에 따르는 협력기관 및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지원이라는 큰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젝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 작동하는 청소년정책들은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에 근거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명시된 여러 정부조직과 제도들은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젝트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주체들로 작동한다.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지원구조와 관련해 우선 연방공화국인 독일의 국가 최고 행정기구로서의 연방정부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하여 각 주(州) 정부를 총괄하는 청소년지원의 장려와 고무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독일연방 정부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지원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자문을 받는다. 셋째, 각 주 정부는 임기 동안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한다.

독일의 청소년지원조직 기본 골격은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상세한 사항들은 각 주의 관련 법규에서 보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적 근거들은 주 자치 단체법령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적 근거에서는 청소년정책 업무에서 실질적인 실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청(Jugendamt)과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Jugendhilfeausschuss)의 과제와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은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 전국에 청소년

청이 구성되도록 정하여 자치단체 행정관청의 다른 영역들과 구별되게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보고서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4조에 근거한 것으로, 매년 새 정부가 임기 중에 청소년들의 현황과 청소년지원의 노력과 시행들에 관하여 연방의회와 상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따로 청소년보고위원회(Jugendberichtskommission)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고 실질적인 부서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하위부서인 청소년부이며, 지역차원에서는 청소년청(Jugendamt)이다. 연방정부에서는 청소년부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며, 지역차원에서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실무기관인 청소년청이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독일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큰 특징은 아동·청소년은 물론 가족 및 노인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독일은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을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과 연관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교육부 혹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독일만이 갖는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연방 정부의 주요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는 크게 세계아동권리, 아동·청소년보호, 통합, 관용과 민주주의, 참여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 정책영역은 다시 청소년복지, 범죄·극우주의·외국인 적대 행위 예방, 아동·청소년보호와 폭력보호, 사회통합, ‘연방아동·청소년계획’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활동, 사교(邪交) 집단과 사이코집단 관리, 아동·청소년지원, 아동보육관리, 중앙과 지방 연계 전국 청소년정책 공동사업,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청소년지원, 유럽 청소년정책들과 같은 관련 청소년정책들로 나누어 있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세부적인 사업을 간략히 요약하면,

- 보육센터의 질을 높이고 확장을 지원
- 2013년 8월 1일 이후 1세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법적 권리 수립
-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아동보호 및 약자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 성적 폭력과 착취, 미디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아동 포르노 예방)
- 아동과 청소년의 극단적 경향에 대한 예방과 민주주의 프로젝트 추진
-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
- UN 아동권리협약 및 구현에 대한 국가적 책무
-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권리 구현
- 교육, 건강, 노동시장, 청소년 복지 등 모든 정책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는 연방 정부청소년위원회 설립

- 지원 및 가치의 방향,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체제 구축
- 청소년과 청년 이민자에 대한 노동 조건 불이익의 개선
- 유럽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국제교류협력 및 개발
- 독립적인 청소년 전문가를 통한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보고서의 제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독일은 1964년 이래 정부와 민간 협력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독일 청소년지원 주간(Deutscher Jugendhilfetag)과 최근까지 범사회적 프로젝트로 기획된 국가 행동계획(Nationaler Aktionsplan: NAP, 2005~2010) 등이 수립되어 실행된 바 있다.

독일에서 청소년지원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육성, 복지, 보호 등을 모두 묶는 총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프로젝트는 작게는 사회적·교육적 취약상황에 놓여 있거나 혹은 사회적 배제 경험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청소년복지관련 프로젝트로 볼 수 있고 크게는 모든 청소년의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조력하고 지원하는 포괄적인 청소년지원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1조에서는 청소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전인적·정치적·사회적·보건적·문화적·자연 환경적·기술적 교육의 내용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교육
- 스포츠, 오락, 가정과 관련된 청소년 프로젝트
- 국제청소년교류
- 아동·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 청소년상담

독일의 청소년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아동·청소년지원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 수행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주별 자치권이 인정되므로, 각 주별로 내용들이 상이하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청소년 사업으로는 베를린의 사회공간 집중사업과 바이에른 주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 드레스덴의 청소년사회통합사업 등이 있다. 베를린의 사회공간 집중 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집단들이 마을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주거지 중심으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청의 전문 인력이 청소년들을 상담하거나 돌보는 일과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적 워크숍과 강연, 코스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청소년청은 클릭(Klick)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관련 기관에게 워크숍이나 부모강연, 교사 보수교육, 체험 교육적 사례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중독

이나 폭력, 인종차별, 유해매체 등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예방 프로젝트이다. 드레스덴은 베를린, 라이프찌히 등과 함께 과거 동독의 핵심 지역임을 감안할 때 동서독 성장세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민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통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다.

라. 프랑스

프랑스 청소년정책은 중앙부처차원에서는 보건·청소년·체육부(Ministère de la Santé,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내 청소년대중교육실(la Direction de la Jeunesse et de l'Education Populaire: DJEP)이고, 지방단위에서는 각 주 정부와 함께 국립청소년대중교육연구소(L'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Education Populaire: INJEP)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교육기관이자 동시에 연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허브센터 역할도 담당한다.

프랑스의 청소년관련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청소년지원, 청소년사업 등에 관하여 특별법으로 제정해 놓지 않고, 일반법률에 청소년관련 규정을 포함시키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동보호법, 교육법, 사회활동 및 가정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에 청소년을 위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은 크게 청소년정보정책,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정책(행동하려는 욕구 프로그램), 바캉스·여가센터운영, 사회·문화활동, 국제교류활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정보정책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발달된 각 지역 정보망에 근거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정보들을 청소년 및 가족,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등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정보망과 사이버 청소년 특성의 발전과 프로젝트로 청소년 정보망 속의 멀티미디어 공간(사이버 커뮤니티 등) 축조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과 정부기관 간의 의사소통 기회이자 매개로써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청소년의회는 전국적으로 조직된 국가청소년의회(CNJ), 청소년체육단체 생활 지방의회(CDJSVA), 지역청소년의회(Les Conseils locaux de la jeunesse) 등으로 구성된다. 행동하려는 욕구(Envie d' Agir) 프로그램은 청소년 참여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정부차원의 최초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 책임감, 참여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재능 표출, 수행능력, 창조적 활동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들의 사회 및 직업사회에 대한 동화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바캉스·여가정책은 청소년 여가 시간 내에 물리적·도덕적 안전을 보장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질 높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사회·문화활동으로 프랑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청소년 여가시간 동안 건강한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책사업 및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 교류활동과 관련해, 프랑스는 유럽을 비롯해 그 밖의 지역과 활발한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을 주관하는 담당자, 전문가 혹은 자원봉사자들 및 협회 책임자들을 고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질 좋은 국제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초를 세우고,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소년의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역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프랑스의 대표적인 도시인 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수도인 파리는 청소년사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우선 취약계층 예방프로그램들은 예상 가능한 여러 청소년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취약계층 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길거리 교육 프로그램은 21개의 협회에서 64개 팀의 길거리 교육자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이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주기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위기청소년들을 최일선에서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치료프로그램은 특별한 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미혼모, 약물중독, 불법체류 외국 청소년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터나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 이외에 파리는 교육청과 함께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마. 핀란드

핀란드의 청소년정책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교육문화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화부 산하 문화·스포츠·청소년정책국의 청소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문화부는 청소년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과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는 청소년관련 다양한 활동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핀란드 청소년의 연령은 대개 15세에서 29세까지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0세부터 29세까지를 청소년정책의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청소년사업을 위한 정책적 책임과 시행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전국차원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차원에서는 지방정부(The Provincial State Office)가, 지역차원에서는 각 지역당국(Local Authorities)이 청소년사업을 실행한다.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시·도와 같은 수준의 주 행정을, 지역당국은 우리나라의 시·군·구 단위의 행정을 말한다. 지방조직에서는 지방간의 긴밀한 협력과 개발을 위해 지방위원회(Regional Council)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역당국은 12개 주 432개 단위로 지역 내 청소년의 시민활동, 생활조건 개선, 국제적 협력지원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확보에 주력한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으로는 청소년법(Youth Act)이 있다. 이 법은 1972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1986년, 1995년, 2006년 등 거의 10년 단위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6년에 개정된 청소년법에는 청소년 성장과 독립 지원, 청소년들의 활발한 시민권 촉진(시민 활동 증진), 사회적 권한 부여, 청소년들의 생활환경 개선(청소년 환경조건 개선) 등의 지원관련 법 조항 및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법은 청소년사업 및 정책에 관한 정부법(2006)에 의해 보완되었다. 여기에는 청소년정책 개발 프로그램 준비 및 이행, 청소년단체 지원계획, 청소년자문회의(Advisory Council for Youth Affairs), 청소년협회 보조위원회(Youth Organization Subsidy Committee)의 임원 구성과 임명의무에 관한 추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핀란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구조화되었다. 그동안 핀란드에서는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총체적인 청소년정책이 미비했다. 몇몇 지역 당국에서 다양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청소년법이 제정되고 지속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청소년정책수립 및 지방·지역 단위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법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중 주요 내용은 청소년자문회의, 방과후 학생클럽, 청소년워크숍(작업장) 활동, 약물남용 예방, 청소년 복지 사업, 다문화주의 및 이주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청소년문화행사 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자문회의를 통해 매년 시행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반드시 평가하도록 하였다.

핀란드의 최근 청소년정책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기에 청소년활동과 접목된 근로경험을 증대시켜 이를 진로와 연결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기반을 확충하고 직업역량 강화와 진로지도 이행 및 지원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바.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부처가 아동 및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는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이다. 교육연구부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 방과후 학교, 초등교육 특수학교 및 국가의 감독을 받는 자립학교 등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며, 교사훈련, 학교행정 프로그램, 교재개발과 장애아동 교육 등도 담당하고 있다. 교육연구부 산하 행정기구 중 교육정책과 관련된 기구로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국립학교개선위원회(Swedish 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 스웨덴 특수학교 연구소(Swedish Institute for Special Needs Educ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보육기관과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가치들과 기본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시설관리, 관련 인력 교육 및 재교육을 담당한다.

보건사회부의 사회보험 분과에서는 가족수당, 아동수당, 연금, 산재보험 등의 현금급여 및 아동이나 가족관련 수당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분과에서는 일부 업무로 청소년보호시설의 관리를 담당한다. 보건사회부 산하 중앙행정기구 중 아동옴부즈맨(Children's Ombudsman)이 있다. 아동옴부즈맨은 아동 및 청소년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아동정책 이행을 평가하는 정부기구이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협약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스웨덴 국제입양국(Swedish Intercountry Adoptions Authority)도 보건사회부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기구로서 입양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시설보호국(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은 업무의 일부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시설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직접적인 정책 및 사업서비스 제공자이다. 지방자치단체 중 아동·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에는 아동보육 및 청소년위원회(Child Care and Youth Committee), 사회복지이사회(Social Welfare Board) 혹은 지역위원회(District Committee) 등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및 청소년관련 서비스에 대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지방이양형태를 갖고 있다. 단,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의 경우,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다.

스웨덴 정부의 청소년정책에는 모든 공공서비스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주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네 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다. 네 가지의 원칙은 자원(Resource), 권리(Right), 독립과 자립(Independence and Self Reliance) 그리고 다양성(Diversity)이다.

첫째, '청소년들이 자원'이라는 원칙은 이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동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 자신들의 독특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가치관이 현재와 미래사회생산의 주요한 원천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런 자원의 관점은 비단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양성평등의 관점에 서서 청소년 자신의 경제적인 활동과 대중운동 등을 통해 다양한 민주적 과정과 공공분야 등에서 발달을 경험하고 참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들도 사회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계획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인 안전은 물론이고 건강과 역량개발의 기회를 적극 보장 받아야 하며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제공의 권리를 갖고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독립과 자립'이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청소년기가 보다 큰 독립과 자립으로 가는 발전적 단계라는 점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 독립과 자립의 의미는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 삶의 의존성을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에 대한 강압과 억압, 구속,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은 청소년들의 독립과 자립을 위해서 그들의 환경 속에서 제거되어야 할 요소들로 꼽고 있다.

넷째, ‘청소년들은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는 원칙은 그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은 매우 소중한 것이며 민주주의 속에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성인이 만들어낸 틀 안에 맞추어지는 존재가 아니며, 그들의 상황과 여건은 각자의 삶의 배경과 맥락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모든 공공수준의 서비스는 이런 청소년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고, 그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런 네 가지의 원칙 속에서 국가수준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삶의 안녕에 대한 진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두 가지의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및 사업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영향력 포럼(Influence Forum), 방과후 여가 및 보육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여가시간센터, 보육가정, 개방 여가활동), 여가 및 문화 활동,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정책 프로그램(소외된 지역 내 학교 강화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학생 학대에 대한 보호 강화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주택제공 관련 정책 프로그램(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 주택을 확보하거나 세를 얻는 환경개선 프로젝트),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계획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향상 프로젝트, 알코올 및 약물사용 예방 프로젝트) 등이 있다.

가. 미국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들 수 있다. 교육부는 법제상 교육에 관한 권한이 주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부처는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육 및 서비스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집행은 시나 카운티 등과 같은 지방정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속 차관보 조직인 아동가족실(ACF)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아동가족실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간 서비스(Human Service)를 제공하며, 특히 그들 스스로를 돕기 위한 미국의 주요한 정부기관으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대표적인 부서이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외의 부처에서도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노동부는 청소년고용 및 실업대책, 미성년자 고용의 안전대책, 청소년을 위한 공정한 고용기회 제공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고, 농림부는 농촌청소년활동 등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교정국, 청소년사법과 비행예방 사무국 등을 두어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치유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미성년 재판 및 미성년 비행 예방활동 등을 주 활동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국무부는 청소년단체 등의 지원을 다루고 있으며,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도시청소년 프로그램인 Youth Build 프로그램을 주무하고 있다.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우, 각 단위별로 독자적인 청소년정책과 다양한 제도들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행정지원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주정부 산하에 청소년서비스국 및 복지국을 두어 아동 및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고, 카운티에서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규모가 거대하고 다양한 단체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운영예산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National Collaboration for Youth와 US Student Association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관련 정책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청소년관련 법은 각 부처의 청소년사업의 골격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관련 법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청소년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하원에 소개되고 2006년 법률로써 서명된 「연방청소년 정책조정에 관한 법률(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FYCA)은 Federal Youth Department Council에 의해 제정되었다. FYCA는 청소년을 위한 연방정부 및 주 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2001년 의회에서 통과된 No Child Left Behind(NCLB)는 미국의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과 여유 있는 가정의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NCLB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법된 연방초중등교육법이다. NCLB의 담당국은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국이다. 그러나 NCLB는 교육부는 물론이고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본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NCLB는 보편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으면서 낮은 교육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소외계층의 학생, 소수민족 학생,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이민자 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각 주에서 정한 학업성취 기준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빈부격차에 의한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즉, NCLB 프로그램을 통한 소외계층의 학력수준 향상은 미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국의 전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NCLB는 책무성(Accountability), 자율성(Freedom), 방법론(Methods), 선택권(Choice)의 4대 원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바로 직결되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기본적인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통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교원들의 자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NCLB가 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2012년 3월 초중등교육법에 다시 그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미국의 청소년정책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교육복지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관련 정책과 제도가 앞으로도 집중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밖에 2003년 개정된 가출·노숙 청소년 법은 집이 없는 소년(Homeless Young People)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력투자법은 광범위한 청년취업 및 고용과 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동부에 의해 제안된 공정노동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은 청소년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기본급과 추가 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서비스 증진법’은 안전하고 안정된 가족유지와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he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of 2003은 아동학대방지 및 관리법이 2003년에 개정된 것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문화 상호교류법은 미국 국제청소년교류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청소년문제행동의 예방과 치료, 교정중심의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진단에 기초하여 최근 긍정적인 청소년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을 강조하고 있으며, 방과 후 시간에 다양한 긍정적 기회와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지원 등에 정책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소외 청소년에 대한 보다 나은 관리, 확실한 책임, 청소년과 가족의 연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이는 향후 연방정부 청소년정책의 기본 틀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은 청소년의 능력을 개발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조력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개발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청소년발달은 오늘날 미국 청소년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발달은 청소년보호처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며, 청소년육성이나 지도처럼 성인을 청소년이 이끈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 스스로 충분히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발달은 청소년들이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직업적, 도덕적, 정서적으로 유능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긍정적인 활동과 경험들을 통해서 당면할 생애주기를 청소년 스스로가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청소년관련 사항 중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변화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청소년 멘토링에 관한 사회적 주목, 청소년 수감자 수의 감소, 그리고 청소년 야외활동에 대한 장려이다. 먼저, 사이버폭력의 경우, 청소년들 사이의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이것이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주 정부에서는 사이버폭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의 주에서는 이미 2008년 이전에 사이버폭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고, 사이버폭력을 법으로 규정한 주 정부는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심을 가질만한 또 다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멘토링이다. 청소년 멘토링은 청소년의 학업을 도와주는 멘토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 시설청소년, 소수청소년 등 취약계층 전반의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멘토링 대상 청소년 집단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미국의 전국청소년사법네트워크(National Juvenile Justice Network)와 텍사스 공공정책 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이 2001~2010년 사이 청소년 수감자 수 변화추이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새로운 보고서 「The Comeback States: Reducing Youth Incarceration in the United States」에 담아 발표한다. 미국 청소년 수감시설의 청소년 수는 2000년 10만 8,802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10년 하반기에 6만 6,322명으로 3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커뮤니티 기반의 다른 징벌 또는 대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사소한 범죄로 시설에 수감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수감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미시시피, 뉴욕, 오하이오,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등

9개 주에서는 2001년 대비 2010년 청소년 수감자 수가 38%가 감소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이들 9개 주를 컴백주(Comeback States)라 명명하고 공통된 특성 등을 검토하면서 수감자 수 감소에 기여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정책특성이 보고되었다. 첫째, 증거 기반의 저렴한 치료 대안(수감형 대체 목적)의 공식화 및 재정지원 제공, 둘째, 청소년 범법자들이 불필요하게 보호소로 보내지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위험 평가,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 등) 도입, 셋째, 수감시설을 폐쇄하거나 또는 규모를 축소하여 처벌 시 다른 대안을 고려하도록 유도, 넷째 청소년 훈육과 관련하여 학교가 사법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 다섯째, 작은 범법행위에 대한 수감형 처벌 금지, 여섯째, 청소년 수감자와 관련한 예산체계 재정비, 수감시설보다는 대안 프로그램들에 더 많은 예산 편성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의 발간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의 청소년 범법자 수 데이터와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수감자와 관련한 최신의 경향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청소년 야외활동의 장려를 들 수 있다. 2015년 2월 19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2016년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이하 NPS)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미국 아동과 청소년들의 야외활동을 지원하는 에브리 키드 인 어 파크(Every Kid in a Park)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모든 아동·청소년들에게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 등 미국 고유의 뛰어난 자연환경에 방문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따라 2015~2016학년도(2015년 9월 시작)부터 전국의 모든 4학년 학생 및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 및 역사 유적지에 입장할 수 있는 패스가 무료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에 NPS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 각종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4,500만 달러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취약 지역 학교들에도 초점을 맞춰 학생들이 국립공원 등에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나. 일본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의 정비와 중장기계획·관계법령의 마련을 들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03년 6월,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내각 부(副)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청소년육성추진본부 산하에는 부(副) 본부장(관방장관, 문부과학성대신, 법무대신, 후생노동대신 등)으로 구성된 회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의 과장급회의, 청소년국제교류관련 연락회의, 청소년 비행대책을 위한 과장급회의, 커리어교육추진회의 등을 설치하여 정책의 종합적 추진과 정책의 체계성, 구체성을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 계획마련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책정한 바 있다. 2006년 6월에는 청소년들을 비행 또는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안전 및 안심 추진계획-비행, 범죄피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마련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청소년들의 커리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커리어교육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일본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동 법령에서는 크게 5가지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존중, 아동과 청소년을 성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 자아가 확립된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청소년의 개별적 상황에 기초한 종합적 지원, 성인사회의 재검토 등이 그것이다.

둘째, 정책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을 유아기에서 성인기 이전 단계까지 매우 폭넓게 설정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을 보호, 지원, 육성, 개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먼저, 영유아기에 대한 주요정책으로는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의 확충, 식생활 개선을 통한 모-자 보건 증진, 육아서비스 확충, 탁아시설 및 유치원 서비스 개선 및 제3자에 의한 서비스 평가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기에 대한 주요정책으로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체제 정비,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 기초학력 배양,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사춘기 청소년 연령대에 대한 주요정책으로는 취업능력 및 취업의식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주요정책으로는 대학교육의 충실,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시스템의 구축,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셋째, 청소년정책을 문제 상황별로 설정함으로써 정책과제 및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는 먼저, 학습장애(LD)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장학금 제도의 확충, 생활보호,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행소년들에 대한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가정폭력, 아동학대, 원조교제, 집단따돌림(이지메)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예방 및 보호, 장애, 비행 및 학교중도탈락 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이 있다.

넷째, 청소년정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 정비에 관한 정책들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인력의 배치(의료, 복지, 심리상담, 진로상담분야 전문가 등), 청소년지원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조성(학교 내 상담체제의 구축, 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 학교재량권의 확대, 선택제 수업의 확충 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의 조성,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충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정보사회, 소비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회 및 제도적 장치로 Town Meeting, 모니터링제도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에 관한 사회 계몽 활동, 사회성 함양을 위한 캠페인,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청소년정책 특징에 기초하여 최근 일본의 청소년정책 및 사업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일본 내각부는 심각한 비행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였고, 2010년 5월 27일에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에 대한 블로킹(blocking: 열람방지조치)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 포르노 근절 종합대책안을 공포했다. 또한, 내각부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인터넷환경 정비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촉진하는 자녀용과 보호자용 2가지 팸플릿을 발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내각부에서는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2011년 1월 7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고교생에게도 진로(career) 교육을 도입하여 특정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육성하도록 하고, 2012년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시범학교를 선정하였다. 3월 8일에는 일본 내각부에서 필터링 보급에 관한 관계각료 간담회를 열고, 국가공안위원회,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휴대전화에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필터링 기능)을 보급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월 22일에는 일본 문부성에서 지진피해 학생 지원책을 발표했고, 지진피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업료를 감면해 주었다. 6월 1일에는 아동·청소년 자살원인조사 지침을 문부성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8월 20일에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켜 비행과 등교거부, 은둔형 외톨이 등 문제청소년들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하였다. 9월 28일에는 일본 시즈오카(靜岡)현에서 고등학생 대인관계 지원사업을 개시하여 2011년 10월부터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인간관계 구축 및 감정 컨트롤 훈련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개시했다.

일본의 고질적인 청소년문제 중 하나는 은둔형 외톨이다. 은둔형 외톨이라 함은 학교나 직장 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타인과의 교류를 피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06년도 자료에 따르면 20~49세 국민 중 과거에 은둔형 외톨이었던 사람은 1.14%, 현재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가정은 0.56%(약 26만 가구)로 집계되었다. 2010년 내각부 조사(조사대상 15~39세)에 따르면, 연령별 비율은 15~19세 15%, 20~24세 20%, 25~29세 19%, 30~34세 22%, 35~39세 24%로 집계되었다. 은둔형 외톨이 해소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9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해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와 정령지정도시(우리나라 광역시와 유사)에 은둔형 외톨이 상담창구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였으나 인력과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어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지원할 서포터 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모집대상은 은둔형 외톨이 경험자와 가족, 자원봉사 경험자, 대학생 등이며 서포터는 의무적으로 47개 광역자치단체 및 20개 정령지정도시 산하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 센터’에서 양성연수를 수강하도록 하였다. 1,742개 기초자치단체(시·정·촌)는 본인 또는 가족의 방문 요청을 받아 서포터 등록자들 중 인근 거주자를 선택하여 매달 1~2차례 해당 가정에 파견하도록 하였고 서포터는 ▲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은둔형 외톨이 발견(해당 기초자치단체 보고), ▲ 방문지원, ▲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은둔형 외톨이 연계, ▲ 지역사회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모임 개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의뢰한 활동에 일당과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3년 2월 기준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한 광역자치단체와 정령지정도시가 67곳 중 36곳에 불과하여 서포터 양성기관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정비 등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일본 총무성은 2013년 4월 청소년의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청소년의 스마트 폰 사용 동향을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하여야 하며, 관련사업자 즉, 이동통신 사업자와 SNS 사업자, 사이트 감시 사업자 등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외에도 기업과 대학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의식 향상이 도모되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98년 11월 1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04년 지역사회개발·스포츠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Sports: MCDS)가 지역개발·청소년·스포츠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MCYS)로 개편되면서 MCYS가 청소년 주무부서가 되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로 바뀌면서 아동·청소년정책 주무부처가 되었다.

MSF는 싱가포르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각종 지원방안 모색 및 관련정책 수립·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중시되었던 지역 사회 및 국가와 관계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역동성과 역량개발 역시 여전히 중요한 국가적 임무로 삼고 있다. 2014년 현재 MSF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정책은 다음과 같다.

- 16세 이하 부모 통제 밖의 청소년 지원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HCCAICA)에 관한 의무 준수
- UN 아동권리협약의 의무 준수
- 아동청소년보호법(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CYPA)에 근거한 16세 이하 청소년의 돌봄, 보호, 재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제공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가정 및 지역사회 등에서의 재활과 지원 보장
- 범죄소년의 재활과 갱생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파트너와의 협력

라. 호주

호주에서는 교육·고용·노동관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호주 전역의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호주의 청소년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반면, 6개 주와 2개의 특별행정지역에는 독립적인 교육부서가 존재한다. 특히 교육·고용·노동관계부에는 2008년 청소년과를 설립해서 호주의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주요 원칙은 청소년들이 호주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삶을 둘러싼 환경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현재의 청소년세대에게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호주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법은 2004년 개정된 교육법(Education Act 2004)이다. 이 교육법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무교육연령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입학과 학제, 학력, 전학, 자격시험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조직과 운영, 교과내용, 학교 운용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호주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도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각 주의 청소년관련 법들을 살펴보면, 법의내용이 크게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그리고 교육에 관한 법으로 나누어진다. 호주의 지형적 조건상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 환경과 문화 환경을 수렴하여 각 주의 법이 처벌기준과 보호 기준 등에서 연령이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는 비슷하고, 또 주마다 청소년 범죄자의 이송에 관한 법을 됴으로써 청소년과 아동 범죄자의 권리와 교정 교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의 청소년정책은 고용, 교육, 훈련 등의 분야, 노숙자 청소년, 정신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 조기 학교중퇴 및 장기실업 청소년과 같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가 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좀 더 세분화되어서, 이민자 청소년과 토착원주민

청소년까지 포섭하도록 정책의 분야가 확대되었고, 2006년과 2007년 사이에는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호주 사회 내의 인구감소와 맞물려 이민자를 환영하고 호주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이 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2009~2010년 제1차 Reconciliation Action Plan과 2011~2014년 제2차 Reconciliation Action Plan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들은 청소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호주의 선거권이 18세 이상 시민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모든 정당은 유권자로서의 청소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교육·고용·노동관계부의 청소년국에서 여성, 아동, 토착원주민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중요한 정책대상이라고 밝힌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호주의 대표적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사회정의계획(Youth Social Justice Strategy)과 사회정의계획(Social Justice Strategy)인데 이는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에 주안점을 둔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고용·교육·훈련·청소년부 시절 「국가청소년정책: 원칙과 목표(A National Youth Policy: A Statement of Principles and Objectives)」의 발표를 통해 청소년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 부서에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는 경쟁적인 지구촌 경제의 변화에 호주가 탄력적이고도 역동적으로 적응하는 데 청소년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정책은 학교교육의 활성화와 극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이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머무르는 동안,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기술을 습득하고, 성인의 삶을 계획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더십, 청소년 건강과 안전, 작업장에서의 의사소통, 영업수완과 고객과의 관계, 주식 관리, 보안과 금융관리 등의 내용을 교육내용으로 하여 청소년들이 학교 재학 중에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과 관련된 교육은 반드시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당시부터 직업의 현장과 연관되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0년 이후 호주 정부는 새로운 교육개혁에 임하고 있다. 2010년 4월 15일 발표된 「호주청소년을 위한 국가전략(The National Strategy for Young Australians)」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호주 정부의 비전은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연하게 자라는 것과 청소년들이 배우고 일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기회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2010년 12월 7일에 호주브로드밴드 통신 디지털경제부(The 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는 8~17세 청소년 위원들로 구성된 호주의 청소년 자문단(Youth Advisory Group) 및 사이버안전 실무협의회(Consultative Working Group on Cyber safety)의 자문을 통해 개발된 사이버 안전버튼(Cyber safety Button)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2011년 2월 17일에는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육 혁명(DER)의 일환으로 9~12학년 학생

전원에 컴퓨터 보급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21세기에 요구되는 컴퓨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2011년 7월 5일에는 정부에서 농어촌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진학 지원금을 제공했다.

2013년 6월 1일에는 교육·고용·노동관계부를 중심으로 학교교육부, 예술부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 및 단체들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크리에이티브 영스타(Creative Young Star: CYS)」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창조·공연예술 등의 분야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향후 800만 호주달러가 이를 위해 투자될 예정이다. CYS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 2013년 3월 13일에 국가적인 문화정책이자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문화 및 학술활동에 필요한 돈이 없어 기회를 얻지 못하는 25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개인 및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교육·고용·노동관계부가 이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예술부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화·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호주 정부는 향후 잠재적인 청소년의 역량 및 재능 개발과 각종 행사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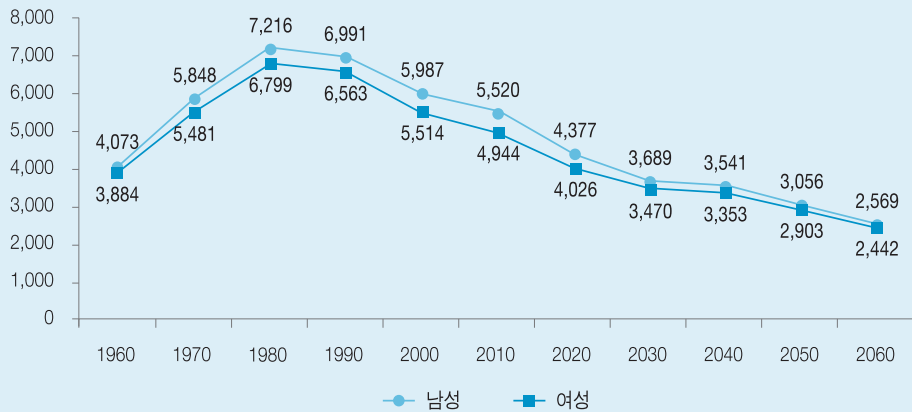
최근 호주에서는 청소년 주간(National Youth Week, 이하 NYW)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호주 최대의 청소년 행사인 NYW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영향(Our Voice, Our Impact)”을 주제로 삼아 호주 전역에서 12~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음악·예술 공연과 축하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주요 행사로는 부문별 우수청소년을 선정해 시상하는 2014년 호주 청소년 어워즈(National Youth Award) 등이 개최되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2015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961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062만 명 중 1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82년(1,421만 명)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출산 추세에 따라 2020년까지 5년간 127만 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도 1978년에 36.9%로 최고점을 나타낸 이후 계속 낮아져 2030년에는 13.0%, 2060년에는 1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인구 증가율은 1960~1965년 연평균 2.77%로 총인구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1980~1985년에는 연평균 -0.06%씩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5~2025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2%대의 높은 감소율을 보일 전망이다.

청소년 인구 전망(1960 ~ 2060)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2010 ~ 2060.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가족

제1장 청소년 인구 현황과 전망

제2장 가족구성 및 변동

제3장 가족관계

제 1 장

청소년 인구 현황과 전망

1 청소년 인구 현황

2015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961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062만 명 중 19.0%를 차지하고 있다. 9~24세 청소년 인구 중 22세 인구가 7.4%로 가장 많은 반면, 9세 인구는 4.5%로 청소년 인구 중 가장 적다.

여자 1백 명당 남자의 수를 의미하는 성비는 2015년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100.0명인 데 반해, 9~24세 청소년 인구는 111.2명으로 청소년의 남녀 간 인구규모 불균형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2세 인구의 성비는 116.6명으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비가 개선되고 있으나 9세의 성비도 107.2명으로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2-1-1〉 2015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단위 : 천명, %,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연령	청소년 인구	구성비(9~24세)	구성비(0~24세)	남 자	여 자	성 비
0세	454	-	3.3	234	219	107.0
1세	454	-	3.3	234	220	106.3
2세	454	-	3.3	235	220	107.0
3세	454	-	3.3	234	220	106.6
4세	481	-	3.5	249	233	106.8
5세	444	-	3.2	229	216	106.2
6세	450	-	3.3	232	218	106.1
7세	484	-	3.5	249	235	106.1
8세	455	-	3.3	235	221	106.4
9세	433	4.5	3.2	224	209	107.2
10세	440	4.6	3.2	228	213	107.1
11세	473	4.9	3.4	245	228	107.6
12세	471	4.9	3.4	245	227	107.9
13세	505	5.3	3.7	263	243	108.2
14세	586	6.1	4.3	304	282	108.1
15세	603	6.3	4.4	316	287	110.2
16세	613	6.4	4.5	321	292	109.8
17세	630	6.6	4.6	329	301	109.3
18세	653	6.8	4.8	342	311	110.0
19세	677	7.0	4.9	356	321	111.0
20세	694	7.2	5.1	369	325	113.7
21세	707	7.4	5.1	380	327	116.0
22세	716	7.4	5.2	385	330	116.6
23세	715	7.4	5.2	383	332	115.5
24세	695	7.2	5.1	371	324	114.5
계(9~24세)	9,610	100.0	-	5,060	4,550	111.2
계(0~24세)	13,741	-	100.0	7,191	6,550	109.8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2010 ~ 2060.

2 청소년 인구 전망

우리나라의 청소년(9~24세) 인구는 1960년 796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1982년에는 1,421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출산율 감소로 청소년 인구가 점차 줄면서 2000년에는 1,150만 명, 2015년에는 961만 명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청소년 인구는 2030년에 716만 명, 2060년에는 50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에 전체 인구의 31.8%에서 1978년에 36.8%까지 계속 증가하다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0년에는 24.5%, 2015년에는 19.0%까지 낮아졌다. 향후에도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13.7%, 2060년에는 11.4%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1960년대 연평균 2%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90~1995년에는 1.02%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1%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2031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인구성장률을 보인 후, 2055~2060년에는 연평균 0.96%씩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청소년 인구 증가율은 1960~1965년 2.77%로 총인구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1975~1980년 1.69%, 1980~1985년에는 연평균 -0.06%씩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5~2025년까지 10년간은 -2%대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감소 폭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나, 2055~2060년에도 연평균 -1.50%씩 감소할 전망이다.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단위 : 명, %)

연 도	총 인 구	연평균 성장률	청 소 년 인 구				연평균 성장률
			전 체	남 성	여 성	구 성 비	
1960년	25,012,374	-	7,956,903	4,072,726	3,884,177	31.8	-
1965년	28,704,674	2.79	9,120,576	4,699,931	4,420,645	31.8	2.77
1970년	32,240,827	2.35	11,329,714	5,848,491	5,481,223	35.1	4.43
1975년	35,280,725	1.82	12,885,563	6,651,771	6,233,792	36.5	2.61
1980년	38,123,775	1.56	14,014,932	7,216,195	6,798,737	36.8	1.69
1985년	40,805,744	1.37	13,974,697	7,187,699	6,786,998	34.2	-0.06
1990년	42,869,283	0.99	13,553,357	6,990,839	6,562,518	31.6	-0.61
1995년	45,092,991	1.02	12,751,383	6,581,311	6,170,072	28.3	-1.21
2000년	47,008,111	0.84	11,501,436	5,987,274	5,514,162	24.5	-2.04
2005년	48,138,077	0.48	11,027,943	5,782,388	5,245,555	22.9	-0.84
2010년	49,410,366	0.52	10,464,647	5,520,262	4,944,385	21.2	-1.04
2015년	50,617,045	0.48	9,609,808	5,060,151	4,549,657	19.0	-1.69
2020년	51,435,495	0.32	8,403,212	4,377,332	4,025,880	16.3	-2.65
2025년	51,972,363	0.21	7,425,882	3,839,964	3,585,918	14.3	-2.44
2030년	52,160,065	0.07	7,158,631	3,689,035	3,469,596	13.7	-0.73
2035년	51,888,486	-0.10	7,094,276	3,651,840	3,442,436	13.7	-0.18
2040년	51,091,352	-0.31	6,893,525	3,540,529	3,352,996	13.5	-0.57
2045년	49,810,211	-0.51	6,516,214	3,343,402	3,172,812	13.1	-1.12
2050년	48,121,275	-0.69	5,958,537	3,055,842	2,902,695	12.4	-1.77
2055년	46,124,771	-0.84	5,403,999	2,771,454	2,632,545	11.7	-1.93
2060년	43,959,375	-0.96	5,010,838	2,569,329	2,441,509	11.4	-1.50

주 : 연평균 인구성장률 = $((P_t/P_0)^{1/t} - 1) \times 100$.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2010 ~ 2060.

3 청소년 인구동태

인구동태 통계(Vital statistics)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본적인 인구변동사건에 대한 통계로서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통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등 다양한 인구동태 지표가 작성되고 있다.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단위 : 명, 건수)

연도	출생	사망	자연증가	혼인	이혼
1970년	1,006,645	258,589	748,056	295,137	11,615
1975년	874,030	270,657	603,373	283,226	16,453
1980년	862,835	277,284	585,551	403,031	23,662
1985년	655,489	240,418	415,071	384,686	38,187
1990년	649,738	241,616	408,122	399,312	45,694
1995년	715,020	242,838	472,182	398,484	68,279
1996년	691,226	241,149	450,077	434,911	79,895
1997년	668,344	241,943	426,401	388,960	91,160
1998년	634,790	243,193	391,597	373,500	116,294
1999년	614,233	245,364	368,869	360,407	117,449
2000년	634,501	246,163	388,338	332,090	119,455
2001년	554,895	241,521	313,374	318,407	134,608
2002년	492,111	245,317	246,794	304,877	144,910
2003년	490,543	244,506	246,037	302,503	166,617
2004년	472,761	244,217	228,544	308,598	138,932
2005년	435,031	243,883	191,148	314,304	128,035
2006년	448,153	242,266	205,887	330,634	124,524
2007년	493,189	244,874	248,315	343,559	124,072
2008년	465,892	246,113	219,779	327,715	116,535
2009년	444,849	246,942	197,907	309,759	123,999
2010년	470,171	255,405	214,766	326,104	116,858
2011년	471,265	257,396	213,869	329,087	114,284
2012년	484,550	267,221	217,329	327,073	114,316
2013년	436,455	266,257	170,189	322,807	115,292
2014년	435,435	267,692	167,743	305,507	115,51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2014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43만5천 명, 사망자 수는 26만8천 명이었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를 의미하는 자연증가로 인해 2014년 한 해 동안 약 16만 8천 명의 인구가 증가한 셈이다.

출생아 수 추이는 1970년 1백만 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절반 이하의 수준인 43만 5천 명까지 감소했다. 2010년 이후로는 3년 연속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43만6천 명으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도 43만5천 명으로 작년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사망자 수 추이는 1970년 25만9천 명에서 증가한 후 1980년대 후반부터는 24만 명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7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25만 명을 넘어섰다.

2014년 연간 혼인 건수는 30만6천 건으로 전년에 비해 1만7천3백 건 감소한 반면, 2014년의 이혼 건수는 11만5천 건으로 전년에 비해 218건 증가했다.

혼인은 1996년 43만5천 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 30만3천 건까지 감소했다. 이후 2007년에는 34만4천 건까지 늘어났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다시 31만 건까지 감소한 후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다시 감소했다. 반면에 이혼은 1970년 1만2천 건에서 1998년에는 11만6천 건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에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만7천 건을 정점으로 한 후, 2004년부터는 감소 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8.6명으로 전년(8.6명)과 유사한 수준이나 이는 통계 작성(70년)이래 가장 낮았으며, 조사망률(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5.3명이었다. 2014년의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차감한 자연증가율은 2014년 3.3명이었다.

2014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6.0건으로 2013년보다 0.4건 감소했고,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은 2.3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표 2-1-4〉 연도별 인구동태율 추이

(단위 : 건(명), 1천 명당)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조출생률	31.2	24.8	22.6	16.1	15.2	15.7	13.3	11.6	10.2	10.2	9.8	8.9	9.2	10.0	9.4	9.0	9.4	9.4	9.6	8.6	8.6
조사망률	8.0	7.7	7.3	5.9	5.6	5.3	5.2	5.0	5.1	5.1	5.0	5.0	5.0	5.0	5.0	5.0	5.1	5.1	5.3	5.3	5.3
자연증가율	23.2	17.1	15.4	10.2	9.5	10.3	8.2	6.5	5.1	5.1	4.7	3.9	4.2	5.1	4.4	4.0	4.3	4.3	4.3	3.4	3.3
조혼인율	9.2	8.0	10.6	9.4	9.3	8.7	7.0	6.7	6.3	6.3	6.4	6.5	6.8	7.0	6.6	6.2	6.5	6.6	6.5	6.4	6.0
조이혼율	0.4	0.5	0.6	0.9	1.1	1.5	2.5	2.8	3.0	3.4	2.9	2.6	2.5	2.5	2.4	2.5	2.3	2.3	2.3	2.3	2.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가. 출생

2014년 출생아 수는 43만5천여 명,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는 8.6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 및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0~30대의 미혼자 비중이 늘고, 초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 2005년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이후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2007년 출생아 수가 49만 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08년과 2009년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 이후에는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3~2014년은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2014년 출생아 수는 2005년(43만5천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단위 : 명, %, 인구 1천 명당 명)

연도	출생아 수			1일 평균	조출생률
		증 감	증감률(%)		
1995년	715,020			1,959	15.7
1996년	691,226	-23,794	-3.3	1,889	15.0
1997년	668,344	-22,882	-3.3	1,831	14.4
1998년	634,790	-33,554	-5.0	1,739	13.6
1999년	614,233	-20,557	-3.2	1,683	13.0
2000년	634,501	20,268	3.3	1,734	13.3
2001년	554,895	-79,606	-12.5	1,520	11.6
2002년	492,111	-62,784	-11.3	1,348	10.2
2003년	490,543	-1,568	-0.3	1,344	10.2
2004년	472,761	-17,782	-3.6	1,292	9.8
2005년	435,031	-37,730	-8.0	1,192	8.9
2006년	448,153	13,122	3.0	1,228	9.2
2007년	493,189	45,036	10.0	1,351	10.0
2008년	465,892	-27,297	-5.5	1,273	9.4
2009년	444,849	-21,043	-4.5	1,219	9.0
2010년	470,171	25,322	5.7	1,288	9.4
2011년	471,265	1,094	0.2	1,291	9.4
2012년	484,550	13,285	2.8	1,324	9.6
2013년	436,455	-48,095	-9.9	1,196	8.6
2014년	435,435	-1,020	-0.2	1,193	8.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2014년 합계출산율은 1.205명으로 전년(1.187)보다 0.12명 증가하였다. 1970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계속 유지하여 1983년 합계출산율 2.1의 대체수준보다 낮은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계속 1.3명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이 113.8명으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25~29세)이 63.4명, 30대 후반(35~39세)이 43.2명 순으로 높았다. 미혼과 만혼이 늘면서 주 출산연령층이 높아져, 2007년에 처음으로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더 높아졌다.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1997년 159.7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에는 절반 이하 수준인 63.4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30대 초반 출산율은 1997년 71.5명에서 2012년 121.9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113.8명으로 나타났다. 30대 후반(35~39세)의 출산율은 43.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명)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19세	3.0	2.8	2.6	2.5	2.2	2.6	2.5	2.3	2.1	2.2	2.2	1.7	1.7	1.8	1.8	1.8	1.7	1.6
20~24세	54.2	48.3	43.3	38.8	31.4	26.5	23.6	20.6	17.8	17.6	19.5	18.2	16.5	16.5	16.4	16.0	14.0	13.1
25~29세	159.7	152.1	147.2	149.6	129.2	110.9	111.7	104.5	91.7	89.4	95.5	85.6	80.4	79.7	78.4	77.4	65.9	63.4
30~34세	71.5	71.2	72.3	83.5	77.5	74.5	79.1	83.2	81.5	89.4	101.3	101.5	100.8	112.4	114.4	121.9	111.4	113.8
35~39세	15.4	15.2	15.3	17.2	17.0	16.6	17.1	18.2	18.7	21.2	25.6	26.5	27.3	32.6	35.4	39.0	39.5	43.2
40~44세	2.3	2.3	2.4	2.5	2.4	2.4	2.4	2.4	2.4	2.6	3.1	3.2	3.4	4.1	4.6	4.9	4.8	5.2
45~49세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1	0.1
합계출산율 ¹⁾	1,520	1,448	1,410	1,467	1,297	1,166	1,180	1,154	1,076	1,123	1,250	1,192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주 : 1)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가임여자 1명당 명.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2014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인 105.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출생성비는 105를 기준으로 ± 2 (103~107) 수준을 의미한다. 출생성비는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가 1994년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강화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 정상성비 범위인 106.2 수준으로 내려간 이후에는 정상성비 범위 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생아의 출산순위별로도 출생성비는 모두 정상 성비 수준을 나타냈다. 2014년 첫째 아와 둘째 아의 성비는 각각 105.6과 104.6으로 모두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셋째 아 이상의 출생 성비는 106.7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가며 정상 성비 수준으로 진입하였다.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 여아 1백 명당 남아 수)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출생성비	108.3	110.2	109.6	110.2	109.1	110.0	108.7	108.2	107.8	107.5	106.2	106.4	106.4	106.9	105.7	105.7	105.3	105.3
첫째아	105.2	106.0	105.6	106.3	105.5	106.5	104.9	105.1	104.8	105.7	104.5	104.9	105.1	106.4	105.0	105.3	105.4	105.6
둘째아	106.3	108.1	107.5	107.4	106.4	107.3	107.0	106.2	106.5	106.0	106.0	105.6	105.8	105.8	105.3	104.9	104.5	104.6
셋째아이상	136.1	146.0	143.3	144.2	141.5	141.4	136.9	133.0	128.5	121.9	115.7	116.7	114.3	110.9	109.5	109.2	108.0	106.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나. 사 망

2014년 총 사망자 26만8천 명 중 청소년(10~24세) 사망은 2,24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8%를 차지한다. 청소년 사망자 중 10~14세는 10.7%(239명), 15~19세는 38.8%(870명), 20~24세는 50.5%(1,131명)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 전체 사망자에 비해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운수사고, 자살 등)에 의한 사망자 비중이 높다. 청소년 사망의 65.5%는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었고,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13.1%,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5.6%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체 연령의 사망원인은 신생물이 29.1%, 순환기계통의 질환이 21.6%,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8〉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구성비

(단위 : 명, %)

사망원인	총 사망		청소년 사망						
	계	구성비	사망자수			연령별 구성비			
			남녀 전체	남자	여자	10~24세	10~14세	15~19세	20~24세
전 체	267,692	100.0	2,240	1,491	749	100.0	100.0	100.0	100.0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6,912	2.6	20	10	10	0.9	0.8	0.9	0.9
신 생 물	77,902	29.1	293	191	102	13.1	26.4	11.6	11.4
혈액 및 조혈기관 질환과 면역 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637	0.2	22	14	8	1.0	3.3	0.8	0.6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1,611	4.3	25	16	9	1.1	2.5	0.9	1.0
정신 및 행동장애	5,096	1.9	3	2	1	0.1	0.0	0.0	0.3
신경계통의 질환	9,967	3.7	125	86	39	5.6	14.2	5.2	4.1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0	0.0	0	0	0	0.0	0.0	0.0	0.0
귀 및 유도의 질환	1	0.0	0	0	0	0.0	0.0	0.0	0.0
순환기계통의 질환	57,815	21.6	118	77	41	5.3	6.7	4.4	5.7
호흡기계통의 질환	24,159	9.0	34	22	12	1.5	2.5	1.4	1.4
소화기계통의 질환	11,351	4.2	16	7	9	0.7	0.8	0.5	0.9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484	0.2	1	1	0	0.0	0.0	0.1	0.0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1,559	0.6	11	3	8	0.5	0.8	0.3	0.5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5,834	2.2	5	3	2	0.2	0.4	0.1	0.3
임신, 출산 및 산후기	48	0.0	1	0	1	0.0	0.0	0.0	0.1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696	0.3	0	0	0	0.0	0.0	0.0	0.0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471	0.2	29	13	16	1.3	3.8	1.5	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23,800	8.9	70	50	20	3.1	2.1	3.0	3.4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29,349	11.0	1,467	996	471	65.5	35.6	69.3	68.9

자료 : 통계청, 2014년 사망원인통계.

제 2 장

가족구성 및 변동

1 가족구성 현황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는 가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단위이다.

〈표 2-2-1〉 연도별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단위 : 가구, 명)

연도	총가구수	일반가구수	집단가구수	평균가구원수(명)
1970년	5,856,901	5,792,983	63,918	5.3
1975년	6,754,257	6,647,778	106,479	5.0
1980년	7,992,968	7,969,201	23,767	4.5
1985년	9,598,796	9,571,361	27,435	4.1
1990년	11,370,160	11,354,540	15,620	3.7
1995년	12,974,194	12,958,181	16,013	3.3
2000년	14,326,224	14,311,807	14,417	3.1
2005년	15,903,679	15,887,128	16,551	2.9
2010년	17,360,149	17,339,422	20,727	2.7

주 : 1) 외국인 가구 제외.

2) 1970년대에는 1인 단독 가구를 추정(216,706)하여 일반 가구에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가구구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인 대가족의 해체, 친족가구의 비율 감소, 핵가족 비율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으로 가구 수는 증가한 반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0년 총 가구 수는 1,736만 가구로, 2005년에 비해 146만 가구가 증가했고, 1970년에 비해서는 가구 수가 약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으로 2005년 2.9명에서 0.2명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대 5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3명 이하로 줄었다.

2 가구 수 현황

가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2010년 총 1,757만 가구 중 일반 가구가 98.7%(1,734만 가구), 외국인 가구가 1.2%(21만 가구), 기숙사나 사회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 가구가 0.1%(2만 가구)를 차지한다. 일반 가구는 혈연 가구와 1인 가구, 남남끼리 사는 비혈연 가구로 구성되는데, 2010년에는 혈연 가구는 73.9%, 1인 가구는 23.6%, 남남끼리 사는 비혈연 가구는 1.2%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대비 일반 가구는 9.1% 증가하고 혈연 가구는 4% 증가한 반면 1인 가구는 30.6% 증가하여 최근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구구성은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혈연 가구는 동지역이 74.7%로 읍면지역 70.6% 보다 높았다. 반면 1인 가구는 동지역이 22.8%로 읍면지역 26.8%보다 낮았다. 읍면지역에 1인 가구 비율이 동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의 비중이 동지역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2-2〉 가구유형별 가구 수 현황

(단위 : 가구,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증감률 (%)
	가구 수	구성비	가구 수	구성비	가구 수	구성비	
전 국							
총 가구	14,391,374	100	15,988,274	100	17,574,067	100.0	9.9
일반 가구	14,311,807	99	15,887,128	99	17,339,422	98.7	9.1
혈연 가구	11,928,143	83	12,490,507	79	12,994,994	73.9	4.0
1인 가구	2,224,433	16	3,170,675	20	4,142,165	23.6	30.6
비혈연 가구	159,231	1	225,946	1	202,263	1.2	-10.5
집단 가구	14,417	0	16,551	0	20,727	0.1	25.2
외국인 가구	65,150	1	84,595	1	213,918	1.2	152.9
동(洞)지역							
총 가구	11,290,609	100	12,826,173	100	14,224,508	100.0	10.9
일반 가구	11,229,476	99	12,744,940	99	14,031,069	98.6	10.1
혈연 가구	9,459,798	84	10,127,839	80	10,630,848	74.7	5.0
1인 가구	1,642,618	15	2,439,761	19	3,244,064	22.8	33.0
비혈연 가구	127,060	1	177,340	1	156,157	1.1	-11.9
집단 가구	9,116	0	10,413	1	12,420	0.1	19.3
외국인 가구	52,017	1	70,820	1	181,019	1.3	155.6
읍면(邑面)지역							
총 가구	3,100,765	100	3,162,101	100	3,349,559	100.0	5.9
일반 가구	3,082,331	99	3,142,188	100	3,308,353	98.8	5.3
혈연 가구	2,468,345	80	2,362,668	79	2,364,146	70.6	0.1
1인 가구	581,815	19	730,914	19	898,101	26.8	22.9
비혈연 가구	32,171	1	48,606	2	46,106	1.4	-5.1
집단 가구	5,301	0	6,138	0	8,307	0.2	35.3
외국인 가구	13,133	0	13,775	0	32,899	1.0	138.8

자료 : 통계청(2000,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4인 가구(31.1%)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24.3%)가 4인 가구(22.5%)나 3인 가구(21.3%)보다 더 많았다.

가구원 수 분포에도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를 보였다. 동지역은 4인 가구가 24.0%로 가장 많았으나, 읍면지역은 2인 가구의 비중이 31.8%로 가장 높았다.

〈표 2-2-3〉 가구의 가구원 수 현황

(단위 : 천가구, %)

구 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전 국								
2010년 (비율)	17,339 (100.0)	4,142 (23.9)	4,205 (24.3)	3,696 (21.3)	3,898 (22.5)	1,078 (6.2)	241 (1.4)	79 (0.5)
2005년 (비율)	15,887 (100.0)	3,171 (20.0)	3,521 (22.2)	3,325 (20.9)	4,289 (27.0)	1,222 (7.7)	267 (1.7)	93 (0.6)
2000년 (비율)	14,312 (100.0)	2,225 (15.5)	2,731 (19.1)	2,988 (20.9)	4,447 (31.1)	1,443 (10.1)	345 (2.4)	135 (0.9)
동(洞)지역								
2010년 (비율)	14,031 (100.0)	3,244 (23.1)	3,154 (22.5)	3,120 (22.2)	3,373 (24.0)	892 (6.4)	190 (1.4)	58 (0.4)
2005년 (비율)	12,744 (100.0)	2,440 (19.1)	2,558 (20.1)	2,771 (21.7)	3,703 (29.1)	1,006 (7.9)	203 (1.6)	65 (0.5)
2000년 (비율)	11,229 (100.0)	1,643 (14.6)	1,890 (16.8)	2,420 (21.5)	3,778 (33.7)	1,159 (10.3)	252 (2.3)	89 (0.8)
읍면(邑面)지역								
2010년 (비율)	3,308 (100.0)	898 (27.1)	1,051 (31.8)	576 (17.4)	525 (15.9)	186 (5.6)	51 (1.6)	21 (0.6)
2005년 (비율)	3,142 (100.0)	731 (23.3)	962 (30.6)	554 (17.6)	586 (18.7)	217 (6.9)	64 (2.0)	28 (0.9)
2000년 (비율)	3,082 (100.0)	582 (18.9)	841 (27.3)	568 (18.4)	669 (21.7)	284 (9.2)	93 (3.0)	46 (1.5)

주 : 각 통계표의 가구는 일반 가구임.

자료 : 통계청(2000,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3 가구의 세대구성

2010년의 세대구성 유형별 가구 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가구(일반 가구 기준) 중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가 51.3%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23.9%, 1세대 가구 17.5%, 3세대 가구 6.1%, 비혈연 가구 1.2%, 4세대 이상 가구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2세대 가구 비율은 4.1%p 감소한 반면,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는 각각 3.9%p, 1.3%p 증가했다.

2세대 가구의 비중은 동지역이 54.2%, 읍면지역은 39.1%로 농촌지역의 2세대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1세대 가구 비중은 동지역이 15.5%, 읍면지역이 25.6%로 읍면지역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읍면지역에서 1세대 가구와 1인가구의 구성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노인부부 및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2-2-4〉 세대구성유형별 가구 수 현황

(단위 : 천가구,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가구 수	구성비	가구 수	구성비	가구 수	구성비
전 국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1세대 가구	2,034	14.2	2,575	16.2	3,027	17.5
2세대 가구	8,696	60.8	8,807	55.4	8,892	51.3
3세대 가구	1,177	8.2	1,093	6.9	1,063	6.1
4세대 이상 가구	22	0.2	16	0.1	13	0.1
1인가구	2,225	15.5	3,171	20.0	4,142	23.9
비혈연 가구	159	1.1	226	1.4	202	1.2
동(洞)지역	11,230	100.0	12,744	100.0	14,031	100.0
1세대 가구	1,352	12.0	1,793	14.1	2,182	15.5
2세대 가구	7,237	64.5	7,482	58.7	7,599	54.2
3세대 가구	858	7.6	842	6.6	842	6.0
4세대 이상 가구	13	0.1	10	0.1	9	0.1
1인가구	1,643	14.6	2,440	19.1	3,244	23.1
비혈연 가구	127	1.1	177	1.4	156	1.1
읍면(邑面)지역	3,083	100.0	3,142	100.0	3,308	100.0
1세대 가구	682	22.1	781	24.9	846	25.6
2세대 가구	1,459	47.3	1,325	42.2	1,294	39.1
3세대 가구	319	10.4	250	8.0	221	6.7
4세대 이상 가구	9	0.3	6	0.2	4	0.1
1인가구	582	18.9	731	23.3	898	27.1
비혈연 가구	32	1.0	49	1.5	46	1.4

자료 : 통계청(2000,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042-481-2251



제 3 장

가족관계

청소년의 가족관계는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심이 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자녀관을 살펴보고, 부모와 자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 활용한 자료는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청소년 복지의 향상)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¹⁾²⁾, 「통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³⁾,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단 년도로 실시한 바 있는 “가족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⁴⁾, “가족 내 세대갈등 및 가족 돌봄, 상속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⁵⁾를 근거로 기술하였다.

1 자녀가치관

부모에게 자녀의 의미는 부모와 자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치관은 <표 2-3-1>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에 대한 견해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는 8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다’라는 자녀를 통한 부모의 성취도에 대한 견해는 57.2%로 높은 편이었으며, ‘노후를 위해 자식이 필요하다’는 48.8%로 거의 절반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삶에서 자녀가 가장 우선이다’ 등 자녀의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는 32~35%로 낮은 편이었고, ‘노후에는 자식과 함께 살고 싶다’는 16.1%로 미미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와 ‘노후에는 자식과 함께 살고 싶다’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은 보인 반면, 여성은 ‘노후를 위해 자식이 필요하다’와 ‘자식의

1) 2011년 조사대상은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전국 2,200가구의 주 양육자 1인(남자 314명, 여자 1,886명), 가구내 만 9~24세 청소년 전원 3,492명임(만 9~12세 청소년 1,099명, 만 13~24세 청소년 2,393명).

2) 2014년 조사대상은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전국 2,000가구의 주 양육자 1인(남자 306명, 여자 1,694명), 가구내 만 9~24세 청소년 전원 2,000명임(만 9~12세 청소년 867명, 만 13~24세 청소년 2,133명).

3) 2003년 조사대상은 16,000가구, 15~59세 기혼 10,147명, 2006년 조사대상은 16,380가구, 15~59세 기혼 10,117명, 2009년 조사대상은 18,000가구, 15~59세 기혼 9,075명, 2012년 조사대상은 18,000가구, 15~64세 기혼 10,058명임.

4) 2013년에 실시된 전화조사로 조사대상은 일반국민 중 20~65세의 1,000명임.

5) 2014년에 실시된 전화조사로 조사대상은 일반국민 중 19~69세의 1,000명임.

성공은 나의 성공이다'가 높아서 남성보다 여성이 노후에 자녀의존도와 자녀를 통한 부모 성취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연령층과 60대 연령층은 '노후를 위해 자식이 필요하다'가 높았고, 20대와 50대, 그리고 60대는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다'가 높은 편이었다. 또한, 50대와 60대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와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삶에서 자녀가 가장 우선이다', '노후에는 자식과 함께 살고 싶다' 등 젊은 연령층에 비해 자녀 필요도와 우선순위, 그리고 노후에 자녀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부모에게 자녀의 필요도와 자녀를 통한 성취감은 높으나 가족관계에서 자녀가 절대 우위는 아니며 노후에 대비해 자녀가 필요하나 자녀와의 비동거를 선호하여 과거 자녀중심의 가치에서 점차 부부 또는 가족 중심의 가치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젊은 연령층에서 높고, 고연령층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2-3-1〉 자녀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단위 : %, (명))

구 분	성인이라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를 위해서는 자식이 필요하다	자식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다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 관계가 우선 되어야 한다	삶에서 자녀가 가장 우선이다	노후에는 자식과 함께 살고 싶다	(분석대상 수)	
전 체	80.9	48.8	57.2	32.1	34.7	16.1	100.0(1,000)	
성별	남성	82.7	45.8	53.4	32.9	32.7	20.4	100.0 (504)
	여성	79.0	51.8	61.1	31.3	36.7	11.7	100.0 (496)
연령별	29세 이하	76.3	58.9	62.1	41.1	27.9	21.6	100.0 (190)
	30~39세	69.9	41.3	44.2	25.7	26.7	8.3	100.0 (206)
	40~49세	83.1	40.7	49.8	25.1	34.6	15.2	100.0 (243)
	50~59세	89.3	48.0	61.8	33.3	35.6	18.7	100.0 (225)
	60~69세	86.0	61.8	75.7	39.7	55.1	17.6	100.0 (136)

주 : 6개 항목별로 5점 척도에서 매우 찬성한다와 찬성한다를 합친 비율임.

자료 : 김유경 외(2013).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3-2〉에서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를 기르는 것이 '가족 결속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가 4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이 37.5%로 많았다. 성별로도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이외에 남성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와 '결혼한 부부라는 사회적 인정'에 자녀의 양육 의미를 두었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50대 이상 연령층은 자녀 양육 의미를 '가족결속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가 높은 편이었고, 20대와 30대 연령층은 '자녀를 키우는 일의 즐거움'이 높은 분포를 보여서 연령별로 자녀를 기르는 의미에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

으로 자녀양육의 의미는 주로 가족결속과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등 개인과 가족 차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남성과 고연령층은 가문의 대 잇기나 부부라는 사회적 인정 등의 사회적 차원에서 자녀양육 가치가 다소 높았다.

〈표 2-3-2〉 자녀를 기르는 의미

(단위 : (명, %))

구 분	가문의 대를 잇기	가족 결속을 든든하게 하기	노후 안심	자녀를 키우는 일의 즐거움	결혼한 부부라는 사회적 인정	나의 꿈을 이루어줄 후계자	기타	계수	
전 체	6.7	42.0	2.8	37.5	5.8	2.3	2.9	100.0(1,000)	
성별	남성	9.5	38.9	2.6	35.9	7.1	3.8	2.2	100.0 (504)
	여성	3.8	45.2	3.0	39.1	4.4	0.8	3.6	100.0 (496)
연령별	29세 이하	5.8	36.3	3.2	46.3	4.7	3.7	0.0	100.0 (190)
	30~39세	4.9	40.3	1.9	41.3	4.9	2.9	3.9	100.0 (206)
	40~49세	6.2	40.3	2.5	40.3	5.3	1.6	3.7	100.0 (243)
	50~59세	4.4	50.2	2.7	28.9	9.3	0.9	3.6	100.0 (225)
	60~69세	15.4	41.9	4.4	28.7	3.7	2.9	2.9	100.0 (136)

자료 : 김유경 외(2013).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견해는 〈표 2-3-3〉에 제시되어 있다. 이상적인 자녀양육방식으로 자녀의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잘못이 있을 때는 엄격한 부모라는 응답이 7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모든 것을 자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부모가 17.5%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자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하는 의견이 많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자녀에게 규칙을 제시하고 지키기를 요구하는 의견과 자녀의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잘못이 있을 때 엄격한 부모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특히 자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하는 의견은 대체로 고연령층에서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2-3-3〉 이상적인 자녀양육방식

(단위 : %, 명)

구 분	자녀에게 규칙을 제시하면서 지키기를 요구하는 부모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며 자녀를 통제하는 부모	자녀의 자유 의사에 맡기지만 잘못이 있을 때는 엄격한 부모	모든 것을 자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 지게 하는 부모	기타	계(수)	
전 체	3.5	0.5	78.4	17.5	0.1	100.0(1,000)	
성별	남성	2.4	0.2	78.0	19.5	0.0	100.0 (508)
	여성	4.7	0.8	78.9	15.4	0.2	100.0 (492)
연령별	29세 이하	3.1	0.0	83.7	13.3	0.0	100.0 (196)
	30~39세	2.4	0.0	78.6	19.0	0.0	100.0 (210)
	40~49세	3.7	0.0	77.4	18.5	0.4	100.0 (243)
	50~59세	5.0	1.8	76.5	16.7	0.0	100.0 (221)
	60~69세	1.8	0.0	73.7	24.6	0.0	100.0 (130)

자료 : 김유경 외(2014).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는 과거보다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부모의 모습에 대해 높은 견해를 보여서 민주적·합리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표 2-3-4〉에서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양육 책임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양육 책임의 범위로 2009년에는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4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가 23.1%로 많았으며,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12.2%,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9.6%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2년에는 대학 졸업까지가 49.6%,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는 20.4%,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와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각각 15.7%와 8.9%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변화는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의 상한선으로 자녀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동일하였고,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는 다소 증가한 데 비해,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는 감소하여 자녀양육 책임의 상한선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최근 만혼화 및 결혼기피 현상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표 2-3-4〉 자녀양육책임의 범위(2009년, 2012년)

(단위 : %, 명)

구 분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언제까지 라도	기타	생각해 보지 않음/ 모르겠음	계(수)
2009년	9.6	49.6	12.2	23.1	5.0	0.1	0.4	100.0 (9,075)
2012년	8.9	49.6	15.7	20.4	4.6	-	0.8	100.0(10,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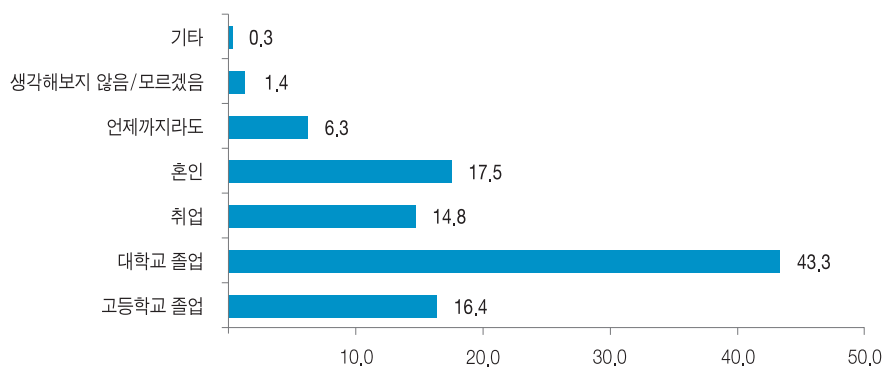
자료 : 1)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전화조사결과는 2012년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대학졸업이 43.3%, 혼인은 17.5%, 취업과 고등학교 졸업은 14.8%와 16.4%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2012년에 비해 자녀양육 책임 범위로 대학 졸업, 취업 및 혼인할 때까지는 다소 감소한 데 비해 ‘고등학교 졸업’과 ‘언제까지라도’가 증가하여 자녀양육 책임 상한선이 점차 줄어드는 특성을 보였으나 ‘언제까지라도’라는 책임이 소폭 증가하여 최근 성인자녀의 부양에 대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2-3-1]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견해

(단위 : %)



주 : 분석대상은 19 ~ 69세 일반국민 1,000명임.

자료 : 김유경 외(2014).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부모와 청소년 자녀관계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및 대화시간 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부모님이 청소년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자, 그리고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은 <표 2-3-5>에 제시되었다. 2011년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중 저녁식사가 90.3%로 대부분 청소년이 해당되었으며, 영화, 운동, 외식, 여행 등을 포함한 여가활동은 78.1% 정도로 청소년의 4/5의 분포를 보였다. 부모님과의 대화활동은 48.2~72.1%로 다른 활동에 비해 가장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2014년에도 저녁식사가 90.0%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어서 여가활동이 80.4%로 많았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39.9~74.6%로 대화 주제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다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전반적으로 2011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년 간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의 변화는 저녁식사는 다소 감소한 데 비해, 여가활동과 대화는 소폭으로 증가하여 부모와 자녀 간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3-5>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단위 : %, 명)

구 분		거의 안함	월 1~3회	주 1~3회	주 4회 이상	매일	해당 없음	계(수)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2011년	34.3	32.8	18.2	4.8	8.0	1.9	100.0(3,492)
	2014년	34.7	31.2	18.7	5.5	9.6	0.2	100.0(3,000)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2011년	13.9	23.7	24.1	8.7	15.6	14.0	100.0(3,492)
	2014년	13.6	23.8	23.0	8.8	19.0	11.8	100.0(3,000)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2011년	31.2	31.6	22.4	7.1	6.4	1.3	100.0(3,492)
	2014년	29.8	30.0	24.4	6.8	8.6	0.3	100.0(3,000)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	2011년	49.1	27.7	14.2	3.3	3.0	2.6	100.0(3,492)
	2014년	59.8	24.7	9.4	2.4	3.4	0.4	100.0(3,000)
여가활동(영화, 운동, 외식, 여행 등)	2011년	20.9	43.4	22.6	6.7	5.4	1.1	100.0(3,492)
	2014년	19.4	39.1	24.8	9.2	7.3	0.3	100.0(3,000)
저녁식사	2011년	9.0	14.5	27.0	15.4	33.4	0.7	100.0(3,492)
	2014년	9.7	15.4	21.9	15.2	37.5	0.3	100.0(3,000)

주 : 해당 없음은 부모님이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계시지 않는 경우, 조부모 등과 사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 1)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2)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2014년 조사를 중심으로 활동유형별 빈도를 보면, 부모님과 대화활동은 월 1~3회가 23.8~31.2%로 1/3 미만이었으며, 주 1회 이상은 11.8~31.8%로 주제별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고민 및 학교생활, 그리고 책·TV·영화에 대한 대화는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대화는 비율이 낮았다. 또한, 대화를 매일 한다는 비율은 3.4~19.0%로 높지 않았다. 부모님과 여가활동은 월 1~3회가 39.1%로 2/5에 근접하며, 주 1회 이상은 34.0%로 1/3 정도였으며, 매일 한다는 7.3%로 미미하였다. 부모님과 저녁식사활동은 월 1~3회가 15.4%로 비율이 낮았으며, 주 1회 이상과 매일 한다는 각 37% 정도로 1/3 이상이었다. 빈도는 저녁식사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많은 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활동, 여가활동 순으로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부모님 관점에서 최근 1년 간 청소년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유형별 비율을 보면 <표 2-3-6>과 같다. 2011년에는 외식이 9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쇼핑 86.8%, 운동 및 나들이 79.0%, 여행 70.1%, 영화 및 공연관람이 69.6%,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관람이 41.6% 순으로 많았다. 2014년에도 외식이 96.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쇼핑(85.9%), 영화 및 공연관람(80.2%), 운동 및 나들이(79.0%), 여행(74.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관람(41.9%) 순으로 나타나서 2011년과 차이를 보였다. 3년 간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함께한 여가활동 중 외식과 영화 및 공연 관람, 그리고 여행은 다소 증가한 데 비해, 쇼핑은 다소 감소하였고, 운동 및 나들이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관람은 비슷한 비율을 보여서 부모님과 여가활동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1년 간 여가활동의 평균횟수를 보면 2011년에 2.8~16.7회로 외식 평균횟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운동 및 나들이, 쇼핑, 영화 및 공연관람, 여행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2014년에는 2.9~17.7회로 여가활동별 빈도는 2011년과 유사하였다.

<표 2-3-6>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단위 : %, (명),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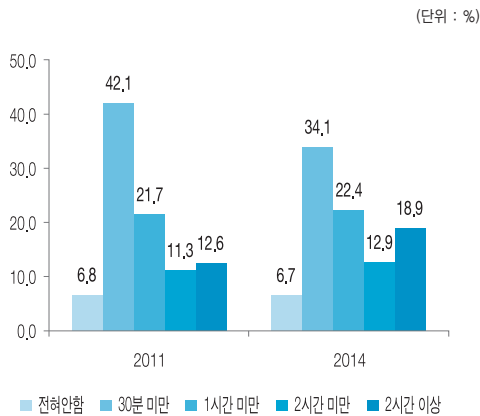
구 분	2011년			2014년		
	참여비율	평균횟수	(분석대상수)	참여비율	평균횟수	(분석대상수)
영화 및 공연 관람	69.6	5.1	(2,200)	80.2	6.3	(2,000)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	41.6	2.8	(2,200)	41.9	3.2	(2,000)
운동 및 나들이	79.0	12.9	(2,200)	79.0	12.1	(2,000)
외식	95.7	16.7	(2,200)	96.0	19.8	(2,000)
쇼핑	86.8	12.0	(2,200)	85.9	11.4	(2,000)
여행	70.1	3.6	(2,200)	74.3	4.2	(2,000)

자료 : 1)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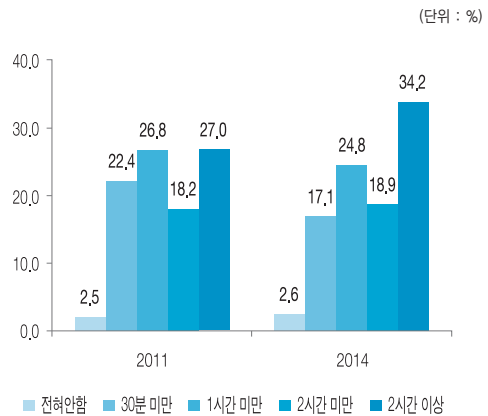
2)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부모님과의 대화여부 및 1일 평균 대화시간을 보면, 먼저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와 대화를 하는 비율은 2011년에는 87.7%에서 2014년에는 88.3%로 0.6%p 증가하였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은 동 기간 94.4%에서 95.0%로, 아버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아버지는 2011년 1시간 미만은 63.8%, 1시간 이상은 23.9%이었고, 2014년에는 각각 56.5%와 31.8%로 2011년에 비해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은 감소하고 1시간 이상은 증가하여 3년 간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하는 비율과 대화시간 양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는 2011년 1시간 미만은 49.2%, 1시간 이상은 45.2%이었고, 2014년에는 각각 41.9%와 53.1%로 3년 간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시간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2-3-2] 주중 아버지와와의 대화시간(1일 평균)



[그림 2-3-3] 주중 어머니와의 대화시간(1일 평균)



자료 : 1)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2)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그림 2-3-2]와 [그림 2-3-3]에서 2014년 조사를 중심으로 자녀의 연령별로 부모님과의 대화 여부 및 1일 평균 대화시간을 보면, 만 9~12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93.9%로 전체보다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3.2%로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이 54.2%, 1시간 이상은 39.7%로 전체보다 1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만 13~24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87.0%,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7.6%로 대화하는 비율은 전체 및 만 9~12세 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이 57.1%, 1시간 이상이 29.9%로 1시간 이상은 전체 및 만 9~12세 보다 낮았다. 이는 높은 연령대 청소년의 경우 낮은 연령대보다 아버지와와의 대화 비율과 1일 평균대화시간이 적음을 보여준다.

한편, 만 9~12세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이 97.0%로 전체보다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1.2%로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이 33.4%, 1시간 이상은 63.6%로 전체보다 1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만 13~24세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이 94.6%,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2.9%로 대화하는 비율은 전체 및 만 9~12세 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이 43.9%, 1시간 이상이 50.7%로 1시간 이상은 전체 및 만 9~12세 보다 낮았다. 이는 높은 연령대 청소년의 경우 낮은 연령대보다 어머니와의 대화비율과 1일 평균 대화시간도 적어서 아버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2-3-7〉 부모님과 대화시간(1일 평균)

(단위 : %, 명)

구 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계(수)
아버지	전체	6.7	34.1	22.4	12.9	18.9	100.0(3,000)
	만 9~12세	3.2	31.9	22.3	14.0	25.7	100.0 (867)
	만 13~24세	7.6	34.6	22.5	12.6	17.3	100.0(2,133)
어머니	전체	2.6	17.1	24.8	18.9	34.2	100.0(3,000)
	만 9~12세	1.2	12.9	20.5	17.3	46.3	100.0 (867)
	만 13~24세	2.9	18.1	25.8	19.3	31.4	100.0(2,133)

주 : 해당 없음은 부모님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계시지 않는 경우, 조부모 등과 사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에서 부모와의 질적인 관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2010년 청소년의 상담대상은 친구 동료가 51.1%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고, 다음은 부모, 스스로 해결, 형제자매 순으로 많았다. 2012년과 2014년에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2014년은 2010년에 비해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으로 친구 동료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신, 부모에게 상담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증가하여 청소년 자녀 중 1/4 정도는 부모와 어느 정도 신뢰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3-8〉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

(단위 : %, 명)

구 분	부 모	형제자매	친구 동료	스스로 해결	기 타	계
2010년	20.7	6.2	51.1	16.9	5.1	100.0
2012년	24.0	5.2	44.5	21.9	4.5	100.0
2014년	26.1	5.5	46.2	17.6	4.7	100.0

주 : 기타에는 스승, 선·후배 포함.

자료 : 통계청(2010, 2012, 2014), 사회조사결과.

〈표 2-3-9〉에서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정생활 만족도란 양육자(또는 부모님)와의 관계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2011년 전체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89.4%, (전혀)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10.6%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8.4배 높았다. 2014년에는 각각 90.8%와 9.2%로 3년 간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1.4%p 증가하였다. 청소년 연령별로는 만 9~12세는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94.5%, (전혀)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5.4%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약 18배 높은 데 비해, 만 13~24세는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89.9%, (전혀)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10.1%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약 9배 높았다. 가정생활 만족도는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높아서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표 2-3-9〉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 명)

구 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계(수)
2011년	1.5	9.1	60.3	29.1	100.0 (3,492)
2014년	1.1	8.1	54.0	36.8	100.0 (3,000)
만 9~12세	0.3	5.1	45.1	49.4	100.0 (867)
만 13~24세	1.3	8.8	56.1	33.8	100.0 (2,133)

자료 : 1)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2)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정부는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해 UN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권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권리침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권리보호 전담기구인 청소년 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권리교육,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을 우수한 역량을 지닌 사회구성원이자 인류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UN이나 EU 등 국제사회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을 확립하기 위해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해왔다. 청소년 참여기구는 대표적으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다. 2015년 12월 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총 189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305개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현재 251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제안한 정책과제 중 88.7%가 청소년 정책에 수용되었다. 이 외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 주요 행사로는 청소년의 달 기념식,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성년의 날, 청소년 지도자대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大賞) 등이 있다.

제3부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제 1 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991년 우리나라가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이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협약에 명시된 차별금지 원칙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확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도입,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운영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8~2002년)과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기본계획(2003~2007년)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참여’가 주요 정책이념이 되는 정책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정책 참여기구가 만들어지고 청소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의 정비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기본 생활보장은 물론 권리·참여, 안전·보호, 교육 및 여가보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2 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가. UN 아동권리협약

국제사회는 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1989년 11월 20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에 동 협약에 가입하였다. 협약에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 사회, 가정 모두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주며 아동의 인격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가입 후 2년 내에 이행상황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는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과 2000년에 1차와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1996년과 2003년에 UN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심의받았다. 이후 3차 국가보고서는 2004년에 제출되어야 했으나,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자체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형태로 2008년 12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2008년 12월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가 제출되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에 실시된 2차 보고서 심의에서 「가정폭력처벌특별법」 제정(1997년), 「청소년 보호법」 제정(200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2001년) 등 아동권리의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1차 보고서 심의(1996년)에서 지적된 권고 사항의 이행 미흡, 상설 아동권리조정기구의 미설립, 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 철회노력 부족,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족, 아동권리협약의 교육홍보 미흡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정부는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수준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권리 침해사례의 실질적 조사와 아동권리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를 두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전문가, 법조, 의료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브즈퍼슨 21명과 옴브즈키드 10명을 위촉

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교육 교재 개발, 교육 커리큘럼 신설, 교육 인력풀 확충 등을 추진하고, 청소년특별회의 및 아동 총회 개최, 아동권리주간 운영 등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44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 2007년 민법을 개정하여 혼인 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조정하였고, 협약 비준 당시 유효하였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철회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2년 UN 총회에서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2개의 선택의정서인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그리고 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2007년 3월 9일에 제출하고, 2008년 5월 23일 심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에서 현역병 지원 입대 연령을 17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병역법」 개정(2004년)과 18세 미만의 아동이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한 공군규정을 개정(2005년)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해외 평화유지 인력과 망명·난민아동 관련 집단에 대한 협약 홍보 및 교육, 소형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등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동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에서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 보호 관련 법률의 제·개정, 혼인가능 연령을 18세로 높인 민법 개정,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 추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립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선택 의정서의 조항과 국내 법률의 조화를 위한 조치, 경찰·검사·판사·의료진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리교육 교재 및 과정 개발, 입양허가제 유보조항 철회 및 헤이그협약 비준, 아동상담전화 통합 등을 권고하였다.

2008년 12월에 제출한 이번 보고서에는 관계부처와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아동관련 학계 및 단체, 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통해 내용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있을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2003년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및 협약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상황과 그간의 노력을 평가받고, 향후 아동·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 같은 국가보고서는 다양한 매체에 공개하여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1) 추진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수준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 아동·청소년의 권리 수준은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주로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정, 학교 및 근로 현장 등에서 권리 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지원기관이 미흡한 실정이고,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2008년 7월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 하였으며, 2011년 5월 중앙 차원의 청소년 권리보호 전담기구로서 청소년 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권리교육, 토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요기능

청소년 희망센터는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사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권리증진 교육,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의 권리상황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청소년 권리모니터링 활동,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의 권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 청소년권리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청소년 권리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 희망센터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 위원회는 청소년 권리 관련 학계, 기관·단체, 실무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과제에 대한 정기적 논의, 운영 계획 검토 등 정기적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체계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온라인 매체 활용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장애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에 관한 UN 총회 특별세션」과 「UN 세계청소년포럼」 그리고 「UN 세계청소년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리스본 선언 등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 사회참여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를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2년 6월 뉴욕에서 각 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홍보하고 격려하고자 UN에서 시상하고 있는 ‘공공행정상(UN PSA: Public Service Awards)’ 정책결정 참여부문에서 한국의 청소년참여기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정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체계화·활성화되는 가운데, 기관·단체·학계 등 현장의 지지와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청소년정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2012년 2월 ‘청소년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근거법령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였다. 「청소년 기본법」으로의 이관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이 복지의 차원이 아닌, 모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청소년자치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청소년 기본법」의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임시 회의를 통한 청소년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 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은 개인적으로 청소년 자신의 잠재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 으로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2) 운영 및 활동 현황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총 189개(2015년 12월 31일 현재)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별 운영규모는 10~30명이며,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된 3,559명의 청소년이 2015년 현재 활동 중에 있다.

2015년 현재 운영예산으로 17개 시·도에는 매년 10백만원(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시·군·구에는 2백 8십만원(국비 1백 40만원, 지방비 1백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1〉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단위 : 개)

설치대상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개소수	163	175	175	175	186	189	189	189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표 3-2-2〉 2015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단위 : 개)

계	여성 가족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9	1	6	3	3	10	2	2	6	1	32	19	5	16	15	23	24	20	1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나. 청소년운영위원회

(1) 목적 및 기능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998년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의 정책기조가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0년도부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을 사업 지침에 담아내어 권장함으로써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4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급속도로 확대 설치되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 운영전반에 참여함은 물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청소년 대표로서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현황 및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 약 4,5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 차원의 전담 지도자 배치, 전용공간 확보, 수련시설 평가지표 포함 제안의견 반영 등의 노력, 참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 의욕과 시설 모니터 및 홍보 등 다양한 활성화 제안을 통하여 수련시설별로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2012년 8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013년 8월 서울올림픽파크텔, 2014년 9월 부산아르피나뉴스호텔, 2015년 국제청소년센터)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참여 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13부터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발(2013년 5개소, 2014년 5개소, 2015년 5개소)하여 그 결과와 성과를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운영예산은 운영위원회별 매년 2백만원(국비 1백만원, 지방비 1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지원하고 있다.

〈표 3-2-3〉 2015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5	44	14	9	12	6	10	7	1	62	32	15	13	16	14	13	15	22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다. 청소년특별회의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의 청소년위원들이 매년 하나의 정책 주제를 선정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해 가는 전국 규모의 참여기구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의 청소년 대표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활동, 복지, 보호를 위해 선정한 지역 예비 주제를 바탕으로 출범식을 통해 당해 연도 최종 정책 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정책주제에 따라 지역별로 청소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연구를 통해 세부정책과제를 선정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제안한다.

[그림 3-2-1] 청소년특별회의 추진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 현황 및 운영

2015년에는 청소년 251명 및 전문가 등 총 270여 명이 참여하여 5~10월까지 지역회의별 논의 활동을 거쳐 선정된 3개 영역 23개의 정책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388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한 결과 88.7%인 344건의 정책과제가 정부 청소년 정책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주제 및 정책과제 제안 현황

연도	주제 및 과제	비고
2004년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13개 과제 제안)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 1회 개최 정례화	
2005년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5과제 제안	31개 수용 88.6%
2006년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5개 영역 37개 과제 제안	33개 수용 89.2%
2007년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청소년자원봉사·체험활동의 다양화 등 18개 과제 제안	15개 수용 83.3%
2008년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29개 수용 82.9%
2009년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 20개 과제 제안	14개 수용 70.0%
2010년	○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3개 영역 53개 과제 제안	49개 수용 92.4%
2011년	○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 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년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년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4년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특히, 청소년특별회의는 온라인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청소년특별회의 페이지(www.facebook.com/withyouth)를 개설·운영하는 등 청소년정책의 수요자이자 중심인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10~20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라.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 구성원 관계 개선, 지역사회 개발·개선, 청소년권의 개선, 친화적 환경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제안받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0년 공모를 통해 청소년관련 기관을 지원하던 ‘참여공모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20개 내외의 팀을 지원하던 규모를 확대하여 2011년에는 공모를 통하여 74개 팀, 2012년에는 60개 팀, 2013년에는 65개 팀, 2014년에는 70개 팀의 활동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공모를 통하여 70개 팀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활발히 활동하였다.

마. 청소년증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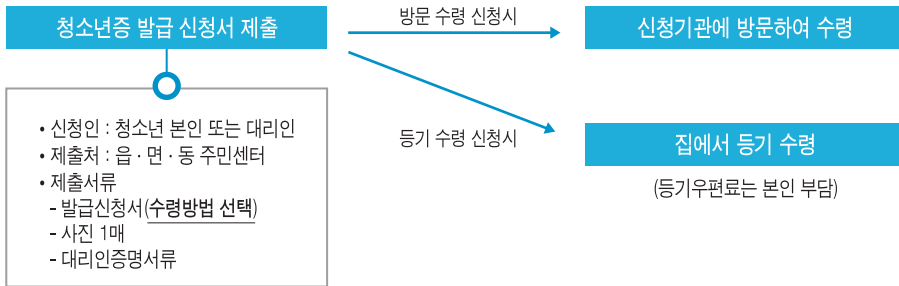
청소년증은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을 통해 수송시설,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혜택을 제공 받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2004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에게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이 발급한다.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와 함께 사진 1매(반명함판)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분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기간은 14일이다. 2008년에는 이용 청소년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수 및 배송 직후에 발급 진행 상황을 SMS로 안내해 주었다. 또한, 2011년에는 재발급 신청방법을 개선하여 청소년증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신청기관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2014년에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증을 등기우편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 방법을 개선하였고,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또는 일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증은 위의 경제적인 혜택 외에도 예금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대학입시·검정고시·각종 경시대회에서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3-2-2] 청소년증 발급 절차



<표 3-2-5>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예시)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 지하철 20%, 여객선 10%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궁 · 능 : 50%	• 공 원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등	
*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혜택은 다를 수 있음.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증의 연도별 발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6〉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03년 (시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348,498	515	11,848	14,120	12,478	24,455	30,265	33,656	36,263	40,908	43,875	49,452	50,663
서울	81,637	436	1,515	1,781	4,355	6,975	8,251	8,480	8,954	9,969	10,644	10,564	9,713
부산	23,019	-	381	672	971	1,724	2,198	2,492	2,401	2,866	2,952	3,199	3,163
대구	19,018	-	181	214	580	1,754	1,905	2,212	2,072	2,298	2,235	2,564	3,003
인천	22,367	-	751	353	640	1,676	2,464	2,216	2,527	2,650	2,940	3,010	3,140
광주	6,891	-	282	61	110	318	416	509	576	811	1,034	1,220	1,554
대전	8,889	66	103	287	304	607	853	917	945	884	1,042	1,439	1,442
울산	8,843	-	86	105	220	640	844	897	952	1,060	1,197	1,594	1,248
세종	641	-	-	-	-	-	-	-	-	-	36	504	101
경기	89,436	-	4,381	1,966	2,894	6,243	7,477	8,863	9,897	11,023	11,347	12,590	12,755
강원	9,052	13	148	85	341	428	566	835	908	1,071	1,180	1,769	1,708
충북	9,873	-	648	995	350	479	614	845	913	1,131	1,220	1,366	1,312
충남	14,087	-	311	4,275	368	855	720	765	889	1,204	1,264	1,736	1,700
전북	12,386	-	1,266	450	164	498	1,027	1,066	1,226	1,436	1,524	1,777	1,952
전남	6,818	-	244	175	141	390	499	616	625	721	910	1,132	1,365
경북	14,486	-	521	1,597	486	810	1,048	1,229	1,369	1,447	1,682	1,955	2,342
경남	18,255	-	983	677	418	893	1,165	1,440	1,738	2,014	2,356	2,921	3,650
제주	2,800	-	47	427	136	165	218	274	271	323	312	112	515

주 : 한국조폐공사 개인정보보호에 의거 성별 표시 불가.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제 3 장

청소년 주요 행사

1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으며(청소년 기본법 제16조),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달 주제와 관련된 행사를 5월 중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에 기여한 청소년과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유공자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표 3-3-1〉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 현황

(단위 : 명)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196	2	3	7	16	168

자료 : 여성가족부(2015).

가. 청소년의 달 기념식

청소년의 달 기념식은 청소년의 달 의미를 공유하고 청소년정책 발전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015년은 더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막식(5.21.)에 통합하여 추진하였다.

〈표 3-3-2〉 청소년의 달 기념식 주요 행사내용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청소년의 달 기념식	5.21.(목), 구미코	-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 - 청소년 홍보대사 위촉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미래 청소년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나.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대상 박람회로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경향과 방향을 모색하는 국내 유일의 범 청소년 축제의 장이다. 「나는 국가 대표다. 대한민국의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경북 구미코에서 열린 박람회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등에게 다양한 체험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숨은 재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미니토크쇼 “가족을 부탁해”, 청소년 랩스타 오디션, SNS 이모티콘 및 박람회 로고송 공모전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청소년 및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주제별 부스를 선정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체험, 소통을 위한 공간(213개 부스)을 마련,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공유, 창출,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154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중앙부처 후원에서도 18개 기관이 동참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 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다.

2005년부터 개최된 박람회는 2008년부터 행사 장소를 서울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단위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광주, 2009년에는 대구, 2010년에는 부산, 2011년에는 대전, 2012년에는 서울, 2013년에는 인천, 2014년에는 경기도, 2015년에는 경북에서 개최하였다.

〈표 3-3-3〉 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일시	2015년 5월 21일(목)~5월 23일(토), 3일간	
장소	경북 구미코	
주최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구미시	
주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 구성	구분	세부내용
	상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미래마당 : 광복 70주년을 맞아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나라 사랑체험 프로그램 - 진로체험마당 :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설정을 위한 직업 체험 및 멘토링 콘텐츠로 구성된 프로그램 - 활동참여마당 : 창의적 체험을 통한 청소년의 능력개발 및 인식개선 콘텐츠로 구성된 프로그램 - 창조경제마당 : 청소년활동과 접목이 가능한 정보·인터넷 등 미래산업체험 프로그램 - 안전체험마당 :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체험 프로그램
	사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예선전(On Line) -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SNS 이모티콘 공모전(On Line) -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로고송 공모전(On Line) - 100인의 청소년 미소천사 사진 공모전(On Line)
	특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부모 특강,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 청소년활동 마켓(징검다리 프로젝트) - 청소년 랩스타 오디션, 미니 토크쇼(가족을 부탁해) - 100인의 청소년 미소천사 사진 전시회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표 3-3-4〉 역대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현황

구분	기간	장소	주제	주최	주관	후원
제1회	2005. 5. 21. ~ 5. 22.	서울무역전시장 (서울)	"청소년,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제2회	2006. 5. 19. ~ 5. 21.	서울무역전시장 (서울)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가청소년 위원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제3회	2007. 6. 1. ~ 6. 3.	코엑스 컨벤션홀 (서울)	"청소년 미래비전"	국가청소년 위원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산업자원부, 노동부, KTF, LG전자, 내셔널지오그래픽, 알파
제4회	2008. 5. 29. ~ 6. 1.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희망/기회/성취의 빛"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제5회	2009. 5. 28. ~ 5. 31.	EXCO 전시 컨벤션센터(대구)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디자인하다"	보건복지가족부, 대구광역시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제6회	2010. 5. 27. ~ 5. 31.	부산 BEXCO (부산)	"청소년의 꿈을 찾아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아!"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교육청
제7회	2011. 5. 26. ~ 5. 28.	대전 컨벤션센터 (대전)	"웃어라, 청소년! 빛나라, 내일야!"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제8회	2012. 5. 24. ~ 5. 26.	SETEC (서울)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제9회	2013. 5. 23. ~ 5. 25.	송도컨벤시아 (인천)	"건강한 청소년, 함께 하는 열린 세상"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에너지관리공단
제10회	2014. 10. 23. ~ 10. 25.	KINTEX (경기)	"꿈을 만나 행복을 만들다"	여성가족부, 경기도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1회	2015. 5. 21 ~ 5. 23.	구미코 (경북)	"나는 국가대표다.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다. 성년의 날

‘성년의 날’은 청소년이 만 19세가 되는 해에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행사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관례(冠禮)란 성인식으로, 특히 양반사회에서 남자는 상투를 틀어 올리고 여자는 계례(笄禮)라 하여 쪽을 지어 비녀를 꽂는 의식을 말한다. 하지만 현대의 성인식은 관례라는 전통의식이 없어지고 대신 1973년에 제정되어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400호)로 정하여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년을 맞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5년에는 5월 18일 성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은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1996년생)들이 참석하였으며, 성년다짐 발표, 특강, 축하공연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성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3-3-5〉 성년의 날 행사 현황

구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간	2009. 5. 18.	2011. 5. 16.	2012. 5. 21.	2013. 5. 20.	2014. 5. 18.~19.	2015. 5. 18.
장소	성균관 문묘 내 명륜당 뜰	하이서울 유스호텔	한국프레스센터	광화문 광장	국제청소년센터	하이서울 유스호텔
내용	- 기념식 - 전통 성년례 - 축하공연	- 30일간의 봉사활동 소개 - 주제 영상 상영 - 성년다짐 발표 - 특별강연(박혜경, 해비타트)	- 성년다짐 공모전 시상식 - 성년다짐 발표 및 서명식 - 특별강연(조벽 교수)	- 홍보대사 '주니엘' 팬 사인회 - 성년다짐 발표 및 서명식 - 성년축하 뮤지컬 - 멘토강연 (강남구 작가)	- 1박 2일 성년캠프 - 내 인생 설계하기 -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 세로토닌 드림스쿨 - 특별강연 (이시형 박사)	- 성년을 맞는 청소년이 말하다 - 성년다짐 발표 - 열정을 깨워라 (퍼포먼스) - 떡 케이크 커팅식 - 열정 특강 및 공연
주최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인원	150명	200명	100명	100명	84명	100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 청소년지도자대회

‘청소년지도자대회’는 청소년정책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정보 및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교류와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5년 처음 실시 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기관 통합으로 행사명을 “청소년지도자대회”에서 아동지도자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지도자대회”로 통합 개최하였으나, 2010년 여성가족부로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면서 다시 ‘청소년지도자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 중에 있다. 2011년 9월에는 “청소년의 꿈! 지도자의 열정! 희망찬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청소년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토론회,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고, 특히, 공모를 통하여 청소년지도자대회 CI를 제작·선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꿈과 끼! 청소년지도자가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9월 24일에 개최하였다.

〈표 3-3-6〉 유공자 시상 현황

(단위 : 명)

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13	1	2	10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표 3-3-7〉 역대 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구분	기간	장소	주관	참여인원	주제	주요 프로그램
제1회	2005. 9. 26. ~ 27.	올림픽파크텔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1,000여 명	청소년 지도자의 삶과 도전 그리고 희망	기념식, 위원장과 대화, 콜로키움, 청소년 지도자의 밤 등
제2회	2006. 12. 8. ~ 9.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729명	청소년지도자! 희망을 이끄는 사람들	개회식, 배워봅시다, 청소년지도자의 밤 및 교류회, 한마음 체육대회
제3회	2007. 9. 16. ~ 17.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협회 등 4개 협의기구 공동주관)	1,500명	꿈과 희망을 여는 사람들, 우리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의 날 전야제(축하공연, 기념식, 지도자 경연대회), 교류회, 청소년지도자 체육대회(대동제)
제4회	2008. 12. 19. ~ 20.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아동단체협의회, 아동복지협회,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공동주관	1,000여 명	아동·청소년 지도자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소통의 장(단합, 민속 공연), 만남의 장(지도자 비전 공유), 화합의 장(지도자 친선 교류), 도약의 장(명랑 운동회 등)
제5회	2009. 8. 28. ~ 29.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아동단체협의회, 아동복지협회,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공동주관	745명	꿈+미래, "행복 공감 지도자대회"	주제발표 및 토론, 아동·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발전방안, 기념식, 우수 운영사례 경진 대회, 단합대회
제6회	2010. 10. 19.	올림픽파크텔	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여 명	만남 + 소통 + 공감 = 청소년지도자의 행복	창의적 체험활동 발표,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 제4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소개, 기념식, 올해의 지도자상 수상, 결의문 낭독 등
제7회	2011. 9. 27.	서울교육 문화회관	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1,000명	청소년의 꿈 지도자의 열정! 희망찬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에 대한 주제강연, 기념식(주제영상, 비전선언, 지도자의 다짐, CI 선포), 열린 토론회, 상호교류의 밤 등
제8회	2012. 9. 21. ~ 22.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수련 시설협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명	꿈의 날개! 열정의 비상! 함께 만드는 희망 대한민국!	우수사례 발표, 주제강연, 기념식(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주제·축하 영상) 지도자 상호교류의 장, 한마음 어울림마당 등
제9회	2013. 9. 27. ~ 28.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수련 시설협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명	청소년의 꿈과 행복!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힐링페스티벌, 정책강연, 기념식(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주제 축하 영상), 축하공연, 화합 및 교류의 장, 한마음 어울림마당 등
제10회	2014. 9. 24.	AW컨벤션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명	꿈과 희망을 이끄는 청소년지도자들의 비상(飛上)	소통의 장(포토존, 기 수상자와의 만남, 정책강연), 격려의 장(올해의 청소년지도자상 시상, 기념 퍼포먼스, 구조제창), 화합의 장 등
제11회	2015. 9. 24	AW컨벤션센터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명	대한민국 청소년의 꿈과 개! 청소년지도자가 함께 합니다.	식전행사(청소년활동 전시 토크 콘서트 등), 본행사(오프닝공연, 주제 영상 상영, 시상식, 축하공연 등), 식후행사(특강, 교류 및 화합의 시간, 만찬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15).

3 청소년푸른성장대상(大賞)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개인 단체 및 바른 성장으로 또래들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5년 제11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은 장기간 공헌한 후보자 발굴을 위해 개인 및 단체의 경우 5년, 청소년 및 동아리의 경우는 1년 6개월의 수공기간을 제한하였다.

추천 대상은 성인 부문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저한 업적 또는 공적을 5년 이상 쌓은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청소년 부문 역시 1년 6월 이상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청소년 개인 및 동아리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개인 및 단체 수상자는 각 10백만 원을 수여받게 되고, 청소년 부문의 개인 수상자는 50만원, 동아리 수상자는 1백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후보자 추천기회를 확대하여 숨은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청소년 분야의 활동이 있는 기관 및 단체 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표 3-3-8〉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역대 수상자 현황

구분	주최	주관	시상부문	상금	위원장	시상식		
						일자	장소	참석자 수
'08년	보건복지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4개 부문 (활동, 복지, 보호, 참여·인권)	개인 10백만원, 단체 20백만원	이한동 (대한민국 약속재단총재)	12. 26.(금) 16:00	대한상공 회의소	250여 명
'09년	보건복지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5개 부문 (활동, 복지, 정책, 학술, 미디어)	각 10백만원	박완서 (서울대 명예문학박사)	11. 30.(월) 16:00	대한상공 회의소	250여 명
'10년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4개 부문 (활동, 복지, 보호, 청소년)	개인 10백만원, 단체 15백만원, 청소년 상품권(20만원), 동아리 1백만원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2. 3.(금) 15: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11년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원, 단체 15백만원, 청소년 상품권(50만원), 동아리 1백만원	유인촌 (극단 유 시어터 대표)	11. 25.(금) 15: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12년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원, 단체 10백만원, 청소년 상품권(50만원), 동아리 1백만원	최불암 (어린이재단 전국 후원회 회장)	11. 16.(금) 14: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13년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청소년푸른성장 대상위원회	-	개인 10백만원, 단체 10백만원, 청소년 상품권(50만원), 동아리 1백만원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	12. 6.(금) 14:00	MBC 드림센터 공개홀	250여 명
'14년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청소년푸른성장 대상위원회	-	개인 10백만원, 단체 10백만원, 청소년 50만원, 동아리 1백만원	나승일 (서울대 교수)	12. 18.(목) 14:00	MBC 상암동 공개홀	250여 명
'15년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청소년푸른성장 대상위원회	-	개인 10백만원, 단체 10백만원, 청소년 50만원, 동아리 1백만원	나승일 (서울대 교수)	12. 3.(목) 14:00	MBC 상암동 공개홀	250여 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청소년의 국제교류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는 청소년들의 여유 시간 활용과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진로 분야를 확대하고, 안전의식 및 사고대응능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이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의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현재까지 인증 신청한 수련 활동은 8,497건이며, 인증된 수련활동은 5,418건이다. 2015년에는 인증위원회의 구성과 안전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 2015. 2. 3.)에 신설되어 인증위원으로 안전전문가 2인, 법조인 1인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이외에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Korea)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국제금장총회를 유치하여 국내 참가자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4년까지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총 3,183,810명으로 집계되었다.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청소년 교류 활동의 경우, 2015년 12월까지 20개국 파견 238명, 초청 287명 등 총 525명의 교류를 시행하였다. 국제 청소년단체와 국내 청소년단체의 교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하는 국제교류·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제4부 청소년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제2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제 1 장

청소년활동 지원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는 학교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 전면시행(2013년),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2013년)에 따라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제반자원의 경제적인 활용 방향을 확립하여 청소년들이 진로, 역사·문화 예술, 가족·인성, 과학·환경, 모험개척, 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평가 및 환류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컨설팅 및 평가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최우수 기관으로 의왕청소년수련관 등 10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마천청소년수련관 등 1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특히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진로 분야를 확대하고, 안전의식 및 사고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분야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 분야 등이 추가되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중점 발굴하였다.

〈표 4-1-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단위 : 개, 천원)

활동영역	선정(수)	지원금액(천원)
① 진로	24	260,000
② 역사·문화예술	19	229,500
③ 가족·인성	9	89,000
④ 과학·환경	8	88,500
⑤ 모험개척	3	36,500
⑥ 봉사	8	67,200
⑦ 언어순화	4	35,000
⑧ 인증수련활동	5	24,800
⑨ 전년도 최우수 프로그램	10	109,500
합 계	90	940,000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라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 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입시 위주의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이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을 들 수 있다.

가.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동아리활동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특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및 각급 학교(초·중·고·대학교)의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해 우수청소년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1,460개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지원하였다.

〈표 4-1-2〉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동아리 지원 수(개수)	동아리 지원금액(천원)		
		계	국고(40%)	지방비(60%)
서울	300	300,000	120,000	180,000
부산	115	115,000	46,000	69,000
대구	75	75,000	30,000	45,000
인천	75	75,000	30,000	45,000
광주	55	55,000	22,000	33,000
대전	55	55,000	22,000	33,000
울산	35	35,000	14,000	21,000
세종	7	308,000	123,200	184,800
경기	308	45,000	18,000	27,000
강원	45]	45,000	18,000	27,000
충북	45	55,000	22,000	33,000
충남	55	55,000	22,000	33,000
전북	55	55,000	22,000	33,000
전남	55	75,000	30,000	45,000
경북	75	90,000	36,000	54,000
경남	90	15,000	6,000	9,000
제주	15	7,000	2,800	4,200
합계	1,460	1,460,000	584,000	876,000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나.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이 생활권 주변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표현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의 욕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40:60 매칭펀드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며, 2004년과 2005년에는 8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었다. 2006년부터 11개 시·도로 확대하고 5개 시도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36억원 규모(2007년)의 총사업비를 지원하였다. 2008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청소년 문화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로 특성화된 대한민국 10대 청소년 문화축제를 운영하였다.

2009년과 2010년도에는 16개 대표 어울림마당과 90개 시·군·구 어울림마당이 운영·지원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6개 대표 어울림마당과 110개 시·군·구 어울림마당이 운영·지원되었다.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어울림마당 지원 수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금액(천원)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계	국고(40%)	지방비(60%)
합 계	16	110	4,200,000	1,680,000	2,520,000
서 울	1	11	378,000	151,200	226,800
부 산	1	6	238,000	95,200	142,800
대 구	1	7	266,000	106,400	159,600
인 천	1	4	182,000	72,800	109,200
광 주	1	5	210,000	84,000	126,000
대 전	1	4	182,000	72,800	109,200
울 산	1	2	126,000	50,400	75,600
세 종	-	1	28,000	11,200	16,800
경 기	1	20	630,000	252,000	378,000
강 원	1	6	238,000	95,200	142,800
충 북	1	6	238,000	95,200	142,800
충 남	1	6	238,000	95,200	142,800
전 북	1	6	238,000	95,200	142,800
전 남	1	6	238,000	95,200	142,800
경 북	1	8	294,000	117,600	176,400
경 남	1	11	378,000	151,200	226,800
제 주	1	1	98,000	39,200	58,800

자료 : 여성가족부(2015).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가. 추진배경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청소년의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문화적 역량을 개발·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기반 확립과 학교 교육과 연계한 활동 지원의 확대 요구에 대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4년 2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인증으로 양질의 활동기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인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용성, 공공성, 안정성을 강조하며, 인증받은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진로 탐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인증제 추진 현황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2006년 3월에 시작하였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 15인을 위촉하고 인증심사원 192명을 선발하여, 5월 인증접수를 시작으로 79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였다.

2007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증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인증기준과 인증심사 절차의 간소화,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개발, 지방청소년활동 진흥센터와 업무의 효율적 연계 운영을 추진하였다. 인증심사원 91명을 추가 선발하여 283명의 인증심사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증심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인증제 운영규정과 인증심사원 운영규정을 통합·개정하여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인증받은 활동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 기획과 만족도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제도 홍보와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부모 참관단 32명을 시범·운영하였다.

2009년에는 제2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고, 인증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인증수련활동 참여기록을 등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교육정책과 인증제도와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소년관련 학과를 설치한 9개 대학과 대입 시 가산점 반영을 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학부모참관단(107명)을 운영하고 인증수련활동 참여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활동영역별 효과성 측정 연구를 통해 인증수련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0년에는 참여 청소년 확대를 위한 중·단기 제도개선을 수립하였으며, 6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입학 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MOU 체결 대학: 15개교). 인증심의 317건 중 250건이 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70건의 이행여부 확인을 실시하여 인증프로그램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에는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제도개선 연구와 함께 정부부처 주관 활동프로그램 인증이 추진되었으며 인증심사원 연수와 인증제 담당자 직무연수를 연계 운영하여 인증제 담당자의 역량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지표 추가 개발 연구(건강보건활동, 자기계발 활동 영역)를 통한 각 영역별 역량 강화와 2개 지방자치단체(도청, 교육청) 및 11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한 결과 2011년에는 인증수련활동 활동기록을 이용하여 대학교에 입학한 사례가 나타나 인증제가 내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는 인증심사원 41명을 추가 선발하여 전문심사원을 활용한 지역별 프로그램개발 워크숍 운영을 운영하고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련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을 직접 참여하고 홍보하는 청소년·학부모모니터단(216명)을 구성·운영하고 인증제 홍보 동영상 제작, SNS 개설, 웹메일 발송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행여부 자체 점검(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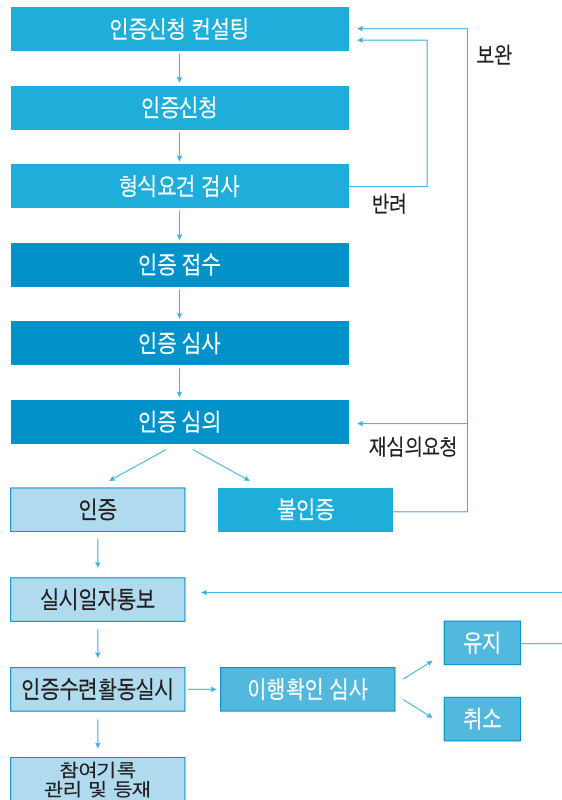
2013년에는 제3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국가제도로서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참여대상의 확대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운영 담당자교육이 시작되었고, 인증기준을 공통기준 14개에서 6개로 통합하여 인증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여 심사대상을 현실화하였으며 수시점검 도입, 변경항목 세분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개정(2014. 7. 2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모든 인증 신청 프로그램에는 안전에 관련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청소년활동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 등 제도 수혜자의 인지도 개선을 위하여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 인증제 설명회 교육을 정례화하고 다양한 인증제도 참여 대상자별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인증위원회의 구성과 안전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2015. 2. 3.) 시 신설되어 신규로 안전전문가 2인, 법조인 1인을 위촉하였다.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의무인증)에 대한 현장심사 및 이행확인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의 인증제 지원 및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상근심사원 20명을 선발하여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배치하였다.

[그림 4-1-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5).

다. 인증기준 및 인증수련활동 현황

수련활동 인증신청은 상시적으로 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접수된 청소년수련 활동은 1개 프로그램당 2명의 인증심사원에 의한 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하게 된다. 인증기준은 국내 청소년활동과 국제 청소년활동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인증기준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었다. 공통기준은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등 3가지 영역, 개별 기준은 숙박형과 이동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은 특별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그림 4-1-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 프로그램 :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체계를 마련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 지도력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자를 선정, 청소년 참여 인원 수 대비 지도자 배치, 안전고려활동에는 유자격자 등 배치
- 활동환경 :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활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과 설비, 사용여건, 보험 가입 등 계획을 철저히 수립

구 분		인증기준 구성	
영역 / 유형		기 준	확인요소
공통 기준	1. 활동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	5
		2. 프로그램 자원운영	
	2. 지도력	3. 지도자 전문성 확보계획	4
		4. 지도자 역할 및 배치	
	3. 활동환경	5.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4
		6. 안전관리 계획	
개별 기준	숙박형	1. 숙박관리 / 2. 안전관리인력확보 / 3. 영양관리자 자격	3
	이동형	1. 숙박관리 / 2. 안전관리인력확보 / 3. 영양관리자 자격 / 4. 휴식관리 / 5. 이동관리	5
특별기준(인증을 받아야하는 프로그램에 추가 적용)		4-2. 전문지도자의 배치 5-2. 공간과 설비의 법령준수	2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5).

〈표 4-1-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유형 구분

활동유형	내용
기본형	1일 3시간 이상 혹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2회기 이상에 걸쳐 일정시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활동
숙박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5).

2015년 8월 5,000호 인증을 달성하여, 현재까지 인증된 수련활동은 846개 기관 5,418건이며, 이중 10건은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통해 취소되고, 1,617건은 인증유효기간이 종료, 48건은 철회되어 2015년 12월까지 총 3,743건의 인증 수련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표 4-1-5〉 연도별 인증제 운영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인증신청	132	352	508	348	340	329	276	1,291	2,895	2,026	8,497
인증	79	284	443	255	266	242	212	783	1,553	1,301	5,418
유지	79	359	802	1,057	1,297	1,382	1,314	1,702	2,971	3,743	-
종료	-	-	-	-	52	191	339	231	277	527	1,617
철회	-	5	4	12	3	-	3	11	10	-	48
취소	4	-	-	-	-	-	-	1	3	2	10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5. 12.).

〈표 4-1-6〉 인증수련활동 기관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	2	4	1	1	1	5	1	2	2	19
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	20	175	275	143	177	121	89	128	219	188	1,535
청소년수련원	25	33	35	30	18	57	23	320	471	468	1,480
청소년문화의집	9	44	76	38	39	33	67	40	86	73	505
야영장, 유스호스텔	-	2	2	8	1	6	9	154	189	34	405
청소년단체	14	4	14	12	8	5	2	17	42	12	130
기타 공공기관	4	16	11	4	5	5	2	13	23	24	107
청소년이용시설	-	2	5	1	2	4	3	31	54	42	144
청소년보호 복지시설	2	6	19	14	9	3	-	6	10	4	73
학교/ 교육청	-	-	-	3	2	1	2	3	13	35	59
일반	5	-	2	1	4	6	10	70	444	419	961
소 계	79	284	443	255	266	242	212	783	1,553	1,301	5,418

자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5. 12.).



가. 추진배경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1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로 도입되어 2014년 7월부터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로 신고대상과 활동을 변경하여 시행 중이다.

신고제도를 통해 수련활동의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 운영 전반에 관한 안전을 점검하게 되고, 범죄 경력자 등 결격 사유 있는 지도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수련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 수리된 활동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www.youth.go.kr) 등에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학부모 등 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쉽게 수련활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활동 선택과 참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나.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 서류를 갖추어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4-1-7〉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구 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수리 주체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신고 주체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 감독을 받는 시설·기관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 단체)	
신고 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9~18세) ※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	
신고대상 활동범위	숙박형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비숙박형 중 일부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해당 활동)

자료 : 여성가족부(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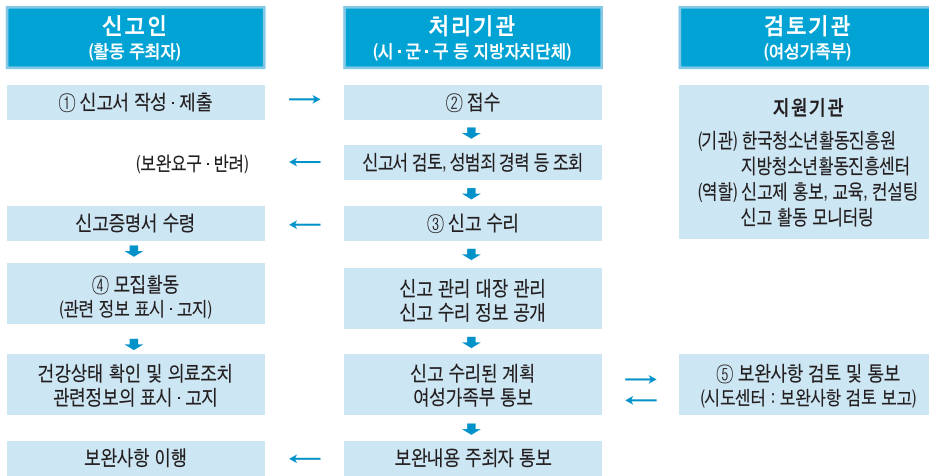
다. 신고 절차

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14일 전에 운영계획서,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세부내역서,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주최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 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시스템(www.youth.go.kr/singo.do)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처리기관에서 구비서류의 요건을 점검하고, 주최자 등의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 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요청하고, 보완되지 않은 경우 반려한다. 신고 수리 후 처리기관에서는 신고 수리된 계획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계획을 검토한 여성가족부는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기관에 보완 사항을 통보하며, 처리기관은 주최기관에 지적된 보완 사항을 통보한다.

활동 주최자는 신고 수리 사항 중 안전점검, 보험가입, 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모집활동 및 계약 시 인쇄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고지하여야 하고,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활동 실시 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활동 시작 3일 전까지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4-1-3] 신고 수리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라. 신고 현황

2015년 12월 말까지 신고 수리된 청소년수련활동은 경기도가 1,362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서울이 708건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순으로 신고된 수련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지역별 신고 수리 현황

(단위 : 건)

지 역	건 수	지 역	건 수
서울	708	강 원	429
부산	259	충 북	300
대구	95	충 남	515
인천	310	전 북	587
광주	67	전 남	253
대전	172	경 북	420
울산	60	경 남	683
세종	7	제주	115
경기	1,362		

자료 : 여성가족부(2015년 12월 말 기준).

〈표 4-1-9〉 시설 유형별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청소년수련관	1,551	청소년야영장	59
청소년수련원	2,951	유스호스텔	412
청소년문화의집	455	기타 영리법인, 단체 등	780
청소년특화시설	134		

자료 : 여성가족부(2015년 12월 말 기준).



가. 제도 현황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Korea, 이하 '포상제')는 1956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군인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포상제를 총괄하는 국제포상협회(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에는 국가운영기관(National Award Operator, 61개국)과 독립운영기관(Independent Award Center 70개국)이 속해 있으며, 유럽·지중해·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메리카 지역에 사무국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포상제는 비경쟁성, 평등성, 균형성, 성취지향성, 과정 중시성, 지속성 등의 10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참여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포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 14세부터 만 25세까지로, 만 25세 생일 전까지 포상 활동을 마칠 수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 단련, 탐험 4가지 활동이며 주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금장 활동일 경우 4가지 활동에 더불어 추가로 합숙활동을 해야 한다. 포상단계는 동장(6개월), 은장(6~18개월), 금장(12~18개월)으로 4가지 활동영역 모두 포상활동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표 4-1-10〉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구 분	봉 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 험	합 속
금장 16세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3박 4일	4박 5일 ※ 금장 단계에 한함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15세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박 3일	-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동장 14세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박 2일	-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나. 포상제 추진 현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국제포상협회(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로부터 2008년 독립 운영기관 자격을 취득(2008년 5월)하였고, 2009년 10월 다음 단계인 임시회원국가(Provisional Membership)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포상제의 한국사무국으로서 2012년 정회원국가 자격 취득을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자격 요건들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0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10월 24~30일)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국제성취포상제 신규 제도에 의하여 세계 최초 정회원국으로 승격되었으며 2014년 국제금장총회를 유치하여 동 제도의 국내 참가자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포상제는 2008년과 2009년에 2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한국사무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사무국과 중앙 운영기관 체제를 적용하였다. 2010년부터는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정보시스템(www.koraward.youth.go.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시스템 개발로 인해 포상활동 기록의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청소년 활동 기록의 포트폴리오 변환 기능 및 인증 시스템으로 관련 기록이 진학 및 취업 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상제는 포상 자체보다는 포상활동 과정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상 활동에서 도전에 대한 실패는 없다. 다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여 도전한다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참여 청소년들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도전의 지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표 4-1-11〉 포상제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 분	참가 청소년	포상 청소년	포상 담당관	운영기관
2008년	352명	-	162명	15개
2009년	2,139명	398명	1,198명	194개
2010년	4,169명	457명	1,830명	309개
2011년	3,692명	663명	1,569명	220개
2012년	4,398명	587명	1,787명	214개
2013년	3,624명	582명	1,048명	139개
2014년	1,498명	497명	1,197명	137개
2015년 9월	2,064명	186명	364명	108개
누적 계	21,936명	3,370명	9,155명	1,336개

주 : 2008년 시범사업 시행으로 7월부터 청소년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포상을 받기 위한 가장 낮은 단계 동정은 평균 7~8개월 소요되어 2008년에는 포상 청소년이 없음.

자료 : 여성가족부(2015).

가. 운영 현황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국가 정책에 따라 1996년부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출범하여 2006년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이 되어 설치되었다. 1996년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출범할 당시에는 학교교육정책에 자원봉사활동이 도입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자원봉사의 지원과 활성화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단일하면서 명확한 과업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2004년 「청소년기본법」의 전면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제정을 통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가 마련되었다.

2006년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되면서 중앙과 각 지방에서 ‘청소년활동의 진흥’이라는 포괄적인 과업과 국가(중앙)-지방(시·도)-지역(시·군·구)으로 이어지는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책기구로서의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 전달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현재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4-1-1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센터명칭	운영기관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 한국청소년연맹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 대구청소년지원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흥사단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 대전광역시불교청소년연합회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 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 대건청소년회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 천주교원주교구재단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충청북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전라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경상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 성지문화재단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과 사업내용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상의 정책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 조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청소년 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지역 청소년자원 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도의 지원,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및 안전업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과제·사업의 지역 현장 전달 및 지원 등이다.

〈표 4-1-13〉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내용

운영 전략	①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 관리	중장기적인 경역목표에 따라 추진과제를 유기적으로 수립 관리하고 계획기간 중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관리 체제 운영
	② 연간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분야별로 세부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연간 사업추진에 따른 실행 및 성과 관리
	③ 자체 사업평가 및 개선 관리	센터의 자체평가계획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핵심 기능	①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및 제공	지역 내 청소년활동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청소년시설·단체 등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
	②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활동 정책과 사회적 변화,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요구조사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	지역 내 청소년지도자의 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과 연수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연수참가를 위한 지원
	④ 지역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해당 지역 내 청소년 및 관계자(기관)를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역 내 홍보관련 기관과 청소년기관의 연계 등 지역 내 청소년기관의 홍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원
	⑤ 지역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지역 내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 관계자 및 중앙기관에 상시적인 정보 제공 체제 운영 지역 내 청소년프로그램 정보 수요자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정보안내 및 프로그램 참가에 필요한 정보지원
	⑥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청소년분야 및 관련분야(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학교, 언론 기관 등)의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청소년 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정책 과제	①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지원	법령 및 운영기준에 따라 지역 내에서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 지역별 인증 수련활동 활성화를 컨설팅, 교육·설명회 운영, 인증 신청 접수 및 심사지원, 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함
	②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지역 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 청소년자원봉사 운영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각종 관련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지역 단위 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자원봉사 터전 관리, 전문인력 pool 확보 및 교육 실시, 청소년자원봉사 정보시스템(dovol.youth.go.kr) 운영 등
	③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지원	청소년활동 신고지원반 운영, 숙박형 등 청소년활동 사전신고 제도 안내 및 컨설팅, 신고 수리된 활동 정보에 관한 안내, 청소년활동 불편신고 응대 및 프로그램 실시정보 안내
	④ 청소년 안전관리 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상시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수련활동 불편신고접수 등
	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지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광역 사무국으로서 해당 지역의 국제성취포상제 운영과 관련된 제반 지원 업무 수행 및 청소년·기관의 참여 활성화
특성화 사업	① 지역 특성화 사업	국가단위 정책사업에 반영되지 못하는 지역중시의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청소년에 적합한 정책사업을 수행함 지역 내 청소년활동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시·도 센터 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 밀착형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4개 영역		15개 사업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2/6255



제 2 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도입 배경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 가치관과 부모의 지나친 보호 속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남을 먼저 배려하기보다는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풍조에 물들게 되었다. 게다가 치열한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은 청소년기에 길러주어야 할 인성을 빼앗아 버렸다.

이에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된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탐색 및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5.31 교육개혁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 현황

가.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http://dovol.youth.go.kr>) 개발·운영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CS 버전)을 구축하여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지역별 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실적 등을 보다 쉽게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봉사활동 신청 및 경력 관리,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등을 이용하는 데 편리성을 갖추게 되었다.

2008년,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역별로 운영·관리되었던 시스템(CS 버전)에서 통합 시스템(WEB 버전)으로 개편

하였으며, 기존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에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로 발전시켜 청소년 봉사활동관리의 안정성, 편리성, 정보 제공 확대 등을 꾀하였다.

2012년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통합정보시스템과 통합 작업을 추진하여 기존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를 개편(dovol.youth.go.kr)하였으며,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이용자 편리성을 증대하자는 정부3.0의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와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통합관리시스템(1365 나눔 포털)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이를 통해 Dovol-1365 나눔 포털 간의 자원봉사 실적 연계는 물론 교육부 학생생활기록부 시스템(나이스)으로 봉사활동 실적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4-2-1〉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단위 : 개소)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입터전수	2,752	3,657	4,635	6,802	8,053	8,620	9,014	9,541	9,249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표 4-2-2〉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 프로그램 수(누적)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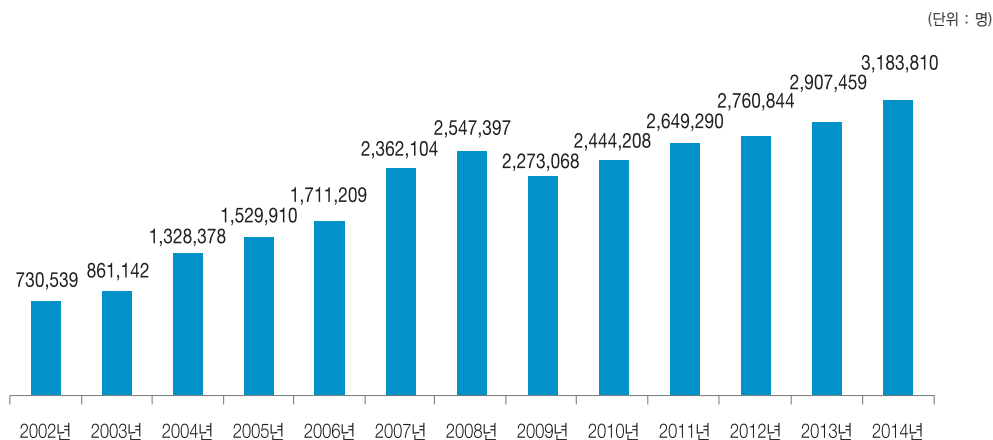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프로그램 수	250,799	367,924	475,974	629,565	747,754	905,881	1,091,310	1,373,157	1,676,565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나.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현황

2014년 12월 말까지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총 3,183,810명이다.

[그림 4-2-1] 연도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 포함) 인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다.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Global Youth Service Day)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Global Youth Service Day)은 매년 4월 셋째 주 주말에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1998년에 시작되었고,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2001년부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국제적 행사에 동참하기 위한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Global Youth Service Day) 행사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주제로 운영되었으며 8,366명(518건)이 참여하였다.

<표 4-2-3> 2014년도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 참여 봉사자 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봉사자	1,949	363	403	434	133	466	403	27	1,294	623	240	322	385	592	1	583	148	8,366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라. 대한민국 청소년자원봉사단(Korea Youth Volunteer Programme)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가 함께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자원봉사단(KYVP) 파견사업은 2002년 첫발을 내디디며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세계시민의식 배양에 힘써왔고,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10년을 위한 비전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협력기관들과 함께 매년 아세안(ASEAN) 국가로 청소년들을 파견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자원봉사단(KYVP)은 국외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이를 통하여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환경, 빈곤, 평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아세안 10개국 중 최빈국인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우선 활동국으로 선정하여 봉사단을 파견한 이래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5개국, 17개 지역)에 총 348명을 파견하였다.

〈표 4-2-4〉 대한민국 청소년자원봉사단(KYVP) 추진경과

연도	파견국	파견센터/인원	주요내용
2002년	7개국(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중국, 홍콩, 대만, 호주)	14개 센터/130명	월드컵 청소년홍보단
2003년	6개국(몽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15개 센터/269명	청소년해외봉사단으로 개칭
2004년	3개국(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16개 센터/162명	고려인 돕기 봉사활동
2005년	1개국(스리랑카)	16개 센터/176명	쓰나미 피해복구 봉사단
2006년	1개국(러시아 연해주)	16개 센터/174명	고려인 돕기 봉사활동
2007년	2개국 7개 지역(캄보디아, 라오스)	16개 센터/182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원
2008년	2개국 8개 지역(캄보디아, 라오스)	16개 센터/183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09년	4개국 12개 지역(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16개 센터/240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0년	4개국 12개 지역(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16개 센터/266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1년	5개국 16개 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16개 센터/304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2년	5개국 20개 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20개 센터/374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3년	5개국 18개 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18개 센터/333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4년	5개국 17개 지역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19개 센터/348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3



제 3 장

청소년 교류활동

1 청소년 국제교류

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상대국 청소년 담당 부처와의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간 토론, 가정방문,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산업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5년 12월까지 20개국 파견 238명, 초청 287명 등 총 525명의 교류가 시행되고 있다.

〈표 4-3-1〉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4개국)

동북아시아(3개국)	중국, 일본, 몽골
남아시아·태평양 (10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유럽 (11개국)	러시아, 프랑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3개국)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중동·아프리카(9개국)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튀니지, 카메룬, UAE, 카타르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 및 교류 현황

(2015년 12월 기준)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 초 시행년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15년까지 교류인원		
				초 청	파 견	총 인원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한말문화협정('65) 한말 청 교류 약정('92. 4.) 지도자 15명 추가- 공공행정처	1979	30명, 10일간 (15명씩 2회, 각 10일간)	709명	705명	1,414명
사우디 (청소년복지처)	양국정부합동위원회 합의('81)	1981	10명, 10일간	314명	303명	617명
일 본 (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84)	1987	30명, 15일간	835명	924명	1,759명
중 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양국수교 시 교류합의('92) 청소년교류양해각서('98)	1993	40명, 10일간	714명	751명	1,465명
헝가리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92)	1993	10명, 10일간	25명	57명	82명
러시아 (교육부)	청소년협력계획서('95)	1994	20명, 10일간	196명	225명	421명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청소년교류 협력계획서('95)	1996	10명, 10일간	121명	151명	272명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94)	1996	16명, 10일간	177명	207명	384명
핀란드 (교육부)	청소년협력 협의각서('96) ('05 갱신)	1996	3명, 6일간	58명	76명	134명
칠 레 (청소년처)	청소년협력약정서('96)	1998	20명, 10일간	43명	72명	115명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교류약정서('99) 재약정 체결('04)	1999	파견 20명, 10일간 초청 30명, 10일간	484명	316명	800명
몽 골 (사회복지노동부)	사전합의 의거 교류시행('00) 청소년분야 협력약정서('01)	2000	10명, 10일간	174명	164명	338명
멕시코 (청소년원)	청소년협력약정서('00) 재약정 체결('08)	2001	12명, 10일간	137명	161명	298명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청소년협력약정서('02)	2002	10명, 10일간	128명	137명	265명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2)	-	10명, 10일간	2명	-	2명
체 코 (교육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3)	2003	10명, 10일간	40명	40명	80명
수 단 (청소년체육부)	청소년·체육협력약정서('04)	2005	10명, 10일간	74명	87명	161명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 초 시행년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15년까지 교류인원		
				초 청	파 견	총 인원
폴란드 (교육체육부)	청소년·체육교류양해각서('04)	2005	10명, 10일간	90명	90명	180명
인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05)	2006	20명, 10일간	169명	169명	338명
파키스탄 (청소년부)	문화교류계획서('05)	2006	10명, 10일간	39명	9명	48명
이집트 (청소년부)	청소년교류 양해각서('05)	2006	10명, 10일간	70명	100명	170명
그리스 (교육종교부)	청소년분야 양해각서('06)	2006	3명, 6일간	10명	8명	18명
터키 (청소년체육부)	2005~2008년도 문화 및 과학 교류계획서('05)	2007	20명, 10일간	168명	142명	310명
스페인 (청소년청)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7)	2007	3명, 10~15일간	3명	3명	6명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양해각서('07)	2007	10명, 10일간	70명	70명	140명
불가리아 (청소년체육청)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7)	2007	6명, 7일간	31명	48명	79명
튀니지 (청소년체육부)	정부간문화협정근거('69)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9)	2010	10명, 10일간	46명	40명	86명
싱가포르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분야 양해각서('09)	2009	10명, 7일간(격년제)	30명	30명	60명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문화협정근거('00)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9)	2010	35명, 10일간	98명	96명	194명
브루나이 (문화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0)	2011	10명, 10일간	50명	50명	100명
카메룬 (외교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1)	-	10명, 10일간	0명	0명	0명
콜롬비아 (교육부)	청소년분야 협력 양해각서('13)	-	10명, 10일간	0명	20명	20명
UAE (청소년체육청)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4)	-	10명, 기간명시 없음	10명	0명	10명
카타르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4)	-	12명 이내, 7일 이내	0명	0명	0명
34개국				5,115명	5,251명	10,366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나.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2003년 7월 한·중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 합의에 따라 2004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 청소년 500명이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8,742명이 상호 교류 하였다.

〈표 4-3-3〉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현황

(단위 : 명)

구분	초 청				파 건			총 계
	1 차	2 차	3 차	계	1 차	2 차	계	
2004년	198명 (7. 21. ~ 7. 30.)	189명 (11. 1. ~ 11. 10.)	100명 (11. 17. ~ 11. 26.)	487명	-		-	487명
2005년	192명 (7. 6. ~ 7. 15.)	100명 (9. 7. ~ 9. 16.)	191명 (11. 15. ~ 11. 24.)	483명	-		-	483명
2006년	96명 (5. 24. ~ 6. 2.)	193명 (7. 5. ~ 7. 14.)	200명 (11. 1. ~ 11. 10.)	489명	98명 (4. 12. ~ 4. 21.)		98명	587명
2007년	200명 (4. 7. ~ 4. 16.)	100명 (6. 13. ~ 6. 22.)	191명 (11. 1. ~ 11. 10.)	491명	97명 (7. 3. ~ 7. 12.)		97명	588명
2008년	154명 (8. 18. ~ 8. 27.)	100명 (10. 29. ~ 11. 7.)	150명 (11. 5. ~ 11. 14.)	404명	95명 (7. 22. ~ 7. 31.)		95명	499명
2009년	196명 (7. 8. ~ 7. 17.)	99명 (9. 16. ~ 9. 25.)	185명 (11. 11. ~ 11. 20.)	480명	96명 (5. 13. ~ 5. 22.)	99명 (8. 3. ~ 8. 12.)	195명	675명
2010년	192명 (6. 2. ~ 6. 11.)	100명 (10. 13. ~ 10. 22.)	187명 (11. 11. ~ 11. 20.)	479명	192명 (5. 11. ~ 5. 20.)	190명 (9. 7. ~ 9. 16.)	382명	861명
2011년	191명 (6. 15. ~ 6. 24.)	98명 (9. 21. ~ 9. 30.)	193명 (10. 26. ~ 11. 4.)	482명	197명 (5. 17. ~ 5. 26.)		197명	679명
2012년	94명 (5. 9. ~ 5. 16.)	200명 (6. 13. ~ 6. 20.)	190명 (10. 21. ~ 10. 28.)	484명	199명 (4. 13. ~ 4. 20.)	293명 (8. 8. ~ 8. 15.)	492명	976명
2013년	195명 (5. 21. ~ 5. 28.)	100명 (7. 17. ~ 7. 24.)	189명 (10. 23. ~ 10. 30.)	484명	198명 (6. 13. ~ 6. 20.)	287명 (9. 4. ~ 9. 11.)	485명	969명
2014년	192명 (5. 8. ~ 5. 15.)	98명 (9. 22. ~ 9. 29.)	188명 (10. 22. ~ 10. 29.)	478명	197명 (6. 4. ~ 6. 11.)	297명 (9. 11. ~ 9. 18.)	494명	972명
2015년	191명 (5. 14. ~ 5. 21.)	98명 (9. 8. ~ 9. 15.)	185명 (10. 22. ~ 10. 29.)	474명	197명 (6. 4. ~ 6. 11.)	294명 (9. 10. ~ 9. 17.)	491명	965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다.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한·중·일 3국 정상은 2007년을 “한·중·일 교류의 해”로 설정하고 3자 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98명을 파견하고, 399명을 초청하였으며, 3국을 순회하여 개최하였다. 2013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1월 3국 정상회담 시 동 사업을 지속 시행하기로 협의된 바, 사업재개를 위해 3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표 4-3-4〉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현황

연 도 (회차)	일 시	개최장소	인 원
2007년 (1회)	8. 16. ~ 22.	중국 베이징	100명 파견 (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08년 (2회)	9. 17. ~ 23.	일본 동경	100명 파견 (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09년 (3회)	7. 21. ~ 27.	한국 서울	총 300명 파견 (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10년 (4회)	7. 21. ~ 27.	중국 베이징	100명 파견 (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11년 (5회)	3. 11. ~ 17.	일본 동경	98명 파견 (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12년 우호의 만남(6회) 미래포럼(1회)	7. 25. ~ 31.	한국 서울	총 297명 - 우호의 만남 237명(한 78명, 중 79명, 일 80명) - 미래포럼 60명(한·중·일 각국 20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 파견과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실시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시민의식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 참가단”과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2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그램 전체비용의 일부는 참여 청소년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참여할 경우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표 4-3-5〉 2015년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연 번	프로그램명	내 용
1	국제회의·행사참가단 (2008~)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다양한 국제회의·행사 등에 청소년들을 파견 * UN 총회 제3위원회 파견 등 4개 국제회의 25명(2015)
2	해외자원봉사단 (2005~)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 강화 * 8개국 15개팀 299명(2015)

자료 : 여성가족부(2015).

가.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참가단

청소년들이 국제회의 및 행사 등 다양한 해외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국제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파견대상자를 선발한다. 2015년에는 UN 총회 등에 25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나.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아시아 8개국에 15개 팀, 299명의 봉사단을 10일 내외로 파견하였다.

〈표 4-3-6〉 2015년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단위 : 팀, 명)

구 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계
파견팀수	1	3	1	1	2	1	5	1	15
파견자수	20	60	20	20	40	19	100	20	299

자료 : 여성가족부(2015).

3 청소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행사 지원

국제청소년행사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개최하는 아시아 청소년 초청연수와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청소년포럼 등이 있다. 2015년에는 아시아 청소년 초청연수, 국제청소년포럼, 여수국제청소년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4-3-7〉 2015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행 사 명	일 시	행 사 취 지	주요 참석대상	주관기관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7.30.~8.5.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청소년활동을 통해 개척정신과 협동정신 배양	11개국 스카우트 청소년 약 4,500명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아시아 청소년 초청연수	8.6.~8.18.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기회 제공	22개국 청소년 185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8.14.~8.16.	전 세계 청소년 만남의 장	국내외 청소년 약 20,000명	전남 여수시
국제청소년포럼	8.18.~8.24.	각국 청소년 주요 자원봉사 현황 공유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의 역할 모색	25개국 청소년 71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 총회	11.3.~11.8.	26개 아-태지역 회원국 대표단이 모여 향후 정책결정 및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	40개국 총회 관계자 약 700명	한국스카우트연맹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아동빈곤율은 절대빈곤을 기준으로 2005년 5.9%, 2010년 4.8%, 2013년 3.6%로 점차 감소하였다. 한부모가구는 2007년 8.9%에서 2014년에는 9.4%인 약 175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는 2007년 44,258명에서 2015년 207,69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출청소년 지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디딤씨앗 통장 사업, 아동시설 보호 사업, 아동 급식 지원 등이 실시·운영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 200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가 지정·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족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국 211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청소년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청소년지원체계(CYS-Net)를 통해 2014년에는 1,881,389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연계하였다. 이밖에 즉각적인 청소년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과 주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조력하는 상담 활동인 ‘또래상담활동’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제5부 청소년 복지

제1장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제2장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제4장 청소년의 건강

제 1 장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1 아동빈곤율 현황

아동빈곤율은 일반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절대빈곤율의 측정방법은 국가마다 상이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에 속한 가구 또는 인구의 비율을 절대빈곤율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아동에 대입하여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아동 중 최저생계비 이하인 아동 가구에 사는 아동 수를 백분율화하여 아동빈곤율을 측정하였다. 한편 상대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체 아동 수 대비 중위소득의 40%, 50%, 6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속한 아동 수를 말한다. 여기서는 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절대아동빈곤율은 전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5년 5.9%, 2010년 4.8%, 2013년 3.6%의 분포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아동 수로 환산하면 60여만 명의 아동이 절대빈곤층이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30여만 명의 아동이 절대빈곤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상대아동빈곤율은 2005년 11.9%, 2010년 10.1%, 2013년 8.4%의 분포로 최근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숫자상으로 보면 2003년 118만 명의 아동이었는데, 2005년에는 131만 명으로 약간 늘다가, 2013년 현재 80여만 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1인 가구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그 추이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최근 집계 자료, 2013년) 빈곤아동 수는 전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빈곤아동 수는 34만 명 정도이고, 도시근로자 기준으로는 19만 명으로 전 가구보다 다소 낮다. 상대아동빈곤의 경우는 전 가구기준 75만 명, 도시근로자 기준 67만 명으로 이것도 도시근로자가 낮다.

〈표 5-1-1〉 아동빈곤율

(단위 : %, 명)

구 분	절대아동빈곤율		상대아동빈곤율	
	전 가구기준	도시근로자 기준	전 가구기준**	도시근로자 기준
1인 가구* 제외				
2003년	5.6	4.0	10.3	9.0
2004년	5.5	3.5	11.3	10.1
2005년	5.9	4.2	11.9	10.4
2006년	5.9	3.5	11.1	10.4
2007년	5.9	3.3	11.5	9.8
2008년	5.6	3.7	10.8	9.5
2009년	4.9	3.1	10.9	10.8
2010년	4.8	3.0	10.1	9.2
2011년	4.3	2.3	10.3	8.5
2012년	4.4	1.6	10.2	7.0
2013년	3.6	2.0	8.4	7.2
1인 가구 포함				
2006년	5.9	3.5	10.7	10.3
2007년	5.9	3.3	11.2	9.8
2008년	5.6	3.7	10.3	9.2
2009년	4.9	3.1	10.2	10.6
2010년	4.8	3.0	9.5	8.8
2011년	4.3	2.3	9.9	8.1
2012년	4.4	1.6	9.4	6.9
2013년	3.6	2.0	7.9	7.1
2013년 아동인구 수	빈곤아동 수			
9,431,699	339,541	188,634	745,104	669,651

주 : 빈곤아동 수는 아동빈곤율을 이용하여 추계함(절대빈곤 :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 :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기준).

* 1인 가구란 아동단독 가구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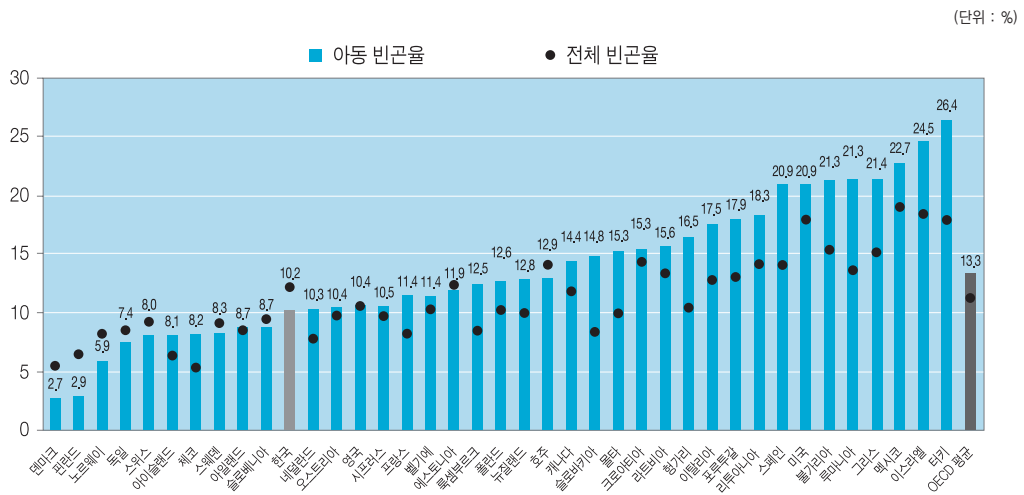
**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 임완섭·이주미(2014), 2014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행정자치부(2015), 2013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2012년 기준 아동빈곤율 국제 비교 결과는 다음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빈곤율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가 가장 낮았고, 뒤를 이어 독일, 스위스, 아이슬란드, 체코, 스웨덴이 따른다.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아동빈곤율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2012년 10.2%로 낮은 편이다. 이는 OECD 평균 13.3%

보다 약 3.1%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반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아동빈곤율이 전체빈곤율 평균보다 높고, 특히 미국,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등은 아동빈곤율이 20% 이상인 고빈곤 국가이다. 이러한 아동빈곤율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아동(또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때 아동빈곤율이 낮아지고, 미국이나 남유럽 국가들과 같이 아동의 문제를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가족의 책임으로 돌렸을 때, 아동빈곤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림 5-1-1] 아동빈곤율 국제 비교(2012년, 중위소득 50%)



자료 : OECD(2015). Family Database 2015(<http://www.oecd.org/social/soc/oecdfamilydatabase.htm#INDICATORS>).

2 한부모가구 현황

자녀가 부모 혹은 조부모 중 한 명하고만 사는 가족형태인 한부모가구는 최근 들어 이혼 증가 등의 원인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에는 8.9%, 147만 가구이었는데, 2010년에는 9.2%, 160만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9.4%인 171만 가구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구의 대부분은 모자가구이고, 소수만이 부자가구이다. 한부모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반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등으로 나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07년 158만 가구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7.3만 가구에서 2010년 10.8만 가구, 2014년에는 14.2만 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미혼모의 증가, 가족해체의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고,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표 5-1-2〉 가구형태별 한부모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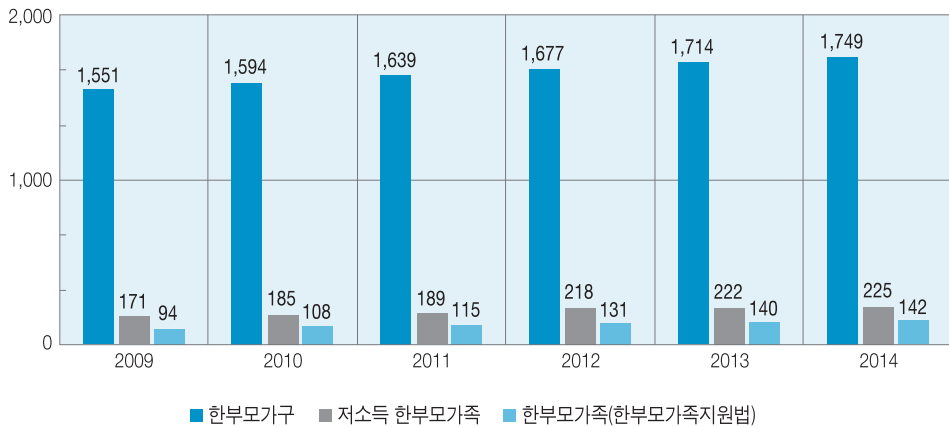
(단위 : 천 가구,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가구(A)	16,543	16,791	17,052	17,339	17,687	17,951	18,206	18,457
한부모가구(B)	1,468	1,509	1,551	1,594	1,639	1,677	1,714	1,749
한부모가구 비율(B/Ax100)	8.9	9.0	9.1	9.2	9.3	9.3	9.4	9.4
저소득 한부모가족	148	150	171	185	189	218	222	225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73	82	94	108	115	131	140	142

자료 : 통계청(2015), e나라지표, 2015. 10. 23.

[그림 5-1-2] 한부모가구 수

(단위 : 천 가구)



자료 : 통계청(2015), e나라지표, 2015. 10. 23.

3 다문화가족 및 아동 현황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급증하여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족유형이 다문화가족 및 그 가족에 속한 아동이다. 다문화가족이란 광의의 개념으로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의 형태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 등이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만으로 한정한다.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2007년에는 44,258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107,689명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3배 증가한 121,935명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207,69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15년 현재 만 6세 이하는 117,811명으로 비중으로는 과반수를 넘는 64.3%를 차지하고 있다. 만 7~12세 이하는 56,108명(24.5%)이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 이하 다문화 아동 수는 18,827명(9.6%)이며, 고등학생 연령대인 만 16~18세 이하 아동은 14,881명(6.6%)으로 파악되었다. 모든 연령대의 다문화가족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초·중·고생의 학령기 다문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표 5-1-3〉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 6세 이하	만 7 - 12세	만 13 - 15세	만 16 ~ 18세
2007년	44,258	26,445	14,392	2,080	1,341
2008년	58,007	33,140	18,691	3,672	2,504
2009년	107,689	64,040	28,922	8,082	6,645
2010년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2011년	151,154	93,537	37,590	12,392	7,635
2012년	168,583	104,694	40,235	15,038	8,616
2013년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2014년	204,204	131,310	49,929	19,499	13,466
비율(14년)	100.0	64.3	24.5	9.5	6.6
2015년	207,693	117,811	56,108	18,827	14,881
비율(15년)	100.0	64.3	24.5	9.6	6.6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국적별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를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가족의 자녀 수가 가장 많은 57,856명이고, 그다음은 중국(한국계)계로 42,791명이다. 중국은 3번째로 많은 42,791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 3국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필리핀 20,584명, 일본 17,195명 등의 순이다.

다문화 초·중·고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총 67,806명으로 전체 학생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학생은 매년 20만 명씩 감소하나, 다문화 학생 수는 6천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교급별로는 초등생이 71.2%로 가장 많고, 중학생 18.5%, 고등학생 10.3% 등의 분포이다.

〈표 5-1-4〉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단위 : 명, %)

국적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207,693
중국(한국계)	14,201	16,681	18,669	31,404	33,186	39,278	42,294	43,890	39,160
중 국	7,716	10,889	35,932	29,800	34,852	33,231	37,084	38,824	42,791
베트남	5,062	8,194	22,491	27,517	34,256	41,238	49,458	54,737	57,856
필리핀	6,013	6,378	10,687	11,926	13,937	15,820	18,020	19,568	20,584
일 본	6,016	6,508	6,838	5,734	14,510	16,237	17,806	18,185	17,195
캄보디아	-	-	-	2,554	3,565	4,690	5,961	6,777	7,343
몽 골	405	816	1,681	1,807	2,250	2,468	2,802	2,952	2,911
태 국	799	870	1,563	1,711	2,082	2,427	2,663	2,767	2,810
미 국	852	2,406	683	821	1,207	1,422	1,697	1,855	1,888
러시아	263	303	736	766	1,090	1,139	1,289	1,319	1,304
대 만	878	1,515	770	1,129	1,191	1,615	1,758	1,892	1,985
기 타	2,053	3,447	7,639	6,766	9,028	9,018	10,496	11,438	11,866

주 : 캄보디아의 경우, 2009년 이전에는 '기타'에 포함.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표 5-1-5〉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최근 5년)

(단위 : 명, %)

인원 수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다문화학생 수(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전체 학생 수(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다문화학생 비율(A/B × 100)		0.44	0.55	0.70	0.86	1.07

자료 : 교육부(2014),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표 5-1-6〉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

유형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계
총합계	국내출생	41,575	10,325	5,598	57,498
	중도입국	3,268	1,389	945	5,602
	외국인가정	3,454	811	441	4,706
	총합계	48,297	12,525	6,984	67,806
비율		71.23	18.47	10.30	100.00

자료 : 교육부(2014),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2014년 4월 기준).

4 요보호아동 현황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설 입소, 가정보호(입양, 가정위탁) 등의 형태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요보호아동 수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 상황에 의해서 매년 1만 명 이상씩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경제가 안정화됨에 따라 몇 년 전부터는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2014년에 신규로 발생한 요보호아동 수는 총 6,014명이 발생하여 1,020명은 귀가 및 연고자에 인도되었고, 나머지 4,994명이 국가가 보호하는 요보호아동이다.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원인은 부모이혼과 미혼모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모이혼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은 1,037명이고 미혼모로 인한 요보호아동은 1,226명이다. 그다음으로 비중이 많은 이유는 부모의 학대로 1,105명이나 되어서 아동 학대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모사망, 부모의 빈곤 및 실직, 아동유기, 부모 질병 등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5-1-7〉 요보호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단위 : 명)

연도	총 아동 발생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계	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 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1997년	12,209	3,941	8,268	1,376	3,137	342							3,413
1998년	15,499	4,699	10,800	1,654	5,451	286							3,409
1999년	16,247	7,247	9,000	1,432	4,284	216							3,068
2000년	15,936	6,851	9,085	1,270	4,190	152	1,757						1,716
2001년	21,816	11,230	10,586	717	4,897	98	728						4,146
2002년	22,341	12,284	10,057	634	4,337	74	749						4,263
2003년	21,882	11,660	10,222	628	4,457	79	595						4,463
2004년	20,357	10,964	9,393	481	4,004	62	581						4,265
2005년	18,468	9,048	9,420	429	2,638	63	1,413						4,877
2006년	16,008	6,974	9,034	230	3,022	55	802						4,925
2007년	11,394	2,533	8,861	305	2,417	37	748						5,354
2008년	11,672	2,388	9,284	202	2,349	151	706	891	1,036	732	274		2,943
2009년	10,500	1,472	9,028	222	3,070	35	707	1,051	710	763	230		2,240
2010년	9,960	1,370	8,590	191	2,804	210	772	1,037	586	772	203		2,015
2011년	8,436	953	7,483	218	2,515	81	741	1,125	418	536	154		1,695
2012년	8,003	1,077	6,926	235	1,989	50	708	1,122	448	533	166		1,675
2013년	6,834	814	6,020	285	1,534	21	512	1,117	338	545	133		1,535
2014년	6,014	1,020	4,994	282	1,226	13	508	1,105	308	450	65		1,037

자료 : 보건복지부(2015),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요보호아동의 보호형태는 크게 시설보호와 가정보호로 나뉜다. 시설보호에는 양육시설, 일시 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가 있고, 가정보호는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보호가 있다. 전반적으로 시설보호가 가정보호보다 약간 더 많은 상황이다. 시설보호 중에서는 양육시설 입소가 가장 많고, 공동생활가정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보호는 가정위탁이 가장 많고, 소년·소녀가정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입양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 가정 내 보호가 권장되고 있고, 시설에서 보호하더라도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보호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가정위탁과 공동생활 가정을 강화하고 있다. 입양의 경우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최근 국외 입양 보다 국내 입양 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

〈표 5-1-8〉 요보호아동 보호 현황

(단위 : 명)

연도	조치내용										
	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 시설 등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계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전 위탁
1997년	8,268	3,928	3,664		125	139	4,340	673	2,269	1,398	-
1998년	10,800	5,141	4,948		132	61	5,659	518	1,741	3,400	-
1999년	9,000	4,702	4,579		78	45	4,298	572	1,776	1,950	-
2000년	9,085	4,481	4,332		64	85	4,604	564	1,755	2,285	-
2001년	10,586	4,774	4,671		41	62	5,812	874	1,848	3,090	-
2002년	10,057	4,663	4,547		57	59	5,394	673	2,544	2,177	-
2003년	10,222	4,824	4,747		42	35	5,398	500	2,506	2,392	-
2004년	9,393	4,782	4,680		38	64	4,611	299	2,100	2,212	-
2005년	9,420	4,818	4,769		48	1	4,602	407	1,873	2,322	-
2006년	9,034	4,366	4,313		53	-	4,668	308	1,259	3,101	-
2007년	8,861	3,245	3,189		39	17	5,616	247	1,991	3,378	-
2008년	9,284	4,964	2,997	1,261	39	667	4,320	178	1,304	2,838	-
2009년	9,028	4,767	2,406	1,640	35	686	4,261	213	1,314	2,734	-
2010년	8,590	4,842	2,445	1,751	23	623	3,748	231	1,393	2,124	-
2011년	7,483	3,752	2,246	862	32	612	3,731	128	1,253	2,350	-
2012년	6,926	3,748	2,272	676	25	775	3,178	117	772	2,289	-
2013년	6,020	3,257	1,731	801	39	686	2,763	20	478	1,749	516
2014년	4,994	2,900	1,818	566	10	566	2,094	13	393	1,300	388

자료 : 보건복지부(2015).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제 2 장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꿈드림」

꿈드림은 ‘꿈 = 드림(Dream)’, ‘꿈을 드림’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¹⁾에 따라 전국에 지정·설치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수행하고 있다.

가. 추진배경 및 연혁

매년 약 5~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실태 미확인 학교 밖 청소년은 누적 2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스스로 진로를 찾고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러 사회적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청년실업 및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력이 단절된 청소년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는 체계적인 자립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취약청소년 자립지원프로그램 “두드림”이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매년 발생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해밀”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수혜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드림·해밀”이 통합되었으며, 2014년에는 54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법정(法定) 명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나, ‘학교 밖 청소년’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인식을 해소하고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명명(命名)함.

Net) 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운영되었다. 또한,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5년 5월 29일 법률 시행에 따라 전국에 200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하 꿈드림 센터)”가 지정·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5-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혁

연도	추진내용
2007년	• 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두드림존 프로젝트'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범운영 (총 12개소 : 상설 두드림존 2개소, 시범 두드림존 10개소)
2009년	• 두드림존 운영기관 확대(총 20개소 : 상설 두드림존 3개소, 시범 두드림존 17개소)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해밀' 3개소 시범운영(대전, 광주, 제주)
2010년	• 두드림존 운영기관 확대(총 30개소 : 상설 두드림존 10개소, 시범 두드림존 20개소) • 학업중단 및 학습부진 청소년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클리닉' 개발
2011년	• 두드림존 운영기관 확대(총 36개소 : 상설 두드림존 16개소, 시범 두드림존 20개소) • '해밀' 사업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동기 강화 프로그램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나내매)' 개발
2012년	• 두드림존 확대 및 모든 시범운영지역 정규 사업화(총 49개소 : 광역 16개소, 기초 33개소) • 학업중단숙려제 연계 숙려제 상담 및 자퇴 후 학업복귀 서비스 지원
2013년	• 두드림·해밀 통합 운영(총 50개소 : 광역 16개소, 기초 34개소) • 두드림·해밀 통합 홈페이지 구축(www.dodreamhaemil.kr)
2014년	• 두드림·해밀 통합 운영(총 54개소 : 광역 16개소, 기초 38개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 5. 28.)
2015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 5. 29.) • 전국 200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목표 및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목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초·중학교 및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및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 주 대상이며,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된다.

※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 서비스 절차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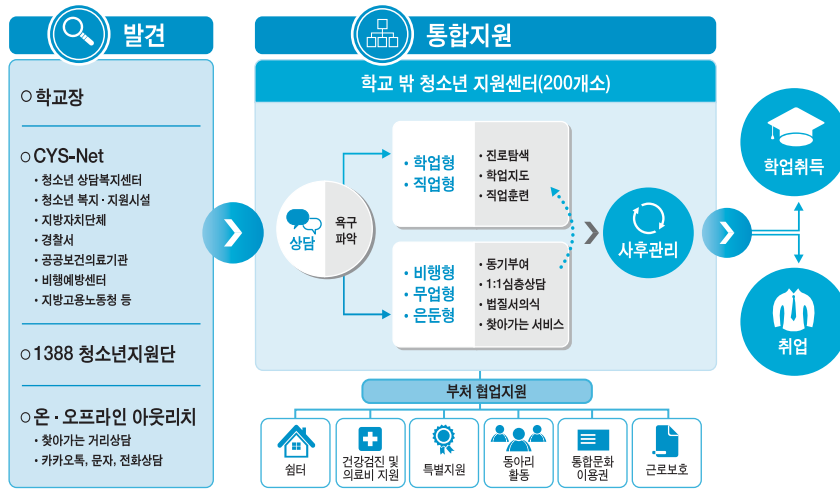
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 경찰서 등 CYS-Net의 연계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여 각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에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건강증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학력 취득이나 취업을 통해 개인적 목표가 성취되면 사후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형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재취학, 재입학 등의 복교지원, 비진학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 지원, 대안학교 진학지원, 검정고시 지원 및 대학 입시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형 청소년에게는 직업 기술을 익히는 단계에서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 등의 체험을 통해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을 한다. 자립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CYS-Net 연계 등을 통해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 자립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지역의 여건 및 서비스 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서, 여가활동, 예체능과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이나 특정 산업단지일 경우 해당 지역의 환경이나 연계 자원에 적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연, 금주, 영양, 성, 구강, 비만클리닉 등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사후 관리 단계는 개인 목표를 성취한 청소년이 6개월 이상 적응상태를 유지하도록 대면상담이나 SNS 모니터링, 사후적응 프로그램 「꿈다짐」 등을 제공한다. 이때 참여 청소년 개별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꿈드림센터의 서비스 흐름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2015).

(3) 운영지역 및 인력

2015년 꿈드림센터는 전국 200개소(시·도 센터 16개소, 시·군·구 센터 184개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2015년 9월 현재 194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전담인력은 시·도 센터 5명씩, 시·군·구 센터 2명씩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표 5-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00	25	14	9	9	6	3	5	1	31	8	13	15	10	15	15	18	3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 가출 청소년 지원

최근 사회적 문제인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리생활을 하면서 건강악화는 물론 절도·폭행·성매매 등 범죄 및 비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6개월 이상의 장기 가출과 반복적인 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가출한 청소년은 신속하게 보호, 상담,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가출 청소년의 비행과 이탈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 정책의 변화

1991년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1992년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소년 선도 예방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참여정부”에서는 「가출 청소년 쉼터 확대」가 대선공약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2005년 2월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한 가지 유형의 쉼터로 운영되다가 가출 청소년의 상황 및 욕구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에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표 5-2-3〉 청소년쉼터의 발전단계

① 도입기	- 1992년 최초의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 1998년 5개 광역시별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② 확대기	- 2001년 「청소년 기본법」 제정 - 2003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법적 근거 마련 - 2004년 일시쉼터(드롭인센터) 설치·운영 - 2005년 중장기쉼터 설치·운영
③ 성숙기	- 2006년부터 정체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 중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 사업내용 및 규모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의 생활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립역량 강화, 고충처리, 문화활동 프로그램 기회제공 등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시설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로서 쉼터의 활동범위에는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 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 관리 등이 포함된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개입,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청소년쉼터는 자치단체정상보조의 형태(Matching Fund, 정책정률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2015년 9월 현재 청소년 쉼터는 11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청소년쉼터의 운영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지역 실정 및 여건 등에 따라 주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표 5-2-4〉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일시쉼터	7	9	9	10	10	10	13	21	22	26
단기쉼터	43	45	42	47	49	48	49	50	50	52
중장기쉼터	21	25	25	24	24	25	30	32	37	41
계	71	79	76	81	83	83	92	103	109	119

자료 : 여성가족부(2015).

(3) 청소년쉼터 종류 및 유형별 기능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지원하는 쉼터의 종류는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가 있고 그 유형별 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청소년쉼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1992년 설립된 서울YMCA 쉼터이고, 2004년에 가출청소년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일시보호시설인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서울과 인천, 대전에 각각 설립하였으며, 2015년 9월 현재 일시쉼터는 26개소, 단기쉼터는 52개소, 중장기쉼터는 4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표 5-2-5〉 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기 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최장 7일까지 연장 가능)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이용 대상	일반 청소년, 거리생활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기 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 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 가출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제공 -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 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 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5).

(4)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청소년쉼터의 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 전산망인 ‘행정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시쉼터 25개소를 제외한 단기·중장기쉼터 91개소의 수용 가능한 총 정원은 약 1,200명이다.

〈표 5-2-6〉 연도별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백만원)	4,639	4,651	5,874	6,262	7,287	8,137	8,710
쉼터 수(개소수)	76	81	83	83	92	103	109
이용인원(연인원)	235,209	245,653	267,117	400,533	405,204	455,219	584,510

자료 : 여성가족부(2015).

(5)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내실화

청소년쉼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일시-단기-중장기로 특성화하고, 쉼터유형별로 운영모형 및 운영목표 등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5년부터는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 운영역량 강화 및 가출 청소년의 가정·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평가사업, 이행실태 점검, 종사자 워크숍 및 역량 강화 연수, “청소년쉼터 주간”(최초 쉼터 설치 일인 10월 28일이 속해 있는 주)을 설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가출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접근·개입을 위해 아웃리치 전담인력을 일시쉼터(15개소)에 배치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는 일시쉼터 야간보호기능(8개소)을 강화하고 의료형 쉼터(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3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성장과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군·구를 통한 전달체계를 활용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등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표 5-2-7〉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

지원 대상	만 9~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 (단,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 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 (월 10만원~연 350만원 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표 5-2-8〉 특별지원 종류 및 지원 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연 200만원 내외(220만원 한도)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 함양 등 자립함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소송비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월 1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자료 : 여성가족부(2015).



4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사회적 특수성과 다문화가정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우리 사회에 이주 배경청소년(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5-2-9〉 2014년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수

(단위 : 명)

총 계	북한이탈	중도입국*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부모
212,666명	7,319명	7,431명	14,184명	183,732명
근 거	'14. 12. 31. 기준, 통일부 (9~24세)	'14. 12. 31. 기준, 법무부	'15. 1. 1. 기준, 행정자치부**	

주·자료 : * 중도입국청소년 : 외국인입국자 중 미성년 자녀(F-2-2, F-5-3). 만 20세 미만 귀화 허가자 및 귀화신청자 수(법무부 이민통합과 통계).

** '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14. 7., 행정자치부 정책자료 승인통계).

북한이탈청소년은 입국과정에서의 심리·정서적 상흔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하나원 교육생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 학습 공백 기간,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은 문제, 교육시스템 부적응 등으로 학교생활 및 적응이 어려워 중도 탈락률이 일반청소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입국 초기 교육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과 함께 통일부 하나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비교문화체험 학습을 지원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청소년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5-2-10〉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소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세 ~ 24세	4,711	467	562	594	706	569	654	395	407	347

자료 : 통일부 정착지원과(2014. 12.).

〈표 5-2-11〉 북한이탈청소년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도)	정규학교 재학 현황(교육부)						대안 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 현황 (*14. 4.)	575	553	325	359	189	182	283	2,466
	1,128		684		371			
	2,183							

주 : 중국 등 제3국 출생자가 포함된 현황이며, 대안 교육시설은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서 수학하는 학생임.

자료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014. 4.).

또한, 최근 외국인 부모의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하는 동반·중도입국청소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증가와 더불어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현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외모, 언어능력 등에 있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식으로 학업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도입국청소년은 이주자로서의 문제와 청소년 성장기의 어려움을 더하여 겪게 되며,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은 신분상의 불안정(미등록)으로 정규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또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가정의 불화나 해체 등 이주배경에서 파생된 새로운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과 함께 중도입국청소년 등 다문화청소년의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11년과 2013년에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우선 2011년부터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지원사업(Rainbow School)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위탁기관 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레인보우스쿨은 한국어 지도, 편·입학 지도, 정체성 및 교우관계, 심리안정, 진로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2개 지역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2015년 현재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 개정(2012년 8월 시행)으로 탈북청소년 및 다문화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인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 과정인 '무지개 잡(job)아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5년 현재, 상반기 10개교 21학급, 하반기 13개교 24학급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2/6313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및 특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한부모·맞벌이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맞벌이·한부모·부모의 실직·파산·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을 받는 청소년(초4~중2)은 2005년 2,350명(연인원 : 225,600명), 2006년 4,200명(연인원 : 1,260,000명), 2007년 6,300명(연인원 : 1,890,600명), 2008년 7,680명(연인원 : 2,165,760명), 2009년 7,245명(연인원 : 2,064,825명), 2010년 6,645명(연인원 : 1,727,700명), 2011년 8,200명(연인원 : 2,148,400), 2012년 8,200명(연인원 : 2,148,400명), 2013년 8,200명(연인원 : 2,148,400명), 2014년 8,043명(연인원 : 1,962,492명)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시행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단체시설 등에서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85개소가 운영되다가, 2009년 178개소, 2010년 161개소로 잠시 축소 운영 되었으나, 2011년부터 200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다문화 청소년 대상 아카데미 2개소, 장애청소년

대상 아카데미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2005년 시범실시(46개소) 이후 2006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국비 50%)되어 지자체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85개소가 운영되다가, 2009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2009년 178개소, 2010년 161개소로 잠시 축소 운영되었다가 2011년부터 200개소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청소년육성기금(복권기금)으로 전환하여 1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중학생 중심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하여 24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표 5-2-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							
사업대상	저소득·맞벌이·한부모·부모의 실직·파산·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홀로 지내는 청소년(초4~중2)							
	연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개소수	46	161	200	200	200	200	244
	인원	2,350	6,645	8,200	8,200	8,200	8,043	9,490
	연인원	225,600	1,727,700	2,148,400	2,148,400	2,148,400	1,962,492	2,200,000
시행주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운영							
설치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단체시설 등							
사업기간	2015. 1. ~ 12월 연중 상시 실시(토요일, 방학 중에도 운영)							
사 업	244개소(기본형 : 1개소 총 40명, 1개반 20명, 2개반) 운영							
사업예산	167억원(국비지원율 : 서울 30%, 지방 50%)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지역별 운영현황을 보면 17개 시·도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 전국적으로 244개소가 운영되었다.

〈표 5-2-13〉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소수)

시·도	이용 대상			운영개소수			
	계	초	중	계	초	중	초+중
서울	910	690	220	24	17	5	2
부산	600	360	240	15	9	6	-
대구	470	380	90	12	9	2	1
인천	320	160	160	8	4	4	-
광주	260	130	130	7	3	3	1
대전	190	190	-	5	5	-	-
울산	240	-	240	6	-	6	-
세종	80	40	40	2	1	1	-
경기	1,630	950	680	41	21	15	5
강원	610	350	260	16	9	7	-
충북	430	390	40	11	10	1	-
충남	630	320	310	16	8	8	-
전북	670	350	320	17	8	7	2
전남	850	450	400	23	11	10	2
경북	570	420	150	14	10	3	1
경남	710	480	230	19	11	4	4
제주	320	260	60	8	6	1	1
계	9,490	5,920	3,570	244	142	83	19

자료 : 여성가족부(2015).



6 지역아동센터 운영

가.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정부에서는 방임될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전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이용시설로서, 18세 미만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인지·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식,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안전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육프로그램은 아동에게 기초학습지도, 학교생활관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에는 공연관람, 견학, 캠프 등이 포함된다. 정서지원프로그램으로는 아동과 부모상담 등을 통해 아동 정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으로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을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기능 등을 포함한다.

〈표 5-2-14〉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서비스 영역	세 부 프로그램
보호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등
교육	숙제지도, 예체능 활동, 적성교육, 인성·사회성 교육 등
문화	관람·견학, 캠프·여행, 행사 등
정서지원	상담(연고자, 아동상담), 가족지원(보호자 교육,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연계	홍보,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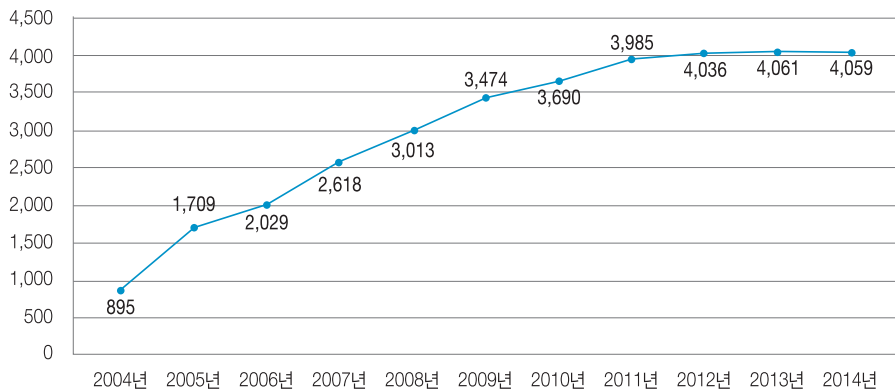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3)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이용 현황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방과후 나홀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한 보호, 학습지도, 지역사회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1년까지 3,985개소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4년 4,059개소로 최근 3년 간 증가세가 안정화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 전남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5-2-2]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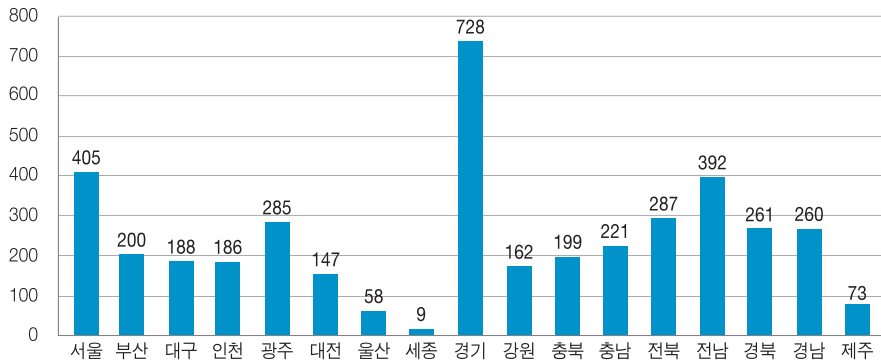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자료 :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4),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2014년 12월 기준).

[그림 5-2-3]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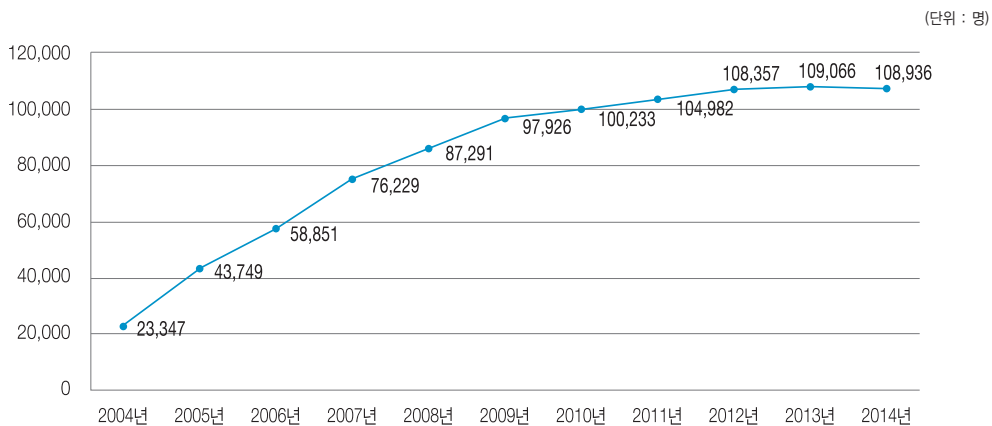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4),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2014년 12월 기준).

(4)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 증가

지역아동센터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아동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2004년에 23,347명, 2012년에는 108,357명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학년별 현황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40,6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초등학교 저학년 40,425명, 중학생 20,1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다문화·탈북아동 등 특별관리 아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장애아동 2,781명, 다문화가정 아동 10,028명, 탈북아동 450명으로 전체아동 중 12.2%가 이용하고 있다. 경제 상황별로는 기초생활수급권과 차상위계층 아동이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승인 아동(전국 평균 가구소득 70% 이하 등)은 44.3%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2-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4).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2014년 12월 기준).

(5) 지역아동센터 지원강화

지역아동센터의 긍정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시설 증가에 따라 정부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원대상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운영비 지원에 대한 단계적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5년에는 4,113개 시설에 대해 월평균 44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5-2-15〉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단가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개소 (개소)	500	800	902	1,800	2,088	2,788	2,946	3,260	3,500	3,742	3,989	4,113
지원단가 (만원/월)	67	200	200	200	220	상 : 220 하 : 320	320	370	395	420	433	443
국비예산 (억원)*	12	57	105	335	495	695	814	963	1,096	1,272	1,306	1,363

주 : *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액 기준(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액 제외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액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2015).

2007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운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총 3,500명의 아동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복지교사는 아동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지역사회복지사 분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평가를 실시하였고, 3년 마다(1기: 2012~2014년, 2기: 2015~2017년) 의무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7 드림스타트 사업(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드림스타트(Dream Start)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지도,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를 제공해 가족기능 회복, 양육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7년 희망스타트 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8년 드림스타트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지원대상은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복지 욕구조사 및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통해서 대상 아동을 선정한다. 단, 만 12세 이상의 아동이라도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동 발달수준 및 양육환경 사정을 실시하여 고위기 또는 중위기로 판정된 아동과 저위기로 판정된 아동 중 특정 영역에서 고위기 또는 중위기가 나타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드림스타트 수행체계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전반적 삶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별·가구별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생활 전반에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 5-2-16〉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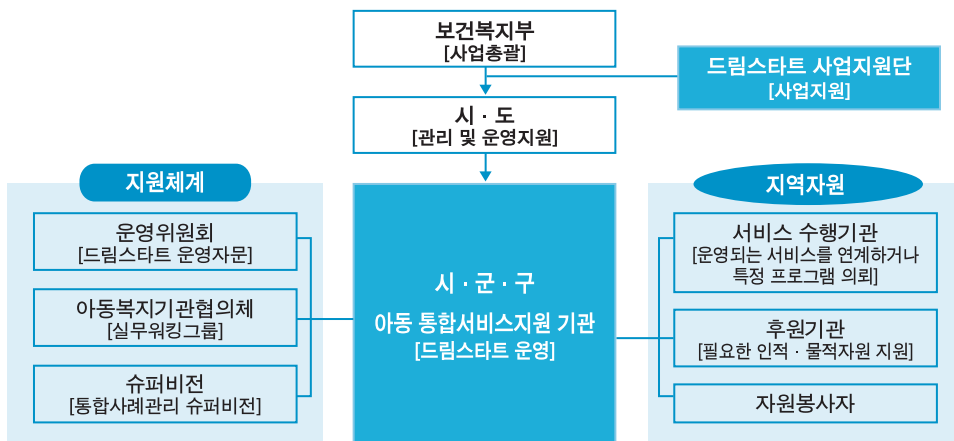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서비스	건강검진 및 예방(신체 및 건강검진, 예방 접종, 치과검진 및 관련 교육, 건강교육, 클리닉, 응급처치 및 영양 관련 교육 등) 건강관리(질병 관련 치료지원 등)
인지/언어 서비스	기초학습(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독서지도, 경제교육 등) 학습지원(교구재활용 학습, 공부방, 도서관운영, 보충학습, 예체능, 학습지 지원 등)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정서/행동 서비스	사회정서(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 관련 교육, 진로지도 등) 심리 행동(심리상담 및 치료, 인터넷중독 상담 및 치료) 보호(돌봄기관 연계, 야간 보호 및 교육 등), 문화체험
부모 및 가족, 임산부 서비스	부모교육(상담 및 교육, 자녀발달, 양육, 자조모임 등) 양육지원(다문화가정지원, 취미, 여가, 안전 및 건강지원 등) 산전 산후관리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14).

이러한 제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보건복지부가 정책결정, 재정지원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드림스타트를 만들어 3인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4인 이상의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이나 서비스는 기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군·구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지원, 전담인력 교육, 운영모델 연구·개발, 사업 평가, 후원 개발 및 홍보 등의 아동 통합서비스 실무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5-2-5]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2014).

나.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2008년부터 본격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2007년 16개 시·군·구에서 2008년에는 32개, 2009년에는 75개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1개, 2011년에는 131개, 2012년에는 181개, 2013년에는 211개, 그리고 2014년에는 220개 시·군·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원도 2008년 98억 원에서 2014년 632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5-2-17〉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및 사례관리 아동 수

단위 : 개소, 억원,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설치지역	16	32	75	101	131	181	211	220
증가수	-	16	43	26	30	50	30	9
사업예산	50	98	225	301	372	462	576	632
아동 수	3,769	9,901	26,208	32,641	44,651	65,724	95,133	107,127
가구 수	2,465	6,516	17,141	21,699	29,332	42,387	61,630	66,551

자료 : 보건복지부(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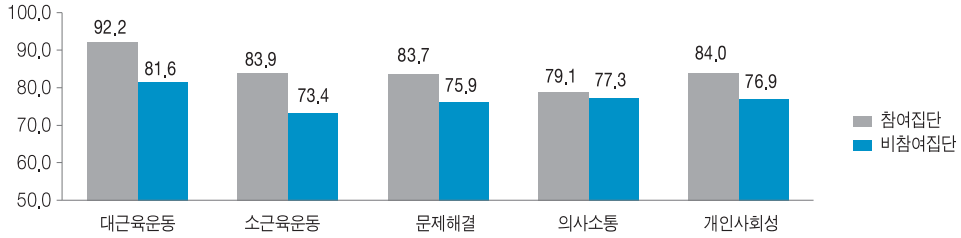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사업 초기에는 일부 지역 아동(2~3개 동,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시·군·구에 따라서 시·군·구 내 전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거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2007년 3,700여 명에서 2014년에는 약 29배가 증가한 107,127명으로 증가하였다.

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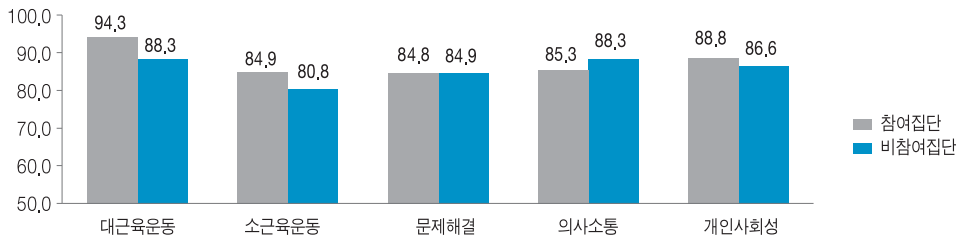
이러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기능인 사례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아동 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상 아동과 부모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과 양육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 서비스 수혜에 대한 효과가 다른 연령대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6] 드림스타트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발달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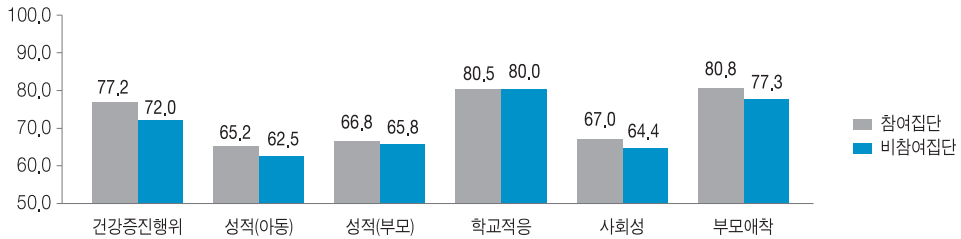
| 영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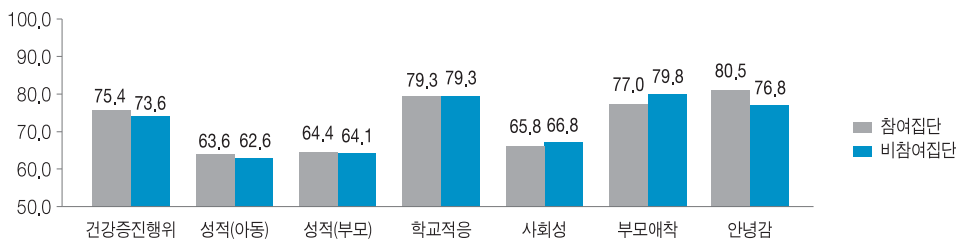
| 유아 |



| 초등학교 저학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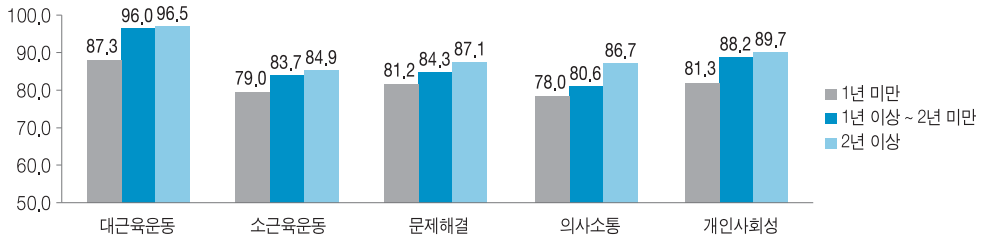
| 초등학교 고학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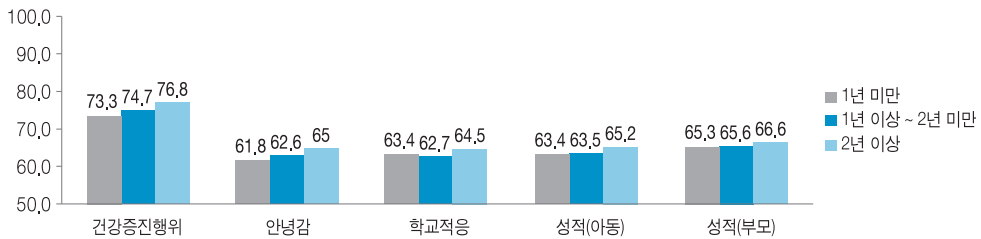
자료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2015),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연구.

[그림 5-2-7] 드림스타트 서비스 기간에 따른 아동발달 및 양육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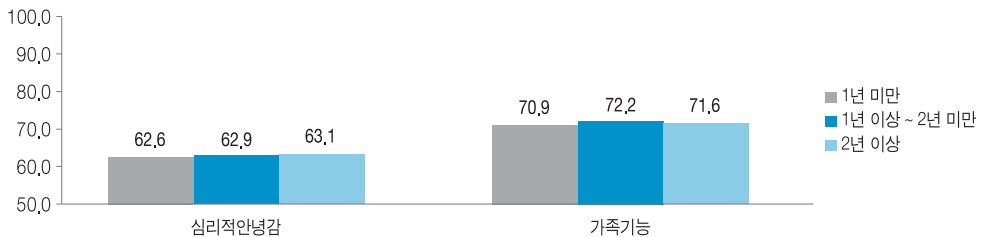
| 영유아 |



| 초등학교 아동 |



| 양육자의 변화 |



자료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2015),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연구.

통합형 사례관리란, 서비스의 통합과 전달체계의 통합을 뜻한다. 먼저 서비스의 통합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의 총 3개 영역에 대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달체계의 통합이란 민간과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의 통합으로, 민간 전문인력(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건강, 복지, 보육 전문가)과 전담 공무원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적인 고위험 대상자의 경우, 개별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원 및 전문성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또한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맞춤형 사례관리란, 단순히 서비스를 모아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수혜적 복지 개념을

지양하고, 아동 및 가정의 상태에 따라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대상 아동과 가정을 선정할 때, 우선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을 선별하고 선별된 시점에서부터 위기 수준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대상(고위기 또는 중위기)과 일반사례관리 대상(특정 영역 고위기 또는 중위기)으로 구분하여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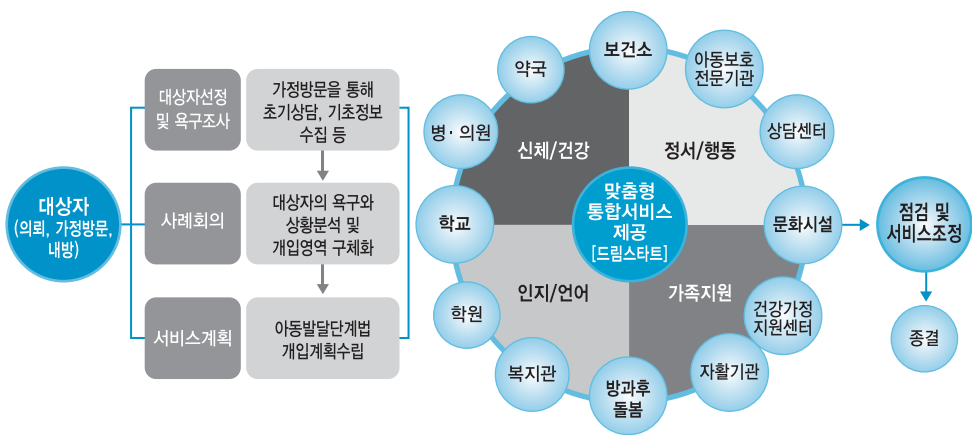
〈표 5-2-18〉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특 징	내 용
예방적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가 심각해진 뒤의 사후치료와 개입보다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예방과 보호의 사례관리를 지향
통합적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의 통합 :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서비스 방법론의 통합 : 개별실천, 집단실천, 가족실천, 지역사회실천 민간과 공공의 전달체계의 통합
맞춤형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아동 및 가족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자료 : 보건복지부(2014).

드림스타트 사업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체계화되었다. 시·군·구에 드림스타트가 설치되면, 드림스타트에서는 아동 욕구와 인프라 조사, 가정방문 인테이크(가정방문 인테이크는 통합서비스 제공 전 단계로서 개별아동과 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조사)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육·복지 등 세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치료,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 대하여는 방과후 교실을 연계하거나 지역 학원들과 연계하여 학력 보충 기회 등을 제공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로, 드림스타트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 복지관, 문화시설, 보육시설, 학원 등을 자원기관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2-8]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자료 : 보건복지부(2014).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33

8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최근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에게까지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저소득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아동 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을 갖도록 2009년 1월부터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대국민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디딤씨앗 통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설보호·가정위탁·소년소녀 가정·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일부)에게 전달이 된다. 단순히 개인 용돈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이 아닌 만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 혼자서 살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적게나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 0~18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아동이 저축한 만큼 국가가 추가로 적립(월 3만원 한도)하여 저축액이 두배가 되게 한다. 또한, 디딤씨앗 통장으로 모아진 저축은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디딤씨앗 통장이 기존의 기부와 다른 것은 우리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국가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의 디딤씨앗 통장에 매월 30,000원을 후원하면 국가에서 추가로 30,000원을 적립하여 총 60,000원이 아이들의 디딤씨앗 통장에 적립되게 된다. 즉, 기부한 후원금이 두 배가 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 주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 디딤씨앗 통장은 단순히 자립을 위해 저축액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모으게 하는 경제교육 효과도 있으며, 아이들 나름대로 디딤씨앗 통장으로 사회 진출 시 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하여 자립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장점도 있다.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일부(2011년 1999년생, 2012년 2000년생, 2013년 2001년생, 2014년 2002년생, 2015년 2003년생)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아동이 매월 6만원(아동 3만원, 국가 3만원)을 0~18세까지 적립시 1,730만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6월 말 현재 아동이 월평균 3만5천원을 저축하고 있다.

〈표 5-2-19〉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연도별	지원아동 수* (명)	월평균 적립액(원)	적립금 누계(억원)		
			아동	정부	계
2009년	32,197	28,186	258	223	481
2010년	34,608	29,416	377	308	685
2011년	41,180	30,903	510	409	919
2012년	46,703	31,792	670	527	1,197
2013년	51,670	35,172	854	660	1,514
2014년	56,479	36,601	1,061	807	1,868

주 : *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2014),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9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정부는 부모의 빈곤·실직·실종 등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시설보호, 입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호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 내 보호하는 것으로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주택형 숙사에서 소규모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우선 선정해 생계·의료 보호 및 교육보호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입양특별법을 개정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

요보호아동이 가정과 같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후된 아동시설부터 기능보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동시설의 다기능화와 함께 가정 단위의 형태로 전환하여 가정 친화적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령 전면 개정(2012. 8. 5.)을 통해 보육사 배치기준을 아동의 연령에 따른 기준으로 강화하여 보육사 배치를 확대하였다. 또한, 건강하고 건전한 아동양육을 위해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사무원, 영양사의 배치기준도 강화하였고, 자격증 기준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동 1인당 공간을 넓히고(3.3㎡ → 6.6㎡), 침실 1개의 정원도 현행 6인에서 3인 이하로 축소하였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사회부적응이나 정서불안 장애가 있는 아동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행동 개선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6억원, 약 600명)하였으며, 2013년 확대(8억원, 약 700명) 시행하였다.

〈표 5-2-20〉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계(현원)		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2008년	285	17,992	242	16,706	2	69	10	477	12	257	14	341	5	142
2009년	280	17,586	239	16,239	2	65	11	514	12	262	13	368	3	138
2010년	280	17,119	238	15,787	2	69	11	495	12	235	14	402	3	131
2011년	280	16,523	242	15,313	1	32	10	455	12	249	12	113	3	113
2012년	281	15,916	243	14,700	-	-	11	497	12	256	12	335	3	128
2013년	281	15,239	243	14,038	-	-	11	486	13	250	11	359	3	106
2014년	278	14,630	242	13,437	-	-	10	481	12	252	11	336	3	124

자료 : 보건복지부(2014),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시설아동을 중심으로 요보호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의지·자립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퇴소 후 실제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2008~2010년 3년간 전국 13개 시설(양육시설 11개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2개소)에서 4세 이상~24세 자립연장아동까지 자립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 전체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그 대상을 그룹홈, 가정위탁 아동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2012년 8월 5일 시행)에 자립지원 및 아동자립지원계획 수립, 전담기구설치, 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의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생활(퇴소) 아동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서비스에는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전세자금 우선 지원, 영구임대·주택 우선 분양, 자립지원시설 거주, 폴리텍대학 입학 우선 기회 부여, 뉴스타트 프로젝트/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나. 가정위탁 지원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200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2012년 8월 5일 시행)하여 가정위탁 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시·군·구에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위탁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14년 말 11,077세대, 14,385명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다.

〈표 5-2-21〉 가정위탁 보호 현황

(단위: 세대, 명)

연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2007년	11,622	16,200	6,975	10,112	3,651	4,850	996	1,238
2008년	11,914	16,454	7,488	10,709	3,436	4,519	990	1,226
2009년	12,170	16,608	7,809	10,947	3,438	4,503	923	1,158
2010년	12,120	16,359	7,849	10,865	3,365	4,371	906	1,123
2011년	11,630	15,486	7,463	10,205	3,351	4,260	816	1,021
2012년	11,030	14,502	7,230	9,732	3,037	3,831	763	939
2013년	11,173	14,584	7,352	9,829	3,068	3,803	753	952
2014년	11,077	14,385	7,162	9,550	3,089	3,816	826	1,019

자료 : 보건복지부(2014).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2004년 7월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월 12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2012년부터 위탁이 종결될 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준하여 자립지원정착금, 대학진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 및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을 위해서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위탁아동 1인당 150만원의 과세공제 혜택을 위탁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부모의 책임을 경감하고,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을 위해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16,454명의 아동으로 시작해, 2014년 12,744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험가입으로 사고나 질병에 의한 치료비 및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 받아 위탁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정위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1인당 기준 10만원의 상해보장비가 2013년에는 65천원으로 단가가 낮아졌지만, 담보내용은 확대되어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서 심리정서 검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은 2010년 월 16만원 이내(심리검사비 10만원)에서 2013년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20만원)로 증액하였으며, 치료기관 선정 시 상담사 요건 기준에서 한국미술치료학회를 추가하여

심리치료의 범위를 넓혔다. 진료비 청구 부분에서 심리치료지원사업과 관련한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월 2만원 이내, 택시 이용 시 월 4만원 이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가정을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전국에 208세대, 292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보조금(월 12만원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학용품비·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통해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후견인, 결연 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는 추진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 5~7인으로 가구를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형태로서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15년 정부지원 공동생활가정은 448개소로서 미지원 시설을 해소하였다.

정부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룹홈 생활 아동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퇴소 시 양육시설 퇴소아동과 같은 액수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체계가 요보호 아동에게 심리·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인식하에 시설보호 비중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그룹

흡)이 추가되었다.

〈표 5-2-2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 도	시 설		보호인원
	신고시설	지원시설	
2009년	397	290	1,993
2010년	416	348	2,127
2011년	460	416	2,241
2012년	489	416	2,438
2013년	479	416	2,481
2014년	476	416	2,588

자료 : 보건복지부(2014),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마. 입양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입양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2011년 8월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 절차 전반에 아동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하고 「입양특례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를 도입하여, 미혼모 등이 출산 후 일주일이나 지나야 입양동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양부모 자격심사 강화와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친가족 찾기 등을 위해 본인의 입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양정보공개청구권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2012년 8월부터 「입양특례법」이 시행되었다.

(1) 입양제도의 개선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된다. 이에 따라 입양 성립조건이 입양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이주허가)에서 법원의 입양허가로 강화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입양 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는 양부모 자격을 제한하고, 양부모가 될 자는 입양 성립 전 입양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부모 자격심사를 강화하였다.

친생부모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가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지나야 입양 동의를 할 수 있게 하여 숙려기간을 두었다. 한편, 입양 동의 전 입양기관은 친생부모가 직접 양육 시 양육정보 및 정부지원 내용, 입양의 효력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해 온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아동이 입양 의뢰된 때부터 5개월 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6개월 → 1년)하였으며 입양아동과 양부모 간 상호적응 관찰, 아동양육 정보 제공, 입양가정에 수시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1년 동안 3개월마다 가정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회 이상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입양된 사람은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기관은 중앙입양원의 입양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중앙입양원에 입양아동 및 그 친생부모, 양부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다.

(2) 국내 입양 활성화

요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귀가조치가 어려운 경우 우선 국내 입양을 추진하고 국내 입양이 어려울 경우 국외 입양조치 되도록 2007년부터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앞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입양 중 장애아동 입양비율이 매우 낮으며, 아동 양육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2003년 2월 9일)을 통해 입양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입양절차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13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표 5-2-23〉 국내·외 입양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내	1,461 (41.0)	1,332 (41.2)	1,388 (52.3)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국외	2,101 (59.0)	1,899 (58.8)	1,264 (47.7)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계	3,562 (100.0)	3,231 (100.0)	2,652 (100.0)	2,556 (100.0)	2,439 (100.0)	2,475 (100.0)	2,464 (100.0)	1,880 (100.0)	922 (100.0)	1,172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http://stat.mw.go.kr>).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은 기존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 1인당 월 55만 1천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2010년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월 57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 중증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월 62만 7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를 기존 연 252만원에서 2011년 2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012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당 지원액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심리치료 지원한도를 월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였다. 13세 미만 입양아동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2015년부터는 15세 미만까지 확대 지원한다.

〈표 5-2-24〉 국내 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지 원 내 용		지 원 액
입양비용 지원(2007년~)		100 ~ 270만원
양육수당(2007년~)		(만 15세 전까지) 월 15만원/월
의료급여(2005년~)		(만 18세 전까지) 의료급여 1종
심리치료지원(2010년~)		(만 18세 전까지) 월 20만원 한도/월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양육보조금(1996년~)	월 627천원, 월 551천원
	의료비(1996년~)	연간 260만원 한도

자료 : 보건복지부(2014).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보건복지부(2015). 아동분야 사업안내.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공개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1월부터 입양한 공무원에 대해 20일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기업 근로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에서부터 국내

보호 인프라 확충 등 국내 가정 보호, 입양 후 사후관리 및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등 국내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20



10 아동 급식 지원

정부는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발생하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 2000년 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하여 아동 건전육성에도모하고 있다. 아동 급식은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2001년 11월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급식 지원 확대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취약아동에 대해 조·석식,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 주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사업 시작 이후 1만5천여 명의 결식 또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 방학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여 급식을 실시하게 되어 여름방학에는 3만9천 명에 대하여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였다. 겨울방학에는 급식 지원 대상을 결식우려 아동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확대하는 적극적 급식 지원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학기 중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7만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이 지원되었다.

결식아동의 누락방지를 위해 2008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급식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에서 결식을 하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2009년에는 방학 중 급식 지원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주체를 담임교사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결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2005년 지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비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여 왔으나, 2009년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방학 중 급식 지원 대상자 증가(47만여 명)로 2009년 및 2010년에 한해 국비가 지원되었다.

급식 지원 대상자는 연중 조사하되, 전화, 서면 및 방문조사, 교사·통장·이장·반장·이웃 주민·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실시하고 급식 지원

대상자 조사·선정(방문조사 또는 전화상담 등)시 아동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stigma) 방지에 유의하고 있다. 아동 급식 전달 방법은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 급식소 급식과 인근 지역의 일반음식점 급식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였고 지역의 도시락업체를 통해 도시락배달이 불가하고 지역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식지원과 식품만 교환이 가능한 식품권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급식 전달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식 지원 대상의 확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 등 인적 자원과 종교·시민단체 등의 급식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물적 자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표 5-2-25〉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 대상자	13,610	13,792	235,202	214,009	257,276	271,606	415,519	476,444	485,811	471,961	438,042	416,092	381,838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5).



1 상담서비스

가. 청소년상담서비스 배경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빈번하게 경험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과 문제를 방지할 경우 성인기에 악화된 형태로 나타나 개인과 사회에 파괴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 내 청소년들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어려움들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개입 및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당시 체육부)가 청소년상담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청소년종합상담실(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2014년 현재 16개 시·도와 192개 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0년에 설치된 체육부 청소년종합상담실은 1993년에 청소년대화의 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법인화됨으로써 중앙지도 차원의 상담 시설과 지역 중심의 상담지원을 위한 기관설치 및 운영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과 학부모 및 지도자 대상의 제반 상담 서비스 제공과 각종 교육 및 연수, 학술 및 연구 활동, 각종 매체상담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이러한 서비스의 직·간접 제공에 힘써왔다. 그러던 중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의 보호 업무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 육성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등 청소년정책 환경의 일대 변혁이 단행되면서, 기존 청소년상담 기관의 위상과 역할 및 조직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 8월 2일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원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전문상담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업중단·취약계층·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되어 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급속한 문화적 변동,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기능의 붕괴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심화되었으나 이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전망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문제(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폭력피해(성·가정·학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교 밖 청소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위기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상담 활동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상담 활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 기존 활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해결 및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상담 기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교육 연수 및 상담 실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많은 청소년상담 전문인력을 배출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 영역별 보수교육을 통해 실제 청소년 상담업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선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밖에 지속적인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교육과 활성화 대회를 개최하여 또래상담자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였으며, 품성계발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지침서를 개발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양성교육을 지원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도를 위한 두드림·해밀 지도자 양성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업은 전문상담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체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청소년상담 증추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상담복지 전문기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상담복지 전문기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5-3-1〉 2014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단위 : 명)

구 분		수 료 인 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1,982
또래상담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7,597
품성개발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1,075
부모교육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1,258
센터직원 직무연수		305
센터직원 이러닝 직무연수		4,954
사업별 직무 연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	892
	두드림 전문인력 양성과정	525
	해밀 전문인력 양성과정	404
	두드림·해밀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15
	자살예방교육 지도자(학교폭력예방TF)	166
총 계		19,173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4).

2014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전화상담의 이용건수는 5,795건으로 나타났다. 대면상담(개인, 집단 등)의 총 건수는 2,944건이었으며, 매체상담(전화상담)은 총 2,851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상담의 문제 유형별 상담건수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2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 문제 21.1%와 가족 문제 20.6%가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에서는 기타 및 정보제공을 제외하고 정신건강 1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인관계가 8.4%, 성 문제가 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 시·도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황과 실적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 8월 2일 전부 개정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서 지역의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 운영,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심리상담 및 놀이치료, 포레 상담사업, 학부모상담자원봉사회 운영, 청소년상담관련 심리교육, 지도자 양성,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0년에 대구, 광주에 최초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도에 부산(현재 진구), 대전(현재 동구), 충북(청주), 1992년도에 인천(현재 남구), 전북(전주), 1993년도에 경기(수원), 강원(춘천), 경남(창원), 1994년도에 충남(천안), 전남(순천, 현재 무안), 경북(안동), 1995년도에는 제주(제주), 1997년도에 서울(중구), 1999년 울산(중구)에 설치되었다. 이후 2006년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8월부터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고자 192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로 운영재원을 지원 받고 있다. 지역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초자치단체 수 대비 설치비율은 전국 82.8%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사회 내 전문 인력 활용 등의 통합적이고 문제영역별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5-3-2〉 2014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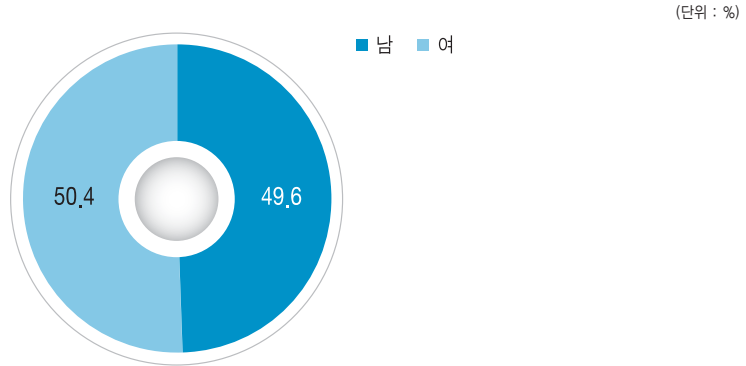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도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설치수	24	6	2	8	4	1	4	1	31	9	12	15	14	22	17	20	2
시·군·구수	(25)	(16)	(8)	(10)	(5)	(5)	(5)	(1)	(31)	(18)	(12)	(15)	(14)	(22)	(23)	(20)	(2)
설치율(%)	96	38	25	80	80	20	80	100	100	50	100	100	100	100	74	100	100

자료 : 여성가족부(2014).

(3)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활동

2014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연간상담건수는 4,833,722건으로 지난해 이용건수(4,788,011건)보다 0.95%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2,396,099건(49.6%), 여자 2,437,623건(50.4%)으로 남자 이용자보다 여자 이용자가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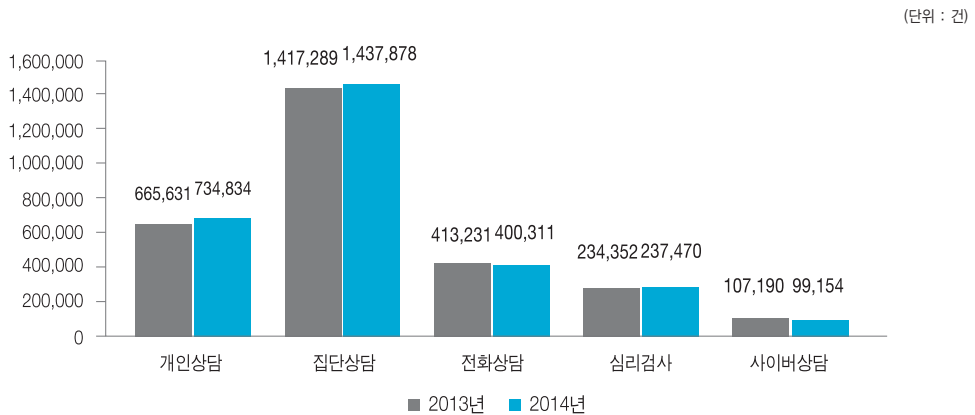
[그림 5-3-1] 2014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 성별 비율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4).

또한, 2014년 상담서비스 유형별 이용추세를 살펴보면, 집단상담이 29.7%(1,437,878건)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개별지원서비스 24.5%(1,183,499건), 개인상담 15.2%(734,834건), 그룹지원 서비스 14.4%(697,890건), 전화상담 8.3%(400,311건), 심리검사 2.9%(142,593건), 사이버상담 2.1%(99,1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은 집단상담의 특성상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여러 회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서비스별 이용자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4).

청소년과 성인이용자를 비교하면 청소년이 80.8%(3,907,240건), 성인이 19.2%(926,482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자 중 초등학생이 19.7%(950,630건), 중학생 26.5%(1,282,202건), 고등학생 23.2%(1,122,312건), 대학생 1.7%(80,556건), 근로청소년 0.7%(35,010건), 무직청소년 9.0%(436,530건)로 중학생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성인 이용자는 학부모가 10.2%(495,239건)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지도자가 6.5%(315,238건), 일반 성인이 2.4%(116,005건)이었다.

〈표 5-3-3〉 2014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별·대상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 분	성 별			대 상 별										
	남자	여자	소계	초	중	고	대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일반인	소계	
개인상담	384,580	350,254	734,834	180,541	226,773	169,186	12,941	5,822	52,635	69,157	15,705	2,074	734,834	
집단상담	722,244	715,634	1,437,878	418,201	372,516	343,317	13,404	5,745	161,293	59,059	56,735	7,608	1,437,878	
전화상담	179,096	221,215	400,311	14,424	47,889	56,191	10,380	3,379	24,945	99,531	78,623	64,949	400,311	
심리 검사	개별	48,159	46,718	94,877	21,554	35,078	24,745	2,346	530	3,848	6,013	314	449	94,877
	집단	73,782	68,811	142,593	29,726	58,924	41,226	4,228	498	1,865	3,424	1,348	1,354	142,593
사이버 상담	메일	17,204	36,493	53,697	8,716	23,146	14,513	1,780	42	746	855	1,128	2,771	53,697
	채팅	16,119	29,338	45,457	3,098	7,993	16,171	6,544	433	6,291	564	194	4,169	45,457
사업수행 프로그램	18,941	16,954	35,895	8,573	10,753	12,970	142	161	1,672	562	868	194	35,895	
지원 서비스	개별	609,363	574,136	1,183,499	135,353	284,978	268,239	16,172	14,926	150,617	201,862	101,678	9,674	1,183,499
	그룹	323,094	374,796	697,890	129,811	212,729	174,531	12,538	3,434	32,187	53,784	56,870	22,006	697,890
기타상담	3,517	3,274	6,791	633	1,423	1,223	81	40	431	428	1,775	757	6,791	
합 계	2,396,099	2,437,623	4,833,722	950,630	1,282,202	1,122,312	80,556	35,010	436,530	495,239	315,238	116,005	4,833,722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4).

2014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볼 때 학업 및 진로 문제가 26.3%(1,047,704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19.5%(779,740명), 일탈 및 비행 11.9%(474,855명), 정신건강 9.7%(385,107명), 가족 7.4%(294,675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학업 및 진로(전년도 25.4%), 정신건강(전년도 9.2%)에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겪는 학업 및 진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진로정보탐색 37.9%, 학업흥미/학업 동기 부족 18.0%, 진로의식 부족 13.4%, 학교생활부적응 10.3%, 학습능력 부족 7.7%, 등교거부 2.8%, 시험불안/학업 스트레스 1.8% 순이었다.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친구관계 고민이 73.8%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및 왕따 12.0%, 이성교제 2.1%, 교사와의 관계 1.6%, 어른과의 관계 1.0% 순이었다. 일탈 및 비행 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43.5%, 금품갈취/절도/도박 17.0%, 가출 13.1%,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6.8%, 비행친구와 어울림 5.8%, 학교 외의 폭력 3.1%, 늦은 귀가/잡은 외박 2.2% 순이었다. 그밖에 정신건강 문제에서는 우울/위축 문제가 31.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5-3-4〉 2014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외모	컴퓨터/인터넷 사용	정보제공	법률정보	활동	기타	합계	
개인 상담	남	33,520	47,189	88,669	5,446	46,068	64,539	55,902	4,038	35,089	1,368	227	1,442	1,083	384,580	
	여	43,728	22,844	82,490	4,105	37,027	85,968	49,645	3,370	16,851	2,597	29	1,529	71	384,580	
	합계	77,251	70,033	171,159	9,551	83,095	150,509	105,547	7,408	51,940	3,965	256	2,971	1,154	734,834	
집단 상담	남	6,659	94,397	264,516	16,774	25,479	157,506	48,531	1,908	83,566	5,635	396	16,887	0	722,244	
	여	32,359	75,869	220,256	9,695	28,079	191,373	58,052	1,699	70,760	7,345	406	19,741	0	715,634	
	합계	39,018	170,266	484,772	26,469	53,558	348,879	106,583	3,607	154,316	12,980	802	36,628	0	1,437,878	
전화 상담	남	7,960	14,141	19,918	11,054	6,427	12,836	12,438	1,456	8,900	36,703	395	2,175	44,693	384,580	
	여	14,977	13,876	24,824	4,681	7,335	26,890	17,578	1,193	7,429	82,277	410	4,264	15,481	384,580	
	합계	22,937	28,017	44,742	15,735	13,762	39,726	30,016	2,649	16,329	118,980	805	6,439	60,174	400,311	
심리 검사	개별	남	3,461	4,757	12,949	520	7,312	5,565	6,189	289	6,638	272	20	17	170	384,580
		여	4,208	2,001	13,671	293	8,362	7,380	6,158	238	3,901	434	5	54	13	384,580
		합계	7,669	6,758	26,620	813	15,674	12,945	12,347	527	10,539	706	25	71	183	94,877
	집단	남	200	3,172	35,074	168	21,204	4,452	3,957	20	5,383	112	0	40	0	73,782
		여	568	2,390	33,151	150	20,617	4,744	2,766	25	4,170	151	0	79	0	68,811
		합계	768	5,562	68,225	318	41,821	9,196	6,723	45	9,553	263	0	119	0	142,593
사이버 상담	메일	남	1,405	500	3,750	2,034	836	4,763	1,153	1,125	740	811	38	43	6	17,204
		여	3,563	377	5,496	5,377	1,559	13,169	2,702	1,995	606	1,547	27	45	30	36,493
		합계	4,968	877	9,246	7,411	2,395	17,932	3,855	3,120	1,346	2,388	65	88	36	53,697
	채팅	남	1,113	296	2,935	641	867	2,933	2,463	307	141	1,728	87	55	2,553	16,119
		여	3,229	450	3,858	624	1,396	7,689	3,711	468	148	3,039	116	52	4,558	29,338
		합계	4,342	746	6,793	1,265	2,263	10,622	6,174	775	289	4,767	203	107	7,111	45,457
사업수행 프로그램	남	343	2,429	3,224	1,671	466	2,602	1,492	88	5,878	425	3	320	0	18,941	
	여	520	941	2,985	1,433	411	2,934	1,769	17	4,841	575	1	527	0	16,954	
	합계	863	3,370	6,209	3,104	877	5,536	3,261	105	10,719	1,000	4	847	0	35,895	
지원 서비스 (개별)	남	53,120	92,340	177,632	6,850	48,933	80,477	75,514	6,923	48,821	13,346	340	3,907	1,160	609,363	
	여	76,023	49,379	148,516	8,067	42,130	113,152	77,049	6,423	19,589	27,750	89	5,896	73	1,792,862	
	합계	129,143	141,719	326,148	14,917	91,063	193,629	152,563	13,346	68,410	41,096	429	9,803	1,233	1,183,499	
기타 상담	남	253	483	704	25	252	315	283	28	266	583	5	91	229	3,517	
	여	253	167	530	30	191	398	325	39	99	1,115	1	92	34	10,308	
	합계	506	650	1,234	55	443	713	608	67	365	1,698	6	183	263	6,791	
총 합계	남	108,034	259,704	609,371	45,183	157,844	335,988	207,922	16,182	195,412	60,983	1,511	24,977	49,894	2,073,005	
	여	179,428	168,294	535,777	34,455	147,107	453,697	219,755	15,467	128,394	126,830	1,084	32,279	20,260	2,062,827	
	합계	287,465	427,998	1,145,148	79,638	304,951	789,687	427,677	31,649	323,806	187,813	2,595	57,256	70,154	4,135,832	

주 : 집단지원서비스의 경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산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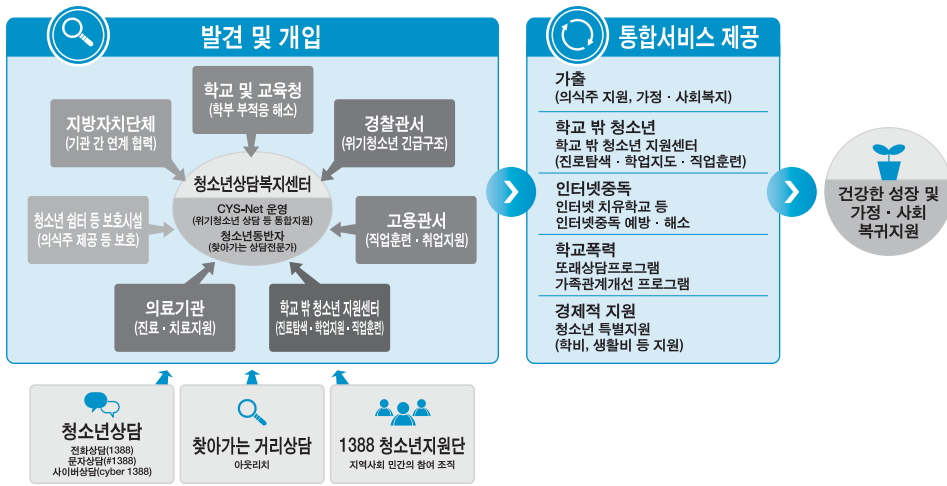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4).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속적인 이혼율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가장의 실직 등으로 가정해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별로 인프라의 편차가 있거나 상호협력체계가 부재하여 대상자 조기발견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정신건강문제, 가출, 폭력피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림 5-3-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자료 : 여성가족부(2014).

CYS-Net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CIS-Net 사업은 2014년 전국 16개 시·도 및 184개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242,230명의 위기청소년에게 1,881,389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다. 더불어, CIS-Net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계망의 범위를 민간사회로 확대하여 가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견·긴급구조 및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해왔고, 점차적으로 의료, 법률, 자활 등의 전문분야에서도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1388 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388 청소년지원단은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며 CYS-Net의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CYS-Net 서비스 이용 실인원은 전년도 대비 32.1% 상승한 242,230명이고 남자가 50.6% (122,681명)이며, 여자가 49.4%(119,549명)로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 2014년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단위 : 명)

연 도	남 자	여 자	합 계
2008년	40,977	40,025	81,002
2009년	47,825	50,195	98,020
2010년	67,035	61,391	128,426
2011년	77,836	67,540	145,376
2012년	78,900	70,407	149,307
2013년	94,901	88,427	183,328
2014년	122,681	119,549	242,230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4).

CYS-Net을 통해 청소년에게 지원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전체 1,881,389건으로 전년도 대비 2.0% 하락하였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66.4%로 가장 많이 지원된 서비스로 나타났고,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이 13.1%, 여가 및 문화활동지원 9.6%, 교육 및 학업 지원이 5.3%, 사회적 보호지원이 3.7%, 자활지원이 1.1%, 의료지원이 0.8%, 법률자문 및 권리 구제지원이 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6〉 2014년 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 건)

구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합계
2008년	286,069	30,497	80,857	10,740	2,754	5,759	1,362	16,243	434,281
2009년	504,540	43,517	109,428	18,210	3,387	5,431	1,283	29,793	715,589
2010년	882,001	62,456	225,721	84,535	11,544	6,254	1,728	129,255	1,403,494
2011년	1,102,858	64,147	237,072	146,621	18,565	8,513	4,981	191,135	1,773,892
2012년	1,094,027	67,300	228,533	172,502	15,486	6,872	1,409	189,707	1,775,836
2013년	1,207,143	53,946	255,286	101,809	15,475	5,036	3,749	278,829	1,921,273
2014년	1,249,266	68,958	246,078	99,013	20,317	14,391	2,487	180,879	1,881,389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4).

3 청소년전화 1388

2005년 4월 27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가출청소년 상담전화 1588-0924,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전화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전화 등을 1388로 통합(2005년 9월 1일)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관문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일반국민 누구나 청소년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화로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및 수련활동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치료 등 청소년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388 전화 일평균 이용 수는 2005년 9월 통합 이후 하루 17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도 270건, 2007년도 666건, 2008년 969건, 2009년 1,164건, 2010년 1,158건, 2011년 1,185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청소년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사이버 및 모바일 상담 등 상담채널이 다양화되면서 2013년 이후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16개 시·도 및 192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국 208개 센터에서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였다. 실제로 1388 전화실적은 다소 감소추세이나, 청소년 사이버상담(13년 89,592건 → '14년 91,443건)과 모바일(#1388) 문자 및 카카오톡 상담(13년 226,058건 → '14년 259,527건) 유사 상담실적 등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2014년 청소년전화 1388 주요 실적

(단위 : 건)

주요사업 내용		실 적		증 감	
		2013년(A)	2014년(B)	B-A	%
청소년전화1388 이용 실적	통화횟수	413,231	400,311	△ 12,920	△ 3.1
	일평균	1,132	1,097	△ 35	△ 3.1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4).

한편, 청소년전화 1388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2013년 제작된 1388 상담서비스 홍보 동영상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 보드(수도권), 고등학교 내 스쿨터치(전국 400여개)를 통해 송출하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했으며, 인터넷포털 '네이버', '다음' 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 페이스북 이벤트 마케팅, EBS 라디오 '경청' 등 방송 매체 홍보와 월간 웹진 홍보, 전국 반상회보를 통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였다.

〈표 5-3-8〉 청소년전화 1388 호소문제 유형별 이용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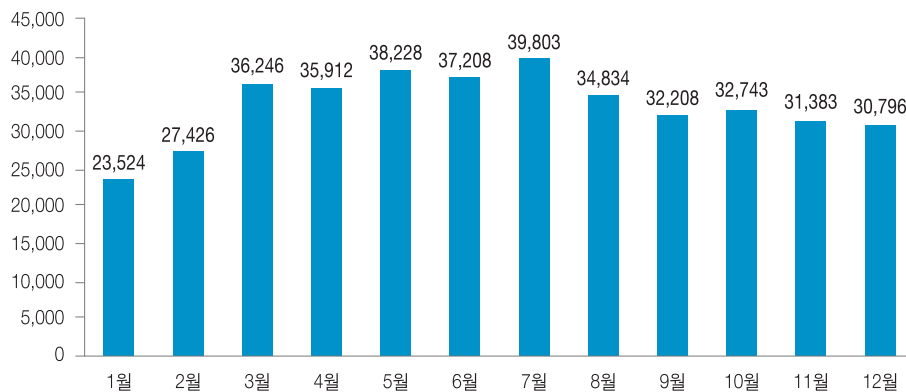
(단위 : 건)

구 분	가족	일탈 / 비행	학업 / 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 / 외모	컴퓨터 / 인터넷 사용	정보 제공	법률 정보	활동	기타	합 계
2008년	25,990	48,786	36,118	21,950	9,098	22,218	13,605	2,787	9,289	121,172	1,353	5,175	36,037	353,578
2009년	25,937	40,669	35,118	21,473	9,901	25,532	16,419	2,522	12,101	181,906	976	7,649	44,539	424,742
2010년	22,839	41,690	34,725	21,702	9,775	24,246	16,888	2,436	13,901	157,544	857	5,692	70,348	422,643
2011년	25,687	44,511	48,648	17,935	11,967	30,449	21,231	2,617	19,047	141,464	880	6,509	61,671	432,616
2012년	24,477	36,524	43,471	16,449	12,328	33,295	27,987	2,416	16,382	129,779	975	7,814	54,034	405,931
2013년	23,437	30,682	42,580	17,519	13,152	37,555	30,238	2,739	16,179	135,764	843	6,169	56,374	413,231
2014년	22,937	28,017	44,742	15,735	13,762	39,726	30,016	2,649	16,329	118,980	805	6,439	60,174	400,311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4).

[그림 5-3-4] 2014년 청소년전화 1388 월별 이용실적

(단위 : 건)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4).

4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은 자신감의 약화와 사회적 도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로 인해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상담 전문가가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후반, 국가 청소년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중심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에 힘쓰고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s)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청소년동반자들은 위기 청소년에게 각종 상담, 심리·정서적 지지, 자활 지원, 학습·진로 지도,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도에 4개 시·도(서울·경기·광주·경남)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동반자 223명이 활동하였고, 2008년도에는 16개 시·도로 확대 운영되면서 청소년동반자도 470명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800명의 동반자가 추가 선발되어 시·도 및 시·군·구 센터에서 약 1,270명의 청소년동반자가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많은 위기 청소년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880명의 동반자가 활동하였고, 2012년은 100명 증원된 980명, 2013년도에는 5명 증원된 985명, 2014년도에는 15명 증원된 1,000명의 청소년 동반자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되어 활동함에 따라 33,471명의 청소년이 지원받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에 의해 보다 많은 고위기 청소년들이 개인 특성과 필요에 따른 수준 높은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표 5-3-9〉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청소년동반자 수	470	1,270 (추경 800명)	880	880	980	985	1,000
수혜 청소년 수	14,510	24,515	25,675	26,324	31,226	31,190	33,471

자료 : 여성가족부(2014).

5 또래상담활동

또래상담은 지난 1994년 청소년이 뽑은 고민상담 대상 1순위는 '친구'라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 준상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다양한 청소년 교육 및 상담 관련 현장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은 또래상담은,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가. 또래상담 내용

또래상담은 일정기간 상담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조력하는 상담활동으로, 다양한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청소년 자치 활동이다. 또래상담자는 같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등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력활동이 가능하도록 훈련받는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으로서,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솔리언(solian)'이란 solve(해결하다) + ian('사람'을 뜻하는 접미어)의 합성어로 '친구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솔리언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기본 교육은 12시간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좋은 친구 되기', '대화하는 친구 되기', '도움 주는 친구 되기'라는 주제의 집단토의와 역할연습, 모델링 등의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좋은 친구 되기(Friendship)는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된 훈련 내용으로, 친구의 의미, 친구관계 살펴보기, 친구관계 걸림돌,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기, 우정곡선 그리기 등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화하는 친구 되기(Counselorship)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화의 자세, 친구의 마음 공감하기, 공감 연습하기, 대화 잘 이끌어 나가기(어기역차 전략 이해하기 및 연습하기), 감정조절 배우기(잠하들셋 기법 이해하기 및 연습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도움 주는 친구 되기(Leadership)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 돕기와 관련된 훈련 내용으로, 도움 주는 대화 배우기(원무지계 전략 이해하기 및 연습하기), 대화 종합 연습(대화전략을 활용한 역할극 꾸미기), 도움되는 활동 찾기(어떤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또래상담자 역할 연습, 전문 상담자 연계기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3-10〉 솔리언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내용

회기	프로그램명	프 로 그 램 내 용
1	들어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 프로그램 소개, 또래상담의 의미, 또래상담자의 역할 인식 • 자기소개 및 프로그램 참여 동기 나누기 • 함께 지킬 약속 정하기 •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친밀감 및 신뢰감 형성하기
2	친한 친구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나누기 • '내가 생각하는 친구의 의미' 표현하기
3	나의 친구관계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벽 뚫기' 게임을 통한 따돌리는 혹은 따돌림당하는 간접 경험하기 • 친구관계 유형 살펴보기 및 자신의 친구관계 나누기
4	친구에게 다가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관계에서의 걸림돌 알아보기 • 우정곡선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걸림돌 해결방법 및 친구에게 다가가는 방법 나누기
5	대화하는 친구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자의 기본자세인 '적극적 경청' 연습하기 • 감정카드 및 역할극을 통한 '공감하기' 연습하기
6	대화 잘 이끌어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를 이끌어가는 전략 알아보기 • '어기역차 전략' 이해하기, 연습하기, 실습하기
7	감정조절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대처방법 탐색 및 감정 조절방법 배우기 • '잠하돌셋 전략' 이해하기, 연습하기, 실습하기 • I-message 이해하기, 연습하기
8	도움 주는 대화 방법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 알아보기 • '원무지계 전략' 이해하기, 연습하기, 실습하기
9	대화 종합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청하기, 공감하기, 어기역차 전략, 잠하돌셋 전략, 원무지계 전략을 활용한 역할극 준비 및 발표하기
10	도움되는 활동들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 찾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찾기 • 또래상담자의 역할 및 전문가 연계 상황 알아보기
11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 프로그램 복습하기 • 또래상담자의 자세 및 마음가짐 낭독하기 • 롤링페이퍼 작성 및 소감 나누기, 프로그램 평가, 수료식
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 역할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의 유형, 피해학생 징후, 돕는 방법 배우기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 역할 및 활동 계획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또한, 심화교육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또래상담자들을 대상으로 8시간 동안 운영되는 훈련프로그램으로, 크게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친구를 돕는 또래상담자', '공감배려문화를 촉진시키는 또래상담자'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6가지 또래상담자의 역할별 훈련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장하는 또래상담자'는 또래상담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또래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내용이다. '친구를 돕는 또래상담자'에 포함되는 세 가지 역할은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정서적 지지자',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를 행동으로 도와주는 '조력자', 그리고 친구의 고민을 상담하여 해결을 돕는 '문제해결자'이며,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다양한 상담기법을 훈련한다. 마지막으로 '공감배려문화를 촉진시키는 또래상담자'에 속하는 두 가지 역할은 활동영역에 따라 '학교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지역사회 공감배려문화 촉진자'로 구분되고 각각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구성원간의 공감, 소통, 배려의 문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각 역할별 훈련프로그램은 교육과 활동파트로 나누어져 이론과 기법을 습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또래상담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5-3-11〉 슬리언 또래상담 심화훈련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또래상담자의 역할	회기별 프로그램	내 용
-	-	들어가기	• 학교폭력, 또래상담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또래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1. 나는 또래상담자다	• 내가 생각하는 나 • 나는 내가 관리한다
		2. 또래상담자 행동다짐	• 또래상담자의 역할한계 알기 • 또래상담자 행동 다짐 만들기
친구를 돕는 또래상담자	(정서적) 지지자	3. 또래 토닥이 - 이해하기	• 다양한 감정의 단어와 수준 알아보기 • 감정반영에 대해 알아보기
		4. 또래 토닥이 - 실천하기	• 대면상담 • 사이버상담 • 다양한 감정 다루기
	조력자	5. 또래 도우미 - 이해하기	• 관심 VS. 무관심 • 도움 행동에 대한 이해 • 도움 행동의 효과
		6. 또래 도우미 - 실천하기	• 도움 행동의 3단계 "다 알죠?" • 다가가기 • 알아보기 • 조력하기
	문제해결자	7. 갈등 다루기	• 갈등의 이해 • 갈등이 있는 친구를 돕는 대화 • 갈등을 지닌 두 친구 사이의 화해 돕기
		8. 사례회의	• 사례지도의 필요성 • 사례기록지 작성 및 사례 선정 • 또래상담자 간 사례지도

프로그램명	또래상담자의 역할	회기별 프로그램	내 용
공감배려 문화를 촉진시키는 또래상담자	학교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9. 심리극 - 익히기	• 연기 마당 • 심리극 마당(이중자아 기법, 빈 의자 기법)
		10. 심리극 - 공연하기	• 이야기 극화 만들기 • 심리극 공연 단계 이해하기
	지역사회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11. 지역 이꿈이 - 익히기	• 공동체 의식에 대해 알아보기 • 지역 내 상담기관 연계하기
		12. 지역 이꿈이 - 활동하기	• 지역연합회 활동 • 지역 캠프 참여 • 캠페인 활동 • 길거리 이동 상담하기 • 자원봉사 활동 • 튜터링 활동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나.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사업

또래상담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사업을 주관하며, 각 시·도 교육청 및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협력하고 있다. 1994년부터 시작된 또래상담 사업은 그동안 각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급되어 오다가 2012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되었다.

또래상담의 취지는 함께 생활하는 또래상담자의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있으며, 교사나 부모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규모 또래상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지도자 및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해 또래상담 전문지도자 양성, 또래상담자 교육 및 상담활동에 대한 슈퍼비전 실시, 지도자 지침서·학교운영지침서·또래상담자 수첩·배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래상담 홈페이지(www.peer.or.kr)를 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현장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래상담 온라인 수첩을 개발하여 또래상담자 스스로 활동을 쉽고 효율적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또래상담 운영학교의 지역·대상·운영형태별 관리, 전국 또래상담 전문지도자·지도자·또래상담자에 대한 DB 전산시스템을 구축 관리하고 있다.

둘째, 또래상담사업의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우수사례 및 우수 학교운영 사례 공모전 개최, 우수

사례집 제작 및 배부, 언론 홍보, 또래상담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 우수작 시상 등의 사업 등을 통해 또래상담 활동의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센터-학교 간 또래상담 운영 노하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또래상담 연합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도교사 간담회, 또래상담자 캠프, 사례모임, 보수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과의 소통의 기회 마련 및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래상담 시범학교(초·중·고 각 1개교씩)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학교 급별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침서 및 교사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학교에 보급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개최, 17개 시·도 권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 컨설팅 실시, 또래상담 운영학교 방문, 관계자 간담회 및 사업평가회 개최 등을 통해 또래상담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함께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또래상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에 힘을 쏟고 있다. 신문, TV, 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자체 홍보영상 제작 배포, 유명인 홍보대사 위촉을 통한 홍보 포스터·리플릿 제작 및 보급, 또래상담 UCC 공모전,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 지역 아웃리치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대상 홍보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4년 한해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을 통해 전국의 6,396개 학교에서 또래상담이 운영되었으며, 7,277명의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교육을 이수하였고, 104,650명의 또래상담자가 훈련을 받았다.

〈표 5-3-12〉 2014년 또래상담 사업 실적

사업 구분	목 표	실 적	달 성 률
또래상담 운영학교 운영	5,000개교	6,396개교	127.9%
또래상담 지도교사 양성	6,500명	7,277명	111.9%
또래상담자 양성	65,000명	104,650명	161.0%

자료 : 여성가족부(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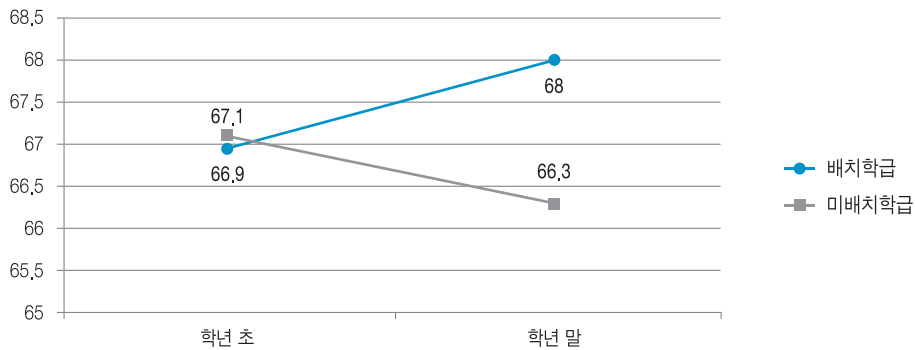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또래상담자 미배치 학급과 배치학급의 또래상담 운영 전후의 효과성(학교생활 만족도, 또래지지, 배려 정도)을 분석한 결과, 배치학급에서는 학기 말 학교폭력 예방 효과성 점수가 학기 초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배치 학급의 학기 말 학교폭력예방 효과성 점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각 학급 또래상담자들의 활동이 학생들의 또래지지와 배려행동을 촉진시켜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표 5-3-13〉 2014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성 분석

구 분		배치 학급		미배치 학급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학교폭력예방 효과성		66.9	68.0	67.1	66.3
세부 항목	또래지지	69.4	71.0	69.2	69.6
	배려	63.2	64.0	62.8	63.2
	학교생활 만족도	68.2	69.0	69.4	66.2

자료 : 여성가족부(2015).

[그림 5-3-5] 2014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학교폭력예방 효과성)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012~2014년의 고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현재 전국의 6,732개교에서 또래상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3만 명의 또래상담자들이 활동 중에 있다. 또한, 17개 시·도 단위로 운영되어 온 지역 또래상담연합회가 전국 시·군·구별로 구축되어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제 4 장

청소년의 건강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014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만 6~17세)의 체격검사 결과, 17세의 평균 신장은 남학생이 173.4cm, 여학생이 160.9cm로 2013년 남학생 173.2cm, 여학생 160.8cm와 비교할 때 남학생은 0.2cm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0.1cm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7세의 평균 신장을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남학생은 0.2cm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은 0.7cm 감소하였다.

2014년 연령별 체격의 성차를 살펴보면, 6~8세까지는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장이 1cm 이상 크지만, 9세에는 0.7cm로 그 차이가 줄어들다가 10~11세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신장이 커진다. 그러나 12세가 되면서부터 다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신장이 커지기 시작(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신장 차이 - 12세: 1.3cm, 13세: 5.7cm, 14세: 8.6cm, 15세: 11.1cm) 하여 16세가 되면 12c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단위 : cm)

측정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7년	119.8	118.3	125.5	124.3	130.9	129.9	135.9	135.5	141.0	142.0	146.8	148.4
1998년	119.8	118.5	125.7	124.0	130.9	129.5	136.2	135.6	141.2	142.0	147.3	148.8
1999년	120.1	118.6	125.7	124.3	131.0	129.8	136.2	135.5	141.6	142.4	147.5	149.1
2000년	120.1	118.9	125.8	124.9	131.3	130.1	136.6	136.0	141.9	142.3	148.1	149.2
2001년	120.3	118.8	126.2	124.8	131.4	130.3	136.8	136.2	142.2	142.5	148.2	149.1
2002년	120.3	119.1	126.4	125.0	131.9	130.6	136.9	136.5	142.4	143.1	148.6	149.6
2003년	120.8	119.4	126.7	125.4	132.2	130.9	137.1	137.0	142.9	143.5	148.7	149.8
2004년	120.6	119.6	126.7	125.2	132.1	131.1	137.6	137.0	142.9	143.7	149.1	150.3
2005년	120.6	119.3	126.5	125.3	132.0	131.0	137.3	137.1	143.0	143.7	149.1	150.3
2006년	121.7	120.2	127.1	125.8	132.6	131.5	138.7	138.3	143.5	144.4	150.0	150.9
2007년	121.6	120.4	127.4	126.1	132.9	131.8	138.6	138.4	143.7	144.7	150.4	151.1
2008년	122.0	120.7	127.4	126.2	133.1	131.7	138.7	138.5	143.5	144.6	150.2	151.0
2009년	121.9	120.6	127.7	126.2	133.0	132.0	138.3	138.0	143.9	144.7	150.5	151.0
2010년	121.8	120.6	127.7	126.4	133.1	132.0	138.4	138.1	144.0	144.6	150.2	151.2
2011년	121.7	120.5	127.8	126.4	133.5	132.3	138.7	138.4	143.9	144.8	150.4	151.1
2012년	121.6	120.2	127.8	126.5	133.4	132.3	139.1	138.5	144.1	144.9	150.6	151.1
2013년	120.6	119.6	125.5	124.4	131.7	130.4	137.1	136.6	142.7	143.2	148.8	149.5
2014년	120.5	119.4	125.9	124.5	131.6	130.3	137.1	136.4	142.5	142.7	148.9	149.8

측정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7년	153.7	153.5	160.3	156.7	165.7	158.6	169.6	159.2	171.6	160.0	172.2	160.3
1998년	153.6	153.7	160.8	156.8	166.3	158.7	169.8	159.3	172.0	159.9	172.6	160.5
1999년	154.3	153.9	161.3	157.0	166.6	158.7	170.3	159.6	171.9	159.9	172.7	160.6
2000년	154.9	154.4	161.8	157.3	167.2	158.9	170.4	159.5	172.2	160.2	173.0	160.5
2001년	155.2	154.3	162.2	157.5	167.2	159.0	170.9	159.7	172.2	160.2	173.1	160.7
2002년	155.5	154.3	162.4	157.5	167.2	159.3	170.7	160.0	172.5	160.3	173.3	160.9
2003년	155.9	154.8	162.5	157.6	167.7	159.3	171.1	160.1	172.6	160.6	173.6	161.0
2004년	156.2	154.8	163.3	157.7	167.8	159.4	171.4	160.3	172.7	160.6	173.6	161.6
2005년	156.4	154.9	163.2	157.9	168.5	159.3	171.6	160.2	172.8	160.7	173.6	161.0
2006년	158.1	156.1	164.2	158.2	168.7	159.5	171.8	160.4	173.0	160.7	173.9	161.1
2007년	158.3	156.1	164.2	158.3	169.2	159.7	172.0	160.4	173.1	160.7	173.9	160.9
2008년	158.1	155.9	164.3	158.4	169.1	159.7	172.0	160.5	173.3	160.8	173.9	161.2
2009년	157.8	155.7	164.3	158.0	169.1	159.6	171.9	160.4	173.2	160.7	173.8	161.1
2010년	157.9	155.5	164.2	158.2	168.9	159.6	171.8	160.6	173.0	160.7	173.7	160.9
2011년	158.2	155.8	164.6	158.1	168.9	159.5	171.8	160.3	173.1	160.7	173.7	161.1
2012년	158.2	155.7	164.3	158.0	168.7	159.3	171.8	160.2	172.9	160.6	173.6	160.9
2013년	156.3	154.8	163.0	157.6	167.9	159.2	171.2	160.0	172.6	160.5	173.2	160.8
2014년	156.4	155.1	163.4	157.7	168.1	159.5	171.3	160.2	172.7	160.5	173.4	160.9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체중은 17세 남학생 평균 68.1kg, 여학생은 56.7kg으로 2013년 남학생 평균 68.2kg에 비해 0.1kg 감소하였으며, 여학생 평균 56.0kg에 비하여 0.7kg 증가하였다.

2014년 남학생 체중과 여학생 체중은 평균 11.4kg 차이가 있었고, 10년 전인 2004년에 남학생은

68.1kg, 여학생은 55.8kg으로 평균 12.3kg 차이가 있었다. 2014년 남학생의 체중은 2004년과 동일하고,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여학생의 체중은 0.9kg 증가하였으며, 남녀 간 평균체중의 차이는 0.9k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단위 : kg)

측정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7년	23.1	21.9	25.9	24.6	29.2	27.9	32.6	31.5	36.4	36.0	40.5	40.8
1998년	23.1	22.1	26.0	24.9	29.3	27.8	32.8	31.5	36.4	35.9	40.6	40.9
1999년	23.2	21.9	26.1	24.9	29.3	28.0	32.8	31.4	36.5	36.1	41.0	41.2
2000년	23.3	22.4	26.4	25.4	29.9	28.5	33.6	32.2	37.8	36.3	42.0	41.8
2001년	23.5	22.4	26.9	25.5	30.3	28.7	34.1	32.5	38.1	36.8	42.7	41.8
2002년	23.8	22.7	27.1	25.8	30.7	29.4	34.6	32.9	38.8	37.6	43.9	42.8
2003년	23.8	22.8	27.2	25.9	30.8	29.3	34.7	33.3	39.2	37.8	43.8	43.1
2004년	24.0	22.8	27.1	25.9	30.7	29.4	34.9	33.1	39.3	37.2	44.4	43.2
2005년	24.0	22.9	27.3	26.0	31.0	29.4	34.8	33.4	39.4	38.1	44.5	43.6
2006년	24.5	23.2	27.7	26.4	31.6	29.7	35.8	34.0	39.8	38.6	44.7	43.7
2007년	24.4	23.3	27.9	26.4	31.7	29.9	35.9	34.2	40.2	38.9	45.1	44.0
2008년	24.7	23.5	27.9	26.4	31.9	29.9	36.0	34.3	40.1	38.6	45.5	44.0
2009년	24.7	23.5	28.2	26.6	31.7	30.0	35.9	33.9	40.6	38.8	45.9	44.0
2010년	24.9	23.7	28.4	26.9	32.1	30.3	35.9	34.2	41.1	39.2	46.1	44.4
2011년	24.8	23.6	28.5	26.8	32.4	30.5	36.3	34.3	40.6	39.4	46.0	44.4
2012년	24.7	23.5	28.4	26.8	32.4	30.4	37.0	34.9	41.0	39.6	46.2	44.2
2013년	24.3	23.4	27.1	26.1	31.4	29.4	35.4	33.5	40.2	38.4	45.0	43.2
2014년	24.1	23.1	27.2	25.7	30.9	29.1	35.3	33.0	39.7	37.8	45.1	43.6

측정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7년	45.7	45.7	51.1	49.6	55.7	52.4	60.1	53.2	62.2	54.4	64.1	54.8
1998년	45.9	45.8	51.5	49.6	56.0	52.2	60.0	53.4	62.3	54.1	64.1	54.8
1999년	46.5	45.7	51.7	49.6	56.6	52.0	60.1	53.4	62.5	54.1	64.6	54.5
2000년	47.4	46.7	52.9	49.9	57.7	52.5	60.8	53.3	63.2	54.2	65.3	54.9
2001년	48.3	46.7	53.7	50.6	58.3	52.4	61.8	53.8	63.4	54.3	66.1	54.9
2002년	49.2	47.0	54.7	51.1	59.4	53.3	62.5	53.9	64.7	54.8	66.9	55.2
2003년	49.4	47.5	55.0	51.1	60.2	53.3	63.6	54.1	65.6	54.9	67.6	55.4
2004년	49.7	47.5	55.7	51.1	60.2	53.4	63.4	54.0	66.3	55.2	68.1	55.8
2005년	50.2	47.8	55.7	51.0	61.0	53.1	64.1	54.4	66.1	55.2	68.1	56.1
2006년	50.7	48.0	56.6	51.2	60.5	52.9	64.3	54.2	66.5	54.8	68.2	55.4
2007년	50.9	48.1	56.7	51.4	61.1	53.2	64.0	54.0	66.3	54.8	68.3	55.4
2008년	50.8	48.1	56.7	51.5	61.4	53.3	63.8	53.8	65.8	54.4	67.7	55.1
2009년	51.9	48.0	57.0	51.2	61.5	53.3	64.2	54.3	66.5	55.2	68.1	56.0
2010년	51.7	48.2	57.2	51.5	61.5	53.2	64.7	54.9	66.6	55.5	68.1	55.6
2011년	52.0	48.6	57.7	51.8	61.6	53.6	64.5	54.8	66.5	55.7	68.3	56.2
2012년	51.7	48.7	57.6	51.7	61.6	53.7	64.9	55.1	66.6	55.9	68.4	56.2
2013년	50.5	48.4	56.1	51.7	60.8	53.6	64.7	55.3	66.5	56.3	68.2	56.0
2014년	50.4	48.2	56.3	51.6	60.7	53.9	64.5	55.4	67.0	56.1	68.1	56.7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014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50m 달리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9.2초, 여학생 9.9초이고, 중학교 3학년 남학생 8.0초, 여학생 9.8초이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7.8초, 여학생 9.9초이다. 50m 달리기의 경우 남학생은 학년이 오를수록 빠른 기록이 측정되었으며, 여학생은 기록에 큰 차이가 없다.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5분 23초, 여학생 6분, 중학교 3학년 남학생 8분 13초, 여학생 7분 45초이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7분 54초, 여학생 7분 56초이다. 오래달리기 및 걷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초등학교 때 좋은 기록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학교 1학년을 경계로 기록이 저조한 추세로 전환된다.

2014년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165.0cm, 여학생 142.6cm,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학생 198.6cm, 여학생 147.9cm,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216.6cm, 여학생 152.2cm이다. 윗몸일으키기(2011-윗몸말아올리기)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76.2회, 여학생 56.0회, 중학교 남학생 79.2회, 여학생 45.5회,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64.9회, 여학생 35.9회이다. 앉아 윗몸앞으로굽히기의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8.5cm, 여학생 14.2cm,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학생 10.3cm, 여학생 16.5cm,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2.2cm, 여학생 16.8cm이다.

교육부의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약 10년 전인 2002년에 비해 50m 달리기, 오래달리기 및 걷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주요 종목에서 전반적으로 2014년의 기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는 전반적으로 체력이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최근 수년 사이에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낸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근래 들어 학교폭력 예방, 인성함양 등을 위해 학교에서 체육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한 학교스포츠클럽을 도입하는 등 체육 활동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온 성과로 볼 수 있다.

〈표 5-4-3〉 성별·연령별 50m달리기의 추이

(단위: 초)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년	9.8	10.3	9.4	10.2	8.8	10.0	8.4	10.0	8.0	10.0	7.8	9.9	7.7	9.9	7.7	10.1
2007년	9.9	10.5	9.5	10.3	8.8	10.1	8.4	10.2	8.1	10.3	7.9	10.1	7.8	10.1	8.1	10.4
2008년	9.9	10.4	9.5	10.4	8.9	9.9	8.4	10.1	8.1	10.1	7.9	10.2	8.0	10.1	8.0	10.3
2009년	10.0	10.5	9.6	10.4	8.7	9.9	8.4	9.9	8.1	9.9	7.8	9.9	7.7	9.9	7.7	10.1
2010년	10.1	10.5	9.7	10.4	8.9	10.0	8.5	10.1	8.2	10.1	7.8	9.9	7.7	9.9	7.9	10.1
2011년	9.9	10.3	9.5	10.2	8.9	10.0	8.4	10.0	8.1	10.0	7.9	10.0	7.9	10.1	7.9	10.2
2012년	9.7	10.2	9.3	10.0	8.8	9.9	8.4	9.9	8.0	9.9	7.9	9.9	7.8	10.0	7.9	10.1
2013년	9.6	10.1	9.2	9.9	8.7	9.7	8.3	9.8	8.0	9.8	7.8	9.8	7.8	9.9	7.8	9.9
2014년	9.6	10.1	9.2	9.9	8.7	9.7	8.3	9.8	8.0	9.8	7.8	9.7	7.7	9.8	7.8	9.9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단위 : 분, 초)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년	6:2	6:4	5:5	6:3	9:3	7:5	8:5	7:5	8:3	7:5	8:0	7:5	7:5	7:5	7:6	8:1
2007년	6:27	7:06	6:15	6:57	9:49	8:26	9:20	8:36	9:07	8:36	8:29	8:14	8:20	8:19	8:37	8:36
2008년	6:26	6:55	6:14	7:00	9:43	8:30	9:17	8:22	8:54	8:26	8:28	8:07	8:20	8:17	8:40	8:42
2009년	6:29	6:56	6:15	7:00	9:34	8:20	9:20	8:36	8:44	8:22	8:23	8:03	8:15	8:08	8:19	8:23
2010년	6:31	6:59	6:15	6:57	9:57	8:44	9:31	8:44	9:06	8:41	8:07	8:01	7:97	7:91	8:21	8:24
2011년	6:10	6:40	5:54	6:39	9:36	8:33	9:13	8:35	8:46	8:26	8:26	8:08	8:18	8:11	8:20	8:21
2012년	5:54	6:24	5:37	6:19	9:13	8:15	8:53	8:17	8:29	8:11	8:18	8:08	8:10	8:08	8:10	8:14
2013년	5:47	6:14	5:29	6:10	8:57	7:58	8:40	8:02	8:17	7:54	8:07	7:53	7:59	7:52	7:58	7:58
2014년	5:40	6:06	5:23	6:00	8:47	7:42	8:31	7:49	8:13	7:45	8:00	7:47	7:54	7:49	7:54	7:56

주 : 초등학교 1,000m, 중·고 여자 1,200m, 중·고 남자 1,600m.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5〉 성별·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단위 : cm)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년	153.4	138.3	165.2	144.6	144.6	153.6	203.0	157.1	214.7	158.6	226.9	165.2	231.4	164.8	236.7	164.8
2007년	151.8	136.0	163.9	139.8	139.8	149.9	195.8	151.7	207.5	153.9	216.9	156.9	223.4	159.4	222.8	155.4
2008년	155.0	140.4	163.7	141.3	141.3	148.3	196.9	151.5	209.2	155.3	219.3	156.4	224.4	156.6	226.2	157.2
2009년	151.2	134.5	161.6	137.9	137.9	151.1	199.3	153.9	210.1	155.3	217.8	156.5	222.9	158.5	226.6	158.4
2010년	148.5	132.6	157.8	135.9	135.9	140.7	186.6	142.4	197.5	144.6	219.5	155.6	223.4	156.8	226.0	156.6
2011년	150.3	134.6	159.7	138.8	138.8	140.8	186.8	142.2	196.7	143.7	205.0	147.6	209.5	147.8	211.8	147.5
2012년	152.9	136.7	162.7	140.9	140.9	143.6	188.9	144.3	199.1	146.1	205.9	148.4	211.1	149.2	215.0	149.6
2013년	155.7	138.8	165.2	143.0	143.0	144.3	190.0	145.4	200.8	148.1	208.1	150.8	214.1	152.5	217.8	153.0
2014년	154.9	138.4	165.0	142.6	177.1	145.2	188.2	145.6	198.6	147.9	207.4	150.2	213.3	150.8	216.6	152.2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6〉 성별·연령별 뽀뽀할때의 추이(2011 - 뽀뽀할때)

(단위 : 회)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년	32,2	24,5	34,9	26,3	27,7	26,4	40,5	27,7	43,2	29,2	45,6	30,1	47,0	31,0	49,4	32,2
2007년	31,9	24,1	35,7	26,1	26,2	26,4	40,1	26,2	42,9	27,0	44,6	28,0	46,0	29,1	44,5	28,6
2008년	31,9	25,3	35,8	25,8	27,6	26,4	40,8	27,6	43,0	28,3	45,6	29,2	47,1	29,9	44,4	29,3
2009년	48,4	-	56,3	-	28,4	27,1	41,0	28,4	43,6	28,9	45,5	29,9	47,1	30,8	46,6	29,9
2010년	49,7	39,0	55,9	38,9	33,0	32,6	58,2	33,0	59,2	33,0	45,6	30,9	47,0	31,2	45,6	30,3
2011년	56,1	43,8	62,3	43,8	35,3	37,0	63,9	35,3	63,5	35,6	57,6	31,3	58,1	32,1	52,5	31,3
2012년	62,2	49,0	69,8	50,1	38,6	40,2	65,2	38,6	67,4	38,0	61,4	32,6	60,1	33,0	56,4	32,8
2013년	65,3	50,9	73,3	53,8	43,7	44,0	73,2	43,7	71,5	40,6	68,2	35,2	69,6	36,7	63,7	34,3
2014년	69,7	55,4	76,2	56,0	75,7	47,9	77,7	46,2	79,2	45,5	68,8	35,9	68,3	36,3	64,9	35,9

주 : 2011년부터 뽀뽀할때로 개정.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7〉 성별·연령별 뽀뽀할때의 추이

(단위 : cm)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년	8,4	11,6	8,1	12,1	9,2	14,0	10,7	14,8	12,6	16,1	14,7	17,2	16,1	16,1	17,5	17,4
2007년	8,2	12,0	8,2	12,8	9,0	14,4	9,9	14,9	11,2	15,6	12,4	16,5	13,4	13,4	13,8	16,1
2008년	8,8	12,5	7,9	12,3	8,8	14,2	9,7	14,9	11,1	16,0	12,5	16,3	12,8	12,8	13,1	16,0
2009년	7,7	12,0	7,5	12,8	9,0	14,7	10,2	15,6	11,4	16,3	12,4	17,3	14,5	14,5	13,4	16,7
2010년	7,5	11,9	7,0	12,6	7,6	13,7	8,6	14,4	9,8	15,1	12,8	17,3	13,0	13,0	13,7	16,9
2011년	7,8	12,4	7,3	13,1	7,5	13,7	8,5	14,4	9,6	15,1	11,0	15,8	11,7	11,7	11,9	15,9
2012년	8,1	12,5	7,7	13,3	7,8	14,0	8,7	14,7	9,8	15,4	10,9	15,9	11,6	11,6	12,0	16,1
2013년	8,6	13,0	8,3	13,8	8,4	14,5	9,1	15,1	10,1	15,8	11,2	16,2	11,7	11,7	12,2	16,5
2014년	8,7	13,2	8,5	14,2	8,6	15,0	9,5	15,8	10,3	16,5	11,3	16,7	11,8	16,7	12,2	16,8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 청소년의 영양

아동·청소년의 연령층별로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평균 섭취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영양소에 대해 모든 연령층에서 권장섭취량에 근접한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칼슘은 모든 연령층에서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12~18세 청소년의 칼슘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60% 미만이었다. 반면에 나트륨은 모든 연령층에서 기준보다 섭취량이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충분섭취량의 2배, 3배로 섭취량이 증가해 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4-8〉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단위 : %)

영양소 \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에너지	103.2	98.8	113.6	99.6	93.8
단백질	232.2	226.8	224.5	167.8	149.8
칼슘	75.2	68.8	67.1	57.0	66.5
인	122.8	152.5	127.4	124.8	160.0
나트륨	158.8	197.2	232.2	251.1	281.8
칼륨	88.4	82.6	79.2	77.3	79.2
철	118.0	130.7	144.0	118.3	138.6
비타민 A	135.2	164.9	143.5	98.3	100.7
티아민	193.1	247.6	225.2	185.0	179.2
리보플라빈	131.6	143.5	147.7	103.0	108.0
나이아신	114.6	135.5	134.1	111.0	116.0
비타민 C	170.6	213.3	113.8	70.1	70.4

주 : 영양섭취기준 :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 에너지, 필요추정량; 나트륨, 칼륨, 충분섭취량; 그 외 영양소, 권장섭취량.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다음은 영양소별로 섭취량이 영양섭취기준 미만인 대상자 분율을 연령층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칼슘 섭취량은 전 연령층에서 평균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한 사람이 60% 이상이었고 12~18세의 경우 80%가 넘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섭취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칼슘 다음으로는 비타민 C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 많았고, 비타민 A와 리보플라빈의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

(단위 : %)

영양소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에너지		28.6	22.2	14.5	31.5	35.6
단백질		6.9	0.7	1.5	14.1	18.1
지방		39.7	13.2	13.9	14.0	14.2
칼슘		60.1	66.1	73.4	81.6	75.4
인		21.6	7.5	14.2	20.6	12.7
철		32.3	13.0	15.0	39.1	27.8
비타민A		32.4	22.9	33.3	58.4	50.4
티아민		10.5	2.2	2.7	9.4	11.9
리보플라빈		30.2	16.3	15.2	40.4	39.4
나이아신		37.7	9.5	20.6	34.8	30.5
비타민C		38.7	30.7	51.8	69.7	72.5

주 : 영양섭취기준 :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75%; 지방, 지방에너지적정비율의 하한선; 그 외 영양소, 평균필요량.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영양섭취부족 대상자 분율은 12~18세에 15.2%, 19~29세에 12.8%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19~29세는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 분율도 높아 부족과 과잉 섭취에 대한 관리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0〉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단위 : %)

연령	구분	영양섭취부족 ¹⁾			에너지/지방과잉섭취 ²⁾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2세		13.0	9.7	16.2	2.8	2.8	2.8
3~5세		4.5	2.5	6.7	3.2	5.0	1.2
6~11세		3.5	4.5	2.4	10.1	12.1	7.8
12~18세		15.2	16.5	13.8	8.5	10.0	7.0
19~29세		12.8	9.1	17.0	10.9	13.0	8.5

주 : 1) 영양섭취부족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³⁾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³⁾ 미만인 분율.

2) 에너지/지방과잉섭취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³⁾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 섭취량이 에너지적정비율을 초과한 분율.

3) 에너지 필요추정량, 평균필요량, 지방에너지 적정비율 :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아침 식사 결식률은 19~29세와 12~18세가 각각 41.0%, 31.0%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결식률도 이들 연령에서 가장 높았다.

〈표 5-4-11〉 끼니별 결식률

(단위 : %)

연령	구분	아침 ¹⁾	점심 ²⁾	저녁 ³⁾
1 ~ 2세		8.2	9.7	4.8
3 ~ 5세		9.7	3.8	1.7
6 ~ 11세		11.5	2.8	2.7
12 ~ 18세		31.0	12.6	6.8
19 ~ 29세		41.0	13.6	8.3

주 : 1) 아침 식사 결식률 : 조사 1일 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비율.

2) 점심 식사 결식률 : 조사 1일 전 점심식사를 결식한 비율.

3) 저녁 식사 결식률 : 조사 1일 전 저녁식사를 결식한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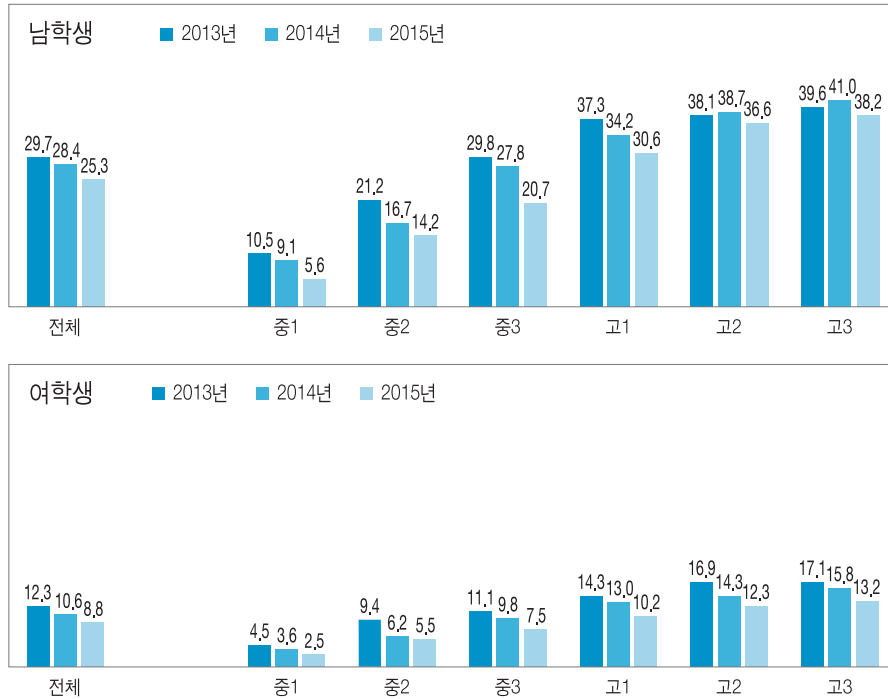
3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2015년 청소년의 평생 흡연 경험률은 남학생 25.3%, 여학생 8.8%이며,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11.9%, 여학생 3.2%로, 평생 흡연 경험률과 현재 흡연율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연도별 추이는 남녀 학생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2015년 청소년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남학생 12.7세, 여학생 12.8세이며,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남학생 13.7세, 여학생 13.5세로 남녀 학생 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연도별 추이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간접흡연 노출률은 남학생 28.3%, 여학생 29.7%로, 남녀 학생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그림 5-4-1] 학년별 평생 흡연 경험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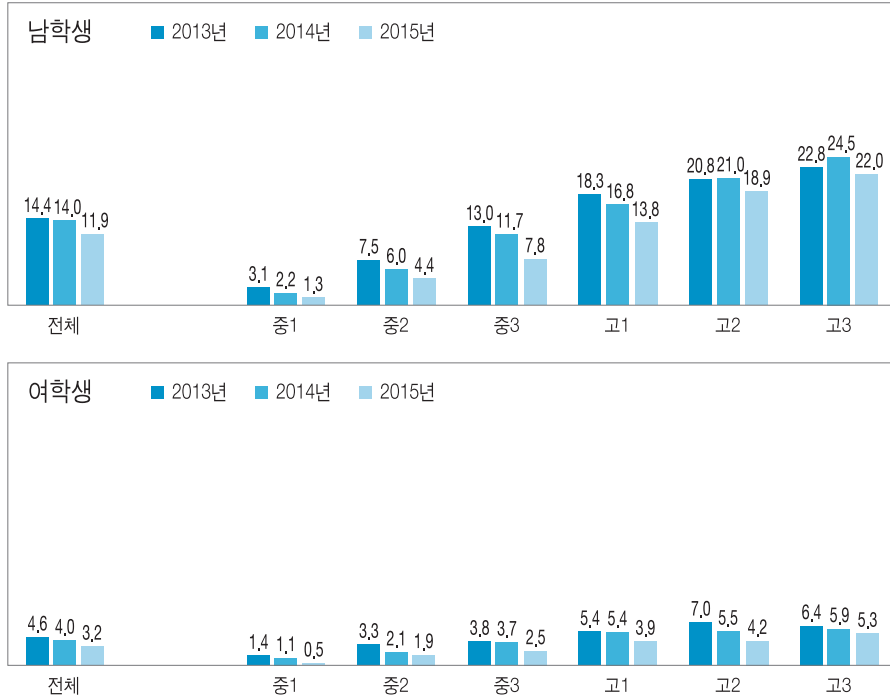


주 : 평생동안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그림 5-4-2] 학년별 현재 흡연율

(단위 : %)



주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표 5-4-12> 흡연 관련 지표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처음 흡연 경험 연령(세) ¹⁾	12.6	12.6	12.6	12.6	12.6	12.8	12.7	12.7	12.8
매일 흡연 시작 연령(세) ²⁾	13.5	13.5	13.6	13.7	13.7	13.6	13.6	13.7	13.5
주 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 ³⁾	30.7	29.5	32.0	33.8	32.8	34.9	29.0	28.3	29.7

주 : 1) 평생 흡연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한두 모금 피워본 연령의 평균.

2) 최근 30일 동안 매일 흡연자 중에서 담배를 매일 피우기 시작한 연령의 평균.

3)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었던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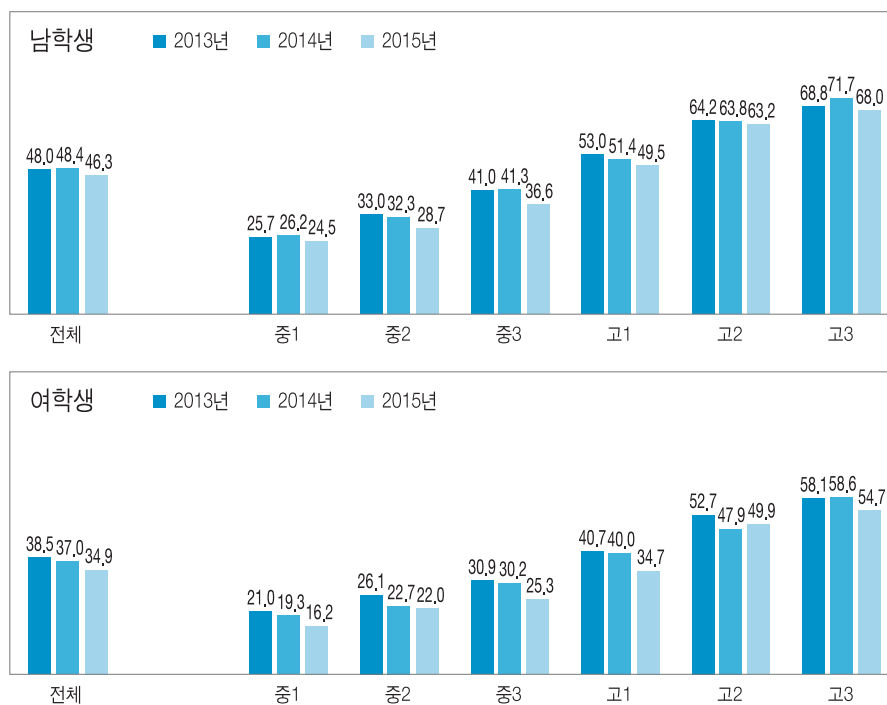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5년 청소년의 평생 음주 경험률은 남학생 46.3%, 여학생 34.9%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고학년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 추이는 남학생은 최근 3년간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여학생은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20.0%, 여학생 13.1%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고학년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 추이는 남녀 학생 모두 최근 3년간 유사한 수준이었다.

2015년 청소년의 처음 음주 경험 연령은 남학생 12.9세, 여학생 13.3세로, 남녀 학생 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연도별 추이는 큰 변화가 없었다. 위험 음주율은 남학생 9.6%로 여학생 7.0%보다 높았으며, 남학생은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여학생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그림 5-4-3] 학년별 평생 음주 경험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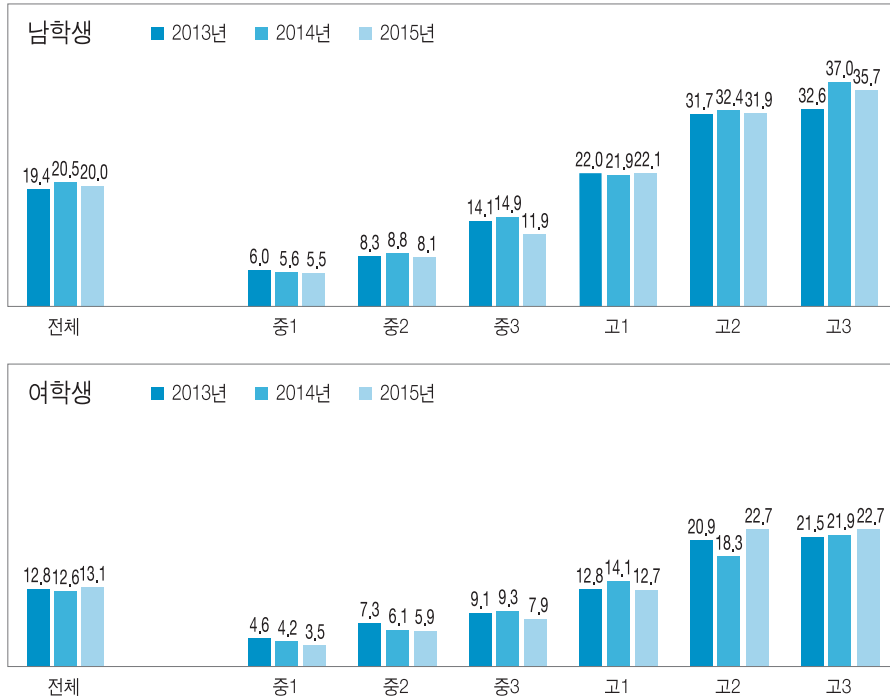


주 : 평생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5). 제1차(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그림 5-4-4] 학년별 현재 음주율

(단위 : %)



주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표 5-4-13> 음주 관련 지표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처음 음주 경험 연령(세) ¹⁾	12.9	12.8	13.0	12.9	12.8	13.1	13.1	12.9	13.3
위험 음주율 ²⁾	7.6	8.7	6.4	7.9	9.5	6.3	8.4	9.6	7.0

주 : 1) 평생 음주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1잔 이상 술을 마신 연령의 평균.

2)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 소주 5잔 이상, 여자 :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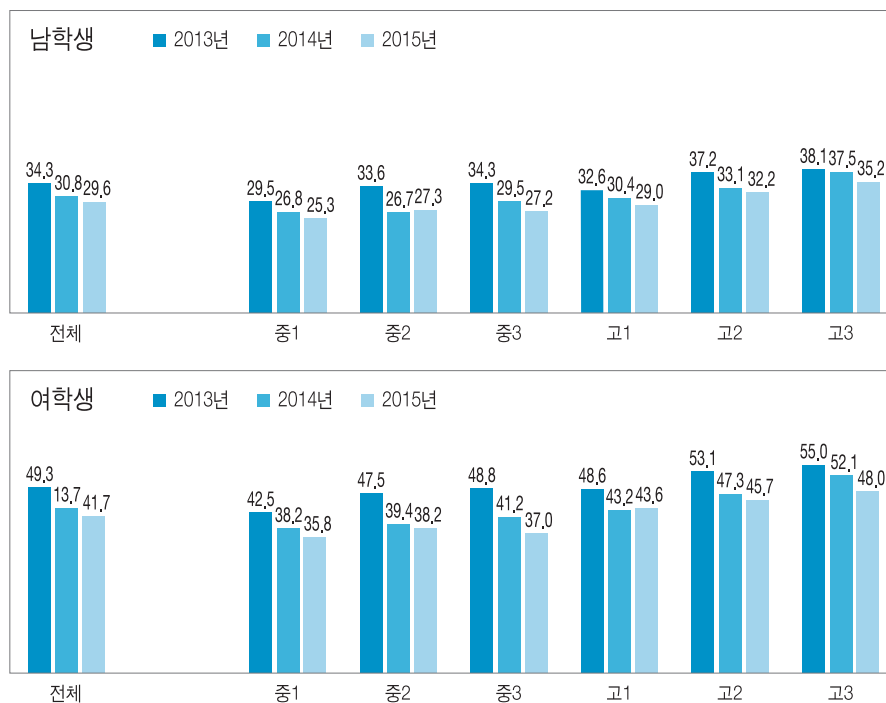
4 청소년의 정신건강

2015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학생 29.6%, 여학생 41.7%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 추이는 남녀 학생 모두 감소경향이었다.

2015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19.7%, 여학생 27.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연도별 추이는 남녀 학생 모두 감소경향이었다.

[그림 5-4-5]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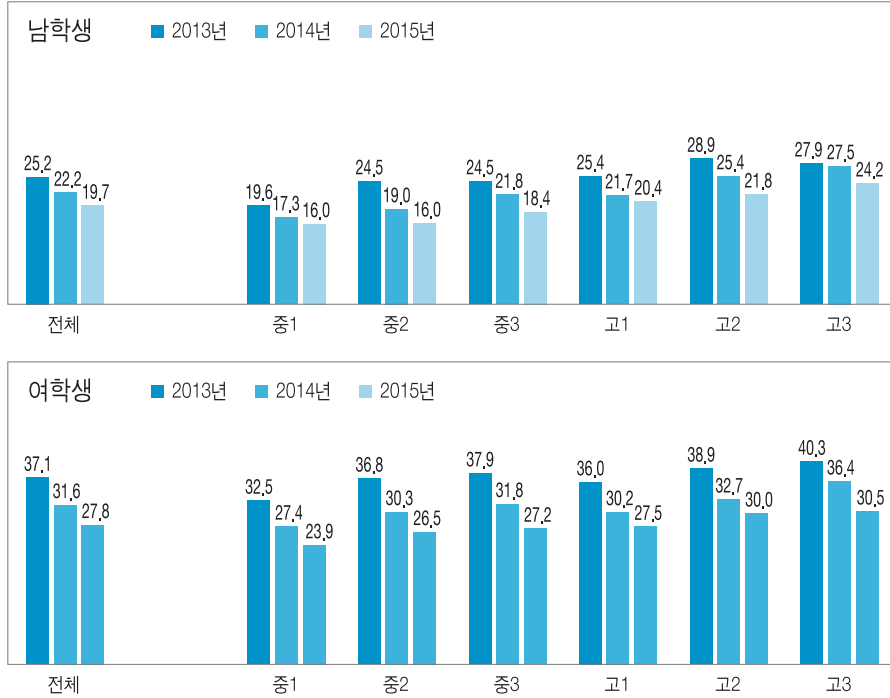


주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그림 5-4-6]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단위 : %)



주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정부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을 각 분야별 안전 점검 전문 공공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학교 폭력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예방·보호 및 가정 복귀까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소극적·방어적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적극적·능동적 보호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대책’,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정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대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흡연·음주의 유해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예방교육과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결정 및 고시’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인터넷 게임의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20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해 전국 200여 개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149개 치료협력 병원 연계를 통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치료 기반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자의 재유입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를 실시하여 성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 스스로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6부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제3장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제4장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제5장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제 1 장

청소년 안전

1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가. 도입 배경 및 경과

청소년수련시설 내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등 총 6개 분야별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은 안전한 수련활동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2009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특화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4년 7월 21일부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년 주기로 점검이 실시된다.

나.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추진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안전점검은 해당 분야 전문 공공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건축, 토목, 기계 분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소방 분야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전기 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 분야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각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각 분야별 점검등급과 안전점검 주요 내용 및 평가 기준은 <표 6-1-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 시에도 반영된다.

〈표 6-1-1〉 분야별 점검등급 구분

점검분야	등급 구분	비 고
건축·토목	A, B, C, D, E(5등급)	D·E 등급 : 부적합 처리
기계	양호, 보통, 미흡(3등급)	미흡 등급 : 부적합 처리
소방	양보, 보통, 불량(3등급)	불량 등급 : 부적합 처리
전기	A, B, C, D, E(5등급)	D·E 등급 : 부적합 처리
가스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주 : 2015년 기준.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표 6-1-2〉 안전점검 주요 내용

분야	주요 점검 내용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자체 안전점검 수행 여부 확인 및 검토 • 분야별 설비 및 각종 구비서류 현황 • 시설 환경(쾌적성 등) •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계획 • 보험가입 여부 확인
건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내·외부 균열 발생 상태 • 주요 부재 변형 상태(기울기, 처짐) • 콘크리트 부재 결함 상태(철근 부식 노출, 콘크리트 파손) • 철골 부재 결함 상태(철골 부식, 내화 회복 상태) • 마감재 결함 상태(천장, 바닥, 내·외벽체) • 미끄럼 방지 상태(복도, 욕실, 계단 등) • 배수 상태(지붕, 욕실, 주방, 지하층 등) • 증축 시 접합부 결함 상태 • 누수 여부(지붕, 외벽, 욕실, 주방, 수영장, 지하층 등) • 비상구, 통로 관리 상태 • 각종 안전 난간 상태 • 방화 벽체 상태 • 각종 안전 표지판 등 부착 상태 등
토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축·옹벽 전도 여부 • 석축·옹벽 상단 토사 안전성 • 담장 전도 여부 • 파고라·벤치·담장 시설 등 결함 상태 • 단지 내 포장 상태 • 단지 내 배수 상태 • 부속시설 안전 상태(천막, 각종 수련시설) 등
기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설비 : 관련 장비 및 배관의 노후 상태 • 급·배수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장비 및 배관의 상태 - 고가수조 및 저수조 관리 상태 • 환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장비 및 덕트의 노후 상태 - 환기설비 운영 상태

분야	주요 점검 내용
소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 건축방재설비 • 위험물 취급·관리 상태 • 방화구획 및 방화조치의 적정성
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기회로 절연(누전) 상태 - 전기사용량에 맞는 규격 전선사용 및 시공 상태 - 금속제 배분전반 및 기계 기구 누전, 접지 상태 - 임시전등 및 이동전선 적정 여부(절연, 피복손상, 지상고, 지지물 등) - 외등 전기설비 등 옥외 시설 중점 점검 • 환경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분전함 설치 상태 및 노출 상태 - 먼지, 분진, 가스 등 발생 환경 - 기름때, 먼지, 분진 고착 유무 - 분전함 내연성 재료 사용 유무

주 : 2015년 기준.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표 6-1-3〉 안전점검 평가기준

분야	평 가 기 준
건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문제점이 없거나 극히 경미한 최상의 상태 • (B등급) 경미한 문제점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 • (C등급) 문제점이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 • (D등급) 주요부재에 발생한 노후와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 • (E등급) 주요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금지하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토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등급) 결함이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등급) 보통의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기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 • (보통) 부분적인 결함 또는 경미한 효율감소가 있는 보통의 상태 • (미흡) 내용연한 경과, 심각한 결함, 단기간의 급격한 효율감소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상태

분야	평가 기준
소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 • (보통) 부분적인 결함 또는 경미한 효율감소가 있는 보통의 상태 • (불량) 내용연한 경과, 심각한 결함, 단기간의 급격한 효율감소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상태
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여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태 • (B등급)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 • (C등급) 시설물의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요소가 일정부분 존재 • (D등급) 점검항목 중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여 즉시 개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등급) 점검항목 중 부적합사항 3개 이상 발생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
가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 합)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 • (부적합) 용기보관실, 정압기, 압력조정기, 기화장치, 가스계량기, 매물배관, 입상관, 중간밸브, 노출배관(호스 포함), 연소기, 가스누출, 경보차단장치, 기밀시험(누출검사) 등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

주 : 2015년 기준.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다.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에는 점검대상 398개소 모든 시설이 참여해 대부분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났으나, 1개소에서 소방 미흡, 2개소에서 전기 D등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수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각 분야별 안전 점검 결과는 <표 6-1-4>와 같으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1-4> 2015년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 건축 분야

분야	시설 종류	점검결과(개소)					
		계	A	B	C	D	E
건 축	청소년수련관	171	32	128	11	-	-
	청소년문화의집	219	78	138	3	-	-
	청소년특화시설	8	2	6	-	-	-
합 계		398	112	272	14	-	-

▶ 토목 분야

분야	시설 종류	점검결과(개소)					
		계	A	B	C	D	E
토목	청소년수련관	171	139	30	2	-	-
	청소년문화의집	219	190	26	3	-	-
	청소년특화시설	8	7	1	-	-	-
합 계		398	336	57	5	-	-

▶ 기계 분야

분야	시설 종류	점검결과(개소)			
		계	양호	보통	미흡
기계	청소년수련관	171	100	71	-
	청소년문화의집	219	139	80	-
	청소년특화시설	8	4	4	-
합 계		398	243	155	-

▶ 소방 분야

분야	시설 종류	점검결과(개소)			
		계	양호	보통	미흡
소방	청소년수련관	171	134	36	1
	청소년문화의집	219	181	38	-
	청소년특화시설	8	5	3	-
합 계		398	320	77	1

▶ 전기 분야

분야	시설 종류	점검결과(개소)					
		계	A	B	C	D	E
전기	청소년수련관	171	25	105	39	2	-
	청소년문화의집	219	62	119	38	-	-
	청소년특화시설	8	1	7	-	-	-
합 계		398	88	231	77	2	-

▶ 가스 분야

분야	시설 종류	점검결과(개소)			
		계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가스	청소년수련관	171	129	-	42
	청소년문화의집	219	57	-	162
	청소년특화시설	8	7	-	1
합 계		398	193	0	205

주 : * 해당 없음 : 가스설비 미설치.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43



2 학교폭력대책

우리나라는 1995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5년부터 학교폭력 정책이 수립되었고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은 2004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고, 200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관련 부처와 함께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2005~2009)’을 수립 시행해 왔다. 이어 2007년 2월에 정부는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2년간 추진해 왔던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저해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중점 과제 15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는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이처럼 2차에 걸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감소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후 2011년 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연이은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례, 학생들의 자살 문제 발생을 계기로 2012년 2월 6일 정부가 관계 장관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표 하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 2. 6.)’을 발표하였다. 7대 영역 54개 과제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기존의 학교폭력 관련 대책 및 제도가 학교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이 부족하였고 특히,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학생들의 배려·공감·협동심을 키우는 인성교육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여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학교만의 대책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으로서 긴 안목에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내용과 교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학생을 끝까지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 조치한다는 점, 학교 및 학부모의 책임을 의무화함과 더불어 인성교육 강화와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한 점 등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이다. 이후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학교폭력을 4대 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2012년 2. 6 대책이 발표된 지 1년 반 만인 지난 7월 23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였다. ‘7.23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은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실태조사, 지난 대책 평가 및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특히, 7.23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부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학교폭력실태조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에 터해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와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정부, 시·도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7. 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추진

되면서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학교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사이버, 언어폭력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정책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2013년 대책의 분석,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2014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 3월에 마련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계획은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대책,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등 보완과제를 정비하여 5대 영역, 16개 중점 과제로 재편되어 추진되어 왔다.

이후 2014년 12월에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2015~2019)’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삼고 학교폭력 및 학생 위협 제로 환경 조성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여 전반적인 학교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 요인을 중점 관리하고 대상별, 유형별, 시기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며,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2015~2019)’이 수립·추진되어 오던 중 2015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중등학생 감소율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초등학교의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등 초등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2015년 8월 7일 교육부는 4대 중점추진과제와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2013년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대책’부터 2015년 8월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까지 각 대책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가.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주요 내용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2012년 2차 조사와 2013년 1차 조사에서 분석된 학교급별, 지역별 실태와 경향을 반영하여 2013년 7월 23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였다. 7.23 대책 수립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피해학생 치유·보호는 대폭 강화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은 따뜻하게 지원하겠다는 점이다. 둘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시각으로 기존대책을 평가하여 개선·보완하되, 유형별·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급별·성별 특성 등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한 점이다. 셋째, 단위학교가 보다 책무성과 권한을 가지고 자발적인 예방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지원을 확대

하고 교육청, 지자체, 단위학교, 지역사회와의 전 방위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 점이다. 넷째, 학교구성원의 소통·공감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억눌림을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학교폭력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향 하에 ‘7.23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대책’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비전으로 삼고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와 학교폭력 유형별, 지역별 맞춤형 대응강화 및 피해학생보호의 대폭 강화와 가해학생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둔 전략 하에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 6-1-5>와 같이 크게 5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표 6-1-5> 7.23 현장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영역	과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 강화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예방교육 내실화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적극 지원 및 유도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및 대안 교육 활성화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신고 및 예방교육 활성화 처벌보다는 관계회복에 역점을 둔 집단 따돌림 해소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강화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책 수립 추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학교폭력 진단 및 관리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 강화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등 조성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교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및 전 사회적 대응 강화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학교폭력대책 추진체계 재정비

자료 : 교육부(2013).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이 마련되어 그동안 수행되어온 5대 영역별 추진과제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을 지원하였다. 즉, 국가수준 학교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학급단위의 체험형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고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연극 및 뮤지컬 등 감성중심의 문화체험형 예방교육 활성화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단위학교,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등 또래 활동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율적인 학교폭력 문제해결 문화를 확산하였다. 또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인 어깨동무학교 등을 선정하고 육성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였다.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욕설퇴치 아이디어 공모전 등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전개하였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사이버 폭력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즉시 폭력 상황에 개입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설치 및 상담 복지센터에 인터넷 중독 전담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였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내실화하였다. 시·도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전담지원 기관을 구축함은 물론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위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상담, 치료연계, 사례관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학생 정신건강 지역 협력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가족단위 가해학생을 위한 다양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를 확대하였다.

넷째, 학교역량 제고 및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전국 교육장 및 학교장 대상 연수 실시를 강화하였으며, 학교폭력 은폐·축소 등 관련 민원을 즉시 신고하여 신속·공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및 사안처리점검단을 운영하였다. 또한, 상담수요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 강화 방안으로 전문상담교사 증원, 일반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 및 상담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였고, 학생보호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확대를 통해 경찰-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책임교사와 전담경찰관 간 정례 협의체계를 구축·지원하였다.

나.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7. 23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대책 추진의 기반이 확대되었으나, 향후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대책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국민들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여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고,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에

대한 밀도 있는 정책 추진 및 체험형 예방교육의 확대를 통한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며,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주요 정책과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 주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2014년 3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2014년 추진계획이 마련되었다.

2013년에 추진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의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에서 관련 지침개정 등 완료과제와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대책,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등 보완과제를 정비하여 5대 영역, 16개 중점과제로 재편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의 2014년 추진 계획은 <표 6-1-6>과 같다.

〈표 6-1-6〉 ‘현장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 계획

영역(5)	중점과제(16)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	연극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등 체험형 교육 확대 ‘어울림 프로그램’ 등 예방교육 내실화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
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관계 회복을 통한 집단따돌림 해소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확대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개선 단위학교 대응역량 제고 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 감독·강화
안전한 학교생활 조성 및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학교폭력 조사 및 신고 시스템 개선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자료 : 교육부(2014).

첫째, 학교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중점과제는 연극교육 및 청소년 경찰학교 등 체험형 교육 확대, 어울림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예방교육 내실화,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가 중점과제로 포함되었다.

둘째, 학교폭력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위한 세부 과제는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에 대한 맞춤형 대응, 관계회복을 통한 집단따돌림 해소,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이 해당된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를 위한 세부 과제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확대와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넷째,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여건 개선과 단위학교 대응역량 제고, 은폐 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폭력 조사 및 신고 시스템 개선,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운영 활성화,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지역 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의 수립 배경과 2015년 시행 계획

'7.23 맞춤형 학교폭력대책'과 후속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이 시행됨으로써 20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센터' 신고 및 처리 건수도 감소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의 배치가 확대되고, 대다수 학교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운영됨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 교육시간도 대폭 증가하고, 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예방활동이 확산되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와 함께 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기반의 대폭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전문기관의 증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내실화 등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지원이 강화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진상의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기 초 및 취약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학교 현장 문화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학교폭력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학교폭력 안전인프라의 양적 확충에 상응하는 질적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CCTV 대수(고화소 비중)는 2013년 141,790대(10.5%)에서 2014년 164,282대(25.5%)로 양적인 확충은 이루어졌으나, 고화질 CCTV 비율이 낮고, 실시간 관제 등 통합관제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셋째, 일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 중 '신고 효과를 봤다'는 학생은 36%에 불과하여 신고 후 처리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과정, 전문성·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관이 달라 모순된 결정이 나오는 사례가 있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넷째, 학교폭력과 연계된 가정·사회의 전반적인 폭력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상당수는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을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과 폭력적인 문화 및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가정 및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참여와 협력이 부족한 실정임이 지적되었다.

이에 법률상 규정된 5개년 기본계획의 체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2014년 12월에 ‘제3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발표·시행되게 되었다.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은 [그림 6-1-1]과 같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기본계획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3차 기본계획은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②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③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④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⑤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등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5대 영역에 따라 2019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6-1-1]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비전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목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학교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요인 중점 관리 ◆ 대상별·유형별·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 ◆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5대 분야	16개 추진과제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2.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3.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2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6. 학생보호인력 확충 7.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9.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10.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12.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1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5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15.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6.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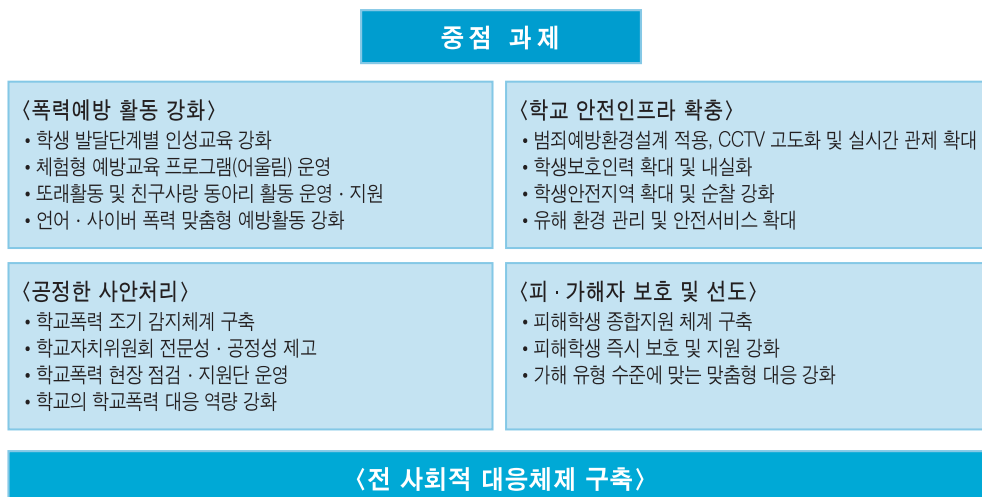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2014).

‘제3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한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사회 전반의 폭력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요구하기 위한 취지로 수립되었다. 즉, 제3차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분야 16개 중점추진과제, 39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 부처(중앙부처), 시·도(교육청) 등 기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정부를 비롯한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교폭력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업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의 위험성, 심각성을 인식하여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별로 201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는 [그림 6-1-2]와 같다.

[그림 6-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15년 시행계획 중점 과제



자료 : 교육부(2015).

라.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의 추진 배경 및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2005~2009년, 2010~2014년, 2015~2019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 2. 6.)’ 및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2013. 7. 23.)’이 수립·추진되어, 학교폭력 발생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이나,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중등학생 감소율에 비해 낮고, 자치위 심의건수 및 피해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2015. 8. 7.).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초등학생의 피해·가해 응답률이 여전히 중등 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원인으로 첫째는 정신의학적 요인의 측면에서 초등 학생들의 경우 감정 조절 기관이 발달하는 시기로 공감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신체-정신의 불균형적 성장으로 인해 감정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사회성 발달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거나, 학대 등을 경험한 초등학생의 경우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유해 매체의 영향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대중영상매체에 자주 노출될수록, 폭력 선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한 유해물에 대한 노출 증가로 초등학생들이 폭력 허용적 태도를 쉽게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즉, 초등학교 4학년

중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23,483(5.7%)명으로 전년 대비 4,006명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족부의 2015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16,735명(4.7%)으로 전년 대비 3,552명 증가하였다.

셋째, 가정 요인으로써, 최근 맞벌이·한부모 가족 등 자녀에 대한 집중적 보호가 어려운 가족 형태가 증가함으로써, 가정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한 학생이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넷째, 학교 요인으로써 2013년부터 어울림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오고 있으나, 전체 학교수에 비해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부터 공감·의사소통 등 사회적 관계유지 능력 배양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초등학교 어울림 프로그램(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교사-학생 간 긍정적 관계가 학생의 공격성 억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교원에 대한 학생 생활지도 및 사안처리 방법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한 것도 작용한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원인 분석에 더해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의 4대 중점과제, 12개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2015년 하반기부터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운영과제로 추진되어오고 있다.

〈표 6-1-7〉 4대 중점 추진과제 및 12개 세부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정신 의학적 지원 강화	1. 위기 의심학생 조기감지 2.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 3.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
유해매체 노출 대책	4.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조치 5.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 6. 유해요인 예방교육 지원 강화
가정의 역할 제고	7.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 역할 교육 확대 8. 학부모 소통 활성화 및 체험형 치유 강화
학교의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9.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 추진 10.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예방교육 강화 11.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 강화 12.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

자료 : 교육부(2015).



3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이후부터이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된 후 20년 동안 특별한 수정 없이 존속되어오다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후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의 4대 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라는 UN의 권고를 받았다. 또 1996년 OECD 가입 시에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화된 안전 수단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받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보호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11개의 아동학대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신고의무,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었다.

가. 아동학대 실태

(1) 아동학대 사례유형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유기, 방임과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례유형별 분석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15,025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이중 학대피해로 인한 아동의 보호건수는 10,027건으로 2013년보다 3,231건이나 증가하였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여러 학대가 중복된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서 학대보호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및 시행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 제정으로 인해 학대 신고가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보호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6-1-8〉 아동학대 발생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유기)	중복학대
2002년	2,478	254	184	65	1,026	949
2003년	2,921	247	207	134	1,078	1,155
2004년	3,891	364	350	177	1,492	1,508
2005년	4,633	423	512	206	1,782	1,710
2006년	5,202	439	604	249	2,111	1,799
2007년	5,581	473	589	266	2,166	2,087
2008년	5,578	422	683	284	2,294	1,895
2009년	5,685	338	778	274	2,054	2,241
2010년	5,657	348	773	258	1,884	2,394
2011년	6,058	466	909	226	1,836	2,621
2012년	6,403	461	936	278	1,713	3,015
2013년 (2013년 비율)	6,796 (100.0)	753 (11.1)	1,101 (16.2)	242 (3.6)	1,788 (26.2)	2,922 (43.0)
2014년 (2014년 비율)	10,027 (100.0)	1,453 (14.5)	1,582 (15.8)	308 (3.1)	1,870 (18.6)	4,814 (48.0)

자료 : 보건복지부(2013). 2013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각 년도).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는 크게 부모와 친인척, 타인으로 구분된다. 2014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83.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대리양육자로 9.4%이다. 친인척은 5.4%, 기타 1.1%, 타인 1.0% 등으로 소수이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족 38.0%, 친부모가족 외 형태 50.4%, 대리양육형태와 기타는 각 5.9%, 0.7%의 분포로 나타났고,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이 55.6%로 여성 44.3%보다 더 높았다. 직업별로는 무직과 단순노무직이 많았고, 연령대는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의 발생 장소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전체의 85.9%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어린이집 3.0%, 아동복지시설 2.1%, 집 근처 또는 길가 1.8%, 학교 1.7%의 비중이다. 학대 빈도는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30.6%나 되고 2~3일에 한 번은 13.7%의 분포로 학대의 빈도도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6-1-9〉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관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 임	계
부모	4,571 (80.2%)	5,130 (83.1%)	228 (51.0%)	2,894 (92.3%)	12,823 (83.0%)
친인척	351 (6.2%)	314 (5.1%)	49 (11.0%)	126 (4.0%)	840 (5.4%)
대리양육자	662 (11.6%)	656 (10.6%)	52 (11.6%)	86 (2.7%)	1,456 (9.4%)
타인	37 (0.6%)	30 (0.5%)	82 (18.3%)	1 (0.0%)	150 (1.0%)
파악안됨	5 (0.1%)	11 (0.2%)	2 (0.4%)	8 (0.3%)	26 (0.2%)
기타	73 (1.3%)	35 (0.6%)	34 (7.6%)	21 (0.7%)	163 (1.1%)
계	5,699 (100.0%)	6,176 (100.0%)	447 (100.0%)	3,136 (100.0%)	15,458 (100.0%)

주 : 중복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1) 아동방임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정부에서는 2006년 4월부터 ‘보건소 아동보호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방문간호서비스에 아동보호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시범사업은 학대피해 아동 발견율이 방문건수 대비 16.5%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고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고가 바탕이 되어 2007년에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희망스타트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 전국 16개 지역에서 2014년에는 220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최근 급증하면서 포악해지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관련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2014년 제정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강화 및 현장출동,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특히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특례법 내에 과거에는 「형법」에만 있었던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부모는 검사의 청구로 친권을 상실당할 수 있고,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과태료는 최고 500만 원 이하로 인상하였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복지법」 상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눌 수 있다. 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등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자가 자격취득 시 필수적으로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아동복지법」 제26조의2), 2007년에는 유치원 및 학원 종사자, 구급대원 등을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1년에는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정신보건센터,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사, 응급 구조사 등을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또한, 동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STOP&LOVE 광고가 제작되어 케이블 TV로 송출된 바 있으며, 2011년 전면 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상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총 4,358건으로 약 29.0%에 해당한다. 신고의무자 유형별로 보면 초·중·고교 직원이 13.2%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8%, 보육교직원 1.8% 등의 순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율을 보였다. 한편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10,667건(71.0%)로 높았고, 비신고의무자로는 사회복지 관련조사자가 3,486건(23.2%)으로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그다음으로는 경찰 2,204건(14.7%), 부모 1,991건(13.3%)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정부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 10월에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체계를 갖추었다. 2004년부터는 지역 기관 23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2004년에는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치료·보호 및 가정 복귀까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을 부과하여 시·도별 1개소씩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실, 놀이실 등은 물론 보호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으며 아동보호를 위한 전체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콜센터(129), 119,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인터넷, 내방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응급아동학대 의심사실에 대해서는 12시간 이내에, 아동학대 의심사실에 대해서는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48시간 연장 가능)에 응급의료조치 및 긴급격리조치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후 사례판정을 통해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임상심리 전문치료 인력 증원으로 학대피해아동 상담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기준 표준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예방을 효율화하기 위해 보호처분제도, 친권제한제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상담원 신변안전 확보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부족한 아동학대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4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되며, 부모 또한 아동이 실종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아동을 찾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 아동의 실종은 부모로 하여금 실종아동에 대한 죄책감과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여 최악의 경우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실종아동 문제를 개인의 문제 또는 실종아동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2004년 개구리 소년들(1991년 실종)의 유골 발견, 2004년 부천초등생, 포천여중생 실종사건 등으로 인해 실종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가 차원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 구축 및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3년 이전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는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보호시설의 아동카드 송부누락 및 지연, 미신고시설 관리부실, 관련 법률의 부재, 일반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5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을 제정하여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한 가정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5년 12월 시행된 「실종아동법」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실종아동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여, 2009년에는 28,099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1,59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대부분인 90% 이상이 보호자에게 인계되었고 소수만이 미발견상태에 있다. 단, 최근 들어 미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2015년 7월 현재 미발견건수 196건).

〈표 6-1-10〉 실종 일반아동·장애아동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

(단위: 명)

연도	일 반 아 동		
	발생건수	발견건수(보호자인계)	미발견건수
2011년	28,099	28,076	23
2012년	27,295	27,225	70
2013년	23,089	23,015	74
2014년	21,591	21,504	87
2015년 7월	-	11,554	196

주 : 1) 경찰청 2014년 6월 말 기준.

2) 개정('13. 6. 4.) 「실종아동법」 적용 산출('09년~'13. 9월).

자료 :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2015), 홈페이지 통계자료(www.missingchild.or.kr/CMSPage/CMSPage.cshtml).

달라진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종아동 등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8세 이하 아동에서 14세 미만 아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 상의 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정신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호 및 지원하도록 하였다. 둘째, 실종업무를 전담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실종 아동·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종가족 지원 등 실종예방 및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장의 신상카드 송부를 의무화하고 시설보호 대상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실종아동찾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경찰의 수색·수사를 의무화하여 경찰의 초동수사 및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미신고보호행위를 금지하여 개인의 불법 입양이나 미신고시설 등의 불법 보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일곱째, 보호시설에 대한 경찰의 현장 조사권한을 명시화하여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전자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였으며 동 대책에 따라 신고의무자,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의무 불이행자 및 불법양육자의 처벌규정에 관한 홍보도 병행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2008년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아동범죄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부도 실종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놀이터, 공원, 학교 주변 및 아동범죄 다발지역

등 아동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전개·지원하였다. 둘째,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지정(2010년 6월 8일, 60개소)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및 장애인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일시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고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가족 또는 경찰서에서 이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의 실종신고 자료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상카드 자료 간 전산연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넷째,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2008년 12월 14일 시행)하고, 실종예방 인형극 순회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종예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다섯째, 유괴예방 3단계 구호 100만 인에게 알리기, 실종예방 공익광고 송출, 어린이안전 특별생방송 방영 등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날·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여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였다. 여섯째, 실종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 활동비·전단제작지원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종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실종아동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신상카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이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때에는 실종아동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유전정보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보건복지부)는 한 명의 아동 및 장애인이라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종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대책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5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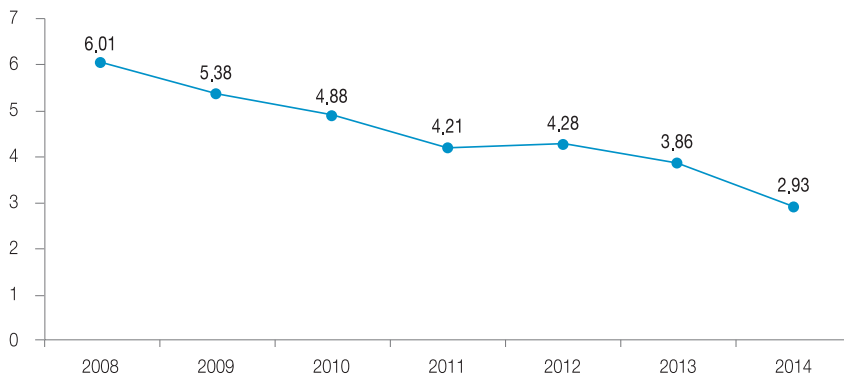
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어린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2003년 5월 5일)하고 2003년 6월부터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향후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1/2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어린이 사고사망 2001년 1,269명 → 2007년 538명). 그리고 OECD 회원국 최하위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상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제를 조정해 나갔다.

이로 인해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8년 6.01명에서 2014년 2.93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비교적 높은 성과를 보였는데 이는 어린이 안전종합대책과 각종 안전대책이 효과적이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림 6-1-3]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14세 이하)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2015), e나라지표.

각 연도별 사망원인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은 <표 6-1-11>과 같다. 2014년의 경우 총 안전사고 사망아동수는 215명이었고, 사망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80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익사 36명, 추락 31명, 화상 5명, 중독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추이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교통사고안전 및 놀이안전 전략이 시급히 요구된다. 화상의 경우는 사망률은 낮으나 상해율이 높아서 조기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표 6-1-11〉 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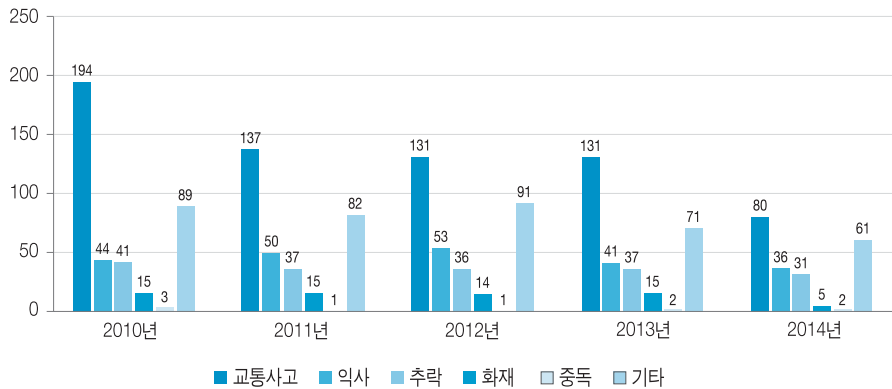
구분	계	교통	익사	추락	질식	화상	중독	기타
1998년	1,664	805	326	115	161	64	21	172
1999년	1,524	726	306	152	131	88	21	100
2000년	1,417	728	306	155	78	41	13	96
2001년	1,269	616	236	138	102	76	7	94
2002년	1,210	594	198	134	114	55	6	109
2003년	1,016	497	156	108	96	70	4	85
2004년	891	374	183	88	90	46	7	103
2005년	756	337	156	67	72	25	4	95
2006년	645	318	78	58	69	42	5	75
2007년	538	259	78	58	70	7	4	62
2008년	508	214	78	50	67	19	2	78
2009년	440	201	62	39	47	10	5	76
2010년	386	194	44	41	-	15	3	89
2011년	322	137	50	37	-	15	1	82
2012년	326	131	53	36	-	14	1	91
2013년	287	131	41	37	-	15	2	71
2014년	215	80	36	31	-	5	2	61

주 : 1) 1년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에서 자살·타살·질병 제외.
 2) 2010년부터 질식사고는 기타로 집계.

자료 : 통계청(2015), e나라지표.
 보건복지부(2014), 2013년 보건복지통계연보.

[그림 6-1-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14세 이하)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나. 아동안전종합계획의 배경과 주요내용

아동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결정짓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안전 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21명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을 안전하게 키워내는 일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할 책무가 되었다.

특히 아동안전사고는 성인에 비해 사망 및 중상의 비율이 높고 인격발달과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사고로 인한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아동안전문제는 단지 피할 수 없는 일로 간주되거나, 부모들이 알아서 예방하여야 할 일로 여겨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아동안전관련 정책 또한 소관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체계적, 종합적인 정책 개발이 부족하였다.

2009년 마련된 제2차 ‘아동안전종합 5개년계획’의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아동의 사고 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 증진, 아동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 및 시스템, 제품의 설계와 개발, 부처별 부문별 협력과 조정을 통한 사고 예방활동 통합, 아동 사고예방 지식과 정보 향상, 효과적인 사고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대처, 응급치료, 재활서비스 극대화, 주요 부분별, 아동연령별 사고예방 전략 제고, 민간 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리더십 육성 등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2014년에는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2.9명으로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가 평균수준 5.6명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머물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스쿨존 만들기, 지역사회 중심 교통 예방 체험관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체제 정비, 학교 내 안전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아동연령별 발달수준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개발하고 교육해나가며, 새로운 안전 위협요소들에 대응하여 특히 취약계층 고위험군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표 6-1-12〉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국제 비교(아동 10만 명당)

(단위 : 명)

국 가 (연 도)	한국 (2014년)	OECD 평균 (2005년)	스웨덴 (2005년)	영국 (2005년)	독일 (2005년)	일본 (2005년)
사망률	2.9	5.6	2.7	3.3	3.7	4.6

자료 : 통계청(2015), e나라지표,
WHO Mortality Database.

다.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 정책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된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10만 명당)는 2002년 12.4명에 비해 2007년 6.2명으로 감소한 것에 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 ‘제2차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 2011~2015년)’에서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추락, 익사 사고 등 주요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한 정책이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여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안전행정부, 한국소비자원 등 아동안전 관련기관 간 업무협조체계 강화,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아동 안전체험 행사개최 등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안전통계의 주요지표인 통계청 사망통계와 질병관리본부의 손상관리정보,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시스템 협력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각 부처별, 기관별 어린이 안전관련 통계를 통계청 통계자료에 반영하도록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아동·청소년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만 5세 이하)와 사고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부모교육 실시, 가정 안전 꾸러미를 배포하는 등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등·하굣길을 동행하고, 등·하교 상황, 학교 결석 여부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확산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및 ‘도로 부속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 보호장구 개발지원 및 표준화, 저소득층 무상대여 등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굣길 안전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정책은 <표 6-1-13>에 제시하였다.

〈표 6-1-13〉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 정책

부처명(소관과)	분야	주요 내용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해상안전과, 안전문화교육과, 안전개선과)	놀이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놀이 공간 및 물놀이 안전강화 • 청소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교실, 해양안전 체험프로그램 운영 • 안전문화 기획홍보 •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 체험형, 현장형 안전교육 확대 • 놀이시설 안전검사, 안전점검 •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 아동복지법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교사, 종사자, 아동 대상 안전정보 제공 - 아동 대상 온라인 교육 시범실시기관 모집을 통한 아동안전콘텐츠 활용 - 대국민 홍보를 통한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교육시설과, 교육과정운영과, 학원정책팀)	교육 및 시설안전 놀이안전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 확대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석, 휀스 등 분리시설 설치로 보도/차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개선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 감소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도로부속물(도로 안내판, 방호 울타리,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등) 설치 • 학교안전교육 :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캠페인 • 학교안전 사고예방제도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Safety Zone 운영)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및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초·중등학교 시설안전 관리 • 안전하게 뛰어노는 놀이 공간 조성 • 체험캠프 등 수련프로그램 안전성 강화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자동차운영과)	안전한 성장 및 생활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게 뛰어노는 놀이 공간 :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 공간 안전관리 • 추락사고 예방관리 : 아파트, 리조트 등 거주지 내 어린이 추락사고 예방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안전한 성장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캠프 등 수련프로그램 안전성 강화
경찰청 (교통안전과)	안심하고 누리는 생활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관세청 (통관기획과)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생활제품 안전확충 : 완구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부처명(소관과)	분야	주요 내용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안심하고 누리는 생활환경 구축	• 추락사고 예방관리 :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웹진/웹툰 등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제품안전 관리 강화	• 어린이 생활제품 안전 확충 : 어린이 제품에 대한 포괄적 안전관리방안 마련, 완구에 대한 안전성 심사 및 관리강화

자료 : 대한민국 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5, 교육부(2015), 학생건강안전과 내부자료.

제 2 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1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청소년 유해약물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 물질 등이며,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약물중독은 약성 약물에서 강성 약물로 전이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한번 사용하게 되면 습관성과 의존성 및 중독성과 내성이 강하여 중단하기 힘든데, 특히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예방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주류나 담배의 유통규제 제도의 한계 등으로 청소년의 흡연·음주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 제도 및 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약물 중 빈번한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음주 및 흡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약물예방에 관한 국제적 표준에 적합한 제도와 법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 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실태

2015년도 청소년 흡연율은 7.8%로, 2013년 9.7%, 2014년 9.2%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11.9%,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3.2%로 나타났다. 최초 흡연 시작연령은 평균 만 12.7세로 나타났다.

〈표 6-2-1〉 청소년 현재 흡연율,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 연령

(단위 : %, 세)

구 분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 경험률**	처음 흡연 연령
2012년		11.4	24.6	12.6
2013년		9.7	21.4	12.6
2014년		9.2	19.9	12.6
2015년		7.8	17.4	12.7
성 별	남 성	11.9	25.3	12.7
	여 성	3.2	8.8	12.8

주 : * 현재 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 평생 흡연 경험률 : 평생동안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 음주의 경우, 2015년도 현재 음주율이 16.7%이며 생애 음주 경험률은 40.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최초 음주 시작연령은 2015년 13.1세로 나타났다.

〈표 6-2-2〉 청소년 음주 경험률 및 처음 음주 연령

(단위 : %, 세)

구 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처음 음주 연령
2012년		19.4	47.0	12.8
2013년		16.3	43.5	12.9
2014년		16.7	43.0	12.9
2015년		16.7	40.8	13.1
성 별	남 성	20.0	46.3	12.9
	여 성	13.1	34.9	13.3

주 : * 현재 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평생 음주 경험률 : 평생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나.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기반 구축

(1)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기반 구축

2005년 WHO는 회원국에 음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서는 회원국에 담배의 광고, 판촉 및 후원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은 2006년 12월 연방의회에서 「청소년 음주예방법」 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흡연·음주 환경 규제내용이 각 개별법에 분산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즉, 청소년 흡연규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는 주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주류소매(면허)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달리 면허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류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흡연·음주예방을 위한 기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류·담배의 청소년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 시행(2012년 9월 16일)하였다.

2014년도에는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사이트 구축 및 QR코드 제작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 시행(2015년 3월 25일)하였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청소년 흡연예방 대책 추진

최근 들어 청소년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흡연을 자제하고, 흡연은 좋지 못한 사회적 행동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각종 예방교육, 캠페인 사업 및 다양한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의 평생 흡연 경험률은 2013년 21.4%, 2014년 19.9%, 2015년 17.4%로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3〉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부처	대책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의료기관을 통한 청소년 건강상담 및 무료금연침 시술 사업 지원 • 위기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 및 유통업자 종사자 교육 • 유통업체,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신분증 확인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 및 다양한 홍보 실시 •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2013~2015)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운영 • 보건소 금연 상담 및 금연치료 프로그램 제공(금연교실, 금연지도자 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 상담 등) • 매스미디어 홍보(언론매체, 인터넷, 금연월간지, 스티커 등)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 실태에 대한 주기적 파악 •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흡연·음주예방 교육 실시(금연학교 운영) •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유해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람가 영화 속의 흡연장면 노출문제 개선(영상물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사업법 제정·운영
미래창조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규제 방안(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심의강화 및 기준보완)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흡연장면 노출 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판매 업소 특별계도 및 단속

자료 : 여성가족부(2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3) 청소년 음주예방 대책 추진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한국 특유의 관대한 음주문화의 영향 등으로 사회 전반에서 음주로 인한 수조 원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고, 음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채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건강한 성장 발달권을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주류협회, 주류관련 유통업체 등에 청소년신분증 확인 교육 동영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고, 청소년 음주예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UCC공모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하계휴가지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캠페인’, ‘애니메이션 제작 홍보’, ‘학교 스쿨터치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 등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연중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평생 음주 경험률은 2013년 43.5%, 2014년 43.0%, 2015년 40.8%로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 부처	대책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 음주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 청소년 대상 음주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 및 유통업자·종사자 교육 • 유통업체,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신분증 확인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대상 음주예방 교육 및 다양한 홍보 •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2013~2015)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 폐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국민인식 제고 • 생애집단별 교육 및 홍보(학생과 비행청소년, 또래 지도자와 교사, 주류 판매업자 대상 교육) • 정신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조기발견과 음주 폐해 예방(학교와 연계해 방과 후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중학생과 초등학교까지 적용) • 주류 판매자의 자정노력 강화(클린 판매점 선정 및 운영) • 절주 상담실 운영 •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음주율 증가 및 저연령화 문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학생의 체계적 음주예방 교육(정규수업, 학교장 재량시간 활용) - 학생 음주예방 교육을 위한 지도능력 배양과 인식제고 -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소년원)들의 음주율 증가 문제 관련 : 갱생프로그램에 최소한의 음주 예방 교육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람가 영화 속의 음주장면 노출 문제 개선 : 영상물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미래창조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 주류 유통물 규제 방안 : 인터넷상의 주류 유통물 심의 강화 및 기준 보완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관련 범죄 수사 시 "피의자 원표"에 음주 여부 조사항목 신설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음주장면 노출 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판매 업소 특별계도 단속

자료 : 여성가족부(2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다양한 유흥문화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업소 및 신·변종 유해업소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2-5〉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

(단위 : 개소)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96,113	803,114	810,816	849,723	854,868	875,329	892,092

자료 : 행정자치부(2015).

더구나 도시지역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생애 이용률은 노래방 90.2%, PC방 85.8%, 전자오락실 60.0%, 만화방 29.9%, 멀티방/룸카페 24.4%, 주점 13.8%에 달한다.

특히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이 확산되어가고 있고, 주거지역 인근에도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신도시 건설 시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등을 통해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있다.

즉, 기존 시가지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주거지, 학교, 학원 등이 혼재되어 입지하면서 청소년에게 교육적·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인 '레드 존(RED ZONE)'을 설정하였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37곳, 통행제한구역 21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추진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도시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에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사업의 시범도입(국토교통부)을 적극 추진하여 2010년 화성·동탄2 신도시 실시계획에 중심상업용지 등 4개 구역에 한하여 위락시설, 숙박 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건축을 허용하는 '레드 존'을 지정, 격리·구획화하도록 반영하고 시범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격리·구획화 사업의 시범실시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지속적인 업무협조 체계 유지를 통하여 추후 신도시 개발 시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사업을 적극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6-2-6〉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2015년 말 현재, 단위 : 개소)

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무도 학원 (무도장)	이용업 (목욕장)	숙박업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게임 제공업계				기타*
										게임 제공업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일반 (청소년) 게임장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892,092	29,193	14,117	623,395	108,362	1,087	26,048	28,844	34,493	848	308	19,467	4,064	1,794	72

주 :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단란·가요주점,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방, DVD방,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경마장외발매소, 경륜·경정 장외매장 등.

2)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 소주방, 티켓다방 등.

* 기타 :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자료 : 행정자치부(2015).

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학교보건법상 절대·상대 정화구역의 지정·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거리를 벗어난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업소들이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을 퇴폐향락으로 이끌고 있다. 경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을 2014년 8,348건을 단속하여 5명을 구속하였고, 8,343명을 불구속 처리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 11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의 불건전서비스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2011년 7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일반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업소’로,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였다. 2014년 3월에는 「한국마사회법」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경정법」의 장외매장을 경기 개최일에 한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였고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2015년 3월에는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 6-2-7〉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연 도	총 계	위 반 내 용				조 치	
		유해업소 출입·고용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이용 유해행위	유해 매체물	구 속	불구속
2011년	9,575	1,690	6,337	509	1,039	6	9,569
2012년	14,067	1,414	11,158	625	870	46	14,021
2013년	13,438	1,707	9,980	464	1,287	8	13,430
2014년	8,348	870	6,888	401	189	5	8,343

자료 : 경찰청(2015).

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최근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상채팅방, 모텔, PC방 등 신·변종 업소가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단속 및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신도시 개발계획 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업종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유해업소 및 신·변종유해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점검단이 자체 점검·단속활동과 더불어 전국의 관계기관(지자체, 경찰, 청소년보호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전국 272개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운영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및 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19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권변동 및 도시재정비 사업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5년 9월 말 기준 총 56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표 6-2-8〉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단위 : 개소)

시·도	구 분	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계	56	37	19
	서울	8	5	3
	부산	4	2	2
	대구	1	1	-
	인천	2	1	1
	광주	2	1	1
	대전	2	2	-
	울산	-	-	-
	세종	-	-	-
	경기	9	7	2
	강원	7	7	-
	충북	1	1	-
	충남	2	2	-
	전북	9	4	5
	전남	1	-	1
	경북	5	3	2
	경남	3	1	2
	제주	-	-	-

주 : * 통행금지구역 : 유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지역(24시간 통행금지).

**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등 판매·대여 등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지역 (일정시간 통행제한).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여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하여, 신도시 계획 시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 주거지 및 학교 위생정화구역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특정 용도제한구역을 설치하며, 도시의 건전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모델을 제시하고, 주거지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격리·구획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010년 6월 29일 화성·동탄2 신도시 개발계획에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가 반영되었다.

(3) 학교 주변의 환경개선

교육부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는 「학교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이며, 이 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부칙규정에 의한 이전·폐쇄 대상 업소는 정화구역을 현행과 같이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구분한 제3차 개정(1981년 10월 8일) 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이다. 이후 동 시행령의 제4차(1990년 12월), 제6차(1993년 9월), 제12차(1998년 1월) 및 제14차(1999년 5월) 개정 시 새로이 추가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전·폐쇄토록 규정한 바 있다. 2007년 8월 3일 「학교보건법」이 법률 제8578호로 개정되어 정화구역 안에서 게임물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으며, 2008년 8월 이후부터 학교 앞에 설치된 미니 게임기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장이 설정하지만, 건축허가·영업허가와 유해시설의 방지 및 철거 명령은 시·군·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어 교육청의 정화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담장 옆이 쓰레기하치장 또는 불법 주차장화 되는 경우가 많아 비위생적이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의 불법·선정적인 광고물 등은 학생생활지도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2015년 9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종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 행위 및 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이 앞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에서, 비디오물소극장업이 모든 학교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의 경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제표준무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술·음료 및 생음악을 제공하지 않는 체육시설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더라도 학습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비디오물감상실업(일명 ‘비디오방’)과 다르며,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영화상영관과 영업형태, 시설 설치기준(객석 수, 바닥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학습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든 학교의 정화구역에서 허용하게 되었다.

〈표 6-2-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2015년 6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환경 기준초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한영화상영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도축·화장·납골시설	1	0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3
폐기물수집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0	0	0	0	1	0	0	0	0	0	0	0	0	1	5	0	0	7
가축사체처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염병원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축시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유흥·단란주점	3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호텔, 여관 등	9	0	3	0	0	0	0	0	0	0	0	0	0	0	9	0	1	22
당구장	6	1	0	4	1	0	0	0	0	0	0	0	0	0	0	0	0	12
경륜장 등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게임제공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터넷 컴퓨터	3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5
증기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만화가게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무도학원 등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2
노래연습장	15	2	2	0	0	0	0	0	0	0	2	0	0	0	0	0	0	21
담배자판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비디오감상실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기구취급업소	19	1	1	1	0	0	0	0	2	0	0	0	1	0	0	0	0	25
전화방, 화상방	3	2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3
미니 게임기	1	0	0	0	0	0	0	0	0	33	0	0	0	0	0	0	0	34
신변중업소	61	56	2	3	0	0	0	0	89	0	1	0	0	0	0	0	11	223
계	125	65	9	8	3	0	0	0	93	33	6	0	1	1	18	0	12	373

자료 : 교육부(2015).

〈표 6-2-1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

(2015년 6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환경 기준초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한영화상영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	78	74	12	9	0	3	3	0	47	19	9	8	16	7	10	11	6	312
도축·화장·납골시설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폐기물 수집장	1	8	0	0	1	0	3	0	6	0	2	0	4	1	1	1	0	28
폐기물처리시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축사체처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염병원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축시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유흥·단란주점	1,909	1,651	389	552	137	93	358	15	1,844	465	272	413	424	685	680	942	500	11,329
호텔, 여관 등	1,389	760	296	331	82	143	151	7	776	360	247	405	218	352	491	421	247	6,676
당구장	1,669	362	181	470	206	175	161	7	1,368	164	192	223	289	311	258	275	51	6,362
경륜장 등	1	1	0	0	0	1	0	0	5	0	0	0	0	0	0	0	0	8
게임제공업	59	20	23	17	27	16	1	0	67	11	6	25	34	26	20	33	8	393
인터넷 컴퓨터	745	84	118	97	143	114	7	0	415	70	53	127	161	139	60	137	14	2,484
증기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만화가게	4	3	3	4	0	0	1	0	22	1	5	3	52	3	1	29	3	134
무도학원 등	35	18	43	11	1	5	0	1	55	1	6	7	16	8	12	10	22	251
노래연습장	2,097	708	612	494	374	378	254	12	1,994	248	300	355	300	317	462	498	59	9,462
담배자판기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비디오감상실업	77	9	11	8	2	4	0	0	14	2	5	4	8	1	9	3	3	160
성기구취급업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화방, 화상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3	8	0	6	3	9	1	1	13	0	2	2	4	2	1	3	0	78
미니 게임기	0	0	0	0	0	0	0	0	2	0	0	0	1	0	0	0	0	3
신변증업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8,089	3,706	1,688	1,999	976	941	940	43	6,629	1,341	1,099	1,572	1,527	1,852	2,005	2,363	913	37,683

자료 : 교육부(2015).

(4)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1998년부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상시 점검·단속체계를 구축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중앙 차원의 자체점검·단속활동과 지역의 관계기관(경찰·지자체·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매년 시기별·계기별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전국의 생활주변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 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마약류 등)·물건 판매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성매매암시 전단 등) 배포행위 등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활동과 비행·가출 등 위기노출청소년 선도 및 긴급 보호를 위한 거리상담(아웃리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단장(파견 검사), 여성가족부 직원(2명), 경찰공무원(3명), 검찰수사관(1명), 지자체 공무원(1명) 등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표 6-2-11〉 청소년 유해환경 유형별 단속실적(연도별)

(2015. 12. 31. 현재/단위: 건)

구 분	계	청소년유해매체 배포·게시			청소년 출입·고용	출입·고용/ 술·담배 판매 금지 미부착	유해약물 (술·담배)	기 타
		소 계	전 단	광고간판				
2012년	374	192	163	29	39	116	26	1
2013년	455	78	59	19	85	233	58	1
2014년	528	44	18	26	29	338	117	-
2015년	777	46	12	34	57	478	193	3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개설·운영을 시작으로 민간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 1994년에는 서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되었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서울 등 6대 도시에 6개 시민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보급되었다. 1997년에 제정·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상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1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275개의 감시단(총 18,274명)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7개 학교에서 학교감시단을 구성하여 별도 운영하고 있다.

〈표 6-2-1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단위 : 개, 명)

시·도	합 계		시민단체		학교감시단	
	단체 수	단원 수	단체 수	단원 수	학교 수	단원 수
합계	292	18,475	275	18,274	17	201
서울	64	6,642	55	6,550	9	92
부산	22	1,058	20	1,022	2	36
대구	8	344	8	344	-	-
인천	9	610	9	610	-	-
광주	9	428	9	428	-	-
대전	4	857	4	857	-	-
울산	8	531	8	531	-	-
세종	5	108	2	82	3	26
경기	69	4,351	69	4,351	-	-
강원	12	583	11	557	1	26
충북	6	217	6	217	-	-
충남	19	1,187	19	1,187	-	-
전북	9	407	9	407	-	-
전남	15	430	13	409	2	21
경북	11	224	11	224	-	-
경남	15	306	15	306	-	-
제주	7	192	7	192	-	-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주로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계도하거나 자체 감시활동을 통해 해당 업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 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청소년 유해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감시단 활동 우수사례 발표 시상, 각종 캠페인 전개 등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단위 감시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시단 지정 및 철회 등 지역 상황에 맞게 감시단을 운영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결속력 강화, 우수사례 등 정보교류 확대 그리고 감시단 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 향상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광역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감시단원의 청소년 보호정책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시단 전문 인력(코디네이터)을 시·도별로 19명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 3 장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1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여성가족부에서는 매체물 등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심의·결정 및 고시를 통하여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요청 등 시정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의 경계 붕괴,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등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시의적, 실효적 규제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 법·제도 개선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통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체환경의 급속한 발달과 변화로부터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곧 국가지속발전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규제·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보호·교육 지원 등의 사전 예방적 보호조치와 인터넷 중독 등 매체역기능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에서 효율적인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우리나라의 매체물 심의기관은 각 정부기관 산하의 유관기관 및 매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다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매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 및 등급분류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이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의 심의 및 등급분류, 음반 및 음악파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매체물 심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연령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연령등급제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문화관련 3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등급분류 제도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심의 및 등급분류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심의기관의 법적 성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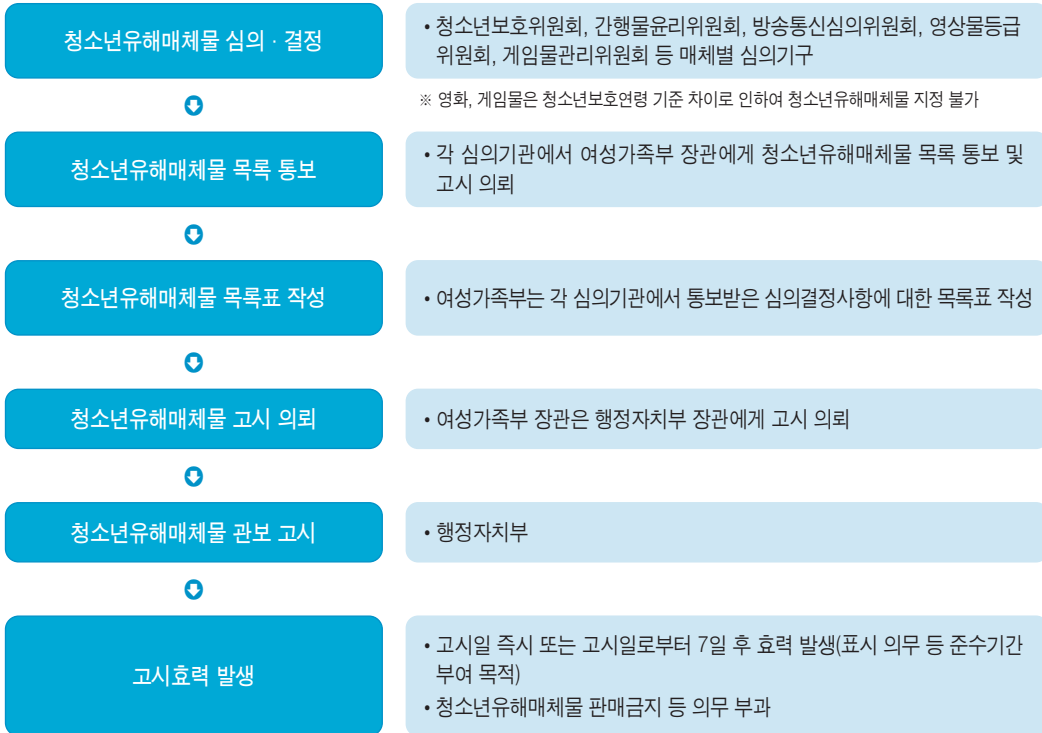
〈표 6-3-1〉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심의기구	담당 매체	소관부처 · 법률	심의형태
청소년보호위원회	모든 매체물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사후심의
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사후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 비디오 · CD	문화체육관광부, 「영화비디오법」	사전등급분류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법」	사전등급분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사후심의
	방송 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사전자율/사후심의병행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등에 따라 소관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 · 결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에서 제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 고시를 의뢰하고 있다.

[그림 6-3-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절차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표 6-3-2〉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 고시 현황

(2015. 12. 31. 기준 / 단위 : 건)

연 도	고 시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 관리 위원회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계			
		도 서	정기 간행물	만화 단행	만화 잡지	광 고	전자 출판	영 화				비디 오물	게 임 물	미 연 방	무 작 비 디 오	방송프로그램										통신분야		
																영 화	드 라 마	다 큐	만 화	음 악	버 라 이 어 디	테 이 터 방 송	인 포 레 인 먼 트	스 프 츠		기 타	PC 통 신	전 기 통 신
97	14	59	105	1,994	29	11	-	102	444	-	-	-	1,688	-	1	19	9	-	-	-	-	-	8	607	-	5,076		
98	43	173	416	1,140	52	-	-	151	762	-	-	-	808	30	12	52	14	-	-	-	-	-	0	755	-	4,365		
99	45	304	388	1,501	14	1	-	71	428	-	4	-	271	2	5	2	-	-	-	-	-	4	61	31	3,087			
00	28	366	699	1,227	-	-	-	-	-	-	-	-	158	-	9	4	-	-	-	-	-	-	67	53	10	2,593		
01	42	289	983	1,387	1	-	-	-	-	-	-	-	597	58	5	99	451	-	-	-	-	-	962	7	41	4,880		
02	51	259	1,098	1,492	8	-	-	-	-	-	-	-	1,399	33	1	114	19	-	-	-	-	-	189	435	836	5,883		
03	66	611	1,220	1,802	131	-	-	-	-	-	-	-	2,623	145	-	3	510	-	-	-	-	-	284	-	3,510	10,839		
04	62	371	528	1,810	269	2	-	-	-	-	-	-	202	67	2	-	-	-	-	-	-	-	-	-	7,641	10,892		
05	35	324	307	1,413	191	-	-	-	-	-	-	-	1,067	237	-	15	2	-	-	-	-	-	179	-	17,115	20,850		
06	45	351	324	1,347	72	-	-	-	-	-	4	-	2,794	207	-	29	3	-	-	-	-	-	480	-	18,715	24,326		
07	63	414	377	1,867	46	-	-	-	-	-	344	-	6,316	190	-	151	1	-	-	-	-	-	840	-	16,044	26,590		
08	45	433	264	1,653	48	-	584	-	-	-	651	-	1,041	1,059	-	142	-	-	-	-	-	-	626	-	884	7,385		
09	48	809	223	1,756	229	-	658	-	-	-	941	-	2,557	1,462	-	436	-	-	-	-	-	-	3,109	-	227	12,407		
10	36	822	276	2,066	188	-	1,131	-	-	-	991	-	1,041	902	-	459	-	491	-	63	3	412	-	261	9,126			
11	51	874	404	2,882	16	-	1,031	-	-	-	672	171	1,628	1,706	-	340	-	3,350	-	177	52	217	-	353	13,873			
12	62	844	445	3,037	-	-	1,075	-	-	-	1,049	101	2,218	2,077	-	555	-	4,424	2	-	-	61	-	448	16,336			
13	32	766	425	2,196	-	-	834	-	-	-	1,000	-	1,215	984	-	544	-	2,134	-	-	-	64	-	393	10,555			
14	35	824	518	1,840	-	-	926	-	-	-	1,140	-	969	795	-	1,015	-	1,880	-	-	-	-	-	-	263	10,170		
15	57	783	504	2,095	-	-	821	-	-	-	2,033	-	2,243	793	-	549	-	3,442	-	-	-	-	-	-	133	13,396		
계	860	9,676	9,504	34,505	1,294	14	7,060	324	1,634	-	8,829	272	30,835	10,747	35	4,528	1,009	15,721	2	240	55	7,502	1,918	66,925	212,629			
총합계				62,053				1,958	0	9,101								70,674					68,843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다. 음반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음반 심의제도는 그 근거가 되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6년 11월) 되면서 주로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심의임을 고려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업무를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음반·음악파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 유통 차단 등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매년 55,000여 곡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음반심의 이후(2006년 11월 이후) 2015년(12월)까지 유해결정 곡은 총 8,829곡(국내 3,255곡, 외국 5,574곡)에 이른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2년 10월 기존의 모든 청소년 유해음반에 대해 새로운 심의세칙에 따라 재검토하여 총 3,952곡 중 305곡을 취소 결정하여 음반심의 기준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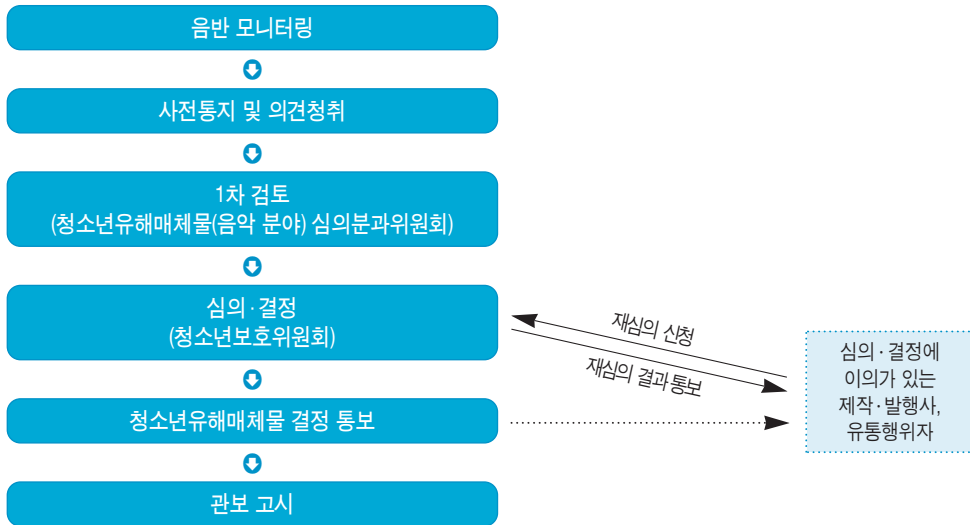
〈표 6-3-3〉 청소년 유해음반 결정 고시 현황

(2015. 12. 31. 기준 / 단위 : 건)

구 분	총 계	2006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829	8	344	651	941	991	672	1,049	1,000	1,140	2,033
국내곡	3,255	4	151	228	445	427	253	361	382	438	566
외국곡	5,574	4	193	423	496	564	419	688	618	702	1,467

자료 : 여성가족부(2015).

[그림 6-3-2]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청구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제 4 장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대응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학업성적·사회성 저하, 가정불화, 건강 악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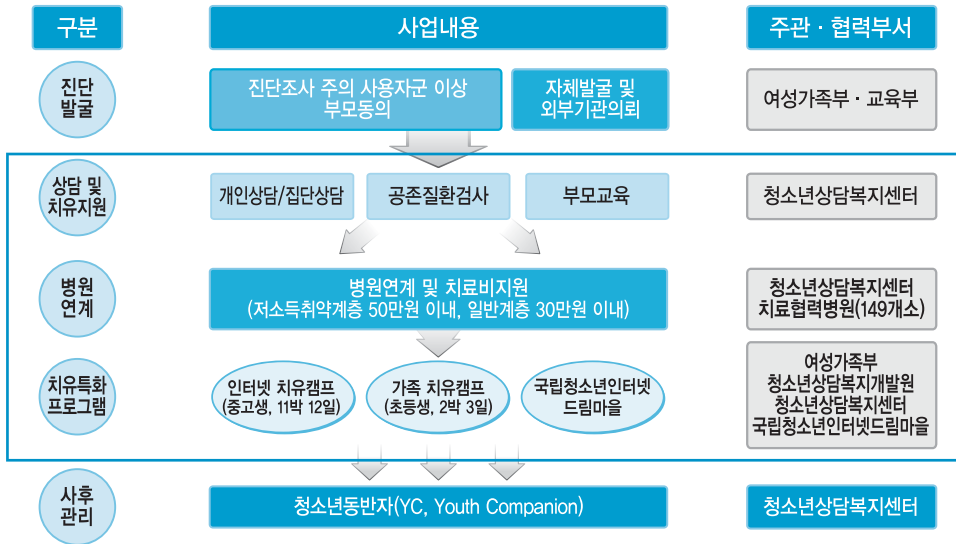
가. 인터넷 중독 대응체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매체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의 주요한 분야로서, 이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잠재적인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상담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2015년 현재, 전국 20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해 전국 200여 개소의 정신건강 증진센터 및 149개 치료협력 병원 연계를 통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치료 기반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허브로 하는 인터넷 중독 대응 지역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자체, 교육청, 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지역협력망을 통하여 지역 내의 인터넷 중독 대응 기관 간 연계·협력은 물론, 지역 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조기 발굴 및 상담·치료 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및 상담실적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 연계하여 지역별 중독해소 서비스지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림 6-4-1] 여성가족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재활 사업 추진

여성가족부와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치료·재활기반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적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프로파일 연구와 중독 청소년에 대한 장·단기적 서비스의 총괄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2005년부터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기반 조성 및 임상적 치료-재활 모델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1차연도인 2005년에는 서울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4대 권역에 각각 4개의 중심센터(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연세대병원, 중앙대병원) 및 협력병원 8개소를 치료·재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심층적 개인 심리치료, 입원치료 및 가족치료, 공존질환치료, 집단치료모델을 개발하였다.

이후, 치료모델 수정 및 보완, 매뉴얼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협력병원의 전문의들에게 인터넷 중독 치료 모델을 교육시키는 등 치료 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지역에 국한되었던 치료협력병원을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전국의 대상 청소년들에게 좀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역협력망 내에서 상담과 치료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전국 16개 시·도 96개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2007년)하여, 청소년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원을 확대하고,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치료모델을 국제적으로 공유한 바 있다.

2014년에는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대상 전문적, 체계적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상담치료 매뉴얼' 보급을 위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전문의 대상 지역별 순회 교육(11회, 242명)을 실시하였다.

다. 학령전환기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통한 예방·중독 해소 강화에 초점을 두고, 2009년부터 학령전환기 청소년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진단 조사는 2009년 초등 4학년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125만 명, 2011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총 186만 명, 2012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총 180만 명, 2013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총 17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3년 진단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동 조사는 매년 실시할 예정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학령기간 동안 최소 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점검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조기 진단하여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라. 인터넷 중독 위험단계별 상담·치료 지원

(1) 위험단계별 맞춤형 상담·치료 지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단계별(주의사용자군과 위험 사용자군)로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한 1차 선별결과를 근거로 지역 상담복지센터에서 위험군에 대한 공존질환 등 추가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위험 사용자군에게는 개인상담 및 병원치료 연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만원 이내 치료비 지원, 일반계층 30만원 이내) 등을 지원하며, 주의사용자군에게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 인터넷 중독 치유 특화 프로그램 운영

중독청소년 대상 단계별 맞춤 상담·치료지원 외에도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1박 12일의 기숙형 치유캠프(인터넷 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치유캠프에서는 인터넷중독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터넷과 단절된 환경에서 상담지원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부모교육, 심리검사), 활동지원(수련(체험)활동, 대안활동, 자치활동, 봉사활동, 가족캠프), 생활지원(멘토링, 숙식 제공), 사후관리지원(청소년동반자 연계상담, 사후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캠프 종료 후에도 청소년동반자, 멘토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참여 청소년 치유 효과가 지속되도록 돕는다. 인터넷 치유캠프 프로그램은 평균 60%를 넘는 치유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선현장 및 학부모들의 지지와 인지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7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실시된 인터넷 치유캠프는 참가자 및 보호자들의 높은 호응과 지지를 받아 2009년에는 전국 4개 권역, 2011년에는 총 8회, 2012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센터에서 총 24회로 확대 운영되었고, 2013년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캠프를 운영하였다. 2014년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설립·운영에 따라 연 17회(시·도당 1회)로 조정 운영하였고, 2015년부터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치유캠프(3회)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6학년 초등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가족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 치유캠프에서는 가족 간 소통·친밀감 향상과 올바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지도를 위한 상담 지원(집단상담, 가족/부모교육, 심리검사), 활동지원(수련(체험)활동, 대안활동), 생활지원(멘토링, 숙식 제공), 사후관리지원(사후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1년에 시작한 가족치유캠프는 2011년에는 총 5회, 2012년에는 총 16회, 2013년에는 총 10회 운영되었고, 2014년에는 총 10회 중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2회)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마. 인터넷 중독 상설치유기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설립·운영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에 대해 상시적, 효과적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독 상설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하 ‘드림마을’)은 2014년 8월에 전라북도 무주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6회를 운영하여 총 73명이 수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5주 장기과정을 포함하여 총 13회를 운영하고 있다.

드림마을은 중독 정도에 따라 1주부터 5주 과정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집단상담, 가족상담 및 수련, 대안활동 등 참가 청소년들의 관계 능력 증진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3~6개월간 참가 청소년들에 대해 ‘청소년 동반자’와 ‘멘토’ 등을 통한 사후관리로 치유 효과가 지속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바.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성 및 대응 강화

(1) 인터넷 중독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인터넷 중독 및 게임 중독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및 온라인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06년 상반기에 청소년상담사를 위한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06년 200여 명의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교육을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급증한 인터넷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동반자, 학교상담사 등 총 30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치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전문화를 기하였다.

2008년부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사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전문가 과정을 신규 및 심화과정으로 이원화했고, 2013년부터는 인터넷 중독 상담·치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신규, 심화 및 보수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2008년 478명, 2009년 472명, 2010년 502명, 2011년 457명, 2012년 417명, 2013년 509명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 상담인력 892명, 2015년에는 1,361명을 양성하였다.

(2)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상담 실시

청소년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 면접 상담(9~18시)을 원하는 경우 전국 19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매체인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상담에 대한 거리감을 허물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에 접속하면 사이버상담(24시간)을 통해 비밀 상담, 채팅상담을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수신번호에 #1388을 누르면 24시간 문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대응 강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상담 치료 매뉴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2014년에 청소년 상담기관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9회, 650명)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정신의학회 전문의 대상 지역별 순회 교육 개최(11회, 242명)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진단조사 결과 나타난 스마트폰 중독 저연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치유캠프를 2014년 10회에서 2015년 15회로 확대 운영하였다.

2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실시 및 효과

가. 제도 도입 배경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10~19세 청소년들 중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비율은 1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들 10명 중 1명 정도가 인터넷 중독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의 인터넷 주 이용 목적은 온라인게임(59.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터넷게임중독은 학습시간을 침해하고 수면부족을 야기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첫다운제’)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UN 아동권리협약에서 권장하는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수면권, 건강권)를 실현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형성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제도 추진 현황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의해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0~6시)

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2011년 5월 19일 개정, 2011년 11월 20일 시행).

이 제도는 PC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청소년들에 대한 보급률이 낮은 기기를 통해 진행되는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을 2년간 유예하였다. 또한, 법 규정에 의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 여부를 매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3년과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제도 적용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였다.

2012년 8월 「정보통신망법」 등 시행 및 2014년 8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전면 금지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어려워져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법제도 이행 여부 점검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제도 효과 분석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도입·실시 후 심야시간대 청소년 게임 이용자 및 평균 게임이용시간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을 심야시간에 주로 이용한다는 청소년 비율은 2011년 5.8%에서 2013년 2.2%로 나타나 62.1% 감소하였고 특히, 제도 적용 대상인 만 16세 미만에 주로 해당되는 초·중학생이 73.5% 감소(평일 주말 평균)하여 고등학생 63.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또한, 2013 게임이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섯다운제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들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0에 가까운 이용시간을 보여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뿐만 아니라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실시 이후 만 9~14세 청소년의 경우 게임이용 시간대가 밤 10시에서 아침 6시인 경우가 2011년 10.2%에서 2012년 1.5%로 감소(감소율 85.3%)하는 등 청소년의 게임이용 주 시간대가 심야시간 이전으로 앞당겨져 수면권, 건강권 확보가 가능해지는 정책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게임백서).

3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및 게임 이용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매체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규범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세계에서의 행동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가정과 학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된 바, 업계자율정화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시스템의 구축

업계의 자율정화활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청소년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인 청소년에게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모니터링, 감독 등 내부정화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정화시스템은 사업자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약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확보하고, 청소년보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미지를 개선하여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자율의지의 실현이다. 또한, 법 위반 행위 예방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차단과 청소년 보호법 준수에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도 사이버 세상을 한층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나. 청소년보호책임자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터넷사업자 및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자율정화 의지를 제고하고자 2007년부터 인터넷·게임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각 사업체에서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자, 프로그래머 등 모든

분야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 보호법」 해설, 유해매체물의 심의 절차 기준, 고시제도 등의 강의를 청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청소년보호 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부터는 사업장 방문을 통해 포털사이트, 게임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분야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다. 사업자의 자율정화 지원

2015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사이버상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부와 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지원하고 불법 및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특히,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여성가족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SK 커뮤니케이션즈, 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CJ E&M, kt music, 네오위즈 인터넷, 와이즈피어 등 9개 인터넷기업과 함께 청소년에게 유익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온·오프라인 민관협력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정화활동으로 추진된 고객센터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게임업계의 자율규약선언, 이동통신사의 성인서비스 중단, 인터넷신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청소년보호정책과 더불어, 2015년에는 인터넷신문의 청소년 유해성 광고 차단을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5. 11. 19. 시행, 문화체육관광부)하여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 밖에도 자율규제단체 등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자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약 제·개정 및 자율심의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정화 활동은 앞으로도 법이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버상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 5 장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선도보호(재유입방지교육)

가.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검사가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게 교육과정 또는 상담 과정 이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40시간)을 개발하고 전국에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 중이며, 법적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교육 강화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 지원에 두고 있다. 운영 대상은 검찰에서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과정 이수 결정이 통보되거나 경찰에서 발견 사실이 통보된 대상 청소년, 성매매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청소년, 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 등 관련시설에서 추천한 성매매 피해청소년 및 사이버 포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성매매 피해 노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5박 6일 동안 24시간 숙식을 함께하며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 활동, 진로 탐색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의료·법률·학업·자립·자활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15년 현재 1개의 중앙센터 및 10개의 권역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표 6-5-1〉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	운영기관
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의 교육상담이수 결정 통보자 • 경찰의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자 • 성매매피해상담소, 아웃리치 등을 통해 연계된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대여성인권센터(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사)인천여성의전화(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춘천길잡이의집(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성공회 대전 나눔의집(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 부산광역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 광주YWCA(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 대구여성회(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장애를 가진 성매매 피해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의 샘(평화위기청소년센터)
중앙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5).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서비스 목표는 청소년들이 ‘미래 가능성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청소년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발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진로계획을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탈성매매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미래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성과 주체성을 기르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40시간 교육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사전검사(OT), 심리검사(MMPI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동작치료, 미술치료), 성 주체성 향상 프로그램(성교육, 건강검진, 섹슈얼리티),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개인브랜드 가치 높이기, 롤모델 만나기, MBTT), 사회통합 프로그램(자원봉사 활동, 진로 프로그램, 학교탐방, 직업체험, 미래설계 등), 성매매 바로 알기(생존자 증언 등), 수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5-2〉 교육프로그램 구성

분 야	프 로 그 램
심리검사 프로그램	MMPI 등 심리검사 및 상담, MBTI, NEO 등 성격검사 및 해석상담, 자기이해, 문장완성 검사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	미술치료, 푸드아트테라피, 놀이치료, 연극치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의료지원 프로그램	건강검진, 치료 및 상담, 의료(보건)교육 등
법률지원 프로그램	법교육, 인권교육, 법률상담 등
진로지원 프로그램	진로 및 직업탐색, 미래설계, 직업체험, 검정고시, 자격증 및 취업준비, 대학 및 기업탐방, 자원봉사활동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	아이스브레이킹, 레크레이션, 문화예술, 스포츠, 친목활동 등
성주체성 프로그램	섹슈얼리티, 성교육, 성 교육장 체험 등
탈성매매 프로그램	성매매 바로 알기, 탈성매매 여성과의 만남, 100분 토론, 위기 상황 대처활동 등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5).

2015년부터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세분화하여 기본과정(40시간)을 수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시간 내외의 전문적 심화과정도 운영하여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이는 기본과정과 그간의 상담 및 사례 관리를 거쳐 파악된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세부 프로그램 구성은 직업 및 자활관련 프로그램, 성인식 및 성주체성향상 프로그램,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 자기성찰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교육 실시 사전, 사후의 상담 및 사례관리(1년간 제공)를 통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 및 일상생활의 안정화를 돕는 한편, 안정적인 거주지 지원, 학력 취득 및 취업 준비, 의료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한다. 사전지원의 경우에는 검찰 및 경찰로부터 발견통보 되거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청소년에 대해 교육 전 필요한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자와 라포를 형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재유입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취업방향 및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복학 및 검정고시 지원으로 진로설정에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가족, 친구 등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돕는 지지 모임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표 6-5-3〉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중앙 센터	일반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적 장애	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2006년	24	-	20	10	26	-	-	-	-	-	14	94
2007년	108	5	58	62	47	-	-	-	-	-	25	305
2008년	-	45	47	45	43	-	-	-	-	-	25	205
2009년	-	44	43	36	39	34	42	-	-	-	17	255
2010년	-	52	60	40	48	29	46	50	18	-	29	372
2011년	-	38	46	31	31	31	43	50	18	24	21	333
2012년	-	31	44	43	41	31	39	48	24	29	25	355
2013년	12	22	30	31	29	27	32	26	16	30	23	278
2014년	-	39	42	43	36	40	18	41	17	42	37	355
2015년 (10월 기준)	-	28	40	26	33	31	12	32	22	34	29	287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5).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가. 신상정보 공개제도 목적과 의의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 성 매수 등의 성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줌과 동시에 지속적인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6월 30일에 개정·시행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2월 4일에 다시 법을 개정·시행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 열람에서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관리 되고 있다.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10년 이내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미국은 1994년 “제이콥웨터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을 만들어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6년 “메간법(The Megan's Act)”을 만들어 열람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또한, 2006년에 “아담 월쉬 아동 보호 및 안전법(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제정하여, 일반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 내 성폭력 전과자들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각 주별로 운영되던 등록·열람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드루 소딘 국가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Dru Sjoдин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를 만들어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나. 신상정보 공개제도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공개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 명령”이라고 한다)을 선고한다. 공개대상자는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기간은 징역·금고 3년 초과인 경우 10년, 징역·금고 3년 이하인 경우 5년이다.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로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된다. 공개 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전과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신상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공개되며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다. 공개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2011년 1월 1일부터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한다. 고지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고지정보를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고지기간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이며, 고지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상세주소를 포함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전과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고지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실제 주소지 읍·면·동 행정구역에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읍·면·동 주민센터의 장 등을 대상으로 고지정보서 1부를 우편으로 송부하게 된다.

라.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현황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등록이 완료된 자는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33,616명(법무부)이고, 공개명령이 선고되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사람은 4,552건이다.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 6월 30일 시행)에 따라 유치원·학교·학원·교습소·청소년보호·재활센터·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쉼터·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체육시설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으로 2008년 2월 4일에는 성매매피해상담소·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2010년 1월 1일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0년 4월 15일에는 개인과외교습자, 2012년 8월 2일에는 의료기관(의료인만 해당)·가정방문 학습지교사, 2013년 6월 19일에는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활동기획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소·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등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최초 도입 당시에는 취업제한 기간이 5년이었으나 2008년 2월 4일부터 10년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4월 15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교육장)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시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취업 중인 자 포함)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해당 경찰서는 조회대상자의 성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조회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온라인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이 가능하다.

한편,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의 장이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취업제한자로 규정된 자가 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면 해당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폐쇄를 요구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기관으로는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해당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은 상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9,972명을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13,436명을 실시하였다.



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립목적 및 의의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전국 16개 시·도에 2007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시설인 청소년성문화센터는 'Education'과 'Entertainment' 개념을 혼합한 'Edutainment'라는 신개념의 성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Sexuality'를 재미와 감동이 함께 하는 놀이터로 이미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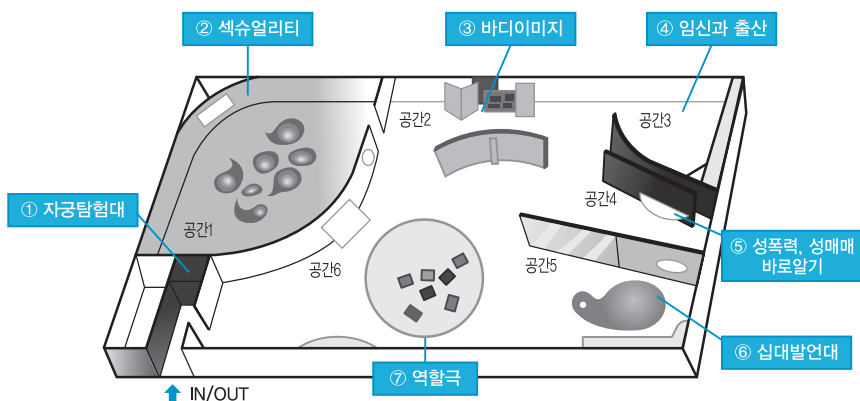
나. 추진배경 및 경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또는 또래를 통해 얻고 있는데 반해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그 효과성이 결여됨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멀티미디어와 다양한 설치물을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이 실시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정된 지역에서만 교육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청소년정책자문위원회 성문화분과위원회가 전국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업 시행을 여성가족부에 건의(2006년 7월)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여성가족부 소관 정부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2007년 4월 민간 성교육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추진단에 의해 표준 콘텐츠 및 운영매뉴얼이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콘텐츠를 갖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6-5-1]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 시설 배치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1년에는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주요 콘텐츠를 탑재하여 농·산·어촌 등에 찾아가는 성교육이 가능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지역별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이동형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과 사업내용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은 시청각적, 참여적 성교육 및 실천지침 성격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재조명 및 대안 마련,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체험형태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 지식과 관련 정보 제공, 성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의 중추적인 성교육 센터로서의 인프라 구축 등이다.

사업내용은 대상별, 연령별 전문 성교육 실시(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성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전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 성 비행 및 성범죄 예방, 인형극을 이용한 성교육 실시 등)와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유치원, 각급 학교 및 청소년수련 시설 등 출장 성교육 실시, 청소년성교육 캠프 등 특별기획사업 추진 등), 그리고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성교육 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구축, 청소년성문화동아리 지원 및 자원 활동가 조직·관리) 등이다.

라.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현황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21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10월 현재 이동형 개소를 포함하여 5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6-5-4〉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정	48	9	3	2	2	2	2	1	6	3	2	1	4	4	3	2	2
이동	9	-	1	-	-	-	-	-	3	1	1	1	-	-	1	1	-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표 6-5-5〉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

시·도	개소수	기관명
서울	9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광진구),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송파구), 탁틴청소년성문화센터(서대문구), 아해!청소년성문화센터(영등포구),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도봉구), 하림이청소년성문화센터(성북구),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강남구), 서울시립종량청소년성문화센터(종량구) 보라매청소년성문화센터(동작구)*
부산	4	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사상구),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동래구),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금정구),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	2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달서구),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인천	2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부평구)
광주	2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북구), 광주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광산구)
대전	2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중구),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서구)*
울산	1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경기	9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 와~(안산시),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팔공달궁' (파주시),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부천시),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소행성' (안산시),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큰키나무' (파주시),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화성시),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수원시),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용인시), 안양시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안양시)*
강원	4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춘천시), 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강릉시),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원주시),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춘천시)
충북	3	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청주시), 충주호암청소년성문화센터(충주시),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시·도	개소수	기 관 명
충남	2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천안시),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홍성군)
전북	4	전주청소년성문화센터(전주시), 군산청소년성문화센터(군산시), 정읍청소년성문화센터(정읍시), 익산청소년성문화센터(익산시)
전남	4	목포청소년성문화센터(목포시), 여수청소년성문화센터(여수시),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완도군) 순천청소년성문화센터(순천시)*
경북	4	경북청소년성문화센터(김천시), 새들청소년성문화센터(포항시), 경북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안동시), 경상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남	3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사천시), 창원청소년성문화센터(창원시),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창원시)
제주	2	서귀포청소년성문화센터(서귀포시),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제주시)

주 : * 2015년 신규설치 기관으로 기관명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015년 10월 기준.

5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시

가. 성 인권교육 실시 목적 및 의의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아동·청소년에게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예방교육을 제공토록 의무화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2개 시·도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점차 사업 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왔다. 2012년부터는 ① 학교 성 인권교육, ②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학교 성 인권교육'의 경우에는 현재 7개 시·도에서 교육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2013년 5개 시·도 → 2014년 7개 시·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의 경우에는 시범실시를 거쳐 2015년에 전국 17개 시·도로 사업이 확대되었다(2012년 4개 시·도 → 2013년 12개 시·도 → 2014년 14개 시·도). 또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사용 교수·학습안 및 학생용 핸드북을 '13년에 제작하였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교육매뉴얼 제작도 '12~'13년에 걸쳐 완료하였다. 특히 학교 성 인권교육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재 개발을 확대하여 '14~'15년에 걸쳐 유아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4종도 추가 개발하여 총 5종에 달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성 인권교육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온 각각의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적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시범사업 결과 성 인권교육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¹⁾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13. 8. 13. 공포, 법률 제12080호)²⁾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2015년에 전국 실시가 완성됨에 따라 이제 '학교 성 인권교육'이 시범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와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5년째 시범사업으로 유지하기 보다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실시하여 본격적

1) 2014년 사전·사후 만족도 : 학교 성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성 인권 의식이 5점 만점을 기준 7개 시·도 평균 0.24점 향상되었으며, 또한 교육을 받은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성 인권 의식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14개 시·도 평균 13.2점 향상되었다.

2)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

으로 성 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폭력 예방교육을 통합적 관점에서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사업내용

성 인권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는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과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을 진행할 시·도별 지역 운영기관을 각각 7개소, 29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선정된 지역운영기관에서는 성 인권교육의 실시 및 교육만족도 조사, 사업실적 제출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중앙지원기관은 성 인권교육 사업의 실적관리, 컨설팅 등 지역운영기관을 지원하게 된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은 서울, 부산, 경기 등 7개 시·도에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 및 성평등, 관계와 소통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와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과제를 작성하고 발표도 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하며, 학교의 보건교사 또는 전문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 표준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되지만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성화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이 경우 한 학급 당 인원이 3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표준교안은 '13년 개발된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수·학습안」 및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핸드북」을 활용한다. 해당 학교 보건교사 등이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연 15차시 내외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사업규모와 대상인원을 차등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예산 지원하고 있다.

〈표 6-5-6〉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실인원	11,466	20,309	22,339
연인원	118,393	184,975	240,343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 인권교육으로 실시된다. 지정된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초등 4~6학년, 중등 1~2학년의 지적·시각·청각·중복 장애 아동·청소년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세부추진방법은 장애유형별로 마련된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육기자재를 이용하여 수업이 실시 된다.

〈표 6-5-7〉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실인원	1,554	1,690	2,504
연인원	14,266	15,951	24,154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성 인권 인식을 높이는 교육은 어린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아동 성 인권교육을 참여형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9,139천 명이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6%, 중학교 0.8%, 고등학교가 1.6%로 나타났으며 매년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010학년도에는 2.0%까지 높아졌다가 2014년에는 1.6%로 떨어졌다.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증가하여 학력 격차가 다소 심화되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항목 중에서는 교우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학교 주변 환경 만족도, 학교시설 및 설비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부는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은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의 개별 여건을 진단하여 2015년 전국 1,823교에 1,286억 원이 지원되었다. 방과후학교인 ‘초등돌봄교실’은 2013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1~2학년, 2015년에는 1~4학년까지 적용되었고, 2016년에는 1~6학년까지 확대·적용된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교육,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탈북학생 교육지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 교육 환경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최근에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교육지원 및 도농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1%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2013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외국인 자녀를 위해 학력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특별학급 운영 등의 정책을 보완하였다. 탈북학생은 2015년 4월 총 2,717명이 학교 안팎의 교육 기관에서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청소년 지원정책은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입국 초기·전환기 교육 내실화’, ‘정착지 학교의 통합적 맞춤형 교육 강화’, ‘성장·자립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지원 강화’, ‘관계기관 협력체제 강화’,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7부 청소년의 교육

제1장 학교교육 현황

제2장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제3장 교육복지정책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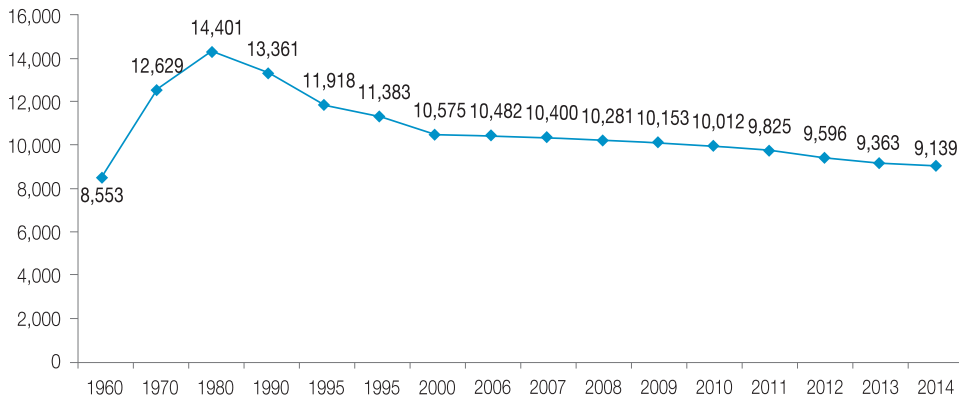
학교교육 현황

1 학령인구

2014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9,139천 명이며, 1980년 14,401천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학령인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11세(초등학교)가 2,762천 명, 12~14세(중학교)가 1,696천 명, 15~17세(고등학교)가 1,900천 명, 18~21세(대학교)는 2,781천 명이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7-1-1] 학령인구

(단위 : 천명)



주 : 6~21세 기준.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표 7-1-1〉 학령인구

(단위 : 천명)

연도	계 (6~21세)	학 교 급 별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1960년	8,553	3,629	1,566	1,417	1,941
1970년	12,604	5,711	2,574	2,101	2,218
1980년	14,401	5,499	2,599	2,671	3,632
1990년	13,361	4,786	2,317	2,595	3,663
1995년	11,918	3,901	2,443	2,349	3,225
2000년	11,383	4,073	1,869	2,166	3,275
2005년	10,575	4,016	2,058	1,864	2,637
2006년	10,482	3,919	2,097	1,918	2,548
2007년	10,400	3,798	2,097	1,990	2,515
2008년	10,281	3,627	2,072	2,056	2,526
2009년	10,153	3,442	2,031	2,091	2,589
2010년	10,012	3,276	1,974	2,090	2,672
2011년	9,825	3,098	1,913	2,064	2,750
2012년	9,596	2,923	1,859	2,019	2,795
2013년	9,363	2,788	1,808	1,962	2,805
2014년	9,139	2,762	1,696	1,900	2,78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2 학생 인구 및 학교 수

2014년 현재 학교급별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재학생은 2,728,509명, 중학생은 1,717,911명, 고등학생은 1,839,372명이다. 초등학교 재학생 수는 1995년 큰 폭으로 감소한 뒤,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2000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다 2006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일반계고 학생은 2005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10년까지 증가하였으며, 전문계고 학생은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 특목고와 자율고 학생 수는 2013년까지 증가하다 201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 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 현재 4년제 일반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수는 2,130,046명이며, 전문대생은 740,801명, 대학원생은 330,872명이다. 증가 추이를 보면 고등교육 재학생 수는 꾸준히 상승하여, 2014년 대학생 수는 199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며, 1980년에 비해 약 5.3배 증가하였다. 전문대생 수는 1980년에 비해 약 4.5배 증가하였고, 대학원생 수는 약 9.7배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향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인구의 감소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고등교육 인구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표 7-1-2〉 학교급별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성 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 학 교						대 학	대학원	교육 대학	전문 대학	특수 학교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80년	계	5,658,002	2,471,997	1,696,792	932,605	764,187	-	-	-	-	402,979	33,939	9,425	165,051	8,904
	여	2,745,382	1,161,351	722,394	400,316	322,078	-	-	-	-	90,534	5,786	7,723	39,883	3,391
1990년	계	4,868,520	2,275,751	2,283,806	1,473,155	810,651	-	-	-	-	1,040,166	86,911	15,960	323,825	19,971
	여	2,362,050	1,103,222	1,073,179	645,092	428,087	-	-	-	-	296,129	19,560	10,290	119,345	7,743
1995년	계	3,905,163	2,481,848	2,157,880	1,246,427	911,453	-	-	-	-	1,187,735	112,728	19,650	569,820	21,607
	여	1,869,239	1,203,668	1,038,596	557,899	480,697	-	-	-	-	378,418	31,675	14,687	214,310	8,003
2000년	계	4,019,991	1,860,539	2,071,468	1,324,482	746,986	-	-	-	-	1,665,398	229,437	20,907	913,273	23,605
	여	1,890,575	888,709	993,328	627,279	366,049	-	-	-	-	596,389	80,072	15,032	339,233	8,324
2005년	계	4,022,801	2,010,704	1,762,896	1,259,792	503,104	-	-	-	-	1,859,639	282,225	25,141	853,089	23,566
	여	1,899,694	946,974	832,873	599,806	233,067	-	-	-	-	684,238	124,930	17,856	316,326	7,980
2006년	계	3,925,043	2,075,311	1,775,857	1,281,508	494,349	-	-	-	-	1,888,436	290,029	25,881	817,994	23,394
	여	1,861,538	973,094	835,656	608,603	227,053	-	-	-	-	696,434	131,658	17,916	310,714	7,954
2007년	계	3,829,998	2,063,159	1,841,374	1,347,363	494,011	-	-	-	-	1,919,504	296,576	25,834	795,519	23,147
	여	1,822,727	963,020	867,673	640,729	226,944	-	-	-	-	712,735	137,118	17,658	308,453	7,855
2008년	계	3,672,207	2,038,611	1,906,978	1,419,486	487,492	-	-	-	-	1,943,437	301,412	24,116	771,854	23,419
	여	1,752,912	952,515	899,719	677,614	222,105	-	-	-	-	727,178	141,679	16,244	305,701	7,906
2009년	계	3,474,395	2,006,972	1,965,792	1,484,966	480,826	-	-	-	-	1,984,043	306,471	22,879	760,929	23,720
	여	1,659,970	943,231	924,785	706,607	218,178	-	-	-	-	749,329	146,083	15,335	301,395	8,050
2010년	계	3,299,094	1,974,798	1,962,356	1,496,227	466,129	-	-	-	-	2,028,841	316,633	21,618	767,087	23,858
	여	1,575,200	937,760	918,719	707,996	210,723	-	-	-	-	778,186	152,367	14,712	304,846	8,163
2011년	계	3,132,477	1,910,572	1,943,798	-	-	1,425,882	340,227	63,727	113,962	2,065,451	329,933	20,241	776,738	24,617
	여	1,497,652	910,783	910,258	-	-	690,453	147,455	33,679	38,671	802,075	158,523	13,765	310,247	8,503
2012년	계	2,951,995	1,849,094	1,920,087	-	-	1,381,130	330,797	64,468	143,692	2,103,958	329,544	18,789	769,888	24,785
	여	1,413,356	883,808	904,153	-	-	673,361	144,386	34,417	51,989	821,875	159,032	12,751	307,350	8,508
2013년	계	2,784,000	1,804,189	1,893,303	-	-	1,356,070	320,374	67,099	149,760	2,120,296	329,822	17,500	757,721	25,161
	여	1,335,941	859,506	900,713	-	-	668,341	143,309	34,977	54,086	835,703	158,952	11,828	303,169	8,529
2014년	계	2,728,509	1,717,911	1,839,372	-	-	1,314,073	313,449	66,928	144,922	2,130,046	330,872	16,566	740,801	25,317
	여	1,312,526	819,331	878,843	-	-	651,989	139,212	35,185	52,457	846,971	159,894	11,201	296,987	8,601

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014년 초등학교 수는 5,934개교로, 1980년 6,487개교보다는 553개교가 줄었으나,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중학교 수는 3,186개교로 1980년 2,100개교보다 1,086개교가 늘어났다. 고등학교 수 역시 2014년 총 2,326개교로 1980년 1,353개교보다 973개교가 늘어났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2011년 이후 일반고 학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목고는 증가하고 있다. 한편 특성화고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1980년에 96개교에서 2014년 189개교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전문대학은 2014년 139개교로, 200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수학교는 1980년 57개교에서 2014년 166개교로 약 3배 증가하였다.

〈표 7-1-3〉 학교급별 학교 수

(단위 :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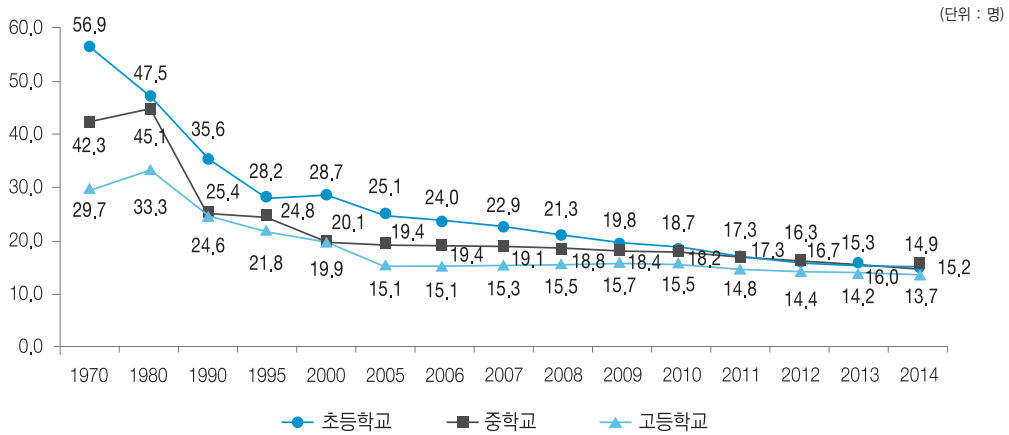
구분	초등 학교	중학교	고 등 학 교							대 학	대학원	교육 대학	전문 대학	특수 학교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80년	6,487	2,100	1,353	748	605	-	-	-	-	96	121	11	128	57
1990년	6,335	2,474	1,683	1,096	587	-	-	-	-	118	298	11	117	104
1995년	5,772	2,683	1,830	1,068	762	-	-	-	-	142	421	11	145	108
2000년	5,267	2,731	1,957	1,193	764	-	-	-	-	172	829	11	158	129
2005년	5,646	2,935	2,095	1,382	713	-	-	-	-	184	1,051	11	158	142
2006년	5,733	2,999	2,144	1,437	707	-	-	-	-	186	1,051	11	152	143
2007년	5,756	3,032	2,159	1,457	702	-	-	-	-	186	1,042	11	148	144
2008년	5,813	3,077	2,190	1,493	697	-	-	-	-	185	1,055	10	147	149
2009년	5,829	3,106	2,225	1,534	691	-	-	-	-	188	1,115	10	146	150
2010년	5,854	3,130	2,253	1,561	692	-	-	-	-	179	1,138	10	145	150
2011년	5,882	3,153	2,282	-	-	1,554	499	120	109	183	1,167	10	147	155
2012년	5,895	3,162	2,303	-	-	1,529	499	128	147	189	1,177	10	142	156
2013년	5,913	3,173	2,322	-	-	1,525	494	138	165	188	1,200	10	140	162
2014년	5,934	3,186	2,326	-	-	1,520	499	143	164	189	1,209	10	139	166

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학교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재적학생 수를 교원 수로 나눈 값이다. 학교급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초등학교는 14.9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3.7명이다. 2000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 13.8명, 중학교 4.9명, 고등학교 6.2명 감소했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가 14.6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았고, 자율고 13.7명, 특성화고 11.6명, 특목고 9.7명 순이었다.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 수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 학교	고 등 학 교						
			전체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학교	특목고	자율고
1970년	56.9	42.3	29.7	32.0	27.5	-	-	-	-
1980년	47.5	45.1	33.3	33.9	32.6	-	-	-	-
1990년	35.6	25.4	24.6	25.4	23.4	-	-	-	-
1995년	28.2	24.8	21.8	22.1	21.4	-	-	-	-
2000년	28.7	20.1	19.9	20.9	18.2	-	-	-	-
2005년	25.1	19.4	15.1	15.9	13.5	-	-	-	-
2006년	24.0	19.4	15.1	15.8	13.5	-	-	-	-
2007년	22.9	19.1	15.3	16.1	13.5	-	-	-	-
2008년	21.3	18.8	15.5	16.4	13.4	-	-	-	-
2009년	19.8	18.4	15.7	16.7	13.3	-	-	-	-
2010년	18.7	18.2	15.5	16.5	13.1	-	-	-	-
2011년	17.3	17.3	14.8	-	-	15.8	11.0	12.5	15.2
2012년	16.3	16.7	14.4	-	-	15.4	10.3	12.1	14.6
2013년	15.3	16.0	14.2	-	-	15.2	10.0	12.0	14.3
2014년	14.9	15.2	13.7	-	-	14.6	11.6	9.7	13.7

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학교,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3 조기유학 현황

해외 교육기관에서의 수학을 목적으로 출국(해외이주 또는 부모의 해외파견으로 인해 동행하여 출국하는 경우 제외)한 초·중·고 학생 수는 2013학년도(2013. 3. 1. ~2014. 2. 28.) 기준으로 총 12,374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1,966명(13.7%) 감소한 수치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5,154명, 중학생이 4,377명, 고등학생이 2,843명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조기유학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조기 유학생은 2006학년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출국 현황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합 계
2005년	8,148	6,670	5,582	20,400
2006년	13,814	9,246	6,451	29,511
2007년	12,341	9,201	6,126	27,668
2008년	12,531	8,888	5,930	27,349
2009년	8,369	5,723	4,026	18,118
2010년	8,794	5,870	4,077	18,741
2011년	7,477	5,468	3,570	16,515
2012년	6,061	4,977	3,302	14,340
2013년	5,154	4,377	2,843	12,374

주 : 1) 연도는 학년도를 의미하며 2013학년도의 경우 2014년도에 조사된 자료임.
2013학년도(2014년도) 자료기준일은 2013. 3. 1. ~2014. 2. 28.임.

2) 초등학교 중학교는 인정/미인정 유학만, 고등학교는 자비 유학 포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4 대안교육 학교

2014년 현재 대안교육 고등학교는 24개교, 중학교는 12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2014년 대안교육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4,115명으로 이는 2013년 4,060명에 비해 55명 증가한 것이다. 교원 수 역시 623명으로 2013년 573명에 비해 50명 증가했다. 대안교육 학교 수뿐만 아니라, 학생 수, 교원 수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단위 : 개교, 명)

연도	계			중 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2007년	29	2,823	392	8	669	86	21	2,154	306
2008년	29	2,984	419	8	766	95	21	2,218	324
2009년	29	3,410	416	8	974	94	21	2,436	322
2010년	32	3,565	465	9	1,007	109	23	2,558	356
2011년	33	3,829	519	10	1,101	131	23	2,728	388
2012년	34	4,034	564	10	1,145	141	24	2,889	423
2013년	34	4,060	573	10	1,131	142	24	2,929	431
2014년	36	4,115	623	12	1,265	183	24	2,850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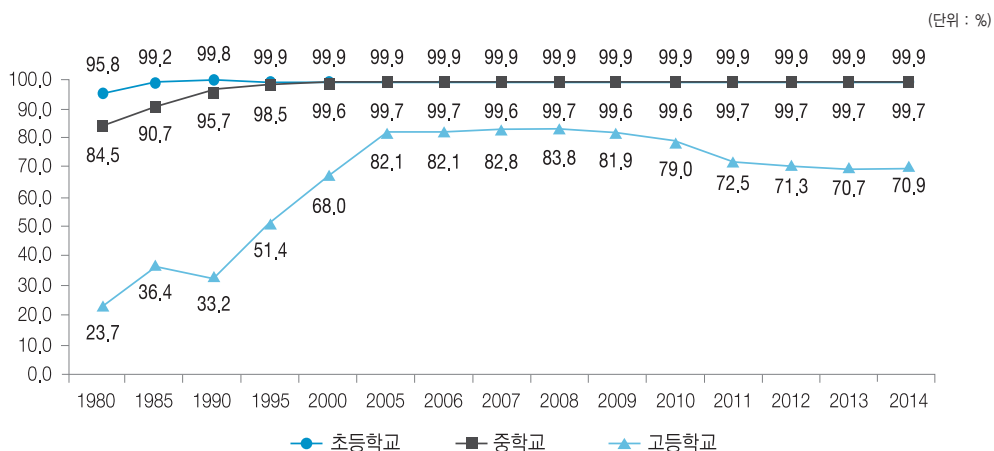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5 진학률

2014년 현재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99.9%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70.9%로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0년의 33.2%와 비교해보면 37.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별 대학 진학률을 보면 일반계고는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며 반대로 전문계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 추세였다. 2011년 이후 일반고와 자율고의 진학률은 증가 추세인 반면, 특성화고와 특목고의 진학률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2011년 61.0%에서 2014년 37.6%로 23.4%p 감소했는데, 이는 특성화고의 마이스터고가 취업중심 학교로 개편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7-1-3] 학교급별 진학률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7-1-7〉 학교급별 진학률³⁾

(단위 : %)

연도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대학 ⁴⁾						
	계	계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80년	95.8	84.5	23.7	39.2	5.0	-	-	-	-
1985년	99.2	90.7	36.4	53.8	9.9	-	-	-	-
1990년	99.8	95.7	33.2	47.2	6.3	-	-	-	-
1995년	99.9	98.5	51.4	72.8	17.2	-	-	-	-
2000년	99.9	99.6	68.0	84.6	35.7	-	-	-	-
2005년	99.9	99.7	82.1	88.3	62.0	-	-	-	-
2006년	99.9	99.7	82.1	87.5	68.6	-	-	-	-
2007년	99.9	99.6	82.8	87.1	71.5	-	-	-	-
2008년	99.9	99.7	83.8	87.9	72.9	-	-	-	-
2009년	99.9	99.6	81.9	84.9	73.5	-	-	-	-
2010년	99.9	99.6	79.0	81.5	71.1	-	-	-	-
2011년	99.9	99.7	72.5	-	-	75.8	61.0	67.4	69.3
2012년	99.9	99.7	71.3	-	-	76.6	50.0	64.2	72.6
2013년	99.9	99.7	70.7	-	-	77.7	41.7	60.0	74.7
2014년	99.9	99.7	70.9	-	-	78.7	37.6	59.6	75.7

- 주 : 1)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2) 대학 진학자 기준 : 2010년까지 대학 합격자 기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등록자 기준으로 변경됨.
 3)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 수 / 졸업생 수) × 100.
 4)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등 포함.
 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였음.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6 학업중단율

2013학년도 학업중단율을 보면 고등학교가 1.6%로 초등학교 0.6%, 중학교 0.8%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단계로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보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퇴, 퇴학한 자들을 학업중단자로 보고 있다.

학업중단율은 2000학년도 이후 초등학교는 소폭 상승하여 최근 3년 동안 0.6%를 유지하고 있고, 중학교는 0.8~0.9% 내외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증감을 반복하다 2007학년도 이후 1.8%로 유지, 2010학년도에는 2.0%까지 높아졌다가 2013학년도에 다시 1.6%로 떨어졌다.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 및 일탈행동이 학업중단의 주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유학생 수가 증가한 것이 주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적응 학생이 학업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여전히 높다.

〈표 7-1-8〉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단위 : %)

연 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1980년	0.1	1.2	2.5
1985년	0.0	1.1	3.0
1990년	0.0	1.0	1.9
1995년	0.0	1.0	2.5
2000년	0.4	1.0	2.5
2005년	0.5	0.8	1.3
2006년	0.6	0.9	1.6
2007년	0.5	1.0	1.8
2008년	0.5	1.0	1.8
2009년	0.3	0.8	1.8
2010년	0.6	1.0	2.0
2011년	0.6	0.9	1.9
2012년	0.6	0.9	1.8
2013년	0.6	0.8	1.6

주 : 1) 연도는 학년도임.

2)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 수 / 전년도 재적학생 수 × 100.

3) 학업중단자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자퇴, 퇴학한 자들을 말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유예 및 면제자로 정의함.

4)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가.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2014년도 교육부 예산은 약 50조 8,354억원으로 1980년의 약 1조 992억원, 1990년의 약 5조 624억원에 이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전체 정부 예산 중 교육부 예산 비중은 16.4%로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표 7-1-9〉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 부처 예산

(단위 : 천원, %)

연 도	정부 예산(A)	교육부 예산(B)	비 율 (B/A)
1970년	446,273,301	78,478,212	17.6
1980년	5,804,061,441	1,099,159,170	18.9
1990년	22,689,432,968	5,062,431,258	22.3
2000년	93,937,057,000	19,172,027,920	20.4
2001년	102,528,518,000	20,034,364,710	19.5
2002년	113,898,884,000	22,278,357,817	19.6
2003년	120,477,623,000	24,404,401,310	20.3
2004년	126,991,802,000	26,399,680,082	20.8
2005년	134,370,378,000	27,982,002,000	20.8
2006년	144,807,610,439	29,127,258,513	20.1
2007년	156,517,719,000	31,044,747,984	19.8
2008년	183,515,764,000	35,897,425,012	19.6
2009년	214,563,409,000	38,696,405,000	18.0
2010년	211,992,599,000	41,627,519,000	19.6
2011년	264,092,862,000	45,116,643,669	17.1
2012년	282,687,337,000	49,644,828,392	17.6
2013년	303,847,514,000	50,424,128,000	16.6
2014년	309,692,464,000	50,835,377,000	16.4

주 : 1) 정부 예산(~2004) = 일반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2) 정부 예산(2005~)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교육부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4) 2009~2012년 (구)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나. GDP 대비 교육재정

2014년도 교육예산은 약 50조 4,277억 원으로, 이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41조 1,370억원(81.6%)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 고등 교육예산은 전년 대비 1조 873억원(14.4%) 증가한 8조 6,520억원으로 교육예산의 17.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 3.0%, 2008년 3.3%, 2009년 3.2%, 2010년 3.0%, 2011년 3.1%, 2012년 3.3%, 2013년 3.4%, 2014년 3.4%로 나타나 2010년 이후 GDP 대비 교육예산 비율의 증가추세가 점점 완만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7-1-10〉 GDP 대비 교육재정

(단위 : 조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 비	유아 및 초·중등	26.7	31.0	31.1	32.5	35.5	38.6	41.2	41.1
	고등교육	4.0	4.4	5.0	4.8	4.7	6.0	7.6	8.7
	평생·직업교육	0.3	0.4	0.5	0.5	0.6	0.6	0.7	0.5
	교육일반	0.1	0.1	0.1	0.1	0.1	0.1	0.1	0.1
	소 계	31.2	36.0	36.7	38.0	40.9	45.2	49.6	50.4
GDP 규모	1,043.3	1,104.5	1,151.7	1,265.3	1,332.7	1,377.5	1,429.4	1,485.1	
GDP 대비비율	3.0%	3.3%	3.2%	3.0%	3.1%	3.3%	3.5%	3.4%	

주 : 위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소계와 각 값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교육부(2015. 1.),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교육부), 한국은행(2015), 국민계정리뷰 2014년 제1호.

다.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4(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6.1%보다 1.5%p 높은 7.6% 수준이다. 그러나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구성 비율은 4.9%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5.3%보다 0.4%p 낮은 수준이며, 민간재원 비중은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0.9%보다 1.9%p 높은 2.8% 수준이다.

〈표 7-1-11〉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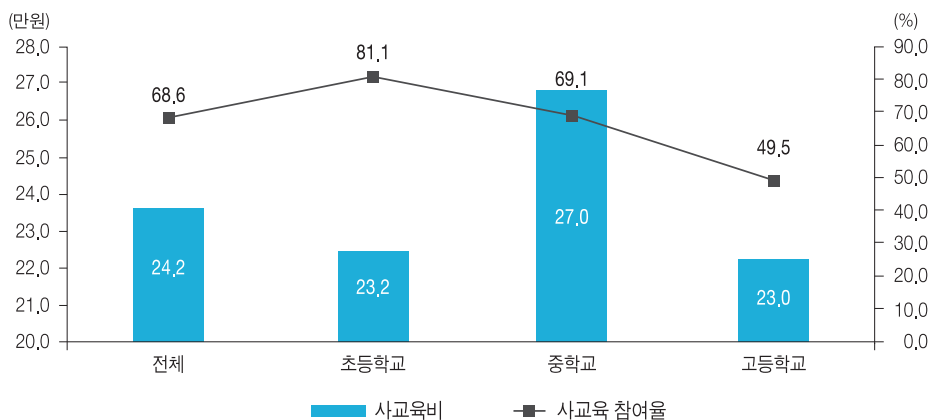
구 분	OECD 평균	한 국	미 국	프 랑 스	독 일	영 국	일 본
GDP 대비 공교육비	6.1	7.6	6.9	6.1	5.1	6.4	5.1
정부재원	5.3	4.9	4.7	5.6	4.4	5.6	3.6
민간재원	0.9	2.8	2.2	0.5	0.7	0.8	1.6

자료 : OECD(2014), 2014년 OECD 교육지표 중 표B2.3.4. 재원 및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1).

라.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

2014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2만원으로 전년 대비 0.3만원(1.2%)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하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중학교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전년 대비 0.3만원(1.1%) 증가한 27.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전년 대비 0.7만원(3.0%)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0.7%p 감소했다. 중학교 역시 전년 대비 0.4%p 감소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0.3%p 증가해 49.5%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4]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2014)



자료 : 통계청(2014), 사교육비 조사.

〈표 7-1-12〉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¹⁾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p)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감률
전 체	24.0	23.6	23.9	24.2	1.2	71.7	69.4	68.8	68.6	-0.2
초등학교	24.1	21.9	23.2	23.2	0.0	84.6	80.9	81.8	81.1	-0.7
중학교	26.2	27.6	26.7	27.0	1.1	71.0	70.6	69.5	69.1	-0.4
고등학교	21.8	22.4	22.3	23.0	3.0	51.6	50.7	49.2	49.5	0.3
일반고	25.9	26.5	26.2	26.9	2.6	58.7	57.6	55.9	56.2	0.3

주 : 1)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임.

자료 : 통계청(2014), 사교육비 조사.



제 2 장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¹⁾

우리나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이 이수한 교육과정 도달 정도를 점검하여 학교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산출하고, 개인별 성취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수-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인호 외,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직업능력평가가 도입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 일반계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상 교과목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통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가 실시되었으며, 과학과 사회의 경우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대신 표본조사로 실시되었다.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2014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76.4%로 2011년 72.2%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과목별로는 국어과의 경우 2011년 81.4%에서 2014년 87.3%, 수학과는 64.5%에서 66.8%, 영어과의 경우 70.7%에서 75.2%로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에 비해 수학과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 상승 폭이 작았다.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2011년 2.3%에서 2014년 3.7%로 증가하였으며, 교과별로도 국어과가 2011년 1.4%에서

1) 청소년백서에서는 그동안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의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등 국제비교 결과를 제공하였으나, 가장 최근에 실시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들이 2015년 연말 및 2016년에 발표될 예정이므로 금번 백서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제공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별로 작성된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이인호 외, 2015)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2014년 2.0%, 수학과가 4.0%에서 5.7%, 영어과가 1.3%에서 3.3%로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2011년 이래로 보통학력 이상 비율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과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여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80.7%로 남학생 72.5%보다 높았다. 과목별로는 국어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남학생이 82.2%, 여학생이 92.7%였으며, 수학의 경우 남학생이 65.5%, 여학생이 68.1%로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69.6%, 여학생이 81.3%였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모든 과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남학생 중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5.1%, 여학생은 2.2%였다. 과목별로는 국어과가 남학생 3.2%, 여학생 0.8%, 수학과가 남학생 7.2%, 여학생 4.2%, 영어과가 남학생 4.9%, 여학생 1.6%로 나타났다.

〈표 7-2-1〉 중학교 3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국어	보통 이상	81.35	75.52	87.81	83.79	78.72	89.25	86.21	81.47	91.38	87.25	82.23	92.71
	기초 학력	17.23	22.30	11.61	15.18	19.70	10.33	12.57	16.64	8.14	10.72	14.60	6.51
	기초 미달	1.41	2.17	0.58	1.02	1.58	0.42	1.22	1.89	0.48	2.02	3.17	0.78
수학	보통 이상	64.53	63.72	65.45	66.70	66.22	67.31	66.39	65.61	67.24	66.75	65.50	68.11
	기초 학력	31.46	31.63	31.27	29.84	29.59	30.07	28.52	28.12	28.95	27.51	27.33	27.70
	기초 미달	4.00	4.66	3.28	3.45	4.19	2.62	5.09	6.27	3.80	5.74	7.17	4.18
영어	보통 이상	70.65	64.80	77.11	73.85	68.94	79.23	75.00	69.82	80.65	75.21	69.61	81.30
	기초 학력	28.03	33.34	22.15	23.97	27.95	19.62	21.70	25.40	17.67	21.45	25.48	17.07
	기초 미달	1.33	1.86	0.74	2.18	3.11	1.15	3.30	4.79	1.67	3.34	4.91	1.63
평균	보통 이상	72.18	68.01	76.79	74.78	71.29	78.60	75.87	72.30	79.76	76.40	72.45	80.71
	기초 학력	25.57	29.09	21.68	23.00	25.75	20.01	20.93	23.39	18.25	19.89	22.47	17.09
	기초 미달	2.25	2.90	1.53	2.22	2.96	1.40	3.20	4.32	1.98	3.70	5.08	2.20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 이상'은 '우수학력' + '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인인호 외(2015).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해당 교과별 보고서 재구성.

고등학교의 경우, 2014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85.2%로 2011년 83.2%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과목별로는 국어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011년 85.2%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2014년 다시 증가하여 86.5%를 나타냈다. 수학과와의 경우에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011년 80.9%였으나 2014년에는 84.5%로 증가하였으며, 영어과의 경우 2011년 83.4%에서 2014년 84.7%로 소폭

증가하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평균적으로 2011년 3.3%에서 2014년 4.2%로 증가하였다. 국어과의 경우 2011년 2.0%에서 2014년 1.3%로 감소하였지만, 수학과와 영어과는 2011년 각각 4.4%와 3.6%에서 2014년 각각 5.4%와 5.9%로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2014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남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평균 81.6%, 여학생은 89.1%였다. 과목별로는 국어과 남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81.3%, 여학생은 92.1%였으며, 수학과와 영어과의 경우에는 남학생 83.6%, 여학생 85.5%, 영어과의 경우에는 남학생 79.9%, 여학생 89.8%로 나타났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남학생의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5.4%였으며, 여학생은 2.9%였다. 과목별로는 국어과는 남학생의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1%, 여학생이 0.5%였으며, 수학과는 남학생이 5.7%, 여학생이 5.0%, 영어과는 남학생이 8.5%, 여학생이 3.2%로 나타났다.

〈표 7-2-2〉 고등학교 2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국어	보통 이상	85.18	80.23	90.88	82.74	77.63	88.32	83.75	78.18	89.81	86.50	81.28	92.09
	기초 학력	12.85	16.77	8.36	15.08	19.08	10.74	13.49	17.71	8.90	12.18	16.65	7.40
	기초 미달	1.97	3.01	0.76	2.17	3.29	0.94	2.76	4.11	1.29	1.31	2.07	0.51
수학	보통 이상	80.93	80.34	81.71	79.76	79.34	80.35	85.30	85.13	85.47	84.48	83.57	85.46
	기초 학력	14.71	14.90	14.43	15.51	15.70	15.22	10.21	9.99	10.44	10.15	10.70	9.56
	기초 미달	4.35	4.75	3.86	4.73	4.95	4.43	4.50	4.88	4.09	5.37	5.74	4.99
영어	보통 이상	83.40	79.21	88.27	83.46	79.34	88.09	85.19	81.98	88.68	84.67	79.90	89.76
	기초 학력	13.01	15.87	9.71	13.82	16.94	10.32	12.11	14.39	9.62	9.39	11.62	7.02
	기초 미달	3.59	4.91	2.03	2.72	3.72	1.59	2.71	3.63	1.70	5.93	8.48	3.22
평균	보통 이상	83.17	79.93	86.95	81.99	78.77	85.59	84.75	81.76	87.98	85.22	81.58	89.10
	기초 학력	13.52	15.85	10.83	14.80	17.24	12.09	11.94	14.03	9.65	10.57	12.99	7.99
	기초 미달	3.30	4.22	2.22	3.21	3.99	2.32	3.32	4.21	2.36	4.20	5.43	2.91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 이상'은 '우수학력' + '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이인호 외(2015),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해당 교과별 보고서 재구성.

지역 규모별로는, 중학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 지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은 2013년을 제외하고 읍면지역 > 중소도시 >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을 기준으로 대도시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평균 78.5%였으며, 중소 도시는 76.1%, 읍면지역은 70.1%였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보통학력 비율 격차는 2013년을 제외

하고 2011년에서 2014년 동안 약 8.0%p 내외를 유지하였다. 과목별로는 국어과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87.8%, 중소도시 87.2%, 읍면지역 85.6%이었다. 수학과과의 경우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대도시 70.1%, 중소도시 66.4%, 읍면지역 58.0%였으며, 영어과의 경우에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대도시 77.7%, 중소도시 74.8%, 읍면지역 69.0%였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3.5%, 중소도시 3.8%, 읍면지역 3.9%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국어과는 대도시 2.1%, 중소도시 2.0%, 읍면지역 1.9%였으며, 수학과는 대도시 5.2%, 중소도시 6.0%, 읍면지역 6.5%, 영어과는 대도시 3.2%, 중소도시 3.5%, 읍면지역 3.4%로 나타났다.

〈표 7-2-3〉 중학교 3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어	보통 이상	82.13	81.41	78.81	84.95	83.34	81.58	87.27	85.73	84.50	87.84	87.24	85.55
	기초 학력	16.50	17.16	19.71	14.08	15.58	17.40	11.56	12.95	14.45	10.03	10.80	12.56
	기초 미달	1.37	1.44	1.48	0.97	1.08	1.02	1.17	1.32	1.06	2.13	1.96	1.89
수학	보통 이상	66.92	64.63	56.81	69.84	65.98	59.14	69.45	65.76	59.24	70.09	66.35	58.03
	기초 학력	29.31	31.34	38.56	27.09	30.33	36.97	25.93	28.76	35.45	24.66	27.68	35.48
	기초 미달	3.77	4.03	4.63	3.08	3.69	3.89	4.62	5.48	5.32	5.24	5.98	6.49
영어	보통 이상	73.21	70.26	63.83	76.68	73.07	67.38	77.40	74.17	70.31	77.67	74.83	69.05
	기초 학력	25.55	28.39	34.69	21.34	24.61	30.20	19.53	22.28	26.43	19.14	21.70	27.53
	기초 미달	1.24	1.36	1.49	1.98	2.31	2.42	3.07	3.55	3.26	3.19	3.46	3.41
평균	보통 이상	74.09	72.10	66.48	77.16	74.13	69.37	78.04	75.22	71.35	78.53	76.14	70.88
	기초 학력	23.79	25.63	30.99	20.84	23.51	28.19	19.01	21.33	25.44	17.94	20.06	25.19
	기초 미달	2.13	2.28	2.53	2.01	2.36	2.44	2.95	3.45	3.21	3.52	3.80	3.93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 이상'은 '우수학력' + '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이인호 외(2015).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해당 교과별 보고서 재구성.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지역 규모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평균적으로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 지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은 2013년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읍면지역 > 중소도시 >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86.3%, 중소도시 84.5%, 읍면지역 83.7%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중학교와는 다르게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차이를 기준으로 2011년 이후 2014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과목별로는 국어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87.1%, 중소도시 86.2%, 읍면지역 85.3%

이였으며, 수학과는 대도시 85.7%, 중소도시 83.5%, 읍면지역 83.4%, 영어과는 대도시 86.1%, 중소도시 83.8%, 읍면지역 82.4%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도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격차는 모든 과목에서 2011년에 비하여 2014년에 감소하였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 평균적으로 대도시 4.0%, 중소도시 4.4%, 읍면지역 4.4%로 지역 간 차이가 적었다. 과목별로는 국어과의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대도시 1.5%, 중소도시 1.2%, 읍면지역 1.1%로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수학과와 영어과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대도시 4.9%, 중소도시 5.7%, 읍면지역 5.9%였으며, 영어과의 경우에는 대도시 5.6%, 중소도시 6.2%, 읍면지역 6.1%로 나타났다.

〈표 7-2-4〉 고등학교 2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국어	보통 이상	85.95	85.45	80.30	84.10	82.42	78.89	84.47	83.54	81.54	87.12	86.16	85.33
	기초 학력	12.05	12.64	17.63	13.79	15.30	19.09	12.69	13.73	15.94	11.41	12.64	13.54
	기초 미달	1.99	1.92	2.07	2.11	2.29	2.02	2.84	2.73	2.53	1.47	1.20	1.13
수학	보통 이상	82.15	80.91	75.13	81.60	79.18	74.99	86.52	84.36	83.92	85.74	83.46	83.35
	기초 학력	13.68	14.77	19.45	14.02	16.0	19.31	9.32	10.81	11.51	9.33	10.82	10.80
	기초 미달	4.17	4.32	5.42	4.38	4.82	5.71	4.16	4.83	4.57	4.93	5.71	5.85
영어	보통 이상	84.95	83.19	76.92	85.53	82.71	78.43	86.59	84.42	82.30	86.07	83.79	82.43
	기초 학력	11.81	13.11	18.36	12.02	14.46	18.18	10.88	12.75	14.68	8.30	10.01	11.48
	기초 미달	3.25	3.70	4.72	2.45	2.82	3.39	2.52	2.82	3.02	5.63	6.20	6.09
평균	보통 이상	84.35	83.19	77.45	83.74	81.44	77.44	85.86	84.11	82.58	86.31	84.47	83.70
	기초 학력	12.51	13.51	18.48	13.28	15.25	18.86	10.96	12.43	14.04	9.68	11.16	11.94
	기초 미달	3.14	3.31	4.07	2.98	3.31	3.71	3.17	3.46	3.37	4.01	4.37	4.36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 이상'은 '우수학력' + '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이인호 외(2015).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해당 교과별 보고서 재구성.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증가하여 학력 격차가 다소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별 격차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높았으며, 기초 학력 미만 학생 비율도 낮았다. 그러나 그 격차는 연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지역 격차의 경우 대체로 지역 규모가 클수록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높고,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격차가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²⁾

통계청의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51.0%를 나타낸 이후 2010년 46.5%, 2012년 46.7%로 하락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49.7%로 상승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50.8%에서 2010년 46.3%, 2012년 42.8%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에는 다시 47.7%로 상승하였다.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42.7%에서 2010년 38.6%, 2012년 36.0%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44.0%로 상승하였다. 교우관계 만족도는 2008년에는 70.0%에서 2010년에 68.4%, 2012년 66.5%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69.5%로 상승하였다. 교사(교수)와의 관계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에 46.9%에서 2010년 43.9%, 2012년 44.5%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50.8%로 상승하였다. 학교 시설 및 설비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에 34.8%에서 2010년 34.1%, 2012년 33.5%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38.7%로 상승하였다. 학교 주변 환경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30.7%, 2010년 30.0%, 2012년 31.7%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4년에는 37.5%로 상승하였다. 한편, 2014년부터 신규 조사된 소질과 적성개발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매우 만족’ +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35.8%였으며, 전공 만족도(중학생 및 인문계 고등학생 제외)는 40.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08년 이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2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14년에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와의 관계만족도, 학교시설 및 설비 만족도, 학교 주변 만족도는 2008년에 비하여 3~7%p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항목 중에서는 교우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학교 주변 환경 만족도, 학교시설 및 설비 만족도, 교육 방법 만족도, 소질과 적성개발 만족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2000년부터 10개 사회지표에 대하여 매년 5개 지표씩 격년으로 조사되고 있다. 교육 부문 조사는 짝수년에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관련 조사는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13년 및 2014년 청소년백서에서는 연도별 비교를 위해 2012년 사회조사 자료 중 15세 이상 결과만을 제시하였으나, 사회조사에서 2014년 자료부터는 13세 이상 자료만을 공개하고 있어 올해 청소년백서에서는 2012년 이후 사회조사 자료는 13세 이상 학생 조사 결과값을 제시하였다.

〈표 7-2-5〉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만족 (매우만족 + 약간만족)	보통	불만 (약간불만 + 매우불만)	만족 (매우만족 + 약간만족)	보통	불만 (약간불만 + 매우불만)	만족 (매우만족 + 약간만족)	보통	불만 (약간불만 + 매우불만)	만족 (매우만족 + 약간만족)	보통	불만 (약간불만 + 매우불만)
전반적인 학교생활	51.0	43.1	5.9	46.5	46.6	6.8	46.7	45.8	7.5	49.7	43.8	6.4
교육내용	50.8	39.2	10.0	46.3	43.5	10.2	42.8	43.7	13.5	47.7	42.5	9.8
교육방법	42.7	41.5	15.8	38.6	44.5	16.8	36.0	44.9	19.1	44.0	41.6	14.4
교우관계	70.0	27.3	2.7	68.4	27.9	3.7	66.5	28.9	4.6	69.5	26.8	4.6
교사와의 관계	46.9	45.0	8.2	43.9	46.8	9.3	44.5	46.9	8.6	50.8	42.1	7.1
학교시설 및 설비	34.8	40.9	24.3	34.1	42.8	23.1	33.5	42.6	23.9	38.7	43.3	18.0
학교 주변 환경	30.7	43.2	26.1	30.0	45.1	24.9	31.7	44.1	24.2	37.5	44.7	17.7
소질과 적성개발	-	-	-	-	-	-	-	-	-	35.8	45.6	18.7
전공	-	-	-	-	-	-	-	-	-	40.2	45.2	14.5

주 : 1) 통계청 "사회조사"의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을,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을 조사함.

2) 소질과 적성개발 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는 2014년 신규 조사 항목임.

3) 전공 만족도는 조사대상에 중학생 및 인문계 고등학생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제 3 장

교육복지정책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예컨대 학습 결손 학생에게는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 결손을 치유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문화적 욕구 결핍을 느끼는 학생에게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성취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삶의 질적 수준까지 제고하는 것이다. 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핵심 원리는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의 개별 여건을 진단하여 그에 맞게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인해 사업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시도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된 것이 큰 특징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1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우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경과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2003년에 서울, 부산 2곳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일종의 시범사업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시범 사업 2년 후인 2005년부터는 공모제를 도입하고, 사업대상 지역을 광역시로 확대하는 등 총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는 인구 25만 명 이상의 중소 도시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여 16개 시도에 걸친 총 30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 말에는 모든 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10년까지 전국의 534개 초·중·고에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0년 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초·중등교육법」 제54조를 개정하였고, 2011년에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개칭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재원의 성격은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대상은 기존의 지역 단위에서 개별 학교로 변경되었다. 2011년 교육복지우선사업으로 전환된 후

1,356교(초 670·중 681·고 5)가 지원받고 있으며, 2012년 이후로는 매년 1,800여 개교 이상이 지원을 받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5년 현황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약 1,232억으로 총 1,823교(초 890·중 861·고 70·특수 2)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사업추진 이후 최근 10년간 사업 대상지역 수, 지원 자격, 대상 학교 수, 대상 학교의 전체 학생 수, 지원액 등 세부 현황은 다음 <표 7-3-1>과 같다.

<표 7-3-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구분	대상지역	지원자격	학교 수 (초·중·고)	학생 수 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지원액 (교부금) (대응투자/기타) ⁴⁾
2003 ~ 2004년	8지역 (서울 6, 부산 2)	-	45교 (초 29, 중 16)	40,707명 (4,758명)	238억원 (238억원) -
2005년	15지역 (기존 8, 신규 7)	광역시 이상	82교 (초 50, 중 32)	75,189명 (9,765명)	160억원 (110억원) (50억원)
2006년	30지역 (기존 15, 신규 15)	인구 25만 이상	163교 (초 99, 중 61, 고 3)	153,178명 (16,719명)	359억원 (209억원) (150억원)
2007년	60지역 (기존 30, 신규 30)	인구 25만 이상	322교 (초 187, 중 132, 고 3)	326,826명 ²⁾ (35,110명)	642억원 (374억원) (268억원)
2008년	60지역 (기존 60)	인구 25만 이상	322교 (초 187, 중 132, 고 3)	304,464명 (27,904명)	514억원 (248억원) (266억원)
2009년	100지역 (기존 60, 신규 40)	모든 市	538교 (초 304, 중 230, 고 4)	490,081명 (40,275)	866억원 ³⁾ (504억원) (282억원)
2010년	100지역 (기존 60, 신규 40)	모든 市	534교 (초 296, 중 234, 고 4)	452,467명 (35,725명)	810억원 ³⁾ (310억원) (417억원)
2011년	114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356교 (초 670, 중 681, 고 5)	1,086,434명 (71,853명)	1,587억원 (1,526억원) (61억원)
2012년	143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01교 (초 906, 중 831, 고 64)	1,302,250명 (72,881명)	1,684억원 (1,626억원) (58억원)
2013년	148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33교 (초 894, 중 876, 고 63)	1,247,836명 (65,291명)	1,508억원 (1,440억원) (68억원)

구분	대상지역	지원자격	학교 수 (초·중·고)	학생 수 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지원액 (교부금) (대응투자/기타) ⁴⁾
2014년	144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28교 (초 903, 중 880, 고 65)	1,256,387명 ³⁾ (60,056명)	1,439억원 (1,338억원) (101억원)
2015년	142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1,823교 (초 890, 중 861, 고 70 특수 2)	1,186,303명 (54,357명)	1,286억원 (1,232억원) (54억원)

주 : 1) 사업학교의 전체 초·중·고 학생 수.

2) 2007년에는 학생 수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생 수 포함.

3) 2012~2013년에는 학생 수, 지원액 자료 중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고등학교 데이터 미포함. 2014년에는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 고등학교 데이터 포함됨.

4) 2010년 이전 : 시도교육청 대응투자액 / 2011년 이후 : 지자체, 민간단체 등 외부지원금(2011년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되어 대응 투자액 없음).

5) 2009년, 2010년에는 교부금과 대응투자 이외 시·도 자체지원액이 포함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0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평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3, 2014). 2011, 2012, 2013년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현황.

한국교육개발원(2015. 2월 발간 예정). 2014년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현황.

교육부(2015). 교육통계조사, 자체 조사자료.

나. 추진 체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추진 체계는 크게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차원에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후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육지원청 프로젝트 조정자, 단위학교의 교육복지사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지역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시도 간 큰 편차 없이 고르게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있으며, 별도로 중앙차원의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운영 지침을 참고로 자체적으로 사업학교 선정기준, 학교별 예산 배부 기준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배포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관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청 내 담당자 연수, 우수사례 발굴,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등을 실시하여 시도의 자체적인 교육 복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단위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관내 사업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학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청 내 담당부서에 프로젝트 조정자와 같은 민간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선 현장인 단위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이외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한다.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교내 담임 교사, 부장교사 등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 학생을 발굴하게 된다. 사업 대상 학생에게는 학생 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학습, 문화체험, 심리치료 등)이 제공된다. 또한, 교육복지사와 담임 교사의 판단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외적으로 현물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이외에도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연구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단위의 사업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관련 인력 연수, 자체 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협의회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되며,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육복지협의회, 학교 단위의 교육복지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한다.

다. 사업 내용 및 효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 취약 계층 학생(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중 사업 학교의 장이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학생에게 필요에 맞는 학습, 문화, 의료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추진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학교 선정기준,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등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학교에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크게 3가지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데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프로그램,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현물 서비스로 분류된다. 우선 학교는 지원 대상 학생에게 특기적성,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일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별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예시로 학습결손 학생을 위한 1:1 보충학습 프로그램,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다. 다만 특정 학생에게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학생이 노출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일반학생도 함께 참여하여 그룹 활동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학생에게는 프로그램 참여 비용의 전부가 지원되나, 일반학생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다.

사업 시행 초기에 일부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 안내의 편의성을 위하여 학습영역, 문화영역, 정서 심리 발달영역, 복지 프로그램 영역 등으로 구분 지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복지 프로그램 영역을 임의로 구분 짓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수요 파악에 충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교육부에서는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사업 방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일반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이외에도 사업학교의 장은 의식주, 보건, 위생, 건강 등 학생의 기본적인 욕구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물 서비스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단, 현금 지원은 불가). 예컨대 담임교사와 교육복지사가 사업대상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쌀을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복지사가 학생을 데리고 치과에 동행해서 치과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5년에 발간한 연구자료(교육복지 콘서트)에 따르면 많은 시도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의 학습 태도, 기초 학력, 자아존중감 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조사(2014) 결과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의 무단결석 비율이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14년 연구에서 사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역량(수업참여, 독서, 진로설계)이 비사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부수적으로 사업학교 내부의 교육 복지 체계가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 실시 이후 사업학교(초등학교·중학교)의 교육복지 전담부서 설치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교내 교육복지위원회의 설치율은 두 학교급 모두 98% 이상으로 학교 자체의 교육 복지 체계가 매우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습,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방면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수업료, 급식비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 소극적인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향후 발전방향

교육 취약 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꾸준히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선정 대상으로 고등학교급의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7-3-1>의 사업 대상 학교(초·중·고)의 학교 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집중적으로 수행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 다수 발생 고등학교(해외출국, 질병 등 제외)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 20명 이상 발생하는 고등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교육복지사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도담당자를 독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업 대상 고등학교를 확대하고, 고등학생의 정서 특성을 고려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방과후학교 사업, Wee 프로젝트 등 다양한 성격의 교육복지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학교 사업은 수준별 수업 및 특기계발이 주 내용이며 Wee프로젝트는 위기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치료를 주 내용으로 한다. 각기 다른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추진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학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044-203-6414



2 방과후학교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2013년에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을 강화하는 정책이 수립되어 78개의 「초등돌봄교실 모델시범학교」를 통해 시범 운영되었으며, 시범 운영된 정책은 2014년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동시에 전국에서 17개의 「초등돌봄교실 연구학교」가 운영되었으며, 연구학교에서는 1~4학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구안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운영 결과를 전국의 초등학교에 보급하였다. 연구학교에서는 2015년에는 1~6학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연구학교에서 운영된 방안을 참고하여 2015년에는 1~4학년, 2016년에는 1~6학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구안하여 적용하게 된다.

2014년에는 2013년에 수립된 '초등학교에서의 돌봄기능 강화 정책'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 및 운영 정책'이 교육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가. 초등학교에서의 돌봄기능 강화 정책 적용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더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돌봄기능을 강화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2013년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강화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①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오후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②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학생 중 추가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밤 10시까지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③ 학교는 여건을 고려하여 급·간식비를 수요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강화되는 돌봄정책은 2014년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2015년에는 1~4학년까지, 2016년에는 1~6학년까지 확대·적용된다.

2014년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강화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었다. 그리고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청별로 한 개교씩을 선정하여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 연구학교」를 운영하였다. 연구학교에서는 2014년에는 1~4학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구안하여 적용하였으며, 이 결과는 전국의 초등학교에 보급되어 2015년에 초등학교들이 1~4학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구안·적용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였다.

2014년 하반기에 적용된 초등돌봄교실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 10. 14.)가 개최되었으며,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2014. 10.)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교육부에서는 2014년 말에 초등돌봄교실 참여 대상학생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아니라,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설정하였다.

나.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 및 운영 정책 적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 및 운영」 정책이 2013년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4개 정부부처의 협력으로 수립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본 정책이 추진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부처별로 분절적·단편적인 돌봄사업 추진으로 돌봄아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 미흡 및 돌봄 사각지대 발생, ② 부처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체제 구축 필요

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에는 ① 방과후 돌봄 범정부 통합지원 시범 운영, 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및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③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부처

공동 권역별 워크숍 실시, ④ 시·도/시·군·구 단위의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⑤ 범정부 공동 돌봄수요조사 실시와 같은 사업들이 수립, 실행되었다.

2014년에는 2013년에 수립된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 및 운영」 정책이 보다 활성화 되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2014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 매뉴얼 수정 및 보급('14년 4월)

- 2013년 10월에 개발·보급된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보급하였다.

(2) 지역돌봄협의체 컨설팅 실시('14년 7월, 11~12월)

- 컨설팅을 의뢰한 12개 지역돌봄협의체에 대하여 7월과 11~12월에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컨설팅은 온라인 컨설팅 및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부처관계자, 대학교수, 교육청 전문직, 학교교원,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위원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3) 교육청 및 지자체 대상 부처공동 권역별 워크숍 실시('14년 8월)

-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014년 지역돌봄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부처공동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4) 범정부 공동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 실시('14년 11월~'15년 1월)

- 4개 정부부처,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협력하여 2014년 현재 2~5학년 초등학생의 학부모 및 2015년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5) 2014년 지역돌봄협의회 우수 운영사례집 발간('14년 12월)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5개 지역의 우수사례를 담은 「2014년 지역돌봄협의회 우수 운영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다.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정부는 20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취약 계층·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을 확대하였다.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014년에는 623천여 명의 도시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간 60만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대상자 수는 55천여 명이 증가하였다. 학생들은 자유수강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듣는다. 자유수강권을 지급받는 학생 수와 연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 201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40%에 대해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다. 2012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70%에 대해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다.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100%에 대해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다.

〈표 7-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금액(백만원)	115,210	127,116	141,021	176,581	289,188	340,745	371,960
지원학생 수(명)	320,374	353,445	392,070	482,070	602,480	567,907	622,933
연간지원액(만원)	30	30	36	36	48	60	60

자료 : 교육부(2008~2014).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2)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2014년에는 46,401개의 학급에 대해 총 73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1학급당 평균 159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대부분 무료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도시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

〈표 7-3-3〉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금액(억원)	528	382	421	515	657	737	739
지원학급 수(실)	14,645	14,605	16,210	17,162	46,948	46,323	46,401

자료 : 교육부(2008~2014).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3) 초등돌봄교실 지원

가정 여건상 학부모가 돌보아 주기 어려운 초등학교 학생들을 방과 후와 주말, 방학 중에 안전하게 보호·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도록 돕기 위해 방과후학교에서는 돌봄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오후돌봄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추가돌봄을 원하는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은 저녁돌봄에 참여하였다.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리모델링을 한 전용 돌봄교실이나 겸용 돌봄교실에서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돌봄교실에서는 숙제하기, 독서, 놀이, 운동, 특기적성, 체험학습, 급·간식, 기타 인성지도 등을 위한 다양한 개인활동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1학년 76.0%, 2학년 79.9%)은 수익자 부담인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간식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4년 4월 현재 5,938개교(전체 초등학교의 99.9%)이며, 돌봄교실 수는 10,966개이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총 221,000명이다.

〈표 7-3-4〉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운영학교 수	2,716	3,413	5,117	5,430	5,652	5,784	5,938
운영교실 수	3,030	3,819	6,200	6,639	7,086	7,395	10,966
참여학생 수	51,110	66,691	104,496	124,013	159,248	159,737	221,000

자료 : 교육부(2008~2014),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라. 방과후학교의 주요 성과

(1) 학생참여율

2014년 4월 현재 전국 99.9%의 학교(11,686개교)에서 71.2%의 학생(4,468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7-3-5〉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교참여율	99.9	99.9	99.9	99.9	99.9	99.9	99.9
학생참여율	54.3	57.6	63.3	65.2	71.9	72.2	71.2

자료 : 교육부(2008~2014),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2) 강좌 현황

2014년 4월 현재, 교과 강좌 294,359개(54.7%), 특기·적성 강좌 243,718개(45.3%), 총 538,077개의 방과후학교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교과 강좌의 비율은 2.1%가 감소하였고, 특기·적성 강좌는 2.1%가 증가하였다.

〈표 7-3-6〉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과프로그램	117,534	161,348	338,891	355,158	367,025	323,388	294,359
특기·적성프로그램	112,885	124,581	156,074	175,492	235,605	246,433	243,718
계	230,339	285,929	494,965	530,650	602,630	570,321	538,077

자료 : 교육부(2008~2014).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내용별 강좌 현황을 보면, 영어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율(14.6%)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수학(14.1%), 체육(12.0%), 국어(9.4%), 과학(9.0%), 음악(8.9%), 사회(6.5%) 순으로 나타났다. 국·영·수·사·과 주요 교과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의 53.6%를 차지하였다.

〈표 7-3-7〉 방과후학교 내용별 강좌 현황

(단위 : 개, %)

구 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제2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독서 논술	기타	계	
프로그램 수 (개)	초	7,337	23,740	2,553	14,830	26,386	3,746	34,996	25,333	43,213	23,332	8,344	39,270	253,080
	중	13,166	18,348	10,632	12,084	18,697	1,604	10,044	3,494	15,654	1,193	2,574	10,211	117,701
	고	30,004	33,864	21,648	21,343	33,285	1,092	2,630	1,603	5,885	3,636	2,396	9,910	167,296
	계	50,507	75,952	34,833	48,257	78,368	6,442	47,670	30,430	64,752	28,161	13,314	59,391	538,077
비율(%)	9.4	14.1	6.5	9.0	14.6	1.2	8.9	5.7	12.0	5.2	2.5	11.0	100.0	

자료 : 교육부(2014).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3) 강사 구성

2014년 4월 현재, 총 292,698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현직교사가 55.9%, 외부 강사가 4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좌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기·적성 강좌는 51.2%, 교과강좌는 48.8%를 차지하였다. 특기·적성 강좌의 강사는 현직교사가 34.1%, 외부 강사가 65.9%로 외부 강사의 비율이 높은 반면, 교과 강좌의 경우에는 현직교사가 78.8%, 외부 강사가 21.2%로 현직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8〉 방과후학교 강사 구성 현황

(단위: 명, %)

강좌 유형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특기·적성	51,129	34.1	98,668	65.9	149,797	51.2
교과	112,631	78.8	30,270	21.2	142,901	48.8
계	163,760	55.9	128,938	44.1	292,698	100.0

자료: 교육부(2014).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4) 수요자 만족도

〈표 7-3-9〉는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을 통해 매년 설문 조사하는 수요자 만족도 결과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2014년에는 학생 만족도 75.8점, 학부모 만족도 76.3점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9〉 방과후학교 만족도

(단위: 점)

연도	학 생				학 부 모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008년	77.6	64.9	54.7	69.1	74.6	67.6	60.0	69.6
2009년	78.4	58.2	50.3	64.2	73.7	63.0	56.1	65.6
2010년	80.6	61.0	59.1	67.9	78.0	65.1	62.5	69.4
2011년	82.0	67.0	61.7	73.8	79.2	70.0	64.8	73.7
2012년	83.8	70.0	63.0	75.8	80.8	72.4	65.9	75.4
2013년	86.1	74.5	64.9	78.7	83.1	76.2	67.8	78.1
2014년	85.8	69.9	59.4	75.8	84.4	72.0	62.2	76.3

자료: 교육부(2008~2014).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가.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 현황

정부는 도시 지역에 비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불리한 농어촌 교육 환경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 및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60년대 후반, 「도서벽지교육진흥법(1967)」을 제정하여 교육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에 학교시설, 교과서 무상공급, 통학 지원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해당 교원들에게 도서벽지 수당 등 부여하였다.

1980년대부터 농어촌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폐합 정책(1982) 시행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인접 학교 간 통·폐합을 추진하여 경제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나 질적 통합이 아닌 양적지표만을 고려하였다는 제한이 있었다. 1995년의 5.31 교육개혁에서는 ‘농어촌 지역 우수학교 육성’을 개혁 과제로 삼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지역 거점학교 육성을 추진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날로 소규모화 되는 농어촌 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통폐합 및 통합학교 운영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04년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농어촌 학교의 교원, 학생, 시설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법령을 마련하였다. 농어촌 교육관련 정책사업은 매우 다양하지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2004)」 제정 이후 최근 10년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이 이뤄졌으며, 농산어촌 우수교 육성 사업('04~'09) 및 기숙형 공립고 사업('08~현재), 연중 돌봄학교 육성('09~'11), 전원학교 사업('09~'15) 등이 추진되었다.

최근 농어촌 교육정책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제한점 및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농어촌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교육지원 및 도농 교류를 추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표 7-3-10〉 2004 ~ 2013년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

사업명	내용 및 성과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 (2004 ~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우수인재 도시유출방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농산어촌 고교의 자생적 발전기반 마련 • (지원규모) 86개교 운영 • (지원예산) 총 1,619억원 • (성과) 우수고 재학생 수 평균 28명 증가, 중학생 신입생 진학률 : 8.9%(’04) → 16.5%(’09)
기숙형 공립고 사업 (2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가 되도록 거점단위로 지역의 우수기숙형 학교 육성 • (지원규모) 150개교 운영 • (지원예산) 총 6,200억원 • (성과) 저소득층 학생 기숙사비 지원, 중학교 우수졸업생 유출 방지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2009 ~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취약지역 학교의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 • (지원규모) 383개교, 33,862명 지원 • (지원예산) 총 806억원 • (성과) 사업학교와 비사업학교 간 보통 이상 학력비율 비교 시 국어 5.9%, 영어 6.7% 이상 높게 나타남
전원학교 사업 (2009 ~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자연친화적 환경과 첨단 e-러닝시설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이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육성 • (지원규모) 399개교 • (지원예산) 총 1,602억원 • (성과) 초6 영어·수학 기초 학력 미달 비율(전원/전체) : 영어(1.1%/2.1%), 수학(0.7%/1.2%), 학생 만족도(전원/비전원) : 74.1점/68.4점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된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들은 저마다 계획되었던 목표대로 그 성과를 달성하여 어느 정도 우수한 정책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지원 사업들이 3~5년 미만의 단기 사업으로 추진되어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산규모 등의 이유로 정책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학교 수 또한 제한적인 실정이어서 농어촌 교육 전체의 활성화를 추구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과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추진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3년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사업'과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나.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사업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2013. 10.)은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하여 약 9,978억원을 투자하는 등 꾸준한 지원을 하였으나, 중학교 지원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을 조사하였을 때 중학교의 도·농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농어촌 중학교에 대한 낮은 신뢰로 교육 이농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우수 중학교를 육성하여 우수한 입학자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농어촌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은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중심적인 중학교를 육성함으로써 향후 소규모 학교 적정 규모화 대비 및 미래지향적인 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 내 지속 발전이 가능한 중학교에 대해 집중 지원하여 농어촌 중학교 선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초등학교(전원학교 육성 사업), 고등학교(기숙형 공립고 지원)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군 단위 면 지역 중학교를 집중 육성, 둘째, 지리적·문화적 여건 부족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중학교에서 운영하도록 지원, 셋째, 기숙사 또는 통학차량 등의 지원을 통해 주변 학생 및 도시 유학생의 생활 여건 마련 및 거점 중학교로의 진학을 유도하겠다는 데 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청은 광역학구제의 도입을 통해 인근 지역 희망학생 유치 여건을 마련하고, 초빙형 학교장 공모제를 활성화하여 학교 육성에 열정이 있는 교장을 확보하며,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우수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시·군 지자체는 행·재정적 지원 MOU 체결(교육지원청, 학교 등) 추진, 중학교 육성 계획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교 필수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운영, 학교 스포츠 클럽,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예술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기기 및 무선 인터넷 구축 등 ICT 사업 프로그램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우수중학교는 지역사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전략과 연계가 강화된다. 정부3.0 시대 협업 차원에서 선정 시 지역발전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정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소재 학교에 대해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행정구역 경계를 뛰어넘어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희망하는 지자체 간 합동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선정·지원(2014. 3. ~)한다.

지원 대상 학교는 면 소재 중학교(재학생 60명 이상)로서 폐교예정 대상 학교는 제외시키도록 하였으며, 2013년에 20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0개교를 선정하여 총 80개 학교에 589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 학교는 교육지원청별 1개교 추천 후 시·도 교육청, 교육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시·군별로 1개 학교를 선정하여 시·도 교육청에 추천하면 교육지원청, 시·군청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5명 이내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예비 심사를 통해 최대 6개교를 선정하고 심사 결과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하였다. 3단계에서는 교육부가 교육청별 예비 심사를 통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최종 평가하여 선정하고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지원 내용은 우선 기숙사 신축, 리모델링, 특별실 구축 등의 시설비를 들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단기 인건비를 지원한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출은 불가하며, 사업기간 동안 한시적인 인건비임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단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대응 투자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종 기자재 및 장비 구입 비용,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경비, 통학 버스 임차 등 운영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지원하였다.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은 서울대학교 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농어촌교육지원센터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 컨설팅, 교장 및 담당교사 연수, 지역별 운영 협의회 운영 지원, 거점별 우수중학교 운영 가이드북 보급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7-3-11〉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표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 중학교를 육성
사업 지원 대상		재학생이 60명 이상인 면 소재의 중학교
사업 기간		2013년부터 2015년
사업 규모	지원 기간	대상 선정 후 3년 동안 지원
	지원 학교 수	총 80개교 지원(2013년 20개교, 2014년 30개교, 2015년 30개교 선정)
	지원 예산액(지원 형태)	매년 교당 5억 원 지원 기준(특별 교부금) 총 589억원 지원
지원 내용		시설비 : 기숙사 신축, 리모델링, 특별실 구축 등 인건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단기 인건비 기자재비 : 각종 기자재 및 장비 구입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 :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경비 기타 : 통학 버스 임차 등 운영에 필요한 기타 경비
사업 관리		(서울대학교 농어촌교육지원센터) 사업 운영 컨설팅, 교장 및 담당교사 연수, 지역별 운영 협의회 운영 지원, 우수중학교 운영 가이드북 개발 및 배포 등
추진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각 년도.

선정된 총 80개 학교는 수도권 25개교, 충청권 16개교, 전라권 20개교, 경상권 19개교이며, 지역별로 선정된 학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7-3-12〉 거점별 우수중학교 권역별 선정 학교 수(2015)

(단위 : 개교)

구 분	수 도 권			충 청 권			전 라 권			경 상 권					합 계
	경 기	강 원	인 천	충 남	충 북	세 종	전 남	전 북	제 주	경 남	경 북	부 산	대 구	울 산	
학교 수	78	35	4	64	26	6	64	37	4	71	33	2	5	6	435
선정 학교 수	13	10	2	11	4	1	17	2	1	9	8	-	1	1	80
선정	25			16			20			19					80

자료 : 교육부(2015), 내부자료.

그동안 추진된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및 시설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다목적 강당, 기숙사, 특별실 등 교육 시설을 구축하고, 진로, 예체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부 학교에서는 사업 시행 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지역 주민의 신뢰가 회복되어 지역 학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 농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농산어촌 학교의 ICT 교육환경 구축은 농산어촌의 사회경제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7월 18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농어촌 지역 스마트 교육 활성화’의 실행 방안 수립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농산어촌의 지리적, 문화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축적된 교육정보화 역량과 학습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근 보편화 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 격차를 줄임으로써 보다 많은 지적·문화적 소양과 체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농어촌 학교의 학습여건은 약 40%(1,896교)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복식수업, 방과 학교 운영 제약, 포괄학습 결여 등 열악한 여건이나, 대부분 농촌학교 인근에 학원이 전혀 없어 학습 결손 보충이 어렵고 영어 및 예체능 능력 계발에도 한계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도농 간 학생들의 기초 학력 격차가 커지고, 중학교 단계에서의 수준 격차는 보통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열악한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체험기회 제공 기관 및 장소가 부족하고, 기초수급자, 조손 가정,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구조적 취약계층의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정의 돌봄기능이 취약한 편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학생 수 60명 이하의 면·도서벽지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300개교를 지정한 후 2013년 시범사업('13. 9. ~ '14. 2.)을 실시하였다. 2013년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반으로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참여학교 수를 2,000개로 증대시켰으며, 2015년에는 전체 농산어촌 초등학교 및 중학교 4,008교에 지원하고 있다.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를 위해 스마트 멘토링,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등 지원을 2013년 35억원, 2014년 121억원, 2015년 85억원, 총 241억원이 지원되었다.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사업은 크게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보급, 스마트 멘토링의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보급은 학교별 기 구축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 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 차등 지원되었으며, 스마트 멘토링은 방과 후 시간에 교사, 방과 후 강사, 대학생 등 다양한 멘토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체험학습으로 운영되었다.

〈표 7-3-13〉 농산어촌 ICT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표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ICT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농산어촌의 사회경제적 불리함 극복
사업 지원 대상		4,008개교
사업 기간		2013년부터 2015년
사업 규모	지원 기간	1년
	지원 학교 수	총 4,008개교(2013년 300개교, 2014년 1,915개교, 2015년 4,008개교 선정)
	지원 예산액 (지원 형태)	교당 지원액 상이(특별 교부금) 총 241억원 지원
지원 내용		스마트 기기 보급 : 스마트 패드(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 구매 무선 인프라 구축 : 무선 인터넷망, AP 등 스마트 멘토링 : 방과후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뛰어난 멘토의 지원
사업 관리		(서울대학교 농어촌교육지원센터) ICT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배포, 농산어촌 ICT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ICT담당자 사이버 연수, ICT담당자 학습동아리 운영 등

자료 : 교육부(2015), 내부자료.

2015년에는 총 4,008개교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4년까지의 스마트기기, 무선인프라 구축, 스마트 멘토링의 세부사업 참여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표 7-3-14>와 같다.

그동안 추진된 농산어촌 학교의 ICT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운영된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사업은 '13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사례 및 체험 중심의 학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였으며, 문체부와의 협업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 등의 ICT 콘텐츠를 통합 사이트와 연계하여 국립민속박물관 등 9개 기관의 7개 분야(자연과학, 철학·종교·심리학, 사회과학, 언어, 예술, 문학, 역사·지리)의 방대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그 외 자기주도 수학학습 콘텐츠, 학생 과학연구 수행 결과물, 오케스트라 동영상, 원격 진로 멘토링, 학생체력평가 앱, 인물로 보는 한국사 등 다양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에 따라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농어촌교육지원센터는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과 함께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 세부 지원 과제로는 ICT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배포, ICT 담당자 학습 동아리 운영 및 교사를 위한 ICT 활용 사이버 연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교육정보화 시스템을 농산어촌 학교에 접목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산어촌 학교 4,008개교 모든 학교가 ICT 환경구축을 위해 지원받을 계획을 하고 있어, 어느 학교에 다니든지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표 7-3-14〉 농산어촌 ICT 구축 현황

(단위 : 개교)

시·도	전체 학교수	2013년			2014년		
		스마트 기기	무선 인프라	스마트 멘토링	스마트 기기	무선 인프라	스마트 멘토링
부산	27	-	-	-	5	-	10
대구	39	1	-	-	9	9	20
인천	54	6	5	6	12	12	28
울산	47	1	1	1	12	13	13
세종	27	-	-	-	11	-	11
경기	546	16	14	16	224	229	245
강원	403	33	32	32	174	156	221
충북	260	20	20	20	80	96	128
충남	465	27	27	27	127	146	210
전북	391	40	40	40	141	130	184
전남	598	54	50	54	239	237	295
경북	578	61	61	61	199	196	280
경남	481	36	35	36	191	166	227
제주	92	5	1	5	10	4	43
계	4,008	300	286	298	1,434	1,394	1,915

자료 : 교육부(2015), 내부자료.



4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가.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 구성원이 다양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화는 중요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주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의 증가에 따라 학교에서도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1% 수준에 이르렀다(〈표 7-3-15〉 참조). 표에는 제시되지 못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도시에 많으나 학교 재학생 대비 비율은 농촌이 높은 편이다.

〈표 7-3-15〉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2007~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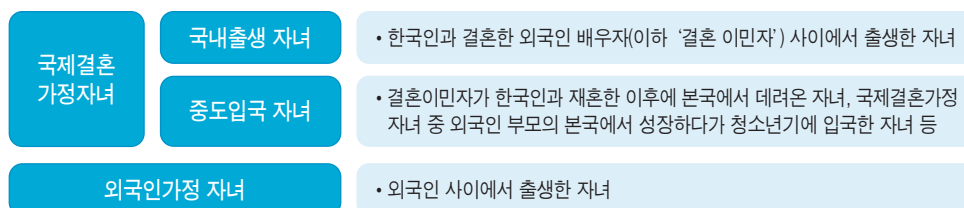
(단위 : 명)

인원수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다문화학생 수(A)		14,654	20,180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전체 학생 수(B)		7,734,531	7,617,796	7,447,159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다문화학생 비율 (A/B×100)		0.19%	0.26%	0.35%	0.44%	0.55%	0.70%	0.86%	1.07%

자료 : 교육부(2014).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은 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2010년 전후로 중도입국 청소년도 정책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2. 3. 12.)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을 다음 [그림 7-3-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림 7-3-1]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이 분류에 따라 2014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을 보면 한국 출생 학생이 약 85%, 중도입국 청소년이 약 8%, 외국인 자녀가 약 7% 정도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중 대다수인 약 71% 정도가 초등학교에, 19% 정도가 중학교에, 10% 정도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3-16〉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2012~2014년)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초	중	고	계
2012년	한국 출생	29,303	8,196	2,541	37,499 (85.3)
	중도입국	2,676	986	626	3,662 (9.0)
	외국인 자녀	1,813	465	348	37,499
	계	33,792	9,647	3,515	46,954
	(비율)	(74.1)	(19.7)	(6.2)	
2013년	한국 출생	32,831	9,174	3,809	45,814 (82.1)
	중도입국	3,065	1,144	713	4,922 (8.8)
	외국인 자녀	3,534	976	534	5,044 (9.1)
	계	38,281	11,098	4,489	55,780
	(비율)	(70.7)	(20.3)	(9.0)	
2014년	한국 출생	41,575	10,325	5,598	57,498 (84.7)
	중도입국	3,268	1,389	945	5,602 (8.2)
	외국인 자녀	3,454	811	441	4,706 (6.9)
	계	48,297	12,525	6,984	67,806
	(비율)	(71.2)	(18.5)	(10.3)	

자료 : 교육부(201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보도자료. 2013. 10. 22.

교육부(2014). 다문화학생현황통계. 2014. 10. 14.

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 개요

학교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해 2006년부터 정부(교육부)에서는 지원 대책을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다. 2008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4년 간(2009~2012) 총 7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지원방안은 다문화가정 유아와 초등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지원,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을 4개 정책과제로 하여 총

14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었다. 이 지원방안은 매년 당해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던 이전과는 달리, 교육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 교육청은 각 지역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세움으로써,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정책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09년 9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8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참석)가 구성되었다. 주로 반기마다 이루어지는 동 위원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 부처 합동) 수립, 부처 간 사업 연계·조율 및 협력 등을 꾀하였다.

2012년에는 종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며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선진화 방안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윈스톱 서비스 제공, 다문화학생 교육 내실화 및 재능 발현 지원, 다문화 친화적 교육 체제 구축, 다문화학생 교육 체계화를 위한 범사회적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3년 교육부에서는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방안(2013. 10. 22.)을 통해 특히 공교육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외국인 자녀를 위해 학력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특별학급 운영 등의 정책을 보완하였다. 2014년에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더욱 확대하면서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강조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다. 주요 정책 내용

(1)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외국인 자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8년 교육부는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의 국내 학교 입학 또는 전학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개정(2008. 2. 22.)하였다. 이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통해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간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중도입국 자녀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2010년 12월 27일에 다문화가정 동반·중도 입국 자녀 등의 초·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을 개정하였다. 2010년에는 취학 전 예비과정(3개소)과 정규 학교의 특별학습(5개소)을 설치하여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26개소, 2013년에는 50개소, 2014년에는 80개소로 확대되었다. 예비학교는 특별학습을 운영하거나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력인정 대안학교 또는 다문화교육센터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에서는 2015년 예비학교를 100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시·도 교육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7-3-17〉 예비학교 운영(2015년)

(단위 : 개소)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계	9	4	3	4	1	5	5	1	26	8	5	5	7	6	5	5	1	100

자료 : 교육부(2015),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2015. 3. 17. 보도자료).

2012년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중도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자녀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다문화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방안과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정규학교 배치 전에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도록 하여 정규학교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2014년 예비학교는 80개교로 확대되었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출신국에서 학력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2013년에는 초·중학교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 진입과 적응을 돕는 다문화 특별학급이 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탈북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중도입국 청소년 등을 포함시켜 학력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4년에는 7개국어로 된 학력심의 평가지 개발 보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비롯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습득 지원을 위해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후학교를 통해 한국어(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100개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취학 전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출신 아동이 많은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남 교육청을 중심으로 유치원 단계에서 언어 및 기초학습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유치원 30개를 선정 시범 운영할 것이다.

(2)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내실화와 재능 발현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 상담 등을 실시하여 학교 적응 및 학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하여 교사, 예비 초등교사, 퇴직교원 등이 참여하는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1 멘토링 강화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 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방학에는 집중 캠프를 실시하여 학기 중 멘토링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특기·적성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의 재능 발현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글로벌 브릿지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출신국을 이해하고 리더십을 향상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며, 부모의 출신

국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2011년에는 2개 분야 4개 대학(서울교대, 카이스트, 경남대(수학, 과학), 광주교대(리더십)에서 실시되었던 것을 2012년에는 4개 분야(수학·과학, 리더십, 언어, 예체능)로 확대하였으며, 이후 점차 확대하여 2015년에는 17개 대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대구대학교에서는 2014년 52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수학·과학 중심의 융합형 교육을 통해 창의인성 개발 및 진로 탐색을 도왔으며, 전북대학교에서는 수학·과학 및 리더십 관련 실험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하여 중등수준에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다솜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2012년 서울과 제천에 다솜학교가 설치되었으며, 인천에도 다솜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학교에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해 특화된 학교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 교육을 위해 2014년에는 직업교육 지원기관 10개를 지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이를 15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이 주말이나 방학 등을 이용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이중언어 강사의 활용

교원양성 단계에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강좌를 운영하여 예비교사의 다문화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9년부터 2010년에 추진한 교대 및 국립대 사범대학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성과를 사립대 사범대학까지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중앙다문화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 전문직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부터 한국어, 모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선발, 교육하여 이중언어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125명의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하였으며 이들을 2012년부터 다문화 유아나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유치원,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등에 강사로 배치, 활용하였다.

2013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에 '다문화언어 강사'를 추가하였다(시행령 제42조제1항 개정). '다문화언어강사'를 중등 영어 이외 외국어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외국어 능통자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별도로 규정된 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게 이주 부모의 언어를 가르치고 모든 학생을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현직교사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 상담한 교사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9년부터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 심사를 거쳐 전국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상 교사

등에게는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 워크숍 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학술대회나 연수의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실태 분석 등 전문적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원)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4) 다문화 이해 확산,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2008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에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이해존중, 편견 극복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2010년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 타문화 이해와 존중 등의 내용을 담은 교과서 보급,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다문화 이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다문화 친화적인 교과서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교과서 검토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유치원(5세 누리과정)부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교육 내용이 범교과 학습 요소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상호이해교육 강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안내하였다. 2014년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이해교육, 반 편견 반 차별 교육, 세계 시민교육을 하는 다문화중점학교 120개교 지정 운영하였으며, 2015년에는 150개교로 확대하였다.

5 탈북학생 교육 지원

가. 탈북학생 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은 2011년 이후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2011년 북한권력자의 사망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북한 내부의 체제단속 강화의 결과로 성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 규모는 다소 줄어든 상태이다. 1998년 이후부터 2015년 6월까지 누적 집계로 총 28,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였다.

〈표 7-3-18〉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6월 (잠정)	합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106	8,358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508	19,775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614	28,133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1%	73%	76%	78%	83%	70%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통계(2015. 6.).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체제 단속의 결과로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청소년의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의 남한 입국은 계속 이어져, 전체 탈북학생의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학령기에 해당하는 탈북청소년은 2000년에는 수십 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급속히 증가하여 매년 200~300여 명 이상의 탈북청소년이 남한으로 입국하였다. 2015년 6월까지 10~19세 탈북청소년의 규모는 3,315명에 이르고 있고 0~9세의 탈북학생도 1,197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청소년은 통일부의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학령기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탈북학생의 규모는 4,000명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7-3-19〉 연령대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598	1,512	2,258	1,945	1,185	442	312	8,252
여	599	1,803	5,460	6,203	3,314	1,008	880	19,267
합계(명)	1,197	3,315	7,718	8,148	4,499	1,450	1,192	27,519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통계(2015. 6.).

교육부는 매년 4월 기준으로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탈북학생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탈북청소년을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한정하여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교육부는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뿐 아니라 ‘부모 중 한 사람이 북한 출생으로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까지 탈북학생의 범주에 포함시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4월 조사 결과, 총 2,717명의 탈북청소년이 학교 안팎의 교육 기관에서 재학하고 있다. 이 가운데 2,475명은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242명(전체의 8.9%)의 청소년이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교육시설에서 수학 중이다. 이 밖에 정규학교나 대안학교에서 수학하지 않고 사설 학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탈북청소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7-3-20〉 탈북청소년 수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현황 (15. 4.)	636	588	378	446	212	215	242	2,717
	1,124		824		427			
	2,475							

자료 : 교육부(2015), 탈북학생 조사 통계자료(2015. 4.).

학교급별 재학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1,224명으로 49.5%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가 824명(33.3%), 고등학교가 427명(17.2%)으로 나타났다.

〈표 7-3-21〉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학 교 급 별			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7. 4.	341 (49.6)	232 (33.8)	114 (16.6)	687 (100.0)
2008. 4.	495 (51.2)	288 (29.8)	183 (19.0)	966 (100.0)
2009. 4.	562 (49.2)	305 (26.7)	276 (24.1)	1,143 (100.0)
2010. 4.	773 (54.5)	297 (21.0)	347 (24.5)	1,417 (100.0)
2011. 4.	1,020 (60.7)	288 (17.1)	373 (22.2)	1,681 (100.0)
2012. 4.	1,204 (60.4)	351 (17.6)	437 (21.9)	1,992 (100.0)
2013. 4.	1,159 (57.3)	478 (23.6)	385 (19.0)	2,022 (100.0)
2014. 4.	1,128 (45.7)	684 (27.7)	371 (15.0)	2,183 (100.0)
2015. 4.	1,224 (49.5)	824 (33.3)	427 (17.2)	2,475 (100.0)

자료 : 교육부, 각 연도별 탈북학생 조사 통계자료(2015. 4.).

나. 탈북학생 교육의 문제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을 떠나 한국에 들어오기까지의 교육공백, 탈북과정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했던 중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한국 입국 이후 경험하는 남북한 사회 문화 및 교육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한국의 사회 및 학교에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출생 탈북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의 결여로 인해 남한 입국한 후 학교 및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탈북 후의 탈출 생활은 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위험한 도피생활을 의미한다. 은둔생활 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신분이 노출되어 중국의 공안이나 국경수비대에 발각될 경우,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어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탈북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활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계속 심리적 불안을 경험한다. 특히 장기간의 탈북과정을 거치면서 학력결손 문제를 가지고 있는 탈북청소년의 경우가 많다. 거처를 계속 옮겨 다니거나 숨어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규칙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체계적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님이 먼저 탈북하여 장기간 동안 부모님과 이산 생활을 한 후 부모님과 재회하기까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탈북학생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후 북한과는 상이한 사회체제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탈북청소년은 학교생활 초기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학교 체제의 차이,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등

낮선 학교 모습을 비롯해 치열한 경쟁, 성적에 대한 관심, 개인과외에 의존하는 분위기, 개인주의적 태도 등 북한에서와는 다른 남한 학생들의 행동 양식이 남한생활 초반, 이들이 남한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탈북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및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과거 식량난에 따른 대량 탈북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반해,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탈북의 동기가 다양해지면서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청소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에서 초중등 교육을 마치고 학업공백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오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해 들어오는 북한이탈 주민, 탈북청소년의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으로 대표되는 제3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탈북 청소년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탈북청소년은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차이, 남북한의 교육 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해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은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사회 및 학교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남한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 탈북학생 교육의 목적 및 지원 체계

탈북학생 교육은 기본적으로 탈북학생을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성장시키고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거나 제3국에서 출생하여 남한에 들어온 후의 시기인 입국 초기 단계부터 지역 사회 정착에 이르는 정착기 단계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탈북학생 교육 지원은 정규학교의 통합교육과 학교 밖 민간교육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 탈북학생들이 남한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정규학교 중심의 통합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민간교육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을 통해 학교 밖 탈북청소년이 교육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통일부는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지역 단위의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학교 내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학교,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밖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현황

2015년 실시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1)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입국 초기·전환기 교육 내실화, (2) 정착지 학교의 통합적 맞춤형 교육 강화, (3) 성장·자립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 지원 강화, (4) 관계기관 협력체제 강화, (5)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구축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지원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입국 초기·전환기교육 내실화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입국 초기·전환기교육 내실화’ 교육은 하나원에서 시작하여 정규학교에 이르는 교육경로별 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입국 초기 교육기관에 파견교사 지원, 특별학급 운영, 진로교육 지원, 협력학교 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실시하였다.

각 사업 별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 남한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의 입국 초기 단계 교육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적응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입국 초기,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재학하는 삼죽초와 하나원 하나돌학교의 탈북학생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파견교사)을 지원함으로써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입국 초기 교육기관인 하나돌학교 재학 학생의 중등학교 편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학력심의를 지원하였다. 셋째, 입국 초기 교육기관(삼죽초등학교)에 특별학급 운영을 지원하여 초등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였다. 넷째, 입국 초기 교육기관인 하나돌학교 재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기초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정착지 학교 편입을 지원하였다. 다섯째, 입국 초기 및 전환기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제3국 출생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한국어 강사를 지원하여 초기학업을 지원하였다. 여섯째,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의 일반 정규학교에 가기 전 단계인 전환기 단계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한겨레 중고등학교와 일반 중고등학교 간의 협력학교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정착지 학교 적응 준비를 지원하였다. 일곱째, 입국 초기 및 전환기 교육의 연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여덟째, 전환기학교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환기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정착지 학교의 전편입학 준비 내실화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탈북학생이 전환기교육 단계 이후 일반학교에 원활히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 정착지 학교의 통합형 맞춤형 교육 강화

‘정착지 학교의 통합형 맞춤형 교육 강화’ 영역에서는 탈북학생이 정규학교에서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 전문가, 전담

코디네이터 등 교육지원 인력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 강화, 밀집학교 특별학급 운영 지원, HOPE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세부사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교사 멘토링 지원에서는 교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 심리 상담,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교육 멘토링을 지원하였다. 둘째, 탈북학생 밀집학교 특별한 운영 지원에서는 탈북학생 밀집지역의 초중학교에서 탈북학생의 학습 부진을 보충하고 사회문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반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였다. 셋째, 토요일점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에서는 탈북학생 지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교사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한 거점학교를 운영하여 탈북학생의 학습, 진로, 상담 등의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탈북학생 잠재역량 강화 프로그램(HOPE)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는 탈북학생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즉, 인문, 과학, 수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잠재능력 갖춘 탈북학생을 선발한 후 각 분야의 전문가(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등)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실시하여 학생의 잠재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제3국 출생 탈북학생 교육 강화에서는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한국어 능력 신장에 필요한 교재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의 교육지원을 실시하였다.

(3) 성장·자립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지원 강화

탈북학생 성장·자립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지원 강화 사업에서는 탈북학생을 통일 시대의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진로·직업 교육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탈북학생 교육 경로별 직업교육 강화, 고등학교 직업관련 학과의 탈북학생 특별 입학전형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탈북학생 교육 경로별 직업교육 강화 사업에서는 입국단계별 직업교육을 강화하였다. 입국 초기 단계에서는 초기적응교육 기관 재학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 직업교육을 실시하였고, 전환기 단계에서는 전환기 교육기관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비, 바리스타 등의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정착기 단계에서는 수업연구회, 연구학교 등을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캠프를 확대 운영하였고 지역 단위의 진로 상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직업 관련 학과 탈북학생 특별 입학전형 확대 사업에서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의 직업관련 고등학교의 탈북학생 특별 입학전형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였다. 셋째, 진로·직업교육 위탁 운영에서는 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에게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지원하여 자격증 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진로·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탈북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진로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4) 관계기관 협력체제 강화

관계기관 협력체제 강화에서는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전문가 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관계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유관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탈북 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 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착근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협의를 추진하였다. 둘째, 전문가 포럼에서는 탈북학생 교육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다. 이상의 사업을 통해 관계 기관 간에 상시적 협의가 이뤄짐으로써 탈북학생 교육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신속하고 적절히 다루는 동시에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5)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구축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구축 영역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교사연수, 수업연구회, 탈북학생 표준(보충)교재 개발 및 보급, 정책연구학교 운영 등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세부 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탈북학생 이해제고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실시 과제에서는 탈북학생을 지도하는 정규학교 교사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각 시도의 일반 교사, 관리자에 대한 탈북학생 이해 교육 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고,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한 원격 연수 등을 실시하여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 역량 향상을 추구하였다. 이와 함께 탈북교사,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에 대한 연수를 통해 이들이 탈북학생 밀집학교에서 탈북학생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둘째, 남북한 상호이해교육 강화에서는 남북한 학생 및 학부모의 상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역량을 제고하였다. 학습동아리, 문화예술동아리, 체육동아리와 같은 학생 연합동아리를 운영하여 남북한 학생 간 소통,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남북한 학부모 연합동아리를 통해 학교 제도 및 문화 이해, 자녀교육 방법, 진로지도 등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에서는 탈북학생 지도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사례 공모 및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체 탈북학생 담당 교사 및 전문가 간 탈북학생 지도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넷째,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여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한 현장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탈북학생 지원 체제를 체계화하고 전체 학교의 탈북학생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추구하였다. 다섯째, 수업연구회 운영에서는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의

조직 및 운영을 지원하여 탈북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수업사례를 개발하는 동시에 맞춤형 수업연구회 간의 체계적인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의 탈북학생 교육역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여섯째, 지도교사 매뉴얼 등 개발·수정·보급에서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도교사 매뉴얼 등의 각종 자료 수정·보완 및 보급, 탈북학생 학부모용 교육안내서 개정 및 보급, 탈북학생 교육지원제도 및 센터 안내 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곱째, 탈북학생을 위한 표준(보충)교재 개발 추진에서는 초중등용 표준(보충)교재의 현장적합성 검토 및 보급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탈북학생의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통일대비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여덟째, 탈북학생용 기초 학력 진단도구 개발 및 보급에서는 탈북학생 학력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입국 초기 학생의 학년배치, 교과별 학습 부족 영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 학력 진단도구를 개발, 보급하였다. 아홉째, 탈북학생 기초 학력 보충교재 개발 및 보급에서는 기초 학력 부진 탈북학생을 위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열 번째, 홈페이지 운영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관련 자료의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통계 조사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구축 영역에서는 연수, 자료 개발, 체제 구축 등 탈북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의 남한사회 적응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통일 후 교육통합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기준 OECD 국가 평균보다 18.6%p 낮은 28.6%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 통학이나 학원 수강 등 학업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학업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8.0%에 달한다. 한편 한국 청소년의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5.0%p 낮은 10.0%를 나타내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청소년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 역시 둔화되고 있다.

청년고용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년연장의무화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우려되자 정부는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해소,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라는 3가지 추진과제를 통해 2015~17년간 20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탐색·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뿐 아니라 직업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온라인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위크넷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해 2012년 “청소년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2014년 5월 “청소년근로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제재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취업사이트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구제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11년 ‘1318 알바 신고센터’를 도입하여 근로 중 피해사례를 신고받고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은퇴 전문인력을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하고 권리구제 지원팀 구성, 권역별 알바신고센터 지정, 공인노무사를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청소년이 어디에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 차원에서 창업지원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비즈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아카데미, 창업선도대학 육성 등 청년층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제8부 청소년과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제3장 청소년의 직업·진로정책

제 1 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 178만3천 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28.6%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24.6%)에 비해 여자(32.5%)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는데 남자의 경우 군 입대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지연 등의 영향 때문이다. 한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62.4%)보다 33.8%p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5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경제활동인구 ¹⁾	2,758	2,034	1,507	1,525	1,535	1,626	1,657	1,783
○ 경제활동 참가율 ²⁾	36.9	33.3	25.4	25.5	25.5	26.6	26.6	28.6
· 남 자	31.2	26.7	20.4	20.2	20.6	22.1	22.5	24.6
· 여 자	41.9	39.0	29.9	30.4	30.1	30.9	30.6	32.5

주 :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였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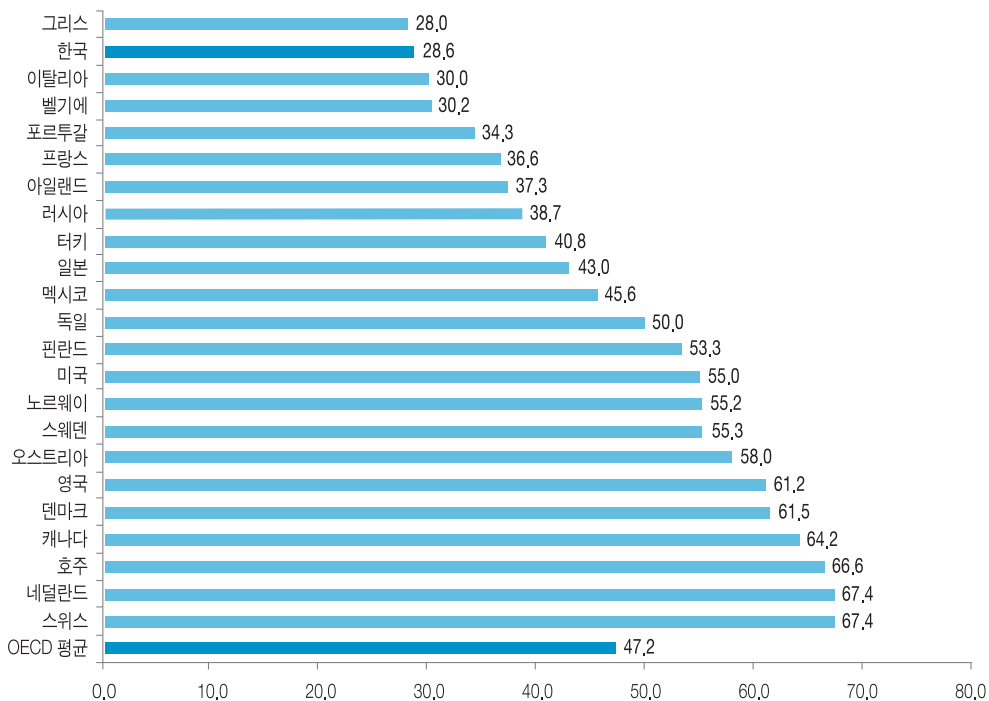
2) 경제활동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표 8-1-1〉에서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36.9%에서 2014년 28.6%로 8.3%p 낮아졌으며 2000년 이후 30%를 유지하다 2007년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부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정책추진에 힘입어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2009년 이래 소폭 상승해 전체와 청소년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2010년 35.6%p → 2014년 33.9%p). 성별 추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1995 : 2014 = 31.2 : 24.6)에 비해 여자 청소년(1995 : 2014 = 41.9 : 32.5)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폭이 더 크다. 이같이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 진학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전문대 포함)은 1995년 51.4%에서 2010년 79.0%까지 상승한 후 이후 하락하여 2014년 70.9%로 나타났다.

[그림 8-1-1] 2013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그 비율이 최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47.2%로 우리나라보다 18.6%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는 청소년 실업률이 20%를 넘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 정도이다. 네덜란드(67.4%)나 스위스(67.4%), 호주(66.6%), 캐나다(64.2%), 덴마크(61.5%), 영국(61.2%) 등의 국가들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령계층별·성별로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5~19세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12.0%에서 2009년 6.2%로 떨어졌다가 2014년 8.4%로 소폭 상승했으며, 20~24세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63.1%에서 2013년 47.6%까지 꾸준히 하락하다가 2014년 49.9%로 소폭 반등하였다. 특히 가장 큰 폭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 집단은 20~24세 남자 청소년들로 1995년 58.8%에서 2014년 44.4%로 무려 14.4%p가 하락하였다.

〈표 8-1-2〉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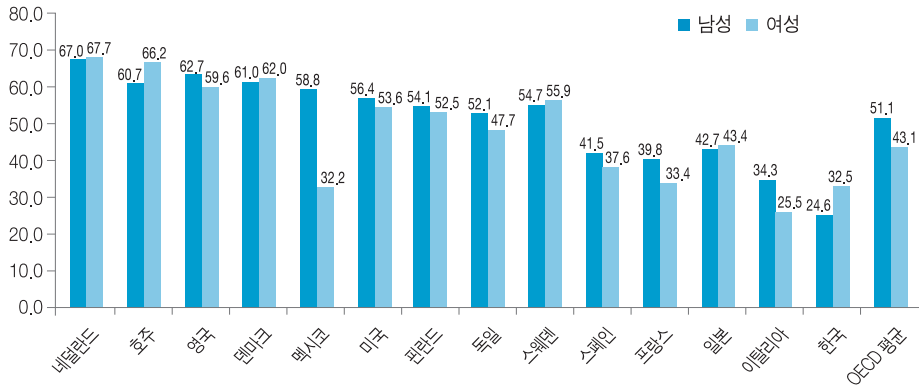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1995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24세	36.9	33.3	25.4	25.5	25.5	26.6	26.6	28.6
남 자	31.2	26.7	20.4	20.2	20.6	22.1	22.5	24.6
여 자	41.9	39.0	29.9	30.4	30.1	30.9	30.6	32.5
15~19세	12.0	9.1	6.2	6.9	7.6	7.7	7.7	8.4
남 자	9.5	8.0	4.9	5.5	6.3	6.3	6.6	7.6
여 자	14.5	10.3	7.5	8.5	9.0	9.1	8.7	9.4
20~24세	63.1	57.2	49.2	48.9	48.0	48.9	47.6	49.9
남 자	58.8	49.8	44.1	42.7	42.3	43.3	42.2	44.4
여 자	66.1	62.6	53.0	53.5	52.3	53.5	52.2	5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그림 8-1-2] 2014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자에 비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의무복무제의 영향으로 대학졸업 시점이 여자보다 늦고 입영대기로 보내는 시기 등이 있어 여자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는 비율이 더 길기 때문이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5%p 낮으며 여자 청소년은 10.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2014년 15~24세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444만 명으로 2013년에 비해 약 12만2천 명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집 안에서 가사를 맡고있는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학생,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등이 포함된다.

육아와 가사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1.5%로 2005년 이후 가장 적은 비중이며, 학교 통학이나 학원 수강 등을 의미하는 재학·수강은 최근의 취업난을 반영하듯 전년 보다 0.1%p가 증가한 88.0%를 기록하였다. 청소년 연령대 특성상 비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은 학교에 다니거나 학원 수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도 아니면서 취업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를 추려내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15~24세) 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4년 17만2천 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쉬었음” 인구 비중은 연도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2013년 4.2%에서 소폭 하락한 것이다.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현황 추이

(단위 : 천명, %)

연 도	비 경제 활동인구		육아 가사		재학 수강		쉬었음		그 외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2005년	4,079	100.0	90	2.2	3,488	85.5	185	4.5	317	7.8
2009년	4,427	100.0	88	2.0	3,887	87.8	162	3.7	291	6.6
2010년	4,456	100.0	79	1.8	3,888	87.3	155	3.5	334	7.5
2011년	4,481	100.0	83	1.8	3,901	87.1	179	4.0	318	7.1
2012년	4,478	100.0	79	1.8	3,900	87.1	185	4.1	314	7.0
2013년	4,562	100.0	72	1.6	4,009	87.9	190	4.2	290	6.4
2014년	4,440	100.0	68	1.5	3,907	88.0	172	3.9	293	6.6

주 : 재학, 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과 기관수강 등을 포함, 그 외는 취업준비, 군입대 대기, 심신장애, 결혼준비, 구직 활동, 발령대기, 진학준비, 기타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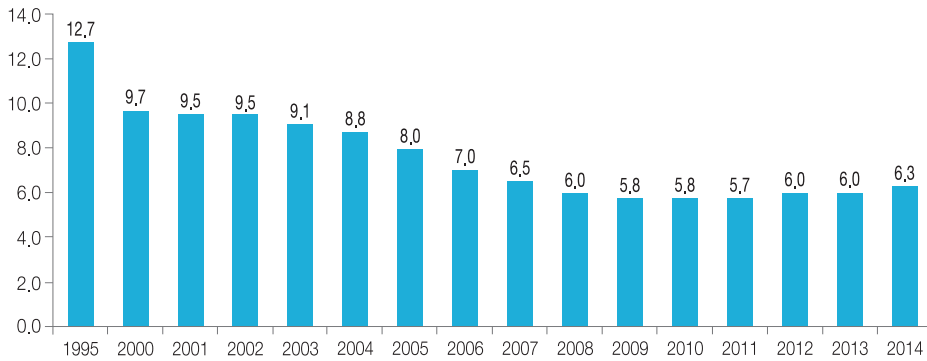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2014년 15~24세 청소년 취업자는 160만4천 명으로 2013년(150만2천 명)에 비해 10만2천 명이 증가하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전체(65.3%)보다 39.5%p 낮은 25.8%이다. 전체 취업자(2,559만9천 명)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청소년인구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세대 간 인구 격차를 반영하듯 물결모양처럼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2002년 9.5% 이래 하락세를 띄다가 2009년부터 다시 소폭 상승해 2014년 6.3%를 기록하였다. 청소년 취업자 비중의 증가는 2009년 들어 하락하기 시작한 대학진학률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8-1-3] 총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표 8-1-4〉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9년	구성비	2010년	구성비	2011년	구성비	2012년	구성비	2013년	구성비	2014년	구성비
15~24세	1,359	100.0	1,375	100.0	1,387	100.0	1,479	100.0	1,502	100.0	1,604	100.0
남 자	510	37.5	514	37.4	523	37.7	590	39.9	616	41.0	664	41.4
여 자	848	62.5	861	62.6	863	62.3	890	60.1	886	59.0	940	58.6
15~19세	178	13.1	204	14.8	227	16.4	230	15.6	224	14.9	244	15.2
남 자	72	5.3	81	5.9	96	7.0	97	6.6	99	6.6	111	6.9
여 자	106	7.8	123	8.9	130	9.4	133	9.0	125	8.3	134	8.4
20~24세	1,181	86.9	1,171	85.2	1,160	83.6	1,249	84.4	1,278	85.1	1,359	84.7
남 자	438	32.2	433	31.5	427	30.8	497	33.3	518	34.5	553	34.5
여 자	743	54.7	738	53.7	733	52.9	757	51.1	761	50.7	807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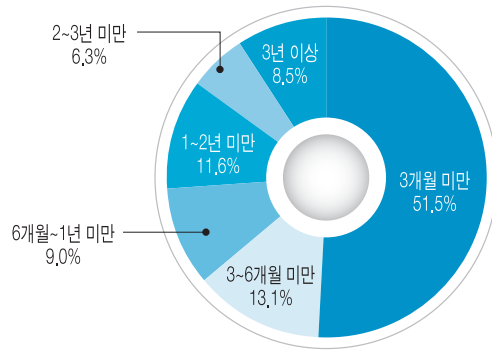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연령계층별로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취업자 중 15~19세의 비율은 2013년 14.9%에서 2014년 15.2%로 0.3%p 증가하였다. 반면 20~24세의 취업자 비율은 85.1%에서 84.7%로 소폭 감소하였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 취업자 비중이 훨씬 높지만, 남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5~29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 중인 청(소)년 취업자가 첫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인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6개월 미만이 13.1%, 6개월~1년 미만이 9.0%, 1~2년 미만이 11.6%, 2~3년 미만이 6.3%, 3년 이상이 8.5%로 나타났다. 학교를 졸업(혹은 중퇴)한 후 첫 취업을 하는 데에는 평균 11.0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난 전년(11.6개월)에 비해 학교-노동시장 이행기간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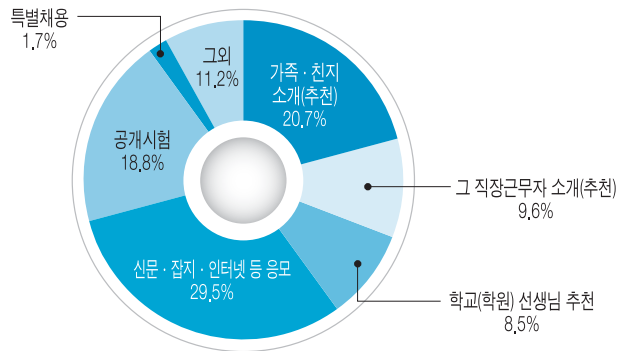
15~29세 청년 취업자의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가족, 친지나 직장 근무자, 학교 선생님 등의 추천을 통한 이른바 '연고취업'이 3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신문·잡지·인터넷 등 응모 29.5%, 공개채용시험 18.8% 순으로 나타났다. 연고취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족, 친지의 소개나 추천이 20.7%, 직장 근무자의 소개나 추천 그리고 학교 선생님 추천이 각각 9.6%,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8-1-4]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자료 :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15년 5월).

[그림 8-1-5]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자료 :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15년 5월).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2014년 청소년 실업자는 17만9천 명, 실업률은 10.0%이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11.2%)이 여자 청소년(9.2%)보다 다소 높다. 2014년 전체 실업률(실업자 93만7천 명)이 3.5%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실업률이 2.9배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이 급증해 2000년대 상반기 내내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다 2007년 10% 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상승해 2009년 9.9% 기록 후 이후 소폭씩 하락했으나 2013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다소의 등락이 있지만 2005년(12.2%) 이래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2014년에는 전년 대비 1.4%p 상승한 11.2%를 기록하였다. 반면 여성은 2007년(7.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 9.2%로 나타났다.

〈표 8-1-5〉 청소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5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청소년 실업자 수 ¹⁾	173	208	145	149	150	148	146	155	179
○ 청소년 실업률 ²⁾	6.3	10.2	9.3	9.9	9.8	9.6	9.0	9.3	10.0
·남 자	7.8	12.3	11.5	11.9	11.2	12.1	9.7	9.8	11.2
·여 자	5.3	9.0	7.9	8.6	9.0	8.1	8.5	9.0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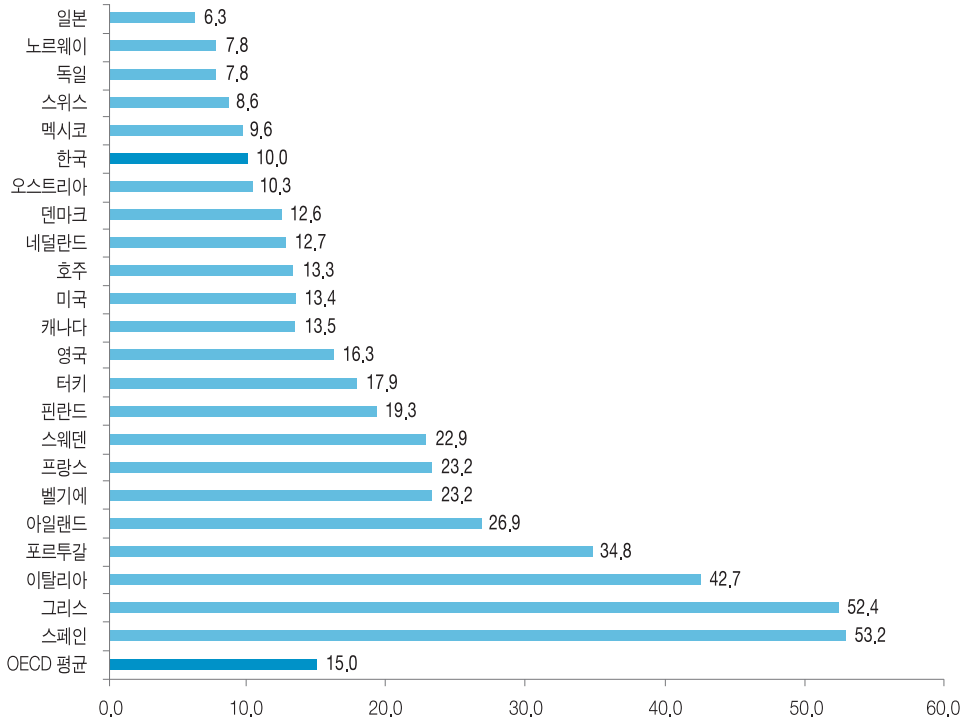
주 :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였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2)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그림 8-1-6]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OECD 국가 전체 평균(15.0%)보다 5.0%p 낮아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실업 문제가 최대 사회 현안 중 하나인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경우 청소년 실업률이 각각 53.2%, 52.4%, 42.7%, 34.8%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산학협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비교적 원활한 독일, 스위스 및 일본은 각각 7.8%, 8.6%, 6.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규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표 8-1-6〉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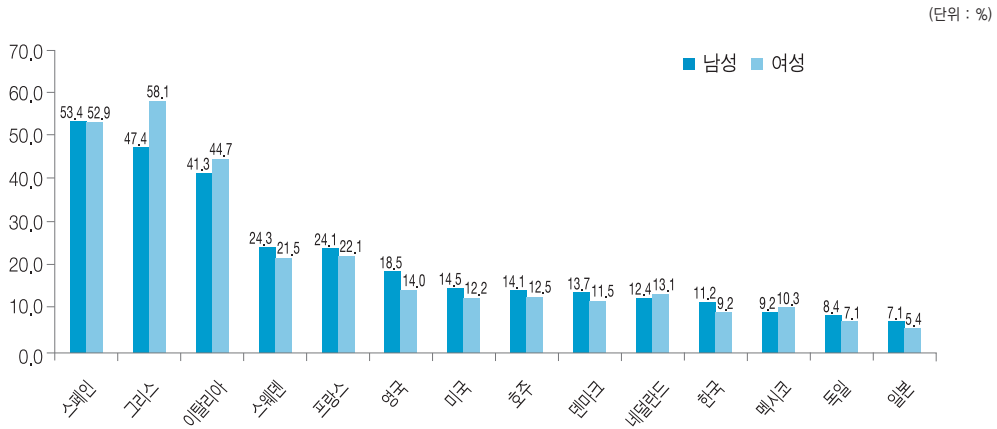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15~24세	149	9.9	150	9.8	148	9.6	146	9.0	155	9.3	179	10.0
남 자	69	11.9	65	11.2	72	12.1	64	9.7	67	9.8	84	11.2
여 자	79	8.6	85	9.0	76	8.1	83	8.5	88	9.0	95	9.2
15~19세	25	12.2	28	11.9	27	10.8	22	8.8	26	10.3	25	9.2
남 자	13	15.1	15	15.1	13	12.2	10	9.5	13	11.3	13	10.2
여 자	12	10.3	13	9.6	14	9.7	12	8.4	13	9.5	12	8.4
20~24세	124	9.5	122	9.5	121	9.4	124	9.0	129	9.2	154	10.2
남 자	56	11.4	50	10.4	59	12.1	53	9.8	54	9.5	71	11.4
여 자	67	8.3	72	8.9	62	7.8	71	8.5	75	9.0	83	9.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연령계층별로 청소년 실업률을 살펴보면, 15~19세가 9.2%로 20~24세(10.2%)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4세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11.4%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 실업률은 9.8%에서 11.2%로 1.4%p 증가하였고, 여자 청소년 실업률은 9.0%에서 9.2%로 0.2%p 상승하였다. 15~19세의 남자 청소년 실업률은 11.3%에서 1.1%p 하락하였지만, 20~24세 남자 청소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1.9%p 증가하였다. 15~19세의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전년의 9.5%에서 8.4%로 1.1%p 하락하였고, 20~24세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9.0%에서 9.3%로 0.3%p 상승하였다.

OECD 국가 청소년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가재정위기를 겪은 남부 유럽국가인 그리스, 스페인은 청소년 실업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도 4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독일, 일본 등은 OECD 평균(전체: 15.0%, 남자: 15.5%, 여자: 14.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청소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8-1-7] 2014년 성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자료 :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5 임금 및 노동시간

2014년 청소년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정액 및 초과급여 기준으로 19세 이하가 142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2.2%p 증가하였고, 20~24세는 17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4.5%p 상승하였다. 청소년 연령별 임금증감률을 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근로조건이 외부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준다. 즉,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명목임금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상승하였다. 지난 3년간의 명목임금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1년 큰 폭의 증감이 있었으나 이후 증감 폭이 크게 둔화되어 2014년은 전년 대비 2.2% 증가에 그쳤다.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 천원, %)

연 도	임금수준		증감률	
	19세 이하	20~24세	19세 이하	20~24세
2001년	792	877	10.8	5.3
2005년	1,059	1,200	8.8	7.9
2010년	1,022	1,427	-7.6	3.3
2011년	1,267	1,575	24.0	10.4
2012년	1,363	1,618	7.6	2.7
2013년	1,398	1,672	2.6	3.3
2014년	1,429	1,748	2.2	4.5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표 8-1-8〉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 천원, %)

연 도	임금수준			증감률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2001년	868	869	994	4.6	5.6	8.4
2005년	1,174	1,190	1,306	7.2	8.4	7.2
2010년	1,365	1,403	1,563	2.3	2.8	3.3
2011년	1,523	1,548	1,712	11.6	10.3	9.5
2012년	1,536	1,618	1,768	0.9	4.5	3.3
2013년	1,605	1,667	1,808	4.5	3.0	2.3
2014년	1,746	1,714	1,800	8.8	2.8	-0.4

주 : 20~24세 이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다음으로 2014년 20~24세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174만6천원, 전문대졸의 경우 171만4천원, 대졸 이상은 18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고졸자와 전문대졸업자 간 임금 격차가 감소하다가 2014년에는 고졸자가 전문대졸업자보다 1.9%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대졸 이상자 기준 임금수준을 보면 고졸자 97.0%, 전문대졸업자 95.2% 수준인데,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고졸자와 전문대졸자 간의 임금 격차가 전문대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보다 작음을 보여준다. 학력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명목임금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의 명목임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 큰 폭의 상승 후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다. 대졸 이상자의 경우

그동안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높았으나 2010년 이후 증감률이 더 낮았고 2014년은 전년도에 비해 0.4% 감소하였다.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휴일근로일 수 포함)는 20.5일이며 19세 이하(19.1일)에 비해 20~24세(20.7일)가 소폭 높다. 장시간근로관행 축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영향과 저성장세 지속의 영향으로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2006년 22.9일에 달하던 월평균 근로일수가 2014년 20.5일로 무려 2.4일이 감소하였다. 월평균 근로시간(초과 근로시간 포함) 역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6년에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198.0시간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173.8시간으로 8년 동안 무려 24.2시간이 감소하였다. 2014년의 경우 19세 이하 청소년 노동시간(161.5시간)이 20~24세(175.1시간)보다 13.6시간 짧았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성 청소년의 근로시간이 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9〉 연령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 도	연 령 별	전 체		남 자		여 자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2006년	전 체	22.9	198.0	22.9	200.3	23.0	192.8
	19세 이하	23.3	196.8	22.9	200.3	23.4	195.5
	20~24세	23.1	197.0	23.6	209.5	22.8	190.9
2009년	전 체	22.8	194.8	22.7	197.2	22.8	189.6
	19세 이하	21.2	182.1	21.2	186.9	21.2	179.9
	20~24세	22.6	193.9	22.7	205.9	22.6	188.5
2010년	전 체	22.5	192.8	22.5	195.7	22.5	186.9
	19세 이하	19.8	163.5	19.7	165.4	19.9	162.2
	20~24세	22.5	189.9	22.6	200.3	22.4	184.9
2011년	전 체	22.2	189.3	22.2	192.7	22.2	182.4
	19세 이하	20.7	172.6	20.3	172.6	20.9	172.6
	20~24세	22.1	187.9	22.4	200.0	22.0	181.5
2012년	전 체	21.4	182.3	21.4	185.8	21.3	175.7
	19세 이하	20.1	170.5	19.7	166.9	20.4	172.7
	20~24세	21.3	181.6	21.7	194.3	21.1	174.9
2013년	전 체	20.7	175.3	20.9	186.2	20.5	169.2
	19세 이하	19.7	165.6	19.9	174.4	19.6	159.5
	20~24세	20.8	176.3	21.1	187.6	20.6	170.1
2014년	전 체	20.5	173.8	20.7	182.8	20.4	168.5
	19세 이하	19.1	161.5	19.5	168.9	18.9	155.0
	20~24세	20.7	175.1	20.9	184.7	20.5	169.7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6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생활과 직업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014년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이다. 본 연구는 전국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4천 2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를 광범하게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살펴본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24.3%, 여자 청소년의 25.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해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3.2%에 불과한 반면, 고등학생은 28.9%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계열별로 비교해 본 결과, 일반계 고등학생은 26.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특성화 고등학생은 절반을 넘는 52.5%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특목고 및 자율고 학생들 중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은 15.4%에 불과해 학교유형 및 계열별 격차가 큰 편이다. 학업 성적별로 구분해보면 학업 성적이 높은 편이라고 답한 학생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7.0%인 데 비해, 학업 성적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32.6%로 나타나, 학업 성적이 낮은 집단에서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10〉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4,018	25.1	74.9
성 별	남 자	2,100	24.3	75.7
	여 자	1,917	25.9	74.1
학교급	중학교	974	13.2	86.8
	고등학교	3,043	28.9	71.1
고교 계열	일반계	1,973	26.1	73.9
	특성화	539	52.5	47.5
	특목/자율	531	15.4	84.6
학업 성적	낮은 편	1,259	32.6	67.4
	중간	1,654	23.3	76.7
	높은 편	1,029	17.0	83.0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를 조사한 결과 음식점 서빙(32.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단 돌리기(22.4%), 뷔페·웨딩홀 안내(18.0%), 24시간 편의점(9.3%), 패스트푸드점(7.3%), 카페(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8-1-11〉 가장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단위 : %)

구 분		음식점 서빙	전단 돌리기	뷔페, 웨딩홀 안내	24시간 편의점	패스트푸드	카페점원
전 체		32.8	22.4	18.0	9.3	7.3	2.4
교급	중학교	26.3	54.0	2.7	5.0	4.4	0.9
	고등학교	33.6	18.5	19.9	9.8	7.6	2.6
성별	남성	29.7	24.4	15.8	9.6	6.1	1.7
	여성	35.9	20.5	20.1	9.0	8.4	3.0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을 보면 하루(25.0%), 2일~1주일 미만(16.6%), 1주일 이상~1개월 미만(17.7%), 1개월 이상~3개월 미만(21.0%) 등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일주일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비율이 41.6%를 차지해 대부분 단기 경험자이다. 아르바이트 시기는 주말(공휴일 포함)이 61.4%로 가장 많았고 평일(16.8%), 평일과 주말 모두(21.7%)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 청소년들이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2.63일이며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5시간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이 25.5%에 불과하고 영세사업장에서 오토바이 배달처럼 위험한 일을 하거나 계약조건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키는 비율이 높았다.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관련 부당처우를 경험한 비율이 31.9%에 달했으나 부당처우에도 아무런 대응을 못 한 비율이 71.7%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자가 전체 학생의 1/4수준이고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지만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부당 노동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바, 정부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노동연구원 : 044-287-6405



제 2 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2015년도 우리나라의 중학교 신규졸업자는 587,834명으로 이들 중 99.8%인 586,341명이 고등학교 및 기타 학교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진학자 중 중졸 취업 인구수는 2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천5백여 명은 무직 혹은 미상자이다. 한편 진학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비율은 71.4%이며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68.8%)에 비해 여자(74.2%)의 일반계 진학률이 높았다.

〈표 8-2-1〉 2015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단위 : 명, %)

구 분	졸업자 수		진 학 자						
			총 계		일 반 고		특성화고		
	계	여	비율(%)	계	여	계	여	계	여
총 계	587,834	280,469	99.8	586,341	279,838	418,576	207,644	105,742	46,039
국 립	1,918	940	99.7	1,912	937	1,167	604	479	204
공 립	481,585	230,681	99.8	480,371	230,165	343,729	170,518	84,963	37,118
사 립	104,331	48,848	99.7	104,058	48,736	73,680	36,522	20,300	8,717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2015년도 고등학교 신규졸업자는 615,462명이며 이중 취업자는 61,370명으로 취업률은 34.3%이다. 고교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특성화고가 72.4%로 취업률이 가장 높고 이어서 특수목적고 48.7%, 일반고 10.1%, 자율고 3.1% 순이다. 일반고 고등학교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자는 상당수가 재수생으로 추정된다. 특성화고 신규졸업자들 중 진학자와 취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진학자 비율은 35.7%로 취업자 비율(72.4%)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35.7%)에 비해 여자(38.6%)의 진학률이 높다.

〈표 8-2-2〉 2015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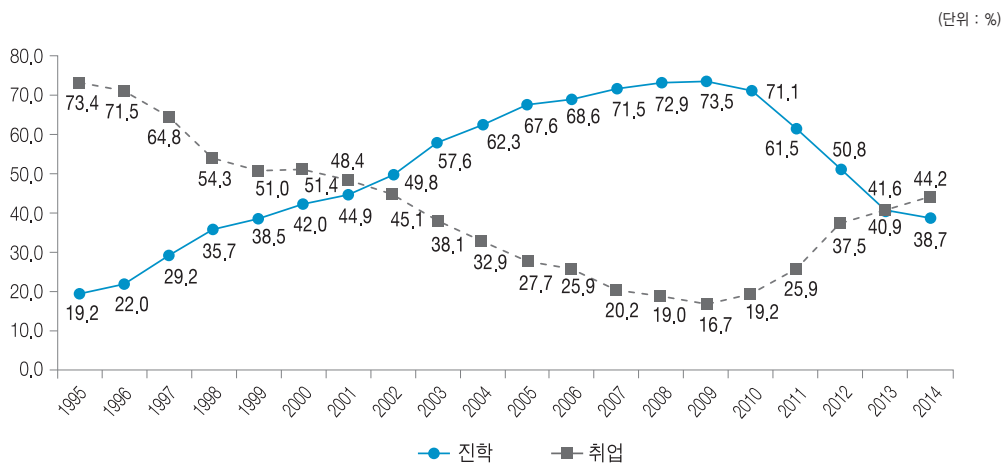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무직자/미상	입대자	특수학교 전공과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합계	615,462	292,933	435,650	218,629	70.8	74.6	61,370	34.3	116,733	972	737
일반고	442,690	218,270	349,250	178,693	78.9	81.9	9,394	10.1	82,960	550	436
특수목적고	23,937	11,911	13,984	8,423	58.4	70.7	4,823	48.7	5,027	55	48
특성화고	100,941	45,315	36,028	17,499	35.7	38.6	46,760	72.4	17,575	347	231
자율고	47,051	17,030	35,678	13,697	75.8	80.4	353	3.1	10,979	19	22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특성화고 신규졸업자들 중 진학자와 취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진학자 비율은 37.6%로 취업자 비율(72.5%)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35.3%)에 비해 여자(40.5%)의 진학률이 높고 취업률 또한 남자(68.4%)에 비해 여자(78.3%)가 높다.

[그림 8-2-1]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학자와 취업자 비율 추이



주 : 2010년까지는 전문계고 졸업자, 2011년부터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임.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교육부(2014), 대학교조개혁 추진계획.

전문계 고등학교 신규졸업자들 중 진학자와 취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졸업 후 취업이라는 완성 교육을 목표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진학자 비율이 취업자 비율보다 높아진 시기는 2002년 (진학자 비율 : 취업자 비율 = 49.8% : 45.1%)이다. 그 이전까지는 취업자 비율이 진학자 비율보다 높았으나 2002년 이후에는 졸업자 대비 진학자 비율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진학자 비율은 73.5%를 정점으로 다시 낮아지는 반면 취업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면서 그 격차가 크게 줄었고 2014년에 다시 취업자 비율(44.2%)이 진학자 비율(38.7%)을 상회하였다.

3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2015년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들의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졸업자 2,475명 중 취업자는 180명에 그쳐 진학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취업률은 8.6%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 취업률(19.5%)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이다.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에 비해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특수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8-2-3〉 2015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 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시각장애	225	71	52	22	73	21	49	15
청각장애	112	32	26	13	39	11	16	1
정신지체	1,748	570	225	72	58	19	425	137
지체장애	270	88	69	19	7	-	98	37
정서·행동장애	120	33	21	3	3	-	9	2
합 계	2,475	877	393	129	281	51	597	192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4 대학 졸업자 취업 상황

대학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7,236명 중에서 취업자는 284,116명이며, 건강보험 DB와 연계한 취업률은 58.6%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들의 경우는 183,389명 중 101,283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보험 DB와 연계한 취업률은 61.4%였다. 일반대 졸업자들의 건강보험 DB와 연계한 취업률은 51.1%로 전문대에 비해서 10.3%p 낮았다.

〈표 8-2-4〉 2014년 대학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¹⁾		전 문 대		일 반 대	
	전 체	여 자	전 체	여 자	전 체	여 자
졸업자	557,236	284,720	183,389	105,361	301,606	149,125
졸업자 중 유학생	16,886	9,101	1,111	572	9,717	5,331
진 학 자	39,763	18,388	9,801	5,748	26,043	11,093
취업자	284,116	139,790	101,283	58,774	141,993	66,217
입 대 자	4,947	-	2,777	-	1,650	-
취업불가능자	181	78	62	15	102	58
기 타	197,000	108,789	62,517	36,293	115,066	62,432
미 상	3,613	1,952	1,217	714	1,919	969
제 외 대상	10,730	6,622	4,621	3,245	5,116	3,025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	58.6	55.8	61.4	61.4	54.8	51.1

주 : 1) 전문대, 일반대 외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대학원, 사내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수치임.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유학생 + 진학자 수 + 입대자 수 + 취업불가능자 + 제외대상)) × 100.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4), 취업통계연보.

〈표 8-2-5〉 2014년 전문대 신규졸업자의 계열별 취업 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 분	계 열	인 문	사 회	교 육	공 학	자 연	의 약	예 체 능
졸업자		6,160	53,289	9,625	40,965	13,560	28,603	31,187
졸업자 중 유학생		60	519	14	332	29	17	140
진 학 자		696	3,198	313	1,612	567	974	2,441
취업자		2,575	27,878	7,514	24,330	7,260	18,782	12,944
입 대 자		73	817	11	864	209	273	530
취업불가능자		2	11	2	12	20	6	9
기 타		2,576	18,772	1,519	12,973	5,042	7,631	14,004
미 상		65	440	27	167	103	131	284
제외대상		113	1,654	225	675	330	789	835
취업률		49.4	59.2	82.9	64.9	58.5	70.8	47.5

주 : 취업률은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임.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4), 취업통계연보.

전문대 신규졸업자의 계열별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졸업자 31,187명 중 12,944명이 취업해 가장 낮은 취업률(41.5%)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교육계열 졸업자는 9,625명 중 7,514명이 취업해 취업률(77.9%)이 가장 높으며 의약계열(70.8%)과 공학계열(64.9%)의 취업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대 신규졸업자의 계열별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의약계열 졸업자는 16,992명 중 11,612명이 취업해 72.1%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공학계열(65.6%), 사회계열(54.1%), 자연계열(42.3%) 순이며 예체능계열 졸업자는 34,351명 중 12,397명이 취업해 가장 낮은 취업률(41.4%)을 보여주고 있다.

〈표 8-2-6〉 2014년 일반대 신규졸업자의 계열별 취업 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분 \ 계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졸업자	38,718	90,239	15,360	69,417	36,529	16,992	34,351
졸업자 중 유학생	1,473	5,533	130	1,083	602	58	838
진학자	3,325	3,010	804	8,534	7,181	529	2,660
취업자	14,446	43,309	6,736	38,711	14,782	11,612	12,397
입대자	173	413	87	375	136	63	403
취업불가능자	24	22	3	13	18	7	15
기타	16,943	36,113	7,039	19,910	13,242	4,451	17,368
미상	333	659	43	389	247	33	215
제외대상	2,001	1,180	518	402	321	239	455
취업률	45.5	54.1	48.7	65.6	52.3	72.1	41.4

주 : 취업률은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임.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4). 취업통계연보.



제 3 장

청소년의 직업·진로정책

1 청소년고용촉진대책

가. 청년고용촉진대책 수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기별 청년고용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종합대책, 부문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다. 2003년에는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해외취업 등 장단기 대책을 종합한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2005년에는 학교-노동시장 간 이행 원활화에 중점을 둔 “청년고용촉진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었다. 2006년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취업촉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고졸 이하 학력 청년층의 실업자가 전체 청년실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실업률도 전체 청년실업률보다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이 마련·시행한바 있다.

2007년도에는 그간의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을 2010년까지 연장키로 하고 청년학생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학교의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 취약청년층을 위한 고용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 들어서서 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취업무대를 국내노동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성장을 주도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산·학·관 협약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취업애로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 친화적 일자리지원, 직업체험 확대,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청년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청년실업 대책 차원에서 “청년고용 추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말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쓸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향후 2년간 청년친화적 일자리 7만 개 이상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2011년 5월에는 2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도약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2013년 10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 나이를 만 34세로 상향조정해 30대 미취업자들의 취업기회 제한을 해소하였다. 청년고용지원정책 일환으로 ‘청년취업 인턴제도’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2014년 4월에는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에 주력하며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기활성화, 5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추진 중이다. 동 대책은 기존의 경제적·구조적 요인 외에 단기 인구·제도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자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아울러 단기간에 청년일자리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해소,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라는 3가지 추진과제를 통해 2015~17년간 20만 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기회창출을 목표로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다.

나. 직업탐색·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올바른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CAP*, 성취 프로그램, 취업희망 프로그램, 올라 프로그램, 취업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은 고등학생, 대학생, 직업훈련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만 15~29세)을 대상으로 총 4.5일간(27시간) 진행되며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취’ 프로그램은 구직의욕과 취업 자신감이 낮은 만 18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효능감 제고 및 구직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5일(30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희망’ 프로그램도 만 18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원만한 사회진출 및 적응을 돕기 위해 대인관계 향상과 의사소통 개선에 초점을 두고 4일(23시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라(all-A)’는 청년층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신감이 극히 저하되어 원활한 직업생활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4일간(23시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자기이해를 심화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며 삶에 대한 적극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캠프’는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구직의욕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합형 과정이다.

청소년 직업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잡스쿨(Job School)’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2일짜리 프로그램으로, 진로특강과 직업과 관련된 대학 학과와 산업 분야의 직업현장 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보호관찰소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스쿨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1~6개월)’은 직업현장에서 직접 일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동 프로그램이 장시간 근로제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수시간을 개정해 1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한편, 2012년부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한국잡월드’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과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 및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다.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알맞은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심리 검사를 비롯한 직업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진로 진학상담교사, 취업지원관, 직업상담원, 커리어코치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고용센터와 워크넷을 통해 각종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의 능력과 흥미, 적성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만족할만한 직업들을 탐색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검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하였는데 청소년용 10종, 성인용 11종을 대상으로 총 21종의 검사가 있다. 검사는 온라인과 지필검사로 모두 받을 수 있고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검사는 검사 실시 후 결과표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직업심리검사 수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탐색지원을 위해 11가지 유형의 직업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심리검사는 개인별 자기탐색 및 진로방향 설정에 유용한 도움을 주고 있다.

〈표 8-3-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

검사명	대상	검사목적
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초등학생 5~6학년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수준 측정 및 자기이해 지원/직업 및 학과 분야 안내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중·고등학생	직업흥미에 적합한 학과/직업정보 제공
자기탐색형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청소년 적성검사(중학생)	중학생	학업적성 측정으로 적합 학업 분야 추천
청소년 적성검사(고교생)	고교생	적성에 적합한 직업/학업 분야 추천
직업가치관검사	15세 이상	직업가치관 이해/직업안내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중2~고3	진로 성숙도 수준 측정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중·고등학생	성격의 5요인 측정
학과(전공) 흥미검사	고등학생	흥미에 적합한 학과·전공 분야 추천
고교계열 흥미검사		학업흥미에 따른 진로지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내부자료).

〈표 8-3-2〉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수검실적

(단위 : 명)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월
수검자 수	439,009	632,573	719,023	1,118,772	1,513,199	1,539,667	692,04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내부자료).

〈표 8-3-3〉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의 직업심리검사 개요

유형	대상	직업심리검사 명칭	주요 진단 내용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	대학생 및 성인	직업가치관검사	가치요인별 개인의 특성을 진단하여 적합한 직종을 추천
		직업선호도검사(L형)	직업흥미, 성격, 생활사를 진단하고 적합한 직업을 추천
		직업선호도검사(S형)	직업흥미를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을 추천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다양한 능력요인별 개인특성 진단 및 적합직종을 추천
		영업직무 기본역량검사	영업직 직무수행관련 기초능력 진단 및 적합수준 제시
		IT직무 기본역량검사	IT 직종 직무수행관련 기초능력 진단 및 적합수준 제시
		대학생 진로준비도검사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발달수준과 취업준비 행동수준 진단
직업적응 및 성공검사	성인	구직준비도검사	취업을 원하는 절실한 정도(동기)와 구직기술 정도를 진단
		창업진단검사	창업희망자의 창업수질 정도 진단 및 유리한 창업분야 안내
		직업전환검사	구직자의 행동양식을 파악해 전직희망자에게 전환 적합 직종을 추천
		구직육구진단검사	구직자의 구직육구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구직활동에 도움

자료 : 워크넷(<http://www.work.go.kr>).

또한,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서, 초·중·고·특성화고·대학용 진로지도 프로그램(CDP), 사회과·과학과 진로탐색자료(중·고), 특성화고 취업지원로드맵, 대학교 취업지원 로드맵, 직업카드, 직업 동영상 활용매뉴얼, 사이버진로교육원 이러닝콘텐츠 등을 비롯한 진로 교육 자료와 진로지도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용으로 2003년도에 개발·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초등 2007년 개정, 중학교 2011년 개정)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0년 개발 보급되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진로지도 프로그램(CDP)은 초·중·고·특성화고·대학 등 각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 학기용 자료로서 총 5종으로 개발·보급되었으며, 교사용 매뉴얼과 학습자용 워크북, 수업진행용 슬라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화고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학교급(특성화고/대학교)에 따라 학년별로 강조해야 할 구직역량과 이를 위한 활용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교급별 취업지원 로드맵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및 교과통합형 진로지도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사회과·과학과 세부 과목들에 대해 단원별 진로지도를 위한 탐색자료집을 개발하여 보급했고, 학부모 대상 진로 특강 자료, 직업심리검사 해석을 위한 동영상과 슬라이드 등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로 보급하였다. 카드 형태의 직업진로교육 매체인 ‘직업카드’ 역시 전국 고용센터와 학교에서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도 개발되어 청소년워크넷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다. 직업 진로지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적 진로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진로교육센터(<http://cyber-edu.keis.or.kr>)’를 개원하여 이력서 작성과 면접준비에 필요한 강좌 등 온라인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 및 대학 취업관계자와 취업지원관, 담당공무원, 커리어코치, 민간 직업상담원 및 취업알선원 등의 직업진로지도 관련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직업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교육은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데 2011년에는 초·중·고 일반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 학교 취업지원관, 교장·교감·장학사 등을 위한 진로지도전문화 교육과, 대학(교) 취업 및 경력개발 담당자, 지자체 및 민간취업관련기관 담당자, CAP, 취업희망 등을 비롯한 집단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라. 직업정보의 수집 제공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직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2001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 대표직업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2003년부터 온라인 서비스(<http://www.work.go.kr>) 형태로 직업정보는 물론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전공)정보 및 온라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합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직종별 직업사전”, “진로진학 Q&A” 등 초등학교에서 성인까지의 수요자 맞춤형 직업정보자료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입체적인 매체를 통해 생생한 직업정보 확인과 직업탐색이 가능하도록 ‘내일을 Job아라’와 ‘Work & Life’를 비롯한 직업 및 취업지원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직업 동영상은 우리나라 전산업 분야에 걸친 다양한 직업들을 선정, 해당 직업의 생생한 현장모습 및 인터뷰를 담고 있고 취업지원 동영상은 면접기법, 이력서 작성 등의 구직기술을 비롯해 직장 생활 적응, 비즈니스 매너, 기업직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모든 자료는 각급 학교에 DVD로 배포되는 한편, 방송 송출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들 매체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지도기법이 소개된 직업 동영상 활용 매뉴얼도 함께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1년부터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과정보 동영상(캠퍼스 매거진)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학과정보 동영상은 해당 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취업을 위해 대학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교수님과 학과 선배인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마.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취업지원 확대

취업지원서비스는 1987년 5월 텍스트 위주의 서비스제공으로 시작했으나 1996년 9월 국내외 취업알선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이후 1998년 11월 인터넷 방식의 “워크넷(Work-Net)”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업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직접 일자리정보, 직업정보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에 맞춰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여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고용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력서작성과 구직신청, 채용정보 북마크, 알선요청, 직업상담 등의 개별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 메일링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취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워크넷에 “대기업채용정보” 항목을 신설하여 주요 대기업의 구인정보를 취합·제공하였고, “지역 고용동향” 항목의 신설을 통해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제작한 각종 지역단위 고용정보를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그밖에 “구인·구직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소개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동영상 이력서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취업자료실”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여 취업관련뉴스와 가이드, 동영상, 직업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채용정보와 인재정보를 직종별, 지역·산업단지별, 역세권별, 대기업채용정보, 단시간 근로채용 정보, 전공계열별, 청년인턴 인재정보 등 특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2011년 7월부터는 민간취업포털과 지자체 일자리정보를 워크넷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3.0 공동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Open API 제공과 지역 워크넷, 정부지원 일자리, 시간선택제, 강소기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였으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PC 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워크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워크넷을 통해 개인 구직자는 지역별, 역세권별, 직종별, 기업형태별 등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비롯하여 온라인 구직신청, 이메일 입사지원, 맞춤형정보 서비스, 구직활동 내역 조회/출력, 메일링 서비스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구인기업은 지역별, 직종별, 전공계열별 등 다양한 인재정보를 비롯하여 온라인 구인신청, 인재정보관리, 맞춤형정보 서비스, 찜하기, e-채용마당 등의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직업심리검사, 직업·학과정보검색, 직업탐방, 진로상담 등 직업·진로 서비스와 Job Map, 일자리/인재 동향, 통계간행물/연구자료 등의 고용 동향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가.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정부는 2005년 6월 20일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은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종합적·체계적인 보호대책으로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의 강화방안,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의 제고방안,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방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연소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성과점검을 통한 평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8년 6월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연소자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소년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2012년 11월)”을 마련하고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신고체계 구축,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홍보실시, 사업주들의 법 준수 의식을 확립 및 청소년들도 노동관계법을 인지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2014. 5.)”을 마련하였는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제재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콘텐츠를 제작해 취업사이트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정부는 “청소년근로환경개선종합대책”에 의거해 연중 4회 이상 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사업장의 10%는 확인감독을 실시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방학시점에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업체별 위반율을 발표함으로써 법 위반 예방 및 청소년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꾀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와 청소년 리더들의 활동을 통하여 법 위반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13개 시도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자명부 미작성, 최저임금 미고지,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었다.

최근 마련된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방안(2014년 5월)”에 의거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근로가 제한되며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서면근로계약 교부의무 위반,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 의무 위반 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기준 강화(2014년 8월부터)하였으며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2014년 12월 31일 국회 제출). 또한, 방학 기간에 실시되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감독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학 기간이 아닐 때도 PC방이나 주점 등과 같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와 택배 집하장 등 취약사업장을 감독할 방침이다.

다.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 제고

정부는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을 통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주,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 등에 대한 연소근로자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진로상담 교사에 대해 청소년 근로 및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연소자 근로조건 및 피해사례별 구제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외의 종합대책에서는 사례별 구제방법 지정, 직업 교육 연구시범학교 워크숍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전문계 고교 CEO 연수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은 관련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전문계 고교 및 평생직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인문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 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근로권의 특강’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중·고교생 대상 일터 현장체험 프로그램인 잡 스쿨(Job School) 운영 시 학생에 대한 직업의식 및 법정 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교실 운영 시 취업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교실에는 경찰서장 등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범죄예방교실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 순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랑의 교실,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1:1 집중상담이 진행되는 상담교실 등이 있다. 한편,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다수고용업종 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연소자 근로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근로권익을 보호할 수 방안을 알려주는 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권익침해 유형별 노동법·사회보험·민사법 등 법률제도 및 구제절차, 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모바일 앱,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등)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건전한 직업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통해 유관기관,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주 협회 등과 협약 체결, 온라인 사이트 운영, 지역 청소년단체와 공동 캠페인 전개, 팸플릿·포스터 제작·배포 등 중·고등학교 및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정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매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2006년에 구축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싸이월드 타운 홈페이지에 이어, 2008년 3월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고 블로그 이웃 맺기 이벤트, 오행시 컨테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령 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010년부터는 청소년 스스로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정책프로슈머가 될 수 있도록 1318알자알자 청소년리더를 선발하였고, 월별 홍보미션을 부여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노동관계법령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청소년 리더와 고용노동부 지방 고용노동관서 감독관이 연계해 지역 밀착형 홍보를 전개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알바십계명 홍보를 위한 ‘알·지·최·서·방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활용해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2013년에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중·고·대학생을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45개팀 220명)’로 선발하여 또래 집단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블로그 개설 및 운영, 교내 홍보활동, 가두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참여도와 홍보 효과를 높였다.

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

워크넷(<http://work.go.kr>)을 통해 청소년층의 진로·직업·진학·취업가이드, 직업심리검사, 청소년 직장체험, 진로와 직업 이러닝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잡영(job young)을 통해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워크넷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소근로자들이 권리구제방법을 몰라서 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1318 알바 신고센터”를 2011년 도입하였다.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알바신고센터를 대학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1318 알바신고센터에 배치된 전담교사(생활지도교사 등)가 수집된 피해사례를 지방 고용노동관서(총 47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면, 근로감독관은 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2년 12월에는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구축하고 전국 노동관서에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48명)을 지정하는 등 청소년들이 실시간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였다.

최근에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퇴 전문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반기별 180명)하고 권리구제 지원팀을 운영(44개 관서, 148명)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역별 알바신고센터(10개소)를 지정·운영해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공인노무사회화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국공인노무사 131명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무료로 권리구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취업지원센터)에 제출된 현장실습 현황자료를 활용해 지방 고용청별로 현장실습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청소년 창업지원 대책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생기업의 창업이 활발해야 하는데, 기업가정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업기업의 등장은 일자리창출 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저성장에 따른 실업해소와 신규고용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창업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가적 화두로 제기하고 있는데, 창조경제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에 접목시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코자 하는 신경제 전략이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업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우수한 청년 창업가 발굴양성'이나 '원활한 제도전 환경조성'을 추진과제로 명시하여 청년일자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발표된 창조경제 실현계획(2013. 6. 5.)에서도 창의성을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을 6대 전략 중 첫 번째로 제시하는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창업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보다 창업의식이 낮고 창업 생태계가 창업을 도전하기에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있는바 정부는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창업 문턱을 낮추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신설법인 및 벤처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창업·사업화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사관학교(2011),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2013) 등 다양한 창업관련 지원시책과 인프라를 확충한 결과이다. 청년 창업에 의한 법인 신설이 전체적으로는 증가추세이나 40세 이상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낮고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시장의 성장은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는데 이는 향후 청년층에 의한 창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간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청년 창업지원 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청년창업가에 대한 사업화 자금지원이 부족하며 창업 이후 사후관리 또한 미흡하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중등교육단계에서는 기업가정신 배양을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를,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창업 경험을 통한 창업자 양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부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정규과정은 물론 방과 후·주말·방학 프로그램과 특별활동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중등기술창업교육 패키지’를 개발하고 이를 중·고등학교에 보급·확산시키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창업마인드를 고취시켜 창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특허청 주관으로 6개 학교를 발명·특허 특성화고로 지정하여, 발명·특허 교과를 운영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직무발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3년에 ‘무한상상실’과 연계한 중·고교생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를 신설하여, 2014년에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국제대회로 확대시켰다. 중소기업청의 비즈쿨 지원사업과 새싹기업 사업, 특허청의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 교육을 통하여 중·고교에서의 창업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창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창업문화(저변확대), 창업교육(인재양성), 창업 인프라(제도기반)이다. 대학 내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의 창업선도대학 및 창업보육센터, 교육부의 창업교육센터 등 부처 연계형 거점별 창업지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창업선도대학에 사관학교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창업공간, 창업교육, 사업·기술비용은 물론 판로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첨단기술 및 고기술 창업팀을 발굴하여 투자·멘토링·정부 R&D를 일괄 지원하는 ‘글로벌 시장형 창업 R&D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대학의 학사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대학생의 창업 역량을 배양하고 창업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휴학제도 도입, 기업가정신 강화를 필수 과목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학창업동아리 학생에게 창업기업 인턴십을 추진하고 인턴과정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제품의 기획·연구개발은 물론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업사업화 지원 차원에서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와 창업맞춤형 사업화, 글로벌 창업촉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언제든 창업·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플랫폼으로 ‘창업아이디어’와 ‘사업화 아이디어’로 구분된다. 창업 아이디어는 네티즌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창업아이디어에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업화 아이디어는 제안자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플랫폼 운영기관이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방식이다. 창업맞춤형 사업화는 창업지원 기관이 주도하는 창업사업화 프로그램과 달리 맞춤형 창업사업화 사업은 창업자가 창업사업화-멘토 등을 수행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사업이다. 글로벌 창업촉진은 국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의 글로벌 현지 진출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성공적인 현지창업을 위해 외국의 창업환경·문화를 이해하는 연수과정을 국내에서 진행(2~3주)하고 창업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현지 보육·코칭 및 투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자금 및 보육관련 정책으로는 청년층의 창업실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청년 전용 창업자금’과 창업보육센터를 꼽을 수 있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순수 신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성실히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우 상환

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획기적 자금이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최대 5년 동안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연구소 등을 통해 2015년 10월 현재 274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재도전 단계에서는 재도전을 막는 제도를 개선하고 재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패 기업인이 실패경험을 축적된 자산으로 활용하여 재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제도를 제1금융권에서는 이미 폐지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제2금융권에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실패기업인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도전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운용 중이다. 실패기업이 재기에 필요한 재창업 자금을 확대하고 재기 중소기업 R&D를 위해 재창업 R&D 자금을 운용 중이다. 아울러 재창업자의 심리치료 교육을 위한 힐링 캠프식 재기교육,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조기발굴부터 신속한 퇴출, 회생, 재창업 후 안정화 단계 까지 지원하는 재기컨설팅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정부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방안(2015년 10월 14일)”을 발표하였는데 복잡한 창업 지원사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유사 목적/방식의 사업들을 통합(99개 → 72개)하고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해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 지원사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8개 범주(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마케팅·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등)로 분류하여 제공하며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싱글윈도우를 구축하여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신청·선정 등 절차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양식을 표준화하고 평가·선정위원 구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였다. 창업기업의 지속성장기반 구축차원에서 K-startup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가 있는 경우 후속 단계사업 참여시 우대하며 지역 창업생태계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법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된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1년 4.4%에서 2012년 5.1%까지 증가하였다가 2014년 4.1%로 감소하였다. 특히 재산범을 포함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였으며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 또한 14.3%에 이르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은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펼치고, 범죄예방교실과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명예경찰소년단을 활성화하였다. 검찰은 우범소년 결연사업, 학교담당검사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등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기소유예 대상자 및 대안교육명령 대상자 등에 대한 대안교육 실시, 청소년적성검사실 운영, 법교육과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기관으로는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이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비행청소년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제9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제1장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제2장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제 1 장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1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동향

지난 9년간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06년에는 3.6%이었다가 2008년 5.5%를 차지하여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이후 감소되었다. 2012년에 다시 증가하여 5.1%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소년범 구성 비율이 2009년부터 감소한 것은 2008년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도에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 대응 등이 수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9-1-1〉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인원의 구성 비율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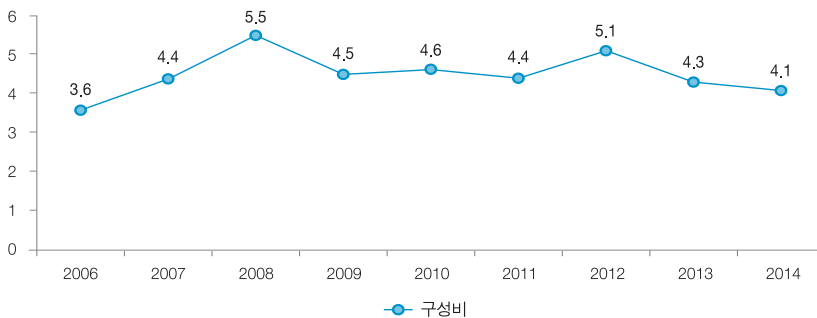
구분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범죄자		1,932,729	1,989,862	2,472,897	2,519,237	1,954,331	1,907,641	2,117,737	2,147,250	1,879,548
소년범죄자		69,211	88,104	134,992	113,022	89,776	83,068	107,490	91,633	77,594
구성비(%)		3.6	4.4	5.5	4.5	4.6	4.4	5.1	4.3	4.1

주 : 2009년 이후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범죄자는 '만 19세 미만자' 기준임(개정 전 '만 20세 미만자' 기준).

자료 : 대검찰청(2007~2015). 범죄분석.

〔그림 9-1-1〕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 구성비

(단위 : %)



자료 : 대검찰청(2007~2015). 범죄분석.

2014년 소년범죄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재산범죄가 36,271명(4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폭력범죄가 19,352명(24.9%), 교통사범이 9,216명(11.9%), 강력범죄가 3,158명(4.1%),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249명(0.3%) 순이었다.

2014년에는 전체 범죄유형 가운데 강력범죄의 범죄비율이 전년 대비 1.3%p 상승하였다. 이는 2014년에 흉악범죄의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성폭력범죄 비율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산범죄가 2010년에 40,478명(45.1%)이었던 것에 반해, 2014년에 36,271명(46.7%)으로 재산범죄의 비율이 1.6%p 증가하였고, 특히 재산범죄 중 절도범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약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계형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표 9-1-2〉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89,776	83,068	107,490	91,633	77,594
강력범죄	소 계	3,106	3,289	2,790	2,521	3,158
	흉악범죄	999	1,268	1,104	786	594
	성폭력	2,107	2,021	1,686	1,735	2,564
폭력범죄	소 계	23,276	22,233	32,774	22,119	19,352
	공갈	1,422	1,509	2,827	1,127	1,974
	폭행·상해 등	21,854	20,724	29,947	20,992	17,378
재산범죄	소 계	40,478	37,978	47,605	45,735	36,271
	절도	33,534	31,380	37,256	33,029	26,047
	횡령 등	1,483	1,528	2,448	2,549	2,143
	장물	722	454	1,200	1,498	830
	사기	4,739	4,616	6,701	8,600	7,251
교통사범		13,842	11,523	12,103	9,845	9,216
저작권법 위반		275	318	759	446	249
기타		8,799	7,727	11,459	10,967	9,348

주 : 1) 흉악범죄 : 살인, 강도, 방화.

2) 폭행·상해 등 : 폭행·상해의 죄 + 폭력 행위 등 처벌법(공갈죄 제외)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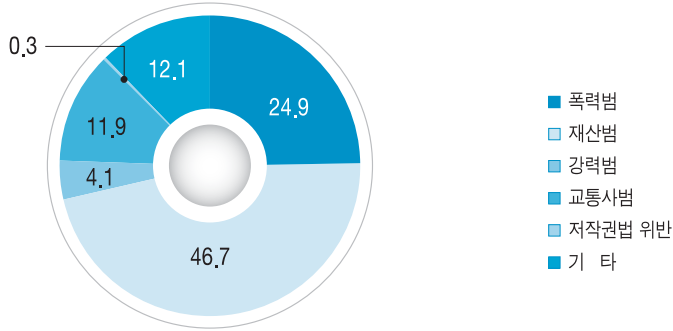
3) 횡령 등 : 횡령 + 배임 + 손괴.

4) 교통사범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자료 : 대검찰청(2011~2015). 범죄분석.

[그림 9-1-2] 범죄유형별 소년범죄 현황(2014년)

(단위 : %)



자료 : 대검찰청(2015). 범죄분석.

2014년 전체 소년범의 연령을 보면 18세 소년범이 19,347명(24.9%)에 이르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17세 22.6%, 16세 21.8%, 15세 18.1%, 14세 12.5%, 14세 미만 0.0%의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14세 이하 저연령 소년범의 비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18세 소년범의 비율도 소폭 상승하였다.

<표 9-1-3>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 연령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10년	89,776 (100)	445 (0.4)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2011년	83,068 (1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2012년	107,490 (1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2013년	91,633 (100)	471 (0.5)	11,338 (12.4)	16,645 (18.2)	20,463 (22.3)	21,208 (23.1)	21,508 (23.5)
2014년	77,594 (100)	37 (0.0)	9,712 (12.5)	14,041 (18.1)	16,940 (21.8)	17,517 (22.6)	19,347 (24.9)

자료 : 대검찰청(2011~2015). 범죄분석.

최근 5년간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4년도 전과가 없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61.8%인데 반해,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48.2%이었다. 특히, 4명 이상 소년범의 비율이 2010년 10.7%에서 2014년 1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년 범죄의 상습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표 9-1-4〉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연령	계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2010년		82,368 (100)	50,830 (61.7)	12,091 (14.7)	6,546 (8.0)	4,070 (4.9)	8,831 (10.7)
2011년		75,666 (100)	45,047 (59.5)	11,391 (15.1)	6,254 (8.3)	3,900 (5.1)	9,074 (12.0)
2012년		96,728 (100)	56,527 (58.4)	14,403 (14.9)	7,669 (7.9)	5,001 (5.2)	13,128 (13.6)
2013년		91,633 (100)	44,502 (48.6)	12,388 (13.5)	6,782 (7.4)	4,552 (5.0)	14,324 (15.6)
2014년		77,567 (100)	47,915 (61.8)	9,853 (12.7)	5,244 (6.8)	3,429 (4.4)	11,126 (14.3)

주: 전체 합계에서 미상은 제외됨(2014년의 경우 전과 없음에 미상 포함).

자료: 대검찰청(2011~2015). 범죄분석.

2014년도 소년범죄의 남녀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85.2%, 여자가 14.8%로, 남자의 비율이 5배 이상 많다. 그러나 2010년 남자 소년의 범죄율이 80.8%를 기록한 이후 2011년 82.8%, 2012년 83.1%, 2013년 83.8%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여자 소년의 범죄율은 2010년에는 19.2%를 차지한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9-1-5〉 소년범죄의 성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남 자		여 자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2010년		89,776		72,461	80.8	17,315	19.2
2011년		83,068		68,742	82.8	14,326	17.2
2012년		107,490		89,339	83.1	18,151	16.9
2013년		91,633		76,767	83.8	14,866	16.2
2014년		77,567		66,087	85.2	11,480	14.8

자료: 대검찰청(2011~2015). 범죄분석.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마약이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양귀비, 아편, 헤로인, 코데인, 모르핀, 코카인 등)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07년과 2009년에 급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06년부터 감소하다가 2009년 급증하였다가, 2010년부터 다시 감소하였지만 2014년에 대폭 증가하였다. 2014년도에는 19세 이하 적발 인원이 102명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검찰 및 유관기관의 청소년 상대 마약퇴치 홍보 및 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9-1-6〉 청소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구 분	전체 마약류 사범	청소년 마약류 사범
2006년		7,541 (100)	32 (0.4)
2007년		10,483 (100)	17 (0.2)
2008년		9,705 (100)	19 (0.2)
2009년		11,875 (100)	82 (0.7)
2010년		9,732 (100)	35 (0.4)
2011년		9,174 (100)	41 (0.5)
2012년		9,255 (100)	38 (0.4)
2013년		9,764 (100)	58 (0.6)
2014년		9,742 (100)	102 (1.1)

자료 : 대검찰청(2007~2015), 마약류범죄백서.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 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써, 메스암 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LSD(무색·무미·무취 환각제) 등을 가리킨다. 청소년 마약 범죄의 마약류별 현황을 보면 대체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2014년에는 특이하게도 대마의 비율이 52.9%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전문

의약품에 의한 경우보다는 본드 흡입에 의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 마약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퇴치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9-1-7〉 청소년 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	청소년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합계
2006년	7,709 (100)	-	24 (75.0)	8 (25.0)	32 (100)
2007년	10,649 (100)	-	13 (68.4)	6 (31.6)	19 (100)
2008년	9,898 (100)	-	16 (69.6)	7 (30.4)	7 (30.4)
2009년	11,875 (100)	2 (2.4)	55 (67.1)	25 (30.5)	82 (100)
2010년	9,732 (100)	-	16 (45.7)	19 (53.3)	35 (100)
2011년	9,174 (100)	-	34 (82.9)	7 (17.1)	41 (100)
2012년	9,255 (100)	-	26 (68.4)	12 (31.6)	38 (100)
2013년	9,764 (100)	2 (3.4)	39 (67.2)	17 (29.3)	58 (100)
2014년	9,742 (100)	0 (0.0)	48 (47.1)	54 (52.9)	102 (100)

자료 : 대검찰청(2007~2015). 마약류 범죄백서.

3 학생범죄의 동향

전체 소년범죄 대비 학생범죄 구성 비율은 2005년 65.0%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69.4%를 기록하였고, 이후 약간 감소하다가 2014년에는 70.4%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였다.

〈표 9-1-8〉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전체범죄(A)	소년 범죄		학생 범죄	
		인 원(B)	구성비(B/A)	인 원(C)	구성비(C/B)
2005년	1,965,571	67,478	3.4	43,855	65.0
2006년	1,932,729	69,211	3.6	47,213	68.2
2007년	1,989,862	88,104	4.4	59,701	67.8
2008년	2,472,897	134,992	5.5	88,701	65.7
2009년	2,519,237	113,022	4.5	78,077	69.1
2010년	1,954,331	89,776	4.6	62,173	69.3
2011년	1,907,641	83,068	4.4	57,672	69.4
2012년	2,117,737	107,490	5.1	73,684	68.5
2013년	2,147,250	91,633	4.3	60,438	66.0
2014년	1,851,907	77,567	4.1	54,627	70.4

주 : 학생범죄자는 전체 학생범죄자 가운데 2008년까지는 7세 이상 19세 이하 소년범을 대상으로, 2009년 이후부터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소년범만 그 대상으로 함.

자료 : 대검찰청(2014). 범죄분석.

2014년도 학생범죄자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15세가 2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16세(23.0%), 17세(18.2%), 14세(17.4%), 18세(14.2%), 10~13세(0.6%) 순으로 나타났다. 15세 이하 학생범죄 비율이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연령 학생범죄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9-1-9〉 학생범죄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7~9세	10~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5년	43,855 (100)	32 (0.0)	171 (0.4)	6,244 (14.2)	9,674 (22.1)	9,083 (20.7)	7,496 (17.1)	6,446 (14.6)	4,709 (10.9)
2006년	47,213 (100)	25 (0.1)	197 (0.4)	7,582 (16.0)	11,220 (23.8)	10,241 (21.7)	7,648 (16.2)	5,918 (12.5)	4,382 (9.3)
2007년	59,701 (100)	13 (0.0)	324 (0.5)	9,501 (16.0)	14,535 (24.4)	12,536 (20.9)	9,971 (16.7)	7,747 (13.0)	5,074 (8.5)
2008년	88,701 (100)	53 (0.1)	2,029 (2.3)	13,731 (15.5)	20,428 (23.0)	18,456 (20.8)	14,477 (16.3)	11,947 (13.5)	7,580 (8.6)
2009년	78,077 (100)	44 (0.1)	1,180 (1.5)	13,022 (16.7)	19,061 (24.4)	17,588 (22.5)	15,116 (19.4)	12,066 (15.4)	-
2010년	62,173 (100)	11 (0.0)	191 (0.3)	7,630 (12.3)	15,713 (25.3)	14,620 (23.5)	12,548 (20.2)	11,460 (18.4)	-
2011년	57,672 (100)	21 (0.0)	102 (0.2)	4,504 (7.8)	14,077 (24.4)	15,326 (26.6)	12,597 (21.8)	11,045 (19.2)	-
2012년	73,684 (100)	40 (0.0)	561 (0.7)	11,281 (15.3)	16,775 (22.7)	18,430 (25.0)	15,244 (20.6)	11,353 (15.4)	-
2013년	60,438 (100)	23 (0.0)	240 (0.4)	9,913 (16.4)	13,318 (22.0)	13,499 (22.3)	13,283 (22.0)	10,162 (16.8)	-
2014년	54,627 (100)	13 (0.0)	324 (0.6)	9,501 (17.4)	14,535 (26.6)	12,536 (23.0)	9,971 (18.2)	7,747 (14.2)	-

주 : 2008년 6월 「소년법」 개정으로 2009년도 통계부터 학생범죄의 대상은 7세 이상 19세 이하에서 7세 이상 18세 이하로 변경됨.

자료 : 대검찰청(2015). 범죄분석.



제 2 장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1 청소년 비행의 예방

가. 경찰의 예방활동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경찰은 2005년 초, 고교연합 폭력서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성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강력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5년부터는 피해학생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학교폭력이 음성화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학교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신학기 초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주관, 교육부·법무부 등 6개 관련 부처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고기간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학생 등 경미초범 가해학생은 처벌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선도하는 조건으로 불입건’한 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피해신고 학생은 비밀보장과 함께 담당 경찰을 서포터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인원을 보면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2014년 67.6%)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금품갈취(2014년 11.9%)가 많은 유형에 속한다. 2013년 이후 강제추행, 카메라이용 촬영 등 성폭력범죄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9-2-1〉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전체		폭행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2011년	21,957	103	14,837	28	3,902	24	444	43	2,774	8
2012년	23,877	333	14,637	97	5,912	127	509	67	2,819	42
2013년	17,385	294	11,048	47	2,603	44	1,067	193	2,667	10
2014년	13,268	-	8,974	-	1,582	-	1,295	-	1,417	-

주 : 2014년 경찰통계에서는 구속 현황이 나타나지 않음.

자료 : 경찰청(2012~2015). 경찰백서.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로 인해 경찰 단계로 들어오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2013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불구속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4년 입건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운데 8,586명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167명이 구속 입건되었다. 특히 사안에 따른 맞춤형 대응과 경미초범에 대한 즉심·훈방 등 선도조치로 인한 불입건 비중이 2013년 24.5%에서 2014년 25.1%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9-2-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입건			불입건					소년부 송치
		소계	구속	불구속	계	훈방	즉결심판	내사종결	기타	
2011년	21,957	16,331	103	16,228	4,153	-	-	-	4,153	1,473
2012년	23,877	15,948	333	15,615	5,272	1,550	86	1,982	1,654	2,657
2013년	17,385	11,310	294	11,016	4,251	981	230	1,134	1,906	1,824
2014년	13,268	8,753	167	8,586	3,324	406		2,918		1,191

자료 : 경찰청(2012~2015). 경찰백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이 발표된 이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2012년 6월 18일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117신고 센터를 개소하여 경찰·교육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9-2-3〉 학교전담경찰관 주요 활동성과

(단위 : 횟수, 명, 건)

구분	범죄예방교육		신고접수	사건처리		사후관리		교사활동지원	
	횟수	인원		선도위 참여	자치위 참여	피해학생 멘토링	가해학생 선도	학생지도	교권확립
2012년	15,175	2,026,015	4,157	528	5,258	7,849	7,111	841	239
2013년	50,651	6,647,719	5,638	1,173	13,437	15,527	15,515	1,475	224
2014년	51,845	6,63,756	7,125	941	15,716	13,163	14,167	-	-

자료 : 경찰청(2012~2015). 경찰백서.

2012년 6월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활성화되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건처리는 물론이고 가해·피해학생 사후관리까지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2014년에 전국 지역별로 1,068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1인당 10.7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2) 유해환경 정화활동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및 미디어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종 풍속업소 등 유해업소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청소년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음란·폭력성 각종 매체물과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유흥주점·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총 8,348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하고 8,34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 가운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 유해약물 단속 위반자는 6,88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시키거나 출입하게 한 자는 870명,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통해 판매·대여하거나 포장 표시한 자는 189명, 성적퇴폐나 풍기문란 등 유해 행위를 한 자는 401명에 이르렀다.

〈표 9-2-4〉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단 속 내 용				조 치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행위	구 속	불구속
2008년	8,645	1,305	220	6,677	443	9	8,638
2009년	8,567	1,544	291	6,230	502	4	8,563
2010년	8,154	1,351	442	5,882	479	10	8,144
2011년	9,575	1,690	1,039	6,337	509	6	9,569
2012년	14,067	1,414	870	11,158	625	46	14,021
2013년	13,438	1,707	1,287	9,980	464	8	13,430
2014년	8,348	870	189	6,888	401	5	8,343

자료 : 경찰청(2009~2015), 경찰백서.

(3) 사랑의 교실 운영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소년단체와 협조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소년범죄 예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총 5,661명을 대상으로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표 9-2-5〉 사랑의 교실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참가인원		5,577	5,883	7,630	6,837	17,877	9,859	8,531	6,659	5,661

자료 : 경찰청(2007~2015), 경찰백서.

(4)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스스로가 각종 범죄 및 제반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4·5·6학년과 중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을 발대할 것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3일 명예경찰소년단 전국 확대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전국학교로 선발대상을 확대하여 2014년 전국 1,520개교 17,395명의 명예경찰소년단이 활동하고 있다.

〈표 9-2-6〉 명예경찰소년단 현황

(단위 : 개교, 명)

연도	구분	실시학교(개교)	명예경찰소년단(명)
2008년		3,295	25,120
2009년		2,153	24,323
2010년		1,719	20,053
2011년		1,510	19,250
2012년		1,422	16,935
2013년		1,644	17,853
2014년		1,520	17,395

자료 : 경찰청(2009~2015), 경찰백서.

명예경찰소년단은 청소년의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이나 저학년 어린이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과 연대감 쌓기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교통캠페인, 경찰서 견학 및 112 순찰, 도보순찰 체험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명예경찰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도교사 및 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방지활동도 하고 있다. 명예경찰소년단은 2014년도에 경찰서 견학 및 체험활동을 819회(2,189개교, 20,683명), 교통캠페인 8,611회(4,375개교, 63,452명), 봉사활동 2,431회(1,304개교, 19,528명) 등을 하였다.

〈표 9-2-7〉 명예경찰소년단 활동 현황

(단위 : 회, 개교, 명)

구분	경찰서 견학 및 체험			교통캠페인			봉사활동			학교폭력 방지활동					
	신 고		취약지역 순찰	친구맺기		신 고		취약지역 순찰		친구맺기					
연도	회	개교	명	회	개교	명	회	개교	명	회	명	회	지도교사	명예경찰	대상자
2008년	485	1,889	19,972	4,514	3,849	39,609	1,396	1,836	10,014	185	493	4,769	3,197	520	585
2009년	445	1,763	17,057	3,543	2,850	37,303	867	917	9,443	102	208	3,830	2,672	476	655
2010년	542	1,823	18,431	4,192	3,152	30,758	1,169	1,328	10,736	189	273	5,034	3,179	554	541
2011년	477	1,382	16,517	4,295	3,390	28,465	1,096	1,136	10,398	51	75	4,124	2,169	454	426
2012년	586	1,527	15,925	3,370	1,953	22,817	818	829	8,356	34	40	2,676	1,966	719	844
2013년	611	1,876	19,757	4,557	2,045	39,556	1,272	890	13,616	210	271	4,198	3,084	2,052	2,150
2014년	819	2,189	20,683	8,611	4,375	63,452	2,431	1,304	19,528	103	225	10,009	58,390	6,073	5,239

자료 : 경찰청(2009~2015), 경찰백서.

나. 검찰의 예방활동

(1) 우범소년 결연사업

우범소년 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1일부터 서울·부산·광주·제주지검 및 산하 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1995년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하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범죄예방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 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의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연대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결연활동 중 소년이 소재불명이 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도 우범소년 결연사업 가운데 선도결연 회의 및 간담회는 2,221회 개최되었고, 범죄예방위원 교육은 1,271회 이루어졌다. 우범소년 중 결연 대상을 5,332명을 선정하여 실제로 7,101명이 결연을 맺었다.

〈표 9-2-8〉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실적

(단위 : 회, 명)

연 도	구 분	선도결연 회의 및 간담회	결연대상 선정인원	결연인원	지역추진 대회	범죄예방 위원교육
2008년		1,825	4,933	4,535	387	563
2009년		2,023	6,970	6,389	512	997
2010년		1,730	5,336	4,511	460	1,491
2011년		1,721	3,546	3,545	386	1,857
2012년		2,206	7,049	7,205	473	2,348
2013년		2,221	5,332	7,101	465	1,271

자료 : 대검찰청(2009~2014), 검찰연감.

(2) 학교담당검사제

학교담당검사제는 1995년 11월 27일 대통령의 학교 주변 폭력근절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찰의 3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 내의 여러 개의 중·고교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 유관기관이나 민간 봉사 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선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담당검사는 선도보호위원 및 교사선도위원, 학부모위원 등 구성원들과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원폭력 정보수집 및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탈선 초기의 학생 상대 개별 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 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6년간 학교담당검사의 활동실적을 보면 합동순찰 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범학생 대상 면담이나 선도강연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9-2-9〉 학교담당검사제 활동실적

(단위 : 회, 명)

연 도	구 분	합동순찰	간담회	우범학생 면담인원	선도강연
2008년		4,953	1,924	9,052	1,126
2009년		5,651	2,063	10,576	1,466
2010년		6,691	2,631	11,997	1,176
2011년		6,125	1,667	8,971	879
2012년		6,632	2,079	15,360	1,904
2013년		8,537	1,917	12,750	1,377

자료 : 대검찰청(2009~2014). 검찰연감.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라 함은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도입의 배경은 소년은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개선의 가능성도 많으므로 죄질이 다소 중하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에게 맡겨 선도·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초점이 있다.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시작하여 1981년 1월 20일 법무부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에 확대 실시된 뒤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는 1996년 12월 27일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373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소년선도보호 방법은 접촉선도, 원호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접촉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 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을 말한다. '원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선도보호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1981년 4,070명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4,548명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표 9-2-1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 명)

연도	구분	소년범죄	기소유예	선도조건부기소유예
2008년		134,992	34,914	5,886
2009년		113,022	56,715	7,104
2010년		89,776	42,021	2,967
2011년		89,068	36,582	1,363
2012년		107,490	43,013	5,812
2013년		91,633	34,866	4,548

자료 : 대검찰청(2009~2014), 검찰연감; 대검찰청(2009~2015), 범죄분석.

〈표 9-2-1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폭력행위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범	재산범죄	기타
2011년		1,363	364	603	7	7	196	66	120
2012년		5,812	1,680	2,277	25	36	569	275	950
2013년		4,548	1,015	2,068	12	32	424	345	652

자료 : 대검찰청(2010~2014), 검찰연감.

〈표 9-2-1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11년		1,363	176	297	353	267	185	85
2012년		5,812	790	1,296	1,388	1,247	701	390
2013년		4,548	649	928	1,122	1,081	607	161

자료 : 대검찰청(2012~2014), 검찰연감.

기존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소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이외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소년범에게 적용함으로써 선도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그 종류를 보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서 전문가를 통해 일정기간 심리검사, 정신교육, 분노 조절 훈련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범방지, 인성개발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청소년인 자원봉사 대학생이 범죄청소년과 1:1로 결연하여 상담·스포츠·문화활동·봉사활동 등의 일정한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대상 청소년을 선도하는 멘토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전문상담가로부터 전문적 상담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소년범을 기소유예 처분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이 있다.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의 일부 개정으로 검사결정전조사제도(「소년법」 제49조의2)를 도입하여 검사 처분 전에 비행원인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 비행인자를 사전에 제거하여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소년법」에 명시하였으며, 이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3).

(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동법 제15조제3호(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에 근거하여 1995년 4월 15일 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이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는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620호(2008. 6. 3.)에 따라 위탁이 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회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 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 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표 9-2-1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 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 제	취 소
2007년	262,823	5,258	12,134	4,218	66
2008년	361,907	3,421	3,967	2,614	116
2009년	467,132	3,807	3,669	2,382	129
2010년	363,106	4,411	34,038	1,915	163
2011년	353,564	4,950	6,716	2,833	313
2012년	348,146	4,976	7,423	2,912	408
2013년	330,407	4,495	7,900	2,439	269

자료 : 대검찰청(2008~2014), 검찰연감(2008~201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소년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소는 2013년도에 4,49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실시하였고, 그 중 재범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인원은 269명이다.

다. 법무부의 예방활동

(1) 개요

법무부는 2007년 7월 23일 부산, 광주, 대전, 청주, 창원, 안산 등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직원 56명을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서 담당 하던 부적응학생(일반학교에서 의뢰)과 초기 단계의 비행 청소년(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의뢰)에 대한 대안교육과 비수용 범죄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교육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교육, 일반학생 및 국민에 대한 법교육,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문제 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학계나 지역사회에서 강조한 비행예방의 중요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비행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2013년부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청소년꿈키움센터'로 공식명칭이 변경되었다.

〈표 9-2-14〉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임무

구 분	기 관 명	설 립 일	교 육 과 정
청소년꿈키움 센터	부산·창원·청주·광주	2007. 7. 23.	- 상담조사 - 결정 전 조사 -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 청소년 심리상담
	대구·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	2012. 6.	
	순천·전주·춘천	2013. 11.	
	부산동부·울산·수원	2014. 12.	
	대전	2007. 7. 23.	- 법교육 및 법문화 직무연수 -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안산	2007. 7. 23.	- 대안교육, 보호자 교육 - 청소년 심리상담 - 연구·개발 및 직무연수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표 9-2-15〉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운영 현황(2014년도)

(단위 : 명)

센터 \ 내용	대안교육	심리상담	상담조사	보호자 교육
계	23,264	9,316	3,742	4,562
부산센터	1,857	605	219	320
창원센터	1,885	444	483	581
대구센터	1,686	517	368	418
광주센터	1,251	617	191	228
순천센터	1,147	218	96	164
전주센터	1,917	389	210	226
청주센터	3,493	798	260	316
춘천센터	623	333	251	249
안산센터	3,164	2,414	-	597
서울남부센터	1,852	786	773	632
서울북부센터	2,063	1,225	412	465
인천센터	2,291	970	479	366
부산동부센터	15	-	-	-
울산센터	20	-	-	-
수원센터	-	-	-	-

주 :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솔로몬 로파크로 별도 운영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2)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 대안교육 실시

2002년부터 지역사회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중·고등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신설된 6개의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와 소년분류심사원 및 7개의 대행소년원에서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대안교육으로 진로·성격 등 심리검사, 심성훈련, 체험교육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안교육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 학생 생활지도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에게 적성검사 결과 등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학교와 협조하여 교육수료 학생에 대한 추수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은 비행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3) 기소유예 대상자 및 대안교육명령 대상자 등의 대안교육 실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은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 선도유예자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성의 조기개선과 함께 재비행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 진단기법과 교육 프로그램을 비행의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 교육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강화 및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은 비합숙 체험교육 방식으로 심리검사, 심성훈련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2008년부터 소년원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42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대안교육명령을 받은 소년에 대해 1개월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총 177,551명이 학교, 검찰, 법원 등에서 의뢰되어 대안교육을 받았다.

〈표 9-2-16〉 대안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학교	검찰	법원	기타
2008년		11,095	8,798	1,516	211	570
2009년		44,959	5,629	1,425	294	37,611
2010년		63,513	11,396	1,124	342	50,651
2011년		67,471	21,280	1,191	911	44,089
2012년		71,796	26,068	2,034	1,274	42,420
2013년		137,216	17,693	2,767	507	116,249
2014년		177,551	15,288	4,978	278	157,007

주 : 2008년 학교대안교육 인원에 법교육 인원이 포함되었으나 2009년부터 기타 인원에 포함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4) 청소년적성검사실 운영

1996년 2월부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는 4개 소년원에서 청소년적성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적성검사실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능·적성·성격 등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소질과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침을 제공,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도 비행성향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 문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심리검사실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2008년 5,481명에서 2014년 10,02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9-2-17〉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5,481	5,256	6,438	7,973	9,445	9,377	10,020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4).

(5) 법교육

법교육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5년 3단계 5개년 법교육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교육시설 및 법문화 체험관 조성, 법교육 교사 양성,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 28일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대국민 법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 ‘청소년의 법과 생활’, ‘나는야 법쟁’ 등 맞춤형법교육 학습교재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교육 출장강연제, 학생자치법정, 교사 직무연수와 법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교법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6) 보호자 특별교육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보호자특별교육을 위하여 법무부는 청소년 이해, 자녀지도방법, 자녀-부모 관계 회복 등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12회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다. 2014년 보호자 특별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을 받은 인원은 1,237명, 일반위탁소년의 보호자인 경우는 7,955명이었다.

〈표 9-2-18〉 보호자 특별교육 실적

(단위 : 명)

연 도	구 분	계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일반위탁소년 보호자
2008년		3,494	56	3,438
2009년		5,465	455	5,010
2010년		6,626	293	6,333
2011년		7,498	483	7,015
2012년		8,101	527	7,574
2013년		8,246	1,038	7,208
2014년		9,192	1,237	7,955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2 비행 청소년의 사법 처리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 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있다.

가. 경찰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 내용과 신상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소년범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란 소년범의 조사과정에서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가정·학교 환경 등 43개 비행촉발요인과 공격성·반사회성 등 344개 인성평가 항목을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여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2003년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이후, 2004년 5개 경찰서, 2005년 45개 경찰서, 2006년부터 2008년에는 52개 경찰서, 2009년에는 60개 경찰서, 2010년 70개, 2011년 100개, 2012년 120개, 2013년 137개, 2014년 180개 경찰서로 확대운영 중이다.

2007년부터는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시, 가해학생 조사에 전문가 참여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저위험군 학생은 사랑의 교실과 연계하여 경찰 단계에서 선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재범방지를 위해 법원·검찰이 운영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고 있다. 전문가 참여비율은 2008년 5.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전체 소년범의 11.4%에 해당하는 8,968명이 전문가 참여조사를 받았다.

〈표 9-2-19〉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연도별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운영 관서(개소)	60	70	100	120	137	180
전체 소년범(명)	118,058	94,862	86,621	107,018	90,694	78,794
참여 소년범(명)	5,507	7,172	7,639	10,258	11,548	8,968
참여 비율 (%)	4.7	7.6	8.8	9.6	12.7	11.4

주 : 경찰청의 전체 소년범 수치고 검찰청의 전체 소년범 수치가 다른 것은 검찰 단계에서 촉법소년의 수치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자료 : 경찰청(2010~2015), 경찰백서.

나. 검찰

2014년도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내역을 보면, 전체 소년범죄자 62,010명 중 기소유예 37.1%, 소년보호 송치 33.2%, 구공판 6.3%, 구약식 4.1% 등이다. 성인범죄와 비교했을 때 소년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매우 낮고, 기소유예 등 불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소년 범죄에 대하여 일반범죄와 달리 선도 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년부 송치는 2007년도 24.3%에서 2014년 33.2%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송치율과 불기소처분율이 높은 것은 검찰 단계에서도 소년범죄에 대하여 비행사건화하는 경향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9-2-20〉 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매매 보호 송치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07년	88,104 (100)	10,367 (11.8)	2,815 (3.2)	7,552 (8.6)	54,424 (61.8)	3,029 (3.4)	44,689 (50.7)	394 (0.4)	6,312 (7.2)	21,368 (24.3)	22 (0.0)	21 (0.0)	93 (0.1)	1,809 (2.1)
2008년	134,992 (100)	15,150 (11.2)	4,823 (3.6)	10,327 (7.6)	88,932 (65.9)	4,944 (3.7)	62,977 (46.7)	2,073 (1.5)	18,938 (14.0)	28,360 (21.0)	30 (0.0)	46 (0.0)	104 (0.1)	2,370 (1.8)
2009년	133,022 (100)	7,795 (6.9)	3,929 (3.5)	3,866 (3.4)	71,100 (62.9)	4,684 (4.1)	56,715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16 (0.0)	86 (0.1)	1,535 (1.4)
2010년	89,776 (100)	5,443 (6.1)	2,913 (3.2)	2,530 (2.8)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11 (0.0)	93 (0.1)	1,392 (1.6)
2011년	83,060 (100)	4,691 (5.6)	3,025 (3.7)	1,666 (2.0)	46,224 (55.7)	4,151 (5.0)	36,582 (44.0)	272 (0.3)	5,219 (6.3)	30,587 (36.8)	10 (0.0)	7 (0.0)	86 (0.1)	1,455 (1.8)
2012년	102,871 (100)	7,877 (7.7)	4,898 (4.8)	2,979 (2.9)	56,668 (55.1)	6,113 (5.9)	43,013 (41.8)	324 (0.3)	7,218 (7.0)	36,478 (35.5)	21 (0.0)	- (0.0)	141 (0.1)	- (0.0)
2013년	88,062 (100)	8,758 (9.9)	5,293 (6.0)	3,465 (3.9)	47,486 (53.9)	5,925 (6.7)	34,914 (39.6)	202 (0.2)	6,445 (7.3)	29,641 (33.7)	35 (0.0)	2 (0.0)	108 (0.1)	2,032 (2.3)
2014년	62,010 (100)	6,408 (10.3)	3,885 (6.3)	2,523 (4.1)	32,991 (53.2)	4,343 (7.0)	22,995 (37.1)	152 (0.2)	5,501 (8.9)	20,588 (33.2)	45 (0.1)	- (0.0)	103 (0.2)	1,875 (3.0)

자료 : 대검찰청(2008~2015). 범죄분석.

다. 소년분류심사원

(1) 개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합한가를 분류 심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1977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처음 개원하였고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설치되었다가 2007년 7월 소년보호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심사원은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등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수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소년의 수용관리와 분류심사업무를 맡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소년의 개체적 원인 규명, 소년비행의 조기발견과 치료, 소년비행의 실증적

요인 규명,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위탁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소년부에 보내 조사·심리 시에 참고하도록 하며, 소년원·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사후지도 방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위탁소년의 수용

위탁소년의 수용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한다. 새로 수용된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수용사실을 통지한다. 위탁소년은 성별, 연령, 비행의 질, 공범 및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류·수용하고, 인권보호와 보건·위생, 비행의 감염방지에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소년들이 교육적 환경에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08년 소년분류심사원의 신수용인원은 5,620명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6,711명이 되었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8년 341명에서 2009년 399명, 2010년 419명, 2011년 456명, 2012년 464명, 2013년 471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가 2014년 메르스의 여파 등으로 집단수용 자제분위기로 인해 위탁인원이 422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9-2-21〉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수용인원	5,620	6,065	6,295	6,682	6,582	6,711	5,909
1일 평균 수용인원	341	399	419	456	464	471	422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3) 처우·교육활동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차림표에 따라 급식하며 피복·침구류, 세면용품, 학용품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마다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여 위탁소년의 건강관리 및 질병을 치료하고, 시설 내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 통원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회는 위탁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탁소년의 교육은 언어·행동·예절·규범 등 기초적인 생활지도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심리극·분노조절훈련·감수성훈련 등 다양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체육활동·시청각교육·

독서지도·레크리에이션 등 심성순화 교육과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종교별 관계 인사를 초빙하여 신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 위탁소년의 신상 및 진로문제에 관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어머니회를 운영하여 무의탁소년 등 불우소년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4) 분류심사

분류심사란 비행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교정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요보호성이란 소년의 성격과 행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치할 경우 범죄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말하며, 요보호성 여부의 판별이 분류심사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분류심사는 심사대상에 따라 수용분류심사와 외래분류심사, 실시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한다. 수용분류심사는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분류심사는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분류심사는 수용된 모든 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비교적 간단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표준화검사, 자기기록 및 행동관찰 등을 주로 실시하며, 일반분류심사를 한 결과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자료조회 및 현지조사 등의 특수분류심사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담당 분류심사관과 심리학·교육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재비행 위험성 정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처우지침, 예후(豫後) 및 판정 종류 등을 기재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소년부에 송부함으로써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소년원·보호관찰소 또는 위탁소년의 보호자 등에게 지도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 수용된 소년 중 분류심사를 받은 소년은 5,543명이었는데, 이 중 일반분류심사를 받은 인원은 3,467명이고, 특수분류심사를 받은 인원은 2,076명이었다.

〈표 9-2-22〉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 현황

(단위: 명, %)

구 분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용 분류 심사	계	5,198 (100)	5,627 (100)	5,723 (100)	6,007 (100)	5,435 (100)
	일반분류심사	3,796 (73.0)	3,729 (66.3)	4,380 (76.5)	4,634 (77.1)	4,008 (73.7)	4,160 (65.4)	3,467 (62.5)
	특수분류심사	1,402 (27.0)	1,898 (33.7)	1,343 (23.5)	1,373 (22.9)	1,427 (26.3)	2,197 (34.6)	2,076 (37.5)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5) 소년심판절차 개선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송치 대상자 위주로 시행해 오던 분류심사 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상담조사제'와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대법원과 최종 협의를 거쳐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① 보호소년 상담조사제 도입

2003년 7월 새롭게 도입된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되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법원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법원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주간에만 3~5일 출석하여 상담과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대상소년의 성격과 행동 특징, 능력과 욕구 등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질과 환경적 특성에 대한 조사와 비행원인 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담당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자료로 송부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소년의 훈육과 지도지침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소년의 비행성을 없애기 위한 '특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설 수용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모든 소년사건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처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판사의 소년사건 심리 시 심층적·과학적 판단에 기여하며, 상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보호자에게 자녀의 지도방향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제도는 대상소년에게 집단상담, 봉사활동, 체험교육 등을 통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담조사제는 서울 소년분류심사원과 7개의 대행소년원(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소년원)에서 2008년 5,952명, 2009년 5,106명, 2010년 5,301명, 2011년 5,296명, 2012년 5,148명, 2013년 4,382명으로 그 대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체 보호사건 조사자의 40.0%인 4,261명을 차지하였다.

〈표 9-2-23〉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법원보호처분	합 계	위탁심사	상담조사	조사비율
2008년		30,222	11,150	5,198	5,952	36.9
2009년		35,819	10,733	5,627	5,106	30.0
2010년		32,416	11,024	5,723	5,301	34.0
2011년		35,072	11,303	6,007	5,296	32.2
2012년		36,105	10,583	5,435	5,148	29.3
2013년		31,952	10,739	6,357	4,382	33.6
2014년		24,529	9,804	5,543	4,261	40.0

주 : 상담조사 인원은 소년분류심사원과 청소년꿈키움센터 및 상담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②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는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각 소년부 판사가 분류심사결과 통지서에 의문이 있거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서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사법 참여 방안’의 일환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의 국가 후견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소년법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라. 소년법원

소년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와 가정지원을 말한다.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가정법원, 대전·대구·부산·광주에 지방법원 가정지원, 인천·수원·춘천·청주·창원·의정부·전주·제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 13개소가 있다. 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11년 4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가정법원으로 승격되면서 소년부가 설치되었고, 2012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 지방법원 가정지원도 가정법원으로 승격되어 단독 소년부가 설치되었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위·재비행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2014년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4,165건으로, 검사 송치가 70.6%(24,11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찰서장 송치가 20.8%(7,104명), 법원 송치가 4.7%(1,610명), 다른 법원 소년부에서 이송된 경우가 3.3%(1,146명)이다.

〈표 9-2-24〉 소년보호사건 접수 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법원송치	검사송치	경찰서장 송치	타법원 소년부에서 이송	보호자 등에 의한 통고
2009년	48,007 (100)	2,050 (4.3)	33,385 (69.5)	11,609 (24.2)	949 (2.0)	14 (0.0)
2010년	44,200 (100)	2,212 (5.0)	31,715 (71.8)	9,213 (20.8)	1,026 (2.3)	34 (0.1)
2011년	46,497 (100)	2,417 (5.2)	32,803 (70.6)	9,401 (20.2)	1,818 (3.9)	58 (0.1)
2012년	53,536 (100)	2,848 (5.3)	36,133 (67.5)	12,799 (23.9)	1,588 (2.9)	168 (0.3)
2013년	43,035 (100)	2,695 (6.3)	29,284 (68.0)	9,500 (22.1)	1,368 (3.2)	188 (0.4)
2014년	34,165 (100)	1,610 (4.7)	24,110 (70.6)	7,104 (20.8)	1,146 (3.3)	195 (0.6)

자료 : 법원행정처(2009~2015), 사법연감.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소년법원에서 행한 최근 5년간 보호처분의 현황을 보면, 보호처분의 비율은 2009년 74.8%에서 2014년 70.4%로 4.4%p 감소하였다. 보호처분 가운데 1, 2, 4호 병합처분의 비율이 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호자감호위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불처분결정률은 2009년 6.4%에서 2012년 4.5%까지 감소하다가 2014년에 7.4%까지 증가한 반면에, 검사송치율은 2009년 0.8%에서 2014년 1.3%로 증가하였다.

〈표 9-2-25〉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단위 : 명, %)

연도	구	계	보 호 처 분																	
			소계	1호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2호 수강 명령	3호 사회 봉사 명령	4호 단기 보호 관찰	5호 장기 보호 관찰	6호 소년 보호 시설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소년원 송치	1, 2 호	1, 2, 3 호	1, 2, 4 호	1, 2, 5 호	1, 2, 3, 4 호	1, 2, 3, 5 호	1, 3 호
2009년		47,865 (100)	35,819 (74.8)	5,883 (12.3)	71 (0.0)	268 (0.6)	23 (0.1)	2 (0.0)	128 (0.3)	100 (0.2)	22 (0.0)	919 (1.9)	992 (2.1)	3,388 (7.1)	572 (1.2)	4,891 (10.2)	1,186 (2.5)	1,905 (4.0)	1,581 (3.3)	1,148 (2.4)
2010년		45,090 (100)	32,416 (71.9)	4,527 (10.0)	37 (0.1)	116 (0.3)	34 (0.1)	13 (0.0)	73 (0.2)	81 (0.2)	11 (0.0)	861 (1.9)	806 (1.8)	4,251 (9.4)	615 (1.4)	4,473 (9.9)	1,309 (2.9)	1,777 (4.0)	1,288 (2.9)	1,399 (3.1)
2011년		48,713 (100)	35,072 (72.0)	4,021 (8.3)	18 (0.0)	53 (0.1)	77 (0.2)	28 (0.0)	9 (0.0)	150 (0.3)	15 (0.0)	883 (1.8)	1,019 (2.1)	4,123 (8.5)	874 (1.8)	4,998 (10.3)	1,393 (2.9)	2,420 (4.9)	1,990 (4.1)	1,629 (3.3)
2012년		50,771 (100)	36,150 (71.2)	4,222 (8.3)	51 (0.1)	104 (0.2)	103 (0.2)	71 (0.1)	14 (0.0)	195 (0.4)	7 (0.0)	1,206 (2.8)	1,169 (2.3)	4,518 (8.9)	1,040 (2.0)	5,180 (10.2)	1,118 (2.2)	2,266 (4.5)	1,831 (3.6)	1,405 (2.8)
2013년		45,393 (100)	31,952 (70.4)	3,822 (8.4)	107 (0.2)	125 (0.3)	91 (0.2)	41 (0.1)	13 (0.0)	149 (0.3)	3 (0.0)	1,153 (2.5)	1,252 (2.8)	3,522 (7.6)	646 (1.4)	4,020 (8.9)	1,496 (3.3)	1,557 (3.4)	1,901 (4.2)	1,297 (2.9)
2014년		34,600 (100)	24,529 (70.9)	2,960 (8.5)	70 (0.2)	92 (0.3)	63 (0.2)	32 (0.1)	9 (0.0)	183 (0.5)	-	812 (2.3)	813 (2.3)	2,420 (7.0)	445 (1.3)	3,163 (9.1)	1,026 (3.0)	1,160 (3.4)	1,541 (4.5)	982 (2.8)

연도	구	보 호 처 분								불처분	심 리 불개시	타법원 이송	검 사 송 처
		1, 3, 4호	1, 3, 5호	1, 4호	1, 5호	4, 6호	5, 6호	5, 8호	기타				
2009년		2,183 (4.6)	1,731 (3.6)	4,780 (10.0)	1,256 (2.6)	192 (0.4)	739 (1.5)	1,708 (3.6)	151 (0.3)	3,041 (6.4)	7,377 (15.4)	1,234 (2.6)	394 (0.8)
2010년		2,182 (4.9)	1,482 (3.3)	3,593 (8.0)	880 (1.9)	104 (0.2)	747 (1.6)	1,689 (3.7)	68 (0.1)	3,105 (6.9)	7,338 (16.3)	1,840 (4.0)	391 (0.9)
2011년		2,418 (5.0)	1,352 (2.8)	3,689 (7.6)	808 (1.7)	146 (0.3)	922 (1.9)	1,915 (3.9)	122 (0.2)	2,579 (5.3)	7,905 (16.2)	2,536 (5.2)	621 (1.3)
2012년		2,087 (4.1)	1,560 (3.1)	3,054 (6.0)	637 (1.3)	56 (0.1)	1,164 (2.3)	2,607 (5.1)	485 (1.0)	2,278 (4.5)	9,209 (18.1)	2,441 (4.8)	693 (1.4)
2013년		1,868 (4.1)	1,843 (4.1)	2,746 (6.0)	900 (2.0)	22 (0.0)	1,150 (2.5)	1,879 (4.1)	349 (0.8)	2,663 (5.9)	8,065 (17.8)	2,179 (4.8)	534 (1.2)
2014년		1,844 (5.3)	1,535 (4.5)	2,354 (6.8)	742 (2.1)	39 (0.1)	834 (2.4)	1,257 (3.6)	153 (0.4)	2,543 (7.4)	5,669 (16.4)	1,403 (4.0)	456 (1.3)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0 ~ 2015.

마. 형사법원

소년법원이 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거나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이송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9세 미만자의 제1심 소년형사사건의 재판현황을 보면 2011년까지는 집행유예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부정기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정기형도 매우 낮은 비율로 선고되고 있다.

2014년에 중국 처리된 소년범 3,574명 중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었고, 부정기형이 634명(17.7%)으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가 405명(11.3%), 벌금형이 110명(3.1%), 정기형이 14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형과 집행유예의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소년부 송치와 부정기형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표 9-2-26〉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사형	무기	정기형	부정기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 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기타
2009년	6,160 (100)	-	-	462 (7.5)	587 (9.5)	1,828 (29.7)	681 (11.1)	93 (1.5)	20 (0.3)	1,971 (32.0)	518 (8.4)
2010년	5,294 (100)	-	-	472 (8.9)	503 (9.5)	1,577 (29.8)	590 (11.1)	85 (1.6)	25 (0.5)	1,584 (29.9)	458 (8.7)
2011년	3,499 (100)	-	-	14 (0.4)	492 (14.1)	610 (17.4)	133 (3.8)	24 (0.7)	10 (0.3)	1,958 (56.0)	258 (7.3)
2012년	4,377 (100)	-	-	7 (0.2)	804 (18.4)	557 (12.7)	118 (2.7)	28 (0.6)	20 (0.5)	2,561 (57.4)	327 (7.5)
2013년	4,268 (100)	-	-	3 (0.1)	676 (15.8)	407 (9.5)	15 (0.4)	3 (0.1)	12 (0.3)	2,689 (63.0)	321 (7.5)
2014년	3,574	-	-	14 (0.4)	634 (17.7)	405 (11.3)	110 (3.1)	15 (0.4)	7 (0.2)	2,082 (58.3)	307 (8.6)

주 : 본 통계는 2010년까지는 20세 미만자, 2012년부터는 19세 미만자가 기준임.

자료 : 법원행정처(2010~2015), 사법연감.

3 비행 청소년의 교정교육

가. 소년원

(1) 임무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하여 소년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 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1958년 공포된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과정의 일반교육과정과 전체 교육시간의 70~80%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영하는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영농, 축산, 원예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 '법무부 제1공공 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의 9개 소년원이 '법무부 제2~10공공 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부산·광주·안양 소년원에서 자동화용접, 카일렉트로닉스, 중장비,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사무자동화, 영상미디어 등 1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도의교육, 종교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인성교육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국토순례, 야영훈련, 문화예술교육, 공연관람, 사회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한 집단지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소년원 학생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대구·춘천소년원을 인성교육 전담소년원으로 개편하고, 2007년 이를 제주소년원으로 확대하여 현재 3개 소년원에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담소년원 이외 소년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정규과정

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9년 교육현장의 자료와 전문가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교재를 발간한 이래 2007년까지 총 30여 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6년 (구)대전소년원을 '약물남용원생 전담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약물남용,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로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덕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 「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까지 수용하여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는 대덕소년원을 '대산학교'로 개교하고 8호 처분자의 경우 개방형 단기집중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대덕소년원을 대전소년원으로 직제상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9년 7월 1일부터는 청주소년원의 직제를 개정하여 여자소년원으로 개정하고, 안양소년원에서 여자소년원생 중 8호, 9호 처분 대상자를 청주로 인수하였다.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안양·청주·춘천·제주 등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년원에서는 과거의 수용 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2) 보호소년의 수용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이다.

소년법 개정 이전의 처우과정은 단기과정(6호), 일반과정(7호)으로 구분되었다. 단기과정은 6개월 이하를 수용하고, 일반과정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A과정,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의 B과정, 15개월 이상 19개월 미만의 C과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 이후의 소년원 처우과정은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 과정(8호), 단기과정(9호), 장기과정(10호)으로 구분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 처분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7호 처분의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덕소년원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호 처분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고, 9호 처분의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4년 1개월 이하 8호 처분에 수용된 소년은 930명(36.7%)이었고, 6개월 이하 9호 처분(단기소년원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은 842명(33.2%)이었으며, 2년 이하 10호 처분(장기소년원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은 666명(26.3%)이었다. 2014년 보호소년의 평균 수용기간은 7.30개월로, 2009년 당시

4.93개월보다 2.37개월 늘어났다.

〈표 9-2-27〉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단위 : 명, %)

연도 \ 기간	계	7호 (의료)	8호 (1개월)	9호 (단기)	10호 (장기)	평균수용기간 (개월)
2009년	2,672 (100)	52 (2.0)	1,218 (45.6)	684 (25.6)	718 (26.8)	4.93
2010년	2,755 (100)	56 (2.0)	1,339 (48.6)	771 (28.0)	589 (21.4)	5.1
2011년	2,559 (100)	69 (2.7)	1,329 (51.9)	644 (25.2)	517 (20.2)	5.1
2012년	3,211 (100)	103 (3.2)	1,660 (51.7)	792 (24.7)	656 (20.4)	4.6
2013년	2,867 (100)	105 (3.7)	1,317 (45.9)	938 (32.7)	507 (17.7)	5.17
2014년	2,531 (100)	93 (3.7)	930 (36.7)	842 (33.2)	666 (26.3)	7.30

주 :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 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13년 7월 '보호소년 처우지침' 개정에 따라 비행유형별, 재비행 횟수에 따른 (임시) 퇴원 신청 점수 조정으로 평균 수용기간이 늘어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보호소년은 교육과정을 마치면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퇴원은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결정하고, 6개월~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에 수용된 신수용 보호소년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4년 소년원 신수용인원은 전년도 3,037명보다 다소 감소한 2,363명이었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고 2014년에는 1,236명이었다.

〈표 9-2-28〉 보호소년 수용 현황

(단위 : 명)

연 도	출원사유	신수용인원	1일 평균 수용인원
2009년		2,775	1,191
2010년		2,822	1,162
2011년		2,960	1,264
2012년		3,429	1,390
2013년		3,037	1,381
2014년		2,363	1,236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3) 소년원 교육

소년원 교육혁신의 결과, 지난 1999년 9월 이후 일반학교 학생이 참가한 ‘전국 중·고등부 영어 말하기 대회’ 및 ‘컴퓨터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소년원학생이 각종 수상을 하였으며, 컴퓨터 및 각종 기능 자격을 취득하였다. 2014년도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1,590명이었고, 일반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947명이었다.

〈표 9-2-29〉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685	2,644	2,980	3,125	2,687	3,301
외국어	74	45	41	48	-	-
컴퓨터	1,389	1,387	1,642	1,581	1,292	1,590
일반기능	584	634	670	900	774	947
기타	638	578	627	596	621	764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보호소년들이 임시퇴원 후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더 이상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민·관 합동의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최근 2014년 327명이 취업함으로써 안정된 사회정착을 하였다.

〈표 9-2-30〉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취업인원	335	328	261	313	273	327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한편 2014학년도에 고등학교 71명, 대학교 63명 등 총 134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표 9-2-31〉 소년원 학생 진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66	108	111	137	115	134
대학교	52	38	22	45	45	71
고등학교	114	70	89	92	70	63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소년원 학교는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의 명칭 및 교육과정은 <표 9-2-32>와 같다.

<표 9-2-32>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구분	기 관 (학교명)	대 상	교 육 과 정
수 도 권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사진영상·한식조리·매직엔터테인먼트) ·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피부미용·제과제빵·텔레마케팅) · 보호자교육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 위탁소년 인성교육 · 보호자교육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조사,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조사,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조사,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조사,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중 부 권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7호, 8호 9호, 10호 위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재활교육, 8호 처분자 교육(男) ·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 위탁소년 인성교육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8호, 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호 처분자 교육(女) ·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 · 보호자교육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일반청소년	· 법교육
호 남 권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측량) · 보호자교육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10호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동차정비·용접·건설기계조종사면허·건축환경설비) ·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구분	기관(학교명)	대상	교육과정
영양권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10호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동차정비·자동차회용접·제과제빵·헤어디자인)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강원권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부가처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제주권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호, 9호, 10호 위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골프매니지먼트) 8호 처분자(제주지역 男) 교육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4)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가정관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관은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하여 가족합숙제, 1일 생활제, 가정관 면회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의탁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자립생활관은 경기(의왕, 안양),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등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민간단체인 (재)한국 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한다. 무의탁 소년원 퇴원생이나 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 학업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하도록 하고 있고, 22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 중인 학생이 교과 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표 9-2-33〉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

(단위 : 명, %)

출원사유 연도	계	퇴원	임시퇴원	처분변경	이송	기타
2009년	4,020 (100)	1,722 (42.8)	950 (23.6)	20 (0.5)	1,289 (32.1)	39 (1.0)
2010년	3,941 (100)	1,821 (46.2)	934 (23.7)	26 (0.6)	1,121 (28.5)	39 (1.0)
2011년	4,137 (100)	1,790 (43.2)	926 (22.4)	16 (0.4)	1,376 (33.3)	29 (0.7)
2012년	4,707 (100)	2,151 (45.7)	1,195 (25.4)	26 (0.6)	1,307 (27.8)	28 (0.6)
2013년	4,308 (100)	1,919 (44.5)	1,086 (25.2)	39 (0.9)	1,222 (28.4)	42 (1.0)
2014년	3,769 (100)	1,442 (38.3)	1,089 (28.9)	34 (0.9)	1,161 (30.8)	43 (1.1)

주 : 기타는 처분취소, 유지판결, 항고 등 인원임.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원장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심사를 신청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보호소년의 인격, 교정성적,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부를 심사·결정한 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시퇴원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임시퇴원생이 임시퇴원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재수용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도 소년원 출원 사유별 인원현황을 보면, 퇴원이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송이 30.8%, 임시퇴원이 28.9% 순이다.

나. 소년교도소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처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장소에 수용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3조). 다만,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소년교도소는 2004년까지는 천안교도소와 김천교도소에서 나누어서 수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법무부예규에 의해 천안교도소는 20세 미만 남자소년수형자를 전담 수용하였다. 그러나 교정본부 직제 개편으로 2009년 12월 31일부터 소년범죄자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다.

(1) 수용현황

최근 10년간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2005년 773명에 2014년 11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 수용인원이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소년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소년수형자 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되면서 인원도 감소한 것이 그 원인이다.

〈표 9-2-34〉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용인원	773	648	657	156	169	146	114	170	152	114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2015).

최근 5년간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절도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강간 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도 소년수형자 중 절도범이 32명(28.1%), 강간범 등이 29명(25.4%), 강도범 등이 11명(9.6%), 살인범이 5명(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35〉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

죄 명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46 (100)	114 (100)	170 (100)	152 (100)	114 (100)
절 도	45 (30.8)	26 (22.8)	42 (24.7)	43 (28.3)	32 (28.1)
사기·횡령	3 (2.1)	0 (0.0)	2 (1.2)	1 (0.7)	1 (0.9)
폭력·상해	1 (0.7)	5 (4.4)	17 (10.0)	17 (11.2)	10 (8.8)
강간 등	32 (21.9)	33 (28.9)	54 (31.7)	46 (30.2)	29 (25.4)
강도 등	33 (22.6)	18 (15.8)	24 (14.1)	16 (10.5)	11 (9.6)
살 인	11 (7.5)	10 (8.8)	11 (6.5)	7 (4.6)	5 (4.4)
과실범	3 (2.1)	1 (0.9)	2 (1.2)	-	2 (1.8)
기 타	18 (12.3)	21 (18.4)	18 (10.6)	22 (14.5)	24 (21.0)

주 : 폭력에는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2015).

소년수형자의 형명을 보면 유기징역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고형은 거의 없었다. 최근 6년간 소년수형자의 형기를 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년 이상의 징역형, 5년 이상의 징역형, 1년 미만 징역형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장기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단기징역형의 비율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었으나, 2012년 이후 장기징역형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표 9-2-36〉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단위 : 명, (%))

형명·형기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46 (100)	114 (100)	170 (100)	152 (100)	114 (100)
징역형	무기	-	-	-	-	-
	20년 이상	-	1 (0.9)	2 (1.8)	4 (2.6)	2 (1.8)
	10년 이상	5 (3.4)	4 (3.5)	5 (2.9)	4 (2.6)	1 (0.9)
	5년 이상	15 (10.3)	12 (10.5)	13 (7.6)	10 (6.6)	11 (9.6)
	3년 이상	45 (30.8)	38 (33.3)	44 (25.9)	39 (25.7)	35 (30.7)
	1년 이상	58 (39.7)	48 (42.1)	94 (55.3)	87 (57.2)	61 (53.5)
	1년 미만	23 (15.8)	11 (9.6)	12 (7.1)	8 (5.3)	4 (3.5)

주 : 폭력에는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2015).

2014년도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의 비율이 5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30.7%,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9.6%, 1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3.5%, 20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1.8%, 10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0.9% 순으로 나타났다.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2) 교정교육

교정교육은 범죄적 심성을 순화시킴으로써 재범에 이르지 않고 사회에 유용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교화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4년도 소년교도소에서의 학과교육 인원은 55명인데, 이 중 일반학과 교육을 받은 자는 25명,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자는 30명이다.

〈표 9-2-37〉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육인원(계)	75	75	55	74	55
일반학과교육	35	35	25	37	25
방송통신고 (졸업인원)	40 (13)	40 (13)	30 (5)	37 (10)	30 (6)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2015).

(3) 출소

소년수형자는 해당 형기가 종료하면 출소하게 되지만, 형기가 종료하기 전에도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1/3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65조). 소년수형자 중 가석방된 자의 비율은 2010년에 18.4%, 2011년 14.5%, 2012년 19.8%, 2013년 20.2%, 2014년 26.6%로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9-2-38〉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단위 : 명, (%))

석방사유 \ 연도	계	가석방	집행종료결정	만기석방	기타
2010년	114 (100)	21 (18.4)	-	66 (57.9)	27 (23.7)
2011년	69 (100)	10 (14.5)	-	45 (65.2)	14 (20.3)
2012년	86 (100)	17 (19.8)	-	40 (46.5)	29 (33.7)
2013년	119 (100)	24 (20.2)	-	48 (40.3)	47 (39.5)
2014년	124 (100)	33 (26.6)	-	69 (55.7)	22 (17.7)

주 : 1) 집행종료 결정은 단기만으로 후 장기도래전의 석방, 만기석방은 장기만으로 인한 석방을 의미함.

2) '기타'는 특별사면, 형집행정지, 사망, 노역종료 등을 포함함.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2015).

다. 보호관찰소

(1) 개요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조사, 전자발찌, 성 충동 약물치료 등에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원호를 받게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게 하거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법에 대하여 최초로 시행된 보호관찰은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성폭력사범(1994년), 성인형사범(1997년), 가정폭력사범(1998년), 성매매사범(2004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2008년)로까지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2011년 전체 보호관찰 접수인원 121,188명 중 소년대상자는 46,336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의 53.2%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전체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청소년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청소년대상자의 높은 변화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우수자원과 연계하여 재범 방지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방지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조직

보호관찰행정 중앙조직으로는 인사 및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보호관찰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보호법제과, 보호관찰행정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보호관찰과가 있고,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고등검찰청 소재지(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지방검찰청 및 주요지청 소재지에 18개 보호관찰소와 38개 보호관찰지소, 서울지역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대전지역에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3) 보호관찰 실시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소년법」의 개정

으로 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보호관찰 부과연령이 10세로 하향되었다.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신규 접수인원은 2010년 45,990명, 2011년 46,336명, 2012년 47,621명, 2013년 45,040명, 2014년 34,362명으로,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표 9-2-39〉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연 도	구 분	전체보호관찰 인원	소년보호관찰 인원	소년보호관찰 비율
2010년		86,435	45,990	53.2
2011년		121,188	46,336	38.2
2012년		108,495	47,621	43.9
2013년		105,753	45,040	42.6
2014년		121,517	34,362	28.3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5).

2014년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운데 소년보호처분이 26,408명(76.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소유예처분 5,800명(16.9%), 임시퇴원 1,357명(3.9%), 집행유예 679명(2.0%) 순이다.

〈표 9-2-40〉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접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선고 유예	집행 유예	소년 보호	가석방	임시 퇴원	가정 보호	성매매 보호	기소 유예	성구매자 교육	벌금 대체	이수 명령
2010년	45,990	1	1,723	38,681	53	1,177	3	15	4,255	8	78	2
2011년	46,336	0	905	40,164	34	1,089	2	7	4,087	9	35	4
2012년	47,621	1	1,203	38,131	51	2,009	6	1	6,172	9	34	4
2013년	45,040	1	927	36,598	45	2,091	7	-	5,301	10	50	10
2014년	34,362	-	679	26,408	23	1,357	13	3	5,800	2	75	2

주 : 접수는 신수와 이입을 합산, 보호관찰은 광의의 의미임.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5).

보호관찰 기간 중 청소년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법정준수사항(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및 외출제한명령 등 법원 및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지키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청소년대상자와의 초기면담,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일반, 주요, 집중 대상자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등급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통제를 위해 출석지도 위주의 보호관찰 방식을 탈피하여 주거지 방문, 생활근거지에서의 면접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역동적 보호관찰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 대상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년 전담 직원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특화된 처우와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등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등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형의 집행 등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인하고 유치한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가해제 또는 부정기형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의지를 북돋우고 보호관찰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전국 56개 보호관찰(지)소에서 각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상자 특성별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 상담교육,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자 특별교육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표 9-2-41〉 청소년 대상자 보호관찰성적에 따른 조치 현황

(단위 : 명)

성 적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성 적 양호자	계		105	626	862	836	746
	임시해제		105	626	861	836	746
	부정기형 종료		-	-	1	-	-
성 적 불량자	계		25,873	27,890	32,853	32,216	27,310
	경 고		19,037	21,305	26,671	25,880	21,766
	구 인		2,153	2,007	1,759	1,917	1,543
	유 치		2,095	1,936	1,670	1,815	1,456
	취소·변경 등 ¹⁾		2,444	2,449	2,538	2,431	2,399
	기 타 ²⁾		144	193	215	173	146

주 : 1) 취소·변경은 집행유예취소, 보호처분변경, 가석방·임시퇴원취소, 선도위탁취소, 가정보호취소임.

2) 기타는 기간연장, 보호관찰 정지, 사회봉사허가 취소를 포함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5).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 청소년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주로 처벌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노인, 장애인 등 생활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봉사체험을 통해 범죄에 속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연령은 14세로 낮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다(「소년법」 제33조제4항).

2014년도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7,742명이고,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1,816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5,926명이다.

〈표 9-2-42〉 청소년 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 력 집 행					
			소 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0년	7,394	1,324	6,070	2	5,812	157	80	19
2011년	8,346	1,481	6,865	51	6,490	168	89	67
2012년	8,175	1,510	6,665	10	6,259	192	130	74
2013년	8,857	1,941	6,916	1	6,293	220	314	88
2014년	7,742	1,816	5,926	2	5,291	152	386	95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5).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수강명령을 통해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의 범죄 내용에 따라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방지교육 등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수강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강명령 부과 연령은 12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소년법」 제33조제4항). 2014년 청소년 수강명령 집행인원은 5,526명으로 전년 대비 상당수 줄어들었다.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5,340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186명이다.

〈표 9-2-43〉 청소년 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 력 집 행						
			소 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10년	9,779	9,212	567	-	-	78	2	43	444
2011년	10,135	9,518	617	-	11	277	-	74	255
2012년	10,612	10,026	586	4	8	152	-	63	359
2013년	7,864	7,374	490	2	9	240	-	48	191
2014년	5,526	5,340	186	-	2	103	2	23	56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5).

(5) 판결(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판결(결정)전조사는 법원이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명하기 위하여 판결(결정)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의 제반사항에 관해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처분의 적합성 판별과 법원의 적정판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대해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검사결정전조사제도’가 신설되었다(「소년법」 제49조의2).

환경조사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용자, 보호감호소의 감호처분자에 대한 범죄의 동기 및 현재의 환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교정 교육자료와 가석방·임시퇴원·가출소 등의 심사자료, 그리고 보호관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은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이며, 면접, 사실조회, 자료분석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환경조사 결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소장은 본인, 가족, 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수용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

판결(결정)전조사는 2010년 10,856건에서 2012년 15,104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 14,532건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에, 환경조사는 2010년 1,454건에서 2014년 1,395건으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표 9-2-44〉 청소년 대상자 판결(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실적

(단위 : 건)

연 도	구 분	판결(결정)전조사	환경조사(소년원 의뢰)
2010년		10,856	1,454
2011년		12,422	1,380
2012년		15,104	1,500
2013년		13,841	1,555
2014년		14,532	1,395

주 : 판결(결정)전조사는 판결전조사와 결정전조사를 합산한 것임.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5).

청소년시설은 크게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보호·복지시설로 구분된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되며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되고, 청소년이용시설은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그리고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써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은 청소년보호·재활센터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이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단체 관련기관 종사자가 있다. 이 중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 모두 합쳐 199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38,021명이 양성되었고 청소년상담사는 1, 2, 3급 모두 합쳐 2015년까지 총 11,453명이 배출되었다.

대표적인 청소년 단체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문제 공동연구 및 청소년단체, 세계청소년기구와의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간 연계 협력을 위한 협의와 조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 위기청소년 보호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활동을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을 두고 있다.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등 6개 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있으며, 청소년정책 관련 국가 전문연구기관으로는 1989년에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연구와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인력의 확보를 위해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대학원에 청소년관련 학과나 전공을 둔 학교는 2015년 현재 약 59개교에 달한다. 또한, 청소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창출하며 학술지를 발행하는 대표적인 학회는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이 있다.

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제1장 청소년 시설

제2장 청소년지도자

제3장 청소년 단체

제4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제5장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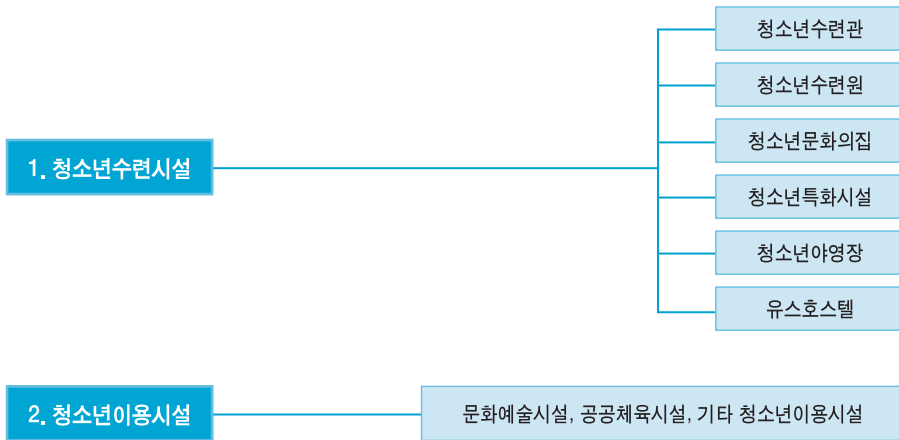
제 1 장

청소년 시설

1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민간분야도 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 10-1-1]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자료 : 여성가족부(2015).

가. 청소년수련시설

(1) 수련시설 현황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 개에 불과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2월 기준 787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87	187	233	188	42	128	9
공 공	513	184	227	54	21	18	9
민 간	274	3	6	134	21	110	0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87	187	233	188	42	128	9
서울	62	33	16	3	0	4	6
부산	26	8	11	4	2	1	0
대구	15	5	6	2	0	1	1
인천	26	8	4	5	5	4	0
광주	12	5	6	1	0	0	0
대전	12	3	6	2	0	1	0
울산	9	1	7	1	0	0	0
세종	1	0	1	0	0	0	0
경기	154	31	49	46	7	21	0
강원	83	16	28	16	5	17	1
충북	46	8	10	19	1	8	0
충남	49	11	9	14	2	13	0
전북	56	11	18	15	3	8	1
전남	51	11	15	11	7	7	0
경북	68	16	13	16	5	18	0
경남	70	17	14	28	3	8	0
제주	47	3	20	5	2	17	0

주 : 국립청소년시설(5개)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전라남도 고흥군),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전라북도 김제시).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 수련시설의 설치

① 중앙정부의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시설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및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를 건립·운영 중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수련시설 간의 네트워크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내(동곡)에 부지 474,386㎡, 연면적 35,144㎡ 내외 규모로 약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6월에 준공되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청소년수련활동의 시범적 운영 및 총괄·지원을 위한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 부지 483,818㎡, 연면적 18,539㎡ 규모에 약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었다.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는 우주 분야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청소년 우주 체험 활동의 장을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우주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에 부지 282,617㎡ 연면적 14,075㎡ 규모의 우주체험관, 우주생활관 등을 약 4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7월에 준공하였다.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는 농업생명체험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생명 과학·농업기술·생태환경의 특화된 체험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에 부지 37,932㎡, 연면적 10,871㎡ 규모의 농·생명 실험시설 등을 약 22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7월에 준공하였다.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는 해양환경체험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해양 자원 개발 및 기술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 부지 49,730㎡, 연면적 13,506㎡ 규모의 해양환경체험시설 등을 약 372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13년 7월에 준공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많은 생활권 시설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1990년부터 지방양여금이 청소년시설 건립에 사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2015년도부터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명칭 변경)에 의한 지원으로 건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생활권수련시설로,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신규건립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부지 선정 시 청소년의 접근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24개소 신규건립, 52개소 기능보강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3개소 신규건립, 105개소 기능보강을 지원 중이다.

③ 수련시설 설립 사전검토와 주택건설 시 설치 계획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국립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입지조건이나 내부구조,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비율을 각각 5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생활공간 주변에서 손쉽게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단지 안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3,000호를 초과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3) 수련시설 운영지원

정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수련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구조부의 균열, 내구성 저하 등의 위험사항, 석축, 옹벽, 담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전기, 기계, 소방 및 냉·난방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기타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및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으며,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였다.

특히, 2014년 7월부터는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에 따라 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가 의무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 제19조의2)되어, 한국 시설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한 분야별 종합 안전점검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통하여 시설운영 전반사항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시설 종류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 집, 특화시설) 39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공개하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시설 붕괴 우려 등 안전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운영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리·감독 주체의 안전관리 강화와 수련시설 운영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었다.

나. 청소년이용시설

(1) 청소년이용시설 개념과 유형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이지만,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이용시설로는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② 「과학관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④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⑥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⑧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서 수련 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시설 중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이용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① 문화시설

문화예술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국가가 건립한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이 있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 시설(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으로 분류된다.

② 과학관

과학관 중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상설전시관에는 4개 분야 약 4,100여 점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밖에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③ 체육시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 등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로는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대, 시·군 기본체육시설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02-2100-6265



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가.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시설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2003년 9월부터 운영된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가 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와 폭력을 받는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 성범죄 피해 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 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활동하는 NGO와 경찰, 행정당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였으며, 2004년에는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인센터(Drop-incenter)를 개설하였다. 2005년부터는 서울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1년 「청소년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매체 및 환경에 대한 보호와 인터넷 게임 중독 등에 대한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에 대해 상시적, 효과적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중독 상설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2014년 8월,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1주부터 5주 과정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집단상담, 가족상담 및 수련, 대안활동 등 참가 청소년들의 관계 능력 증진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보호시설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규정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이 있다. 그리고 상담 시설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있다.

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구분하고 있다.

(1)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9~24세의 청소년들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쉼터유형에 따라 일시 7일 이내, 단기 3개월(최장 9개월) 이내, 중장기 3년(1년 단위 연장)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1992년 시범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서울YMCA 청소년쉼터가 개소한 이래 1996년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전국에 총 119개소의 쉼터를 운영 중이다.

2005년에는 가출 및 위기 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보호시설 체계화를 위해 청소년 쉼터를 일시쉼터(드롭인센터), 단기쉼터(청소년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였으며, 각 청소년쉼터의 전문성과 특성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1년부터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접근·개입을 위해 아웃리치 전담인력을 전국 일시쉼터에 배치하였고, 2012년부터는 일시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야간보호기능을 추가하였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2012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 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2015년 현재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민간과 지자체에 의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토대로 향후 예산 지원 및 시설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최근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보호시설로 보내지거나 학업중단, 가출 등으로 거리를 방황하는 위기청소년과 ADHD,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청소년시설에서는 보호, 치료, 교육, 자립 등에 대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치료, 보호, 자립지도, 교육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거주형 기관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2012년 12월에 개원하였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입교대상자는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만 9~18세)이고, 입·퇴소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개원 이후 2015년까지 약 2,800여 명의 청소년이 장·단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중 상당수가 정서적 안정감이 향상되어 문제행동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우수치유사례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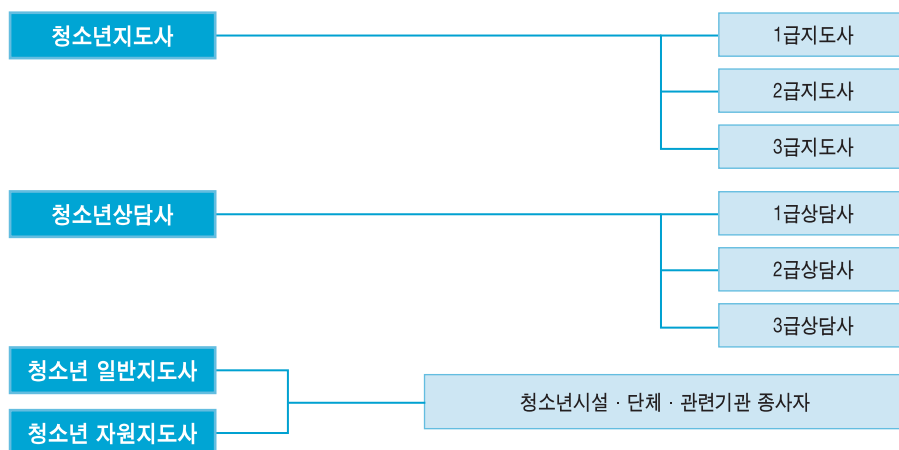
제 2 장

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국가전문 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5년 8월까지 총 38,021명이 배출되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도 9,306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림 10-2-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 청소년지도사

가.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관련 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등급	응시자격기준
3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 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구분	검정 과 목	검 정 방 법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필기시험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 방법론,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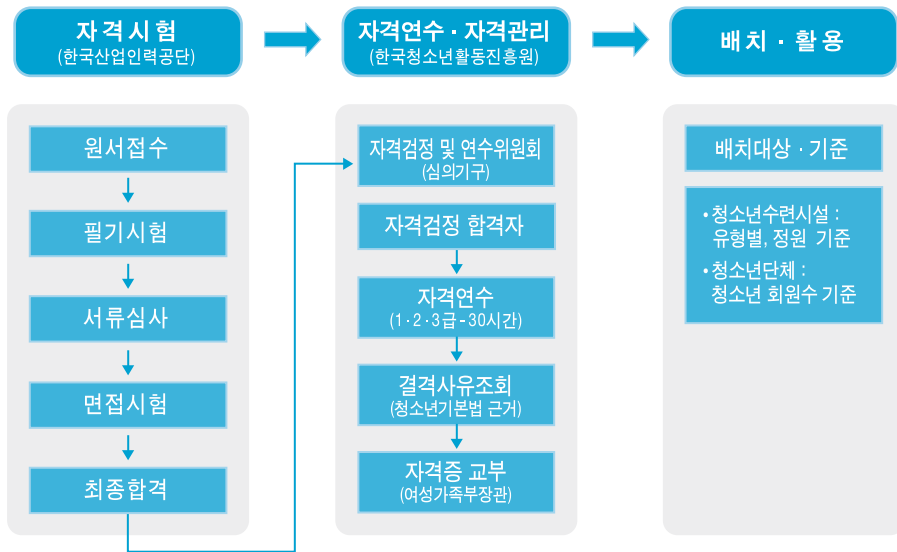
주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연수를 실시한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때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2급 자격기준 중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와 3급 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및 배치기준

청소년지도사 양성계획에 따라 199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539명, 2급 청소년지도사 25,948명, 3급 청소년지도사 10,535명 등 총 38,021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3,986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는데 이 중 여성이 2,940명으로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1급은 28명, 2급은 2,592명, 3급은 759명이었다. 연도별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1급		2급		3급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3년	-	-	311	174	156	72	467	246	713
1994년	78	18	229	146	137	100	444	264	708
1995년	81	20	193	168	137	116	411	304	715
1996년	36	11	105	88	54	47	195	146	341
1997년	98	33	167	147	110	80	375	260	635
1998년	87	33	122	158	93	100	302	291	593
1999년	77	51	266	264	96	114	439	429	868
2000년	70	43	255	330	139	151	464	524	988
2001년	58	39	421	569	221	275	700	883	1,583
2002년	78	39	310	527	189	286	577	852	1,429
2003년	47	43	269	431	194	386	510	860	1,370
2004년	28	46	232	431	180	400	440	877	1,317
2005년	14	17	160	296	217	688	391	1,001	1,392
2006년	43	47	314	478	148	218	505	743	1,248
2007년	11	20	247	448	37	146	295	614	909
2008년	7	20	342	1,744	114	517	463	2,281	2,744
2009년	11	23	359	1,806	186	546	556	2,375	2,931
2010년	20	33	437	1,937	177	691	634	2,661	3,295
2011년	30	52	436	1,826	140	567	606	2,445	3,051
2012년	3	5	454	2,048	163	589	620	2,642	3,262
2013년	13	28	697	2,344	225	530	935	2,902	3,837
2014년	-	-	12	50	13	31	25	81	106
2015년(8월 기준)	9	19	822	2,377	215	544	1,046	2,940	3,986
누 계	899	640	7,160	18,787	3,341	7,194	11,400	26,621	38,021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 수련 시설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1)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 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청소년단체	청소년회원 수가 2천 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 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자료 : 여성가족부(20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청소년 기본법」 제24조2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보수교육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역량 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에 1회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록인원이 3,740명으로 2015년 9월 말 기준 1,13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3 청소년상담사

가.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는 국가 차원의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 지원센터, 초·중·고·대학의 학생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 시설, 경찰청이나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대상 병원, 일반 청소년관련 사업체, 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 등에서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중 3급의 경우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등급별 응시자격 판단기준일을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로 변경한다.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등급	응시자격기준
1급 청소년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 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비고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 과목은 1급 5과목, 2급과 3급은 각각 6과목이며,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과한 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볼 수 있다.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자격검정 최종 합격자로 본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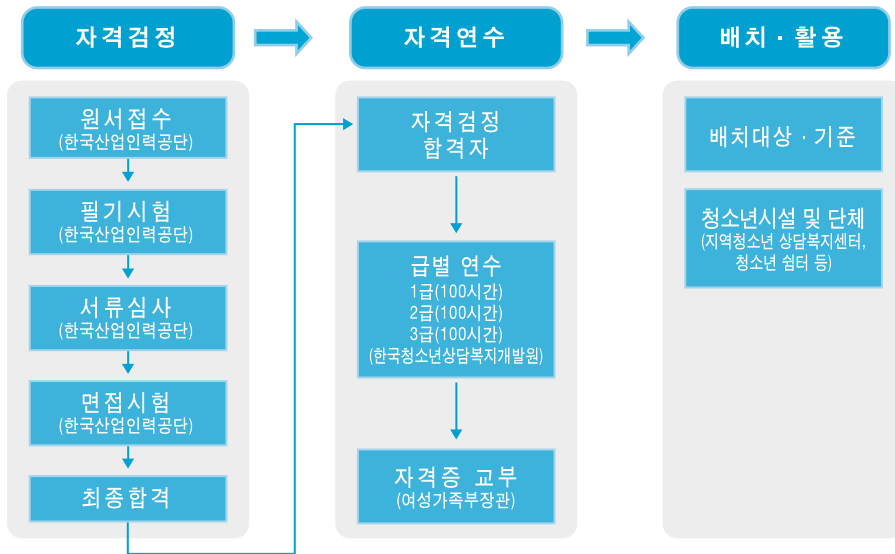
등 급	검 정 과 목		검정 방법	
	구 분	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비행상담 · 성 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비행상담 · 성 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 4.

나.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100시간 이상 의무 연수를 실시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배치·활용 된다.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은 청소년 상담관련 이론과 실제적인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급·2급·3급 모두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연수 형태는 급별 책무에 맞는 질적 교육을 위하여 이론, 세미나,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등급	연수 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 슈비전 • 청소년 위기개입Ⅱ • 청소년관련 법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 프로그램개발 • 청소년문제 세미나
2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 과정과 기법 • 부모상담 • 청소년 진로·학업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상담 • 청소년 위기개입Ⅰ
3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개인상담 • 청소년 매체상담 • 청소년 발달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집단상담 • 청소년상담 현장론

자료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별표 5.

다. 청소년상담사 양성실적 및 배치기준

청소년상담사 양성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총 13회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이 있었으며, 청소년상담사 1급 383명, 2급 3,306명, 3급 7,764명으로 총 11,453명의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였다.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1급		2급		3급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03년	8	99	22	271	37	247	684
2004년	4	17	6	84	11	92	214
2005년	5	16	21	150	19	132	343
2006년	6	24	17	154	10	196	407
2007년	0	1	11	166	17	279	474
2008년	6	41	23	171	39	411	691
2009년	3	12	20	219	56	461	771
2010년	1	13	12	128	21	311	486
2011년	1	18	16	282	27	391	735
2012년	3	26	31	304	65	863	1,292
2013년	3	9	17	208	94	896	1,227
2014년	3	12	39	370	142	1,416	1,982
2015년	9	43	48	516	135	1,396	2,147
계	52	331	283	3,023	673	7,091	11,453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배치대상 청소년시설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배치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둔다. * 2015. 1. 1.부터 시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별표 5.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3조).

라.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청소년 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청소년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청소년 단체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www.koreayouth.net, 약칭 ‘청협’)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내·외 청소년단체의 상호연락과 제휴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5년 12월 8일 국내 15개 민간 청소년단체의 협의기구로 창립되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 정보교환, 청소년단체 간의 상호협력 도모와 청소년관련 정부부처와 유관 사회단체, 각급 학교 그리고 세계청소년기구와의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1966년 8월 10일에는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orld Assembly of Youth: WAY)에 가입하였으며, 1972년 8월 15일에는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sian Youth Council: AYC)의 창설멤버가 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등, 청소년육성 운동을 확대·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 제정 등 청소년 정책이 추진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1988년 11월 11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2005년에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 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수행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현재 8개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포함하여 70개 회원 청소년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269만여 명의 청소년회원과 149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자 등 총 418만여 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회원단체 가입은, 「청소년 기본법」에 준하여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신청하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목적에 따라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 증진,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WAY, AYC, UN Youth Unit, AUN, ASEF, EYF 등)활동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 지원,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우수 청소년단체와 모범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의 포상, 국제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관리, 기타 청소년 및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을 ‘청소년이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해로 정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도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아울러,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반세기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회원단체, 유관기관,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년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소년정책 연구세미나 등 관련 활동에 진력하였다. 청소년지도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소속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참여 기구인 청소년회의 및 청소년기자단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청소년 분야 정보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포털사이트 및 청소년 지도자 대상 온라인 교양강좌 등을 운영하였고, 청소년 학술정보지인 오늘의 청소년과 연간 사업실적을 망라한 사업활동종합보고서 발간 등 홍보출판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회원단체 협력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청소년 지도자들의 소통을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인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성년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 성년이 된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였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분야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나아가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와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청소년국제기구의 정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하였고,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와 국제청소년포럼, 한아세안청소년교류 등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창립 50주년과 관련하여, 전국청소년지도자들과 함께하는 후원의 밤을 열었고, 청소년과 지도자, 가족, 일반인이 참여하는 청소년가족 걷기대회를 신규 기획하여 추진하였다. 창협 반백 년 역사를 총망라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50년사를 발간하였고 향후 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창협은 국내외 청소년 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유스호스텔인 국제청소년센터를 2000년에 개원하여 지속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이 열리고 있고, 이외에도 기업 및 기관의 교육연수의 장소이자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청소년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02-2667-0471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The Korea Association of Youth Centers)는 전국의 780여 개 공공 및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발전을 위한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간 연계 협력을 위한 협의와 조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정책 제안 등을 위해 1989년 10월 1일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중심으로 창립하였고, 2002년도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 하였으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 명칭을 정하여 2004년 2월에 공포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 의거 2005년 2월에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였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청소년활동 기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활동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극대화를 위한 지역 사회 및 학교 등과의 연계사업 개발·운영지원, 청소년활동을 통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실천 방안 수립, 우수 마케팅 사례 발굴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유관기관, 청소년지도자 등과 상호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방협회의 구성 및 지역 단위 청소년활동 지원 체제 구축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 수용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지원, 청소년활동 기반 확대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운영 여건 개선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와 실천운동,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 사업과 국제교류사업, 청소년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지도자 양성사업 등 청소년수련시설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과 시설유형별협의회(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와 지방협회(10개소)를 중심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책개발 및 추진

체제 구축 등 청소년활동의 선진화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참여토록 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및 주제적인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언어지킴이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청소년 문화콘텐츠 동아리 지원사업 등 청소년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 안전성 강화 등의 환경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활동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국가 성장 동력이 됨은 물론 그들과 함께 땀 흘려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수련시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제 4 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 설치 경위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최초의 정부조직은 청소년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당시 체육부에 설치된 청소년국이다. 이후 체육부의 청소년국은 1991년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화되었다.

이후, 1997년 3월 늘어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에 대한 유통규제와 단속,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다.

청소년 조직은 다시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이 청소년국으로 변화되어 문화관광부에 존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되어 활동하여 왔다.

이렇게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였고,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능력이 미비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시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정책 기능(육성 및 보호)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 설치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 법률(「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정부조직법」)을 개정·공포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위원회 직제를 제정, ‘청소년위원회’를 공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이후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여성부 보육정책,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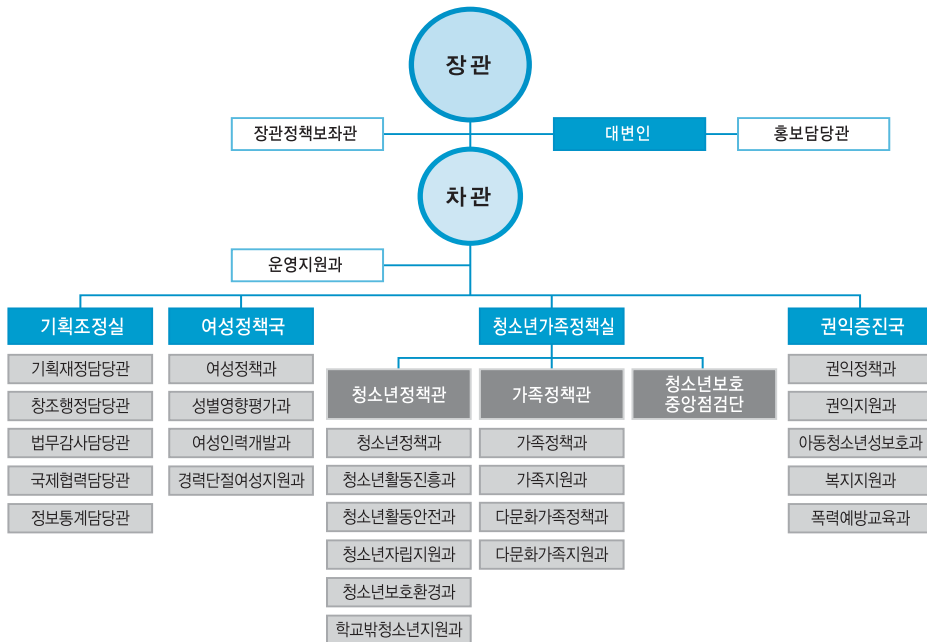
이와 함께 2008년 2월 29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 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2010년 1월 18일 가족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현 사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가족정책 및 청소년 육성·보호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구조 및 업무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등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보하고 있다.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10-4-1〉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p>청소년정책과</p>	<p>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청소년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청소년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교육·훈련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청소년활동진흥과</p>	<p>청소년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연수 및 활동 지원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등 방과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청소년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p>

<p>청소년활동안전과</p>	<p>청소년수련활동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업무 관리 및 운영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활동 이행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년활동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도·감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건립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모델 개발 및 보급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p>
<p>청소년자립지원과</p>	<p>청소년자립지원,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복지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도·감독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가출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청소년 진학·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p>
<p>청소년보호환경과</p>	<p>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 간 조정·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 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결정 청소년 유해 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포장·전시·진열 및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등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유익매체물 제작·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p>

학교밖 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조직은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으로 구성되며,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학교밖 청소년지원과 등 6개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정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4-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 현황

(단위 : 명)

직 급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2	1	5	2	18	15	7	3	2	55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다. 청소년정책의 변천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은 정부의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의 변천과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정책 기구의 변천 과정은 앞의 설치 경위에서 알 수 있다.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표 10-4-3〉 청소년정책의 변천

단계	시 기	기간	특 성	명 칭	주 무 부 처
1단계	1948. 8. ~ 1964. 9.	16년	부처별 산발추진	부처별 관련업무 추진	각 부처
2단계	1964. 10. ~ 1977. 8.	13년	부처차원의 조정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내무부/무임소장관실
3단계	1977. 8. ~ 1988. 6.	11년	정부차원의 조정	청소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문교부
4단계	1988. 6. ~ 2005. 4.	7년	정부차원의 조정, 부처차원의 총괄 집행	청소년육성위원회	체육부/체육청소년부/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5단계	2005. 4. ~ 2008. 2.	3년	청소년조직 통합, 단일 청소년전담 조직 출범	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무총리실
6단계	2008. 3. ~ 2010. 2.	2년	정부차원 통합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7단계	2010. 3. ~ 현재		여성가족부 개편 및 이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자료 : 여성가족부(2010).

1단계인 1948년 8월부터 1964년까지는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도 없고, 전담하는 행정 기구도 없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각 부처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였다.

2단계는 1964년 10월부터 1977년까지의 13년간이다. 이 시기에 내무부 및 무임소장관실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주요 업무로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부처 차원의 조정과 보호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988년까지이며,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2단계의 부처 차원의 조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조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조정을 시작하였으며, 1983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의 청소년관련 정책이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였다가 다시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전하였다.

4단계는 청소년정책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6월 1일부터 2005년 4월까지로 볼 수 있다.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관련 전담조직이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전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고,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 이는 곧 청소년정책 조정실로 확대되었으며, 이 시기 청소년현장이 제정(1990년 5월 12일)되었다.

1990년 12월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바뀌면서 청소년 업무의 영역이 확장되고 청소년

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1991년 6월 27일)되었고,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는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1991년 12월)되었다. 이후 1993년 문화체육부로 통합 시 청소년정책조정실은 청소년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시기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8년 10월 25일 새로운 청소년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정책 기구 조정도 함께 단행되었는데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었다.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8년 2월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육성을 전담하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 보호를 전담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리되었다.

제5단계는 2005년 4월 청소년정책 조직의 통합과 단일 청소년전담조직이 출범한 이후부터 2008년 2월까지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체계적·종합적 정책 수행 곤란, 새로운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미비,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청소년기능(육성 및 보호)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소속으로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6단계는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된 후부터 2010년 2월까지를 말한다.

제7단계는 2010년 1월 18일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를 말한다.

2 청소년관련 업무 추진기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부처는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의 청소년관련 업무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상 정책 영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4-4〉 청소년정책 영역별 소관부처 현황

영역	세 부 과 제	소관부처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1-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1-1-1. 청소년역량지수 개발	여성가족부
		1-1-2.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1-1-3.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위한 체험활동 강화	전 부처
		1-1-4. 청소년희망카드 도입	여성가족부
		1-1-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1-1-6.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1-1-7.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여성가족부
	1-2.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	1-2-1.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1-2-2.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여성가족부
		1-2-3.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외교부
		1-2-4.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여성가족부, 외교부
		1-2-5. 남북한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 증진	통일부
	1-3.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강화	1-3-1.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1-3-2.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1-3-3.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제처
		1-3-4.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2.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2-1.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2-1-1.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2-1-2.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	여성가족부
		2-1-3.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2-1-4.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여성가족부

영역	세 부 과 제		소관부처
2.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2-2.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2-2-1. 청소년 체력 강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2-2.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2-3.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2-2-4.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 개입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부, 보건복지부
	2-3. 청소년의 권리 증진 기반조성	2-3-1. UN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2-3-2.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2-3-3.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2-3-4. 미디어콘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권리보호 강화	여성가족부
		2-3-5.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문화 조성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3-1.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3-1-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3-1-2.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3-1-3.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3-1-4.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3-1-5.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3-1-6. 정서적·행동적 장애청소년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
3-1-7.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3-2.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3-2-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여성가족부
		3-2-2.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3-2-3.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3-2-4.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3-2-5.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3-2-6.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3-2-7.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통일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3-2-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영역	세 부 과 제	소관부처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3-3-1.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3-3-2.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3-3-3.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3-3-4. 청소년(청년) 창업, 취업지원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3-3-5. 청소년(청년) 주거지원	교육부, 국토교통부	
	3-3-6.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3-3-7.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환경 여건 강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조성	4-1-1.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구축	여성가족부
		4-1-2.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전 부처
		4-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여성가족부
		4-1-4.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최소화 확대 추진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4-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2-1.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4-2-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4-2-3. 아동 및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4-2-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4-2-5.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4-2-6. 비행 청소년 예방적·회복적 사법제도 구축	여성가족부, 법무부
		4-2-7.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및 홍보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4-2-8.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지원 및 선도·보호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4-3.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4-3-1.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4-3-2.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4-3-3.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영역	세 부 과 제		소관부처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5-1.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5-1-1. 청소년정책 위상 및 성과 평가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5-1-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	여성가족부
		5-1-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전담과 설치 및 청소년전담 공무원제 추진	여성가족부
	5-2.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5-2-1.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5-2-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여성가족부
		5-2-3.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여성가족부
	5-3.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5-3-1.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여성가족부
		5-3-2.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	여성가족부
		5-3-3. 정책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수립	여성가족부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부처별 청소년 업무의 특성을 보면 부 단위 기관에서는 고유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사업 중 청소년이 대상고객인 사업에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청 단위 기관에서는 정책예산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예산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청소년관련 시·도 행정조직

중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나뉘어서 추진되던 아동, 보육,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추진되어 오다 2010년 1월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17개 시·도의 청소년관련 행정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시·도 청소년 업무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청소년 업무 연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 각 시·도 청소년관련 행정조직은 다음과 같다.

〈표 10-4-5〉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현황

시·도	담당 실·국	청소년 분야
서울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부산	여성가족관	아동청소년과
대구	교육청소년정책관	교육청소년정책관
인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광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울산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종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경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강원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충북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충남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
전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전남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경북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경남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제주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중 세부추진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성격은 각 시·도별로 상이한데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전북, 제주는 심의기구로 운영되고 있고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전남은 자문기구와 심의기구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표 10-4-6〉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시·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시·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서울	심의/자문	강원	자문
부산	심의	충북	자문
대구	심의	충남	자문
인천	심의	전북	심의
광주	심의	전남	심의/자문
대전	심의	경북	자문
울산	자문	경남	자문
세종	자문	제주	심의
경기	심의/자문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www.kywa.or.kr)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의해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을 총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youth.go.kr) 운영을 통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기록 관리’, 청소년들이 신체 단련·자기개발·자원봉사·탐험활동을 고르게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그리고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국립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여 2015년 말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 평창), 국립고흥 청소년우주체험센터(전남 고흥),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전북 김제), 국립영덕청소년 해양환경체험센터(경북 영덕) 총 5개소의 국립청소년활동시설을 각 원별 특성을 살려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관련하여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1급, 2급, 3급) 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연수와 함께 2013년부터 법제화된 현직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전문연수를 개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한 전문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 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된 공공 기관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관계자 회의, 지도·지원 등을 실시하고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 이슈가 되는 청소년 문제들을 분석·연구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하고 심각해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청소년 관련 기관에 보급·운영하는 등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변화되고 다양화되는 청소년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상담의 전문화, 청소년상담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위탁 운영하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친구의 문제 해결을 돕는 또래상담자 양성, 건강한 청소년 성장에 목적을 둔 품성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관련 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및 전문연수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 등의 전문 상담과 사이버상담 등 청소년상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진로를 포기하거나 보호시설 등에 입소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학교복귀,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건강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기간에 따라 인터넷 치유캠프(11박 12일, 중고생 대상), 가족치유캠프(2박 3일, 초등생 및 보호자 대상)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할 뿐만 아니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상담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소년 가족이 가진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 5 장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가. 설립배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www.nypi.re.kr)은 「청소년육성법」을 근거로 1989년 7월 1일에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처음 설립되어 청소년정책관련 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청소년 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993년 1월 1일에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개편되었고 1999년 1월 29일부로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었다. 한편, 2005년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가 통합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속이 이관되었고, 2007년 5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기초이론연구, 현안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정책평가지원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단체·시설, 청소년지도자 등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정책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자문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청소년 생활환경, 의식, 여가, 활동 등의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기초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기초조사 기능’,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연구·개발 기능’,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평가 및 자문·지원과 청소년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정책평가·자문기능’, 넷째,

청소년관련 전문가·학계·기관과의 협력사업과 외국청소년전문기관과의 교류사업을 통해 대내·외적인 협력체제와 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하는 ‘대외교류·협력 기능’, 다섯째, 청소년 연구 및 정책 개발의 방향제시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정책협의회, 정보서비스사업을 통한 연구자료 및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및 연구자료 제공 기능’ 등이 있다.

나. 조직 및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93년 1월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개편 될 당시 원장을 중심으로 부원장과 5실 7부의 체제였으나, 1995년 12월 이후 기획조정실, 홍보사업단, 복지환경실, 수련활동실, 정보자료실, 행정실 등 5실 1단 12부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1997년 1월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팀제를 도입하여 4실 5부 8팀으로 재개편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부설기구로 설치하여 청소년자원봉사중앙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998년에는 자립경영 기반구축 및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육성정책연구실, 복지정책연구실,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연구기획부, 총무부 등 2실 1센터 2부로 기구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기획부와 총무부를 기획조정실과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주요영역별 업무를 팀제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부서인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분리 운영하는 등 3실 1국 1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5년 초에는 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종합적 조사 연구를 통한 청소년 정책 수립의 시계열적 기초자료 축적을 위하여 정책기초연구실을 신설하여 4실 1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9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의 통합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본부, 1국, 4실, 5팀 체제로 개편하였다. 즉, 기획조정본부에 연구기획팀, 예산기획팀, 대외협력·자격검정팀 등 3팀으로, 감사실 외에 청소년정책연구실, 아동정책연구실, 통계조사연구실 등 3개의 연구실로, 사무국에 총무팀과 경리팀 등 2팀으로 각각 개편하였다. 이후 2011년에 기획조정본부 내 3개 팀을 연구기획·대외협력팀과 예산기획·성과관리팀 등 2팀으로 개편하였고 2013년에는 정보자료 전산보안팀을 추가하여 총 3개 팀으로 구성하였다. 2012년에는 각 연구실을 활동·역량연구실, 보호·복지연구실, 통계·기초연구실 등 전문분야별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디지털·글로벌 시대 청소년의 창의력과 도전정신 계발을 지원하는 국가 청소년 연구·정책 수립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기획의 체계화, 과학적 연구관리 체계 확립, 연구 성과의 정책반영과 사회적 확산을 통하여 연구기획의 체계화와 전문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경영목표의 체계적 추진, 합리적·효율적 조직 구성

및 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관리,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기관경영과 조직운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도모하며, 셋째,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청소년정책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연구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

다. 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연구과제는 ① 정관상 설립목적 및 정부시책과의 적합성, ② 국정과제 부합성, ③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위상에 부합한 과제, ④ 아동·청소년·가족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제, ⑤ 원내 각 실별 고유기능 주요 연구영역의 부합성, ⑥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도 및 현장 적용성이 높은 과제 등 6개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사업은 기관고유 사업으로 기본연구 사업, 연구관련 사업, 연구지원 사업, 일반사업이 있고, 아동·청소년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발주하는 수탁용역사업 과제가 있다.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년도 연구사업의 기본연구사업 과제로 ①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②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조사 연구 I, ③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 정책 전망 연구 II, ④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⑤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 연구, ⑥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⑦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⑧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⑨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⑩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⑪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⑫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⑬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일반 사업으로는 ⑭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⑮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 사업 연구 II, ⑯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⑰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⑱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V, ⑲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 시스템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협동사업으로는 ⑳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II, ㉑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2016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수행을 위한 기초 연구로 2015년 10월 기준 30개의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위탁사업으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와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일본, 중국, 북한 등) 국가들의 청소년 연구동향을 점검하고 해당 국가들과의 청소년 연구 교류협력 증진, 공동사업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동북아

청소년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으로 2010년 6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센터 조직은 소장을 중심으로 정책전략기획팀, 정책평가연구팀 등 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전략기획팀은 중장기 정책 및 청소년정책 의제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슈브리프 및 정책리포트를 발간하고, 주요 정책현안 및 이슈관련 청소년정책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범부처적 차원에서 정책입안이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책평가연구팀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도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자료 수집 및 분석·평가 체계를 통해 정책협의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단체·시설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유관기관 등의 최신 동향 분석, 주요 자료 번역을 소개하는 등 국내외 청소년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는 2013년 11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계획에 의거하여 2014년 3월 18일 교육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학업중단예방센터를 지정·설치함으로써 출발되었다. 동년 8월 29일 교육부가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추가 위탁함으로써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는 소장 포함 총 13명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중단예방과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단위의 종합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첫째,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대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둘째,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의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셋째,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는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북아청소년분석센터는 동북아 국가들 간의 청소년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자료, 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공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고 해당 국가들의 청소년 연구동향 점검 및 연구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추진·운영되고 있다. 동북아청소년분석센터의 주요 역할은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마련 및 관련 자료 수집, 동북아 청소년연구 교류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 정책과제 수행이다. 2015년, 일본, 몽골 등 유관기관 교류협력 및 정보교류, MOU 체결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중국, 2017년 북한 등 순차적으로 청소년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에는 제1회~제4회에 걸친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을 통해 일본, 중국, 러시아 연구자들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공동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청소년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관련 연구기관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1991년도부터 각 대학에 청소년관련 학과들이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4년제 대학에 청소년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대학교, 광주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백석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초당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중대학교, 호서대학교(이상 가나다순) 등이며, 사이버대학 중에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송실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등에서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전문대학으로는 경북과학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군장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원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서정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등에서 관련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남서울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교육대학원, 대전대학교 상담대학원,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성균관대학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수원대학교교육대학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안양대학교교육대학원,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주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평택대학교,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등에서 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명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는 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2015년 학교별 학부/과 참고). 대학과 대학원의 청소년관련 학과나 전공의 설치 또는 청소년관련 학과로의 독립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 관련 분야의 발전과 확장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창출하며,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들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학회는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이 있다(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참고).

한국청소년학회는 청소년 분야 일반의 공익을 위한 사단법인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청소년(관련)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연구자 상호 간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 교환을 통하여 청소년학의 정립과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청소년학연구'라는 학술지를 연 12회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는 2004년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미래 청소년학회지’를 매년 4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육체와 정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 목적으로 2002년 창립되었다.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확대방안 및 기존 시설의 활성화 방안, 청소년 시설물의 연계 활용 방법, 시설물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국제교류, 봉사활동, 국제 심포지엄, 학술대회, 작품집 발간, 월례세미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청소년시설환경’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1998년에 청소년복지의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설된 학회이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청소년복지연구’ 학술지를 연 4회 발간하고, 부정기적으로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학회는 아니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각각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한국청소년연구’, ‘청소년상담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제연구소,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교육전략21,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정책학회, 한국시민청소년학회 등에서도 왕성하게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학의 발전과 더불어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독립 연구기관 및 대학 부설, 단체 부설 등의 민간 연구기관은 늘어날 전망이다.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세계 각국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개발관련 기관 간의 협의회로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Youth: WARDY)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 협의회의 설립목적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연구개발기관 간 정보와 학술교류 확대를 통하여 서로 협력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21세기에 추구되어야 할 지구촌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95년 11월 24일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일본 청소년연구소, 중국 사회과학원(청년사회학연구회)은 이러한 취지의 세계협의기구 구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1997년 10월 7일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6개국의 8개 기관 대표들이 한국에 모여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창립기념으로 ‘청소년폭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① 청소년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 ②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상호방문 추진, ③ 청소년관련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회원국 간의 상호 교류와 연대 강화, ④ 청소년관련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등이다.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으로는 국제심포지엄과 공동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국제심포지엄은 제1차 WARDY 국제학술회의가 1997년 10월 7일 ‘청소년폭력의 국제 비교’란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998년 9월 23일에는 서울에서 ‘21세기 새로운 청소년정책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1999년 10월 11일에는 중국 북경에서 ‘21세기를 지향한 청소년과 청소년 연구’란 주제로 제2차 WARDY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다음 해인 2000년 10월 10일에는 ‘서울에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정책 수립의 과제-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참여 증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제3차 WARDY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2002년 6월 20일에는 서울에서 ‘글로벌시대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2004년 11월 11일에는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 역할’이란 주제로 역시 서울에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또한, 2005년 10월 11일에는 과천에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2006년 9월 6일에는 서울에서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2007년에는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과정’,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등의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2008년에는 ‘청년기의 사회화에 대한 한·일 비교’, 2009년에는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 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독일의 장애아동, 청소년지원정책’,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선진국의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등이 개최되었다. 2010년에는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2011년에는, ‘한-핀란드 공동세미나’, ‘한-사우디아라비아 국립청소년연구센터 공동포럼’, ‘한-중 청소년정책 국제세미나’ 등이 개최되었다.

한편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가 수행한 공동연구로는 1997년, ‘청소년의식에 관한 한·중·일 국제비교연구’, 1999년 ‘청소년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연구-한·중·일을 중심으로’, 2000년 ‘새천년 청소년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연구-한·미·일·프를 중심으로’, 2001년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연구’ 등이 있다. 2006년에는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조사’가, 2007년에는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 비교 연구’,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06~2008년의 3개년에 걸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 비교 연구’가 공동 수행되었다. 2009년

에는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를 공동수행하였으며, 2006~2010년의 5개년에 걸쳐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10년에는 '청소년 가치관 국제 비교 조사'가 공동으로 추진되었고, 2010~2011년에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가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2014년 11월에는 중국 상해 청년관리간부학원에서 'Metropolis and Youth Development'를 주제로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5년 3월에는 일본아시아진로학회와 '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2015년 10월에는 중국 상해 청년관리간부학원과 '한·중 청소년정책 관련 역사 및 연구를 통한 향후 정책방향 및 발전 방안 수립'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97년 6개국 8개 기관이 가입한 이후, 2015년 기준 총 12개국 15개 기관 1개의 국제 학회가 현재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회원 현황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한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6~7층	www.nypi.re.kr	82-44-415-2114
중국	중국청년정치학원 (Chinese Youth University for Political Science)	100089 25 Xisanhuan Beilu, Haidian District, Beijing, China	http://www.bjypc. edu.cn/	86-10-8856-7101
	중국상해청년관리간부학원 (Shanghai Youth Administration Official College)	No. 574 West Jiangwan Road, Shanghai, China	http://xqb.shqgy. com.cn/	86-21-6540-5700
일본	일본청소년연구원 (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	15, Kasumigaokacho, Shinjuku-ku, Tok 0160, Japan	www1.odn.ne.jp/ youth-study	81-3-3475-2535
	게이오대학 21세기연구소 (KeioUniversity21COE-CCC)	6th Floor, Mita Toho Building 3-1-7 Mita, Minato-ku Tokyo 108-0073, Japan	http://www.coe- ccc.keio.ac.jp	81-3-5427-1045
싱가포르	국립청소년청 (National Youth Council)	113 Somerset Road National Youth Centre, Singapore 238165	www.nyc.gov.sg	65-6-734-4233
호주	청소년연구센터 (Youth Research Centre)	Youth Research Center Faculty of Education University of Melbourne Victoria 3010 Australia	http://web.edu cation.unimelb. edu.au/yrcc/	61-3-8344-9633
	호주 태즈메이니아대학교 청소년 연구센터 (Center for Applied Youth Research)	PO Box 5011 UTAS LPO, Sandy Bay Tasmania 7005, Australia	http://cayr.info/	61-3-5294-0444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독일	포츠담대 가족아동연구소 (Potsdam University Family-Children Research Center International Council on National Youth)	Professur Fur Allgemeine Grundschulpadagogik und- didaktik Karl-Liebknecht-Str. 24-25 14476 Potsdam, OT Golm	http://www.uni- potsdam.de/allge- meinegrundschulp- aeddidaktik	49-(0)3304-397010
영국	영국 국립청소년청 (The National Youth Agency)	17-23 Albion Street, Leicester LE1 6GD	www.nya.org.uk	44-1-16-285-3700
핀란드	핀란드 청소년연구네트워크 (The Finnish Research Network)	The Finnish Youth Reseach Society Olympiastadion Etelaarre 00250, Helsinki, FINLAND	www.alli.fi	358-0-348-24323
미국	아이오와대 국립가족자원센터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Family)	University of Iowa School of Social Work 100 Oakdale Campus, W206 OH Iowa City, IA 52242-5000	www.uiowa.edu/ ~nrccfp	1-319-335-4965
	뉴욕아동환경연구그룹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	365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6, United States	www.cernyc.org	1-212-817-1902
사우디 아라비아	국립청소년연구센터 (National Center For Youth Studies, King Saud University)	PO. Box 75148, Riyadh, 11578, Kingdom of Saudi Arabia	www.ncys.ksu. edu.sa/eng	966-1-467-0381
말레이시아	사회과학연구원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Studies)	43400 UPM Serd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http://www.ipsas. upm.edu.my/	603-8947-1865
인도네시아	아시아진로발달학회 (Asia Regional Association For Career Development)	University of PGRI Adi Buana Surabaya Jl. Ngagel Dadi III- B/37, Surabaya, 60245	http://aracd.unipa sby.ac.id/home/	(031) 5041097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제 6 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2015년도 청소년정책 예산은 총 2,137억원으로 일반회계 677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55억원, 청소년육성기금 80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6-1〉 연도별 청소년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관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책실	문화부 청소년국		청소년 보호 위원회	국가 청소년 위원회	예비비 (일반 회계)	광특회계 (군특)	청소년육성기금		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육성사업	시설용자	
1995년	-	-	28,098	2,000	-	-	-	13,654	4,309	10,000	58,061
1996년	-	-	37,896	3,000	-	-	-	18,984	6,300	10,000	76,180
1997년	-	-	52,591	3,000	-	-	-	21,645	10,803	10,000	98,039
2000년	-	-	25,954	1,000	4,111	-	-	26,525	10,814	12,350	80,754
2003년	-	-	25,084	-	7,077	-	-	36,607	13,979	7,000	89,747
2004년	-	-	23,149	-	8,817	-	-	30,248	41,610	6,000	109,824
2005년	-	-	10,872	-	9,950	-	8,138	37,643	52,436	6,000	125,039
2006년	-	-	-	-	-	19,825	321	45,442	67,727	4,500	137,815
2007년	-	-	-	-	-	35,388	-	43,128	74,812	-	153,328
2008년	-	116,433	-	-	-	-	-	39,251	75,182	-	230,866
2009년	-	182,641	-	-	-	-	-	36,522	81,741 (증진기금 3,463 포함)	-	300,904
2010년	20,885	-	-	-	-	-	-	34,215	90,652	-	145,752
2011년	21,671	-	-	-	-	-	-	49,417	73,491	-	144,579
2012년	47,435	-	-	-	-	-	320	41,477	58,036	-	147,268
2013년	58,427	-	-	-	-	-	-	50,550	62,435	-	171,412
2014년	67,694	-	-	-	-	-	-	44,991	64,405	-	177,090
2015년	67,711	-	-	-	-	-	-	65,564	80,472	-	213,747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주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예산은 제외되었음.

- 2010년 : 4,603백만원(일반회계 1,085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518백만원).
- 2011년 : 5,687백만원(일반회계 1,580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81백만원).
- 2012년 : 5,979백만원(일반회계 2,053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원).
- 2013년 : 8,623백만원(일반회계 3,441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182백만원).
- 2013년 : 8,623백만원(일반회계 3,441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182백만원).
- 2014년 : 11,664백만원(일반회계 6,310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354백만원).
- 2015년 : 19,962백만원(일반회계 8,032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965백만원).

일반예산은 청소년정책 기반 강화,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 센터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청소년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고 있다.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청소년 기본법」 제54조)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에 의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청소년 기본법」 제55조)는 ① 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③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④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⑥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⑦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⑧ 기금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⑨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 밖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기금 조성 초기에는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액 등이 수입 재원이었으나, 현재는 경륜경정사업 법정 분담금이 유일한 수입 재원이고 그나마 2011년에 경륜·경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익금의 30%를 받던 것이 19.5%로 축소되어, 기금의 안정적인 확충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2015년까지의 누계 조성규모는 9,480억원이며, 재원별로는 정부출연금 350억원, 국민체육진흥

기금전입금 766억원, 경륜사업수의 법정출연금인 3,959억원, 복권기금전입금 2,106억원, 이자수입 등 운용수익 적립금이 2,300억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사용액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 청소년육성 사업 지원에 8,852억원, 기타 경비 등에 86억원, 기금전출 43억원을 합하여 총 8,980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순 조성액은 2015년 기준으로 500억원이다.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조성액(A)						사용액(B)				순 조성액 (A-B)	계
	정 부 출연금	민 간 출연금	경륜사업 수익법정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이자 등 기타	계	청소년 사업지원	기타 경비	기금 전출	계		
1989년	-	5,000	-	-	206	5,206	132	-	-	132	5,074	5,074
1990년	-	5,000	-	-	1,363	6,363	847	3	-	850	5,513	10,587
1991년	-	5,010	-	-	2,299	7,309	1,031	9	-	1,040	6,269	16,856
1992년	-	8,150	-	-	3,415	11,565	1,507	12	-	1,519	10,046	26,902
1993년	10,000	5,000	-	-	3,965	18,965	1,613	6	-	1,619	17,346	44,248
1994년	-	11,000	-	-	5,285	16,285	9,034	13	-	9,047	7,238	51,486
1995년	10,000	10,000	-	-	7,749	27,749	4,484	15	-	4,499	23,250	74,736
1996년	10,000	10,000	-	-	8,739	28,739	5,415	8	-	5,423	23,316	98,052
1997년	5,000	10,000	111	-	11,598	26,709	8,209	6	-	8,215	18,494	116,546
1998년	-	4,400	5,888	-	15,453	25,741	6,245	6	-	6,251	19,490	136,036
1999년	-	3,000	6,251	-	13,271	22,522	12,547	7	-	12,554	9,968	146,004
2000년	-	-	11,836	-	11,201	23,037	9,905	7	-	9,912	13,125	159,129
2001년	-	-	32,320	-	13,160	45,480	7,284	84	-	7,368	38,112	197,241
2002년	-	-	46,920	-	10,094	57,014	9,443	21	-	9,464	47,550	244,791
2003년	-	-	70,805	-	14,725	85,530	14,363	31	-	14,394	71,136	315,927
2004년	-	-	40,786	-	14,686	55,472	40,670	72	-	40,742	14,730	330,657
2005년	-	-	24,623	-	19,710	44,333	48,721	57	-	48,778	-4,445	326,212
2006년	-	-	14,330	-	16,878	31,208	68,857	48	-	68,905	-37,697	288,515
2007년	-	-	2,846	735	17,634	21,215	74,750	62	-	74,812	-53,597	234,918
2008년	-	-	17,489	255	8,141	25,885	75,138	45	-	75,183	-49,298	185,620
2009년	-	-	15,672	860	11,085	27,617	61,060	262	22	61,344	-33,727	151,893
2010년	-	-	19,312	2,964	5,947	28,223	69,473	113	213	69,799	-41,576	110,317
2011년	-	-	20,266	4,318	2,841	27,425	70,247	3,286	306	73,839	-46,414	63,903
2012년	-	-	22,235	34,417	1,955	58,607	58,650	3,207	30	61,887	-3,280	60,623
2013년	-	-	16,933	43,403	2,074	62,410	68,238	49	622	68,909	-6,499	54,124
2014년	-	-	12,744	46,694	4,707	64,145	70,096	1,088	1,408	72,592	-8,447	45,677
2015년 (계획)			14,491	76,976	1,796	93,263	87,246	44	1,667	88,957	4,306	49,983
계	35,000	76,560	395,858	210,622	229,977	948,017	885,205	8,561	4,268	898,034	49,983	49,983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3



부 부

(2015년 6월 기준)

연번	학 교	학과명 (전공명)	주 소
1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석사)	(065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Tel : 02) 2258-7723
2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전공(석사)	(1697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Tel : 031) 280-3471~7
3	경기대학교	청소년학 전공(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박사) 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 상담교육 전공(석사)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Tel : 031) 249-9032
4	경북과학대학교	청소년복지전공(전문학사)	(39913)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634 Tel : 054) 979-9461
5	경운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학과(학사)	(3916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730 Tel : 054) 479-1114
6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전공(석사)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 053) 580-6332
7	고구려대학교	청소년복지상담과(전문학사)	(58280)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Tel : 061) 330-7400
8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과(학사)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6 Tel : 02) 6361-1862
9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석사)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Tel : 041) 850-8159, 8859
10	광주대학교	청소년 상담 · 평생교육학과(학사)	(6174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52 진월동(592-1) Tel : 062) 670-2057
11	군장대학교	청소년교육지도과(전문학사)	(5404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Tel : 063) 450-8270
12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지도복지전공(석사)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Tel : 02) 940-5082
13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학과(학사)	(3117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Tel : 041) 570-7773
14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학과(석사)	(3102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현읍 대학로 91 Tel : 041) 580-2324

연번	학 교	학 과 명 (전 공 명)	주 소
15	대구과학대학교	청소년지도과(전문학사)	(41453)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47 Tel : 053) 320-1139
16	대구한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청소년교육상담과(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사)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전공(석사)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Tel : 053) 819-7348
17	대원대학교	청소년지도과(전문학사)	(27135)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6 Tel : 043) 645-9171
18	대전대학교	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35235)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Tel : 042) 470-9308
19	동서대학교	청소년상담심리전공(학사)	(617-833)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Tel : 051) 320-2115
20	동아인재대학교	아간학부 청소년 평생교육복지전공(전문 학사)	(58439)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76-57 Tel : 061) 470-1746
21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학사)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상담전공(석사)	(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Tel : 051) 890-2180
22	디지털서울문화 예술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학과(학사)	(1549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1길 26 Tel : 031) 400-8551-2
23	명지대학교	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박사) 사회과학대학 청소년지도학과(학사) 사회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사)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 02) 300-0620
24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전문학사)	(036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34 Tel : 02) 300-1207, 3961
25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과(학사) 상담대학원 청소년상담학전공(석사)	(310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Tel : 041) 550-2527
26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아동·청소년복지전공(전문 학사)	(310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58 Tel : 041) 550-0419
27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청소년상담학전공(학사)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Tel : 051) 320-1930
28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석사)	(03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Tel : 02) 2287-5120
29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및상담전공(석사)	(55724)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로 439 Tel : 063) 620-0052
30	서울사이버대학교	청소년복지전공(학사)	(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Tel : 02) 944-5549

연번	학 교	학과명 (전공명)	주 소
31	서울여자대학교	청소년학전공(학사)	(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Tel : 02) 970-5114
32	서정대학교	아동청소년보육과(전문학사)	(11426) 경기도 양주시 온현면 화합로 1049-56 Tel : 031) 860-5100
33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석·박·석박통합)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 02) 760-0525
34	성덕대학교	청소년복지상담과(전문학사)	(38801)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 105 Tel : 1577-8998
35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석사)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43 Tel : 032) 433-1996
36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석사)	(183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Tel : 031) 220-2251
37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계열 청소년복지상담학과 (전문학사)	(1277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 Tel : 1577-4990
38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전문학사)	(1663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Tel : 031) 290-8000
39	순복음총회신학교	청소년스포츠상담복지학과(학사)	(27223)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로 320 Tel : 043) 645-5571
40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교육학과 (석·박·석박통합) 인문과학대학 청소년교육상담학과(학사)	(31538)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22 Tel : 041) 530-1146
41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전공 (석사)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Tel : 02) 820-0277
42	송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코칭상담학과(학사)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Tel : 02) 708-7804
43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교육전공(석사)	(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 Tel : 031) 467-0700
44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석사)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Tel : 063) 270-2693
45	전주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석사)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Tel : 1577-7177
46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석·박·석박통합)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학과(석사)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 02) 820-5114

연번	학 교	학과명 (전공명)	주 소
47	초당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학과(학사) 산업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58530)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Tel : 061) 453-4960
48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전문학사)	(28150)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덕암길 10 Tel : 043) 210-8114
49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사) 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석사)	(17869)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Tel : 031) 659-8114
5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학대학 청소년교육과(학사) 대학원 청소년교육학과(석사)	(0308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Tel : 1577-9995
51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청소년복지상담학과(전문학사)	(38695)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46-10 Tel : 1644-9775
52	한국체육대학교	생활체육대학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학사)	(055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Tel : 02) 410-6752
53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사)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Tel : 042) 629-7227
54	한려대학교	사회복지청소년학과(학사)	(5776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한려대길 94-13 Tel : 061) 760-1117
55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석·박·석박통합)	(31962)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Tel : 041) 660-1144
56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 아동청소년가족복지전공(석사)	(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Tel : 031) 450-5114
57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학사)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Tel : 02) 2290-0340
58	한중대학교	경호무술청소년학과(학사)	(25800) 강원도 동해시 지양길 200 Tel : 033) 520-9417
59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문화·상담학과(학사)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석사) 일반대학원 청소년문화상담학과(석·박사)	(31499)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79번길 20 Tel : 041) 560-8140

자료 :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홈페이지(www.academyinfo.go.kr).

(2015년 10월 기준, 단위 : 명)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인원수	청소년 회원수	설립목적
	직위	성명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이사장	정신철	1996. 12. 30.	84,691	83,327	아동·청소년 육성, 복지, 자선사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존엄성 실현
국제청소년교류연맹	총재	유정수	2009. 04. 07.	6,550	4,856	청소년의 국제적 이해와 국제인으로서의 역량 함양
국제청소년연합	회장	박문택	2001. 05. 31.	108,665	105,665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 시대 주도 청소년 양성
그린웨일리·그린스카우트 연합	총재	장만규	1994. 10. 12.	3,200	2,100	청소년 환경교육 및 훈련으로 자연보호 정신 함양
기독교청소년협회(CYA)	이사장	정진해	1995. 10. 30.	3,220	3,140	기독교정신에 의한 청소년상담 교육으로 인재양성
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류태영	2002. 06. 27.	750	137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줌
대건청소년회	이사장	이성호	1998. 09. 21.	2,000	1,000	청소년활동을 통해 건전 사회 기풍 조성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올바른 청소년육성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전준호	1920. 06. 20.	18,840	8,389	불타의 가르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심신계발과 사회정화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적십자(RCY)	총재	김성주	1953. 04. 05.	263,102	245,936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현 및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공헌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본부장	김찬호	1929. 12. 01.	9,854	9,004	종교, 지육, 체육, 봉사생활로 바른 교회생활 기여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총재	김영희	1997. 12. 30.	16,773	15,930	충효예의 연구와 교육 및 수련 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인원수	청소년 회원수	설립목적
	직위	성명				
비로자나청소년협회	회장	강동우	2000. 07. 24.	6,259	5,956	청소년에게 불교이념을 통한 인류공영에 이바지
삼동청소년회	이사장	안민순	1989. 01. 18.	8,545	7,508	일원주의 사상의 도덕적 품성 함양과 세계평화에 기여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이사장	조규만	1999. 09. 01.	26,498	24,188	가톨릭정신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
성산청소년효재단	이사장	최성규	1994. 02. 28.	6,497	6,128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보호·지도육성 및 가치관 확립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	차광선	1948. 06. 21.	41,483	40,457	절대 정직·순결·무사·사랑으로 청소년 건전 지도 육성
세계화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이돈희	2009. 02. 13.	3,744	3,580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단체활동
숲사랑소년단	이사장	김명전	1991. 07. 24.	4,577	4,369	국토보전을 위한 나무심기 운동 전개 및 푸른숲선도원 선발·육성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안구현	1992. 06. 29.	758	431	지·덕·체가 균형잡힌 청소년 육성과 한민족의 주체성 전파
아이섹코리아	중앙위원장	전지희	1962. 11. 26.	800	800	미래의 유능한 경영인 양성과 국제적 교류
어린이재단	대표이사	지훈상	1948. 10. 15.	843,024	587,029	어린이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보호 및 지원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회장	이성희	1977. 03. 17.	2,513	1,013	선도활동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민동석	1954. 01. 30.	9,061	5,561	교육, 과학, 문화보급 및 국제교류를 통한 인류복지증진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손숙미	1961. 04. 01.	15,349	0	가족계획, 모자보건, 청소년 성교육 및 가정복지 도모
청소년과사람사랑	이사장	양종수	1994. 12. 22.	5,977	5,161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박현성	1966. 04. 16.	45,152	44,179	청소년불자 신행활동 지도와 청소년육성
탁틴내일	이사장	최영희	1995. 03. 01.	54,796	95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인원수	청소년 회원수	설립목적
	직위	성명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총재 (상임고문)	윤점열 (여원택)	1996. 09. 30.	47,367	46,396	민족의 주체성 확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푸른나무 청예단	이사장	민병성	1995. 10. 31.	1,238,690	398,830	청소년 수련활동·선도· 유해환경정화·복지증진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김경옥	1946. 05. 10.	106,997	94,969	소녀와 젊은 여성의 잠재력 계발과 민주시민 자질 함양 및 봉사 실천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이사장	박종렬	1948. 04. 25.	150	30	참된 인간세계 실현위한 그리스도의 화해와 교회일치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총재	서상기	1989. 03. 11.	44,788	43,207	우주시대 인재양성 및 정보화 선진과학입국 실현
한국라보	이사장	이일균	1973. 12. 31.	8,012	3,512	각국 간의 상호민박을 통한 친선 문화교류
한국토타리청소년연합	이사장	반승일	1997. 07. 15.	40,475	39,232	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와 국제간의 이해 증진
한국불교청년지도자회	회장	김상백	1911. 06. 15.	35,820	32,400	불타의 정신계승 및 인격도야와 청소년육성
한국B.B.S 중앙연맹	총재	유승우	1964. 09. 05.	18,996	17,811	우애와 봉사의 이념아래 청소년 보호와 지도
한국 4-H본부	회장	이흥기	1954. 11. 09.	70,659	66,313	4-H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소양과 기술 지원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함종한	1922. 10. 05.	158,663	136,443	민주시민 자질향상 도모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한국YWCA 연합회	회장	차경애	1922. 04. 20.	6,085	5,683	젊은 여성의 기독생활 실천 및 평화와 정의사회 건설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허정도	1903. 04. 03.	10,209	9,327	기독교인을 바탕으로 한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문화 창조
한국웃음운동청소년진흥회	회장	김성업	2009. 12. 16.	11,967	8,868	웃음운동 캠페인 활동 및 교육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총재	임성준	1967. 04. 17.	58,449	28,235	아외여행활동을 통한 풍부한 지식과 건전 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총재	한미영	2002. 03. 22.	2,581	2,411	발명영재의 발굴지원을 통해 유능한 발명인 육성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 인원수	청소년 회원수	설립 목적
	직위	성명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회장	최노사	1991. 05. 04.	31,710	21,809	복음선교와 후원활동을 통한 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총재	유주영	2011. 04. 19.	25,648	15,507	국제사회에 기둥이 될 청소년세대를 육성하는데 기여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이사장	김순희	1997. 10. 24.	5,251	4,753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및 인성교육을 위한 교화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한기호	1981. 03. 19.	271,774	240,313	청소년 전인교육을 통한 민족·국가관 확립
한국청소년연합	이사장	김창신	1997. 11. 27.	33,500	33,000	인간사랑 자연사랑 나라사랑의 바람직한 청소년문화창달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박문서	1964. 09. 11.	100,906	3,151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전활동 지도로 민주시민 육성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이사장	강병연	1993. 08. 25.	322	256	심신단련과 지도육성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 확립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	김병후	2000. 02. 25.	500	350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한국항공소년단	총재	하성용	2005. 08. 02.	7,568	6,849	항공, 우주교육을 통한 도전, 개척정신 함양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백석현	1980. 05. 24.	103,264	100,021	해양개척정신 고취를 통한 진취적 기상증진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회장	이기남	1989-07-10	84,000	62,321	강건한 신체와 올바른 품성 및 국가관 확립
한국환경청소년단	총재	양광선	2001. 05. 09.	7,500	5,149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정착과 자연환경 계몽 감시운동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유범진	2005. 03. 02.	3,000	2,250	환경사랑 활동과 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환경보전 확산 이바지
흥사단	이사장	이윤배	1913. 05. 13.	6,904	6,586	무실, 역행, 총의, 용감의 정신으로 인재 양성
문화예술교육협회	이사장	허찬영	2007. 08. 10.	305	160	공연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한국청소년골프협회	회장	김창연	2005. 12. 24.	1,935	1,877	청소년골프선수 선발 및 육성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인원수	청소년 회원수	설립목적
	직위	성명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상임의장	강경순	2003. 10. 06.	20,000	10,000	해양스포츠 지도교육 능력 함양 및 해양환경보전활동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이사장	이경희	2004. 09. 10.	28,445	27,835	향토봉사 활동을 통한 향토사랑 및 조국 사랑 기여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이사장	이원희	2011. 04. 21.	987	200	소외계층·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 및 청소년 활동을 지원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옥희	2008. 03. 24.	34개 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건강전육성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남정달	1996. 03. 01.	26개 지역청소년단체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유덕순	2002. 10. 11.	27개 지역청소년단체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김성만	2001. 09. 07.	34개 지역청소년단체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정근두	1998. 03. 05.	18개 지역청소년단체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이재덕	2001. 12. 04.	16개 지역청소년단체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김영구	1995. 05. 11.	13개 지역청소년단체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허정현	1992. 09. 26.	9개 지역청소년단체		

자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2015).

부록 3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2015년 10월 기준)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서울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남구청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서울	강남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남구청	대한YWCA연합회 후원회
서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문화의집	노원구청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관악청소년회관	수련관	관악구청	(사)온터두레회
서울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마포구청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마포구청장	마포구청
서울	구립서초유스센터	수련관	서초구	(재)서울기독교청소년회
서울	구립용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용산구청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	국제청소년센터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서울	도봉숲속마을	수련원	박형호	송석문화재단
서울	돈보스코정문화센터	문화의집	로버트제이휘크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서울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사)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서울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작구청	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마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송파구청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마포구청	명지전문대학
서울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울시 동작구청	(사)한국모타리 청소년연합
서울	서울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해명복지원
서울	서울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사)청소년교회연합회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	서울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장	학교법인 명지학원 · 명지전문대학
서울	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서울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재)송석문화재단
서울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재)서울기독교청소년회
서울	서울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사)한국청소년재단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 체)
서울	서울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서울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사)한국청소년하마음연맹
서울	서울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사)한국청소년세상
서울	서울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서울	서울시립중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중구청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신일교회)
서울	서울시립종랑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한국청소년서울연맹
서울	서울시립청동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시	광운대
서울	서울올림픽파크텔	유스호텔	88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	서울유스호텔	유스호텔	서울시	(사)흥사단
서울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	수련관	서초구청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동구청	서울 YMCA
서울	송파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송파구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
서울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양천구청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서울	쌍문동청소년랜드	문화의집	도봉구청장	(사)한국청소년문화활동협회
서울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도봉구청	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창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도봉구청	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청소년미디어센터	특화시설	서울시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하이서울유스호텔	유스호텔	서울시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홍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대문구	한국청소년재단
서울	화곡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서구청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부산	금곡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시	(사)삼동청소년회
부산	부산북구청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산시	(사)삼동청소년회
부산	부산사상구청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시	부산 YMCA
부산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시	(재)불국토청소년도량
부산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시	내원청소년단
부산	금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시	(재)범어청소년동네
부산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유스호텔	부산시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부산	부산중구청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산시 중구청장	(재)내원청소년단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부산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산진구청	(재)부산기독교청년회
부산	기장문화예절학교	수련원	기장군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기장군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구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 서구	재단법인내원청소년단
부산	부산광역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부산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해운대구청	대한적십자사
부산	사하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산시 사하구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대구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수성구청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대구	재)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수련관	북구청장	재)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회관
대구	대구달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달서구청	(재)대구 YMCA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대구시	(재)대구가톨릭청년회
대구	대구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	함께하는마음재단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대구시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대구	팔공산맥심석유스호텔	유스호텔	곽성근	맥심석호
대구	대구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구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수성구청	사회복지법인 동화복지재단
인천	강화청소년심신수련원	수련원	조병돈	조병돈
인천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정신철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성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최성규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인천	서해청소년유스호텔	유스호텔	고재룡	(주)서해교문
인천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가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그레이스힐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서울도시가스(주)	서울도시가스(주)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	화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인천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구청장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인천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재단법인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인천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연수구청장	연수구청
인천	마니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윤성우	(주)마니산수련원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	수련관	인천광역시	성산청소년호재단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동구청
광주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주시	(사)한국청소년인권센터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광주시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주시	광주동구청
광주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재)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광주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주광역시 남구	송원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	광주광역시광산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산구청	(재)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장	(사)흥사단
대전	대전대덕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대덕구	(사)삼동청소년회
대전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대전시	대전 YMCA
대전	도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	(사)대전흥사단
대전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수련원	대전광역시	(사)대전청소년심신수련회
대전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대전 중구청	대전 YWCA
대전	탄방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서구청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서구청	한국걸스카우트대전연맹
대전	삼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서구청	성광청소년문화회관
대전	장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유성구청장	(재)대전카톨릭청소년회
대전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한국살레시오회	(재)한국살레시오회
울산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장영수	(사) 삼동청소년회
울산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울산시 동구청	울산 YMCA
울산	울주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울주군수	울주시설관리공단
울산	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울주군청	울주시설관리공단
울산	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울산시 남구청장	울산 흥사단
울산	울산동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울산광역시 동구	한국 유네스코 울산광역시협회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울산	문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울산 남구청장	한국걸스카우트울산연맹
울산	울산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주향	울산 YWCA
울산	울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북구청	(사)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세종특별자치시장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시지부
경기	광명시립 디딤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명시	(재)광명시인재육성재단
경기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양기대	(재)광명시인재육성재단
경기	대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경근	김경근
경기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경기도	(재)대진청소년회
경기	곤지암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진표	곤지암청소년수련원
경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포시장	(재)군포문화재단
경기	김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포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경기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신필호	통나무수련원딱따구리
경기	만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미리내캠프	수련원	이광섭	쭈미리내
경기	산전호수유스타운	수련원	이종욱	이종욱
경기	새싹동산청려수련원	수련원	김종희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
경기	서삼릉청소년야영장	야영장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신중대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수원시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동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양시장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양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양주시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경기	엄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계두	너리굴문화마을
경기	여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홍영광	홍영광
경기	유스토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성식	용두암청소년수련원
경기	창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이천시장	(사)한국 BBS 경기도연맹 이천시지회
경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천시	(재)부천문화재단
경기	문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경기도 파주시	해피월드복지재단
경기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평택시	(재)평택시청소년교육문화원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경기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평택시	(재)평택시청소년교육문화원
경기	하내테마파크	수련원	전학열	전학열
경기	한울유스센터	수련원	임희순	임희순
경기	한터캠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용실	한터캠프청소년수련원
경기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문화의집	부천시	(재)부천문화재단
경기	고양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양시	고양 YMCA
경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천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경기	평택시 북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사)평택 YFC
경기	평택시 팽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사)평택 YFC
경기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청심국제문화재단	청심국제문화재단
경기	(재)군포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군포시장	(재)군포시청소년수련관
경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산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경기	장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고양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양시	(재)고양문화재단
경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천시	(재)부천문화재단
경기	이천부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이천시	(사)한국 BBS 이천시지회
경기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용인시청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기도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	금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	파주문화원
경기	신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인시청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영통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의왕시	(사)열린청소년육성회
경기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구리시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경기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경기	서경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서남산업개발	박한성
경기	광명시립오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명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경기	광명시립해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명시	(사)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경기	한국스카우트 곤지암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강영중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경기	영산수련원	수련원	(재)순복음선교회-조용기	(재)순복음선교회
경기	아침햇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고재룡	(주)바로교육
경기	덕풍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하남시장	청소년비전센터
경기	(주)축구마을	수련원	김희태	(주)이동청소년수련원
경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한택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경기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시흥시청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기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과천시청	과천시청
경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최영근	화성시청소년수련관
경기	(재)서울YMCA 일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재)서울 YMCA 일산청소년수련원
경기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양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분당정자동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남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남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	안산 YWCA
경기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천시청	부천시기독교청년회
경기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관	포천시청	포천시
경기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남양주시청	남양주도시공사
경기	자연나리수련원	수련원	(주)동심에드피아	(주)동심에드피아
경기	양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양주시청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경기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경기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용인시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권선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수원시장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경기도 김포시청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사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경기도 김포시청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경기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경기도 김포시청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포천염광수련원	수련원	차봉오	주식회사 염광수련원
경기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류화선	파주 YMCA
경기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장석춘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
경기	금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영삼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경기	나래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화성시장	나래울
경기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오산시청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경기	시흥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시흥시	시흥 YMCA
경기	이천시회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이천시	이천시청
경기	양평SN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윤천옥	윤천옥
경기	리치빌리지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리치빌리지	(주)리치빌리지
경기	김포로그밸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형금	김포로그밸리청소년수련원
경기	청학서당예절교육수련원	수련원	서재욱	청학서당예절교육수련원
경기	서봉서원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은희문	서봉서원
경기	여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여주시장	여주시청
경기	덕평수련원	수련원	윤용기	윤용기
경기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가평군	(사)월드유스비전
경기	광명시립너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명시장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경기	당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포시청	(재)군포문화재단
경기	드림아일랜드수련원	수련원	(주)하나레저	(주)하나레저
경기	상천수련원	수련원	김해성	한국기독교예멘성회 선교재단
경기	양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오산시장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가평힐링캠프	야영장	남상환	가평힐링캠프
경기	유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재)용인시	유림청소년문화의집
경기	광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청소년육성재단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안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	(재)평택시청소년
경기	캠핑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평택시	경기관광공사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경기	연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경기	고양시마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양시	재단법인고양문화재단
경기	고양시탄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양시	재단법인고양문화재단
강원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수련원	강릉시장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강원	설악청소년수련의집	수련원	문석민	설악수련의집
강원	호림오대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선애	호림동산
강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원주시	원주 YMCA
강원	원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원주시	원주청소년수련원
강원	횡성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횡성군	(사)한국청소년문화협회
강원	거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	속초 YMCA
강원	둔내유스호텔	유스호텔	로알관광개발주식회사	로알관광개발주식회사
강원	동해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해시	월드비전
강원	강원도치악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강원도지사	(사)한국청소년아외활동협회
강원	미리내 캠프	수련원	이광섭	㈜미리내캠프
강원	동서울유스호텔	유스호텔	㈜동서울레스피아	㈜동서울레스피아
강원	세계유스호텔·인재개발원	유스호텔	강영권	세계유스호텔·인재개발원
강원	안전문화수련원	수련원	정기성	안전문화수련원
강원	도계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삼척시장	삼척시장
강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수련관	철원군	(재)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강원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춘천시	춘천 YWCA
강원	속초시아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속초시청	속초 YMCA
강원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수련원	강원도	한국스카우트연맹
강원	만해마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만해사상실천선양회
강원	영월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월군수·박선규	원주 YMCA
강원	현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	속초기독교청년회
강원	고성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성군수	고성군
강원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원주시청	중앙청소년문화의집
강원	북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인제군	인제군북면사무소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강원	강릉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릉시장	강릉시청
강원	홍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홍천군	춘천 YMCA 박형일
강원	춘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춘천시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강원	강릉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강릉시장	강릉시청
강원	기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인제군수	기린면사무소
강원	원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원주시장	원주 YMCA
강원	철원군병영체험수련원	수련원	철원군수	철원군수
강원	동해시송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해시장	동해시
강원	동해시향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해시장	동해시청
강원	강원도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원도청	(재)춘천교구천주교회
강원	유토피아유스호텔	유스호텔	엄지용	(주)유토피아유스호텔
강원	삼척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삼척시	삼척시
강원	신동청소년이동장학복지센터	문화의집	정선군수	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정선군수	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정선군수	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간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황민혜	간현청소년수련원
강원	춘천시청소년여행의집	유스호텔	춘천시청	춘천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강원	치악산항문유스호텔	유스호텔	이성재	치악산항문밸리(주)
강원	평창유스호텔	유스호텔	김윤한	(주)리드패밀리
강원	화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화천군수	화천군청
강원	원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삼척시	삼척시
강원	횡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횡성군	횡성군
충북	박달재수련원	수련원	이영재	(주)박달재수련원
충북	서당골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최성은	서당골청소년수련원
충북	속리산유스타운	수련원	이인구	계룡산업주식회사
충북	한국전통문화체험학교	수련원	박명숙	월악민속놀이학교
충북	청소년수련마을 보람원	수련원	(재)오운문화재단	(재)오운문화재단
충북	청원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청원군	청주 흥사단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충북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청주시	학교법인 주성학원
충북	화양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남상신	화양청소년수련원
충북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천시	(사)아름다운청소년들
충북	괴산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괴산군수	괴산군청소년수련원
충북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수련원	충청북도	학교법인 주성학원
충북	음성꽃동네사랑의연수원	수련원	오웅진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충북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충주시청	(재)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
충북	증평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증평군	(재)증평복지재단
충북	단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단양군수	단양청소년문화의집
충북	괴산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괴산군청	괴산군청소년문화의집
충북	매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단양군청	매포청소년문화의집
충북	송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묘진	송호청소년수련원
충북	음성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음성군청	(재)레인보우청소년문화재단
충북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은군수	(사)한국 BBS 충북연맹 보은군지회
충북	진천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진천군수	진천군
충북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음성군수	(사)한국 BBS 충북연맹 음성군지회
충북	속리산알프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창환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충북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음성군수	음성군 주민복지실
충북	별방유스타운	수련원	최우성	별방유스타운
충북	제천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제천시	제천시청소년수련원
충남	합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당진군청	당진군청
충남	서해천수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사)한국청소년인성문화추진회	(사)한국청소년인성문화추진회
충남	청양송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장광영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충남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홍성군	홍성군
충남	부여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여군수	부여군청소년수련원
충남	서해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차군규	차군규
충남	만리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홍익대학교	만리포청소년수련원
충남	공주유스호텔	유스호텔	서경원	공주유스호텔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충남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령시장	(사)보령시불교청소년연합회
충남	당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당진시	당진시청
충남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산시장	한서대학교
충남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관	아산시	학교법인(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충남	보령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보령시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충남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군포시	(재)군포문화재단
충남	태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태안군수	태안군시설관리사업소
충남	천안상록유스호텔	유스호텔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리조트
충남	청포대썬셋수련원	수련원	함승우	(주)케이와이엠
충남	대천오성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선우	대천오성청소년수련원
충남	삼정부여유스호텔	유스호텔	박선득	(주)삼정관광호텔
충남	한양여자대학교 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양여자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충남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서천군청	서울 YMCA
충남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공주시장	(사)한국 BBS 대전충남연맹 공주지회
충남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천안시	호서대학교
충남	당진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당진시장	(재)인천 YMCA 청소년재단
충남	미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미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
충남	해가든유스호텔	유스호텔	-	해가든유스호텔
충남	천안시태조산수련관	수련관	천안시장	백석대학교
충남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예산군수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아산늘푸름수련원	수련원	대한청소년총효단연맹	대한청소년총효단연맹
전북	청정테마센터	수련원	이강동	청정인성청소년수련원
전북	한국스카우트송광훈련장	야영장	홍오남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
전북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익산시	(재)한국YMCA 전국연맹 익산 YMCA
전북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	(재)한기장복지재단
전북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산시	군산 YMCA
전북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	(사)흥사단 전북지구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전북	솔내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전주시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익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익산시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정읍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정읍시	정읍 YMCA
전북	진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안군	진안 YMCA
전북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	(사)아모스청소년회
전북	무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무주군	무주청소년수련관
전북	익산 YMCA 청소년수련관	수련관	YMCA	(재)익산 YMCA
전북	남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원시	남원 YMCA
전북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무주군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완주군	봉상청소년육영회
전북	세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조만석	조만석
전북	지리산유스호텔	유스호텔	김광식	(주)남원지리산유스호텔
전북	군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군산시장	군산 YMCA
전북	진안군마이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진안군	(사)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진안지회
전북	부안군청림청소년수련시설	특화시설	부안군청	부안군청림청소년수련시설
전북	무주수련원	수련원	이장호	무주수련원
전북	임실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실군	임실군청소년수련원
전북	우석수련원	수련원	학교법인 우석학원	우석대학교
전북	익산유스호텔	유스호텔	익산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대광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장흥기	대광수련원
전북	상생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전북	전북 JK유스호텔	유스호텔	서정숙	전주기전대학 학교기업 jk여행사
전북	부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안군청	부안군청
전북	모악산유스타운 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최지승	모악산유스타운 청소년수련원
전북	부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안군	부안군청
전남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목포시	목포시
전남	완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옥례	(사)삼동청소년회
전남	진도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도군	(사)삼동청소년회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전남	신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신안군청	(사)서남청소년육성회
전남	스카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규수	(주)홍길동청소년수련원
전남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나주시청	광주 YMCA
전남	영암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암군수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전남	순천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순천시청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남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광양시장	광양기독교청년회
전남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곡성군청	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전남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성군	(사)보성기독교청소년협회
전남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양시장	광양 YMCA
전남	완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완도군수	사단법인 꿈틀
전남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목포시장	목포 YMCA
전남	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박병중	고흥군
전남	남도청소년문화진흥원	수련원	전라남도	남도국제교육원
전남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담양군수	담양군
전남	해남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창완	해남청소년수련원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전라남도	전라남도원도수목원
경북	산내유스호텔	유스호텔	경주시	(사)청소년서라벌문화원
경북	문경새재유스호텔	유스호텔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북	보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손호익	(주)보문청소년수련원
경북	성덕수련원	수련원	(재)성덕도유지재단	(재)성덕도유지재단
경북	국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주환	(주)국민관광농원
경북	서라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삼봉개발(주) 경주지점	삼봉개발(주) 경주지점
경북	Remember 유스호텔	유스호텔	정길수	동아건축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상북도지사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북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문경시장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북	영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천시청	영천시
경북	선유동유스파크	수련원	(주)휴먼레저산업	(주)휴먼레저산업
경북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포항시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경북	울진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울진군수	울진군
경북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울진군수	울진군
경북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상주시장	상주시
경북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상주시	상주시
경북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천시장	김천시청
경북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수련관	칠곡군청	교육문화회관
경북	경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경주시장	경주시장
경북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영양군수	영양군청
경북	오케이그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오케이그린청소년수련원
경북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구미시	구미시청
경남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거제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거창군	흥사단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상남도	한국스카우트경남연맹
경남	김해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김해시	김해시시설관리공단
경남	김해수련장	수련원	이경훈	김해수련장
경남	남해유스타운	수련원	조문권	삼동개발
경남	거제그린유스타운	수련원	진영운	임만규
경남	봉화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선진규	-
경남	산청경호강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신영철	산청경호강청소년수련원
경남	온누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윤현	온누리청소년수련원
경남	지리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조임순	지리산청소년수련원
경남	몽양당청학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보근	몽양당청학동청소년수련원
경남	통영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통영시	한국해양소년단통영거제고성연맹
경남	해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박해운	해운개발(주)
경남	황석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정철상	황석산청소년수련원
경남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원시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남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은동	한려유스호텔
경남	합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합천군	(사)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경남본부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경남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양산시청	양산시
경남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주시	진주시
경남	옥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제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수	고성군
경남	덕유산유스호텔	유스호텔	강철훈	덕유산유스호텔
경남	늘푸른전당	수련관	창원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남	홍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강수명	(사)경남청소년수련원
경남	영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녕군수	(재)푸른쉼터 장학재단
경남	창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녕군수	(재)푸른쉼터 장학재단
경남	양산시청소년회관	수련관	양산시장	양산시
경남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창원시장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남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창군	거창 YMCA
경남	부일수련원	수련원	윤영화	부일수련원
경남	하동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하동군청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하동지회
경남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마산시장	마산 YMCA
경남	청학동서당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서흥석	청학동서당청소년수련원
경남	가배랑리조트수련원	수련원	박영기	주식회사 가배랑리조트수련원
경남	창원시봉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창원시	사단법인 봉림
경남	사랑도천문대수련원	수련원	김학	사랑도천문대
경남	자굴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박주찬	경남사회진흥연수원
경남	진해청소년전당	수련관	창원시장	창원시
제주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북제주군	(사)한국청소년마을
제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	서귀포 YMCA
제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	도남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
제주	법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장	법환동청소년문화의집
제주	송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	송산동청소년지도협의회
제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시장	제주시
제주	강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시도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설치주체	운 영 자 (단체)
제주	예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장	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
제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시	제주시
제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시	제주시
제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시장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제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시	제주시
제주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시	제주시
제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제주시	제주시
제주	도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시	도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제주	조이빌제주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이재형	㈜아트오브리빙

자료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5).

부록 4

▶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2015년 10월 기준)

지역	쉼터명	유형	성별	정원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일시(고정형)	남	15명	02-6435-7979
서울	강서청소년쉼터	단기	남	8명	02-2697-7377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단기	여	20명	02-3281-8200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중장기	여	10명	02-6959-1011
서울	망우청소년단기쉼터	단기	여	20명	02-493-1388
서울	어울림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7명	02-302-9006
서울	성심디딤돌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7명	02-302-9600
서울	신림청소년단기쉼터	단기	남	20명	02-876-7942
서울	신림청소년중기쉼터	중장기	남	10명	02-3281-7942
서울	강남구청청소년쉼터	단기	남	15명	02-512-7942
서울	서울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일시(고정형)	남, 여	10명	02-718-1318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권)	일시(이동형)	남, 여	15명	02-722-1318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일시(이동형)	남, 여	15명	02-722-1318
부산	부산광역시일시(고정형)청소년쉼터	일시(고정형)	남, 여	15명	051-303-9670
부산	부산광역시일시(이동형)쉼터	일시(이동형)	남, 여	-	051-303-9677
부산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15명	051-756-0924
부산	부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15명	051-303-9672
부산	부산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10명	051-581-1388
부산	부산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7명	051-303-9671
대구	달서구청청소년쉼터	단기	남	15명	053-526-1317-8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쉼터	단기	여	10명	053-659-6290
대구	대구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7명	053-426-2275
대구	대구광역시 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7명	053-426-2276
대구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남, 여	10명	053-764-1388

지역	센터명	유형	성별	정원	전화번호
인천	한울타리	고정형	남, 여	15명	032-516-1318
인천	꿈꾸는별	고정형	남, 여	15명	032-817-1318
인천	우리들	단기	남	15명	032-442-1388
인천	바다의별	단기	남	20명	032-438-1318
인천	하모니	단기	여	15명	032-468-1318
인천	하늘목장	단기	여	15명	032-528-2216
인천	별마루	중장기	남	10명	032-875-7718
인천	예꿈	중장기	여	10명 미만	032-465-1393
광주	일시쉼터	이동형	남, 여	야간보호 8명	062-527-1318
광주	여자단기쉼터	단기	여	10명	062-525-1318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단기남자쉼터	단기	남	10명	062-227-1388
광주	광주광역시중장기쉼터(맥지쉼터)	중장기	여	7명	062-366-1318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중장기남자쉼터	중장기	남	10명	062-714-1388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이동일시쉼터	일시(이동형)	-	-	042-221-1092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드롭인센터	일시(이동형)	-	-	042-673-1092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남자쉼터	단기	남	15명	042-223-7179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	단기	여	15명	042-256-7942
대전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남자쉼터	중장기	남	7명	042-528-7179
대전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여자쉼터	중장기	여	10명	042-534-0179
울산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10명	052-261-1388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10명	052-223-5186
울산	울산남구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10명	052-269-1388
울산	울산남구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10명	052-265-1388
경기도	수원남자청소년쉼터	단기	남	15명	031-232-4866
경기도	수원여자청소년쉼터	단기	여	15명	031-232-7982
경기도	세날을여는청소년쉼터	단기	여	15명	031-758-1213
경기도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15명	031-722-6260
경기도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10명	031-758-1720

지역	센터명	유형	성별	정원	전화번호
경기도	성남시중장기남자청소년센터	중장기	남	10명	031-752-5090
경기도	성남시청소년일시센터	일시	남,여	12명	031-758-1388
경기도	부천모퉁이청소년센터	단기	여	12명	032-343-1880
경기도	부천시청소년일시센터	일시(고정형)	남, 여	15명	032-654-1318
경기도	용인푸른꿈청소년남자센터	단기	남	14명	031-276-0770
경기도	용인푸른꿈청소년여자센터	중장기	여	10명	031-264-7733
경기도	청소년쉼터한신	단기	여	15명	031-485-0078
경기도	청소년쉼터징검다리	단기	남	20명	031-481-8231
경기도	민들레뜨락	일시(고정형)	남, 여	12명	031-464-1388
경기도	안양청소년센터 FOR YOU	단기	남자	15명	031-455-9182
경기도	안양청소년센터 호숙생활관	중장기	여	10명	031-468-5141
경기도	평택시청소년센터	단기	여	14명	031-652-1384
경기도	시흥시단기여자청소년센터	단기	여	14명	031-434-1318
경기도	청소년쉼터하나로	중장기	남	10명	031-399-7997
경기도	화성시청소년여자센터	단기	여	14명	031-227-7935
경기도	고양열린청소년센터	중장기	여	15명	031-918-1366
경기도	고양청소년센터 동지	단기	남	15명	031-969-0091
경기도	남양주시일시청소년센터	일시(고정형)	남, 여	12명	031-591-1319
경기도	의정부시여자청소년센터	단기	여	15명	031-837-1318
경기도	의정부시남자청소년센터	단기	남	15명	031-829-1318
경기도	의정부시이동청소년센터	일시(이동형)	남, 여	9명	031-871-1318
경기도	구리여자청소년센터	중장기	여	10명	031-564-7707
강원도	강원도단기남자청소년센터	단기	남	15명	033-255-1002
강원도	강원도단기여자청소년센터	단기	여	15명	033-255-1004
강원도	강원도중장기남자청소년센터(보금자리)	중장기	남	8명	033-244-5118
강원도	강원도중장기여자청소년센터(루치아)	중장기	여	7명	033-735-1320
강원도	강원도일시청소년센터	일시(고정형)	남, 여	10명	033-256-0924
충북	충청북도중장기센터	중장기	남	7명	043-266-2204

지역	센터명	유형	성별	정원	전화번호
충북	청주청소년쉼터	단기	남	15명	043-231-2676
충북	청주시청소년쉼터 느티나무	단기	여	10명	043-276-1318
충북	청주시청소년일시(이동형)쉼터	일시(이동형)	남, 여	8명	043-225-1888
충북	충주시디딤돌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7명	070-7758-1690
충남	천안청소년단기남자쉼터	단기	남	12명	041-578-1389
충남	천안청소년단기여자쉼터	단기	여	12명	041-576-1316
충남	천안청소년중장기쉼터	중장기	남	8명	070-7726-0209
충남	아산시육련청소년남자단기쉼터	단기	남	14명	041-548-1326
충남	청로일시청소년쉼터	일시	남, 여	8명	041-634-6564
충남	청로여자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8명	041-631-6560
전북	임미누엘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8명	063-244-1774
전북	전주푸른청소년쉼터	단기	여	10명	063-903-1091
전북	전주청소년한울안쉼터	단기	남	12명	063-251-3530
전북	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7명	063-451-1091
전북	익산청소년일시쉼터	일시,단기	남, 여	13명	063-838-1091
전남	목포시단기남자청소년쉼터	단기	남	10명	061-278-1388
전남	목포시단기여자청소년쉼터	단기	여	10명	061-283-1088
전남	목포시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10명	061-287-1388
전남	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10명	061-661-0924
전남	일시보호남자쉼터	일시(고정형)	남	10명	061-644-0918
경북	경북청소년여자쉼터	중장기	여	7명	054-857-6137
경북	경북청소년남자쉼터	단기	남	12명	054-455-1234
경북	포항여자쉼터	중장기	여	7명	054-244-1318
경북	포항남자쉼터	중장기	남	7명	054-284-1318
경북	구미청소년쉼터	단기	여	12명	054-444-1388
경북	울진청소년쉼터	일시	-	7명	054-781-8006
경남	꿈누리 청소년쉼터	일시(고정형)	남, 여	10명	055-825-7361
경남	하리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10명	055-237-1318

지역	센터명	유형	성별	정원	전화번호
경남	김해 YMCA 단기여자청소년쉼터	단기	여	10명	055-332-1318
경남	마야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7명	055-274-0924
경남	클라라의집	중장기	여	4명	055-745-1316
제주	제주청소년일시쉼터	일시(고정형)	남, 여	12명	064-796-0922
제주	제주청소년쉼터	단기	여	10명	064-751-1388
제주	성지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7명	064-759-1388
제주	온누리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10명	064-733-1376
제주	동광청소년쉼터	단기	남	8명	064-762-0361

자료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e-콜링 cyber1388 홈페이지 www.cyber1388.kr).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2015년 11월 기준)

시도명	시 설 명	운 영 주 체
서울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서울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흥사단
서울	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법인 광운대학교
서울	서울특별시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법인 광운대학교
서울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서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서울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푸른나무 청예단
서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등포구청
서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청예단
서울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한국청소년세상
서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서울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 흥사단
서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서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참만남 가족운동
서울	서울특별시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온터드레히
서울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구로건강복지센터
서울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송석복지재단

시도명	시 설 명	운 영 주 체
서울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북구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한국청소년부산광역시연맹
부산	부산광역시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불국토 청소년도량
부산	부산광역시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범어청소년동네
부산	부산광역시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북구
부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한적십자사
부산	부산광역시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동명대학교
부산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이로운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인천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천남구
인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인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천부평구
인천	인천광역시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인천광역시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
광주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대학교
광주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인권센터
광주	광주광역시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재육성아카데미
광주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시도명	시 설 명	운 영 주 체
대전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 온누리청소년문화재단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울산 YWCA
울산	울산광역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마이코즈
울산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울산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울산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시지부
경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대건청소년회
경기	경기도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경기도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경기도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외전화
경기	경기도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경기도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제일청소년회
경기	경기도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경기도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택 YMCA
경기	경기도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흥기독교청년회
경기	경기도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성 YMCA
경기	경기도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청예단 경기지부
경기	경기도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군포시
경기	경기도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장신대학교
경기	경기도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경기도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천 YMCA
경기	경기도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원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경기도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산청년회의소
경기	경기도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남시
경기	경기도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재육성재단
경기	경기도여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여주시

시도명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경기	경기도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양평군
경기	경기도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경기도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법인 고양 YMCA
경기	경기도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양주시
경기	경기도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정부 YMCA
경기	경기도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파주청년회의소
경기	경기도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경기	경기도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양주시
경기	경기도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북대학교
경기	경기도동두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법무부범죄예방위원동두천지구협의회
경기	경기도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월드유스비전
경기	경기도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 심동청소년회 연천지회
강원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천주교 춘천교구
강원	강원도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원주 YMCA
강원	강원도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강릉기독교청년회(강릉 YMCA)
강원	강원도동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 푸른동해
강원	강원도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 강원연맹
강원	강원도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강원	강원도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춘천 YMCA
강원	강원도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원주 YMCA
강원	강원도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 강원연맹
강원	강원도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철원군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충청북도
충북	충청북도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법인 유스투게더
충북	충청북도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
충북	충청북도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충북	충청북도청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원군

시도명	시 설 명	운 영 주 체
충북	충청북도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한국 BBS 충북연맹 보은군진회
충북	충청북도옥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옥천군
충북	충청북도영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영산학원
충북	충청북도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평복지재단
충북	충청북도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천군
충북	충청북도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괴산군
충북	충청북도음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한국 BBS 충북연맹 음성군지부
충북	충청북도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혼합직영(개인사업자등록)
충남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남	충청남도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천안시
충남	충청남도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한국 BBS 대전충남연맹 공주지회
충남	충청남도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
충남	충청남도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충남	충청남도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서산복지재단
충남	충청남도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논산시
충남	충청남도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삼동청소년회계몽지회
충남	충청남도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당진시
충남	충청남도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금산문화원
충남	충청남도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충남	충청남도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천청년회의소
충남	충청남도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충남	충청남도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충남	충청남도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충청남도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태안청년회의소
전북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전북	전라북도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 YWCA
전북	전라북도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군산시

시도명	시 설 명	운 영 주 체
전북	전라북도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익산시
전북	전라북도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읍시
전북	전라북도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원시
전북	전라북도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제시
전북	전라북도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완주군
전북	전라북도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안군
전북	전라북도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전라북도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수군
전북	전라북도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실군
전북	전라북도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 YMCA
전북	전라북도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창군
전북	전라북도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안군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전라남도청소년 미래재단
전남	전라남도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목포시
전남	전라남도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수 YWCA
전남	전라남도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순천시
전남	전라남도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법인 해인학원
전남	전라남도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양 YMCA
전남	전라남도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전라남도청소년 미래재단
전남	전라남도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 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전남	전라남도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보성기독교청소년협회
전남	전라남도화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후협회화순지회
전남	전라남도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한들청소년센터
전남	전라남도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단법인삼동청소년회
전남	전라남도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연사랑메아리
전남	전라남도영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암군
전남	전라남도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안군

시도명	시 설 명	운 영 주 체
전남	전라남도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아름다운청소년들 영광지부
전남	전라남도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두리사랑 상담치료 연구소 장성지부
전남	전라남도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단법인 꿈들
전남	전라남도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도군
전남	전라남도합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케이멘토근로보리더스쿨
전남	전라남도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흥군
전남	전라남도구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례군
전남	전라남도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안군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북	경상북도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북	경상북도경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주시
경북	경상북도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천시
경북	경상북도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동시
경북	경상북도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미시
경북	경상북도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주시
경북	경상북도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천시
경북	경상북도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주시
경북	경상북도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경시
경북	경상북도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산시
경북	경상북도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송군
경북	경상북도성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주군
경북	경상북도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칠곡군
경북	경상북도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천군
경북	경상북도울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진군
경북	경상북도의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성군
경북	경상북도청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도군
경북	경상북도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령군

시도명	시 설 명	운 영 주 체
경북	경상북도봉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봉화군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본부
경남	경상남도창원시(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창원시
경남	경상남도창원시(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창원시
경남	경상남도창원시(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창원시
경남	경상남도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주시
경남	경상남도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영시
경남	경상남도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경남	경상남도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시
경남	경상남도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법인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경상남도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제시
경남	경상남도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양산시
경남	경상남도의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령군
경남	경상남도함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함안군
경남	경상남도창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창녕군
경남	경상남도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성군
경남	경상남도남해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해군
경남	경상남도하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동군
경남	경상남도산청군청소년복지상담센터	산청군
경남	경상남도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함양군
경남	경상남도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창군
경남	경상남도합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합천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법인 성지문화재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불리선청소년진흥회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법인 성지문화재단

자료 : 여성가족부(2015).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시도명	센터 명칭	운영기관	센터 주소
서울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연맹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1
대구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41934)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흥사단	(61477)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226번길 13-3번지 흥사단회관 2층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대전광역시불교청소년연합회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 평송청소년문화센터 3층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44660)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시 지부	(3002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8길 22-13 풍산아파트상가 101동 106호
경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대건청소년회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2층
강원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26428)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충청북도	(285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도청 제3별관
충남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4층
전북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550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31, 3층
전남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경북	(재)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재)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경남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514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성지문화재단	(63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4

자료 : 여성가족부(2015).

(2015년 10월 기준)

시도명	기관명	주소
서울	서울특별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54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 7층 Tel : 02) 2285-1318
서울	강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44, 2층 Tel : 02) 2226-8555
서울	강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012)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3층 Tel : 02) 6715-6660~6
서울	도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412)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청소년수련관 1층 Tel : 02) 950-9640
서울	종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2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마산로 217 Tel : 02) 490-0222
서울	강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64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2길 23-19 강서청소년회관 3층 Tel : 02) 3662-1388
서울	용산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318)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69 가길 2, 1층 Tel : 02) 706-1318
서울	구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256)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49 (공동204-4) 3층 Tel : 02) 863-1318
서울	서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6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30길 45-9 Tel : 02) 3141-1318
서울	금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6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30길 54 Tel : 02) 803-1873
서울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66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193-25 Tel : 02) 2091-1388
서울	영등포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3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로 110 Tel : 02) 2676-6114
서울	광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05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631, 3층 Tel : 02) 2205-2300
서울	마포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Tel : 02) 3153-5900
서울	서초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67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로5길 Tel : 070) 4585-1837~8

시도명	기 관 명	주 소
서울	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Tel : 02) 384-1318
서울	동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065)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Tel : 02) 834-1355
서울	관악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82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문화복지기념관 1층 Tel : 02) 877-9400
서울	성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8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42 Tel : 02) 3292-1780
서울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Tel : 02) 2237-1318
서울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2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Tel : 02) 6252-1388
서울	송파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7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55-7 금호빌딩 301호 Tel : 02) 3402-1318
서울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596)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5길 19 Tel : 02) 2250-0543
서울	성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0 Tel : 02) 2299-1388
부산	부산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943)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1층 Tel : 051) 304-1318, 1381
부산	동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736)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71 울곡빌딩 6층 Tel : 051) 558-8833
부산	해운대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0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 Tel : 051) 780-1855
부산	영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113)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321 Tel : 051) 405-5224
부산	부산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Tel : 051) 868-0950
부산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57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3(구포동) Tel : 051) 334-3003
부산	기장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027)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음산길 106 Tel : 051) 792-4926-7
부산	금정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26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96번길 47 Tel : 051) 581-2072

시도명	기 관 명	주 소
부산	연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526)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2, 거제교회드림센터 Tel : 051) 501-0142
부산	수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303)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2층 Tel : 051) 759-8422
부산	사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931)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129 Tel : 051) 316-2214
부산	강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7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31 Tel : 051) 972-4595
부산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234)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45번길 20 Tel : 051) 714-0701
대구	대구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918)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06 신동영빌딩 2층 두드림존 Tel : 053) 431-1388~7
대구	수성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범어동, 범어도서관 5층) Tel : 053) 759-8890
대구	달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609)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11길 33 Tel : 053) 592-1378
대구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452)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4 Tel : 053) 652-5656
대구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41, 5층 Tel : 053) 422-2121
대구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099)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22길 3 (2층) Tel : 053) 963-9400
대구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727) 대구광역시 서구 옥산로6길 9 Tel : 053) 262-8310
대구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516)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7 Tel : 053) 384-6985
대구	달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98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Tel : 053) 617-1388
인천	인천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134)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864번길 아카데미프라자 3, 4층 Tel : 032) 721-2300
인천	계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02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37(방축동) 4층 Tel : 032) 547-0855
인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77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92(원창동) Tel : 032) 584-1388

시도명	기 관 명	주 소
인천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136)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82 Tel : 032) 862-8751
인천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309)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5동 인천동주민센터 3층 Tel : 032) 765-1009
인천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38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37번길 1 부평1동주민센터 3층 Tel : 032) 509-8916
인천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543)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2 Tel : 032) 777-1389
인천	남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복지관 1층 Tel : 032) 472-2533-4
인천	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9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429 4층 Tel : 032) 749-6295
광주	광주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985)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179번길 63 Tel : 062) 376-1324
광주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998)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북개로 156 Tel : 062) 710-1388
광주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727)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93 Tel : 062) 673-1388
광주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132)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86 (문흥동) Tel : 062) 268-1318
광주	광산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2359)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28 (우산동) Tel : 062) 951-1380
광주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502)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34 Tel : 062) 673-1318
대전	대전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463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청소년위캔센터 6층 Tel : 042) 222-1388
대전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5334)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72(도마동) Tel : 042) 527-1388
대전	유성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4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80 청영빌딩 6층 Tel : 042) 221-1516
울산	울산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532)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76(성남동) 알리안츠생명빌딩 3층 Tel : 052) 227-2000
울산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692)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106 마이코즈 3층 Tel : 052) 291-1388

시도명	기 관 명	주 소
울산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011)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9길 13(서부동) Tel : 052) 232-5900
울산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22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81(호계동) 중앙빌딩 4층 Tel : 052) 283-1388
울산	울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500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 4, 4층 Tel : 052) 229-9634-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003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산택1길 65 Tel : 044) 867-2000
경기	경기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행정동우회관 1층 Tel : 031) 248-1318
경기	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43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25-9 Tel : 031) 756-1388
경기	안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9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 Tel : 031) 8045-2745
경기	광명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241)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4 Tel : 02) 809-2000
경기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초지종합사회복지관 4층 Tel : 031) 414-1318
경기	용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4층 Tel : 031) 324-9300
경기	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779)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350-17 광주시청소년수련관 4층 상담실 Tel : 031) 760-8741
경기	구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922)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10, 2층 Tel : 031) 568-6353
경기	남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76, 2층 Tel : 031) 590-3951
경기	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59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Tel : 032) 325-3002
경기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5829)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2, 3층 Tel : 031) 390-1450
경기	시흥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914)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79(은행동) Tel : 031) 318-7100
경기	양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553)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137번길 18 양평어린이집 4층 Tel : 031) 775-1317

시도명	기 관 명	주 소
경기	하남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지하1층 Tel : 031) 790-6304
경기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828) 경기도 과천시 참마들로 9 Tel : 02) 2150-3991
경기	김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099) 경기도 김포시 걸포로 76 Tel : 031) 980-1680
경기	동두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357)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1002번길 8 Tel : 031) 865-2000
경기	수원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48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수원청소년문화센터 B1 Tel : 031) 237-0327
경기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492)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205 청소년문화의집 2층 Tel : 031) 8082-4121
경기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371)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60, 3층(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 Tel : 031) 634-2777~5
경기	평택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903)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16 (합정동 392) Tel : 031) 646-5434-5
경기	고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5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39 Tel : 031) 970-4003
경기	오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8136)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78번길 3 Tel : 031) 372-4004
경기	파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894)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6층 Tel : 031) 946-0022
경기	여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636)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6-8 Tel : 031) 882-8889
경기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41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120 Tel : 031) 582-2000
경기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18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523번길 59-56 Tel : 031) 538-3398-9
경기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7 Tel : 031) 872-2700
경기	의왕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077) 경기도 의왕시 문화공원로 33번지 Tel : 031) 452-1388
경기	안성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591) 경기도 안성시 낙원길 108 Tel : 031) 676-1318

시도명	기 관 명	주 소
경기	화성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8372)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Tel : 031) 225-1318
강원	강원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4272)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167 Tel : 033) 257-9805
강원	강릉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교동) 2층 Tel : 033) 655-1388
강원	원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475)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34, 4층 Tel : 033) 744-1388,1318
강원	홍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13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2길 31 Tel : 033) 432-1386
강원	영월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23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Tel : 033) 375-1318
강원	철원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403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39번길 52호 Tel : 033) 450-5388
강원	정선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15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12-6 Tel : 033) 591-1311
강원	동해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728)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520 Tel : 033) 535-1038
충북	충청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5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충청북도청 제3별관 3층 Tel : 043) 257- 0105~6
충북	청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54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30 청하빌딩 5층 Tel : 043) 223-0753
충북	충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411) 충청북도 충주시 증원대로 3324 충주시청소년수련원1층 Tel : 043) 856-7804
충북	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152)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번지 제천시 보건복지센터 4층 Tel : 043) 642-7939
충북	서청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43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51번길 56번지(송정동) 청주시청소년수련관 3층 Tel : 043) 264-8807~8
충북	단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012)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187-18, 2층 Tel : 043) 421-8370
충북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702)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동길 122, 2층 Tel : 043) 872-9024
충북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93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4 Tel : 043) 542-1388

시도명	기 관 명	주 소
충북	옥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904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 Tel : 043) 731-1388
충북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914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 Tel : 043) 744-5700
충북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복지로 64-2 Tel : 043) 835-4188
충북	진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0, 4층 Tel : 043) 536-3430
충북	괴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객정로 99-15 Tel : 043) 830-3828
충남	충청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3-4층(두정동진암빌딩) Tel : 041) 554-1380
충남	서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967)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 136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3층 Tel : 041) 669-2000
충남	아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513)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3층 Tel : 041) 532-2000, 541-0039
충남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12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1 4층 Tel : 041) 523-1318
충남	논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424 논산시청소년수련관 1층 Tel : 041) 736-2041
충남	공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546)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57 Tel : 041) 854-7942
충남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466) 충청남도 보령시 문화원길9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3층 Tel : 041) 936-5710
충남	홍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293)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744번길 14 Tel : 041) 642-1388
충남	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42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 Tel : 041) 335-1388
충남	계룡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829)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문화로 31 문화예술의전당 3층 Tel : 042) 841-0343
충남	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737)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7 Tel : 041) 751-2007
충남	서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643)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46, 2층 Tel : 041) 953-4040

시도명	기관명	주소
충남	청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330)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221 Tel : 041) 942-9596
충남	태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9 Tel : 041) 674-2800
충남	당진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772)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2-26 Tel : 041) 360-6961
전북	전라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93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6 Tel : 063) 273-1388
전북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121) 전라북도 군산시 동리2길 7(삼학동) Tel : 063) 468-2870
전북	무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514)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4 Tel : 063) 324-6688
전북	전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08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마리로 94 Tel : 063) 227-1005
전북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762) 전라북도 남원시 광한북로 94-13 Tel : 063) 633-1977
전북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34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Tel : 063) 291-3303
전북	순창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6047)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192 Tel : 063) 652-1388
전북	익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621)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00 Tel : 063) 852-1388
전북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6190)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4 Tel : 063) 531-3000
전북	김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378) 전라북도 김제시 오촌길 45 Tel : 063) 545-0112
전남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726)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길 22 반딧불작은도서관 2~3층 Tel : 061) 242-7474
전남	광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79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 (중동 1658번지) Tel : 061) 795-7008
전남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04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6-10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 2층 Tel : 061) 353-6388
전남	목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684)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83번길 14 (목련아파트복지동 2층) Tel : 061) 284-0924

시도명	기 관 명	주 소
전남	여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739)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4길 6-4(고소동 636-4) Tel : 070) 8824-1318
전남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9, 2층 Tel : 061) 537-1318
전남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941)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25번지 2층 Tel : 061) 749-4236
전남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341)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83 담양읍사무소 2층 Tel : 061) 381-1382
전남	보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453)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9, 2층 Tel : 061) 853-1381
전남	강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23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1길 10 강진복지타운 3층 Tel : 061) 432-1388
전남	곡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53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문화의집 3층 Tel : 061) 363-9586
전남	장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매화6길 8 Tel : 061) 393-1388
전남	함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149)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54(기각리 893) Tel : 061) 323-9995
전남	신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내 보건소동 3층 Tel : 061) 240-8703
전남	무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517)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공향로 345 Tel : 061) 454-5283
경북	경상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Tel : 054) 850-1003
경북	포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76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533 청소년수련관 1층 Tel : 054) 280-9479, 9481
경북	구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22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 11길 13(원평동120-18번지) Tel : 054) 472-2000, 1388
경북	문경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949)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50 Tel : 054) 550-6600
경북	울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324)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 47 Tel : 054) 781-0079
경북	안동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42 안동시청소년수련관 2층 Tel : 054) 841-7937

시도명	기 관 명	주 소
경북	경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088)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131 Tel : 054) 760-7744-5
경북	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570) 경상북도 김천시 다삼로 3(다수동) Tel : 054) 431-2009
경북	영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3 Tel : 054) 639-5865
경북	영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844) 경상북도 영천시 운동장로 92(교촌동) 2층 Tel : 054) 338-2000
경북	상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7159) 경상북도 상주시 북상주로 24-42 상주시청소년수련관내 1층 Tel : 054) 537-6723-4
경북	경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627)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75 Tel : 054) 815-4106
경북	봉화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238)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1길 17-20 Tel : 054) 674-1318
경남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본부: (514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3층 (삼동동) 두드림·해밀: (5141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 33번길 19 대원프라자 303호 Tel : 055) 273-1310
경남	창원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4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늘푸른전당 1층 Tel : 055) 225-3893-4
경남	양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583)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길 36 2층(중부동, 청소년회관) 웅상분소: (50520)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대로 1009-1 지하1층 Tel : 055) 372-2000 / 웅상분소: 055) 367-1318
경남	거창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1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리 100-30번지 Tel : 055) 940-3969
경남	김해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912)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구산동) Tel : 055) 324-9190
경남	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561)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 4길 23 Tel : 055) 832-7942
경남	거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3246)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46 Tel : 055) 639-4981
경남	통영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3078)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194 통영시청소년수련원 3층 Tel : 055) 644-2000
경남	진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695)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60 신안동주민센터 3층 Tel : 055) 744-2000

시도명	기 관 명	주 소
경남	밀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436)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송림길 26 Tel : 055) 355-2000
경남	고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93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4길 13 청소년문화의집 3층 Tel : 055) 670-2921
경남	함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04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 함안군청소년수련관 2층 Tel : 055) 580-2387
경남	합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236)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2길 15 Tel : 055) 930-3911
경남	의령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15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Tel : 055) 570-2427
경남	남해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401) 경상남도 남해 읍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3층 Tel : 055) 863-5279
경남	하동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32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청소년수련관 3층 Tel : 055) 883-3000
경남	산청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226)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 Tel : 055) 970-6591
경남	함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03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필본산길 55 종합사회복지관 3층 Tel : 055) 963-792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3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4(2F) Tel : 064) 759-9951
제주	서귀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35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94, 3층 Tel : 064) 763-9191
제주	제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30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95 단일빌딩 3층 Tel : 064) 725-7999

자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이트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 가족치유캠프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인터넷 중독 청소년 가족치유캠프와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가족치유캠프가 있다.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제로 인하여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4~6학년 초등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 진행되는 치료캠프이다.

▣ 경제활동인구 (經濟活動人口,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 가운데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있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14~15세 이상의 인구 중 학생·주부·환자 등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인구이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다.

▣ 고교평준화(高校平準化)

지역별로 전체 학생을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나누어 배정하는 교육제도이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 명문 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 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인구의 도시집중과 대도시로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 등을 막기 위해 1974년에 도입되었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教育福祉于先支援事業)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하며, 선정된 학교에서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심리, 정서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1년에 5조원 규모다. 낙후지역 개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해 예방 사업지원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계정(약 4조원),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사업 계정(약 1조원)으로 구성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國民基礎生活保障受給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 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 국제금장총회(International Gold Event)

국제청소년포상제를 고안한 영국의 에든버러 공작이 만든 또 다른 제도로, 국제청소년성추 포상제에서 금장을 받은 40개국 100명의 금장 포상청소년이 참석하는 네트워크 공간이다.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만 14~25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청소년 자신 및 지역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국제적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 기소유예제도(起訴猶豫制度)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 다자주의(多者主義, Multilateralism)

지역적·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포괄적 상호주의를 뜻한다. 무역문제에서의 다자주의는 국가 간 협력 촉진을 위해 범세계적 협의체를 두고 규범·절차를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자는 접근방식을 말한다. WTO나 우루과이라운드

(UR), 도하개발어젠다(DDA)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는 양자주의(兩者主義), 지역주의(地域主義) 등이 있다.

▣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학력 경쟁 중심으로 치우친 교육 상황에서 전인교육, 공동체 정신이 깃들어 있는 교육을 하고자,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35% 범위 내에서 자율운영이 가능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두드림존(Do Dream Zone)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는 학업중단, 가출, 시설퇴소 등 자립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총괄적인 자립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때 '두드림'이란 영문 'Do Dream'으로, '꿈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말 '두드림'으로 '미래의 문을 두드리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자신의 의지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밝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뜻을 가진다.

▣ 두드림·해밀

두드림·해밀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다. 두드림·해밀의 울타리 안에서 청소년들은 개인 혹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누구에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미래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며 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체험학습을 통해 역량과 자립심을 키워간다.

▣ 드림스타트(Dream Start)

드림스타트의 시초는 학대, 방임 아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06년 2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이다. 2007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으로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사업 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레드 존(Red Zone)

윤락가나 유흥가, 숙박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범칙·비행·탈선 위험이 있는 유해환경에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일컫는 말이다. 레드 존은 「청소년 보호법」 제4장제31조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명시되어 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유럽의 정치통합과 경제 및 통화 통합을 위한 유럽통합조약으로 유럽공동체(EC)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진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1991년 12월 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EC 정상간 합의되고 1992년 2월 7일 EC 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유럽

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사용의 경제통화 동맹, 노동조건 통일의 사회부문, 공동방위정책, 유럽 시민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면접교섭권(面接交渉權)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 명목임금(名目賃金, Nominal Wage)

노사 간 임금교섭을 통하여 매년 결정되는 임금을 보통의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을 명목임금이라 한다. 임금을 특히 명목임금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임금의 인상이 있었을 때 그것이 당시의 화폐단위로 표시되었을 뿐 물가상승과의 비교 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이다. 학생 보살핌, 청소년 보호선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인성, 창의성, 특기 계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 하되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 보건복지콜센터(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해서 필요한 보건복지, 사회복지, 인구 정책, 위기 대응 관련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산학협동(産學協同)

학계와 산업계가 교육의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산업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자매결연·협정 등의 방법을 통해 서로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을 산업체에 파견하여 현장실습경험을 얻게 하거나 학계와 산업계 인사가 상호 교류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계 자원인사들의 교육 참여 등 각종 인적·물적 교류 관계가 모두 이에 포함된다.

▣ 선도위탁제도(善導委託制度)

범죄예방위원회에 의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하고,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되어있다.

▣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

(Global Youth Service Day)

매년 4월에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1988년에 시작되었다. 현재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래된 봉사 관련 행사이다. 이는 해마다 120개 국가에서 기념되고 있으며,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유일한 봉사의 날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적 행동에 동참해오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외국인 100만 시대의 새로운 이웃과의 소통을 위한 '다문화 자원봉사', 2011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와 '성년의 날 기념 자원봉사',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주제로 활동이 진행되었다.

▣ 소년·소녀가정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수형 등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 부득이한 경우 20세까지 연장 가능)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 실종아동전문기관

(Center for Missing Children)

실종아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발생 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실종아동의 가족지원 및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우리나라의 아동과 관련한 정책, 제도, 환경 등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근거로 필요한 입법 및 행정 조치와 개선안을 마련하여 아동권리를 신장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아동 권리에 대한 정보 수집,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 감시, 법·정책·서비스 개선 촉구, 아동권리 및 협약에 대한 홍보 기능을 수행한다.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UN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국내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주 임무로, 지난 2006년 1기, 2008년 2기를 배출한 바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 일반원칙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 ▲ 특별보호조치 등 각 영역별 활동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추천대상은 UN 아동권리협약 분야별로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이며, 전국 10개 지역별 5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 된다. 활동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Child Protection Agency)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 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 아동빈곤율(兒童貧困率)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아동 중 최저생계비 이하인 아동 가구에 사는 아동 수를 백분율화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에 속한 가족의 비율을 절대빈곤율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아동에 대입한 빈곤율이다.

▣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 (Accident Mortality Among Children)

교통·추락·익사·화상 등의 안전사고로 1년 동안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 및 아동 10만 명당 비율을 말한다.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Devotion to Best Interests of the Child)

무차별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원칙, 어린이 의견 존중 원칙과 함께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공사의 사회 복지기관, 법원·행정·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모든 아동 관련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아동학대(兒童虐待, Child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한 경우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으로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전화상담 : 1577-1391

▣ 아시아 청소년 초청연수

미래의 아시아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연수 및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체험을 통해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아시아 청소년 간 화합의 인식 확산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우호 의식 확산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였다.

▣ 아웃리치(Outreach)

일반적으로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아웃리치는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현장에 나가 그들에게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러 이유로 인해 복지 기관이나 상담소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구제·지원활동을 말한다. 그 예로, 성매매집결지 현장시범활동에서는 정기적으로 성매매 현장에 찾아가 여성들에게 탈성매매와 자립에 관련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며, 노숙인 지원단체나 청소년 단체 등에서도 직접 거리로 나가 노숙인이나 청소년을 만나 상담 활동을 전개한다.

▣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거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우범소년(虞犯少年)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일컫는다.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본인을 보호·교도·개선시키기 위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보안처분(보호처분)을 과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예로 되어 있다. 한국의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矯正)을 위하여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자원봉사자들이 통학 방향이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라는 뜻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인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걸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의 앞뒤에서 횡단 보도나 인적인 드문 곳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는 2010년 5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과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워킹스쿨버스를 출범시켰다.

▣ 유네스코학생협회(KUSA, The national federation of Korea UNESCO Student Associations)

지성의 요람인 대학에서 유네스코의 이념을 전파하고 건강한 대학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유네스코 학생 동아리이다.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시위의

혼란 속에서 학생운동과 그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대학 캠퍼스가 황폐화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없었던 1960년대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학원의 풍토를 반성하고 대학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고자 했던 학생지도자들에 의해 1965년에 처음 설립되었다.

▣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 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인터넷 치유캠프

인터넷과 단절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11박 12일간 기숙형태로 운영되는 치료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중독 전문가에게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임상심리전문가에게 심리상태 진단 및 평가를, 수련활동 전문가에게 수련활동과 대안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치료 프로그램이다.

▣ 청소년전화 1388

전화 1388은 청소년의 전화이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 전화를 통하여 다급한 위기 해결에서부터 근본적인 심리 상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보호자와 지도자는 물론이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전화를 통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정보제공,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1388은 언제 어느 곳에 서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곁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기 위해 전국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 정책프로슈머

프로슈머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정책프로슈머’는 국민이 단순한 정책집행 대상이 아니라 정책 개발자로서 적극 참여, 정부와 국민이 정책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조사망률(粗死亡率, crude death rate)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 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 비로 나타낸 것이다.

조사망률(%) = ((특정 1년간의 총 사망건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vorce rate)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 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 비로 나타낸 것이다.

조이혼율(%) = (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birth rate)

특정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조혼인율(粗婚姻率, crude marriage rate)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조혼인율(%) = (특정 1년간의 총 혼인 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이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된다.

▣ 중도입국 청소년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를 말한다.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12년 5월부터 교육부 지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 실현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다문화 교육사업 관리 및 운영지원,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다문화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진흥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지방양여금(地方讓與金)

지방양여금이란 국가에서 국세로 징수한 일부 세목의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일종이다. 지방교부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양여금 사용대상 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5곳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별 사용규모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양여금을 배분한다.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 구조, 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 청소년(靑少年, Youth)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거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동반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핵심인력으로 위기청소년들에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전일제 동반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실시 하되, 청소년의 시간에 맞추어 저녁, 휴일 등에 탄력적으로 근무한다. 반면 시간제 동반자는 주 12시간 근무하며 이들은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를 근거로 움직이나 실제적인 사무실은 '청소년이 있는 현장'이다.

▣ 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시 청소년시설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 특화시설이다.

▣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용 육성을 위해 놀이 마당식 체험 공간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법」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문화존 조성지원계획 및 운영'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주 5일 수업제의 확대 실시에 따라 늘어나는

방과 후 시간대에 청소년들 스스로 전국의 광역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문화 향수, 문화 감상, 문화 창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청소년 보호법(靑少年保護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3. 7., 법률 제 5297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靑少年福祉支援法)

「청소년 기본법」 제49조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2004. 2. 9., 법률 제7164호).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4호). 청소년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 증제도이다.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기능을 하며 자기계발 및 진로모색 등에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을 관리하고 제공한다.

▣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에서는 무료숙식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생활지도 등의 일시보호활동을 한다. 또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 가출 실태조사 연구 등의 조사연구 활동, 청소년 문제 예방 프로그램 진행 등을 한다.

▣ 청소년운영위원회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거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따른다. 동법 제7조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곳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이다.

▣ 청소년 유해약물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및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약물을 말한다.

▣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거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 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한 달로, 해마다 5월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16조).

행사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청소년단체 및 직장별로 각각 실정에 따라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 내용은 ①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②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③ 모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④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⑤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이다.

▣ 청소년증(靑少年證)

비학생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에서 발급하는 증서이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운영·보조하는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수송시설 등을 청소년에게 무료 또는 할인할 경우, 이용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학생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각종 할인 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해 2005년 설치된 여성가족부 소속의 청소년 회의체이다. 타 회의체와는 다르게,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를 구성해, 의제를 발굴, 예비회의와 평가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의제를 각 부처에 제안한다.

▣ 청소년 희망센터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에 설치된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이다. 권리의 주체이자 의무자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며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 권리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교육·홍보, 프로그램개발·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09년 7월 교육부가 탈북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교육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한국 교육개발원에 탈북청소년지원 사업을 위탁하였다. 이에 탈북청소년 지원센터는 탈북청소년 교육기회보장과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탈북 청소년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각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등을 담당한다. 강의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담으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선도하며 교사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 학교폭력(學校暴力)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말한다.

- 학교폭력 전화상담 : 117

- 학교폭력 문자상담 : #0117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쾌적하고 명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교육감 권한을

위임하여 설정권자 역할을 하며, 설정 범위는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누어진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 학교환경 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본 위원회를 둔다.

▣ 학령인구(學齡人口)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인구로 만 6~21세 인구를 말한다.

▣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국내 대표직업 625개 직업에 대해 하는 일, 되는 길, 업무수행능력, 지식, 성격, 흥미, 직업 가치관, 관련학과, 일자리 전망 및 180여 개의 학과 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 진로상담이 가능하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내 청소년단체들의 자발적인 민간협의체로 약칭 '청협(靑協)'이라 한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 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책 상담복지 중추기관으로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 자료의 제작·

보급,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이 있다.

▣ 헤이그협약

국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해 국제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헤이그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서밋에서 채택된 빈곤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당시에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①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 초등 교육의 완전보급, ③ 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 임산부의 건강개선, ⑥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 파악 및 소양 수준에 영향을 주는 배경변인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각종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식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강조하는 평가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만 15세 학생의 대부분(약 98%)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한다.

▣ Wee센터

Wee는 We(우리들)와 education(교육), 또는 We(우리들)와 emotion(감성)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종의 통합 지원 서비스망이다.



2015 청소년백서 편집위원 및 집필진, 감수자 명단

▶▶ 기획·편집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송효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문위원
 성은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욱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사무관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나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집필진(가나다순)

강구섭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봉호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
 김숙자 여성가족부 학교방청소년지원과장
 김윤성 통계청 인구동향과 서기관
 김흥원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박우섭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백형학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유수연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이금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
 이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안전센터 부장
 인정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정명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한강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청소년보호점검팀장

강유미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주무관
 김남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안전센터 과장
 김 민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혁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주무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양철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장
 이규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지혜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기술연구위원
 이효정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사업부 대리
 임동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조중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정보홍보팀장

▶▶ 감수진(가나다순)

김옥태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수
 조아미 명지대학교 교수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수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2015 청소년백서

발행인 | 김 희 정

발행처 | 여성가족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기 획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 화 | 02-2100-6000

인 쇄 |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발행일 | 2015. 12.

발간등록번호 | 11-1383000-000102-10

www.mogef.go.kr

